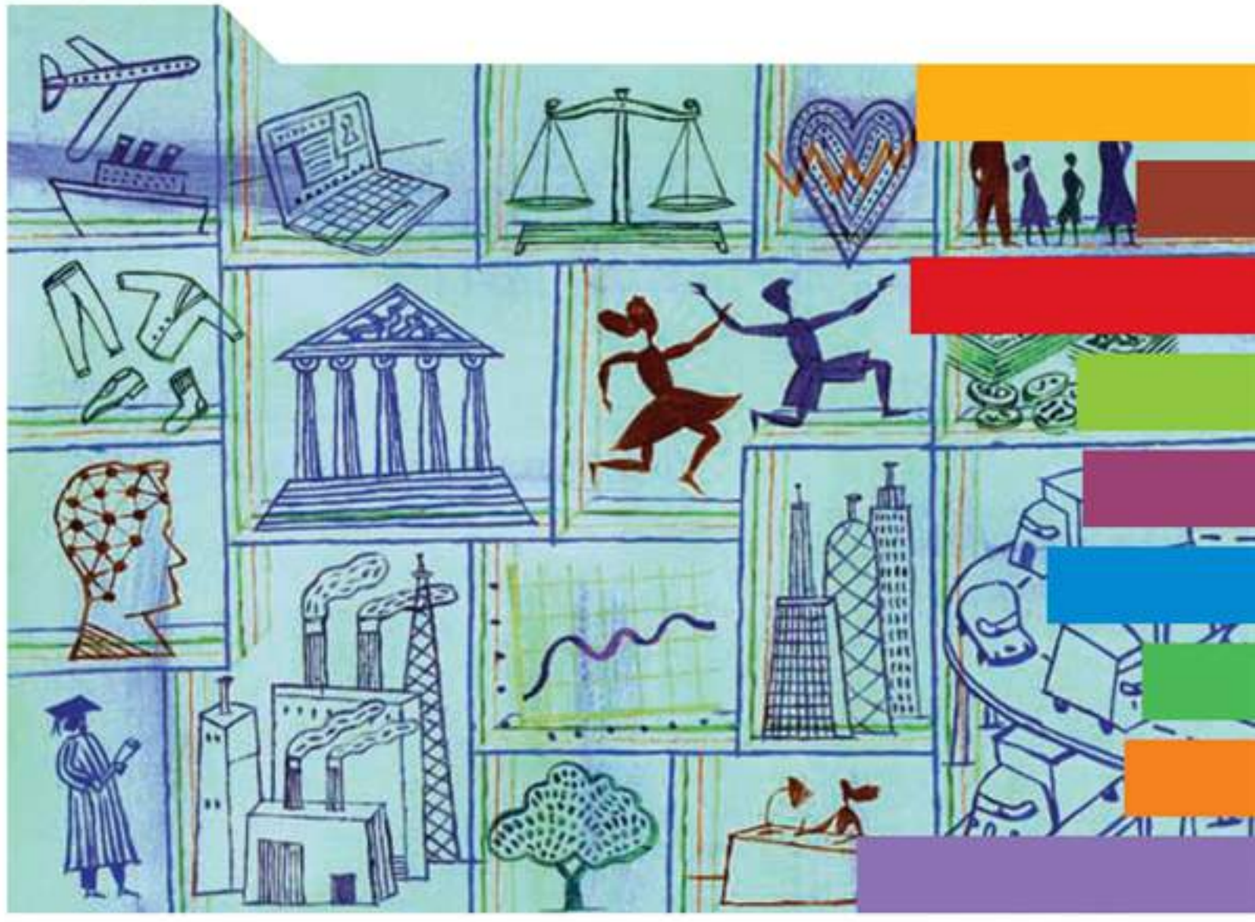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2021년 판에는 공공 재정 및 고용에 대한 투입 지표가 포함되어 있다. 과정 지표에는 기관, 예산 책정 관행, 인적 자원 관리, 규제 거버넌스, 공공 조달, 인프라 거버넌스, 공공 부문 무결성, 열린 정부 및 디지털 정부에 대한 데이터가 포함된다. 결과 지표는 핵심 정부 결과를 포함합니다(예: 신뢰, 정치적 효율성, 불평등 감소).
교육, 보건 및 사법 부문에 대한 접근성, 대응성, 품질 및 만족도에 대한 지표. 거버넌스 지표는 정부의 공공 부문 개혁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벤치마킹하는 데 유용하다.

PRINT ISBN 978-92-64-90969-4
PDF ISBN 978-92-64-92141-2
9 789264 909694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Government at a Glance 2021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OECD KOREA Policy Centre 번역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Government at a Glance 2021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자료와 지도에는 영토적 현 상태 혹은 주권에 대한 어떠한 편견도 없으며, 국경과 영토, 도시, 지역의 명칭 및 경계에 관한 편견도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힌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이들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OECD가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함에 있어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의 지위와 관련하여 국제법적으로 어떠한 편견도 없음을 밝힌다.

OECD

OECD KOREA Policy Centre 번역

이 보고서에 수록된 의견과 주장들은 OECD 회원국들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라는 점을 밝힙니다.

이 보고서에 포함된 모든 문서와 지도에는 영토적 현 상태 혹은 주권에 대한 어떠한 편향도 없으며, 국경과 영토, 도시, 지역의 명칭 및 경계에 관한 편향도 전혀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이들로부터 제공된 것이다. OECD가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함에 있어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한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인 편향이 없음을 밝힙니다.

머리말

한 눈에 보는 정부 제7판은 1년 이상의 세계 공중보건 위기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위기 상황을 담았다.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과 관리를 위한 중점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정부는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고, 위기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전례가 없는 규모와 속도로 대응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의 공공 부문 성과에 대한 국가별 비교 자료를 제공한다. 또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프로세스 변화에 초점을 맞췄다. 국가별로 위기관리 능력과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공공 거버넌스 프로세스의 조정 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본 보고서는 정부가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미래에 발생할 위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교훈을 제공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는 공공 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대표적인 보고서로 2년 마다 발간된다. *한 눈에 보는 정부*는 OECD 국가, 회원 후보국,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교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각 국은 정부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공공 재정과 공공 고용에 관한 지표를 포함한다. 특히 공공 고용의 지표에서는 행정과 정치의 영역에서의 성별, 연령별 대표성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의 프로세스에 관한 자료에는 예산 제도와 관행, 전략적 인적자원 관리, 규제 정책, 공공 조달, 디지털 정부, 정부 수뇌기관의 책임성,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포함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에서는 공공 부문의 청렴성, 인프라 거버넌스, 열린 정부의 프로세스에 관한 새로운 지표들을 추가하였다. 정부 성과 지표로는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정치 효능감, 불평등 감소, 교육·보건·사법 분야에 관한 접근성, 대응성, 질, 시민 만족도가 포함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Elsa Pilichowski국장의 지휘 아래 OECD 공공행정국(OECD Directorate for Public Governance)에 의해 발행되었다. 본 보고서는 부서장인 Monica Brezzi의 지시 하에 OECD 거버넌스 지표 및 성과평가 부서(OECD governance Indicators and Performance Evaluation Division)가 준비하고, Santiago González가 이끌었다. 본 보고서의 초안은 Barbara Baredes, Conor Das-Doyle, Santiago González, Alessandro Lupi, Mariana Prats가 작성하였고, Guillaume Guinard가 연구를 보조하였다. 제 3장 공공 고용과 관련된 내용은 Moritz Ader, Miriam Allam, Daniel Gerson, Pietro Gagliardi, Pinar Guven, Meeta Tarani, François Villeneuve이 도움을 주었다. 제 4장 공공 기관과 관련된 내용은 Carlotta Alfonsi, Karine Badr, Emilie Cazenave, Sara Fyson, Johannes Klein, Craig Matasick, Paulina Lopez Ramos, Marion Tolboom이 도움을 주었다. 제5장 예산제도 및 관행과 관련된 내용은 Andrew Blazey, Scott Cameron, Flavia Gianini, Anne Keller, Axel Mathot, Sherie Nicol, Andrew Park가 도움을 주었다. 제6장 인적자원관리와 관련된 내용은 Daniel Gerson, François Villeneuve이 도움을 주었다. 제7장 규제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은 Christiane Arndt-Bascle, Paul Davidson, Alexis Durand, Franz Karg, Marie-Gabrielle de Liedekerke, Renny Reyes, Estera Szakadatova, Anna Pietikainen, Vincent Van Langen이 도움을 주었다. 제8장 공공 조달과 관련된 내용은 Bozzay, Matthieu Cahen, Costanza Caputi, Kenza Kachani, Paulo Magina, Masayuki Omote, Gabriela Villa Aguayo가 도움을 주었다.

제9장 열린 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Alessandro Bellantoni, Emma Cantera, David Goessmann, Carla Musi, Benedict Stefani, Marie Whelan이 도움을 주었다. 제10장 디지털 정부와 관련된 내용은 Felipe

González-Zapata, Mariane Piccinin Barbieri, Barbara Ubaldi가 도움을 주었다. 제11장 인프라 거버넌스와 관련된 내용은 Mona Ahmed, Mathieu Cahen, Tenzin Dekyi, Jack Radisch, Ana María Ruiz, Lorena Cruz Serrano, Adrien Valentin이 도움을 주었다. 제12장 공공 부문의 청렴성은 Jesper Johnson, Pauline Bertrand가 도움을 주었다. 제14장 대시민서비스는 Gamze Igrioglu and Benjamin Welby가 도움을 주었다. 제1장은 앞서 언급한 다른 장의 내용에 기반하여 작성되었고, Richard Alcorn, Charles Baubion, Julio Bacio-Terracino, Janos Bertok, Frederic Boehm, Gillian Dorner, Paul Gallagher, Donal Mulligan, Jacob Arturo Rivera Perez, Ivan Stola, Tatyana Teplova, Joao Vasconcelos, Gregor Virant가 도움을 주었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출판 준비는 Meral Gedik, Sally Hinchcliffe, Dacil Kurweg가 도움을 주었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편집은 Andrea Uhrhammer가 도움을 주었다. 제14장의 내용은 OECD 고용·노동·사회국의 Gaetan Lafortune, Chris James, OECD 교육·숙련국의 Corinne Heckman, Daniel Sanchez Serra, Etienne Albiser, Eric Charbonnier and Miyako Ikeda, OECD 복지·포용·지속가능성·기회균등센터의 Carlotta Balestra, Michael Förster, Maxime Ladaique에게 귀중한 자문을 받았다.

OECD 공공행정위원회와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운영위원회(운영위원회 구성은 부록 H에 제시)은 보고서 초안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을 제공하였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지표는 공공행정위원회(PGC), 규제정책위원회(RPC), 고위 예산담당관 위원회(SBO)가 공동으로 개발한 'OECD 원칙과 권고사항(ECD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에 기반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지표는 OECD 정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수립하였으며, OECD 공공행정위원회, 규제정책위원회, 고위 예산담당관 위원회, 공공고용관리 작업반, 고위 공직자 작업반, 고위 디지털 정부 공무원 작업반, 고위 인프라 및 공공 민간 파트너십(PPP) 공무원 네트워크, 고위급 재난안전포럼, 열린 정부 실무단, 공공 조달 작업반의 협조를 얻었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2021년 6월 4일 OECD 공공행정위원회의 서면 승인을 받아 OECD 사무국에서 발간을 준비하였다.

미래에의 대응성 : 민주주의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한 코로나19 위기의 교훈

코로나19 팬데믹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OECD 국가들에게 발생한 가장 큰 충격으로 정부의 위기 대응 속도와 규모 즉, 위기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미증유의 상황 속에서도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기업에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 주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국가 봉쇄 및 규제 조치가 점차 완화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가장 큰 교훈은 정부가 미래의 위기에 적절한 속도와 규모로 대응하는 동시에 국민의 신뢰와 투명성, 그리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고 공공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신뢰와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국민들이 위기 상황에서 국가의 긴급 조치를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신뢰와 투명성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충격을 흡수하고, 빠르게 충격에서 회복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역량을 갖추는 것이 핵심이다. 제1장의 내용은 OECD 국가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낮은 수준의 투명성, 협의 과정의 미흡, 감독과 통제 중심의 대응 등의 한계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빠른 속도로 상당수의 비상조치들을 수립하였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신뢰와 투명성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시민들이 인식하는 정부의 공정성, 투명성, 역량이 낮아지지 않도록 비상조치의 범위와 기간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여준다. 또한, 기후 변화를 포함한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회복탄력성 강화 방안을 제안한다. 현재까지 발표된 회복기금(recovery funds)의 83%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환경 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녹색 거버넌스가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지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하며,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한다. OECD 국가들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시민들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GDP의 16.4%에 해당하는 예산을 추가 지출하거나 세입을 축소하였으며, 여타 조치에도 GDP의 10.5%를 지출하였다. 이는 정부가 지출 제약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지출의 효율성과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지출 우선순위가 시민들의 수요와 대응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지출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책이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고,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는 시민들이 없도록 해야 한다.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측면이 중요하다. 첫째, 오보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OECD 국가에서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은 51%에 불과하다. 또한, 상당수의 국민들은 전통적인 민주주의 절차와 자신을 분리시키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오보(misinformation)와 허위정보(disinformation)에 의해 발생하였다. 2019년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대응 정책을 수립한 국가는 OECD 27개국 중 11개국에 불과하다.

둘째, 대표성과 참여를 제고하여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공공 고용에 있어 포용성과 다양성을 고려해야 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미래 세대의 대표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의 시민 참여를 통해 공정성과 포용성을 제고하고, 로비 활동에 있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해야 한다. OECD국가 중 로비에 참여하는 행위자 등 로비 활동에 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국가는 절반 미만이다.

셋째, 범국가적 문제를 해결하고, 신기술의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거버넌스 강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2018년 OECD 국가 중 정부에 위기를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구를 두고 있는 국가는 절반에 불과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를 위한 단일의 완전한 인벤토리를 구축하지 못하였고, 이중 약 20%는 공공기관 간 자료 공유를 위한 임시 합의에 의존하고 있다. 정부는 위기가 발생한 이후 신속하게 제도와 대응 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위기에 관한 사전 계획과 예측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정부는 미래 사회에 대응하고,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규모와 속도로 위기에 대응하는 동시에 신뢰와 투명성을 보호해야 한다.

Elsa Pilichowski

목차

일러두기 ····· 11

요약 : 주요 결과 및 데이터 ····· 17

제1장 **미래에의 대응성 : 정부의 회복탄력성 강화** ····· 21
서론 ····· 22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 24
미래에의 대응성 : 정부의 회복탄력성 강화 ····· 39

2. **공공재정과 경제** ····· 59
일반정부 재정수지 ····· 60
일반정부 순저축 ····· 62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 64
일반정부 부채 ····· 66
일반정부 순금융자산 ····· 68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 70
일반정부 수입 ····· 72
일반정부 수입의 구조 ····· 74
일반정부 지출 ····· 76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 78
정부 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사회보호분야와 보건분야의 일반정부 지출 ····· 80
경제적 거래별 정부 지출의 구조 ····· 82
정부 수준별 수입 및 지출 구조 ····· 84
공공투자지출 ····· 86
일반정부의 생산비용과 아웃소싱 ····· 88

3. **공공 고용** ····· 91
일반정부 고용 ····· 92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고용 ····· 94
중앙정부 인력의 연령분포 ····· 96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 ····· 98
정치의 성평등 ····· 100
정치의 청년대표성 ····· 102
사법의 성평등 ····· 104

4. **공공기관** ····· 107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 ····· 108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 110
위기 커뮤니케이션: 정부수뇌기관 및 보건 부처의 역할 ····· 112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수뇌기관과 보건 부처의 역할 ····· 114

5. **예산제도** ····· 117
환경 친화적 예산 ····· 118
녹색 회복을 지원하는 환경 친화적 예산 ····· 120
지출 검토 제도 ····· 122
독립적 재정기구 : 코로나19위기 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 124

6. **인적자원관리** ····· 127
공무원의 유치와 채용 ····· 128
고위공무원에 대한 관리 ····· 130
공공서비스의 다양성과 포용성 ····· 132
공공서비스의 코로나19 대응 인력관리 ····· 134
직원몰입 측정 ····· 136

7. **규제거버넌스** ····· 139
이해관계자 참여 ····· 140
규제영향분석 ····· 142
규제의 사후평가 ····· 144
경제규제당국의 독립성 ····· 146
경제규제당국의 책임성 체계 ····· 148
규제당국의 성과평가 ····· 150

8. **공공조달** ····· 153
공공조달의 규모 ····· 154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공공조달 ····· 156
디지털 공공조달과 공공재정관리의 통합 ····· 158
긴급조달과 위험 관리 ····· 160
공공조달의 전문화 ····· 162

9. **열린 정부** ····· 165
공공 행정에서 열린 정부 문해력 증진 노력 ····· 166
시민 및 이해 관계자 참여 포털 ····· 168
정보 접근법의 집행 ····· 170

10. **디지털 정부** ····· 173
디지털 정부: 디지털 역량과 성숙을 향한 발전 ····· 174
디지털 우선 정부: 디지털 전환 육성을 위한 조정 및 기술 강화 ····· 176
공공 부문의 전략 자산으로서 데이터 ····· 178

11. **인프라 거버넌스** ····· 181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장기 전략 비전 ····· 182
적격성과 적합성 평가 ····· 184
인프라 조달의 수명 주기 관점 ····· 186
중요한 인프라 회복력의 거버넌스 ····· 188

12. **공공부문의 청렴성** ····· 191
청렴 및 반부패 전략 ····· 192
로비활동에서의 투명성 ····· 194

13. **핵심 정부 성과** ····· 197
정부 신뢰 ····· 198
내적·외적 정치효능감 ····· 200
소득 재분배 ····· 202
법치주의 ····· 204
비용효과성 ····· 206

14. **대시민서비스** ····· 209
대시민서비스 성과표 ····· 210
서비스 만족도 ····· 216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218
교육 접근성 ····· 220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 222
환자의 수요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대응성 ····· 224
특수 수요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대응성 ····· 226
민사사법 서비스의 적시성 ····· 228
보건의료의 질 ····· 230
교육에서의 학생 성적와 공평성 ····· 232
사법 제도의 효과와 공정성 ····· 234
청소년 서비스 ····· 236
디지털 시대에 사용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설계와 제공 ····· 238

보고서 구조와 지표 ····· 241

부록 A. **국가별 국민계정통계의 보고 체계 및 출처** ····· 247

부록 B. **정부 총수입** ····· 249

부록 C. **정부기능별 분류**(COFOG) ····· 250

부록 D. **직업의 분류 및 정의** ····· 252

부록 E.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종합지수에 관한 방법론** ····· 254

부록 F. OECD 디지털 정부 지수의 방법론 ····· 258

부록 G.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자료 ····· 261

부록 H. 운영위원회의 구성 ····· 264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용어 해설 ····· 265

OECD출판물은 다음의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OECD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StatLinks

A service that delivers Excel® files from the printed page!

본 보고서의 그림과 표 하단에 StatLink를 찾아보십시오. Excel® 스프레드 시트로 다운받기를 원하는 경우, 인터넷 창에서 http://dx.doi.org로 시작하는 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자책(e-book) 형태 보고서의 링크를 클릭하십시오.

일러두기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에 포함된 자료들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독자들은 이하의 수많은 지표들에 대한 방법론적 고려사항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제2장부터는 두 쪽에 걸쳐 각각의 지표를 표준화된 형식으로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쪽의 본문에서는 해당 챕터의 주제에 대한 간략한 내용을 소개하고, OECD 국가들에서 관찰된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들을 설명한다. 다음으로 "방법론 및 개념 정의"에서는 자료의 출처를 소개하고, 자료의 해석에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참고문헌"에서는 본문에 제시된 자료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제공하는 유용한 문헌들의 목록을 제시한다. 두 번째 쪽에서는 그림을 통해 자료를 보여주며, OECD회원국의 현재 수준과 가능한 경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추세를 보여준다. 본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서는 보고서에 기술된 주요 용어에 대한 해설을 제공한다.

정부에 대한 정의

공공 재정에 관한 자료는 국민계정체계(SNA)의 "일반정부" 정의에 기초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주정부·지방정부의 부처/부서, 기관, 센터, 일부 비영리기구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자료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을 모두 포함한다. 고용에 관한 자료는 일반정부를 포함한 반면, 성별 고용 자료는 일반정부, 공기업, 공공기관 등 공공 부문을 모두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공공관리 제도와 절차에 관한 자료는 오직 중앙정부만 포함한다.

국민계정 자료의 역년(Calendar year)과 회계연도(Fiscal year)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OECD 국민계정 자료는 역년을 기준으로 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자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호주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고, 뉴질랜드의 회계연도는 4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이다. 일본의 정부기능별 분류에 따른 지출과 일반정부의 부문별 지출에 대한 자료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국민계정체계의 자료는 2021년 5월 11일 기준으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를 통해 수집하였다.

분석대상 국가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37개 OECD회원국의 이용가능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통계 자료는 이스라엘 당국의 책임 하에 이들로부터 제공되었다. OECD가 이러한 자료들을 사용함에 있어 골란 고원, 동 예루살렘과 서안 이스라엘 정착촌에 관한 지위에 대하여 어떠한 국제법적인 편견이 없음을 밝힌다.

일부 자료에 대해서는 OECD 회원 후보국(코스타리카, 러시아 연방)과 기타 주요 경제 협력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등 비회원 국가들의 데이터도 포함된다.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들의 자료는 표와 그림의 하단에 OECD회원국의 자료와 분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국가명 약어

OECD 회원국			
호주	AUS	노르웨이	NOR
오스트리아	AUT	폴란드	POL
벨기에	BEL	포르투갈	PRT
캐나다	CAN	슬로바키아	SVK
칠레	CHL	슬로베니아	SVN
콜롬비아	COL	스페인	ESP
체코	CZE	스웨덴	SWE
덴마크	DNK	스위스	CHE
에스토니아	EST	터키	TUR
핀란드	FIN	영국	GBR
프랑스	FRA	미국	USA
독일	DEU		
그리스	GRC		
헝가리	HUN	**OECD 회원 후보국***	
아이슬란드	ISL	코스타리카	CRI
아일랜드	IRL	러시아 연방 (이하 러시아)	RUS
이스라엘	ISR		
이탈리아	ITA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	
일본	JPN	브라질	BRA
한국	KOR	중화인민공화국 (이하 중국)	CHN
라트비아	LVA	인도	IND
리투아니아	LTU	인도네시아	IDN
룩셈부르크	LUX	남아프리카공화국	ZAF
멕시코	MEX		
네덜란드	NLD	**기타 OECD 비회원국**	
뉴질랜드	NZL	루마니아	ROU

* 주: 러시아 연방과 관련한 정보는 상단의 각주1 참고

OECD 평균과 합계

본 보고서의 출판을 준비할 당시 코스타리카는 OECD 회원국에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코스타리카는 OECD 회원국 목록과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평균

그림에 제시된 OECD 평균은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회원국의 비가중, 산술평균 또는 가중평균을 의미하며,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데이터는 평균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설명(주석)에는 데이터의 이용이 불가한(데이터가 누락된) OECD 국가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그림에서 단년도 이상의 수치가 제시될 경우, OECD 평균에는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모든 OECD 국가들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본 보고서에 포함된 2007년 OECD 평균에는 당시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라 하더라도 해당 연도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면 평균에 포함한다.

국민계정 자료의 OECD 평균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가중평균을 의미한다. 일부 OECD 국가의 2020년 데이터가 제공되지 않아 OECD평균은 2019년까지만 제시된다. 그러나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에서는 OECD평균과 함께 OECD-EU평균도 제시하고 있다. OECD-EU 국가는 2020년 OECD와 유럽연합의 동시 회원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을 의미한다.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하였기 때문에 OECD-EU 국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OECD 및 OECD-EU 평균에서 비율(예: GDP 대비 정부지출)로 표현되는 지표는 분모를 가중치(GDP, PPP로 표현되는 시장가격)로 활용한다.

합계

표에 제시된 OECD 합계는 해당 열에서 이용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회원국의 데이터를 합한 값을 의미한다. OECD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데이터는 합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설명(주석)에는 데이터의 이용이 불가한(데이터가 누락된) OECD 국가의 목록이 제시되어 있다.

온라인을 통한 추가 자료 제시

특정 국가의 자료를 보여주는 추가적인 표와 그림 또는 지표 및 방법론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가 포함된 부록은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으며, "방법론 및 개념 정의" 부분에 이를 제시하였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독자들이 본 보고서에 활용된 데이터의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StatLinks를 제공한다. StatLinks는 표 또는 그림의 오른쪽 하단에 표시하였으며, 웹 브라우저에 해당 주소를 입력하거나 전자버전의 보고서에서 직접 클릭하여 접속할 수 있다.

또한, 이하의 추가 자료들도 온라인(https://www.oecd.org/gov/govataglance.htm)을 통해 얻을 수 있다.

- 국가별 주요 데이터를 OECD 평균과 비교한 국가별 현황표(country fact sheet)
- 정량지표의 선정을 위해 OECD.Stat을 통해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는 한 눈에 보는 정부 통계의 데이터베이스 및 OECD 공공행정국이 웹 플랫폼을 통해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질적 데이터)
- 각 회원국들의 정치적, 행정적 주요 특징을 설명하는 배경 정보를 담고 있는 각 국에 대한 맥락적 설명

1인당 지표

일부 지표(예: 지출, 수입, 정부 채무)의 경우, 1인당 자료로 제시되었다. 이때 인구 추정치는 국민계정 체계상의 거주자(residency)를 대상으로 하며, 시민권과는 상관없이 국내에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외교관과 군인의 가족, 유학생, 해외에서 치료를 받는 환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더라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1년의 기준은 해외에 1년 이하의 기간동안 체류하는 국민은 거주자로 포함되는 반면, 관광객 등의 외국인은 포함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생산을 통해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개인은 해당 국가의 고용인으로 포함되는 동시에 다른 국가의 거주자로 포함되어 임금과 급여가 국민총소득에는 반영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구매력평가(Purchasing power parities)

구매력평가는 국가 간 물가 수준의 차이를 제거하여 나라마다 다른 구매력을 동일하게 만드는 환율을 의미한다. 구매력평가에 따라 국가별 지출은 사실상 동일한 가격으로 표현된다. 이는 동일한 양의 재화와 서비스 묶음이 양 국가에서 동일한 비용을 가질 때,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량의 차이를 통해 국가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해준다.

OECD는 특정 절차에 따라 현재와 과거의 구매력평가 자료를 제공, 업데이트하고 있다. 당해 연도(T) 구매력평가는 5가지 단계에 의해 실시된다.

1. T+2개월 : 국내총생산(GDP)의 비교를 위한 첫 번째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2. T+6 개월: 국내총생산(GDP), 가계실질개인소비(AIC), 개인가계소비(IHC)의 비교를 위한 두 번째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3. At T+12 개월: 당해 연도의 모든 물가와 지출을 포함한 세 번째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4. At T+24개월: 최신의 지출 추정치 자료를 포함한 네 번째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5. At T+36 개월: 당해연도 마지막 구매력평가 추정치 산출

2012년 이전의 구매력평가 자료는 국민계정의 디플레이터 수정을 위해 매년 12월 변경되었다. 특히 2016년 12월 모든 유럽국가들의 2012년 이전의 구매력평가 자료가 수정되었다.

구매력평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홈페이지(www.oecd.org/std/prices-ppp)를 참고할 수 있다.

종합지수

본 보고서는 디지털 정부, 인적자원관리, 부문별 규제 기관의 주요 특징(예: 독립성, 책임성)과 관련된 협의의 종합지수를 포함하고 있다. 종합지수는 불연속적이고 정성적인 정보를 요약하기 위한 유용한 방법이다. 한 눈에 보는 정부에서는 의미 있는 종합지수를 만들기 위해 필수적인 종합지수 작성 편람(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의 단계를 따르고 있다(Nardo et al., 2008).

디지털 정부와 인적자원관리의 종합지수 구성에 활용된 방법론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E와 F를 참고할 수 있다. 종합지수는 OECD 회원국과 협의를 통해 개발되었으며, 이론과 최적 관행에 기반하고 있으나, 종합지수를 구성하는 변수와 변수 간 가중치는 전문가 판단에 기초하므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할 수 있다. 부문별 규제 기관의 종합지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Casullo, Durand and Cavassini(201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호 및 약어

기호 및 약어	의미
. .	결측값
x	해당 없음(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ADR	대안적 분쟁 해결
CBA	중앙예산기관
COFOG	정부기능별분류
CIO	최고정보책임자
CPA	중앙행정기관
GDP	국내총생산
GFS	정부재정통계
GFSM	정부재정통계 매뉴얼
HR	인적자원
HRM	인적자원 관리
ICT	정보통신기술
ILO	국제노동기구
IMF	국제통화기금
IODC	국제 공공데이터 헌장
ISO	국제표준화기구
IT	정보기술
OCSC	중앙인사위원회
OGD	공공정부데이터
PBO	의회예산처
PISA	국제학업성취도평가
p.p.(%p)	퍼센트 포인트
PPPs	구매력평가/민관협력
PR	비례대표제
PRP	성과급
R&D	연구개발
SCS	고위직 공무원
SDGs	지속가능발전목표
SDRs	특별인출권
SHRM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SMEs	중소기업
SNA	국민계정체계
VAT	부가가치세
WEO	세계경제전망
WJP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주석

1. 러시아 연방과 관련하여 2014년 3월 12일 OECD 이사회는 “러시아 연방의 OECD 가입 승인을 당분간 연기하였다.” 자세한 정보는 http://www.oecd.org/newsroom/statement-by-the-oecd-regarding-the-status-of-the-accession-process-withrussia-and-co-operation-with-ukraine.htm를 참고할 수 있다.

2. Nardo M, Saisana M, Saltelli A, Tarantola S, Hoffmann A, and Giovannini E. (2008) *Handbook on Constructing Composite Indicators: Methodology and User Guide*. OECD publishing, Paris.

3. Casullo, L., A. Durand and F. Cavassini (2019), ≪The 2018 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 Part of the 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Surve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6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0a28908-en.*

요약 : 주요 결과 및 데이터

코로나19 팬데믹은 공공 거버넌스의 역할을 강조하는 동시에 이를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경제와 사회를 부양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조정하고 재원을 마련하고자 노력하였다. 대체로 각 국은 비슷한 규모와 속도로 위기에 대응하고 있지만, 모든 국가가 공공 거버넌스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한 것은 아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과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기도 하였다. 미래 정부는 이번 위기를 교훈으로 삼아 공공 거버넌스의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코로나 19의 발생과 정부의 대응으로 공공 재정에 압박이 가해지고 있다.

- 2019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은 평균 40.8%를 차지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에의 대응과 GDP의 하락으로 모든 OECD 국가(26개국)의 GPD대비 일반정부 지출이 증가하였다
- OECD 국가들은 GDP의 약 16.4%를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출과 세입 축소에 사용하였다. 또한, 자본 주입, 대출, 자산 매입, 채무 인수, 우발채무에 GDP의 약 10.5%를 지출하였다.
- 2019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은 평균 37.7%를 기록하였다. 2020년 경기침체로 인하여 26개국 중 24개국에서 1인당 정부의 실질 수입이 감소하였다. 이중 13개국에서는 1인당 정부 수입이 5%p 이상 감소하였다.
-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재정적자가 증가하였다. 2019년 OECD 국가의 GDP 대비 재정적자의 비율은 평균 3.2%를 기록하였다. 모든 OECD 국가(26개국)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재정적자가 증가하였다.
- 정부의 재정적자 뿐만 아니라 부채도 증가하였다. OECD-EU 국가의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는 2019년 97%에서 2020년 115%로 증가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로 위기 상황에 직면하였으나, 빠르게 대응하였다.

- 2020년 초 OECD 국가의 공무원 중 60%가 원격 근무를 수행하였다. OECD 국가 중 절반은 원격 근무가 불가능한 필수인력을 정의 또는 재정의하였다.
-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수뇌기관이 부처 간 조정 활동을 수행하는 국가는 OECD 26개국 중 20개국(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할 때 이해관계자와 협의한 국가는 26개국 중 20개국(77%)인 반면, 이해관계자를 적극으로 참여시킨 국가는 9개국(35%)에 불과하다.
- 독립적 재정기구가 코로나 19 팬데믹이 경제와 예산에 미친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여 발표한 국가는 35개 OECD 국가 중 33개국(94%)이다.

- OECD 회원국 중 1/3은 코로나 19 위기 이전부터 비상상태 시 규제영향평가 예외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었다. 코로나 19 위기 동안 정부와 규제당국은 새로 신설되는 많은 규제를 규제영향평가 및 이해관계자 협의를 줄이면서 빠르게 도입해야 했다.
- 코로나 19 위기 이전 OECD 32개국 중 19개국(59%)은 전자조달 기능 중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예: 공공기관의 조달수요, 계약된 공급업체 또는 사용가능한 제품 등에 관련한 정보)가 없었다. 따라서 정부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 공급에서의 제약을 관리하기 위해 빠르게 혁신해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일시적으로 증가한 정부신뢰는 지속되지 않을 수 있다.

- 2020년 OECD 국가의 정부신뢰는 51%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2007년에 비해 6.3%p, 2019년에 비하면 6%p 증가한 수치이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대유행 초기에 나타난 결집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OECD 22개국 중 18개 국가에서는 4월/5월과 6월/7월 사이 평균 정부신뢰 수준이 감소했으며, 이는 결집효과가 빠르게 사라지는 것을 보여준다.
- 신뢰는 정부기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평균적으로 국민의 72%가 경찰을 신뢰하고, 49%가 공무원을, 37%가 정부를, 약 1/3의 국민이 국회를 신뢰한다.
- 2018년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OECD 국가에서는 인구의 절반 미만(40%)이 외적 정치효능감(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 및 참여 관행을 적절히 조정하면 공공기관의 투명성과 신뢰가 향상 될 수 있다.

- 2020년 OECD 32개국 중 27개국(85%)이 정부 차원의 국민참여포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모든 중앙/연방 부처가 협의 및 참여 기회를 안내하고 있다. OECD 국가 중 38%는 여러 개의 포털을 운영 중이며, 47%는 단일한 포털을 운영 중에 있다.
- 2017년 이후 규제정책 결정에서 온라인 협의의 활용이 증가했다. 정책결정과정 중 초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협의는 OECD 국가의 35%에서 62%로 증가했으며, 후기 단계에서 진행되는 협의의 경우 41%에서 57%로 증가하였다.
- OECD 국가의 92%에서 정책결정자는 특정 집단과 정책결정 초기단계에서 규제초안을 협의한다. 공개적 협의의 경우 일반적으로 후기단계에서 진행되었다.
- 2020년 OECD 24개국 중 20개국(87%)이 공공청렴위험, 특히 부패를 낮추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청렴전략의 20개 중 8개(40%)만이 정부간 협의 및 공개협의가 진행됐다. 또한 OECD 24개국 중 절반미만의 국가에서 정기적으로 로비활동에 참여하는 대다수의 행위자에게 투명성 관련 제도를 운영하였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 OECD 2021

공공부문의 고용 및 정치의 다양성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더 개선할 여지가 있다

- 2019년 OECD 국가의 공공부문 고용 중 고위직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37%에 불과했다.
- 여성의 정치참여는 증가했지만, 여전히 평등과는 거리가 있다. 2021년 기준 OECD 국가 전체에서 하원 또는 단원제 의회의 의석 32%는 여성이 차지했고, 10년 전의 26% 보다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 장관의 비율은 2017년 28%에서 2021년 34%로 증가했다.
- 국가들은 행정부 내에 다양성 증진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2020년 OECD 33개국 중 24개국(73%)이 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내세웠다(2016년에는 37%). 또한 14개국(42%)은 고용에서의 성균형 목표를 가지고 있다(2016년에는 29%).
- 20-39세 인구는 평균적으로 OECD 국가 전체 투표연령인구의 34%를 차지하지만, 2020년 젊은 국회의원의 비율은 평균 22%로 나타났다. 공공부문 업무에서 청년의 과소대표는 세대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

공공거버넌스 프로세스는 환경 및 사회적 목표를 촉진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모든 OECD 국가는 공공조달에서 환경목표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는 이와 비슷하게 인권(70%), 성평등(41%) 또는 소수자(48%)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 2020년 OECD 35개국 중 14개국(40%)만이 녹색 예산과 관련된 노력들을 보고했다. 이 중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사전 또는 사후 환경 영향 평가(14개국 중 12개국, 86%)와 환경 비용 편익 분석(14개국 중 10개국, 71%)이다. 국가들은 행정부 내에서 다양성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2020년 OECD 33개국 중 24개국(73%)은 장애인 고용 목표를 설정했다(2016년, 37%). OECD 33개국 중 14개국(42%)만이 성별 균형 목표를 설정했다(2016년, 29%).
- OECD 30개국 중 22개국(73%)은 장기적 기반 시설 계획을 지속 가능한 목표와 일치시켰고, 30개국 중 17개국(57%)은 환경성과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의 기반 시설을 조정했다.

제 1 장

미래에의 대응성 : 정부의 회복탄력성 강화

서론

OECD 정부는 전례 없는 코로나 19 위기의 규모와 속도에 대응해오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를 억제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경제적,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이는 2차 세계대전 이후 OECD 국가들이 경험한 가장 큰 충격이다. OECD 국가들은 전례 없는 규모, 속도, 범위의 팬데믹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의 시행과 운영상 대응을 요구받고 있다. 코로나19를 치료하기 위하여 보건 의료 시스템이 확대되었고, 집단 감염을 억지하기 위해 민주주의 국가의 이념과 부합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자유와 경제 활동을 제한하였다. 경제 활동의 제한은 소득과 고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고, 정부는 시민과 기업을 위해 대규모 재정 지원을 추진하였다.

코로나 19 충격에 대한 대응은 정부의 역량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부는 경제와 사회가 현재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새로운 분석 기법과 조정 메커니즘을 개발하여 어려운 정책 결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예산, 공공 고용, 조달, 규제, 디지털 및 인프라 시스템을 분석하여 보건, 사회 보호, 기타 분야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확대하고 있다. 정부는 변화된 공공 보건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새로운 공공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수립하였다. 또한, 정부는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조직 운영의 상당 부분을 재설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투명성, 책임성을 달성해야 하며, 가능한 한 실패를 줄이고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 가 회복되더라도 경제와 사회는 대규모 충격으로 인한 상당한 위험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회복탄력성을 갖춰야 하고, 사회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완충 장치를 구축해야 한다. 팬데믹의 미래 경로는 불확실하지만, 백신으로 인하여 2021년 이후 코로나19가 공공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Cohen, 2021[1]). OECD는 2021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5.8%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생산량은 2021년 말 이전의 팬데믹 초기 수준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OECD, 2021[2]). 정부와 사회는 자유를 되찾고, 회복이 시작되며, 다시 번영을 이룰 기회를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위기에서 벗어나는 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을 수 있다. 이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변이로 인한 잠재적 영향이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코로나 19가 회복되더라도 코로나 19로 인한 공공 및 민간 부채의 누적, 학교 교육의 공백, 기업의 도산과 일자리 감소, 불평등 심화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실제 또는 인식된 정부의 부실한 관리,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 감소, 새로운 부패 스캔들로 인하여 정부 신뢰가 크게 감소할 위험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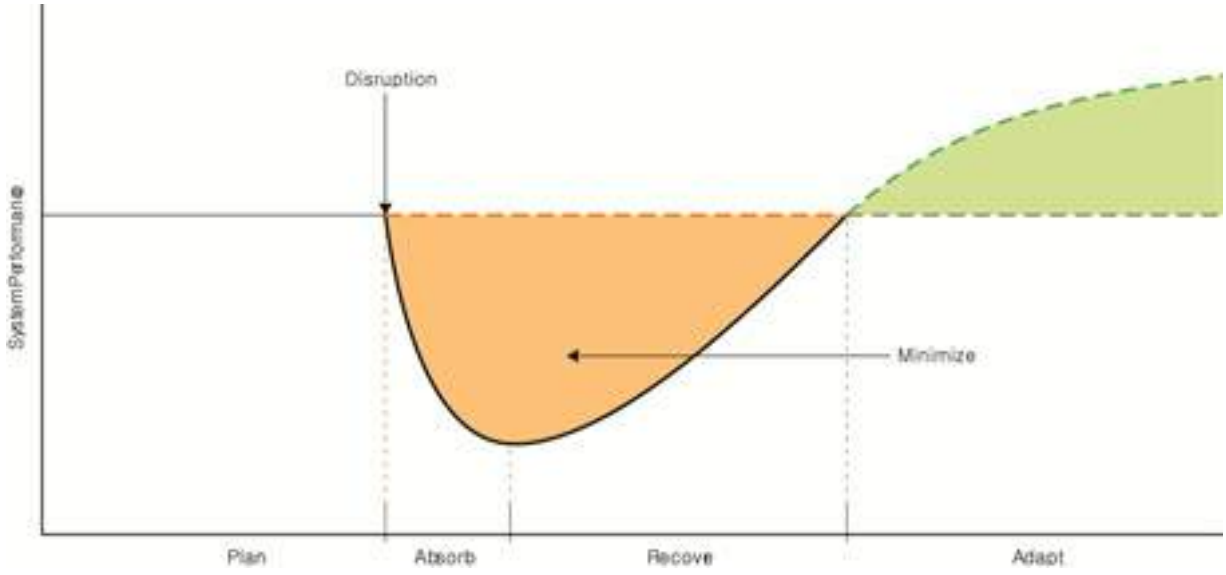
사회는 코로나 19가 억제되더라도 다양한 충격에 지속적으로 직면할 것이다. 특히, 기후와 생물 다양성 위기는 긴급한 과제인 동시에 심각한 위험을 잠재하고 있다. 지구 온난화가 현재 속도로 진행된다면, 2030년~2052년 사이에 지구의 온도가 1.5°C 가까이 오를 가능성이 높다 (IPCC, 2018[3]). 지구의 온도가 1.5°C 오르면 기후위기와 관련되어 건강, 식생, 식량 안보, 물 공급, 인간 안보, 경제성장에 위험성이 증가하고, 지구 온난화가 진행될수록 이러한 영향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기후변화 대응에의 실패, 기상 이변, 생물다양성 감소, 자연 재해, 인간이 만들어 낸 환경 재난, 물 부족은 모두 잠재적인 충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국가 부채와 실업 위기, 사이버 보안과 IT 실패, 테러 공격과 같은 다른 종류의 위험도 존재한다. 향후 잠재적인 충격이 발생할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는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충격과 외부의 위협에 얼마나 잘 대응하고, 회복할 수 있는가에 따라 미래의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잠재적 충격을 고려할 때, 앞으로 미래 사회의 모습은 다양한 경로로 나타날 수 있다. 한편으로는 민주주의의 번영을 되찾을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장 침체, 불평등의 고착, 정치의 근간인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정부가 선제적으로 미래의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 사회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한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정부는 시민들을 보호하고,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사회 역량의 핵심인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OECD는 회복탄력성을 "충격을 흡수하고, 충격으로부터 회복하며,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고, 충격을 받기 이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능력"이라고 정의한다(OECD, 2019[4]), (OECD, 2014[5]). 그림 1.1은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충격 이전과 이후의 네 단계로 구분한 그래프이다. 첫 번째는 충격에 대비하여 사전에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로, 충격과 위협에도 불구하고 시스템의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한다. 두 번째는 흡수 단계로 충격이 발생한 이후 충격의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활동이 수행된다. 세 번째는 회복 단계로 가능한 한 낮은 비용을 투입하여 빠르고 효율적으로 손실된 시스템의 기능을 회복하려는 노력이 포함된다. 네 번째는 적응 단계로 흡수 단계와 회복 단계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의 위협에 보다 잘 대처하기 위해 시스템의 기능과 작동 방식을 변화시키는 노력이 포함된다(Linkov, Trump and Hynes, 2019[6]).

그림 1.1. **회복탄력성의 단계**



출처: Linkov, Trump and Hynes (2019[6]), *Resilience-based Strategies and Policies to Address Systemic Risks, www.oecd.org/naec/avertingsystemic-collapse/SG-NAEC(2019)5_Resilience_strategies.pdf.*

1장에서는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정부에 적용한다. 이론적으로, 정부의 업무는 인력, 예산, 자산, 인프라, 자료 및 정보[1] 등이 투입되면, 일련의 절차(정책 결정, 예산 편성, 규제, 조달, 인적자원관리, 전자정부 등)를 통해 투입물을 결합하고 변형하여 시민을 위한 공공재와 서비스(보건, 교육, 안보, 효율적 시장 등)를 생산한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정부는 광범위한 충격이 발생하여 투입물과 절차 및 기능에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충격이 발생한 직후 시민을 위해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즉시 회복이 가능하며, 미래의 충격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2] 회복탄력성은 있다, 없다와 같이 이원적 개념이 아닌 정도(degree)의 차이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회복탄력성은 충격의 유형과 정부의 수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정부의 회복탄력성 개념은 시민들이 정부에 던지는 질문을 통해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지진 또는 경기 침체와 같이 충격에 직면한 정부를 떠올려보자.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평가하기 위해 시민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정부가 충격이 발생한 직후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인력, 예산,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정부의 일부 기능과 역량이 저하될 경우, 대체 가능한 새로운 기능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정부는 위기가 발생한 직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가? 정부는 지난 경험과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의 충격과 재난에 대응하고, 적응할 수 있는가?

미래에 발생할 모든 위협은 불행하게도 완전한 예측이 불가능하고, 계획할 수도 없다. 세계는 복잡하고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시스템(금융, 환경, 정부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나의 시스템에 가해진 충격과 변화는 예측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양한 경로(알려진 경로와 예상하지 못한 경로)를 통해 다른 시스템에 빠르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코로나19는 초기의 작은 변화가 급격하게 큰 영향을 가져왔다. 상호연결성(interconnectivity)과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이 결합할 경우, 연쇄작용이 급속도로 일어나 복합적인 실패로 이어지는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Hynes et al., 2020[7]). 정부는 복잡하고 상호 연결된 위험 사회를 관리하기 위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여 시민의 안녕과 공공의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 궁극적으로, 회복력 있는 사회와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제1장에서는 정부가 어떻게 코로나19에 대처하였는지를 살펴보고, 그 교훈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이때, 가장 중요시해야 할 권고는 신속하고 대규모로 위기에 대응하되, 시민들의 신뢰와 투명성을 무너뜨리면 안 된다는 점이다. 제1장 제2절(1.2)에서는 코로나19의 대응 조치와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OECD 국가들의 회복탄력성을 점검해보고자 한다. OECD 국가들은 보건 및 사회 보호와 같은 주요 분야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 인력, 기술 및 인프라를 확대하였다. 또한, 위기로 인한 시민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 조달, 규제, 커뮤니케이션 등 정부 업무의 절차를 빠르게 혁신하고 적용하였다. 그러나, OECD국가들은 코로나 19 위기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대비하지 못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사전 계획이 부족하거나 차선의 시스템을 수립하기 위해 혁신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 19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과정에서 투명성, 협의, 감독 및 통제의 기준이 부분적으로 지켜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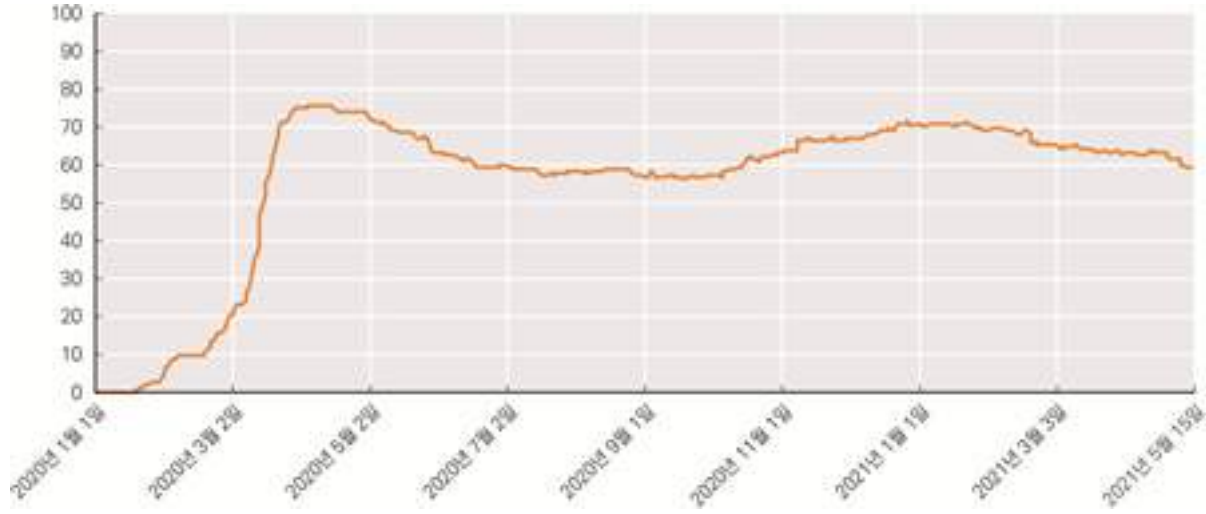
제1장 제3절(1.3)에서는 코로나 19위기를 회복하고 미래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2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미래의 위협을 줄이고 필요 시 적절한 규모와 속도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시스템의 내부 개혁과 관련된 의제이다. 첫 번째 의제와 관련된 주요 개혁에는 회복 패키지의 최적화, 정부 운영의 완충 장치 구축, 혁신과 문제해결 기술의 선제적 지원, 정보의 무결성(integrity)과 보안 감독의 보장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정부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주의 체제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개혁과 관련된 의제이다. 두 번째 의제와 관련된 주요 개혁에는 대표성 및 이익 결집(interest aggregation) 방식의 개선, 정책결정 과정에서 공정성과 포용의 보장, 오보와 허위정보의 선별 등이 포함된다. 제1장에서는 중앙정부 즉, 국가적 역할과 책임이 있는 중앙부처와 기관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입법부(의회), 사법부, 지방정부는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코로나 19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는가?

코로나 19 위기는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시험하는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 19 위기는 다양한 측면에서 정부의 회복탄력성에 관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직접적인 기회를 제공하였다. 계획-흡수-회복-적응의 주기에서 코로나 19 팬데믹이 어떤 단계를 지나고 있는지 불확실하지만, 백신 접종이 진행됨에 따라 "흡수" 기간이 짧아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완화" 및 "흡수" 측면에서 충격에 대한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점검하고자 한다. 즉, 코로나19 충격이 발생했을 때, 투입물을 관리하고 충격의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는 정부의 능력을 평가한다.

2020년 OECD 정부는 코로나19의 연쇄적인 영향으로부터 시민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하여 전례 없는 대규모 조치를 단행하였다. 코로나 19 초기에 감염 속도를 늦추기 위한 조치가 없었다면, 바이러스의 감염 속도는 정부의 보건의료 역량을 빠른 속도로 넘어섰을 것이다(Ferguson et al., 2020[8]; Rice et al., 2020[9]).

그림 1.2. **OECD 국가의 봉쇄조치에 관한 엄격성 지수의 평균**
2020년 1월 1일 ~2021년 5월 15일 (0~100점 척도)



주: 그림 1.2는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https://covidtracker. bsg.ox.ac.uk/))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코로나19에 대한 정부 대응의 엄격성 지수에 관한 가중 평균을 보여준다. 정부 대응의 엄격성 지수는 공개된 대응 조치 정보(학교 폐쇄, 직장 폐쇄, 공공 행사 취소, 모임 제한, 대중교통 폐쇄, 이동 제한)를 순서 척도로 기록한 것이다. 코로나19 에 대한 정부 대응의 엄격성 지수는 순서 척도로 측정한 관련 지표의 단순 합계로 측정되며 0부터 100까지의 값을 갖는다. 엄격성 지수는 비교 목적으로 작성된 지표로 국가별 대응의 적절성 또는 효과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아님을 주의해야 한다.

출처: OECD calculations from Hale et al. (2020[1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www.bsg.ox.ac.uk/research/research-projects/covid-19-government-response-tracker#data*; Population data from World Bank (2020[11]),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opulation, total,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256387

정부는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해 2020년 2월~4월 신속한 국경 봉쇄 조치를 시행하였다(그림 1.2 참고). 봉쇄 조치는 시민의 자유를 제한하였고, 학교와 직장의 폐쇄, 자가격리 명령 등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경제 활동의 피해를 초래하였다. 2020년 3월~4월 OECD 국가들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여러 정책을 마련하고, 직장이 폐쇄된 근로자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였다. 한편, 추가적인 공중보건 조치는 천천히 시행되었다. 2020년 6월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접촉자 추적 시스템(contact tracing systems)을 갖추었다(그림 1.3 참고). 2020년 2분기와 3분기에는 봉쇄 조치가 다소 완화되었으나,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봉쇄 조치를 다시 확대하였다. 2021년 5월 중순, 봉쇄 조치가 점차 완화되었으나, OECD 정부는 광범위한 경제적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에 정부가 대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정부는 신속한 정책 결정을 통해 즉시 대규모의 복잡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통제, 투명성, 책임성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는 투입과 운영과정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응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폐쇄된 상황에서 원격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업무 체계의 전반을 재설계하도록 요구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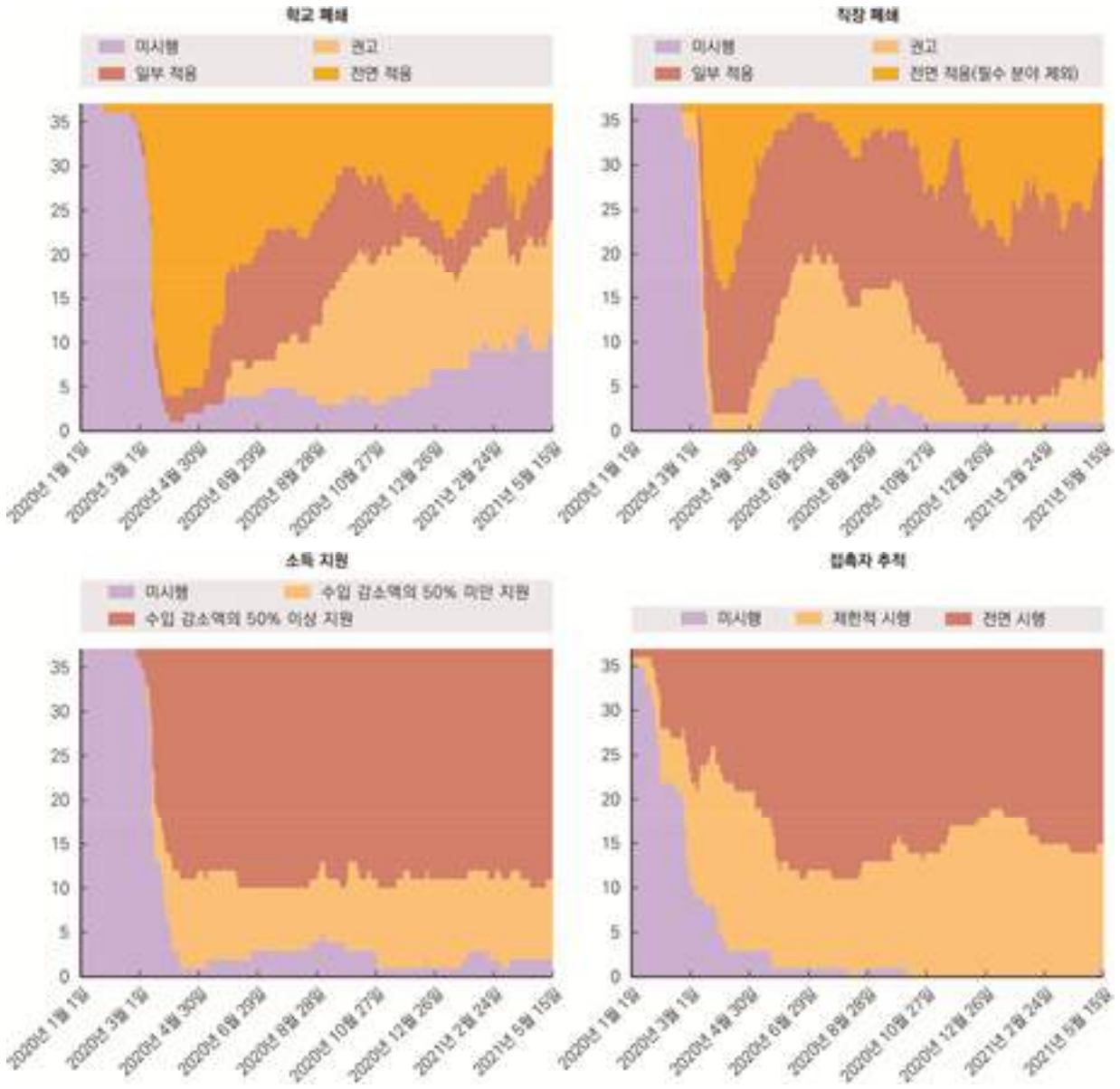
제1장 제1절에서는 정부 제도의 차이가 코로나19 대응의 차이를 가져왔는지에 대해 분석한다. 코로나 19 대응에 관한 자료는 정부의 회복탄력성 혹은 취약성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는데 근거를 제공한다. 코로나 19는 OECD 국가에 각기 다른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가마다 대응 조치의 내용이 다르다. 국가마다 경험한 회복탄력성 또는 취약성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대응 조치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하지만, OECD 국가별 코로나 19 대응을 비교한 결과, 코로나19 대응 조치는 공통적으로 두 가지 경향성을 보인다.

첫째, 정부는 코로나 19 대응을 위한 속도와 규모를 강조한 반면, 대응 조치가 투명성과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이는 위기에 대한 사전 준비가 불완전하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완충장치와 유휴 생산능력을 줄여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인프라, 인력, 예산 등을 투입하는 한편, 적절한 속도와 규모로 인프라, 인력, 예산 등을 활용하여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산출물을 제공하였다. 이하의 내용은 정부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절차를 바꾸고 혁신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코로나 19에 적절한

속도와 규모로 대응하는데 집중하였지만, 낮은 수준의 투명성, 협의 과정의 미흡, 감독과 통제 중심의 대응 등의 한계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한계는 정책 결정, 규제, 공공 재정, 조달 등 분야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신뢰와 투명성의 감소가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비상조치의 범위와 기간에 제한을 두는 사전 계획이 없고, 평가와 같은 사후 통제도 적용하고 있지 않다.

그림 1.3. **OECD 국가의 코로나 19에 대한 주요 정책 대응의 확산**

정책 대응 유형별 조치를 시행한 OECD 국가 수 (2020년 1월 1일 ~ 2021년 5월 15일)



주: 그림 1.3은 OECD의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https://covidtracker.bsg.ox.ac.uk/)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동 데이터에서 C1은 학교 폐쇄, C2는 직장 폐쇄, E1은 소득 지원, H3은 접촉자 추적을 의미하며, 개별 데이터는 범주형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대응 조치를 시행하는 OECD 국가 수의 변화를 정책 대응의 유형별로 보여준다.

출처: OECD calculations from Hale et al. (2020[1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https://www.bsg.ox.ac.uk/research/research-projects/covid-19-government-response-tracker#data.*

StatLink http://doi.org/10.1787/888934256406

이는 부패 및 특정 이익집단에 의한 포획, 정책 실패로 인하여 향후 정부 대응에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국민의 정부 신뢰를 낮출 수 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혁신과 변화의 규모는 일부 불완전한 준비 상태를 반영한다. 위기는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위기를 관리하고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은 정부의 회복탄력성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이하의 내용에서는 예측 불가능한 위기가 발생할 때, 정부의 민첩하고 유연한 대응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다만, 코로나19를 억제하기 위하여 활용된 일부 혁신적인 정책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시행될 수 있었다. 코로나19 대응을 저해하는 몇 가지 문제(디지털 시스템의 무결성 및 조달 정보 개선의 필요성 등)들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정부가 추진한 혁신 정책들은 장기적 관점에서 계획적으로 시행될 경우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었지만, 상당 수의 정부가 위기 상황에서 소통, 투명성, 감독 및 통제 프로세스를 사전에 계획하고 관리하지 못했다. 또한 정부의 사전 준비의 미흡으로 무결성, 투명성, 신뢰가 감소하였고, 급격하고 임시적인 변화만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하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원격 근무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 혁신과 사전 준비가 갖춰진 국가에서는 코로나19의 피해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디지털 기술은 정부의 투입과 과정의 회복탄력성을 지원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디지털 기술은 특정 물리적 장소 외에도 공무원 간, 정부와 시민 간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해준다. 디지털 기술은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업무를 가능하게 하여 바이러스 감염을 억지하는 역할을 했다. 더 넓은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은 정보 흐름의 속도와 양을 향상시켜 정부 프로세스에 투입되는 정보를 증가시키며, 이는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이하에서는 코로나19 대응에 활용되는 정보를 개선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혁신한 몇 가지 사례를 보여준다. 디지털 시스템을 혁신한 국가가 코로나19의 영향을 흡수하는데 더 높은 성과를 보였다.

위기에 대한 대비

위기관리는 정부의 핵심 역량이다. 모든 OECD 국가들은 지난 20년 동안 적절한 대비 태세를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중대한 위기를 맞이하곤 했다(OECD, 2018[12]). 이러한 위기에는 알려지지 않은 위기(예: 2010년 화산 폭발로 인한 북대서양 지역의 화산재 구름) 또는 예상하지 못한 규모와 복잡성을 지닌 위기(예: 2011년 일본 대지진)이 포함된다. 코로나19 위기를 포함한 중대한 위기들은 주요 인프라와 네트워크를 마비시켜 경제 활동에 타격을 주고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2014년 OECD는 정부에 제도적으로 위기관리 조직을 두도록 공식적인 권고안을 발표하였다(OECD, 2014[13]).

코로나19 팬데믹 초기에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복잡한 신규 감염병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자문을 제공해주는 역량을 갖추고 있었다. 그러나 다른 일부의 국가에서는 위기관리 시스템의 투명성에 대한 한계를 보이기도 하였다. 2018년 기준 정부 조직 내에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부처 또는 기관을 갖추고 있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절반에 불과하였다(OECD, 2018[12]).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가 단위에서 위기 상황에 대한 과학적 자문 및 협력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제도를 갖추지 못하였다. 예측 불가능한 새로운 위험의 발생에 대비하여 위기관리를 위한 과학적 자문 및 협력 기구를 정부 조직 내에 설치한 국가는 일부 소수 국가에 불과하다. 이러한 기관 중 하나로 영국은 비상 상황에 대비한 과학자문단(UK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 SAGE)을 두고 있으며, 의사 결정자는 적기에 과학적 자문과 협력을 제공받을 수 있다. 과학자문단은 정부, 학계,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며, 과학자문단 회의의 참여자는 위기의 특성과 문제에 따라 다르다(UK Government, 2021[14]). 한편, 이와 다른 이슈가 존재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신속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 과학적 데이터와 정보는 여러 공공기관과 연구기관에 배포되었고, 결과적으로 기관마다 경쟁적으로 서로 다른 대응 프로토콜과 정책을 제안하여 대응 정책의 적용 가능성을 낮췄다.

과학 위원회 등의 특별 자문 기구는 효과성과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투명성과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OECD, 2014[16]). 2009년 신종 인플루엔자 대유행(swine flu)의 여파로 과학계와 대중들은 정부와

공공기관이 제한된 효능을 갖는 치료제를 비축하도록 오도한 상업적 문제를 제기하였다. 덴마크 전문가 그룹의 신종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 수립 과정을 분석한 결과, 제약회사 업계로부터 로비를 받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영국, 스페인, 네덜란드, 폴란드에서 항바이러스제 비축량이 부족해지자 EU에서는 치료제의 제한된 효과에도 불구하고 상당량의 항바이러스제를 구입하고 비축하였다 (Hordijk and Patnaik, 2020[18]).

많은 국가들은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이후 과학적 자문을 얻기 위한 임시적인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이때 정책 결정자와 국민이 정부가 명확하고, 중립적인, 신뢰 가능한 과학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믿을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부 국가에서는 과학적 자문의 질, 권한, 정당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식적인 절차(예: 동료평가(peer reviews))를 마련하고 있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공개되는 정보의 양과 원천을 통제하고 있다. 이는 의사결정 시스템의 투명성과 과학적 자문 기구의 정당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도록 만들었다. 하지만 과학적 자문 기구의 참여자들은 잠재적인 이해관계 충돌을 공개할 의무가 거의 없었다(OECD, 2021[19]). 이러한 과학적 자문의 거버넌스와 관련된 이슈들은 위기 대비의 공백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유사한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고, 파트너십을 이끌어 낸 국가일수록 코로나19발생 이후 회복탄력성이 높다. 중대한 위험 관리에 관한 OECD 이사회 권고안(The OECD Recommendation o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OECD, 2014[13])에서는 각 국이 과거의 위기로부터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제도적 역량을 개발하고, 정부 운영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개혁을 시행하며, 이러한 기능이 적기에 적절하게 작동하는지를 점검하도록 권고하였다. 한국의 사례는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국가의 제도적 역량을 보여준다. 한국은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MERS coronavirus) 발생 이후, 국가 감염병 공중보건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48개의 개혁을 단행하였다. 당시 개혁에는 시설에 대한 선별검사, 종합 검사, 접촉자 추적 시스템, 감염자 격리 지침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코로나19 확산을 빠르게 억제하였고, 여타 OECD 국가들 보다 경제 및 사회 활동이 일찍 재개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대규모의 복잡한 위기가 발생할 경우, 정부 인력으로는 위기관리가 어려우므로 위기 대응에 있어 중요한 인적 자원인 자원봉사자들을 결집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이 중요하다. 따라서 위기관리에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민간 부문, 시민사회 및 자원봉사 조직과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십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OECD, 2015[21]).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많은 OECD 국가들은 신속한 의료 역량을 지원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단체와 협력하였다. 자원봉사 단체들은 백신 접종 기관에서 봉사하거나 자가격리자에게 음식과 의약품을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의 회복력을 높였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검체 채취 지원과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10,000명 이상의 자원봉사자가 참여하였다(Kim, 2020[22]). 특히 이스라엘은 자원봉사자가 백신 수송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여, 전 세계에서 1차 접종자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정보, 조정 및 정책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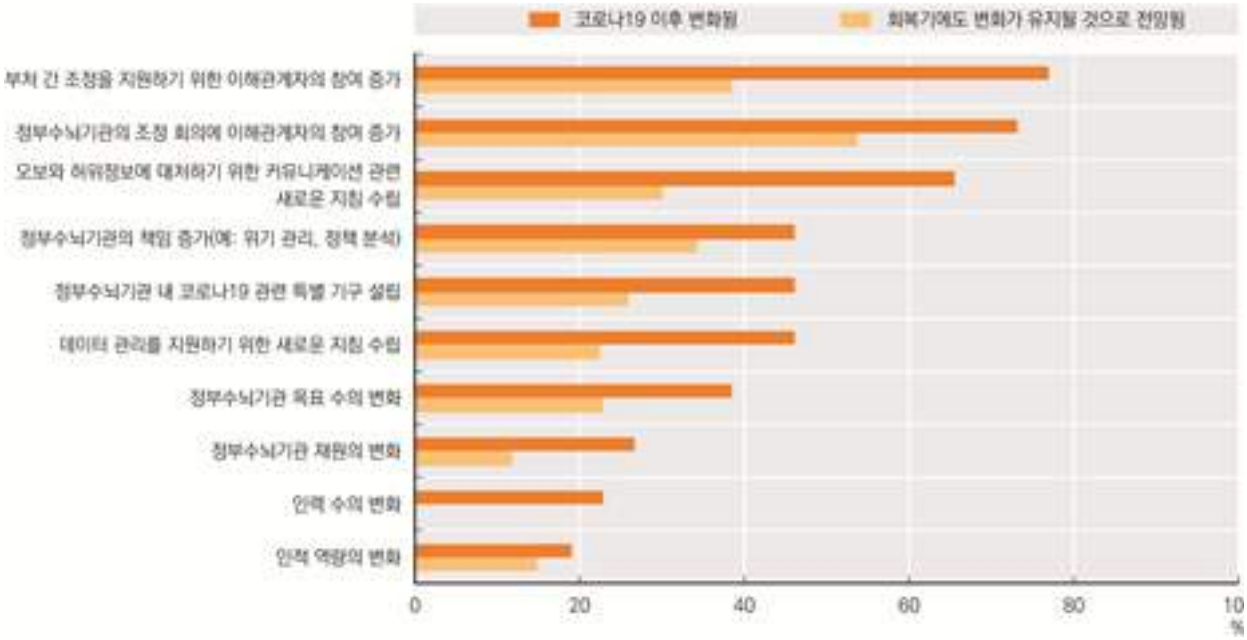
기존의 정부 구조는 코로나19 위기의 다차원적인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적절하지 않았다. 따라서 2020년 중앙정부는 의사결정 및 정부 간 정책 조정을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재설계하였다. OECD는 정부수뇌기관(centre of government; CoG)을 정부 수반, 부처 장관, 내각에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기관이라고 정의한다. 정부수뇌기관은 전략적 계획의 수립, 정부 간 조정, 정책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지원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수뇌기관은 적기에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고 정부에 새로운 정책 조정 과제를 제안하였다. 정부수뇌기관은 정부의 의사결정을 돕고 대응 조치의 우선순위를 판단하기 위하여 복잡하고 방대한 양의 정보와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제4장 및 OECD(2020[23]) 참고). 코로나19의 연쇄 효과는 보건, 경제, 사회적 영향에 대한 새로운 정보에 대응하여 정부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수정하도록 요구하였다.

팬데믹 발생 초기 정부수뇌기관은 정부의 정책 대응을 효과적으로 조정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과 규정이 미흡하였고, 대응을 조정할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다. 또한,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정부 기관 간 위기 대응 방식이 달랐고, 기간 관 우선순위 경쟁이

발생하거나 전문가로부터 과학적 근거를 얻고 이를 검토하기 위한 절차와 구조가 부재하였다(OECD, 2021[19]).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의사결정 및 조정 과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부수뇌기관의 역량을 활용하였다(그림 1.4 참고). OECD 26개국 중 77%는 부처 간 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수뇌기관을 활용하였고, 73%는 조정 회의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 위하여 정부수뇌기관을 활용하였다. 절반 미만(46%)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기구 또는 조정 기구를 신설하거나 책임을 증가시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의 책임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정의 추가적인 지원은 수반되지 않았다. 정부수뇌기관의 27%만이 추가적인 재정이 지원되었고, 23%만이 추가적인 인력을 지원받았다. 그 결과 정부수뇌기관은 동일한 재원으로 확대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림 1.4. **코로나19 로 인한 정부수뇌기관의 변화 및 회복 이후의 계획**



주: 그림 1.4는 OECD(2021[19])의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데이터에는 OECD 26개국이 포함된다. 26개국은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이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425

Box 1.1. **코로나 19 위기 이후 정부의 혁신적인 조정 제도**

호주 : 연방정부와 주정부, 준주정부가 상호 협력하기 위하여 국가 내각 회의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준주정부의 장이 참여하고 있다. 국가 내각 회의를 통해 공동의 목적을 공유하고, 보다 기민하고 효과적인 공동 행동이 가능하도록 기여하고 있다. 국가 내각은 전염병의 관리에서 회복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책의 방향을 전환하였다.

콜롬비아 : 코로나19 초기, 콜롬비아의 정부수뇌기관은 정부의 운영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정부수뇌기관에서는 코로나19 조정 기구의 업무와 과업 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목표를 관리하고 실행하였다. 콜롬비아의 정부수뇌기관은 회복 단계 동안의 위험 관리와 정책 분석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프랑스 : 위기 관리와 관련된 기존의 조직을 통폐합하고, 총리실에서 새로운 범부처 위기관리 본부를 설립하였다. 프랑스의 내무부와 보건부를 비롯한 산하 기관이 범부처 위기관리 본부에 통합되었다.

라트비아 : 총리가 주관하고, 지방정부 연합, 과학 아카데미, 기업 연합, 상공회의소, 노동조합 연맹, 의회 등이 참여하는 위기 회복 전략 조직(Crisis Recovery Strategic Group)을 신설하였다.

출처: OECD (2020[23]), "Building resilienc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centres of government", *https://doi.org/10.1787/883d2961-en; OECD (2021[19]), Building a Resilient Response: The Role of Centre of Govern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COVID-19 Crisis and Future Recovery Efforts*.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동안 정부 간 조정 제도를 혁신하였다(BOX 1.1 참고). 각 국은 전통적인 위기관리 절차에 정부수뇌기관의 지원을 더하는, 즉 보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였다. OECD 국가 중 절반은 위기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조정 기관을 지정하는 등 새로운 제도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정부 부처 간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위기 상황에서 효과적이고 신속한 정책 결정이 가능하였다(OECD, 2020[23]).

이러한 제도적 변화의 효과를 측정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지만, 상당수의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회복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정부 수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그림 1.4). 다만, 복구 계획의 복잡성으로 인하여 정부 간 조정의 문제는 한계로 남아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주재하는 회의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부처 간, 정부 간 협력이 증가하고 정부수뇌기간의 새로운 역할이 확대되길 기대하고 있다. 회복탄력성 및 위기관리의 복잡성 측면에서 정부는 조정을 이끌어내고, 제도적 장벽을 낮춰 대응성 있는 정책 결정 구조를 마련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정부수뇌기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4장을 참고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는 정책 결정 과정에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렵고,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제한된 참여는 정책설계의 질과 시민의 신뢰를 감소시킬 수 있다. 정부수뇌기관 중 73%는 조정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자의 수를 증가시켰다. 그러나 과학 전문가를 제외하고 여타 참여자에 대한 정보는 제공되고 있지 않다. OECD 국가 중 77%는 코로나19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였으나,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킨 국가는 35%에 불과하다(OECD, 2021[19]). 코로나19 자료와 대응 조치를 발표하는 정부 중 77%는 주로 상황 설명에 초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자료와 관련된 정부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노력과 구체적인 조치는 매우 미흡하였다(OECD, 2021[24]). 정부는 투명성과 감독 보다는 대응 속도를 우선시하였기 때문에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과정이 제한되었다. 즉,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되었기 때문에 정부는 신속한 의사결정을 중요 목표로 두었다. 그러나 민주적 참여의 불균형은 정책의 질과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쳐 장기적인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손상시킬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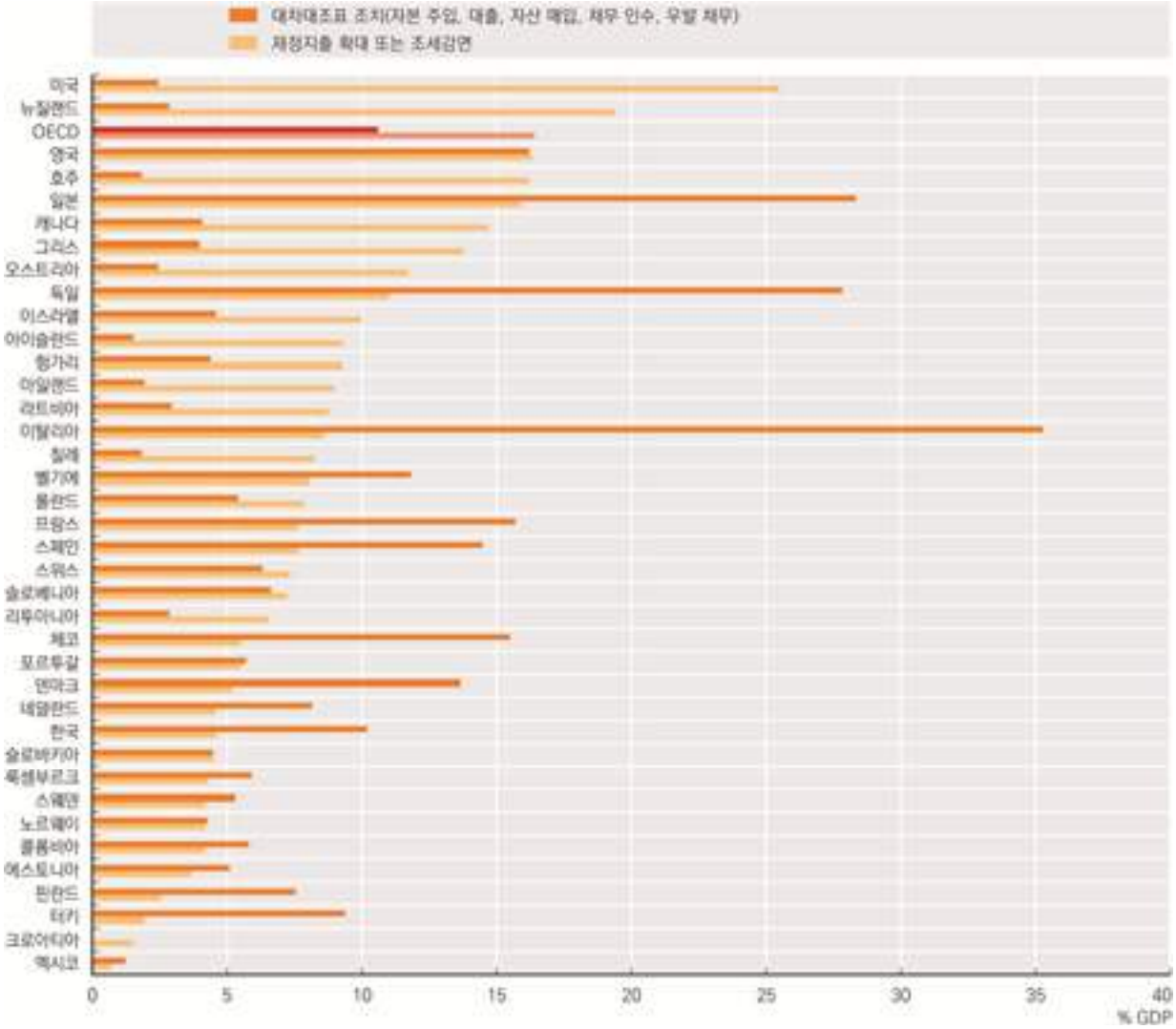
OECD는 코로나19 혁신 대응 트래커(OECD COVID-19 Innovative Response Tracker) (OECD, 2020[25])를 운영하여 위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공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혁신은 디지털 기술이 있어 가능하였다. 코로나19 위기 초기에 많은 국가들은 "해커톤"을 운영하였고, 일부 국가들에서는 빠른 성과가 나타났다. 라트비아에서는 병원에 페이스 쉴드(face shields)를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였다. 에스토니아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PPE)의 재고와 수요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디지털 솔루션을 개발하는데 기여하였다(OECD, 2020[27]). 콜롬비아의 보고타 시는 위기 초기 단계에서 과학자, 교통 및 보건 전문가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통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였다(OECD, forthcoming[27]).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데이터를 관리하고 공유하는 정부의 역량이 미흡하여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미진했다.** 코로나19 위기는 데이터와 정보가 정부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었다. 정보 기술(IT)을 분석, 의사결정, 전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부의 효과성은 국가마다 다양하다. 2020년 디지털 정부 제도에 관한 OECD 의 국가비교 연구 결과, "OECD 국가들은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다루고, 포괄적이고 전문적으로 데이터에 접근하는 방식을 진전시키는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0[29]). OECD의 조사 결과, 절반 이상의 국가에서 데이터 정책을 집행하거나 조정하는 공공조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중 1/3의 국가에서만 데이터 정책의 전담 기구(예: 최고 정보책임자)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9장에서 볼 수 있듯이,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중앙정부에서 단일의 완전한 데이터 체계를 보유하지 않는다. OECD 국가 중 1/5은 임시 협약에 기반한 공공기관 간 데이터 공유를 지속하고 있다.

정부의 데이터 공유 능력과 코로나19 위기 대응 능력 간 관계에 대한 완벽한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수뇌기관의46%는 코로나19와 관련된 데이터 공유를 지원하기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을 개발

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의 데이터 생성, 접근, 공유 역량이 대시민 서비스에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보건 분야의 데이터 레지스터와 기타 공공부문 데이터 소스(예: 연금 시스템, 진료 기록 등)를 보유한 국가에서는 보건 서비스 및 백신 접종 예약이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반면, 이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국가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예방 접종을 위한 식별 번호로 활용되고 있다(OECD, forthcoming[28]). 이러한 결과는 데이터 접근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관성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1.5. **OECD 국가의 코로나 19에 대한 재정적 대응 조치 (GDP 대비 비율)**



주 : 그림 1.5는 IMF의 코로나 19 대응 관련 각국의 재정조치에 따른 재정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재정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는 2021년 3월 17일 기준, 국가별 주요 코로나 19 팬데믹 대응 조치의 요약된 정보를 보여주며, 2020년 1월 이후 코로나 19 관련 정책과 2020년, 2021년 이후의 이행 방안을 담고 있다. 재정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는 단기적,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공 재정에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재정지원의 유형별(예: 직접적인 재정지원, 간접적인 재정지원(우발채무 등)) 자료도 제공한다. 국가별 조치를 유형별로 구분한 이유는 재정 보고의 목적이 아니며, 팬데믹의 충격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대응 조치도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국가별 비교에 주의해야 한다. 재정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는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를 보완하기 위한 정부의 재량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있다. 재정의 자동안정화 장치의 범위 및 수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현재 각 국이 지속적으로 추가적인 조치를 수행하거나 개별 조치의 세부 내용을 결정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재정모니터링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된 추정치는 임시적인 값을 갖는다. accelerated spending과 이연 수익에 관한 IMF의 추정치는 제시되지 않았다. 그림 1.5의 "대차대조표 조치"는 IMF 데이터의 "유동성 지원(Liquidity support)"을 의미한다.

출처 : IMF (2021[32]),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Fiscal-Policies-Database-in- Response-to-COVID-19*. Data extracted on 9 June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444

Box 1.2. 코로나19 대응 조치로서 재정 정책

재정지출 조치 : 재정지출 조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치는 공공 보건 서비스 지원 확대, 취약계층 지원, 근로자 및 자영업자 소득 보조 등 사회 보호 분야에 대한 지원이다. 사회 보호 조치는 정부의 기존 정책, 인프라, 재원 배분 수단과 관련된 복지 제도와 조세 제도를 통해 이루어졌다. 프랑스와 독일은 실업 급여의 지급 조건을 완화하였다. 캐나다와 뉴질랜드는 재정지출 조치를 발표한지 일주일 만에 정부가 소득 보조를 위한 재정을 지출하였다.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는 스페인의 등교 중단 아동에 대한 식비 보조, 미국의 푸드 스탬프 확대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코로나19 영향과 시민들의 신청률에 따라 재정지출 조치를 연장하거나 조정하고 있다.

조세지출 조치 : 조세지출 조치에는 징수 유예와 세율 인하 정책이 포함된다. 징수 유예는 기업이 납부해야 할 세금의 징수를 일정기간 늦춰줌으로써 기업에 유동성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소득세 신고 기한을 2020년 8월 31일로 6개월 연기하였다. 영국은 자영업자의 자진신고 납세를 연기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세율을 인하하였고, 아이슬란드는 호텔의 야간 숙박세를 폐지하였다.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 : 상당 수의 OECD 국가에서는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을 재정지출 정책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정부 대출과 보증은 금융 분야에서 기업과 자영업자의 신용 한도를 확대하였다. 핀란드에서는 정부가 기업에 3년 만기의 장기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스라엘에서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5년 동안 대출금의 85%까지를 보증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부 OECD 국가들은 항공 산업과 같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기업에 자본을 투입하였다.

출처: OECD (2020[31]), *Initial Budget and Public Management Responses to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in OECD Countries, www.oecd.org/gov/budgeting/initial-budget-and-public-management-esponses-to-covid19-in-oecdcountries.pdf.*

공공재정과 예산

OECD 정부들은 코로나19가 보건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규모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였고, 재정 여력이 감소하였다. 공공재정의 확보 역량은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측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모든 OECD 국가에서는 경제 활동에 제약을 받는 가계와 기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보건 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하여 재정 지출을 증가시켰다(그림 1.5 참고). 2020년 초 발표된 긴급 재정 조치에는 정부 대출, 보증, 자본 주입(equity injection) 등 대차대조표 확대와 세금 감면 및 재정 지출이 포함되었다(BOX 1.2 참고). 국가별 긴급 재정 조치의 구성과 규모는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의 크기, 피해를 입은 분야, 정부의 재정 확보 여력 등에 따라 다양하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을 포함한 국가에서는 주로 기업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형태로 재정 조치가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자본 주입, 대출, 자산 매입, 채무 인수, 보증 등이 포함된다. OECD 국가들은 GDP의 약 16.4%를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재정 지출과 세입 축소에 사용하였다. 또한, 자본 주입, 대출, 자산 매입, 채무 인수, 우발채무에 GDP의 약 10.5%를 지출하였다.

이러한 재정 조치를 시행함에 있어서는 정부 간 조정이 중요하다. 상당 수의 OECD 국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지방정부의 수입이 감소하거나 공공서비스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호주의 중앙정부는 주정부 및 준주정부의 추가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 지출 지출을 보상하기로 협의하였다. 스페인에서는 지방정부가 2019년 기금의 잉여분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활용하도록 하였고, 보건, 사회 및 긴급한 서비스를 위하여 지방정부에 재정을 이전하였다(OECD, 2020[30]).

재정 조치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이른 시점이지만, 대차대조표 확대는 최적의 조치라고 볼 수 없다. OECD 추정치에 따르면, OECD 국가들은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를 확대하였으나, 특히 유럽 국가에서 실제 지출이 미미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12월 기준으로 호주, 캐나다, 독일은 정부 보증 제도에 따른 대출이 10% 미만이다(그림 1.6 참고). 명시된 규모와 실제 지출 규모의 차이는 국가의 다양한 금융 수요, 여타 정책적 조치의 활용뿐만 아니라 운영상의 병목현상에 기인한 결과이다(Falagiarda, Prapiestis and Rancoita, 2020[33]). 발표된 회복 계획과 집행 사이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획, 설계, 전달체계 간 균형을 맞추고, 필요에 따라 방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적절한 모니터링과 평가 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그림 1.6. **정부 보증 제도의 이용 현황**

주: 긴급 대응 조치 지출 대비 정부 보증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왼쪽 축, 2019년 GDP 대비 정부 보증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른쪽 축에 표시하였다. 정보 보증 제도의 이용 현황은 2021년 2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호주의 데이터는 2020년 7월 기준, 캐나다의 자료는 2020년 9월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스위스는 2020년 7월 31일, 미국은 2020년 8월 8일에 긴급 대응 조치로서 정부 보증 제도가 종료되었다. 정부 보증 제도의 전체 규모는 호주 400억 달러, 오스트리아 107억 유로, 캐나다 200억 달러, 프랑스 3000억 유로, 독일 8330억 유로, 뉴질랜드 65억 달러, 스위스 3300억 달러, 영국 60억 파운드이다. 캐나다의 정부 보증 제도와 유사한 제도(550억 달러)는 해당 자료에 포함되지 않는다.

출처: OECD(forthcoming[34]), *Balance Sheet-Based Policies in COVID-19 Fiscal Packag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463

재정 평의회 등의 독립적 재정기구는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일부 독립적 재정기구는 의회의 기능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하여 정부의 인력이 동원되면서 동시에 의회의 운영도 중지되었다. 이때, 독립적 재정기구는 재정 준칙의 예외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감시하고, 코로나19 법안에 대한 비용을 추계하였다. 또한, 코로나19가 예산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고, 정부와 의회가 시행한 긴급 조치의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OECD, 2020[35]). 독일의 독립자문위원회(the Independent Advisory Board to the Stability Council)는 구조적 재정적자 한도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제공하였다. 미국에서는 의회예산처가 입법안에 관한 비용 추계 정보를 제공하였다. 오스트리아의 재정위원회와 캐나다의 의회예산처는 코로나19의 영향에 관한 분석 결과를 신속하게 제공하였다. 아일랜드의 의회예산처는 과도정부(caretaker government)의 투명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 입법안을 발표하였다. 예산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5장을 참고할 수 있다.

공공고용과 인적자원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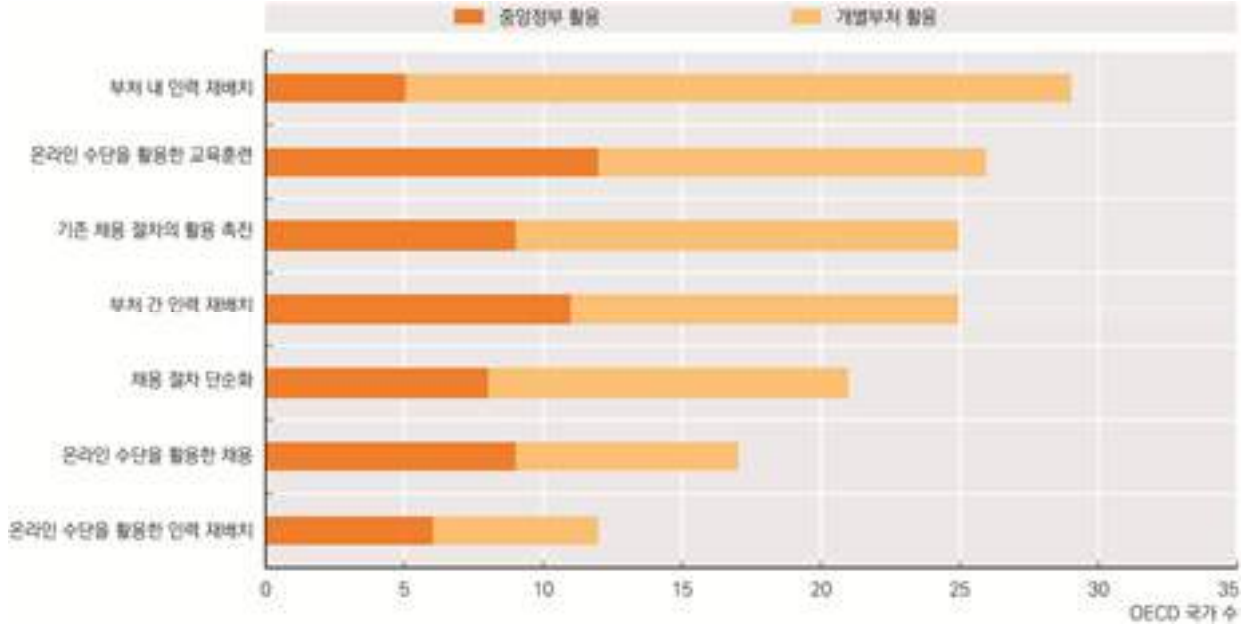
정부는 공공 고용을 증가시켰고, 위기관리를 위하여 기존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동기를 부여하였다.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공무원 및 공공 부문의 직원) 공공 부문의 조직은 급증하는 수요에 대응하기를 요구받았다. 이에 대응하여 보건 의료, 사회 서비스, 고용 서비스 등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상당수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접촉자 동선 파악을 위하여 상당수의 신규 또는 임시 인력을 고용하였다.

공공 부문은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대응하였는데, 그림 1.7은 코로나19 1차 확산기 기간 동안 OECD 국가의 인사관리 대응을 보여준다. OECD 37개국 중 29개국은 기존의 부처 내에서 임시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하였고, 25개국은 부처와 기관 간 인력을 재배치하는 동시에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부서를 활용하였다. 위기 대응에 필요한 신규 인력을 채용하기 위하여 OECD 25개국은 채용 절차를 단순화하였고, 17개국은 온라인 수단을 활용하여 채용을 하였다. 26개 국가에서는 온라인 교육 훈련 수단을 활용하여 원격 환경에서 신속하게 신규 인력을 교육하였다(그림 1.7 참고).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우수한 국가는 인적자원관리에서 '사람'에 초점을 맞춘 국가로 공무원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고, 휴가 및 휴직의 유연성을 높인 사례 등이 이에 포함된다(OECD, 2020[36]).

정부는 코로나19 이전의 디지털 기술 인프라에 대한 혁신과 투자로 인하여 공공 부문의 상당 부분을 원격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신속하게 마련하였다. 팬데믹 초기 정부는 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야 하므로 인적자원관리 정책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다. OECD 국가의 공통적인 조치는 원격근무로의 대규모 전환이었다. 팬데믹은 짧은 시간 내에 공공 조직의 업무 환경을 원격근무로 바꾸어놓았다. 코로나19 1차 확산기 동안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중앙정부 인력의 60% 이상이 원격 근무를 시행하였으며, 이는 전례가 없는 규모이다(그림 1.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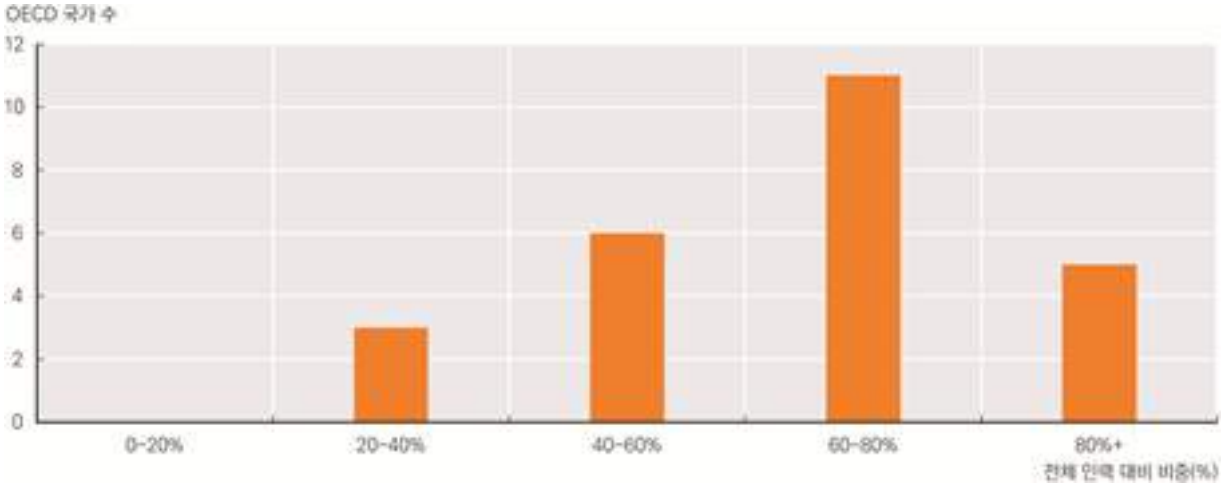
그림 1.7. **코로나19 1차 확산기 동안 인사관리 대응 (OECD 국가 수)**



출처 : Presentation created for Government at a Glance 2021 using data from OECD (2021[37]), *Special Module on COVID-19: Response of the Survey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482

그림 1.8. **코로나19 1차 확산기 동안 중앙/지방정부 인력 중 원격 근무 인력의 비율**



출처: Among 25 OECD countries for which data is available. Presentation created for Government at a Glance 2021 using data from OECD (2021[37]), *Special Module on COVID-19: Response of the Survey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501

코로나19 위기가 발생한 직후 대규모 원격 근무로의 신속한 전환과 서비스 전달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회복탄력성과 정부 기능의 연속성이 중요했다. 대부분의 OECD 국가(34개국 중 22개국)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원격 근무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 시스템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다(그림 1.9 참고). 비록 시스템이 위기에 대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어떤 장소에서도 정부 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정부 운영에 있어 높은 수준의 안정성을 제공하였다.[3] 이렇듯, 원격 근무로의 전환 경험에서 얻은 교훈은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완충 능력을 유지하고 위기 발생 전에 혁신을 해야 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 외의 분야에서도 위기에 대응하고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중대한 변화를 시도하였다. OECD 23개국은 화상회의를 위한 기기에 투자하였고, 13개국은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휴가 정책을 만들었고, 14개국은 필수 인력(사무실에서 근무할 필요가 있는 직원) 에 대한 정의를 수정하였다. 영국의 중앙은행의 사례는 변화의 규모와 속도 면에서 시사점을 제공한다. 2020년 3월~5월 영국의 중앙은행은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IT 및 인적자원관리 시스템을 재설계하여 "사람들이 침실, 다락방, 부엌에서 격리되거나 아이들과 가족을 돌보는 동안에도 수십억 파운드가 거래되도록 만들었다(Hauser, 2020[38]).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공공 고용의 프로세스를 혁신하여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러한 혁신의 성과를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른 시점이지만, 정부는 장기적인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공 고용 시스템에 유연성을 높이고 있다. 대다수의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유연한 고용형태의 활용을 점차 증가시키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그림 6.8 참고). 다른 사례에서 살펴보았듯이, 정부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이러한 혁신을 단행하였다면, 위기 상황에서 회복탄력성이 높았을 것이다. 공공 고용과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3장을 참고할 수 있다.

그림 1.9. **코로나19 1차 확산기 동안의 인적자원관리 대응(OECD 국가 수)**

출처 : Presentation created for Government at a Glance 2021 using data from OECD (2021[37]), *Special Module on COVID-19: Response of the Survey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520

규제

정부와 독립적인 경제규제 당국은 코로나19 정책 대응을 지원하고, 주요 서비스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규제 완화 정책을 신속하게 도입하였다. 정부와 독립적인 경제규제 당국은 정부 정책의 집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당 수의 긴급 규제 조치를 신속하게 설계하고 시행하였다. 긴급 조치에는 전염병을 억지하고, 바이러스를 검사하고 치료하기 위한 필수 용품의 이용을 보장하며, 에너지, 전자 통신, 교통,

수자원 등 중대한 규제를 받는 부문에서 공급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포함된다. 또한, 긴급 조치에는 봉쇄 조치(격리 조치, 여행 제한 및 등교 중단), 보건 시스템 조치, 고용 및 사회 정책 등이 포함된다. 경제규제 당국은 공공 보건과 필수 인력을 보호하고, 취약 소비자들을 지원하며, 시장 행위자들의 재정적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들을 마련한다. 규제 조치의 세부 사항은 OECD Tackling Coronavirus country policy tracker에서 확인할 수 있다(OECD, 2020[39]).

정부와 규제 당국은 규제 대상인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규제 완화 조치를 도입하였다. 필수적인 서비스와 재화의 제공을 제한하는 규제에 있어 규제 완화 조치가 매우 중요하였다. 예를 들어, 한국은 혁신적인 드라이브 스루 및 워크 스루 검사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규제를 없앴다(OECD, 2020[40]; OECD, 2020[41]). 한편, 규제 당국은 기한, 성과 목표, 인센티브 제도를 연장 또는 유예하고, 규제 면제 조치를 도입하였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항공사의 보상금 지급 요건을 일시적으로 조정하였다(OECD, 2020[42]). 일부 규제 당국은 반경쟁 행위로 고려되는 기업 간 담합을 허용하기도 했다. 상당 수의 규제 당국은 필수적인 규제를 제외한 여타 규제를 유예하거나 최소화하였고, 가상 검사(virtual inspection)를 실시하기도 했다. 미국은 특정 요건을 갖추면 사전 승인 없이 시장에서 마스크 판매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였다(OECD, 2020[41]).

정부와 규제 당국은 패스트 트랙을 통해 규제영향평가와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였다. 위기 발생 이전에는 위기 대응을 위해 규제영향평가의 예외 규정을 둔 국가는 OECD 국가 중 1/3에 불과하였다(OECD, 2018[43]). 위기 발생 이후에는 긴급 조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규제영향평가에 유연성이 적용되었다. 규제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국가(예: 호주, 벨기에)가 있는 반면, 최소한 규제가 미치는 질적 영향을 논의하도록 보장하는 국가(예: 영국) 또한 존재한다. 일부 감독 기구에서 증거가 확보되는 즉시 후속 조치를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긴급 조치에 대한 규제영향평가의 질을 면밀히 조사하는 절차는 지켜지지 않거나 단축되고 있다(OECD, 2020[40]). 패스트 트랙 또는 긴급 조치 등의 단축된 절차는 많은 규제들을 이행하는데 활용되었다(OECD, 2020[42]).

이해관계자의 참여에 있어서도 협의 기간이 단축되거나 보다 집중된 협의 절차를 거쳤다. 일부 국가에서는 경제규제 당국이 이해관계자의 참여 역량을 제한적이라고 인식하여 협의를 보류하는 경우도 있다. 규제 당국은 위험 기반의 접근법에 따라 협의 절차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의 절차 중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배제할 것인지를 결정하였다(OECD, 2020[42]). OECD국가들은 OECD경제규제기관 네트워크를 포함한 규제 당국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대응에 공조하고, 실무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규제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의 초기 대응은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다(OECD, 2020[44]).

규제에 관한 사후 평가는 투명성과 통제를 높이는데 기여하고 있다. 패스트 트랙 절차는 민주적 통제와 투명성을 낮추고, 효과를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임시 규정, 일몰 조항, 규제 요건 분석 등을 활용하여 긴급 규제 조치가 무제한적으로 평가를 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긴급 조치가 일시적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상당수의 규제 완화는 시장 경쟁에 불필요한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종료일(연장 가능)을 명시하고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긴급 조치에 일몰 규정을 추가하여 법 규정이 자동적으로 폐지되거나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 상당수의 정부는 긴급 조치에 사후이행검토(PIR)에 관한 의무 규정을 추가하였다. 코로나19 위기 발생 이전에는 OECD 국가 중 일몰 조항을 마련한 국가가 절반 미만이었고, 사후이행검토 규정은 둔 국가는 8개국에 불과하였다 (OECD, 2018[43]).

정부와 규제 당국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규제 정책의 핵심 고려 사항으로서 회복탄력성을 포함해야 한다(OECD, 2019[4]). 위기 발생 이전에 규제 관리 수단에 유연성을 부여한다면, 신속한 위기 대응이 가능하고, 신속한 대응과 투명성 사이의 균형을 달성할 수 있다. 특정한 긴급 조치에 대해서는 사후이행검토를 면제하거나 간소화하여 사후이행검토 프로세스에 유연성을 둘 수 있고, 적기에 사후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OECD, 2020[45]). 이해관계자와의 협의 절차에 유연성을 부여하여 미래의 위기에 보다 집중된 의미있는 참여가 가능하도록 도울 수 있다(OECD, forthcoming[46]). 규제 감독 기구는 향후 위기

발생 시 잠재적인 영향력이 큰 규제를 면밀히 조사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기존 제도를 재점검해야 한다. 코로나19에 대한 규제적 대응의 자세한 내용은 2021 OECD 규제 정책 전망(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를 참고할 수 있다. 또한 규제 이슈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7장을 참고할 수 있다.

공공 커뮤니케이션

상당수의 국가는 위기 발생 이후, 기존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정책을 활용하여 정부의 대응 조치를 공유하였다. 정부는 시민들에게 감염 상황, 봉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등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적기에 제공하도록 요구받았다. 2019년 OECD 정부수뇌기관(56%)과 보건 부처(50%)에서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문제 중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큰 문제로 인식하였다. OECD 27개국 중 26개국에서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조정과 인적 자원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중앙의 위기 커뮤니케이션 조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정부수뇌기관에 위기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두고 있는 국가는 27개국 중 8개국(67%)이다. 한편, 보건 부처에 위기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두고 있는 국가는 17개국 중 13개국(76%)이다. 8개국의 정부수뇌기관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늘리고 있다(제4장 및 OECD(2020[47]) 참고).

심각한 위기가 발생하여 정부의 신뢰가 도전에 직면하고 시민들의 기대가 높아졌을 때, 정부는 어떠한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알려야 한다. (OECD, 2018[12]). 의미 구성(Making meaning)은 정보 제공을 넘어 대중의 기대에 대응하는 이야기(Narrative)를 만드는 것이다. 위기 발생 이전에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대비가 어렵고, 공공 커뮤니케이션 절차를 갖추고 있는 국가조차도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한계를 보였다. OECD 26개 국가 중 12개 국가의 정부수뇌기관(46%)은 위기의 초기 대응 과정에서 조정이 어려운 이유로 정부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통일성 및 일관성 미흡을 지적하였다(OECD, 2021[19]).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은 정부가 빠르고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위기 발생 이전에는 OECD 27개 국가 중 15개 국가의 정부수뇌기관(56%)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목적은 디지털 수단의 활용이라고 응답하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OECD 정부는 위기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하여 열린 정부 데이터 계획을 신속하게 도입하였다. OECD는 데이터 저장소와 대시보드를 지배적 제품으로 하는 76개의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도입하였다. 이중 83%가 초기 팬데믹 대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반면, 77%는 의사결정자와 시민의 상황 인식을 도왔다(OECD, 2021[24]). 디지털 수단은 청소년들을 포함한 다양하고, 접근성이 낮은 집단들과 의사소통하는데 도움을 제공하였다. 핀란드는 시민들에게 정부의 코로나19 조치에 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사회, 미디어 및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협력하였다. 1,800명 이상의 인플루언서가 참여했으며, 설문 참여자 중 97%가 적절한 정보가 제공되었다고 응답하였다 (Ping Helsinski, 2020[49]).

전통적인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정부에서 시민으로 메시지가 전달되는 즉, 하향식 방식으로 이루어져왔다 (OECD, 2016[50]). 코로나19 위기 동안,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시민들의 의문과 우려를 이해하고, 대화를 촉진하도록 돕기 위하여 쌍방향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슬로베니아는 시민들이 공공 보건 전문가와 협력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설립하였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에 신속하게 전달되어 보건과 안전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 조치가 가능해졌다.

자산, 인프라, 조달

의료 용품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글로벌 공급 제약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역량을 제한하였고. 공공 조달 시스템의 정보 제약 또한 정부의 대응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가장 큰 고충은 의료 용품의 부족이었다. 정부는 백신, 개인 보호 장비, 인공호흡기, 손 위생제, 마스크, 보건 서비스 등 예상하지 못한 규모로 많은 양의 용품과 서비스를 신속하게 조달해야 했다. 예를 들어, 2020년 영국의 코로나19 관련 계약 지출은 210억 파운드로 (Tussell, 2021[51]), 이는 GDP의 약 1%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상당 수의 공공 구매자와 민간 구매자가 동일한 상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구매하는 등 수요의

급증이 글로벌 공급 제약으로 이어졌다.

총 지출규모의 증가로 인해 조달 시스템에 직접적인 제약이 발생한 것은 아니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필수품과 주요 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였으나, 다른 분야의 조달은 감소하기도 하였다. 예를 들어, 2020년 칠레의 조달 지출은 7% 증가하였으나, 등록된 공공 계약은 29% 감소하였다(ChileCompra, 2021[52]). 프랑스에서는 2019년 동기간 대비 2020년 1분기 입찰 건수가 25% 감소하였다(AdCF, 2020년[53]).

오히려 코로나19 기간 동안 조달 시스템의 주요 과제는 "비즈니스 인텔리전스(business intelligence)"였다. 즉, 공공 기관의 수요, 계약된 공급 업체, 이용 가능한 제품과 시장에 관한 정보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위기 발생 이전, 전자 조달 시스템에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기능을 갖추고 있지 못한 국가는 32개 OECD 국가 중 19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8[54]). 상당수의 공공 구매자들이 동일한 의료 용품과 서비스를 동시에 필요로 하였기 때문에 수요 또는 공급 업체에 관한 정보 격차가 정부 대응의 효율성을 저해하였다.

정부는 정보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공급 제약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 조달 프로세스와 IT를 신속하게 혁신하고 있다. 팬데믹 초기, 공공 조달에서의 조정 부족은 구매의 중복 문제 또는 공급 부족 및 초과 구매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러한 문제들은 국가와 공공 구매자 간 가격과 공급 업체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공공 조달 시스템에서 조정 제도가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예를 들어, 칠레는 핵심 계약과 공급 업체를 조사하여 상품과 재고 및 주요 제품의 공급 업체 목록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였다. 일부 국가(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영국)에서는 공급 업체와 국가, 지방정부, 글로벌 파트너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공급 부족을 인식하고, 잠재적 해결책을 마련하였다(OECD, 2020[55]).

OECD 국가 중 2/3(63.5%)는 집중 구매 또는 공동 조달 등의 협력적 조달 방식을 채택하였다. 기존에 분산 구매 방식으로 운용하던 국가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공동 구매 또는 조달 방식을 도입하였다 (OECD, 2020[55]). 협력적 조달 방식은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응을 가능케하고, 공급 업체 간 경쟁을 통해 계약의 특혜나 재고의 축적을 방지할 수 있다.

일부 국가는 전자 조달 시스템을 빠르게 개발하였다. 리투아니아는 조달 수요에 관한 데이터를 얻기 위하여 보건 분야 공공기관의 공급 및 서비스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IT 도구를 개발하였다 (OECD, 2020[55]). 팬데믹은 공공 조달 시스템에서 디지털 기본 전략(digital-by-default)의 도입을 앞당겼다. 예를 들어, 2020년 콜롬비아에서는 전자 조달 플랫폼인 SECOP II의 사용이 40% 증가하였다 (Portafolio, 2021[56]).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의 전자 조달 플랫폼의 활용과 기능을 확장하거나, 새로운 전자 조달 플랫폼을 도입하고 있다. 계약 및 공급 업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할 경우, 조달의 조정, 수요 예측 역량의 강화, 공적 자금의 잘못된 관리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는 공공 조달에 있어 청렴의 문제를 발생시켰다(OECD, 2020[57]). 이전에 발생한 위기에 비추어볼 때, 정부가 대규모 재화와 서비스를 긴급하게 조달할수록,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부패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진다. 국제 사회의 필수품 구매 경쟁은 공급업체의 부패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공공 조달을 유지하는 동시에 코로나19로 인한 조달의 위기를 관리하였다. 공공 조달 법제는 위기 상황에서 종료되지 않은 계약에 대해 지불이 가능하도록 예외적인 조치를 제공하지만, 투명성 지침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부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공공 조달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8장을 참고할 수 있다.

공공 자산과 인프라의 운영과 관리에 있어서는 회복탄력성이 입증되었으나, 일부 인프라는 보강이 필요하였다. 제도적 틀과 거버넌스 수단은 수요와 공급 위기에 대응한 인프라 서비스 제공의 조정이 가능하는데 필수 요소이다. 감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교통 등 일부 인프라 운영이 중단되었으나 이는 디지털, 통신 등 다른 인프라로 대체되었다. 보건, 수자원, 에너지를 포함한 기타 인프라와 자산은 위기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요소이다 (OECD, 2020[55]).

인프라 관리와 운영의 회복탄력성은 공공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핵심이다. 일부 OECD 국가들은 보건 의료 임시 시설을 늘리고, 민간 부문과 협력하여 증가하는 의료 인프라 수요에 대응하였다. 일부 국가에서는 인프라 계약의 장애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요 서비스를 검토하고 전략을 수립하였다. 예를 들어, 일본과 콜롬비아는 정부 간, 공공 및 민간 이해관계자 간 효율적인 조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조정 제도는

인프라 서비스 제공의 협력과 새로운 정보와 위기 대응 조치의 신속한 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였다. 영국은 민간투자사업의 계약 서비스 공급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였다(OECD, 2020[55]). 봉쇄 및 기타 조치로 인프라 서비스가 중단되었고, 새로운 보건 및 안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프라 보강이 필요한 경우도 있었다(OECD, 2020[55]).

봉쇄 조치로 인하여 수입이 감소하고, 비용이 증가한 민간 공급 업체에 보상을 지원하는 것 또한 어려운 과제 중 하나다. 자산의 생애주기 동안 위험을 관리, 모니터링, 완화하기 위한 보다 포괄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인프라의 생애주기별 비용에 관한 평가는 정부가 위기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인프라 회복탄력성에 관한 인식의 개선과 계획 수립은 인프라의 질을 개선하고, 필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외부 충격으로부터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인프라 거버넌스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제10장을 참고할 수 있다.

디지털 정부 자산과 인프라는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원격 근무를 가능하게 하였다. 각 국이 디지털 서비스 공급을 확대하는 속도는 서비스를 디지털 채널로 전환하기 위하여 기존의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과 관련이 있다(OECD, forthcoming[28]). 예를 들어, 2019년 디지털 서비스의 절반 이상에서 단일한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을 활용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48%에 불과하다(OECD, 2020[29]). 위기 발생 이후 디지털 ID 시스템의 활용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칠레에서는 2020년 2월~8월 활성화된 디지털 ID 의 수가 50% 이상 증가하였고, 2020년 2월~7월 디지털 ID를 활용한 거래가 400% 증가하였다. 영국의 디지털 신원확인 시스템은 10억 메시지에 도달하는데 4년이 걸린 반면, 6개월(2020년 5월~11월) 사이에 20억 메시지에 도달하였다. 캐나다 정부의 Shared Services Canada는 원격 근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접근성을 보장하고, 250,000명의 공무원을 수용하였다. 각 국가에서는 정부의 디지털·데이터 주도 역할을 강화하여 원격 근무와 서비스 제공의 탄력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의 뉴딜정책은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디지털 복구 경로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고 있다. 즉, 공공 부문이 데이터를 주도하고 스마트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2025년까지 선제적인 비대면 운영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Government of Korea, 2020[58]).

미래에의 대응성 : 정부의 회복탄력성 강화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의 회복 및 적응 단계에서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부의 신뢰와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절한 속도와 규모로 위기에 대응하여야 한다. 코로나19위기 동안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은 회복탄력성과 취약성을 동시에 보여줬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정부는 공공 재정, 자산, 인력 및 기술 등의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였다. 다만,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완충장치(여력)를 갖춰야 한다. 한편, 각 국의 정부는 정책 수립과 공공 조달의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신속하게 혁신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줬다. 그러나 디지털 기술과 원격 근무 등에 관한 혁신은 위기 발생 이전에 수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정부는 위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근거, 참여, 투명성 및 통제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였다. 이는 미증유의 팬데믹 상황에서 효과성, 공정성, 무결성, 신뢰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위기 발생 이전에 공공 커뮤니케이션과 규제 등의 절차가 마련될수록 이러한 위험이 감소될 수 있다.

회복 및 적응 단계의 목표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미래의 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어야 한다. 위의 논의를 바탕으로 그림 1.10은 코로나19위기를 회복하고 미래에 적응하기 위하여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한 2가지 핵심 의제를 제시한다. 첫 번째는 미래의 위협을 줄이고 필요 시 적절한 규모와 속도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시스템의 내부 개혁과 관련된 의제이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 내부의 운영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정책에 소요되는 재정을 활용하여 미래의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먼저, 긴급한 환경 위험을 낮추고, 모든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과 같이, 환경 친화적, 포용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정부는 미래의 위험에 대비하여 공공 재정, 고용 시스템, 정보, 필수품의 여력을 확보하고, 제공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는 미래의 위험과 위기 발생 시 혁신의 필요성을 낮추기 위하여 보다 능동적이고 선제적으로 혁신을 지원해야 한다. 마지막

그림 1.10. **정부의 회복탄력성 강화를 위한 의제**

으로, 정부의 신속한 대응 조치와 공공지출은 부패를 발생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기 동안 공공지출과 결정의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두 번째는 정부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 제고와 관련된 의제이다. 이는 정부와 사회 간 상호작용의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민주주의 체제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한 외부 개혁과 관련된 의제이다. 정부는 코로나19 회복 기간 동안 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폭 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포용성 있는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불평등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하여 정책이 결정될 수 있도록 돕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모든 사람의 의견이 균형 있게 고려될 수 있도록 로비 제도를 개혁하여 정부 신뢰를 쌓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공유 플랫폼에서 미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토론이 사실에 기반하여 진행될 수 있도록 오보와 허위정보를 선별해야 한다.

앞서 제시한 두 가지 의제는 서로 연결되어 있는 동시에 상호 보완적이다. 첫 번째 의제인 환경 친화적 회복조치, 완충장치(여력)의 마련, 선제적 혁신 및 기술의 지원은 정부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장기적으로는 정부 신뢰를 높일 수 있다. 두 번째 의제인 공정성 및 포용성, 대표성, 오보와 허위정보의 선별 등은 정책 대응의 질과 국민들의 정책 지지를 높여 정부가 미래의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정부의 통제와 청렴성은 정부 신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므로 두 가지 의제에 모두 포함된다.

규모와 속도

환경 친화적 회복

정부는 환경 친화적인 회복을 통해 회복탄력성을 높여야 한다. 그동안의 회복 지출 중 83%는 환경에 불확실한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코로나19 회복 정책에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공공 재정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2차대전 이후 추진된 마셜 플랜 지출은 미국과 수원국 GDP의 약 2%를 차지하였다. 이와 비교할 때, 미국은 코로나19 회복 정책에 GDP의 약 9%인 2조 달러를 지출하였다 (Davenport, 2021[59]). EU는 코로나19 회복을 위해 GDP의 약 13%인 총 1조 8천억 유로를 지출하였다 (European Commission, 2021[60]). 정부의 예산이 어느 곳에 지출되는지, 정부 지출을 위해 시스템이 어떻게 조정되는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2020년 OECD 각료 회의는 정부가 성장, 소득, 고용을 촉진하는 동시에 보다 환경 친화적이며,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경제 회복 정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OECD, 2020[61]). 회복 단계에서 OECD국가들은 팬데믹 이전으로의 경기 회복, 취약계층 보호, 녹색 경제의 구축 목표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그림 1.11 참고). 장기적으로, 이러한 목표는 상호보완되어야 한다. 즉, 탈탄소화 목표와 함께 회복 정책을 추진할 경우, 환경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보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다. 최근 많은 국가들에서 이러한 노력이 이행되고 있다. 예를 들어, EU는 기후의 공정한 이행, 디지털 전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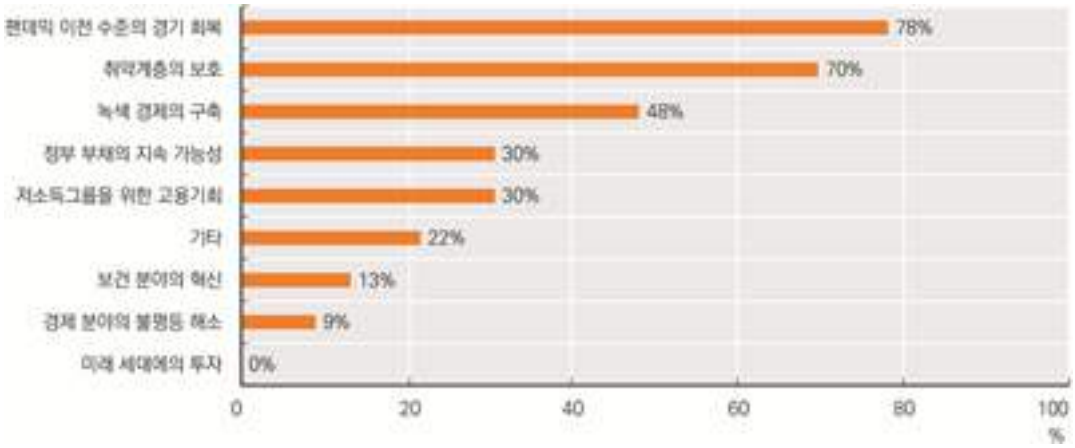
준비, 복구 및 회복탄력성을 위해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미국은 풍력 및 태양광 발전, 전기자동차 등의 인프라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지출이 환경 친화적 회복을 제고하는 데는 한계를 보인다. OECD국가 및 주요 협력국의 코로나19 회복 정책에서 환경적 조치(3,360억 달러)가 차지하는 비중은 17%에 불과하다. 회복 정책의 83%는 환경을 고려하지 않거나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OECD, 2021[62]). 그림 1.6은 코로나19 초기 정부 정책의 비효율적인 배분을 보여준다. 정부는 환경 위험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보장하기 위해 환경 친화적 예산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우선순위에 따른 효과적인 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 분야 간 재원을 재배분하고 우선순위에 따른 지출이 가능하도록 역량을 키워야 한다. 정부 지출의 성과, 우선순위, 부처 간 조정에 초점을 맞춘 지출검토 제도가 도입될 경우, 정부의 회복 정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 지난 10년간 지출검토 제도를 시행하는 OECD국가는 16개국에서 27개국으로 확대되었다(OECD, 2019[63]). 지출검토의 사례로 네덜란드의 “Insight into Quality Program”과 “public value scans”를 들 수 있다(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0[64]). 또한, 정부는 기후예산 태깅과 환경 친화적 예산을 통해 장기적인 환경 목표에 기여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 친화적 예산을 통해 경기 부양 정책이 녹색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저탄소 회복 투자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다(OECD, 2020[65]). 환경 친화적 예산 제도는 OECD 국가에서 주요한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2020년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시행되었다(République Francaise, 2020[66]).

그림 1.11 **코로나19 회복 정책의 우선순위**

(정책 유형별 우선순위(1~3순위))



주: 그림 1.11 의 자료는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웨덴, 터키의 정부수뇌기관이 제공하였다.

출처: Presentation created for Government at a Glance 2021 using data from OECD (2021[19]), *Building a Resilient Response: The Role of Centre of Govern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COVID-19 Crisis and Future Recovery Effor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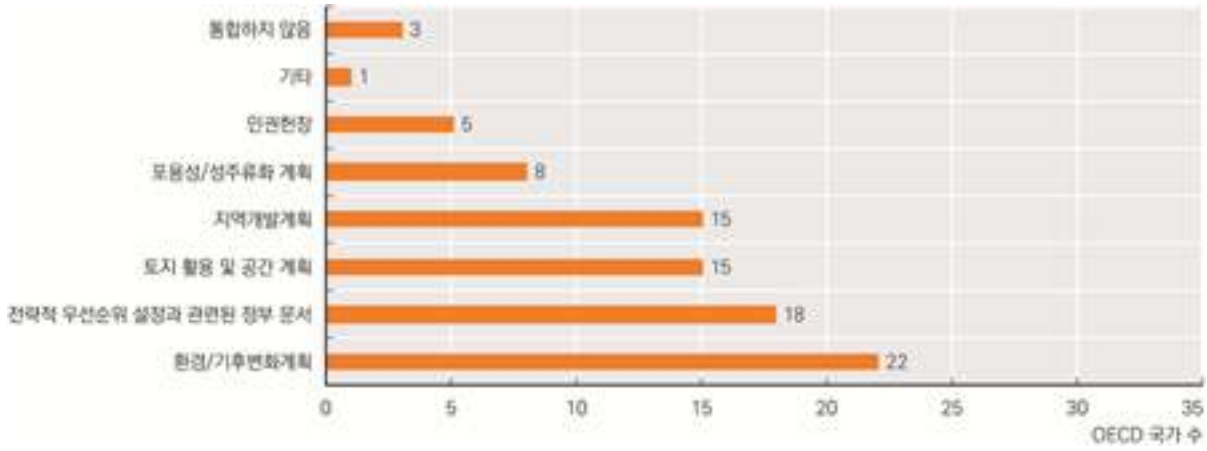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539

정부는 인프라 사업이 미래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고, 기후 변화 적응 및 완화에 효과적으로 기여하도록 보장해야 한다. OECD 국가 중 71%는 코로나19의 회복 정책에 있어 인프라 투자를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칠레, 코스타리카, 헝가리, 아일랜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에서는 경제 회복 정책의 30% 이상을 인프라 투자에 지출하였다(OECD, 2020[67]). 기후 회복탄력성, 사회적 포용성, 지속가능한 성장과 양성평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투자 계획을 장기적인 성장과 복지 정책과 연계하는 전략적 기획이 필요하다. OECD 국가들은 이러한 목표와 인프라 전략을 통합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그림 1.12 참고). 예를 들어, 캐나다와 아일랜드는 사회 및 환경 정책 목표와 인프라 투자 계획을 통합하기 위하여 투자 계획을 수정하였다. 캐나다는 인프라를 복구, 보강하기 위하여 재해 경감과 적응 사업에 정부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 (Infrastructure Canada, 2020[68]).

기존의 인프라를 적절히 복구하고, 보강할 경우 회복탄력성이 제고될 수 있다. 그러나 부적절한 유지보수가 시행될 경우, 자산으로서 인프라의 질이 저하되고,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며, 필수적인 서비스 제공의 중단을 가져올 수 있다.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에서 인프라 시스템이 적절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상황 변화와 새로운 정보를 반영하여 인프라 계획이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 즉, 인프라 계획이 불확실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OECD, forthcoming[69]).

그림 1.12. **OECD 국가의 인프라 정책과 여타 정책의 통합 (2020년)**

장기 인프라 계획과 여타 정책을 통합한 OECD 국가의 수



주: 호주,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폴란드, 스웨덴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출처: OECD (2020[67]),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558

인프라에 대한 복구 목표와 그린 인프라 구축 목표는 상호 상충될 수 있다. 인프라 복구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신속성과 환경의 지속가능성 및 기후의 회복탄력성 간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즉,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 성장을 위한 인프라 투자뿐만 아니라 미래 자연 재해 및 인적 재해의 취약성을 고려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개별 사업이 환경, 사회, 회복탄력성 목표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예를 들어, EU는 경제회복 및 복원력 강화 지원을 위하여 회원국에 6,725억 유로의 융자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EU의 지원을 받는 국가는 환경, 사회 및 정책 목표에 대한 이행 상황을 평가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국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European Commission, 2021[70]).

좀 더 넓은 차원에서 정부는 환경 친화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변화하는 기술과 경제 환경을 고려해야 한다. 수명이 길고, 자본 집약적인 인프라는 변화하는 경제 및 정치 상황과 충격에 매우 민감하다. 미래적 사고와 전략적 선견을 갖춘 정부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전략적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가능한 투자를 촉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Dutch Futures Lab"은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인프라 사업을 평가하여 인프라 투자의 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판단하는 정부 간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이는 불확실성에 대한 이해를 공유하고, 주요 장기적 과제에 대한 일관성 있는 대응을 가능케 한다(Marsden et al., 2018[71]).

공공 조달은 장기적인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구매와 조달 시스템 운영에 있어 환경 위험을 낮춰야 한다. 정부의 코로나19 회복 정책의 상당 부분(코로나19 발생 이전 정부 지출의 30% 규모)은 공공 조달을 통해 지출될 예정이다. 민간 부문과 마찬가지로 공공 조달의 전략 또한 비용 최적화에 집중하고, 글로벌 가치 사슬의 효율성에 의존해왔다. 코로나19 위기는 가능한 한 공공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오히려 회복탄력성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비축 전략"으로의 전환은 공급이 실패할 경우, 여력을 확보하고, 공급 중단의 비용을 절감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의 공공 조달 혁신 녹서(green paper on transforming public procurement)는 공급자의 다양성, 혁신성,

회복탄력성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조달 정책의 내용을 담고 있다(UK Cabinet Office, 2020[72]).

공공 조달 전략은 회복 및 환경 목표를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덴마크의 사회주택 혁신 사업은 단열 및 에너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프랑스의 공공 주택 혁신 사업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한다. 정부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공공 조달 전략이 시장의 상황에 민첩하게 대응할 경우, 기업의 잠재력이 향상될 수 있고 다양한 해결책의 제공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아일랜드는 기업이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된 세부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캐나다와 룩셈부르크는 주요 재화와 서비스(예: 테스트 키트, 인공 호흡기, 간호 서비스, IT 지원 등)에 관한 구매자와 공급자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사한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영국은 의료기기 업체와 제조업체에 인공호흡기 공급을 위한 혁신적인 전략의 마련을 요청하였다(OECD, 2020[55]).

완충장치의 구축과 사전 대비를 위한 투자

경기 부양 정책과 공공 투자는 경기 회복에 필수적이지만, 향후 위기 상황에서 재정 지원의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완충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팬데믹 초기에 소득을 보조하고, 기업과 일자리를 지원하는데 대규모의 신속한 재정 지원이 이루어졌다. 세계금융위기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경제가 취약하고 봉쇄 조치로 경제 성장이 둔화된 상황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 예방접종으로 인해 대면 활동의 제약이 완화될 때까지는 가계와 기업에 대한 소득 지원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보건, 디지털,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채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데 있어 위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정부는 재정 운용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 투자를 위한 여력을 확보하여야 한다(OECD, 2021[2]).

재정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위험과 우발 채무에 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코로나19에 관한 정부의 재정지출은 재정위험의 환경을 변화시켜 효과적인 모니터링과 보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국의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차대조표 확대 정책과 재정 지출 정책을 보완하여 활용하였다. 다만, 코로나19의 대응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재정 위험 관리의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차대조표 확대정책은 장기적으로 정부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거나 정부 보증을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프랑스, 독일, 영국 등 보조금 지출이 가장 큰 국가에서는 효과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와 정부의 주요한 기능을 전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여 서비스 전달체계의 여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디지털 인프라는 코로나19 동안 물리적 인프라를 부분적으로 대체하고,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였다. 코로나19 위기는 공공 투자를 증가시켰고, 일부 국가에서는 디지털 인프라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예를 들어, 그리스에서는 코로나19 위기가 디지털 인프라 혁신을 가져왔다. 그리스는 공공 행정의 디지털화를 추진하였고, 이때 코로나19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 정부의 서비스도 포함되었다(OECD, 2020[73]). 또한, 정부는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하여 보다 폭 넓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취약가구의 학생들이 비대면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130만 대 이상의 노트북과 태블릿을 공급하였다(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74]).

회복탄력성 측면에서 코로나19로부터 얻은 교훈은 정부의 핵심 프로세스를 유지하기 위하여 효과적이고 다양한 전달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점이다. 정부의 회복탄력성은 정부 운영 방식의 여력을 확보할 때 제고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의 특징은 물리적인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는 점이며, 이때 가장 효과적인 전달체계는 디지털 채널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 방식은 정부 인력이 특정한 장소에서 함께 근무하거나, 디지털 인프라가 훼손된 경우(예: 지진, 홍수, 사이버 공격 등)에는 효과성이 낮다. 정부는 디지털 역량과 활용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OECD, 2020[29]). 또한, 다양한 유형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프라의 중복성 즉,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함께 물리적 인프라(물리적 공간(사무실), 유선 통신 등)를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디지털, 대면, 전화 등 다양한 서비스 전달체계 간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옴니 채널(omni-

channel)“ 서비스 전달체계). 전통적인 대면 서비스는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낮은 시민들을 지원하고, 정부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과 가시성을 높일 수 있다.

정부는 위기 상황에서 “필수재”의 적절한 공급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재고를 확보해야 한다. 미래의 위기는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재화의 양과 유형을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단순히 재고를 비축하는 것만으로는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없다. 정부는 필수품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 가지 측면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당 조치는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 즉 공급의 부족이 발생하기 전에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위기 발생 시 필요한 필수품의 양과 유형을 파악하고, 공급망에 대한 민첩한 대응 계획을 수립·조정하며, 시민 및 이해관계자와 소통하는 전략적 통제가 필요하다. 둘째, 정부는 차입을 활용하여 구매력을 확보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과 역량을 지원하고, 국가 간 자원의 공동 활용과 비축을 통해 필수재의 이용 가능성을 지원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생산, 교역, 운송 및 유통에 필요한 주요 인프라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라스트마일(last mile)을 조정하여 필수 재화에 대한 이용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또한, 규제 정책도 핵심적인 요소인데, 필수재의 생산을 촉진하고, 신규 기업이 필수재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돕고, 국가 간 규제 협력을 조성하기 위하여 규제의 유연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선제적 혁신과 기술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위기가 발생하기 이전에 회복력 강화를 위한 혁신을 추진해야 하며, 질 높은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는 정책 결정, 인적자원관리, 조달, 데이터 분석 및 보급 등 정부 운영의 상당 부분에서 혁신을 추진하는 기제가 되었다. 위험의 예측 불가능성과 복잡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혁신이 필요하다. 그러나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혁신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추진되고 있는 혁신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러한 혁신은 위기 발생 이전에 추진될 수도 있었다.

정부는 미래적 사고를 통해 정부의 기능과 운영에 관한 선제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즉, 전략적 선견을 갖춤으로써 회복탄력성을 높일 수 있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위기 발생 이전 즉, 선제적인 혁신 정책이 수행되어야 한다. 선제적인 혁신은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또는 피해야 할 미래의 변수들을 판단하고 정책 실험을 통해 보다 바람직한 결과가 도출되는 효과적인 정책을 결정한다 (Tõnurist and Hanson, 2020[75]). 예를 들어, 네덜란드는 정책결정자와 이해관계자가 공동으로 미래 환경의 시나리오와 이슈를 검토하고,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며,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정부-이해관계자 간 정기적인 대화 채널을 구축하였다. 영국은 금융 분야의 혁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디지털 샌드박스” 실험을 하였다. 이는 기업이 사기 방지 및 취약 고객 지원 등의 이슈에 대응할 수 있는 제도를 개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신기술의 적용은 혁신을 촉진하여 위기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부의 회복탄력성은 공무원들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술과 역량을 갖출 때 향상될 수 있다. 공공 서비스는 숙련도가 높은 인력을 양성하여 정부의 회복탄력성에 기여할 수 있다.[4] 미래의 위기는 예측이 불가능하므로 정부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범용 기술과 역량에 투자함으로써 회복탄력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때, 범용 기술이란 직면한 문제에 대한 이해, 잠재적 해결책에 대한 창의적 사고 및 점검, 집행을 위한 협력과 조정 등을 의미한다.

각 국의 정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달성된 조정의 증가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의 유연성, 민첩성,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인 제도와 숙련 기술을 파악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공무원이 정부 조직과 복잡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이해하고, 정부 외부의 주요 행위자와의 적극적인 협력 관계를 맺도록 지원해야 한다.

향후 정부가 직면할 위험은 국경을 벗어난 초국가적인 위험이다. 따라서 각 국가들이 공동의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효과적인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대한 효과적인 참여, 조정 및 담론 기술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 간 언어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중요하다.

통제 및 청렴성

코로나19 위기로 관리 감독 및 협의 기준이 완화되었으며, 이는 정부의 청렴성 문제를 발생시켰다. 정부는 이러한 청렴성 위기를 해결하는 동시에 미래의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위기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미래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해야 한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부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 규제, 예산 편성, 공공 조달 등 많은 분야에서 신속한 결정과 조치를 내려야 했다. 경제 지원, 경기 부양, 사회복지 사업을 위해 신속하게 추진한 대규모 재정 지출은 특히, 내부 통제, 관리 감독, 감사 및 위기관리 측면에서 시험의 계기가 되었다.

코로나19는 정부의 청렴성에 대한 위험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켰다. 지난 위기는 정부의 긴급 대응 조치가 긴급 조달, 경제 성장 및 사회 복지 사업의 배분, 서비스 전달(백신 계약 및 운영) 등의 영역에서 무결성 위반의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사기와 부패는 정부 대응의 효율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부당한 위압 및 비윤리적 관행에 대한 소문은 정부 신뢰를 저하시키고, 정부 혁신에 대한 시민들의 지지를 낮출 수 있다.

정부는 대응 정책을 설계·집행하는 과정에서 공공청렴성을 보호하기 위한 장단기적인 조치를 통해 위험을 관리해야 한다(OECD, 2020[57]; OECD, 2020[77]). 팬데믹 초기, 캐나다, 미국, 프랑스 등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에서는 재난구호기금 지원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권고안과 지침을 발표하였다(Tasker, 2020[78]; Kreidler, 2020[79]; Le Figaro, 2020[80]; ICAEW, 2020[81]). 미국의 투명성 및 책임 위원회는 부정 수급을 판단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을 만들었으며, 감사원은 특정 사업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였다. 이는 부정부패를 예방하는 동시에 일선 부처 내 감사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Zagorin, 2020[82]). 공공 플랫폼인 Recovery.gov는 정부가 납세자들이 낸 세금을 어떻게 지출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언론과 시민들에게 제공해준다. 미래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 청렴에 대한 이사회 권고안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렴 문화를 촉진하고 성숙한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OECD, 2017[83]). 정부의 청렴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위험과 내구성을 관리하기 위한 준비 및 계획 :** 정부 프로그램의 목표는 종종 감독, 통제, 위기관리와 상충된다. 따라서 정부는 감독, 통제, 위기관리의 필요성을 선제적으로 고려하여 준비하고 계획을 세워야 한다. 위기 상황에서 임시방편적인 의사결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계획 수립 시 위험에 대한 내구성(risk tolerance)을 명확하게 정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허용 가능한 수준에서 감독, 통제, 위기관리라는 목표와 프로그램의 목표 간 상충관계(trade-offs)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 지출이 시의적절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통제를 일부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예: 계획된 회복탄력성).
- **내부 통제:** 정부의 계획과 사전 조치의 효과성은 통제에 대한 관리 책임의 공식화 정도, 채택 및 시행 수준에 영향을 받는다. 회복탄력성이 높은 조직은 분산된 통제 방식을 특징으로 한다.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볼 수 있듯이 정부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내부 통제 환경과 통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 **정보 관리:** 정보 관리와 활용은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중 많은 국가들은 위험성 평가 결과(특히, 새롭게 등장한 위험)를 확산시키는데 실패하였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가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지만, 평가 결과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정책, 제도, 문화는 발전하지 못했다.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이해관계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위험성 평가 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보 전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 **증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의 보장:** 코로나19 위기는 일상의 도전과 극심한 충격을 해결하기 위해 IT 인프라 및 데이터 기반의 접근방법에 투자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줬다. 증거 기반 의사결정에 필요한 인프라, 역량, 기술에 투자를 한 국가일수록 투명성 포털의 설치, 경기부양 기금의 추적, 감독을 위한 데이터의 활용 기반이 잘 갖춰진 국가임을 알 수 있다.

신뢰와 투명성

정부와 시민이 공동으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행할 수 있도록 효과적이고 공정한 제도를 갖춘 국가일수록 미래의 충격에 대한 회복탄력성이 높을 것이다. 위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코로나19 위기 동안 상당한 정부의 영역에서 투명성과 참여 수준이 낮아졌다. 신속한 대응 조치를 위하여 정부의 정책은 긴급하게 구성된 전문가와 과학자 패널과의 협의를 거치거나, 비공식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결정되었다. 포스트 코로나 시기를 대비하여 정부는 시민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주의 시스템의 건강한 기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의 운영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 이번 절에서는 신뢰와 책무성을 높이기 위한 국가들의 주요 개혁을 살펴본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부의 효과성과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이때, 신뢰는 공공 기관이 공공의 이익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보호하며,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할 것이라는 사람들의 믿음을 의미한다. 많은 연구들은 제도 및 타인에 대한 신뢰가 사회 경제적 성장을 위한 핵심 요소임을 주장하였다(Algan and Cahuc, 2014[84]). 정부 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초기 정책을 신속하게 지원하며, 새로운 제도를 준수하고, 이행 비용을 줄이는 등 정책의 집행에 기여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제도에 대한 신뢰가 높은 국가일수록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한 정부 조치의 준수율이 높았다(Bargain and Aminjonov, 2020[85]). 즉, 정부 신뢰는 제한 조치가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낮추고, 미래의 충격에 대한 정책 대응의 교훈을 얻도록 도움을 제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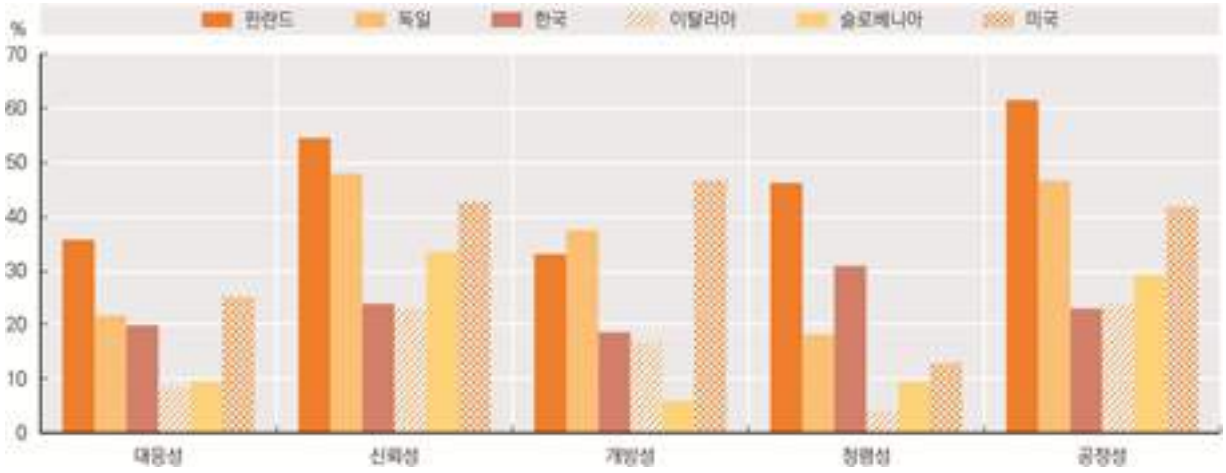
최근 몇 년 간 정부에 대한 신뢰의 저하가 공공기관의 정당성을 낮추고, 정치적 양극화를 조장하며, 포퓰리즘을 양산하고 있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Devine et al., 2020[86]).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 신뢰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일부 국가에서만 위기 발생 이전으로 신뢰 수준이 회복되었다(OECD, 2019[87]).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도 경제, 사회, 정치, 대표성의 측면에서 불평등과 불공정이 존재하였다. 2018년 OECD 26개국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중 40%만이 정치 효능감을 느낀다고 응답하였다(제 12장 참고). OECD는 사회 정책에 대한 "불공정과 불만"을 보고하였고, 21개 OECD 국가의 국민 중 60%는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거나 개혁할 때,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2020년은 정부 신뢰와 시민의 자유 및 민주주의 시스템에 상당한 도전적 과제가 주어진 해이다. 코로나19 초기에 "결집효과(rally round the flag)"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정부 신뢰가 감소하였다(제12장, Eurofound (2020[89]), alsoand Ipsos(2021[90]) 참고). 상당수의 국가에서 발생한 부패와 부정행위는 정부의 대응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일부 논평가들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전례 없는 규제(이동 제한, 통행금지, 집합 제한)가 공중 보건 비상 시 국제법에서 허용하는 제한의 범위를 넘었다고 지적하였다(Narsee, 2021[91]).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시민들은 기업, 언론, 비정부조직보다 정부의 윤리성과 역량이 낮다고 응답하였다(Edelman, 2021[92]). OECD 국가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광범위한 사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Rachman, 2021[93]; Trian, 2021[94]).

정부는 정부의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이해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유지할 수 있다. OECD는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요인을 다섯 가지로 제시하였다. 다섯 가지 요인은 1) 공공서비스의 대응성, 2) 새로운 수요의 예측 및 시민 보호에 대한 신뢰성 3) 청렴성, 4) 개방성, 5) 공정성이다(OECD, 2017[95]).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국가별, 정부 기능별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초기 이탈리아 에서는 자연재해나 감염병 확산 등의 위기로부터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국민이 23%에 불과하였으나, 핀란드는 54%에 달했다(그림 1.13 참고).

대응성과 신뢰성의 증가는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할 수 있다. OECD 설문조사 결과, 한국과 핀란드에서는 대응성과 신뢰성이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OECD/KDI, 2018[96]) (OECD, 2021[97]).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신뢰는 정책의 지속가능성(실질적 또는 인지적)을 확보하여, 정부 개혁에 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높인다. 예를 들어, 한국, 스페인, 스웨덴에서는 국민의 대다수가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것이 미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고 인식하며,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의 부채를 활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기후 변화 정책을 이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없기 때문에 미래 지향적인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Fairbrother et al., 2020[99]).

그림 1.13. **OECD 설문조사 결과 정부 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가별, 요인별 긍정적으로 응답한 국민의 비율)



주: 핀란드의 설문조사는 보건 위기와 관련된 신뢰성을 1~10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핀란드는 2020년 8월 소비자 신뢰 조사의 틀을 활용한 공공기관 신뢰 조사의 결과를 데이터로 제공하였다. 독일,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미국의 자료는 2017년Trustlab 프로젝트를 통해 수집되었다. 한국에 대한 자료는 2017년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공동으로 수집하였다. 그림 1.13.의 자료는 설문조사 참여자 중 7~10점으로 응답한 참여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출처: OECD/KDI (2018[96]),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https://dx.doi.org/10.1787/9789264308992-en for Korea;* OECD (2021[97]),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Finland;* Murtin et al. (2018[98]), "Trust and its determinants: Evidence from the Trustlab experiment", *https://dx.doi.org/10.1787/869ef2ec-en* for other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577

코로나19 위기의 경험은 신뢰에 관한 OECD의 정책 프레임워크의 중요성을 다시한번 보여준다. 신뢰에 관한 OECD의 정책 프레임워크는 팬데믹 기간 동안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조치를 제안하며,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 주목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책과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그들을 정책 과정에 참여시키며, 정책이 집단 간 분배 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논의해야 한다. 특히, 코로나19의 회복과 적응 단계에서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1) 공공 정책에서의 대표성과 이익의 결집성에 관한 투명성과 대응성 제고, 2) 정책 결정 과정의 공정한 참여 보장, 3)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선별과 대응이 필요하다.

대표성과 이익 결집

의회는 사회적 이익을 대표하고 결집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회복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의회는 이미 증가한 세입과 지출을 승인하는데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의회가 중기재정계획을 심의하는 국가는 2/3이며, 장기적 관점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국가는 절반 이상에 달한다(OECD, 2019[63]). 정부가 대규모 회복 정책과 개혁을 추진함에 따라 의회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이다. 의회가 전체 예산 주기에서 특히, 중장기 지속가능성 분석에 참여하는 것은 다년도 계획과 향후 주요 정책에 관한 약속과 합의에 신뢰성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의회의 대표성에는 일부 한계가 있다. OECD 국가에서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 의원은 평균적으로 1/3 미만이고(OECD, 2019[100]), 40세 미만 의원은 약 1/5 미만이다(OECD, 2018[101]). 의회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들을 참여시키고, 다양한 시각과 요구를 이해하며, 신뢰를 구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는 회복 기간 동안 신뢰를 높이고 개혁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시민을 참여시켜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은 광범위한 분야의 정책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래의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다양한 이익, 수요, 선호를 반영하는 포용적 정책 결정은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 포용적 정책 결정은 시민 협의와 참여, 정부 데이터 개방, 데이터 윤리 활용, 시민의 수요와 기대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 서비스의 설계와 전달에 있어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 활용, 투명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등이 포함된다. 추가적으로는 시민들의 공공 참여, 데이터 및 디지털

서비스 활용, 공공 커뮤니케이션 등의 방식을 변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시행될 수 있다. 열린 정부를 구축함에 있어 공공의 수요와 가치, 우선순위를 정책에 반영하고, 정책 설계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정부와 사회의 장기적인 회복탄력성에 관한 결정에는 가치, 복잡한 상충 관계,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결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의회와 같은 대표성 있는 숙의 절차가 적절하게 만들어져야 한다. OECD 숙의 절차 데이터베이스는 약 300개의 대표성 있는 숙의 절차에 관한 사례를 보여준다 (OECD, 2020[102]). 멜버른 시의 시민 패널은 시의 10년 계획(50억 호주 달러)의 우선순위와 장기적인 지출을 결정하였다. 프랑스 낭트시, 이탈리아 밀라노, 영국의 브리스톨 같은 도시에서는 시민 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 회복 계획에 대한 숙의 과정을 거쳐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온라인에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역량과 관련된 정보 격차를 인식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은 높은 수준의 인터넷 커버리지를 보유하고 있다. 인구의 97%가 4G 네트워크에 접속하고 가구의 87%가 광대역 연결망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발생 이전 정부와 소통하기 위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국민들은 58%에 불과하다. 최근 3개월 동안 55세~74세의 70%, 4분위 소득의 72%만이 인터넷에 접속한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19[103]).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민과 함께 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채널을 제공하는 동시에 디지털 활용 역량에 관한 교육에 투자해야 한다.

정부는 로비 절차의 투명성과 거버넌스를 개선해야 한다. 지난 충격으로부터의 회복은 정책 결정자와 연결된 이해관계자들의 로비가 공공 정책의 편견을 양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전의 경기부양 정책 사례는 적극적으로 로비를 한 기업일수록 더 많은, 더 빠른 지원을 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Blau, Brough and Thomas, 2013[104]). 일부 국가에서는 정치적 연결이 재정 지원의 배분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고, 정치적으로 연결된 기업일수록 더 많은 구제금융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Faccio, Masulis and McConnell, 2006[105]; Igan and Lambert, 2018[106]). 편향된 지원 정책은 위기 이후 사회 및 경제적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Hasen, 2012[107]).

코로나19 위기로 영향을 받은 기업의 로비활동은 긴급 대응 조치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합법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동안 대응 조치의 신속성은 로비활동의 거버넌스에 관한 위험들을 드러냈다. 로비 등록 문서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위기 발생 직후 한달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로비 활동이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Lobbying of Canada, 2020[108]). 초기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기관과 연계된 기업, 제도적, 행정적 복잡성을 파악할 수 있는 자원을 보유한

그림 1.14. **공무원과의 회의 및 커뮤니케이션에 있어 투명성 조건을 적용받는 이해관계자**
로비활동의 투명성 및 청렴성 원칙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안 및 로비활동에 관한 OECD 설문조사

출처: OECD (2021[112]), Lobbying in the 21st Century: Transparency, Integrity and Acces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596

기업이 경기부양 정책의 수혜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Warmbrodt, 2020[109]; Tankersley, Cochrane and Flitter, 2020[110]). 일부 이익집단은 위기 발생 이전부터 추진해 온 계획들을 시행하기 위하여 로비활동을 진행하기도 하였다(Vogel,2020[111]. 누가 어떻게 주요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정보의 부족은 이러한 위험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실제, 로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행위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국가는 OECD 국가 중 절반 미만이다(그림 1.14 참고).

정부는 균형있고 투명한 이익 결집이 가능하도록 정부 기능을 조정하여 국민의 신뢰도를 제고해야 한다. 이를 통해 비효율적인 프로그램 또는 불평등 정책이 회복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들을 경감할 수 있다.

- 위기 상황에서는 적절한 수준의 유연성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포용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위기로 인한 영향을 받은 이해관계자들과의 우선 상담, 비공식적 상담 등이 방안이 될 수 있다.
- 규제 조치에 관한 사후 이행 검토는 신뢰를 유지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 정부는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행위자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캐나다 로비스트 등록 문서와 같은 온라인 등록 문서를 이를 보여주는 중요한 수단이다(Officer of the Commissioner of Lobbying of Canada, n.d.[113]).
- 정부는 로비스트와 로비활동을 싱크탱크, 연구 기관, 자문 및 전문가 집단을 포함한 개념으로 재정의해야 한다.
- 로비와 기타 영향력 행사로부터 공무원들의 청렴을 유지해야 한다.
- 로비스트가 정책 결정의 청렴도와 포용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기준과 지침을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로비활동의 투명성 및 청렴성 원칙에 대한 OECD 이사회 권고안을 참조할 수 있다(OECD, 2021[1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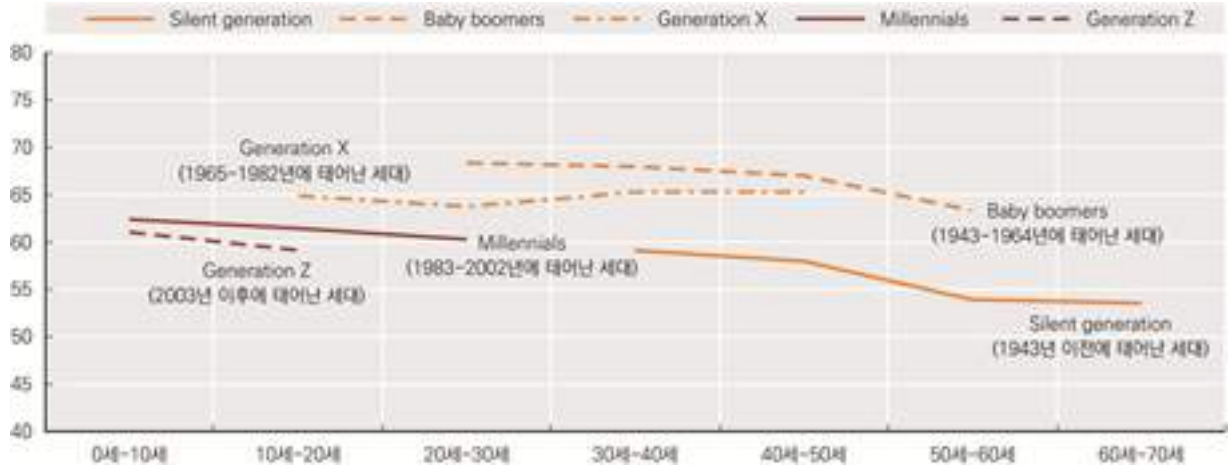
정책 결정의 포용성과 공정성

정부는 시민성과의 포용성과 공정성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정책의 설계와 시행은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에 대한 불만과 정부의 결정이 공익에 도움을 주지 않는다는 인식은 시민 간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일치한다. 통계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부유한 10%의 평균 가처분소득은 가장 가난한 10%의 약 9.5배였다. 이는 25년 전의 7배에서 증가한 수치로 소득 불평등이 고착화될 위험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부모가 중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아동은 대학에 진학할 확률이 15%에 불과한 반면, 3차 교육을 받은 부모가 한 명 이상 있는 아동은 60%에 달한다(OECD, 2018[114]).

이는 불평등이 세대간 문제로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15에서 볼 수 있듯이, '베이비 부머' 세대 이후의 새로운 세대가 중산층에 포함될 가능성이 낮아졌다(OECD, 2019[115]; OECD, 2020[116]). 코로나19는 청년의 고용, 교육 및 복지에 체계적이고, 심화된, 불균형적인 영향을 미쳐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ILO, 2020[117]). 불평등의 중요한 유형으로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코로나19이전에는 OECD 국가 간 성별 임금 격차가 평균 12.8%였다(OECD, 2019[118]; OECD, 2017[119]). 코로나19는 여성들이 가정에서의 추가 돌봄 부담의 상당 부분을 짊어진 동시에 일자리와 소득 손실의 높은 위험에 직면하면서 다시 불평등을 악화시켰을 가능성이 높다(OECD, 2020[120]).

신뢰, 탄력성 및 건강한 민주주의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이 불평등의 주요 차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은 재정 영향 분석과 같이 정책이 다양한 시민 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있다(Lustig, 2018[121]). 성인지 예산과 같은 기술적 수단들은 정부 정책이 불평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Stotsky, 2016[122]). 정부는 정책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세분화된 정보가 정책 설계와 평가에 체계적으로 통합되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COVI D-19 위기에서 회복하기 위한 정부 지출과 정책이 사회의 다양한 집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조사하고, 성별, 연령별 요인에 따라 분석하였다.

그림 1.15. **생애주기별 세대 간 중위소득 가구의 인구 비중**



주: Silent generation(1943년 이전에 태어난 세대), Baby boomers(1943~64년에 태어난 세대), Generation X(1965~82년에 태어난 세대), Millennials(1983~2002년에 태어난 세대), Generation Z(2003년 이후에 태어난 세대). 중위소득 가구는 중위 값의 75%~200% 소득을 보유한 가구를 의미한다. OECD 평균에는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미국의 데이터가 포함된다.

출처: OECD (2019[115]),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https://dx.doi.org/10.1787/689afed1-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615

오보와 허위정보의 규제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건강한 민주주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제도화와 미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많은 OECD 국가들은 위기 동안 허위정보를 다룰 준비가 부족했다. 27개의 OECD 회원국 중 11개의 정부수뇌기관만이 위기 초기에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안내하기 위한 공식 문서, 정책 또는 프레임워크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18개 보건부처 중 4개 부처만이 정부의 대응 문서를 갖추고 있었다(OECD, 2020[47]). 이는 정부의 오보 및 허위정보에 관한 규제가 없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팬데믹 이후 건강과 관련된 오보에 대응할 준비가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팬데믹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오보가 확산될 것이라고 예측이 가능했지만, 많은 국가의 정부는 이에 대한 소통이 불충분하였다. 감염의 발생 원인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효과에 관한 오보는 일부 사람들이 지침을 위반하도록 하거나(Seitz, 2020[123]), 인프라를 훼손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Satariano and Alba, 2020[124]). 더 넓게 보면, 오보와 허위정보는 사실과 논리, 도덕적 존중 및 민주적 포함으로 특징지어지는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대중의 능력을 방해하여 민주주의 시스템의 운영을 저해할 수 있다(McKay and Tenove, 2020[125]).

오보와 허위정보를 막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에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효과적인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시기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OECD, 2021[126]), “trusted voices”를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제공하여, 백신의 효과와 안전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캐나다는 지역사회 지도자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지역의 요구에 따라 메시지를 작성하고 중계하고 있으며, 대중과의 양방향 대화를 장려하고 있다(Government of Canada, 2020[127]).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내러티브를 추적하고 대응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영국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오보를 선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신속 대응 조직을 설립했다. 해당 조직은 공공 커뮤니케이션이 전략적으로 잠재적인 유해 콘텐츠를 인식, 모니터링 및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의 회복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포용성을 높이고, 시민과 이해관계자를 동원하고 참여시켜야 한다. 위기 이전에, OECD 국가들의 20개의 정부수뇌기관은 이미 오보를 막기 위해 외부 파트너들과 협의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는 공식적으로 오보를 규제하기 위하여 미디어 및 시민사회와 함께 태스크 포스를 설립했다(OECD, 2020[128]). 이러한 노력으로 미디어 및 정보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보다 광범위한 정책 조치도 포함될 수 있다(OECD, 2020[128]).

정부는 투명성과 경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공공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을 만들어 오보와 허위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시행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들 간 상충된 이해관계를 관리하고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체적인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오스트리아, 캐나다, 프랑스, 스웨덴 등의 일부 국가에서는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통해 다양하고 독립적인 미디어 분야를 지원하고 있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공영 방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정보의 수요와 관련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예를 들어, 미디어 리터러시 정책은 시민들이 서로 다른 미디어와 메시지를 이해하고, 정보를 평가하고, 잠재적으로 부정확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콘텐츠를 양산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도록 도울 수 있다(Matasick, Alphonsi and Bellantononononi, 2020[129]).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팬데믹을 관리하기 위해 활용된 접촉자 추적 시스템은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처리한다.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 개인정보보호, 통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지적되었다. 정부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각각의 기관이 개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정부는 데이터 관리 및 디지털 도구에 대해 명확한 규칙을 마련해 시민들에게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 및 사용 방법에 대한 투명성과 통제력을 높여야 한다. 기존의 데이터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데이터 윤리 정책 등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OECD의 공공부문 데이터 윤리에 관한 모범 사례 원칙과 같은 공식적인 데이터 윤리 정책을 채택하는 것도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OECD, 2021[130]).

주석

1. 한 눈에 보는 정부의 개념적 틀에는 정부에 대한 노동과 자본을 투입으로 하는 공공 고용과 공공 재정이 포함된다. 제1장에서는 투입으로서 정보와 자산의 충요성에 대해 추가적으로 논의한다. 코로나19 위기는 미래 정부의 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본"의 개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는 자본으로서 정책 결정을 위한 데이터 및 정보(예: 감염률, 실업률)와 전달 체계인 자산(예: 병원, 방역물품, 인터넷 인프라)의 투입이 필요하였다.
2. 한 눈에 보는 정부의 개념적 틀은 정부의 운영을 경제의 생산 기능과 유사한 형태로 보여준다. 이는 회복탄력적인 정부의 개념을 보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보여줄 수 있다는 의의가 있다. 즉, 회복탄력적인 정부는 위기 발생 시 투입물을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새로운 생산 프로세스를 가동하여 위기 발생 이전과 동일한 산출물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정부를 의미한다. 관련 내용은 제1장 제1.2절과 제1.3절을 참고할 수 있다.
3. 코로나19 발생 이후 유휴생산능력과 관련한 공공의 투입은 일부 민간의 투입으로 대체되었다. 예를 들어, 2020년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로 인하여 개인의 주거 공간과 인터넷 등을 활용하였다.
4. 코로나19 충격 이후 OECD 정부의 권고사항을 의미한다. 이 행사에는 5,500명 이상의 시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65개 이상의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의 영향에 대해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정부와 사회의 바람직한 미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행사 직후 정부 지도자들이 참석하는 글로벌 포럼이 개최되었다(OECD, 2020[131]).

참고문헌

AdCF (2020), *Chute de la commande publique, https://www.adcf.org/articles-chute-de-la-commande-publique--l-adcf-tire-le- signal-d-alarme-5581* (accessed on 19 March 2021). [53]

Algan, Y. and P. Cahuc (2014), "Trust, growth, and well-being: New evidence and policy implications", in *Handbook of Economic Growth, http://dx.doi.org/10.1016/B978-0-444-53538-2.00002-2.* [84]

Bargain, O. and U. Aminjonov (2020), "Trust and compliance to public health policies in times of COVI D-19",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192, p. 104316, *http://dx.doi.org/10.1016/j.jpubeco.2020.104316.* [85]

Blau, B., T. Brough and D. Thomas (2013), "Corporate lobbying, political connections, and the bailout of banks", *Journal of Banking & Finance*, Vol. 37/8, pp. 3007-3017, *http://dx.doi.org/10.1016/j.jbankfin.2013.04.005.* [104]

ChileCompra (2021), *Compras historicas del Estado*, ChileCompra website, *http://datosabiertos.chilecompra.cl/Home/CompraHistorica*(accessed on 19 March 2021). [52]

Cohen, J. (2021), “How soon will COVI D-19 vaccines return life to normal?”, *Science, http://dx.doi.org/10.1126/science.abh0618.* [1]

Davenport, C. (2021), “Biden’s big bet: Tackling climate change will create jobs, not kill them”,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1/03/31/climate/biden-climate-jobs.html* (accessed on 31 March 2021). [59]

Devine, D. et al. (2020), “Exploring trust, mistrust and distrust”, *Working Paper Series*, TrustGov Project, University of Southampton. [86]

Edelman (2021), *Edelman Trust Barometer 2021: Global Report*, Edelman, https://www.edelman.com/sites/g/files/aatuss191/files/2021-01/2021-edelman-trust-barometer.pdf. [92]

Eurofound (2020), *Living, Working and COVID-19*, Eurofound, *http://eurofound.link/ef20059* (accessed on March May 2021). [89]

European Commission (2021), *Recovery and Resilience Facility*, European Commission website, *https://ec.europa.eu/info/business-economy-euro/recovery-coronavirus/recovery-and-resilience-facility_en#therecovery-and-resilience-facility* (accessed on 2021 Apr 27). [70]

European Commission (2021), *Recovery Plan for Europe*, European Commission website, *http://ec.europa.eu/info/strategy/recovery-plan-europe_en* (accessed on 31 March 2021). [60]

Faccio, M., R. Masulis and J. McConnell (2006), “Political connections and corporate bailouts”, *The Journal of Finance*, Vol. 61/6, pp. 2597-2635, http://dx.doi.org/10.1111/j.1540-6261.2006.01000.x. [105]

Fairbrother, M. et al. (2020), *How Much Do People Value Future Generations? Climate Change, Trust, andPublic Support for Future-Oriented Policies*, Swedish National Data Service, *https://doi.org/10.5878/abr0-ba73*. [99]

Falagiarda, M., A. Prapiestis and E. Rancoita (2020), “Public loan guarantees and bank lending in the COVID-19 period”, *ECB Economic Bulletin* 6. [33]

Ferguson, N. et al. (2020), “Impact of non-pharmaceutical interventions (NPIs) to reduce COVI D-19 mortality and healthcare demand”, *Report*, No. 9, Imperial Colleage London, https://www.imperial.*ac.uk/mrc-global-infectious-disease-analysis/covid-19/report-9-impact-of-npis-on-covid-19/.* [8]

Government of Canada (2020), *Impact & Innovation Unit: Annual Report 2019-2020*, Privy Council Office, *https://www.canada.ca/content/dam/ih-ci/documents/pdfs/2019-2020-eng.pdf.* [127]

Government of Korea (2020), *Korean New Deal: National Strategy for a Great Transformation*, Government of Korea, https://english.moef.go.kr/pc/selectTbPressCenterDtl.do?boardCd=N0001&seq=4948#:~:text=The%20*Korean%20New%20Deal%2C%20announced,employment%20and%20social%20safety%20net.* [58]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0), *Stability Programme: The Netherlands*,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2020-european-semester-stability-programmenetherlands_en.pdf.* [64]

Hale, T. et al. (2020), *Oxford COVID-19 Government Response Tracker*, Blavatnik School of Government, *https://www.bsg.ox.ac.uk/research/research-projects/covid-19-government-response-tracker#data*. [10]

Hasen, R. (2012), “Lobbying, rent-seeking, and the constitution”, *Stanford Law Review*, Vol. 64/1, *https://www.stanfordlawreview.org/print/article/lobbying-rent-seeking-and-the-constitution/.* [107]

Hauser, A. (2020), *Seven moments in spring: Covid-19, financial markets and the Bank of England’s balance sheet operations*, Bank of England, *https://www.bankofengland.co.uk/-/media/boe/files/speech/ 2020/seven-moments-in-spring-covid-19-speech-by-andrew-hauser.pdf?la=en&hash=43D022917D76095F1E79CBDD5D42FCD96497EA5F*. [38]

Hordijk, L. and P. Patnaik (2020), “Covid-19: EU countries spent over €220m stockpiling remdesivir despite lack of effectiveness, finds investigation”, *BMJ*, Vol. 371, http://dx.doi.org/10.1136/bmj.m4749. [18]

Hynes, W. et al. (2020), “Bouncing forward: A resilience approach to dealing with COVI D-19 and future systemic shocks”, *Environment Systems and Decisions, Vol. 40/2, http://dx.doi.org/10.1007/s10669-020-09776-x.* [7]

ICAEW (2020), *Government Watchdog Sounds COVID-19 Fraud Risk Alarm*, Institute of Chartered Accountantes of England and Wales website, *https://www.icaew.com/insights/viewpoints-on-the-news/2020/mar-2020/government-watchdog-sounds-covid-19-fraud-risk-alarm* (accessed on May November 2021). [81]

Igan, D. and T. Lambert (2018), “Bank lobbying: Regulatory capture and beyond”, *SSRN Electronic Journal, http://dx.doi.org/10.2139/ssrn.3128829*. [106]

ILO (2020), *Youth and COVID-19: Impacts on Jobs, Education, Rights and Mental Well-Being*,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https://www.ilo.org/global/topics/youth-employment/publications/WCMS_753026/lang—en/index.htm*. [117]

IMF (2021), *Database of Country Fiscal Measures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ebsite, *https://www.imf.org/en/Topics/imf-and-covid19/Fiscal-Policies-Database-in-Response-to-COVID-19*. [32]

Infrastructure Canada (2020), *Investing in COVID-19 Community Resilience, https://www.infrastructure.gc.ca/plan/covid-19-resilience-eng.html*. [68]

IPCC (2018), *Global Warming of 1.5C: Summary for Policymakers*,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https://report.ipcc.ch/sr15/pdf/sr15_spm_final.pdf*. [3]

Ipsos (2021), *COVID-19 one year on: Global public loses confidence in institutions*, Ipsos website, https://www.ipsos.*com/en/covid-19-one-year-global-public-loses-confidence-institutions* (accessed on 2021 April 5). [90]

Kim, E. (2020), "Drawing on Israel's experience organizing volunteers to operationalize drive-through coronavirus testing centers", *Disaster Medicine and Public Health Preparedness*, Vol. 14/6, *http://dx.doi.org/10.1017/dmp.2020.104*. [22]

Kim, J. et al. (2021), *Emerging COVID-19 success story: South Korea learned the lessons of MERS*, Our World in Data website, https://ourworldindata.org/covid-exemplar-south-korea. [20]

Kreidler, J. (2020), "Avoiding SSA scams during COVI D-19", *Federal Trade Commission*, Federal Trade Commission website, *https://www.consumer.ftc.gov/blog/2020/04/avoiding-ssa-scams-during-covid-19*(accessed on May November 2021). [79]

Le Figaro (2020), "Chomage partiel: Le gouvernement va renforcer les controles contre les fraudes", *Le Figaro*, Le Figaro, *https://www.lefigaro.fr/social/fraudes-au-chomage-partiel-le-gouvernement-va-renforcerles-controles-20200513* (accessed on May November 2021). [80]

Linkov, I., B. Trump and W. Hynes (2019), *Resilience-based Strategies and Policies to Address Systemic Risks*, OECD, *https://www.oecd.org/naec/averting-systemic-collapse/SG-NAEC(2019)5_Resilience_strategies.pdf*. [6]

Lustig, N. (ed.) (2018), *Commitment to Equity Handbook: Estimating the Impact of Fiscal Policy on Inequality and Poverty*, Brookings Institution Press. [121]

Marsden, G. et al. (2018), *All Change? The Future of Travel Demand and the Implications for Policy and Planning*, Commission on Travel Demand, http://www.demand.ac.uk/wp-content/uploads/2018/04/FutureTravel_report_final.pdf. [71]

Matasick, C., C. Alfonsi and A. Bellantoni (2020), "Governance responses to disinformation: How open government principles can inform policy option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d6237c85-en. [129]

McKay, S. and C. Tenove (2020), "Disinformation as a threat to deliberative democracy",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http://dx.doi.org/10.1177/1065912920938143. [125]

Murtin, F. et al. (2018), "Trust and its determinants: Evidence from the Trustlab experiment", *OECD Statistics Working Papers*, No. 2018/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869ef2ec-en. [98]

Narsee, A. (2021), "Europeans' Right to Protest Under Threat", *Carnegie Europe*, Carnegie Europe website, *https://carnegieeurope.eu/2021/01/27/europeans-right-to-protest-under-threat-pub-83735*(accessed on 2021 April 23). [91]

OECD (2021), *Building a Resilient Response: The Role of Centre of Govern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COVID-19 Crisis and Future Recovery Efforts*, OECD. [19]

OECD (2021), *Enhancing Public Trust in COVID-19 Vaccination: The Role of Governments*, OECD, *https://www.oecd.org/coronavirus/policy-responses/enhancing-public-trust-in-covid-19-vaccination-the-role-of-governmentseae0ec5a/*. [126]

OECD (2021), *Focus on Green Recovery*, OECD website, *https://www.oecd.org/coronavirus/en/themes/green-recovery* (accessed on 23 April 2021). [62]

OECD (2021), *Good Practice Principles on Data Ethics in the Public Sector*, OECD, *https://www.oecd.org/gov/digital-government/good-practice-principles-for-data-ethics-in-the-public-sector.htm*. [130]

OECD (2021), *Lobbying in the 21st Century: Transparency, Integrity and Access*,, OECD, *https://doi.org/10.1787/c6d8eff8-en*. [112]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Volume 2021* (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631c1b44-fr*. [2]

OECD (2021), *Open data in action: initiatives during the initial stage of the COVID-19 pandemic*, OECD, *https://www.oecd.org/gov/digital-government/use-of-open-government-data-to-address-covid19-outbreak.htm*. [24]

OECD (2021), *Special Module on COVID-19: Response of the Survey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37]

OECD (2021),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Finland*, OECD, *https://dx.doi.org/10.1787/52600c9e-en*. [97]

OECD (2020), *2020 Ministerial Council Statement: A Strong, Resilient, Inclusive and Sustainable Recovery from COVID-19*, OECD, *https://www.oecd.org/newsroom/2020-ministerial-council-statement-a-strong-resilientinclusive-and-sustainable-recovery-from-covid-19.htm*. [61]

OECD (2020), "Building resilienc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centres of government",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83d2961-en. [23]

OECD (2020), *COVID-19 and fiscal relation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b438b9f-en*. [30]

OECD (2020), "Digital Government Index: 2019 results",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0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4de9f5bb-en. [29]

OECD (2020), "Estonia adopts PPE tracking platform MASC", *COVID-19 Innovative Response Tracker*,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website, *https://oecd-opsi.org/covid-response/estonia-adopts-ppe-trackingplatform-masc/* (accessed on 2021 April 5). [27]

OECD (2020), *Governance for Youth, Trust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Fit for All Generations?*,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c3e5cb8a-en*. [116]

OECD (2020), Government After Shock, OECD, *https://gov-after-shock.oecd-opsi.org/*. [131]

OECD (2020), "Green budgeting and tax policy tools to support a green recovery",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d02ea23-en*. [65]

OECD (2020),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Promoting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during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853f8be-en*. [35]

OECD (2020), *Initial Budget and Public Management Responses to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in OECD Countries*, OECD, *https://www.oecd.org/gov/budgeting/initial-budget-and-public-management-responsesto-covid19-in-oecd-countries.pdf*. [31]

OECD (2020), *Innova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New Democratic Institutions: Catching the Deliberative Wav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39306da-en*. [102]

OECD (2020), *No policy maker is an island: The international regulatory co-operatio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3011ccd0-en*. [44]

OECD (2020),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COVID-19 Innovative Response Tracker, https://www.oecd-opsi.org/covid-response/*. [25]

OECD (2020),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a9638cb-en*. [45]

OECD (2020), "Public integrity for an effective COVI D-19 response and recovery",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5c35d8c-en*. [57]

OECD (2020), "Public procurement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Initial policy responses to the coronavirus (Covid-19) crisi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0ab0a96-en.* [55]

OECD (2020), *Public servants and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Emerging responses and initial recommendation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53b1277-en*. [36]

OECD (2020), *Regulatory quality and COVID-19: The use of regulatory management tools in a time of crisi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876d5dc-en*. [40]

OECD (2020), *Removing administrative barriers, improving regulatory deliver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04c8a1-en.* [41]

OECD (2020), "Safeguarding COVI D-19 social benefit programmes from fraud and error",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e21c80e-en*. [77]

OECD (2020), "Shield48", *COVID-19 Innovative Response Tracker*, Observatory of Public Sector Innovation website, *https://oecd-opsi.org/covid-response/shield48/ (accessed on 2021 April 5)*. [26]

OECD (2020), “Stocktaking report on immediate public procurement and infrastructure responses to COVI D-19”,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48d0646-en.* [73]

OECD (2020),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OECD. [67]

OECD (2020), *Tackling Coronavirus (COVID-19): Country Policy Tracker*, OECD website, *https://www.oecd.org/coronavirus/country-policy-tracker/#Containmentmeasures*. [39]

OECD (2020), “Transparency, communication and trust: The role of public communication in responding to the wave of disinformation about the new Coronaviru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ef7ad6e-en.* [128]

OECD (2020), *Understanding Public Communication Survey*, OECD. [47]

OECD (2020), “When the going gets tough, the tough get going: How economic regulators bolster the resilience of network industries in response to the COVI D-19 crisi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d8915b1-en.* [42]

OECD (2020), “Women at the core of the fight against COVI D-19 crisi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53a8269-en*. [120]

OECD (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307957-en*. [63]

OECD (2019), *Gender wage gap*, OECD Data website, *https://data.oecd.org/chart/6kPL* (accessed on 2021 April 5). [118]

OECD (2019), *Going Digital Toolkit website*, OECD, https://goingdigital.oecd.org/. [103]

OECD (2019), *Good Governance for Critical Infrastructure Resilience*,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02f0e5a0-en. [4]

OECD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8ccf5c38-en. [87]

OECD (2019),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2015 OECD Recommendation*, OECD, *https://doi.org/10.1787/1de41738-en*. [54]

OECD (2019), *Under Pressure: The Squeezed Middle Clas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689afed1-en*. [115]

OECD (2019), *Women in politics*, OECD Data website, *https://data.oecd.org/inequality/women-in-politics.htm* (accessed on 23 April 2021). [100]

OECD (2018), *A Broken Social Elevator? How to Promote Social Mobi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1085-en*. [114]

OECD (2018), *Assessing Global Progress i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9272-en.* [12]

OECD (2018), *OECD Regulatory Policy Outlook 201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3072-en*. [43]

OECD (2018), *Risks that Matter: Main Findings from the 2018 OECD Risks that Matter Survey*, OECD, *https://www.oecd.org/els/soc/Risks-That-Matter-2018-Main-Findings.pdf*. [88]

OECD (2018), *Scientific Advice During Crises: Facilitating Transnational Co-operation and Exchange of Inform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4413-en. [15]

OECD (2018), *Youth Stocktaking Report*, OECD, https://www.oecd.org/gov/youth-stocktaking-report.pdf. [101]

OECD (2017),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78219-en*. [95]

OECD (2017), *OECD Recommendation on Public Integrity, https://www.oecd.org/gov/ethics/recommendationpublic-integrity/.* [83]

OECD (2017),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OECD Gender Recommendations: Some Progress on Gender Equality but Much Left to Do*, OECD, https://www.oecd.org/mcm/documents/C-MIN-2017-7-EN.pdf. [119]

OECD (2016), *Trends in Risk Communi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0467-en. [50]

OECD (2015), *The Changing Face of Strategic Crisis Management*,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49127-en. [21]

OECD (2014), *Boosting Resilience Through Innovative Risk Governance*,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09114-en. [5]

OECD (2014), *Lobbyists, Governments and Public Trust, Volume 3: Implementing the OECD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14224-en. [16]

OECD (201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OECD, *https://www.oecd.org/gov/risk/Critical-Risks-Recommendation.pdf*. [13]

OECD (forthcoming), *Balance sheet-based policies in COVID-19 fiscal packages: How to improve transparency and risk analysis?*, OECD. [34]

OECD (forthcoming), *Best Practice Principles on Stakeholder Engagement in Regulatory Policy*, OECD. [46]

OECD (forthcoming), *Building Resilience: New Strategies for Strengthening Infrastructure Resilience and Maintenance*, OECD. [69]

OECD (forthcoming), *E-Leaders COVID-19 Policy Brief*, OECD. [28]

OECD/KDI (2018), *Understanding the Drivers of Trust in Government Institutions in Kore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8992-en. [96]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Lobbying of Canada (2020), *Annual Report 2019-20*,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Lobbying of Canada, *https://lobbycanada.gc.ca/en/reports-and-publications/annual-report-2019-20/.* [108]

Officer of the Commissioner of Lobbying of Canada (n.d.), *Registry of Lobbyists*, Office of the Commissioner of Lobbying of Canada website, https://lobbycanada.gc.ca/app/secure/ocl/lrs/do/guest. [113]

Ping Helsinski (2020), *Combating coronavirus together by sharing reliable information, https://pinghelsinki.fi/en/combating-coronavirus-together-by-sharing-reliable-information/.* [49]

Portafolio (2021), *Transacciones por Secop II en 2020 llegaron a $54 billones*, Portafolio website, *https://www.portafolio.co/economia/transacciones-por-secop-ii-en-2020-llegaron-a-54-billones-548220.* [56]

Rachman, G. (2021), "2020: A year in protests", *Financial Times*, *https://www.ft.com/content/6e95f7d8-508b-40db-9d0d-4fb561cbfa48* (accessed on 2021 April 23). [93]

Republique Francaise (2020), *Le budget vert en France pour 2021 : une premiere mondiale*, Ministere de l'Economie, de Finance et de la Relance, *https://www.budget.gouv.fr/reperes/budget/articles/le-budget-vert-en-france-pour-2021-une-premiere-mondiale.* [66]

Rice, K. et al. (2020), "Effect of school closures on mortality from coronavirus disease 2019: Old and new predictions", *BMJ*, p. m3588, http://dx.doi.org/10.1136/bmj.m3588. [9]

Satariano, A. and D. Alba (2020), "Burning cell towers, out of baseless fear they spread the virus",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4/10/technology/coronavirus-5g-uk.html. [124]

Seitz, A. (2020), *Virus misinformation flourishes in online protest groups*, AP website, *https://apnews.com/article/5862a9201c7b1bea62069a9c5e5fbb1c.* [123]

Stotsky, J. (2016), "Gender budgeting: Fiscal context and current outcomes", *IMF Working Papers,* No. 149,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dx.doi.org/10.5089/9781475575460.001. [122]

Tankersley, J., E. Cochrane and E. Flitter (2020), "Small-business aid funds run dry as program fails to reach hardest hit",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4/15/us/politics/coronavirus-smallbusiness-program.html* (accessed on 29 March 2021). [110]

Tasker, J. (2020), "What you need to know about the new COVI D-19 emergency wage subsidy", *CBC*, CBC website, *https://www.cbc.ca/news/politics/canadian-emergency-wage-subsidy-explainer-1.5518180* (accessed on May November 2021). [78]

Tonurist, P. and A. Hanson (2020), "Anticipatory innovation governance: Shaping the future through proactive policy making",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4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cce14d80-en*. [75]

Trian, N. (2021), "2020: A year of protests and civil disobedience", *France 24*, France 24 website, *https://www.france24.com/en/europe/20201228-2020-a-year-of-dissent-and-civil-disobedience* (accessed on 2021 April 23). [94]

Tussell (2021), *Latest Updates on UK Government COVID-19 Contracts and Spending*, Tussell website, *https://www.tussell.com/insights/covid.* [51]

UK Cabinet Office (2020), *Transforming Public Procurement*, UK Cabinet Office, *https://assets.publishing.service.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943946/Transforming_public_procurement.pdf.* [72]

UK Department for Education (2020), *Get help with technology during coronavirus (COVID-19): Guidance on the devices and support available to provide remote education and access to children's social care,* Department for Education website, *https://www.gov.uk/guidance/get-help-with-technology-for-remote-educationduring-coronavirus-covid-19.* [74]

UK Financial Conduct Authority (2020), *Digital Sandbox Pilot: Supporting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Digital Sandbox Pilot website, *https://www.digitalsandboxpilot.co.uk/* (accessed on 2021 April 7). [76]

UK Government (2021), *Scientific Advisory Group for Emergencies*, GOV .UK website, *https://www.gov.uk/government/organisations/scientific-advisory-group-for-emergencies.* [14]

Vilhelmsson, A. and S. Mulinari (2017), "Pharmaceutical lobbying and pandemic stockpiling of Tamiflu: a qualitative study of arguments and tactics", *Journal of Public Health*, Vol. 40/3, pp. 646-651, *http://dx.doi.org/ 10.1093/pubmed/fdx101.* [17]

Vogel, K. (2020), "The race for virus money is on: Lobbyists are standing by", *New York Times, https://www.nytimes.com/2020/03/28/us/politics/coronavirus-money-lobbyists.html* (accessed on 29 March 2021). [111]

Warmbrodt, Z. (2020), "Big restaurant chains get small business aid, sparking backlash", *Politico.eu*, Politico website, *https://www.politico.com/news/2020/04/15/restaurant-chains-coronavirus-aid-188533*(accessed on 29 March 2021). [109]

World Bank (2020), *World Development Indicators: Population, total*, World Bank data website,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TOTL.* [11]

Zagorin, A. (2020), "He oversaw $787 billion in stimulus spending. Here are his lessons on spending coronavirus recovery effectively.", *POGO*, POGO website, *https://www.pogo.org/analysis/2020/04/he-oversaw-787-billion-in-stimulus-spending-heres-his-lessons-on-spending-coronavirus-recoveryeffectively/*(accessed on May November 2021). [82]

2. 공공재정과 경제

일반정부 재정수지
일반정부 순저축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일반정부 부채
일반정부 순금융자산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일반정부 수입
일반정부 수입의 구조
일반정부 지출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정부 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사회보호분야와 보건분야의 일반정부 지출
경제적 거래별 정부 지출의 구조
정부 수준별 수입 및 지출 구조
공공투자지출
일반정부의 생산비용과 아웃소싱

일반정부 재정수지

재정수지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며, 한 해 동안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이 정부 지출에 충당된 정도를 보여준다. 세출이 세입보다 클 때는 재정적자, 세출이 세입보다 작을 때는 재정흑자를 의미한다. 기초재정수지는 국가 채무에 따른 순이자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이며, 정부가 거둬들인 수입에서 공공재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지출한 금액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가가 거둬들인 조세 수입보다 공공재 및 서비스 공급 지출이 큰 경우 기초재정수지 적자라 한다. 이는 정부가 시민들에게 일상적인 공공재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돈을 빌려야 함을 의미하며, 지속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기초재정수지는 정부 재정의 단기적인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이다.

2007-08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인해 200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가 최고 수준(GDP 대비 -8.7%)에 도달하였다. 이후 재정적자의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201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2%로 보고되고 있다. 2020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26개의 OECD 국가 모두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 대비 재정적자의 규모가 증가하였다. 이중 18개 국가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5%를 초과하였다. OECD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 소득 보조, 여타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에 상당한 예산을 지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재정적자가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코로나19로 경제 활동이 중단되어 경제가 위축되고 조세 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적자가 증가하였다.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26개 OECD 국가 중 2020년 재정적자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GDP 대비 -12.3%)인 반면, 재정적자가 가장 작은 국가는 덴마크(GDP 대비 -1.1%)이다. 덴마크는 위기가 발생하기 전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재정흑자를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동시에 재정적자 수준을 유지하였다. 2020년 재정수지가 가장 크게 악화된 국가는 캐나다로 재정수지가 GDP 대비 11.2%p 감소하였다. 반면, 스웨덴은 재정수지가 GDP 대비 3.7%p 감소하여 재정수지가 가장 작게 감소한 국가이다(그림 2.1 참고).

기초재정수지 적자 또한 2020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9년 OECD 36개 국가 중 23개국의 기초재정수지가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전체 OECD 국가의 평균 기초재정수지는 GDP 대비 -1.2%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20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26개 OECD 국가 모두 기초재정수지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19년과 비교하여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되었다. 이중 16개 국가는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가 GDP 대비 5%를 초과하였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 시민과 기업에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돈을 차입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위기가 지속되는 동안 정부는 시민들에게 필수적인 지원을 유지하는 동시에 재정적자는 국가 채무의 증가로 이어지므로 기초재정수지의 적자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황이다. 결국, 정부는 기초재정수지 흑자 또는 재정균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세입 증대와 세출 삭감을 선택하여야 한다. 재정수지와 마찬가지로,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가 가장 큰 국가는 영국(GDP 대비 -10.7%)인 반면, 가장 작은 국가는 덴마크(GDP 대비 -1.3%)이다. 2020년 기초재정수지가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캐나다(GDP 대비 -11.2%p)인 반면, 가장 작게 감소한 국가는 스웨덴(GDP 대비 -3.7%p)이다(그림 2.2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자료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를 이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다.

재정수지(fiscal balance)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순융자(net lending; +) 또는 순차입(net borrowing; -)을 의미한다. 수입은 조세, 순사회보장기여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지출은 중간 소비,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 소득(이자 지출 포함), 사회 급여, 기타 경상지출(주로 경상 이전지출), 자본지출(자본 이전 및 투자)로 구성된다.

기초재정수지(primary balance)는 일반정부 부채와 관련된 순이자지출(이자지출-이자수입)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참고문헌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4bfd999-en*.

IMF (2021), *Fiscal Monitor April 2021*, International Monetary Fund, Washington, DC, *www.imf.org/en/Publications/FM/Issues/2021/03/29/fiscal-monitor-april-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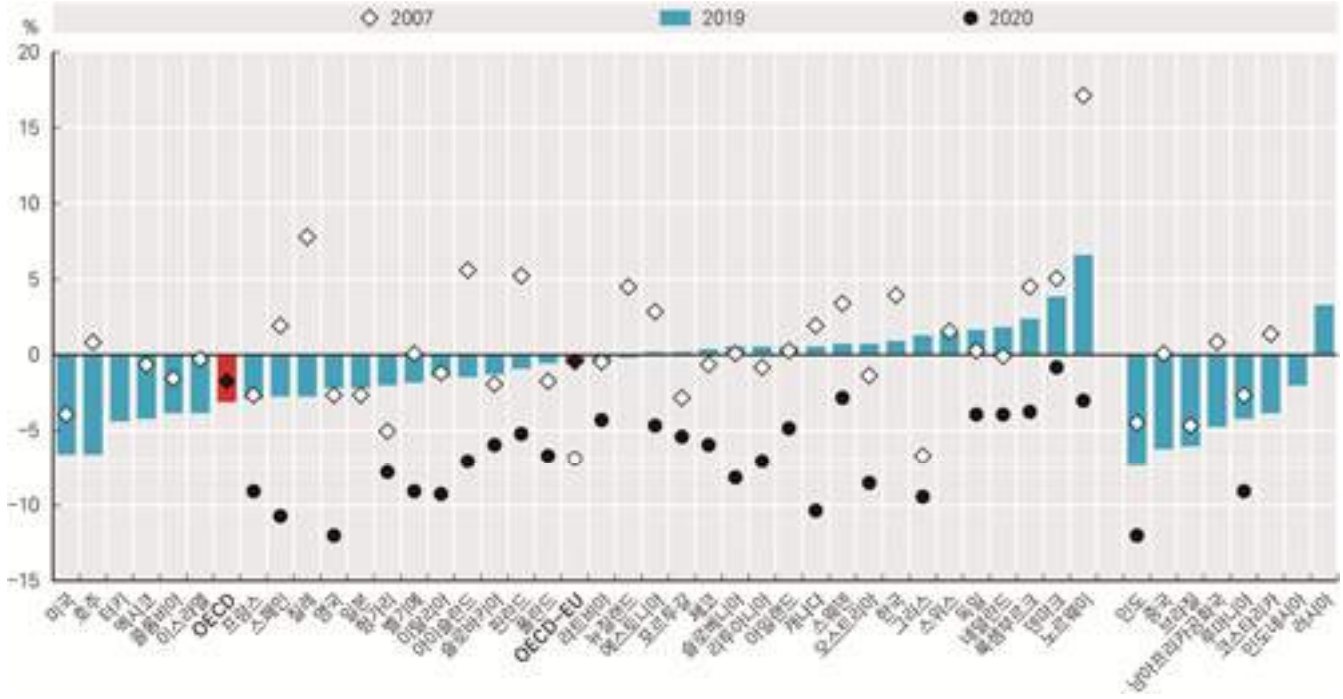
그림 설명

일본, 브라질, 러시아는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1. 칠레와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고, 정부 합계에 비재무적 자료가 포함된 관계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2.2.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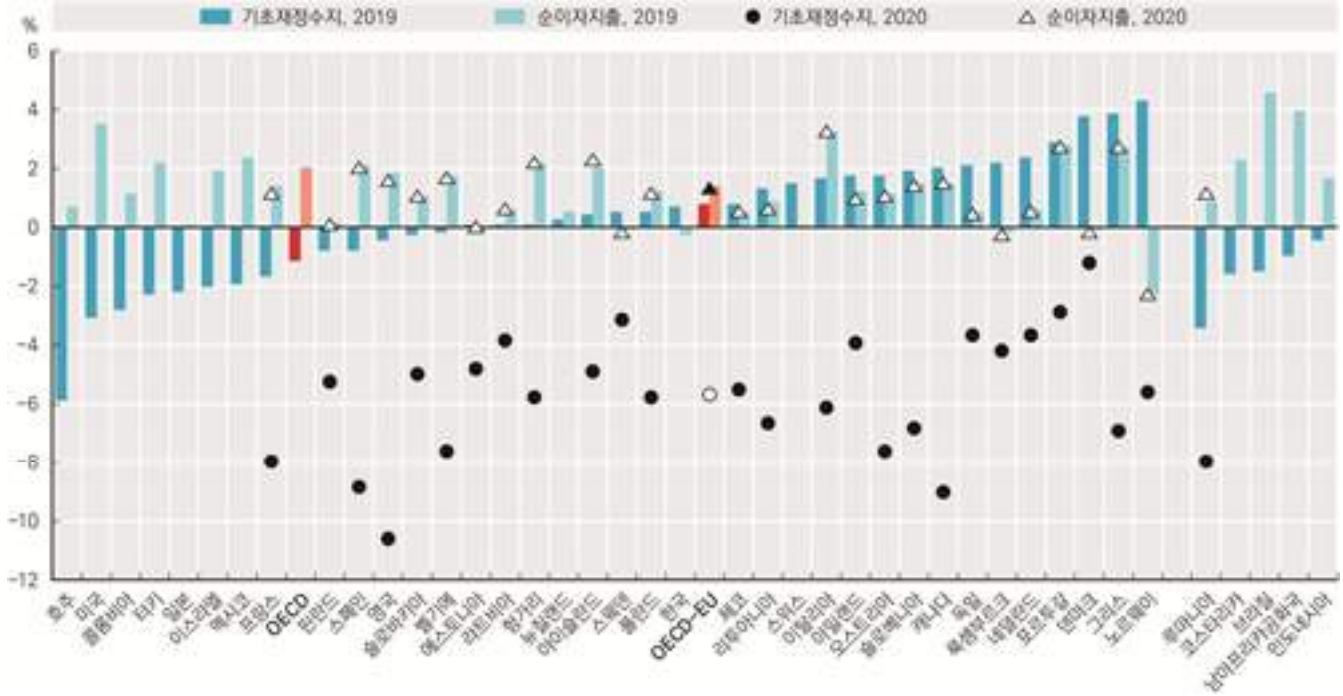
2.1. 일반정부 GDP 대비 재정수지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중국과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21)을 참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634

2.2. 일반정부 GDP 대비 기초재정수지 및 순이자지출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653

일반정부 순저축

일반정부 순저축은 경상수입과 경상지출의 차이 또는 자본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즉, 순저축 개념에는 투자지출 또는 자본이전(예를 들어, 금융기관 구제를 위한 이전지출)이 고려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순저축은 정부 재정의 "황금률(golden rule)"과 연관된 개념으로, 경기순환(변동) 과정에서 경상수입이 반드시 경상지출을 보다 많아야 함을 의미하며, 나아가 정부의 부채 조달이 오직 지속가능한 재정 기조를 이끄는 성장촉진 투자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2019년 OECD 회원국들의 평균 순저축 비율이 GDP 대비 -2.3%임에도 불구하고, 36개 OECD 국가 중 21개 국가에서 순저축 비율이 양(+)의 값을 기록하였다. 2020년 순저축 수치가 악화되어 26개 OECD 국가 중 24개 국가의 순저축 비율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고, 2019년과 비교하여 모든 국가의 순저축이 감소하였다. 순저축의 급격한 감소는 코로나19로 경상 지출이 증가한 반면, 조세 수입은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2020년 GDP 대비 순저축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10.4%)과 스페인(-10.1%)이다. 반면, 순저축 비율이 양(+)의 값을 기록한 국가는 덴마크(1%)와 노르웨이(0.1%)가 유일하다. 덴마크와 노르웨이는 2019년 GDP 대비 순저축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서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당한 재정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순저축의 흑자를 유지하고 있다(그림 2.3 참고). 덴마크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 안정된 경제적 기반을 구축한 국가이다. 또한, 노르웨이는 비석유산업의 적자가 국부 펀드(해양에서 생산되는 석유 수입으로 조성)의 규모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재정준칙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정부 재정에 상당한 충격을 가했기 때문에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수지와 순저축이 적자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경기 순환 과정에서 황금률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저축의 적자를 상쇄하는 순저축의 축적이 필요하다.

순저축과 달리 순융자/차입(예: 재정수지)은 자본지출 즉, 투자지출 또는 자본이전(공기업 및 금융기관에 자본이전)의 규모를 고려한 개념이다. 2019년 OECD 국가의GDP 대비 순저축 비율의 평균은 -2.3%인 반면,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의 평균은 -3.2%로 나타났다. 이는 OECD 국가의 GDP 대비 자본지출의 비율이 0.9%임을 보여준다. 2020년 26개 OECD 국가 중 23개 국가에서 정부 투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4 참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도 있지만, 보건·정보통신기술·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인프라와 관련된 추가적인 투자를 반영하기도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정부의 투자 수준은 일정하게 유지(예를 들어, 대규모 인프라 건설 등 다년도 투자 사업이 지속되는 경우)되는 동시에 반대로 GDP가 감소하거나 또는 정부 투자의 감소 속도보다 GDP의 감소 속도가 빠를 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 순저축' 자료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를 이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다.

정부 순저축(government net saving)은 경상수입과 경상지출(감가상각 포함)의 차이를 의미한다. 즉, 총저축은 경상지출에서 감가상각의 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수치이다. 순융자/차입의 재정수지는 총저축에서 순자본이전(예: 자본이전 수입-자본이전 지급)을 더한 값에서 총투자(예: 총자본형성 및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순취득)를 뺀 값을 의미한다(순융자/차입 재정수지 = 총저축 + 순자본이전 − 총투자).

순융자/차입은 자본지출을 고려한 후 재정 상태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가 다른 부문에 금융 자금을 지원할 경우 순융자(또는 정부 흑자), 정부가 지출의 일부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부문에서 금융 자금을 지원받을 경우 순차입(또는 정부 적자)으로 정의된다.

순융자/차입과 비교하여 순저축은 대규모 자본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회성의 왜곡을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순저축은 정부 투자 시 긴축 프로그램과 적자의 증가로부터 받는 상당한 압력을 피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9), *OECD Economic Surveys: Denmark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co_surveys-dnk-2019-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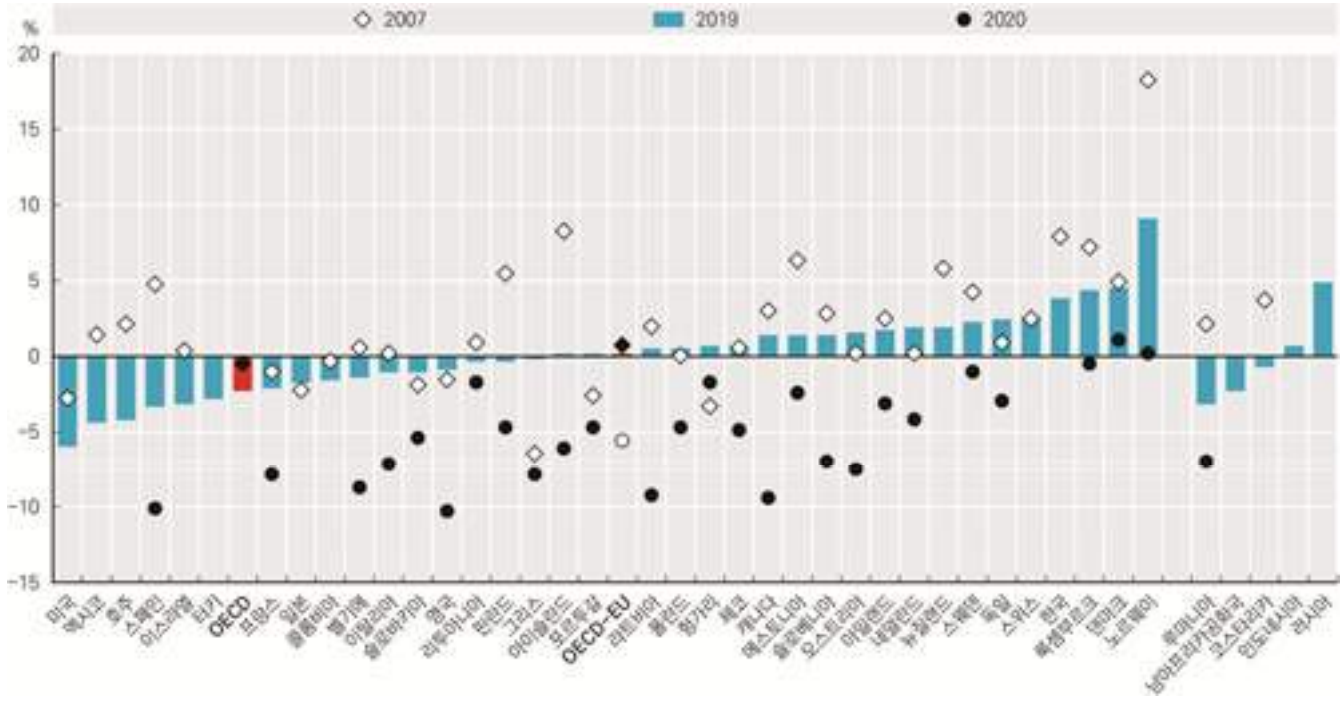
OECD (2019), *OECD Economic Surveys: Norway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217a266-en*.

그림 설명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과 러시아의 자료는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G.1. GDP 대비 순자본이전의 비율(%)은 부록 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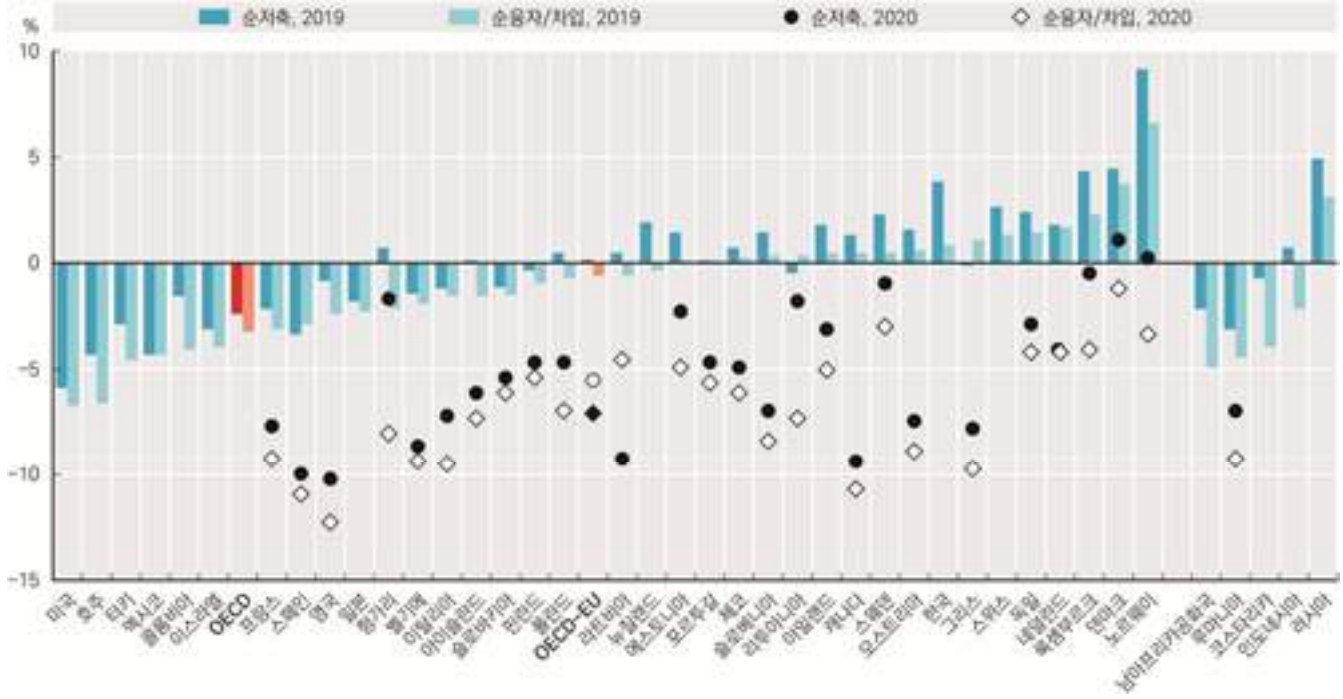
2.3. 일반정부 GDP 대비 순저축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672

2.4. 일반정부 GDP 대비 순저축 및 순융자/차입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691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

구조적 재정수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점검하는데 활용되는 지표이다. 재정수지는 경기변동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사건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경기침체 시에는 경제 활동이 위축되어 정부의 수입(특히 세입)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실업이 발생함에 따라 사회부조 또는 실업급여의 수급권자가 늘어나면서 정부의 지출이 증가할 수 있다. 또한, 경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부 지출을 늘리기도 한다. 이러한 현상은 코로나19 위기 동안 모두 발생하였다. 이는 재정수지 만으로는 정부의 근본적인 재정 상황에 대해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한편, 구조적 재정수지는 재정수지에서 경기변동에 따른 세입, 세출의 변화를 제거한 지표이다. 구조적 재정수지는 한 나라의 경제가 잠재GDP를 완전히 달성한다고 가정했을 때의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적 재정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경제가 잠재GDP를 완전히 달성한다 하더라도 적자에 해당하며, 이는 정부의 조세 및 세출 정책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2019년 OECD 국가의 평균 구조적 재정수지는 잠재GDP 대비 3.1%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는 2007년과 동일한 수치이며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OECD 33개국 중 구조적 재정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22개국이다. 한편, 2020년에는 구조적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잠재 GDP 대비 7.1%의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OECD 33개국 중 덴마크와 포르투갈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구조적 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2020년 구조적 재정수지의 적자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잠재 GDP 대비 12.3%의 적자를 기록했다. 미국은 가장 큰 구조적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 위기에 접어들었고, 저소득층 의료보험(Medicaid), 노인·장애인 의료보험(medicare), 사회보장 등 일부 사업의 지출 증가로 가장 큰 구조적 적자가 발생하였다. 2019년 대비 2020년 구조적 재정수지가 개선된 국가는 아이슬란드(잠재GDP 대비 0.3%p)와 포르투갈(0.5%p) 뿐이며, 호주는 구조적 재정수지가 가장 크게 악화(잠재 GDP 대비 -8.5%p)되었다(그림 2.5 참고).

OECD 국가의 잠재 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는 2007년 -1.0%에서 2019년 -1.3%로 소폭 감소하였다.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OECD 33개국 중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적자인 국가는 16개국이다. 한편, 2020년에는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되어 잠재 GDP 대비 5.5%의 적자를 기록했고, 33개국 중 29개국에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흑자인 국가는 포르투갈(잠재 GDP 대비 2.8%), 그리스(1.6%), 덴마크(1.0%), 체코(0.4%)이다.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가 가장 큰 국가는 미국으로 잠재 GDP 대비 9.5%의 적자를 기록했다. 2019년 대비 2020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증가한 국가는 포르투갈(잠재 GDP 대비 0.1%p)과 아이슬란드(0.5%p)가 유일하다. 반면, 호주는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가장 크게 악화(-8.6%p)되었다. 2020년 구조적 적자의 폭 넓은 증가는 OECD 국가들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입을 증가시키거나 지출을 줄여야 함을 나타낸다. 2021년에는 OECD 33개국 중 30개국의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악화되어 적자가 GDP 대비 평균 -7.6%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2022년에는 코로나19이 각국의 보건 정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고, 경제성장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2022년에는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적자가 GDP 대비 평균 -4.9%로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OECD 33개국 중 31개국에서 구조적 기초재정수지가 개선될 것으로 예측되었다(그림 2.7 참고). 세입과 세출의 추가적인 조정 규모는 GDP 성장 전망에 따라 달려있으나, 포스트 코로나 시기 동안 정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세 감면과 소득 지원 정책을 폐지하여 달성할 수 있으며,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미미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구조적 재정수지'의 자료는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No.109)을 활용하였다. 구조적 재정수지(structural fiscal balance) 또는 근원 재정수지(underlying balance)는 국민계정체계(SNA)의 산출 갭(실질GDP-잠재GDP), 예외적 재정운영(one-off fiscal operations)을 조정한 재정수지를 의미한다. 잠재GDP는 관찰되지 않는 변수이므로 추정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 예외적 재정운영은 일회성의 이전지출 및 불규칙하고 예외적인 재정거래를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OECD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의 "Sources and Methods"를 참고할 수 있다 (www.oecd.org/eco/outlook/sources-and-methods.htm).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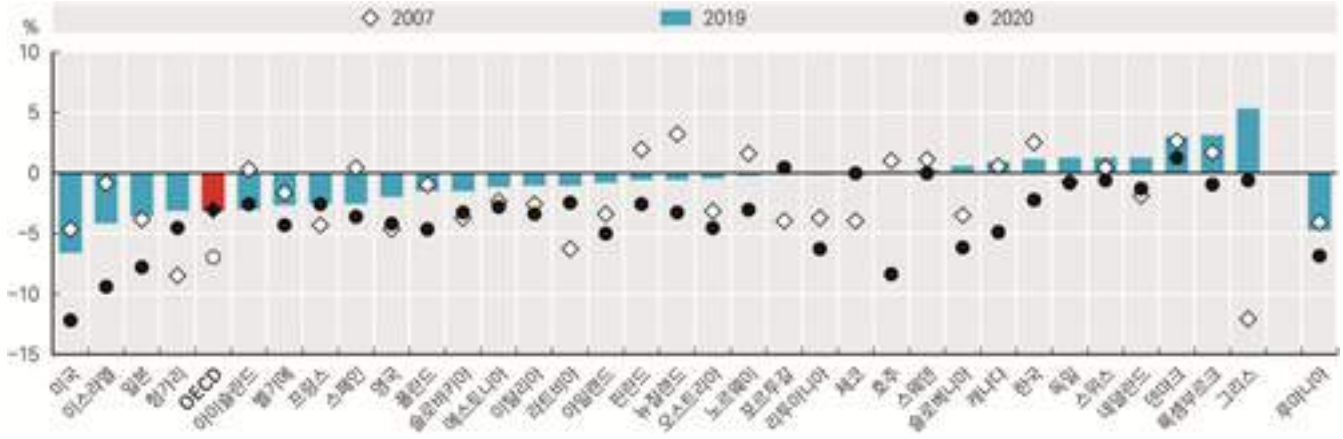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States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2323be9-en.*

Bloch, D. and J. Fournier (2018), "The deterioration of the public spending mix dur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sights from new indicator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465, OEC 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f6d2e8f-en.*

그림 설명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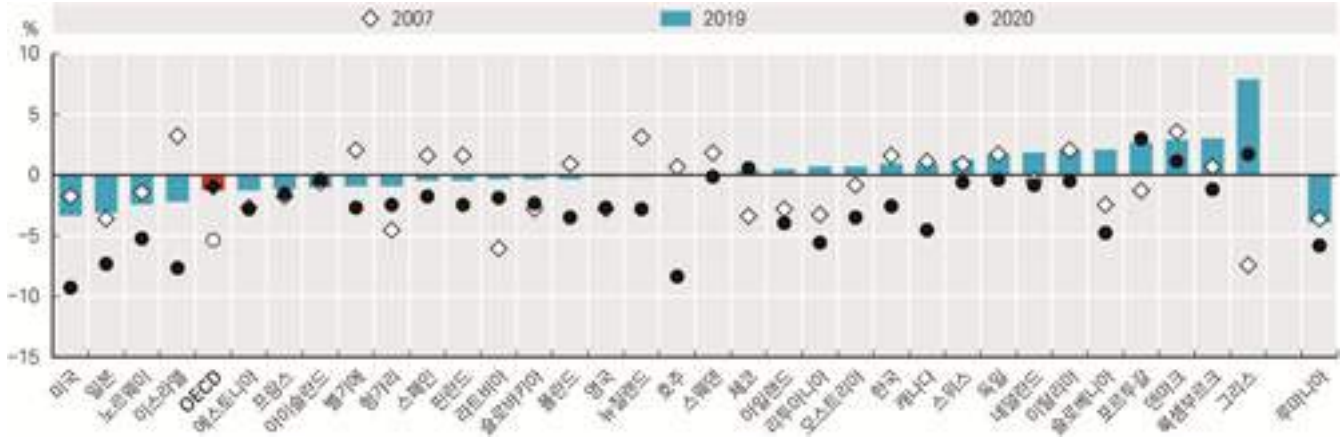
2.5. 일반정부 잠재 GDP 대비 구조적 재정수지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109, May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710

2.6. 일반정부 잠재 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 (2007년, 2019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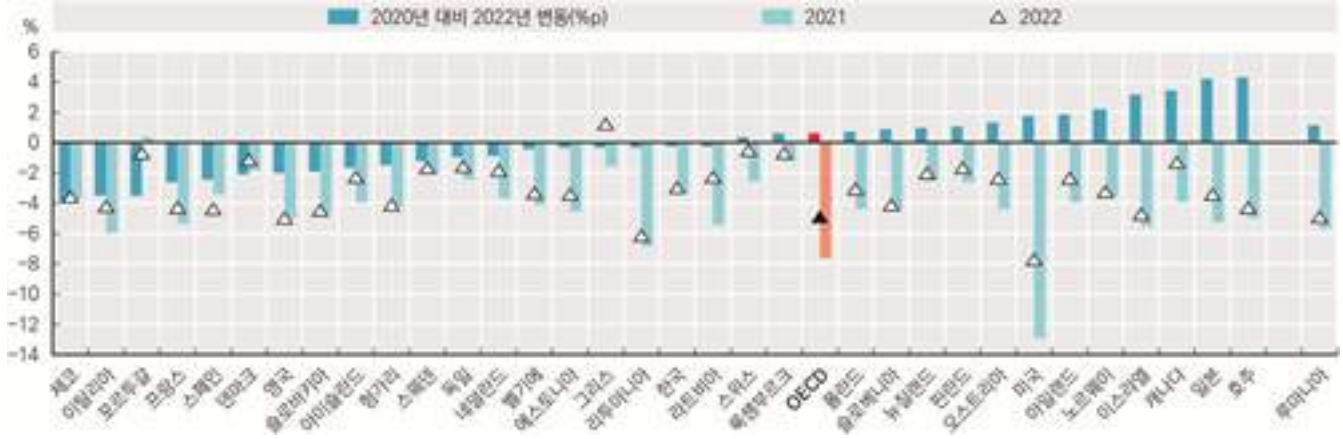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109, May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729

2.7. 일반정부 잠재 GDP 대비 구조적 기초재정수지의 추계 및 변동

(2021년, 2022년, 2020년 대비 2022년 변동)



출처: *OECD Economic Outlook*, No 109, May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748

일반정부 부채

공공 부채 수준은 공공 재정과 경제 전체의 안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정부 부채는 경상지출 또는 물적 자본(physical capital)에 대한 투자 시 이자지급의 형태로 비용이 조달되면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과 편익에 대한 신중한 평가와 함께 경제적 능력의 격차, 인프라 개발 수요, 부문별·사회적 우선순위에 관한 객관적 평가에 기반한 결정이 필요하다.

코로나19의 결과로 공공 부채 수준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9년 OECD 국가의 평균 정부 총부채는 GDP의 109%였으나, 2020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모든 국가(26개국)에서 정부 총부채가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규모 정부 지출이 소요되어 재정 적자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정부 부채가 GDP의 10% 이상 증가한 국가도 19개로,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OECD 내 EU 회원국인 22개국의 총부채는 2019년 GDP 대비 97%에서 2020년 115%로 증가하였다. 정부 총부채가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그리스(36%p)로 GDP 대비 정부 총부채가 236%로 가장 큰 국가이다. 반면, 정부 총부채가 가장 작게 증가한 국가는 룩셈부르크(3%p)로 GDP 대비 정부 총부채가 33%로 OECD 국가 중 두 번째로 적다(그림 2.8 참고).

또한, OECD 국가의 1인당 일반정부 총부채도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9년 1인당 일반정부 총부채는 OECD 평균 56,961달러(PPP 기준)를 기록하였다. 2020년에는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모든 국가(26개국)에서 1인당 일반정부 총부채가 증가하였고, 이중 22개 국가에서는 1인당 명목 부채가 3,000달러(PPP 기준) 이상 증가하였다. 최근 정부 부채의 증가 속도는 현저히 빨라졌다. 예를 들어, 2007년~2019년 OECD 내 EU 회원국의 1인당 정부 부채는 연평균 2,000달러(PPP 기준)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반면, 2020년 1인당 정부 부채는 5,400달러(PPP 기준) 이상 증가하여 평균 52,000달러(PPP 기준)를 기록하였다(그림 2.9 참고 (1인당 실질 부채의 변화는 그림 G.2 참고)).

OECD국가의 정부 부채 중 83.5%는 국채와 같은 채무증권의 형태이며, 36개국 중 32개국에서 정부 부채의 50% 이상이 채무증권이다. 한편, 에스토니아, 그리스, 노르웨이는 정부 부채의 50% 이상이 차입금이다(그림 2.10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부채'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활용하였다.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채무(debt)는 부채(liabilities)의 특정한 부분집합으로, 부채에 포함된 금융수단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부채는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미래에 지급해야 하는 모든 원금과 이자를 의미한다. 모든 채무상품은 부채에 포함되지만, 부채 중 주식(shares), 자본(equity), 금융파생상품(financial derivatives)은 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채무는 현금 및 예금, 채무증권, 차입금, 기타 부채(예: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standardised guarantee scheme), 기타 미지급 계정, 특별인출권(special drawing right))등을 포함하여 일반정부의 대차대조표에서 이용(적용)가능한 부채의 합을 의미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대부분의 채무상품은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일부 국가에서는 채무증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근로자 연금을 정부 부채에 포함하는지 여부는 국가마다 매우 다르기 때문에 국가별 비교가 어렵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은 고용과 관련된 연금충당부채(적립 또는 미적립)를 정부 채무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미적립 연금채무를 제외한 조정된 정부 채무 비율을 적용하였다. 추가적인 정보는 StatLinks에서 제공하고 있다. 정부 채무는 정부 보유자산의 가치로 조정되지 않은 총채무를 의미한다. 국민계정체계상 채무의 정의는 EU의 재정 상태를 평가하는데 활용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의 채무 정의(부록 G의 그림 G.3참고)와는 다르다. 1인당 정부 부채에 대한 정보는 일반정부 수입(p.72)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21),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f246e82-en.*

OECD (2021), "Structural policies to deliver a stronger, more resilient, equitable and sustainable COVI D-19 recovery", in *Economic Policy Reforms 2021: Going for Growth.*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2b58feb-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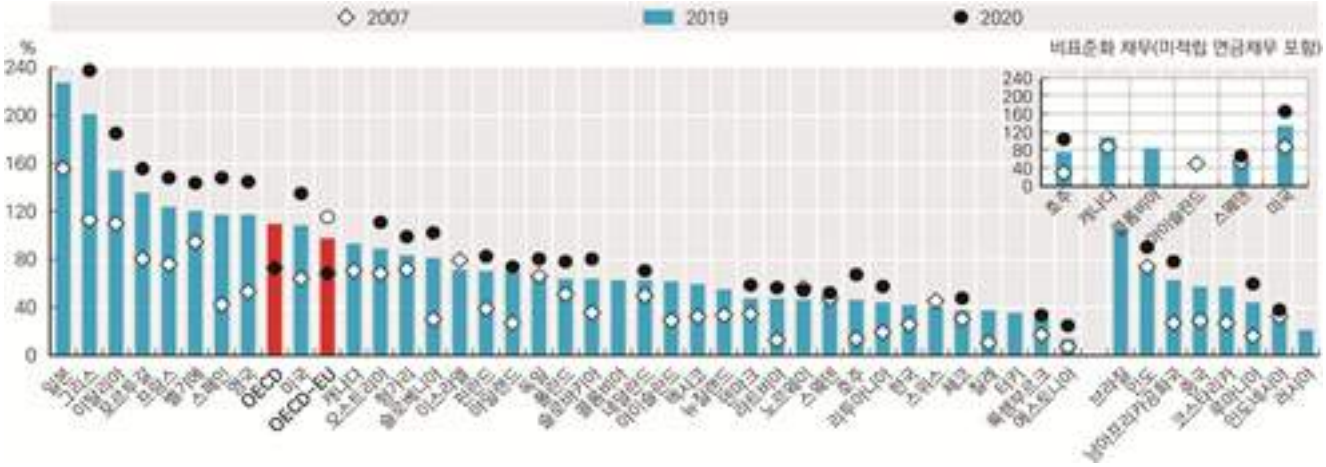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아이슬란드, 스웨덴, 미국은 미적립 연금채무를 제외한 조정된 정부 채무 기준을 적용하였다.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는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과 한국은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 브라질은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8. & 2.9. 아이슬란드의 2019년 자료와 한국의 2007년 자료는 OECD의 추정 값에 해당한다.

2.10. 아이슬란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G.2. 1인당 정부 실질 총부채의 연평균 증가율(2007-19년, 2019-20년)은 부록 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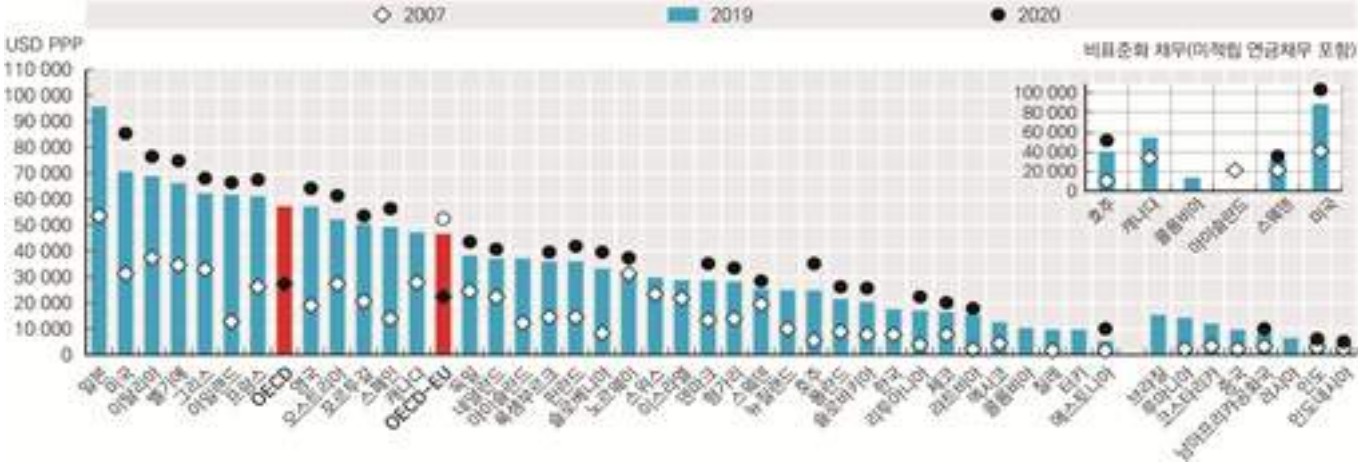
2.8. GDP 대비 일반정부 부채(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을 제외한 OECD 핵심 협력국 및 코스타리카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21) 참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7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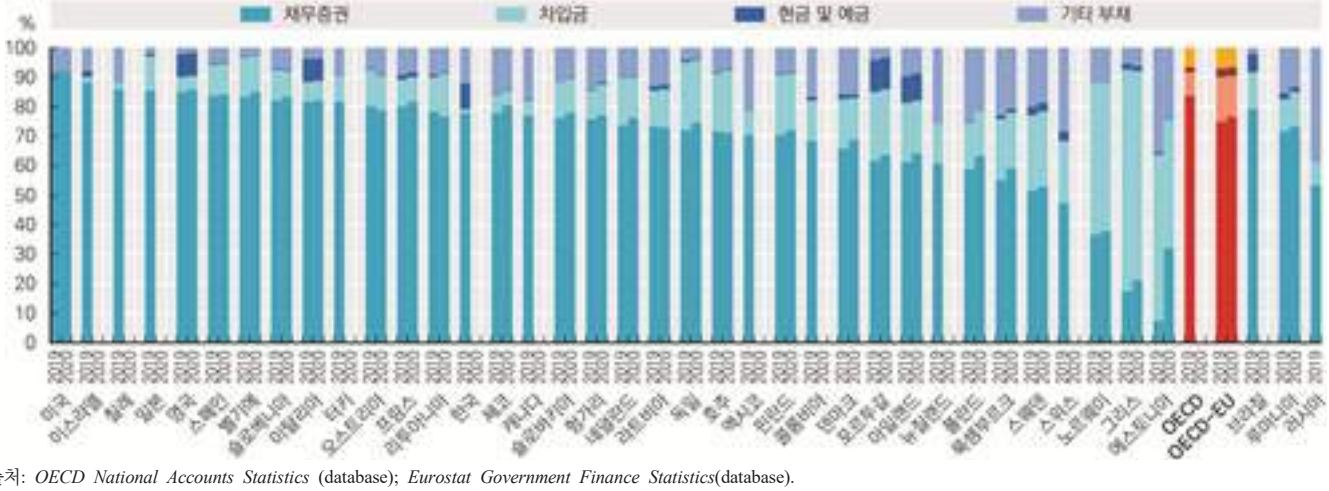
2.9. 1인당 일반정부 부채(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브라질을 제외한 OECD 핵심 협력국 및 코스타리카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21) 참고

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786

2.10. 금융 수단별 정부 부채의 구조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805

일반정부 순금융자산

정부의 총금융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의미하는 순금융자산은 한 국가의 재정 상태에 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정부가 재정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준다. 이때, 자산은 정부가 이용할 수 있는 추가 자금과 소득을 포함하며, 부채는 일정 기간 동안 누적된 채무를 포함한다. 정부의 순금융자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것은 재정건전성이 유지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대로, 공공부채로 인한 순자산이 감소한다는 것은 국가의 재정위험을 증가시키고,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 상황이 악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19년 OECD국가의 일반정부 순금융자산은 GDP의 -65.8%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평균적으로 정부가 자산에 비해 상당히 많은 부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2007년~2019년 OECD 국가의 평균 순금융자산은 27.2%p 감소하였다. 이는 2007-2008년 발생한 경제위기로 상당한 채무가 누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2019년 그리스(GDP 대비 -146.8%), 이탈리아(-126.7%), 일본(-125.8%)의 순금융자산은 음(-)의 값을 기록했으며, 국가의 GDP 규모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11 참고).

2019년~2020년에는 코로나19 팬데믹의 대응 조치로 정부 지출이 증가함에 따라 부채가 누적되어 OECD-EU 회원국인 22개국의 순금융자산이 평균적으로 11.6%p 감소하였다. 2020년 노르웨이(GDP 대비 369.4%), 핀란드(64.2%), 룩셈부르크(49%), 스웨덴(37.4%), 에스토니아(17.3%)의 순금융자산은 양(+)의 값을 기록하였다.

한편 인구수를 기준으로 순금융자산을 살펴보면, 2019년 OECD 국가의 1인당 평균 순금융자산은 -34,297달러(PPP 기준)로 2007년(-14,475달러(PPP 기준)) 보다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9년 1인당 평균 순금융자산이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226,240달러(PPP 기준))이고, 가장 낮은 국가는 이탈리아(-56,247달러(PPP 기준))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OECD-EU 회원국의 1인당 평균 순금융자산은 -3,761달러(PPP 기준) 하락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순금융자산은 총금융자산과 발행부채의 차이를 의미한다. 국민계정체계는 순금융자산을 제도 부문별 대차대조표에서 가용, 적용할 수 있는 금융자산과 부채로 정의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화폐용 금 및 특별인출권(SDRs); 현금통화 및 예금; 채무증권; 대출; 주식 및 투자펀드 지분; 보험, 연금, 표준화 보증제도; 파생금융상품 및 종업원 스톡옵션; 기타 지급/수취 계정이 포함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금융자산과 부채는 시장가격으로 평가할 수 있다(일부 국가에서는 채무증권을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칠레, 멕시코, 뉴질랜드, 브라질,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은 통합금융자산과 통합부채 자료를 활용하였다.

순부채는 총부채와 유사한 개념으로 총부채에서 채무상품에 상응하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순정부채무의 대리지표로 사용할 수 있다(공공채무 통계: 편집자 및 사용자를 위한 가이드에서 정의된 개념).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스웨덴, 미국은 제도적으로 순금융자산에 미적립 연금채무를 포함하고 있어 다른 OECD 국가들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렵다. 따라서 해당 국가들은 정부 총부채와 유사한 방식으로 조정된 순금융자산을 적용하였다. 1인당 순금융자산에 대한 정보는 일반정부 수입(p.72)을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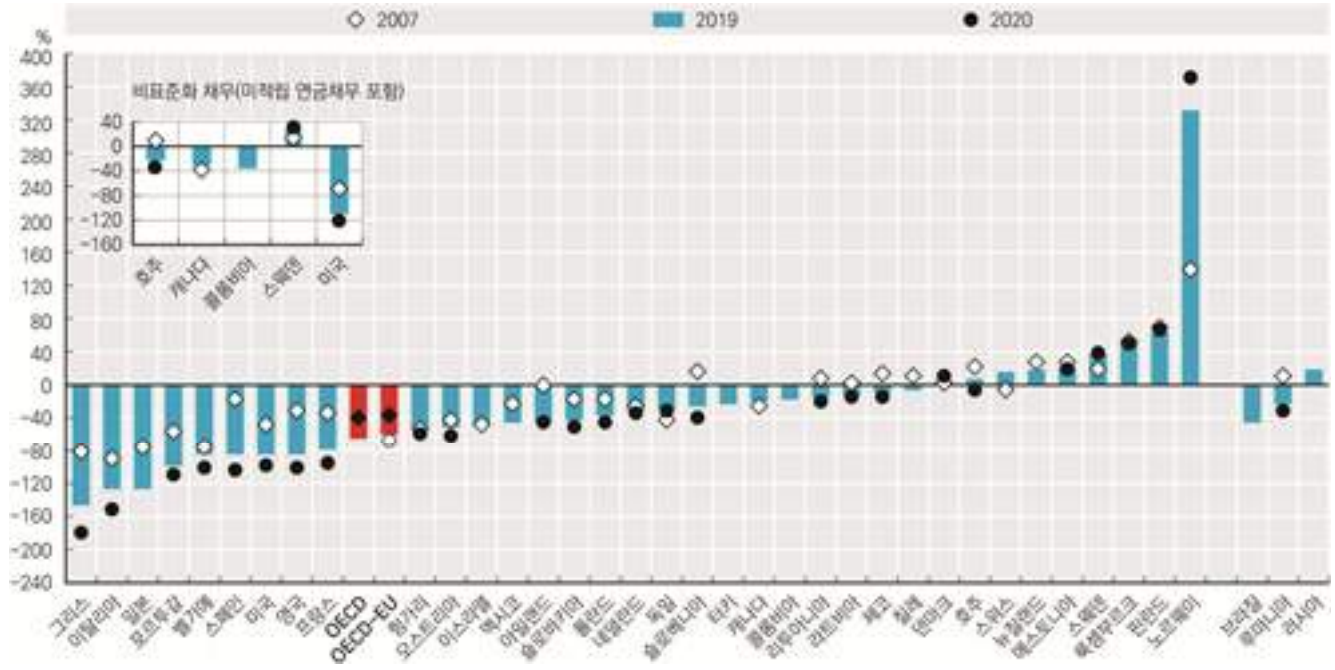
참고문헌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4bfd999-en*.

그림 설명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스웨덴, 미국은 미적립 연금채무를 제외한 조정된 정부 채무 기준을 적용하였다. 아이슬란드와 한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콜롬비아, 멕시코, 터키는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이스라엘은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 브라질은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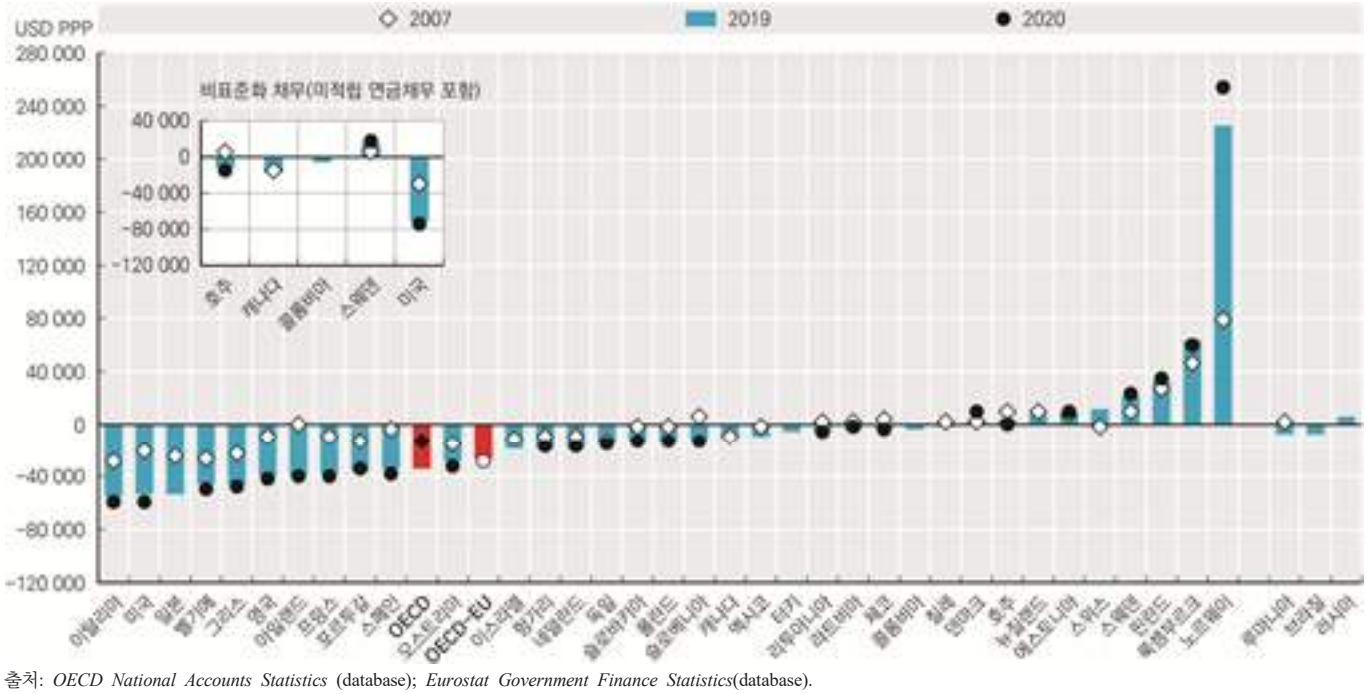
2.11. 일반정부의 GDP 대비 순금융자산 비율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824

2.12. 일반정부의 1인당 순금융자산(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843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각 국가의 행정 제도에 따라 지방정부의 세입 자율성과 세출 자율성 수준이 다르다. 따라서 국가마다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한편, 지방정부(주정부, 지방정부)는 재정준칙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고, 특히 적자재정을 위한 정부부채의 발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2019년 OECD국가의 평균 중앙정부 재정적자는 GDP 대비 2.9%인 반면, 주정부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0.5%, 지방정부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0.01%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사회보장기여금은 GDP 대비 0.3%로 흑자를 기록하였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2020년에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면서 재정수지가 크게 악화되었다. 2020년 일반정부 적자의 상당 부분은 중앙정부의 적자이며, OECD 26개국 중 18개국은 재정적자의 90% 이상이 중앙정부의 적자에서 비롯되었다. 한편, 벨기에, 캐나다, 독일은 연방제 국가로 주정부의 재정적자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에스토니아, 프랑스, 스페인은 사회보장기여금의 재정적자 비중이 크다(그림 2.13 참고).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는 주로 중앙정부가 보유하고 있다(그림 2.14 및 2.15 참고). 2019년 OECD 국가의 일반정부 부채 중 82%는 중앙정부의 부채이며, 코로나19위기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다. 2020년 재정적자의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적자에서 비롯되었으나, 이미 중앙정부 부채가 일반정부 부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므로 그 비중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어, OECD-EU 회원국(22개국)의 중앙정부 부채는 2019년 GDP 대비 84%에서 2020년 GDP 대비 99%로 증가하였다(그림 2.14 참고). 그러나 일반정부 총부채에서 중앙정부의 부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대비 동일한 수치인 82%이다(그림 2.15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 수준별 재정수지와 부채'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여금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연방제 국가), 스위스, 미국 등 9개 국가에만 적용된다. 재정수지(fiscal balance)는 정부의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로 순융자(net lending; +) 또는 순차입(net borrowing; -)을 의미한다. 정부 부채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는 일반정부 부채(p. 66)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21), "Sovereign borrowing outlook for OECD countries", in *OECD Sovereign Borrowing Outlook 202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f246e82-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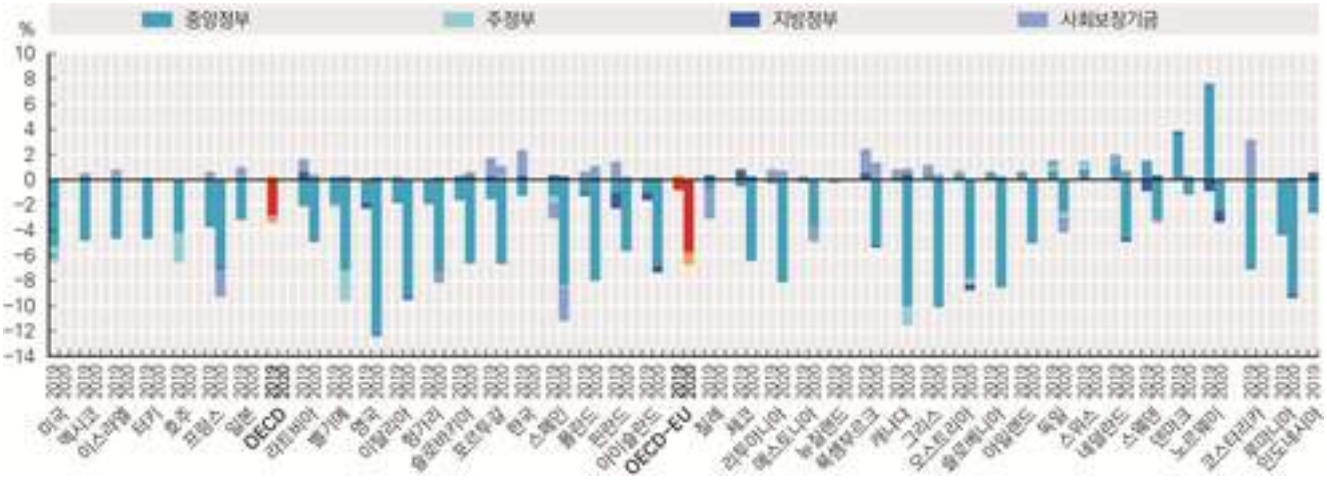
호주와 미국은 지방정부에 주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호주는 정부가 사회보험 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되어 있다.

2.13. 콜롬비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칠레와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의 정부 수준별 자료는 회계연도를 참조해야 하며,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14. & 2.15. 칠레, 아이슬란드, 한국, 멕시코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콜롬비아와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스웨덴, 미국은 비표준화 기준(예: 미적립 연금채무 포함)의 채무를 보고하였다. 스위스, 미국은 비통합기준(non-consolidated basis)의 채무를 보고하였다. 일본의 정부 수준별 자료는 회계연도를 참조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15. 일반정부 수준별 총부채 현황을 통합적으로 보여주며, 하위정부 간 총부채의 추이도 포함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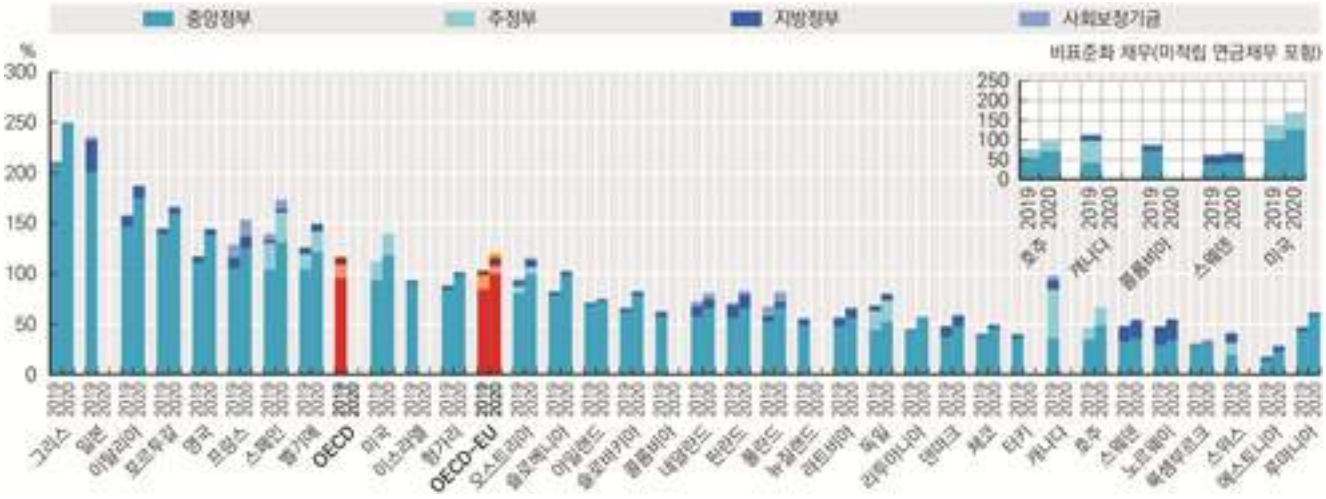
2.13. 정부 수준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율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8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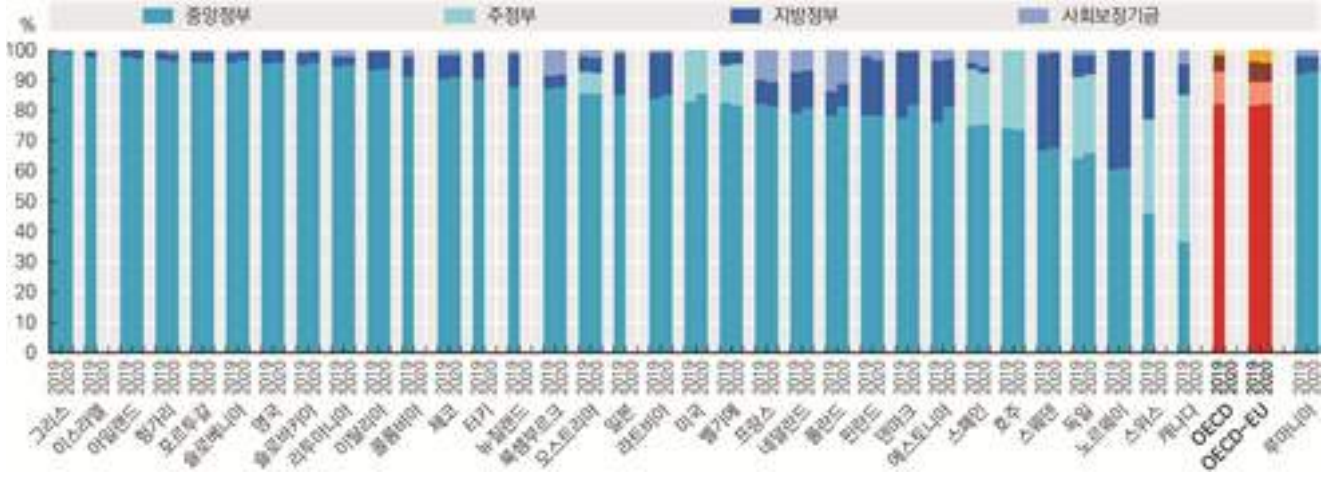
2.14. 정부 수준별 GDP 대비 총부채 비율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881

2.15. 정부 수준별 총부채의 비중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900

일반정부 수입

정부 수입(revenue)은 정부의 소득(income)이다. OECD국가의 수입원은 주로 조세 수입과 사회보장기여금이며, 정부가 공급하는 서비스의 사용료를 통해 일부 소득을 얻는다. 일부 국가에서는 천연자원 로열티, 공기업 수입 등의 세외수입이 정부 수입으로 포함되기도 한다. 조세 정책은 다양한 목적을 갖지만, 근본적인 목적은 국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보건의료 및 국방 등)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한편, 정부는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 정책(고소득층에 높은 소득세율 부과)을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정부는 사회적 편익이 높은 활동을 장려하거나(연구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탄소 배출세, 담배세 부과)으로 조세정책을 활용한다. 이렇듯, 조세 정책은 상충된 목적을 갖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충돌되기도 한다.

2019년 OECD 국가의 평균 정부 수입은 GDP 대비 37.7%이다. OECD 국가의 상당수(36개국 중 24개국)는 GDP 대비 정부 수입의 비중이 30%~45% 수준이다. 그러나 노르웨이는 58.1%, 멕시코는 22.4%로 국가마다 GDP 대비 정부 수입 비중의 편차가 크다. 이는 국가마다 정책의 내용과 경제의 구조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개인 소득세와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여타 OECD 국가에 비해 상당히 낮다. 반면, 노르웨이는 석유 수입 등 세외수입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2007년~2019년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의 비중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일부 국가에서는 조세 정책이 아닌 GDP의 변화에 의해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의 비중의 증감이 발생하였다. 2007년~2019년 그리스는 실질 국내총생산이 감소하여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8.6%p) 하였다. 반면, 동기간 GDP 대비 일반정부 수입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아일랜드(-11.2%p)이다. 이는 아일랜드에 위치한 해외 대기업으로 인하여 GDP가 크게 증가한 결과이다.

OECD 국가별 1인당 일반정부 수입의 규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는 OECD 국가별 1인당 소득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1인당 정부 수입이 가장 작은 3개국(콜롬비아, 멕시코, 터키)은 1인당 명목소득이 가장 낮은 4개국에 속한다. 또한, 1인당 정부 수입이 가장 큰 2개국(룩셈부르크, 노르웨이)은 1인당 명목소득이 가장 높은 4개국에 속한다. 한편, 국가의 조세 정책에 의해 1인당 일반정부 수입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미국의 1인당 명목소득은 OECD 국가 중 5위인 반면, 1인당 정부 수입은 16위이다. 이는 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미국의 조세 정책이 낮은 세율과 좁은 세원을 지향하기 때문이다(그림 2.17 참고).

2007-2019년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정부 수입의 연평균 증가율은 0.87%이다. 동기간 상당수 OECD 국가의 1인당 실질 정부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2020년에는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2020년 OECD 26개국 중 1인당 실질 정부 수입이 감소한 국가는 24개국이며, 이중 13개국은 1인당 실질 정부 수입이 5%이상 감소하였다(그림 2.18 참고).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두 가지 측면의 영향을 반영한다. 첫째, 코로나19 위기 동안 시민과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조세 감면 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둘째, 2020년 1인당 소득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조세 부과의 원천(세원)인 소득의 감소를 의미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수입'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 수입은 조세, 순사회보장기여금,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포함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1인당 정부 수입은 OECD와 Eurostat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으로 계산된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하여 총수입을 미국 달러(USD)로 환산한 후, 이를 국가의 인구수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구매력평가지수는 A국가에서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B국가의 통화량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2021), *Tax Policy Reforms 2021: Special Edition on Tax Policy during the COVID-19 Pandemic*,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27d2616-en*.

Akgun, O., D. Bartolini and B. Cournède (2017), "The capacity of governments to raise tax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407, OEC 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bee2df9-en.*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Ireland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ec600f3-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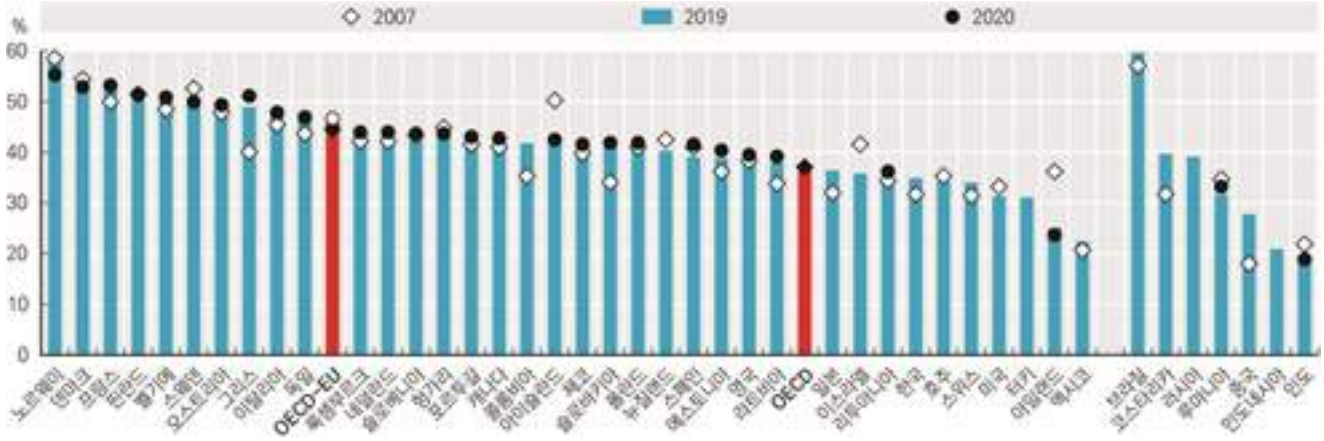
그림 설명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2.16 & 2.17. 일본, 브라질, 러시아는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18. 일본과 브라질은 2007-2019년 자료 대신 2007-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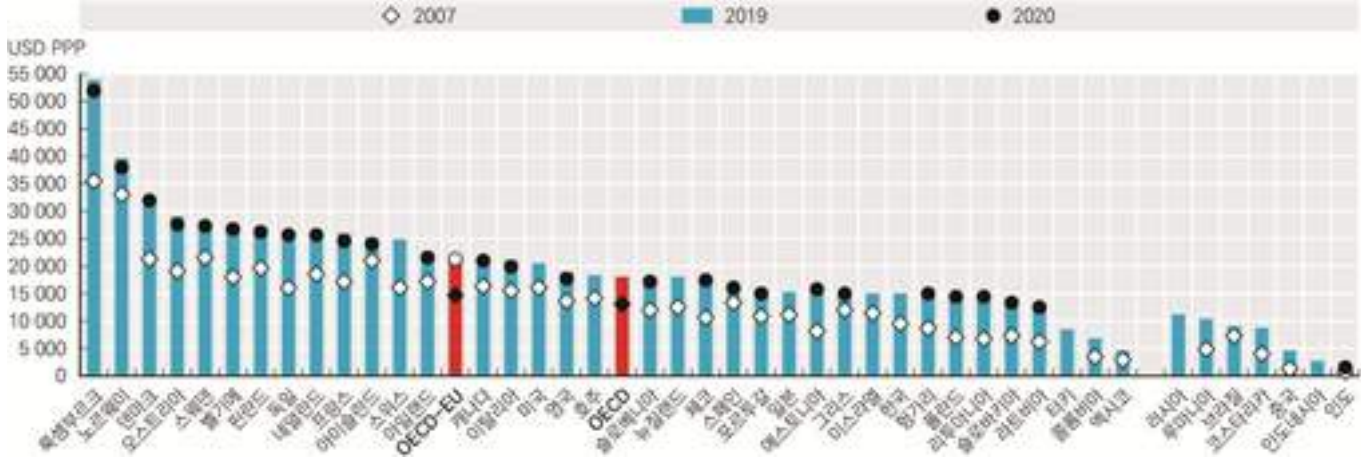
2.16. 일반정부의 GDP 대비 수입 비율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중국과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21)을 참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9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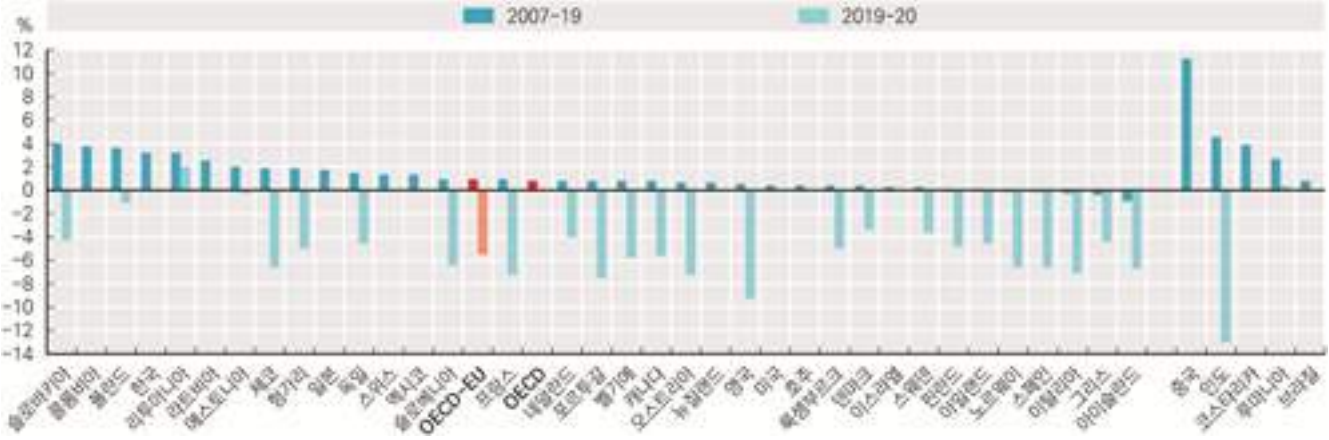
2.17. 일반정부의 1인당 정부 수입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중국과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21)을 참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938

2.18. 1인당 실질 정부수입의 연평균 증가율 (2007–19년, 2019–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21)을 참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957

일반정부 수입의 구조

정부 수입의 구조는 수입의 출처를 보여주며, 공공 지출에 대한 시민 또는 경제 부문별 상대적 기여도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2019년 OECD 회원국의 정부 수입은 조세(59.5%), 순사회보장기여금(25.2%), 판매 수입(8.5%), 보조금 및 기타 수입(6.8%)으로 구성되었다(그림 2.19). 2007년 대비 2019년 정부 수입의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순사회보장기여금(+1%p)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일반정부 수입에서 순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5.8%p)과 노르웨이(3.5%p)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멕시코에서는 일반정부 수입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10%p 이상 증가하였다. 이는 재산 및 자본, 납세자의 소득에 부과하는 소득세 인상 정책의 시행과 조세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의 결과이다(그림 2.20 참고).

2019년 대비 2020년 OECD-EU 국가의 일반정부 수입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57.7%에서 57.0%로 0.7%p 하락하였다(그림 2.19 참고). 최근 1년간의 변화는지난 6년간(2007년~2013년) OECD 국가에서 발생한 변화의 1/3 수준으로 변화의 폭이 매우 크다. 일반정부 수입에서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하락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활동이 둔화되어 조세징수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 수입원으로서 세금의 상대적 중요성이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다. 덴마크(88.7%)와 스웨덴(80.1%)은 조세 수입이 정부 수입의 80% 이상(2020년 기준)을 차지하였다. 한편, 슬로바키아(45.4%)와 슬로베니아(46.5%)는 일반정부 수입에서 조세 수입이 가장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정부 수입의 구조는 정부 수준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중앙정부는 조세 수입에 크게 의존한다. 2019년 OECD 국가의 중앙정부 수입 중 73%는 조세 수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표 G.4 참고). 반면, 지방정부 수입 중 절반은 보조금과 기타 수입이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온라인 그림 G.6 참고). 연방제 국가와 준연방제 국가의 경우, 정부 수입의 구조에 큰 차이가 있다. 독일, 캐나다, 미국, 스위스의 주정부는 수입의 50% 이상을 조세 수입으로 충당한다. 반면, 멕시코와 오스트리아의 주정부는 조세 수입이 정부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 미만에 불과하다(온라인 그림 G.5 참고).

OECD 수입 통계에서는 조세 수입에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을 포함한다. 2018년 조세 수입 중 소득세와 법인세 수입이 1/3이상을 차지하고,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25.7%를 차지하였다. 2007년 대비 2018년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에 비하여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상대적 중요성이 증가하였다. 조세 수입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4%p 감소한 반면,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1.3%p 증가하였다. 최근 조세 수입에서 법인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2007년 기록한 최고치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하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수입'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 수입은 조세(예: 소비세, 소득세, 부유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순사회보장기여금(예: 사회보험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연금, 건강 및 사회보장 기여금), 재화와 서비스 판매 수입(예: 정부의 시장 산출물, 입장료), 보조금 및 기타 수입(예: 경상 및 자본 보조금, 재산소득, 보조금)을 포함한다.

정부 총수입의 구조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B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21의 자료는 OECD 수입 통계(*OECD Revenue Statistics*)를 활용하였다. OECD 수입 통계에서 정의하는 조세 수입은 국민계정체계의 정의와 강제적 사회보장기여금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국민계정체계에서 조세는 일반정부에 대한 현금 및 현물 형태의 의무적인 무보상적 지불금(mandatory unrequited payments)으로 정의된다. 순사회보장기여금은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보험제도를 통해 실제 지급 또는 귀속된 지불금을 의미한다. 순사회보장기여금에는 강제적 혹은 자발적, 충당된 혹은 미충당된 사회보장기여금이 모두 포함된다. 따라서 OECD 수입 통계상 조세에는 강제적 사회보장기여금만 포함되는 반면, 국민계정체계상 조세에는 순사회보장기여금 모두를 포함한다. 비록 사회보장기여금의 수령 규모가 반드시 기여금의 금액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회보장기여금의 수령은 개인의 적정 기여금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조세에 순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하고 있다.

참고문헌

OECD (2020), *Revenue Statistics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625f8e5-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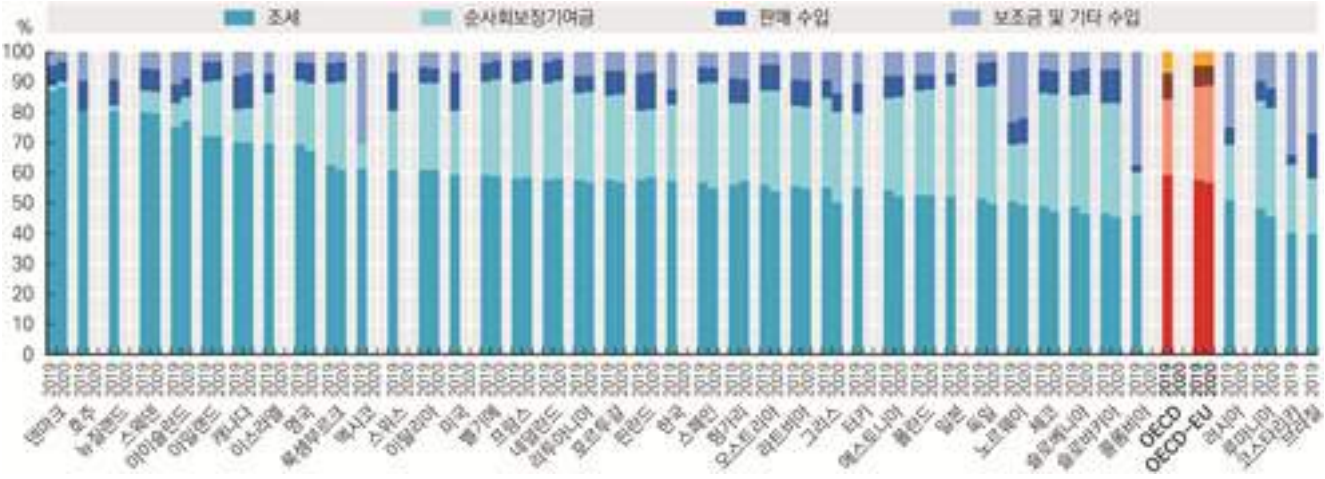
2.19 & 2.20.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호주는 정부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 수입에 순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되지 않았다. 일본, 브라질, 러시아는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20.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2.21. OECD 국가 중 유럽연합에 가입된 국가의 총조세에는 관세를 포함한다. 세수 구조별 조세 수입의 비중은 모든 OECD 국가의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의 연도인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OECD 평균은 비가중 평균을 의미한다.

G.4 -G.6. 정부 수준별 수입의 구조는 부록 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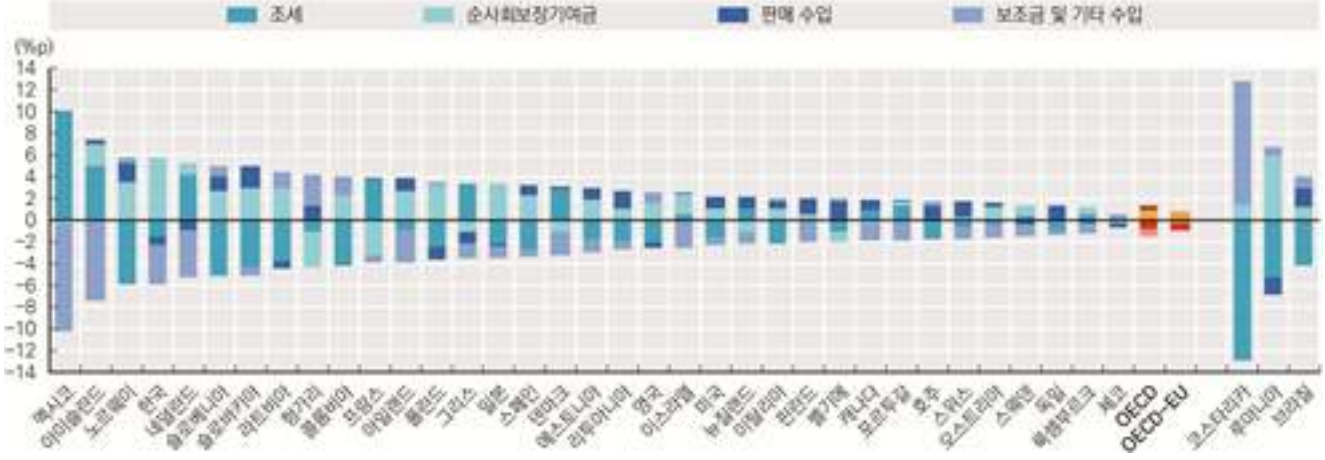
2.19. 일반정부 수입의 구조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9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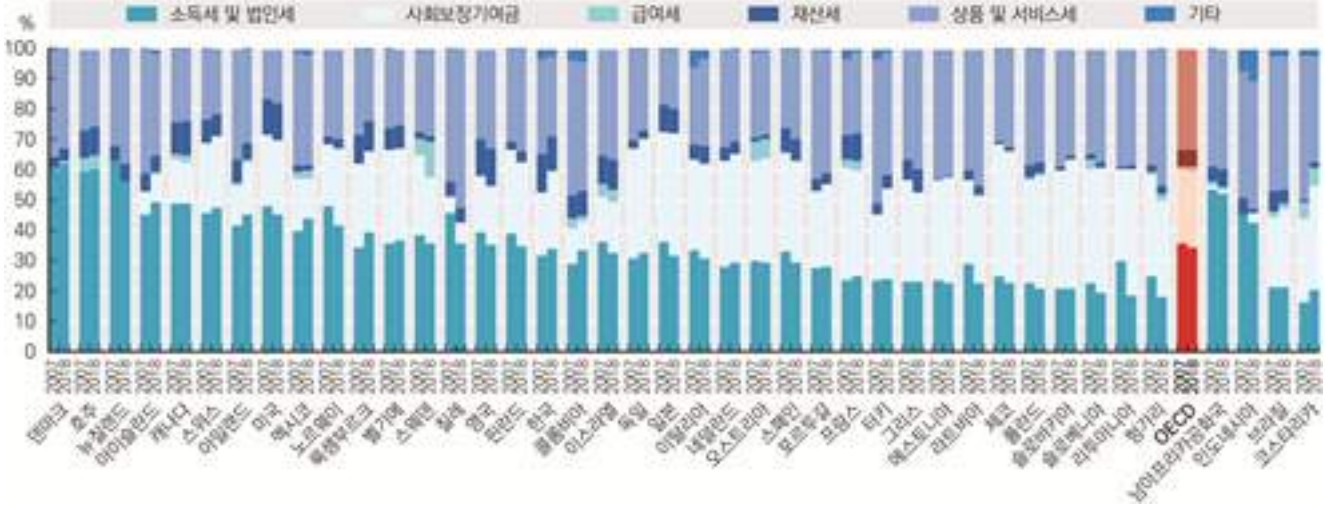
2.20. 일반정부 수입 구조의 변화 (2007년 대비 2019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6995

2.21. 세수구조별 조세 수입의 비중 (2007년, 2018년)



출처: *OECD Revenue Statistics*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014

일반정부 지출

정부는 국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배타적 권한(예: 법률의 집행)을 행사하며, 소득 재분배(예: 사회적 급여와 보조금 지급)의 역할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 정부의 서비스는 정부 부처뿐만 아니라 여타 기관(예: 보건의료)에서도 제공될 수 있으며, 국가별로 서비스 공급 주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이렇듯, 정부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나 OECD 국가의 정부 지출은 주로 공공 서비스를 공급하고, 보조금(이전소득)을 지급하는데 활용되고 있다. 정부 지출은 활용되므로 정부 수입에 비해 경기변동(경기 회복 또는 침체)에 대한 민감도가 낮다. 이는 정부 지출이 보편적 초등 교육과 같이 시민들에게 수급권한을 보장하는 장기적인 정책에 주로 활용되기 때문이다.

2019년 OECD 회원국의 평균 일반정부 지출은 GDP의 40.8%를 기록하였다.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이 35%~50%인 국가는 OECD 36개국 중 27개국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이 높은 10개국 중 9개국은 유럽 국가로, 2019년 대비 2020년 OECD-EU국가(22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은 평균 7%p 증가하였다.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모든 OECD 국가(26개국)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일반정부 지출이 증가하였고,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 또한 증가하였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로 GDP가 감소하는 동시에 시민과 기업에 보건의료 서비스와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대규모 정부 지출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그림 2.22 참고).

2019년 OECD 회원국의 1인당 평균 정부 지출은 19,587달러(ppp 기준)로 OECD 36개국 중 28개국에서 1인당 12,000달러~28,000달러(PPP 기준)의 정부 지출을 기록하였다. 국가별 1인당 정부 지출 규모의 차이는 소득의 차이에 기인한다. 1인당 정부 지출의 규모가 가장 작은 OECD 3개국(콜롬비아, 멕시코, 터키)은 1인당 명목소득이 가장 작은 4개국에 속한다. 1인당 정부 지출의 규모가 가장 큰 2개국(룩셈부르크, 노르웨이)은 1인당 명목소득이 가장 큰 4개국에 속한다. 국가별 1인당 정부 지출의 차이는 국가의 정책적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예를 들어, 2019년 프랑스의 1인당 소득은 OECD 국가 중 16위를 차지한 반면, 1인당 정부 지출은 7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다른 국가와 비교할 때, 프랑스의 공공부문 비중이 크고,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보다 많은 지출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는 모든 OECD(26개국) 국가에서 1인당 일반정부 지출이 증가하였다. 이중 16개국에서는 1인당 일반정부 지출이 2,000달러(PPP 기준) 이상 증가하였다(그림 2.23 참고).

2007-2017년 OECD 회원국의 1인당 실질 정부 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1.2%이다. 동기간 OECD 35개국 중 32개국에서 1인당 실질 정부 지출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9년 대비 2020년 1인당 실질 정부 지출의 규모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모든 OECD 국가(26개국)에서 2019년 대비 2020년 1인당 실질 정부 지출의 증가율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EU 22개국에서는 1인당 실질 정부 지출의 증가율이 2007년~2019년 연평균 0.95%에서 2019년~2020년 7.65%로 상승하였다. 2007년~2019년과 2019년~2020년 1인당 실질 정부 지출의 증가율의 변화가 가장 큰 국가는 리투아니아(연평균 2.9% → 24.5%)와 캐나다(연평균 1.0% → 19.5%)이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득 지원, 보건의료 및 기타 분야에 상당한 지출을 한 결과이다(그림 2.24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지출'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정부지출에는 중간 소비,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 소득(이자지출 포함), 사회급여, 기타 경상지출(경상이전)과 자본지출(자본이전 및 투자)이 포함된다. 국내총생산(gross domestic product; GDP)은 일정 기간 동안 한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 가치를 화폐 단위로 환산하여 더한 값이다. 1인당 정부 지출은 OECD와 Eurostat의 구매력평가지수(purchasing power parity; PPP)를 기준으로 계산된 국내총생산(GDP)을 활용하여 총수입을 미국 달러(USD)로 환산한 후, 이를 국가의 인구로 나눈 값을 의미한다. 구매력평가지수는 A국가에서 동일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필요한B국가의 통화량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2019), *OECD Economic Surveys: Fr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0eee144-en.*

Causa, O., J. Browne and A. Vindics (2019), "Income redistribution across OECD countries: Main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b63e61c-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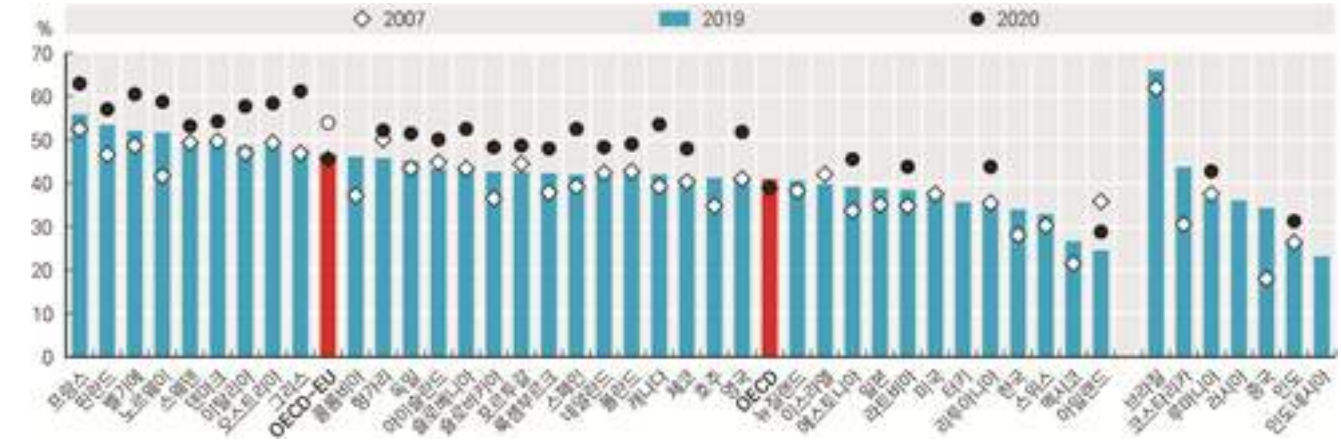
그림 설명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2.22 & 2.23. 일본, 브라질, 러시아는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24. 일본과 브라질은 2007-19년 자료 대신 2007-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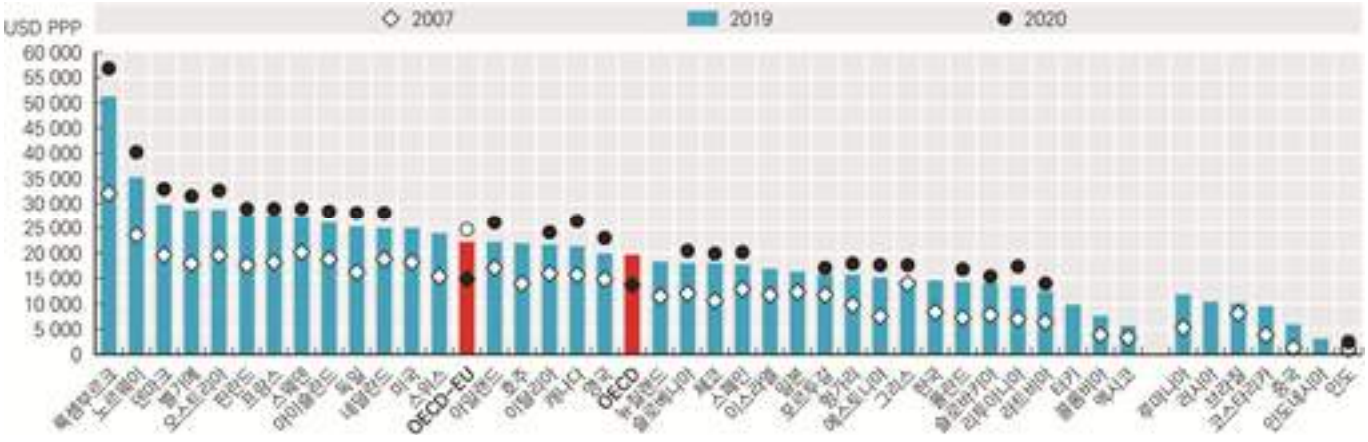
2.22. 일반정부의 GDP 대비 지출 비율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중국과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21)을 참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0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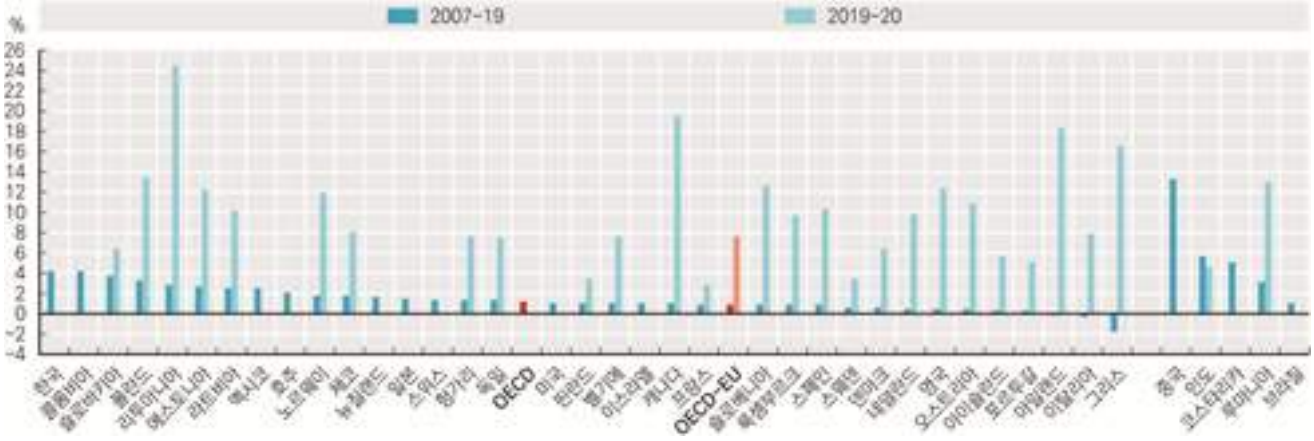
2.23. 일반정부의 1인당 지출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중국과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21)을 참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052

2.24. 1인당 실질 정부지출의 연평균 증가율 (2007-2019년, 2019-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인도의 자료는 IMF Economic Outlook (April 2021)을 참고.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071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른 일반정부 지출

정부는 국경의 보호, 병원 건설, 여권 발급 등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는 정부가 교육, 보건, 국방, 사회보호, 공공질서 및 안전 등 주요 분야별로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지출하는지를 보여준다. 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는 국가의 우선순위 및 정책적 선택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달체계(공공 공급 또는 공공·민간 공동 공급)의 선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2019년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사회보호(GDP 대비 13.3%)분야로 예를 들어, 노령·장애·질병연금, 주거·실업급여 등의 지출이 이에 포함된다. 사회보호 분야의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핀란드(24%), 프랑스(23.9%), 덴마크(21.4%)인 반면, 비중이 낮은 국가는 칠레(5.9%), 한국(6.9%), 미국(7.6%)이다(표 2.25 참고).

2019년 OECD 회원국의 정부지출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보건(GDP 대비 7.9%)으로 의료제품·기기·장비, 병원·외래 진료 서비스 등의 지출이 이에 포함된다. 보건 분야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미국(9.3%), 노르웨이(8.7%), 덴마크(8.2%)이다. 미국, 노르웨이, 덴마크는 보건 분야에 대한 정부 지출이 큰 국가이지만, 국가별 보건 지출의 특성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와 덴마크의 보건의료 서비스는 공공의 책임인 반면, 미국은 공공 의료 보험이 적용되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약 1/3에 불과하다. 보건 분야의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이 낮은 국가는 스위스(2.1%), 라트비아(4.2%), 칠레(4.4%)이다. 스위스의 보건의료 비용은 주로 의무가입 민간건강보험을 통해 충당된다.

2019년 OECD 회원국의 일반공공행정 분야(예: 공공채무거래, 행정·입법 기능, 정부 간 이전 지출 등)의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은 5.4%로 나타났다.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GDP 대비 정부지출의 비중이 높은 국가는 이탈리아(7.5%), 그리스(7.9%), 핀란드(7.9%)이다. 이탈리아와 그리스에서는 일반행정 분야의 지출 중 공공채무거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핀란드에서는 일반 서비스가 일반행정 분야 지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2019년 OECD 회원국의 GDP 대비 교육 분야의 정부 지출 비중은 5.1%이고, 경제 활동 분야의 정부 지출 비중은 3.9%이다. 경제 활동 분야에는 기업과 경제 부문에 대한 보조금 지출이 포함된다. 기능별 GDP 대비 정부 지출의 비중이 가장 낮은 분야는 환경보호 분야(0.5%)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지출'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 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지출은 기능별로 10개의 분야(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문화·종교, 교육, 사회보호)로 분류된다. 정부 지출의 기능별 분류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부록 C를 참고할 수 있다. 기능별 분류(정부 수준별 자료 포함)에 따른 정부 지출의 구조와 특정 기능의 하위분류에 관한 자세한 자료는 부록 G(표 G.7~표 G.15)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dd50c09-en*.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그림 설명

캐나다,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호주, 일본, 한국은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2.25. 칠레와 콜롬비아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칠레와 콜롬비아는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 코스타리카는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26. 칠레와 콜롬비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2.25. 정부 기능별 분류에 따른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2019년)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호주	4.0	2.3	2.0	4.9	0.9	0.6	7.3	0.9	5.8	9.8
오스트리아	5.7	0.6	1.3	5.8	0.4	0.3	8.3	1.2	4.8	20.1
벨기에	6.9	0.8	1.7	6.7	1.3	0.3	7.6	1.3	6.2	19.4
칠레	3.0	1.1	2.0	2.3	0.2	0.9	4.4	0.3	5.5	5.9
콜롬비아	4.9	1.2	2.1	3.1	0.5	0.5	5.1	0.7	4.2	8.7
체코	4.4	0.9	1.9	6.1	0.8	0.7	7.6	1.4	4.9	12.6
덴마크	6.0	1.1	1.0	3.1	0.4	0.2	8.2	1.6	6.3	21.4
에스토니아	3.5	2.1	1.8	3.9	0.7	0.4	5.3	2.0	6.0	13.2
핀란드	7.9	1.2	1.2	4.2	0.2	0.3	7.1	1.5	5.6	24.0
프랑스	5.5	1.7	1.6	6.0	1.0	1.1	8.0	1.4	5.3	23.9
독일	5.7	1.1	1.6	3.3	0.6	0.4	7.4	1.0	4.3	19.7
그리스	7.9	2.0	2.1	4.0	1.4	0.2	5.3	0.8	4.0	19.8
헝가리	8.2	1.0	2.1	8.0	0.5	0.8	4.5	3.0	4.7	12.7
아이슬란드	7.2	0.1	1.5	4.9	0.6	0.5	7.8	3.0	7.0	10.9
아일랜드	2.7	0.2	0.9	2.3	0.4	0.7	4.7	0.5	3.1	8.9
이스라엘	4.2	5.3	1.6	2.9	0.5	0.2	5.4	1.5	7.0	11.1
이탈리아	7.5	1.3	1.8	4.0	0.9	0.5	6.8	0.8	3.9	21.1
일본	3.8	0.9	1.2	3.7	1.1	0.7	7.7	0.4	3.3	16.1
한국	4.0	2.4	1.2	4.4	0.8	1.0	4.7	1.0	4.8	6.9
라트비아	3.8	1.9	2.2	5.3	0.6	1.0	4.2	1.5	5.8	12.1
리투아니아	3.5	1.6	1.4	3.0	0.4	0.5	6.2	1.2	4.6	12.3
룩셈부르크	5.0	0.4	1.2	5.2	0.9	0.6	5.0	1.3	4.7	18.0
네덜란드	4.1	1.3	1.8	3.8	1.4	0.4	7.7	1.2	5.0	15.4
노르웨이	4.8	1.9	1.2	6.0	0.9	0.8	8.7	1.8	5.6	19.7
폴란드	4.2	1.6	2.1	4.8	0.5	0.5	4.9	1.3	5.0	16.7
포르투갈	6.7	0.8	1.7	3.6	0.6	0.5	6.6	0.9	4.4	16.9
슬로바키아	5.4	1.1	2.3	5.1	0.8	0.5	7.7	1.2	4.2	14.4
슬로베니아	5.2	1.0	1.6	4.5	0.6	0.4	6.7	1.4	5.5	16.5
스페인	5.5	0.8	1.8	4.0	0.9	0.4	6.1	1.1	4.0	17.4
스웨덴	6.9	1.2	1.3	4.4	0.5	0.7	7.0	1.3	6.9	19.0
스위스	4.2	0.8	1.6	3.9	0.6	0.2	2.1	1.0	5.4	12.9
영국	4.3	2.0	1.8	3.5	0.6	0.8	7.7	0.6	4.9	14.8
미국	5.8	3.4	1.9	3.4	0.0	0.5	9.3	0.3	5.9	7.6
OECD	5.4	2.2	1.7	3.9	0.5	0.6	7.9	0.7	5.1	13.3
OECD-EU	5.8	1.2	1.7	4.4	0.8	0.6	7.0	1.2	4.7	19.3
코스타리카	3.7	0.0	2.5	3.2	0.4	0.8	5.9	0.2	7.7	8.3
루마니아	4.2	1.7	2.2	4.7	0.7	1.1	5.0	1.0	3.6	11.9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090

2.26. 정부 기능별 분류에 따른 GDP 대비 일반정부 지출 변화(2007년 대비 2019년)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호주	0.3	0.5	0.2	0.2	0.2	−0.1	0.9	0.0	0.5	0.2
오스트리아	−1.9	−0.2	0.0	−0.1	−0.1	−0.1	0.9	−0.3	0.1	0.7
벨기에	−1.8	−0.2	0.0	1.1	0.5	−0.1	0.8	0.0	0.6	2.6
체코	−0.2	−0.2	0.0	−0.3	−0.1	−0.3	0.9	0.0	0.6	0.5
덴마크	−0.7	−0.3	0.0	0.1	−0.1	−0.1	0.6	−0.1	0.3	0.0
에스토니아	0.2	0.8	−0.3	−0.4	−0.2	−0.2	1.0	−0.1	0.3	4.1
핀란드	1.3	−0.2	0.0	−0.2	−0.1	0.0	0.7	0.4	−0.1	5.0
프랑스	−1.6	0.0	0.2	1.7	0.1	−0.1	0.6	0.0	0.0	2.2
독일	−0.5	0.2	0.1	0.0	0.1	−0.4	1.0	0.0	0.4	0.8
그리스	−3.7	−0.8	0.6	−0.2	0.6	0.0	−0.7	0.2	0.4	4.1
헝가리	−1.4	−0.2	0.2	1.5	−0.1	−0.2	−0.4	1.5	−0.8	−4.5
아이슬란드	−2.8	0.0	0.1	−0.7	0.0	0.2	0.3	−0.2	−0.8	2.8
아일랜드	−0.7	−0.1	−0.6	−1.3	−0.6	−1.0	−1.5	−0.1	−1.2	−4.2
이스라엘	−3.4	−1.7	0.1	0.4	0.0	−0.2	0.6	0.2	0.6	0.7
이탈리아	−1.7	0.1	0.0	0.0	0.1	−0.2	0.1	0.1	−0.5	3.7
일본	−0.6	0.1	0.0	0.2	0.0	−0.1	1.5	0.1	−0.1	2.7
한국	−0.4	0.2	0.1	−1.1	−0.1	−0.2	1.6	0.2	0.5	2.2
라트비아	−0.2	0.5	−0.2	−0.2	−0.3	−0.2	0.2	−0.2	0.2	4.2
리투아니아	−0.9	−0.1	−0.3	−1.3	−0.5	0.2	1.0	0.1	−0.4	1.5
룩셈부르크	0.2	0.2	0.3	0.0	0.2	0.0	0.3	0.0	0.3	2.8
네덜란드	−1.4	0.0	0.0	−0.5	−0.1	−0.1	1.0	−0.1	−0.1	1.0
노르웨이	−1.1	0.3	0.4	2.2	0.4	0.3	1.8	0.5	0.7	4.2
폴란드	−1.2	−0.3	−0.2	−0.1	−0.1	−0.2	0.4	0.2	−0.7	1.1
포르투갈	−0.4	−0.4	−0.1	−0.5	0.0	−0.2	−0.6	−0.2	−1.5	2.0
슬로바키아	1.3	0.3	0.1	0.9	0.1	−0.1	1.5	0.4	0.6	1.4
슬로베니아	−0.3	−0.4	−0.1	0.4	−0.2	−0.2	0.7	0.1	−0.4	0.2
스페인	0.5	−0.2	0.0	−1.4	−0.1	−0.5	0.4	−0.4	0.0	4.5
스웨덴	−0.8	−0.3	0.0	0.5	0.0	0.2	0.6	0.1	0.7	−1.0
스위스	0.0	0.0	0.2	0.3	−0.1	0.1	0.5	0.0	0.6	1.0
영국	0.1	−0.2	−0.5	0.7	−0.3	−0.3	1.2	−0.3	−0.8	0.5
미국	−0.2	−0.6	−0.2	−0.3	0.0	−0.1	1.6	0.0	−0.4	0.9
OECD	−0.5	−0.2	−0.1	0.0	0.0	−0.2	1.1	0.0	−0.1	1.4
OECD-EU	−1.0	0.0	0.1	0.1	0.0	−0.2	0.5	0.0	0.0	1.8
루마니아	−0.2	−0.1	−0.2	−3.7	0.3	−0.4	1.4	0.0	−0.2	1.8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109

정부 기능별 분류(COFOG)에 따른 사회보호분야와 보건분야의 일반정부 지출

OECD 국가에서 사회보호 분야와 보건 분야는 정부 기능별 분류 중 가장 중요한 지출 분야이다. OECD-EU 국가들과 일부 OECD국가들은 사회보호 분야와 보건 분야 지출의 세부 자료를 제공하여 정부 지출에 관한 보다 광범위하고 상세하게 검토가 가능하다. OECD-EU 국가들은 공통의 과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보호 및 보건 분야의 지출이 특히 중요하다. 이는 보건 분야의 급속한 기술 발전과 의료비의 증가, 인구통계학적 특성의 변화(기대수명의 증가와 낮은 출산율)와 관련성이 높다.

2019년 사회보호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지출은 노령연금으로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의 비중은 10.5%이다. GDP 대비 노령연금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그리스(13.8%)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아일랜드(3%)이다(표 2.27 참고). 2009년~2019년 사회보호 분야 지출 중 가장 큰 증가율을 보인 지출은 노령연금으로 2.4%p 증가하였다. 반면, 2009년~2019년 사회보호 분야 지출 중 가장 크게 감소한 지출은 실업급여로 2.8%p 감소하였다(온라인 표 G.18 참고).

2019년 사회보호 분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지출은 질병 및 장애급여이며, OECD 국가들의 GDP 대비 질병 및 장애급여 지출은 평균 2.7%이다. 2019년 GDP 대비 질병 및 장애급여 지출이 가장 큰 국가는 노르웨이(6.9%)인 반면, 가장 작은 국가는 콜롬비아(0.01%)이다. 2009년~2019년 노르웨이의 전체 사회보호 지출 중 질병 및 장애급여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2%p 감소한 반면, 실제 OECD-EU 22개국 평균에는 변화가 없었다. 2019년 사회보호 분야에서 세 번째로 규모가 큰 지출은 가족 및 자녀 수당이며, OECD-EU 국가들의 GDP 대비 가족 및 자녀 수당 지출은 평균 1.8%에 달한다. 2019년 GDP 대비 가족 및 자녀 수당 지출이 가장 큰 국가는 덴마크(4.2%)인 반면, 가장 작은 국가는 스위스(0.58%)이다. 덴마크는 육아 휴직, 아동청년수당 등 가족 정책이 잘 갖춰진 국가이다. 덴마크의 가족 정책은 부모의 일·가정 양립, 유급노동과 무급노동에 대한 남녀평등의 보장, 아동 돌봄 공백 해소를 돕는다. 반면, 스위스에서는 아동수당을 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스위스 아동수당은 주정부 단위에서 받을 수 있고, 고용주가 부담하며, 가족 수당 기금을 통해 지급된다.

보건 분야에서는 의료 장비, 시설 등 병원 인프라에 소요되는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2019년 OECD-EU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병원 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3.1%이며, 영국은 5.6%, 호주는 2.7%이다(표 2.28 참고). 그러나 2009년~2019년 GDP 대비 병원 서비스 지출 비중은 연평균 0.19%p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환자들이 병원에 머무는 평균 기간이 짧아졌기 때문으로 일부 해석할 수 있다. 보건 분야 지출 중 두 번째로 지출 규모가 큰 부문은 외래환자 서비스로 GDP의 외래환자 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2.3%이다. 외래환자 서비스에는 가정 또는 진료 시설에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포함되며, 2009년 ~2019년 GDP 대비 외래환자 서비스 지출의 비중은 1.2%p 증가하였다. GDP 대비 외래환자 서비스 지출이 가장 많은 국가는 핀란드(3.17%)와 스웨덴(3.16%)인 반면, 가장 적은 국가는 스위스(0.19%)와 에스토니아(0.58%)이다.

보건 분야 지출 중 세 번째로 지출 규모가 큰 부문은 의료제품, 기기, 장비 지출이다. OECD-EU국가의 GDP 대비 의료제품, 기기, 장비 지출의 비중은 1.1%이며, 호주는 0.77%, 영국은 0.46%이다. 2009년~2019년 보건 분야 지출에서 의료제품, 기기, 장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5%p 감소하였다(온라인 표 G.19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 지출'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와 유럽 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였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 지출은 기능별 분류(COFOG)에 따라 10개 분야로 구분된다(자세한 정보는 부록 C 참고). 보건 분야의 지출은 6개 부문(의료제품·기기·장비, 외래환자 서비스, 병원 서비스, 공공보건 서비스, 보건 R&D, 기타 미분류 보건)으로 구분된다. 사회보호 분야의 지출은 9개 부문(질병 및 장애, 노령(예: 연금),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R&D,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으로 구분된다.

참고문헌

OECD (2020), *OECD Pensions Outlook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7ede41b-en*.

OECD (2019), *Society at a Glance 2019: OECD Social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soc_glance-2019-en*.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dd50c09-en*.

그림 설명

2.27 & 2.28. OECD 국가 중 호주,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을 제외한 일부 비유럽 국가의 자료는 결측값에 해당한다. 호주, 콜롬비아, 일본은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 코스타리카는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G.16 - G.19. 사회보호 분야와 보건 분야의 정부지출 구조(2019년, 2009년 대비 2019년)는 부록 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27. 사회보호 분야의 기능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2019년)

	질병 및 장애	노령	유족	가족 및 자녀	실업	주거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사회보호 R&D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호주	2.19	3.95	0.00	2.21	0.55	0.22	0.24	0.00	0.41
오스트리아	1.77	12.56	1.34	2.02	1.17	0.09	0.98	0.01	0.18
벨기에	3.46	9.42	1.60	2.18	1.31	0.21	1.03	0.00	0.15
콜롬비아	0.01	6.42	..	0.80	..	0.19	0.98	..	0.27
체코	2.23	7.39	0.51	1.60	0.14	0.15	0.35	0.00	0.20
덴마크	4.35	8.24	0.01	4.21	1.91	0.65	1.56	0.01	0.49
에스토니아	2.09	6.71	0.06	2.70	1.28	0.02	0.16	0.01	0.16
핀란드	3.14	13.71	0.64	3.02	1.68	0.62	0.91	0.02	0.31
프랑스	2.89	13.12	1.46	2.26	1.86	0.84	1.26	0.00	0.17
독일	3.25	9.65	1.90	1.71	1.55	0.34	0.62	0.00	0.71
그리스	1.61	13.84	2.04	0.89	0.60	0.20	0.56	0.01	0.02
헝가리	2.18	6.36	0.81	2.06	0.25	0.08	0.79	0.01	0.18
아이슬란드	3.40	3.23	0.01	2.15	0.83	0.36	0.49	0.00	0.41
아일랜드	1.66	2.99	0.57	1.29	0.82	1.15	0.27	0.00	0.16
이스라엘	2.85	5.13	0.56	1.31	0.31	0.18	0.47	0.00	0.35
이탈리아	1.79	13.54	2.59	0.95	1.12	0.03	1.04	0.01	0.06
일본	0.88	10.99	1.45	1.89	0.27	0.00	0.29	0.00	0.36
라트비아	2.38	7.02	0.18	1.22	0.50	0.07	0.39	0.00	0.31
리투아니아	2.75	6.24	0.29	1.70	0.67	0.07	0.36	0.00	0.20
룩셈부르크	3.00	9.50	0.00	3.54	1.01	0.08	0.74	0.00	0.16
네덜란드	4.13	6.46	0.06	1.43	1.34	0.44	1.58	0.01	0.00
노르웨이	6.92	7.38	0.18	3.42	0.31	0.13	0.87	0.05	0.43
폴란드	2.03	9.53	1.64	2.84	0.26	0.03	0.30	0.00	0.10
포르투갈	1.28	11.32	1.70	1.11	0.62	0.17	0.39	0.00	0.29
슬로바키아	3.18	7.67	0.77	1.09	0.23	0.00	0.23	0.00	1.19
슬로베니아	2.02	9.85	1.23	1.84	0.42	0.03	0.92	0.00	0.18
스페인	2.51	9.53	2.27	0.94	1.62	0.02	0.36	0.00	0.13
스웨덴	3.59	10.41	0.21	2.47	1.07	0.27	0.99	0.00	0.01
스위스	2.88	6.51	0.29	0.58	1.01	0.02	1.56	0.01	0.01
영국	2.35	8.21	0.05	1.20	0.06	0.86	1.74	0.00	0.29
OECD-EU	2.72	10.49	1.60	1.76	1.30	0.33	0.82	0.00	0.28
코스타리카	0.62	4.75	0.41	0.25	0.00	0.32	0.01	0.00	1.93
루마니아	1.05	8.75	0.11	1.37	0.05	0.00	0.08	0.00	0.44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128

2.28. 보건 분야의 기능별 GDP 대비 정부지출 비율 (2019년)

	의료제품, 기기, 장비	외래환자서비스	병원서비스	공공보건서비스	보건 R&D	기타 미분류 보건
호주	0.77	0.67	2.65	0.32	0.22	2.70
오스트리아	1.12	1.54	4.66	0.18	0.46	0.31
벨기에	0.78	2.90	3.54	0.13	0.04	0.19
콜롬비아	4.68	..	..	0.20	0.04	0.18
체코	0.87	1.59	3.56	1.30	0.07	0.22
덴마크	0.54	1.21	5.70	0.13	0.21	0.45
에스토니아	0.71	0.58	3.72	0.04	0.21	0.07
핀란드	0.66	3.17	3.12	0.03	0.10	0.04
프랑스	1.42	2.91	3.38	0.12	0.09	0.12
독일	1.67	2.24	2.80	0.07	0.08	0.50
그리스	1.26	0.57	3.32	0.02	0.12	0.04
헝가리	0.80	1.26	1.96	0.15	0.03	0.34
아이슬란드	0.52	1.78	5.22	0.02	0.00	0.24
아일랜드	0.68	1.79	1.78	0.12	0.01	0.35
이스라엘	0.71	1.47	3.03	0.11	0.00	0.10
이탈리아	0.99	2.47	2.84	0.30	0.09	0.12
일본	1.27	2.97	2.80	0.46	0.01	0.17
라트비아	0.62	1.07	2.37	0.06	0.00	0.12
리투아니아	0.86	1.59	2.26	0.08	0.00	1.42
룩셈부르크	1.69	1.06	2.02	0.04	0.17	0.07
네덜란드	0.75	2.54	3.57	0.24	0.36	0.25
노르웨이	0.50	1.99	5.17	0.29	0.41	0.32
폴란드	0.07	1.45	3.11	0.07	0.09	0.11
포르투갈	0.55	2.04	3.51	0.02	0.24	0.19
슬로바키아	1.47	2.06	3.74	0.05	0.03	0.36
슬로베니아	0.92	1.98	3.04	0.34	0.08	0.29
스페인	0.96	2.25	2.50	0.09	0.26	0.03
스웨덴	0.74	3.16	2.50	0.22	0.19	0.18
스위스	0.00	0.19	1.67	0.10	0.10	0.05
영국	0.46	0.97	5.63	0.20	0.14	0.29
OECD-EU	1.11	2.28	3.06	0.16	0.13	0.24
코스타리카	0.26	2.25	2.89	0.12	0.12	0.26
루마니아	1.02	0.12	2.87	0.08	0.01	0.90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147

경제적 거래별 정부 지출의 구조

정부 지출은 경제적 거래의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공무원 임금(피고용자에 대한 보수 지급), 보조금, 연금 및 실업급여(사회 급여)와 같은 현금 급여, 정부 생산 과정에서의 민간 재화와 서비스 구매(중간소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경제적 거래별 분류는 정부의 생산 기능과 경제 간 관계를 보다 넓은 차원에서 범주화한 것으로 정부 기능별 분류를 보조한다.

경제적 거래별 분류에 따르면, 2019년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지출 중 40.6%는 사회 급여에 지출되었다. 일반정부 지출 중 사회 급여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일본(55.1%), 독일(54.3%), 네덜란드(49.7%)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10.8%), 아이슬란드(16.8%), 이스라엘(23%)이다. 2007년~2019년 총 지출 대비 사회 급여 지출의 비율은 3.3%p 증가하였고,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한 국가는 한국(12.1%p)이다.

일반정부 지출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은 피고용자 보수 지출로 2019년 총 지출의 21.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정부 지출 중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아이슬란드(32.7%)와 덴마크(30.3%)인 반면, 가장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16.0%)와 일본(13.9%)이다. 2007년~2019년 총 지출 대비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은 0.5%p 하락하였고, 멕시코(6.6%p), 호주(4.3%p), 포르투갈(4.2%p)에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다. 반면, 슬로바키아(3.8%p), 체코(3.7%p), 아이슬란드(2.1%p)에서는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OECD-EU 22개국의 총 지출 대비 사회 급여 지출의 비율은 2019년 46.1%에서 2020년 45.5%로 감소하였다.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율 또한 2019년 21.7%에서 2020년 20.5%로 감소하였다. 다만, 이러한 결과를 해석할 때는 여타 지출(보조금 및 자본 지출)의 증가를 고려하는 등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기업에 대한 보조금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지출이며, 총 지출 대비 보조금 지출의 비율은 3.1%에서 5.2%로 증가하였다. 또한, 총 지출 대비 자본지출(자본 이전과 투자 포함)의 비율도 8.5%에서 9.2%로 증가하였다(표 2.29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 지출'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와 유럽통계청의 정부재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지출에는 중간 소비(예: 주어진 회계연도 동안 한 나라의 경제적 영역 내 생산과정에서 소비된 재화와 서비스),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소득(이자지출), 사회급여(사회적 현물이전을 제외한 사회급여와 시장의 공급자를 통해 가구에 지급되는 사회적 현물이전으로 구성), 기타 경상지출(경상이전, 생산세, 소득·부 등에 대한 경상세, 연금 수급의 증감 조정)과 자본지출(자본이전 및 투자)이 포함된다. 일반정부 수준의 모든 경제적 거래는 통합된 기준으로 기록되지만, 정부 간 거래는 제외된다.

참고문헌

OECD (2021), *OECD Economic Outlook, Interim Report March 202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4bfd999-en*.

OECD (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7957-en*.

그림 설명

2.29.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 브라질, 러시아는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G.20. 경제적 거래별 중앙정부 지출의 구조(2019년, 2020년)는 부록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29. 경제적 거래별 일반정부 지출의 구조 (2019년, 2020년, 2007년 대비 2019년)

총 지출 대비 비중(%)	중간 소비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 소득 (이자포함)			사회 급여			기타 경상지출			자본지출		
	2019	2020	2007-19년 변화	2019	2020	2007-19년 변화	2019	2020	2007-19년 변화	2019	2020	2007-19년 변화	2019	2020	2007-19년 변화	2019	2020	2007-19년 변화	2019	2020	2007-19년 변화
호주	19.6	..	1.2	22.5	..	-4.3	8.9	..	5.0	2.7	..	-1.4	28.6	..	-0.2	6.3	..	-0.8	11.4	..	0.5
오스트리아	12.9	11.8	0.6	21.7	19.7	0.3	3.0	9.2	0.0	2.9	2.3	-3.5	45.1	43.0	2.9	6.6	6.8	0.9	7.8	7.2	-1.3
벨기에	7.8	7.2	0.1	23.6	22.3	-0.1	7.2	8.5	1.4	3.8	3.3	-4.5	47.2	47.4	3.2	3.8	5.2	0.1	6.6	6.1	-0.2
캐나다	17.7	15.0	-0.5	29.9	25.0	0.2	2.8	8.4	0.3	7.0	5.4	-3.0	29.3	34.2	3.0	3.2	3.1	-0.1	10.1	8.9	0.1
콜롬비아	12.2	..	-3.0	16.0	..	0.3	0.2	..	-0.1	5.7	..	-3.7	27.8	..	0.1	28.9	..	5.1	9.3	..	1.3
체코	14.3	12.9	-2.8	24.2	23.6	3.7	5.4	6.4	1.8	1.7	1.6	-0.9	37.2	37.9	0.7	4.8	4.8	0.5	12.4	12.8	-3.0
덴마크	17.2	16.6	1.1	30.3	28.5	-0.6	3.3	5.5	-0.5	1.5	0.9	-1.8	34.5	33.3	1.5	6.3	6.4	-0.4	6.8	8.7	0.7
에스토니아	16.6	14.4	-0.3	29.5	28.0	1.7	1.2	3.5	-1.3	0.1	0.1	-0.4	34.5	34.5	6.0	4.5	5.0	-0.2	13.6	14.5	-5.5
핀란드	20.1	20.0	1.4	23.4	22.5	-3.5	2.0	3.1	-0.6	1.5	1.2	-1.5	39.7	39.8	4.2	4.6	5.1	-0.5	8.5	8.3	0.5
프랑스	8.9	8.7	0.0	22.0	21.4	-1.5	5.0	5.5	2.3	2.6	2.1	-2.5	45.7	46.8	2.0	7.1	7.3	0.6	8.6	8.3	-0.9
독일	11.7	11.9	2.3	17.4	16.6	0.3	2.0	4.1	-0.3	1.8	1.3	-4.4	54.3	53.1	0.6	4.8	4.9	0.8	8.1	8.0	0.8
그리스	9.8	8.6	-4.5	25.0	22.1	1.4	2.1	5.9	1.9	6.3	4.9	-3.3	45.1	39.2	8.5	3.3	3.1	-0.5	8.5	16.1	-3.6
헝가리	18.0	16.1	5.3	22.4	20.5	-0.4	3.1	3.3	0.3	4.9	4.6	-3.2	26.6	24.7	-9.2	7.1	7.5	1.6	17.9	23.1	5.5
아이슬란드	24.9	23.7	0.0	32.7	32.4	2.1	2.7	4.2	-0.7	10.1	8.1	-4.2	16.8	20.0	4.7	3.9	3.9	0.1	9.0	7.8	-2.1
아일랜드	14.4	14.1	0.7	26.4	23.9	-1.7	2.0	5.4	-0.6	5.1	3.5	2.3	36.2	37.5	3.4	4.3	4.1	-0.2	11.7	11.5	-3.9
이스라엘	22.1	..	-1.0	25.4	..	0.6	2.5	..	1.0	5.5	..	-6.3	23.0	..	3.4	11.9	..	0.8	9.7	..	1.4
이탈리아	11.6	11.0	0.9	19.9	18.3	-2.1	3.2	3.4	0.9	6.9	6.1	-3.2	46.7	47.1	6.1	4.5	4.5	-0.1	7.1	9.5	-2.4
일본	9.4	..	-0.4	13.9	..	-3.1	1.4	..	-0.1	4.2	..	-1.3	55.1	..	5.2	3.8	..	0.4	12.2	..	-0.8
한국	11.1	..	-1.8	20.4	..	-2.7	2.0	..	0.4	3.3	..	-3.2	32.5	..	12.1	11.2	..	0.2	19.5	..	-5.1
라트비아	16.6	14.5	0.2	28.3	27.1	-1.1	2.5	2.9	-0.1	1.8	1.5	0.7	31.6	31.4	9.3	6.4	7.5	-2.8	12.9	15.1	-6.3
리투아니아	12.7	10.5	-1.8	29.4	26.4	1.7	1.1	6.2	-1.4	2.5	1.6	0.6	40.2	39.1	8.3	4.7	4.8	0.9	9.5	11.4	-8.3
룩셈부르크	9.9	9.4	0.4	23.5	22.6	-0.4	2.5	2.5	-0.3	0.8	0.5	0.0	42.9	43.8	0.3	8.4	7.7	1.0	12.0	13.4	-1.1
멕시코	11.8	..	0.7	30.3	..	-6.6	1.5	..	-2.2	10.3	..	0.0	10.8	..	3.3	25.1	..	11.5	10.1	..	-6.8
네덜란드	14.0	12.9	-1.1	19.6	18.4	0.3	2.8	10.3	0.0	1.8	1.5	-2.8	49.7	45.3	5.4	3.9	4.2	-0.9	8.1	7.4	-1.0
뉴질랜드	15.4	..	-0.5	22.7	..	-1.2	4.0	..	3.2	3.0	..	-0.4	35.5	..	-1.3	5.6	..	-1.1	13.8	..	1.3
노르웨이	14.8	14.2	0.9	29.7	28.2	0.9	3.6	4.5	-0.1	1.0	0.8	-5.2	32.8	33.1	-0.2	5.9	6.2	0.8	12.2	12.9	2.9
폴란드	13.6	12.2	-0.7	24.7	22.4	0.3	1.2	7.9	-0.9	3.3	2.6	-1.8	41.2	38.4	3.9	4.8	4.7	-0.8	11.2	11.8	0.0
포르투갈	12.3	11.5	0.1	25.2	24.2	-4.2	0.9	3.7	-0.8	7.0	5.9	0.3	42.6	40.9	6.0	5.2	5.3	0.1	6.9	8.5	-1.5
슬로바키아	13.1	12.6	-1.1	24.0	23.9	3.8	2.3	2.8	0.0	2.9	2.6	-1.0	43.5	44.3	-1.1	4.7	4.4	0.3	9.5	9.3	-1.0
슬로베니아	14.1	12.7	1.1	26.1	24.3	1.9	1.7	7.6	-2.0	3.9	3.1	1.1	40.2	37.9	0.9	4.0	5.3	-0.4	9.9	9.0	-2.6
스페인	12.2	11.3	-0.6	25.7	24.0	0.3	2.4	3.7	-0.4	5.4	4.3	1.4	43.9	44.6	8.6	3.7	3.5	-0.5	6.7	8.7	-8.6
스웨덴	16.0	15.4	0.0	25.6	24.7	0.6	3.3	5.3	0.4	1.2	0.9	-2.5	32.2	31.6	-0.5	11.3	11.7	0.1	10.4	10.3	1.9
스위스	14.4	..	1.2	22.2	..	0.1	9.4	..	0.1	0.9	..	-2.7	33.4	..	-0.3	7.4	..	1.1	12.3	..	0.4
터키	13.8	..	..	24.5	..	..	4.8	..	..	7.2	..	..	35.0	..	..	3.1	..	..	11.6	..	..
영국	19.6	20.2	-0.3	22.3	19.9	-2.5	2.5	11.0	1.0	5.2	3.7	0.0	36.3	32.6	1.9	4.5	4.0	-1.6	9.6	8.6	1.5
미국	16.5	..	-1.6	24.4	..	-2.2	0.9	..	-0.1	10.6	..	-0.3	37.9	..	6.3	0.6	..	0.0	9.0	..	-2.1
OECD	14.1	..	-0.5	22.5	..	-1.5	2.3	..	0.3	6.3	..	-1.6	40.6	..	3.9	4.7	..	0.7	9.6	..	-1.4
OECD-EU	11.9	11.4	0.5	21.7	20.5	-0.5	3.1	5.2	0.6	3.4	2.8	-2.7	46.1	45.5	3.3	5.3	5.4	0.2	8.5	9.2	-1.4
브라질	8.0	..	..	20.3	..	..	0.6	..	..	12.8	..	..	39.5	..	..	15.7	..	..	3.1	..	..
코스타리카	8.2	..	0.0	30.7	..	-3.3	0.0	..	0.0	9.5	..	-0.4	11.4	..	2.9	29.3	..	1.3	10.9	..	-0.6
인도네시아	16.6	..	..	22.4	..	..	5.2	..	..	7.6	..	..	1.2	..	..	23.1	..	..	24.0	..	..
루마니아	15.4	14.0	-1.6	31.1	28.6	5.8	1.0	2.3	-3.0	3.2	3.4	1.4	32.7	31.8	6.5	4.2	5.2	-0.8	12.3	14.6	-8.3
러시아	16.7	..	..	27.1	..	..	1.5	..	..	2.3	..	..	29.4	..	..	8.9	..	..	14.2	..	..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와 OECD의 National Accounts Statistics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166

정부 수준별 수입 및 지출 구조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의 재원 확보 능력은 국가별 행정 구조에 따라 다르다. 2019년 OECD국가의 일반정부 수입 중 중앙정부의 수입은 절반(53.3%) 초과하였으며, 주정부 수입은 21.1%,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은 16.2%, 지방정부 수입은 9.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0 참고).

2007년~2019년 OECD 국가의 정부 수준별 수입 비중은 소폭 변화하였다. 평균적으로 일반정부 수입 중 중앙정부 수입의 비율은 0.2%p, 주정부 수입의 비율은 1.7%p 증가하였다. 반면, 지방정부 수입의 비율(1.4%p)과 사회보장기여금(0.5%p)의 비율은 감소하였다(온라인 그림 G.21 참고). 2019년 대비 2020년 OECD-EU 국가의 일반정부 수입 중 중앙정부 수입의 비율은 0.9%p, 지방정부 수입의 비율은 0.1%p 증가한 반면, 주정부 수입의 비율은 0.2%p, 사회보장기여금 수입의 비율은 0.8%p 감소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2020년 정부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한데서 기인한다.

한편, 정부 수준별로 다른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는 외교와 국방을 책임지는 반면, 지방정부는 교육과 보건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러나 국가의 행정 제도에 따라 정부 수준별 지출 책임성과 자율성에 차이가 있다. 2019년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지출 대비 중앙정부 지출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41.3%를 차지하는 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는 38.8%, 사회보장기여금은 19.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31 참고). 국가별로 차이가 있지만, 2007년~2019년 총 지출 대비 사회보장기여금 지출의 비중은 평균 1.2%p, 중앙정부 지출의 비중은 0.3%p 증가한 반면, 지방정부 지출의 비중은 1.5%p 감소하였다(온라인 그림 G.22 참고).

2019년~2020년 OECD-EU 국가의 총 지출 대비 중앙정부 지출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1.2%p)하였고, 주정부 지출의 비중은 소폭 증가(0.1%p)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 팬데믹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자 재정적 지원을 늘렸기 때문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수입과 지출'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연방제 국가), 스위스, 미국 등 9개 국가에만 적용된다. 호주, 한국, 터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OECD 국가의 자료에는 일반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하위 항목 간 구성을 보기 위하여 정부 간 이전수입과 지출이 제외된다.

정부 수입에는 조세(예: 소비세, 소득세, 부유세), 순사회보장기여금(예: 사회보험서비스 비용을 제외한 연금, 건강 및 사회보장기여금), 재화와 서비스 판매 수입(예: 정부의 시장 산출물), 보조금 및 기타 수입(예: 경상 및 자본보조금, 재산소득, 보조금)이 포함된다. 정부 총수입의 하위 항목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B에 제시되어 있다. 정부지출에는 중간 소비, 피고용자 보수, 보조금, 재산 소득(이자지출 포함), 사회급여, 기타 경상지출(경상이전)과 자본지출(자본이전 및 투자)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Kim, J. and S. Dougherty (eds.) (2020), *Ageing and Fiscal Challenges across Levels of Government*, OECD Fiscal Federalism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bbfbda8-en*.

Vammalle, C. and I. Bambalaite (2021), "Funding and financing of local government public investment: A framework and application to five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on Fiscal Federalism*, No. 3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 162d828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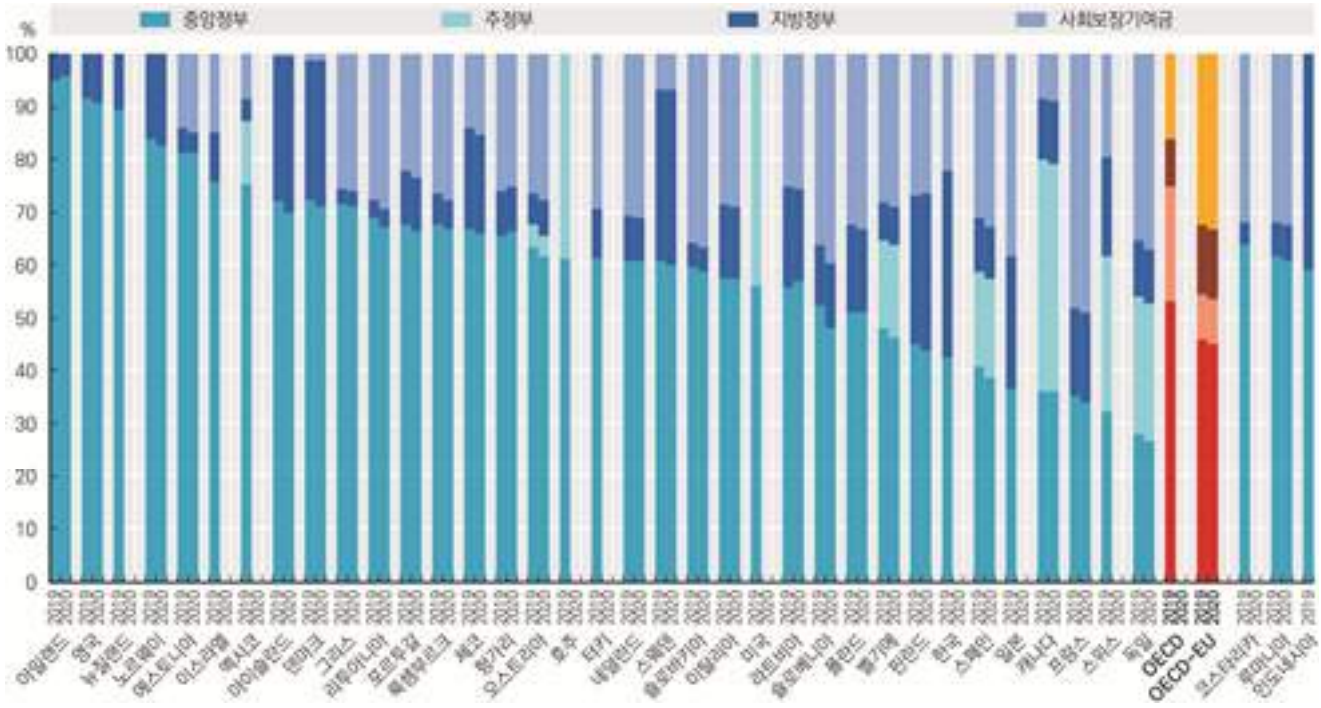
OECD (2020), *Pilot Database on Regional Government Finance and Investment: Key Findings*, OECD Publishing, Paris, *www.oecd.org/cfe/regionaldevelopment/REGOFI_ Report.pdf*.

그림 설명

칠레와 콜롬비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호주, 한국, 터키, 코스타리카,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OECD 국가의 자료에는 일반정부 총수입과 총지출의 하위 항목 간 구성을 보기 위하여 정부 간 이전수입과 지출이 제외된다. 일본의 정부 수준별 자료는 회계연도를 참조해야하며,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호주와 미국은 지방정부의 자료에 주정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G.21 and G.22. 2007년 대비 2019년 정부 수준별 수입과 지출의 변화는 부록 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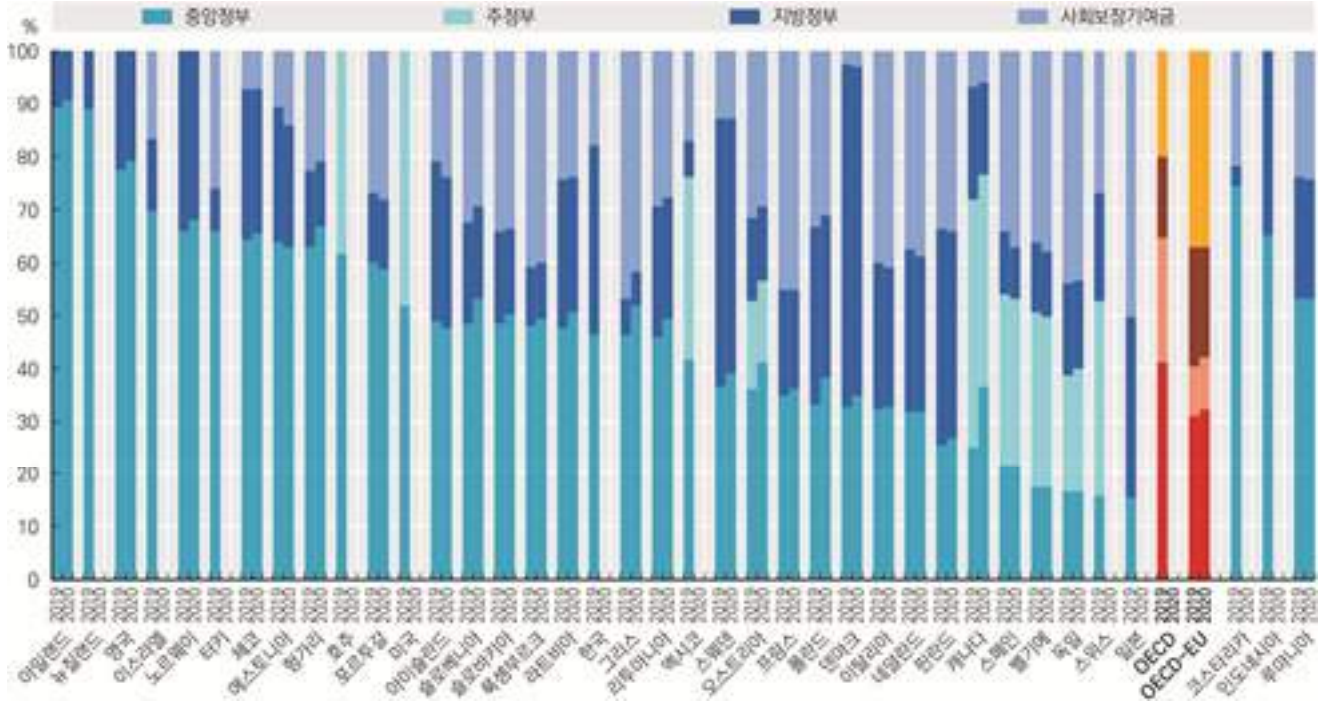
2.30. 정부 수준별 일반정부 수입의 비중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185

2.31. 정부 수준별 일반정부 지출의 비중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204

공공투자지출

공공투자는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킬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촉진하고 생산성을 강화할 수 있다. 공공투자는 일반적으로 교통 및 에너지 인프라, 건물(학교, 병원), IT시스템, 군사방어시설 등 유무형 자산을 구축하는데 활용된다. 공공투자 지출에는 기후 변화 행동을 지원하기 위한 녹색 에너지 인프라투자 등 장기적인 정책 집행에 소요되는 구매 지출이 포함되기도 한다.

201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GDP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중은 3.3%이다. GDP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는 헝가리(6.3%)인 반면, 가장 작은 국가는 멕시코(1.3%)이다. GDP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중이 큰 10개국 중 5개국은 동유럽 국가로 이는 유럽연합의 구조투자펀드의 영향이다. 2019년 헝가리의 공공투자지출의 비중이 큰 이유는 유럽연합의 구조투자펀드와 교통 및 통신 분야에 대한 국가적 투자 사업 때문이다. 2020년 OECD 26개국 중 25개국에서 GDP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중이 증가하였다(그림 2.32 참고). 이러한 결과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투자의 증가 또는 공공투자지출에 비해 GDP 감소율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 수준별 공공투자지출의 현황은 연방제 국가와 비연방제 국가 간 큰 차이가 있다. 2019년~2020년 OECD 27개국 중 20개국에서 중앙정부의 공공투자지출의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OECD 국가의 전체 공공투자지출 중 중앙정부 지출의 비중은 40%인 반면,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비중은 각각 30%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OECD 37개국 중 오직 9개국에서만 주정부가 공공투자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공공투자지출에서 중앙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를 초과하는 국가는 OECD 35개국 중 20개국에 달한다. 일반적으로 중앙집권화 된 국가(예: 터키, 헝가리, 영국)에서는 전체 공공투자지출 중 중앙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반면, 지방분권화된 국가(예: 캐나다, 벨기에, 멕시코, 스페인)에서는 주정부 및 지방정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그림 2.34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공공투자지출'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를 활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하며,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일반정부 투자에는 총자본형성 및 비생산 비금융 자산의 순취득이 포함된다. 총고정자본형성(고정투자)는 정부 투자의 주요 구성요소로 교통 인프라, 건물, 주택, 학교, 병원에 대한 투자를 의미한다. 2008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연구개발 지출 또한 고정투자에 포함된다. 정부의 자본지출에는 자본이전과 정부 투자가 포함된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으로 구성된다. 주정부는 OECD 국가 중 연방제 국가인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 멕시코, 스페인(준연방제 국가), 스위스, 미국 등 9개 국가에만 적용된다.

참고문헌

Fournier, J. (2016), "The positive effect of public investment on potential growth",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34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5e400d4-en*.

OECD (2019), *OECD Economic Surveys: Hungary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co_surveys-hun-2019-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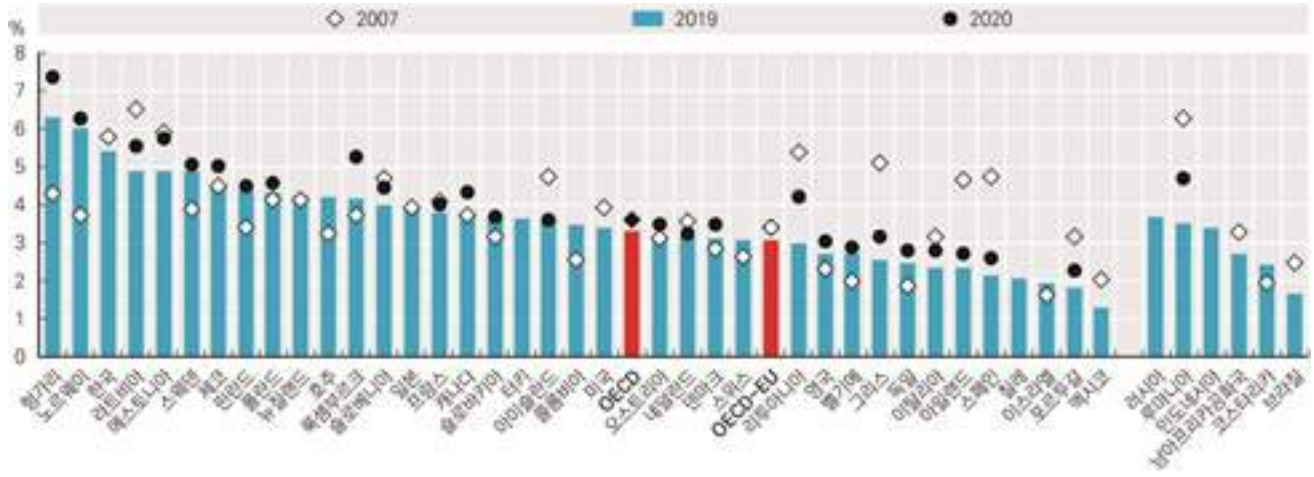
그림 설명

2.32 & 2.33. 칠레와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 브라질, 러시아는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34. 칠레와 콜롬비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호주와 미국은 지방정부의 자료에 주정부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호주는 정부가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지 않는다. 아일랜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영국, 미국은 중앙정부에 사회보장기금이 포함되어 있다. 일본은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G.23.(총투자 중 정부 투자의 비율)과 G.24.(기능별 일반정부 투자의 구조)의 자료는 부록 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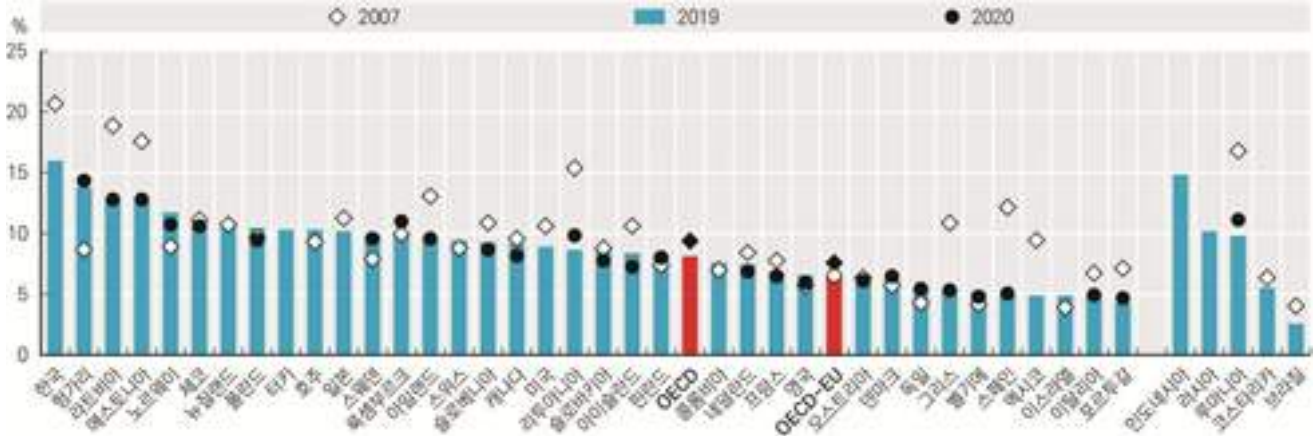
2.32. 공공투자지출의 GDP 대비 비율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2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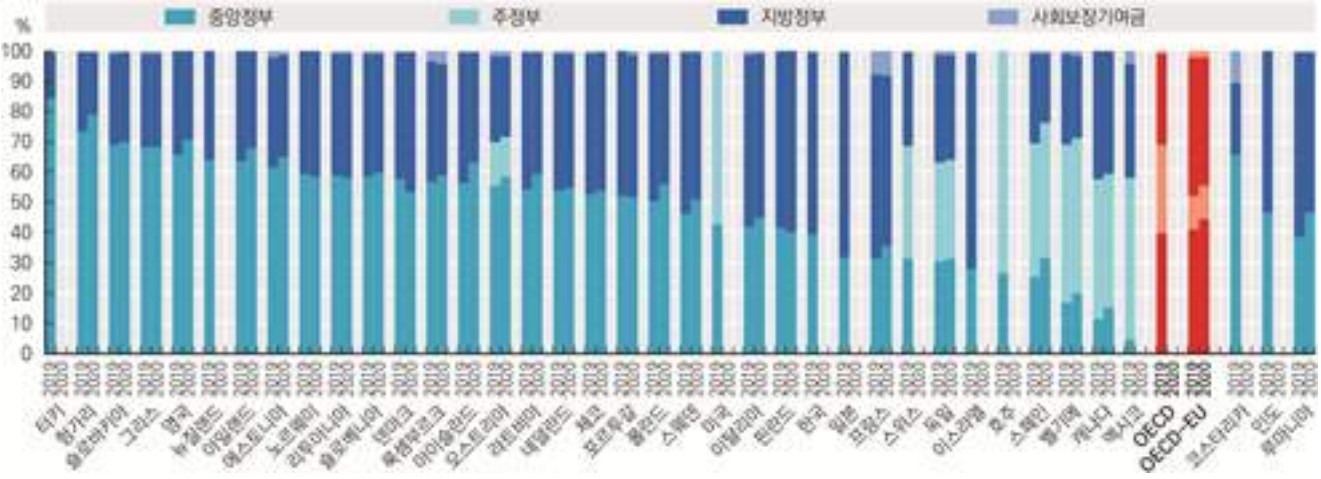
2.33. 전체 정부지출 대비 공공투자지출의 비율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242

2.34. 정부 수준별 공공투자지출의 비율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261

일반정부의 생산비용과 아웃소싱

정부의 생산비용은 정부가 활용하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며, 주로 임금과 재화와 서비스의 구매 비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사회복지 지출, 실업 급여, 기타 이전 지출은 구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생산 비용이 아니다. 아웃소싱은 민간 또는 비영리기관 등 정부 외부의 기관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기 때문에 생신비용의 일부분으로 포함된다.

2019년 OECD국가의 정부 생산비용은 GDP 대비 20.6%이다. GDP 대비 생산비용의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웨덴(29.7%), 핀란드(29.6%), 노르웨이(28.8%) 등의 북유럽국가로 이는 상대적으로 높은 비용뿐만 아니라 공적 자금으로 지원되는 서비스의 일반화된 공급을 반영한다. GDP 대비 생산비용의 비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11.8%)로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공서비스의 질과 민간서비스 공급자를 선택한 고소득층이 많기 때문이다. 2007년 ~2019년 대부분의 국가에서 GDP 대비 정부 생산비용의 비중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26개국에서는 GDP 대비 정부 생산비용의 비중이 증가하였고, 피고용자 보수와 재화와 서비스 비용이 증가하였다. 2020년 GDP 대비 정부 생산비용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한 국가는 영국(3.9%p)이다. 영국은 재화와 서비스 비용이 크게 증가(2.6%p)하였다(그림 2.35 참고).

생산비용의 구조는 OECD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2019년 OECD 36개국 중 25개국에서 총 생산비용의 44.5%를 피고용자 보수에 지출(GDP 대비 9.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가별 피고용자 보수 지출 규모의 차이는 국가의 평균 임금 수준 또는 정부 구조에 따라 반드시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덴마크(54.6%)와 네덜란드(29.8%)는 1인당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총 생산비용 중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중이 다르다. 또한, 아일랜드는 중앙집권 국가이고, 캐나다는 연방제 국가인 반면 총 생산비용 중 피고용자 보수 지출의 비중이 유사(아일랜드(48.4%), 캐나다(48.8%))하다. OECD 36개국 중 25개국에서는 정부가 직접 사용하고 자금을 지원하는 재화와 서비스 비용이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총 생산비용 중 재화와 서비스 비용의 비중은 42.7%이며, 이는 GDP의 8.8%에 해당하는 수치이다(그림 2.36 참고).

2019년OECD국가들은 아웃소싱에 GDP의 8.8%를 지출하였다(그림 2.37 참고). 아웃소싱의 65%는 정부가 직접 사용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 비정부 경제 주체와 계약(예: 정부 IT시스템)하는데 지출되었다. 한편 아웃소싱의 35%는 시민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공급(예: 보건의료, 주거, 교통, 교육)하는데 지출되었다(온라인 그림 G.25 참고). 2020년 아웃소싱의 비용은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20년 자료의 확보가 가능한 모든 OECD국가(26개국)에서 GDP 대비 아웃소싱의 지출이 증가(민간 계약 비용, 재화와 서비스 공급 비용 모두 증가)하였다(그림 2.37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생산비용의 개념 및 방법론' 자료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의 정부지출 분류에 기초하였다. 모든 OECD 국가들은 2008 국민계정체계를 적용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참고).

정부 생산비용에는 현금과 현물 보상을 포함한 피고용자 보수 비용에 피고용자가 직접 납부 혹은 고용주가 피고용자를 위해 대납한 사회보장기여금이 포함된다.

정부 아웃소싱에는 첫째, 정부가 직접 사용한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이는 중간 소비(정부 생산에 필요한 중간 재화의 조달)를 포함한다. 둘째, 정부가 자금을 지원한 재화와 서비스가 포함된다. 국민계정체계에 따르면 이는 정부가 시장의 공급자에게 지급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포함한다.

기타 생산비용에는 고정자본의 소비(자본의 감가상각)와 생산을 위한 기타 보조금을 차감한 생산세가 포함된다.

'일반정부의 생산비용과 아웃소싱'의 자료에는 정부 고용과 정부 생산에 필요한 중간 재화의 소비가 포함된다. 이하에 제시된 생산비용은 국민계정체계에서 산출한 값과 같지 않다.

참고문헌

OECD (2020), *OECD Economic Surveys: United Kingdom 202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f684241-en*.

OECD (2019), *OECD Economic Surveys: Sweden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510039b-en*.

그림 설명

일본, 브라질, 러시아는 2019년 자료 대신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2.35. 칠레와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2.36 & 2.37.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고, 터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2.37. 아이슬란드, 멕시코, 미국, 인도네시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국가계정에는 일반정부에 의해 자금이 지원된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별도의 계정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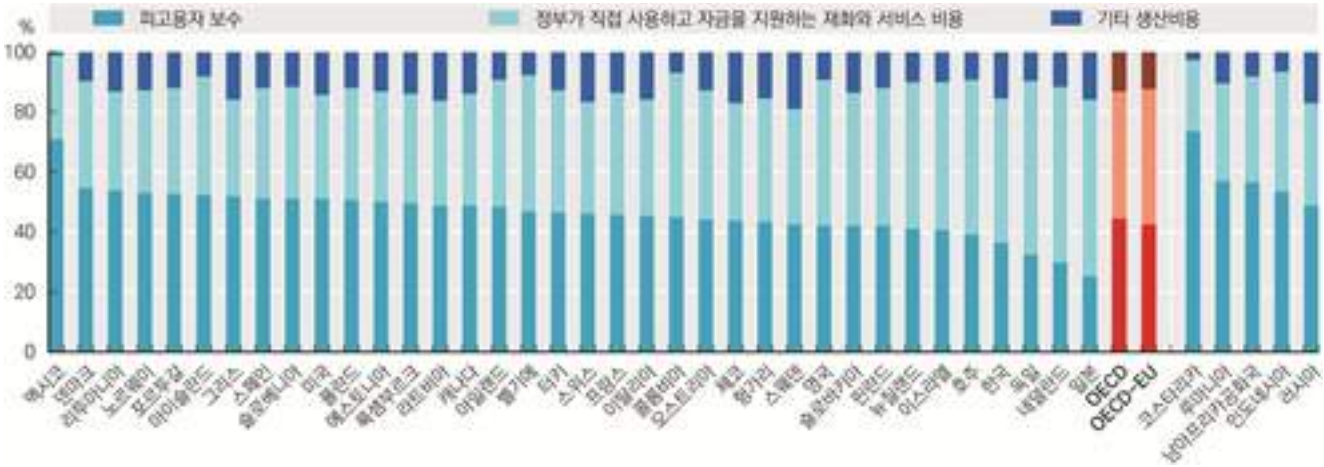
G.25. 정부의 아웃소싱 지출 구조(2019년)는 부록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2.35. GDP 대비 생산비용의 비율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와 OECD의 National Accounts Statistics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280

2.36. 생산비용의 구조 (2019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와 OECD의 National Accounts Statistics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299

2.37. 일반정부의 GDP 대비 아웃소싱 지출의 비율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에서 제공하는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와 OECD의 National Accounts Statistics를 결합하여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318

3. 공공 고용

일반정부 고용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고용
중앙정부 인력의 연령분포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
정치의 성평등
정치의 청년대표성
사법의 성평등

일반정부 고용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부문 근로자가 수행하는 역할(예: 필수적인 서비스의 공급, 시민의 건강 및 안전, 경제적 지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공공부문 근로자들은 코로나19 회복의 핵심 주체이며, 백신접종 전략의 전달, 경제 및 사회 회복 계획의 설계와 실행 등에 관여한다. 그러나 OECD 국가마다 공공부문의 역할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공공고용의 상대적 규모에 차이가 존재한다. 정부는 공공서비스를 공공기관을 통해 직접 공급할 것인지, 아니면 민간 또는 비영리 부문과의 다양한 파트너십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대다수의 의료인, 교사, 응급의료 종사자 등 특정 전문가들을 정부가 직접 고용하는 국가들이 있는 반면, 민간부문 혹은 비영리조직이 고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OECD 국가별 공공부문 고용규모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와 같은 북유럽 국가의 일반정부 고용규모는 30%에 육박하는 가장 높은 수준인 반면, 일본(6%)과 한국(8%)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2007-08년 금융위기와 이에 따른 긴축정책으로 인해 일반정부 고용의 비중은 2007년 전체 고용의 18.2%에서 2019년 17.9%로 줄어들었지만, 2007년 이후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큰 폭의 하락을 기록한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이며, 이 두 국가는2007-2019년 사이 일반정부 고용의 비중이 3%p 감소하였다.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스페인(2.1%p), 에스토니아(2%p), 멕시코(1.3%p), 슬로베니아(1.2%p), 룩셈부르크(1%p), 노르웨이(1.1%p)의 일반정부 고용비중은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2007~2019년 사이 23개 OECD 국가에서 일반정부 고용이 증가했다. OECD 국가의 평균 총 고용 증가율은 일반 정부 고용 증가율을 약간 상회하며,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정부의 고용 비중은 0.3%p 감소하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인 국가는 영국과 이스라엘이며, 영국에서는 총고용이 연평균 0.9% 급증하면서 동시에 일반정부 고용은 연평균 0.6% 감소하였다. 한편, 이스라엘은 총고용이 매년 2.6%씩 증가하였다. OECD 국가 중 10개국만이 일반정부 고용이 총고용보다 빠르게 증가했으며, 스페인(1.24%p), 멕시코(0.94%p), 룩셈부르크(0.88%p)에서 일반정부 고용율과 총 고용율 간 가장 큰 차이를 기록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일반정부 고용'의 자료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를 이용하였다. 국민계정체계(SNA)란 국가 회계에 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 정의, 분류 및 규칙을 의미한다. 일반정부 고용의 범위는 중앙정부, 주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모든 고용을 포함한다. 또한 각 정부의 핵심 부처, 기관, 부서, 정부 당국에 의해 통제되는 비영리기관을 포함한다. 이때 고용의 규모는 해당 기관들이 직접 고용한 총 인원 수를 의미한다. 총고용은 국민계정체계의 생산범위(production boundary)에 한정되므로 무급고용은 제외되며, 정해진 짧은 기간 동안 유급고용 상태에 있거나 자영업자인 경우에만 포함된다.

참고문헌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20en/instruments/OECD-LEGAL-0445.

OECD (2017), *Skills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072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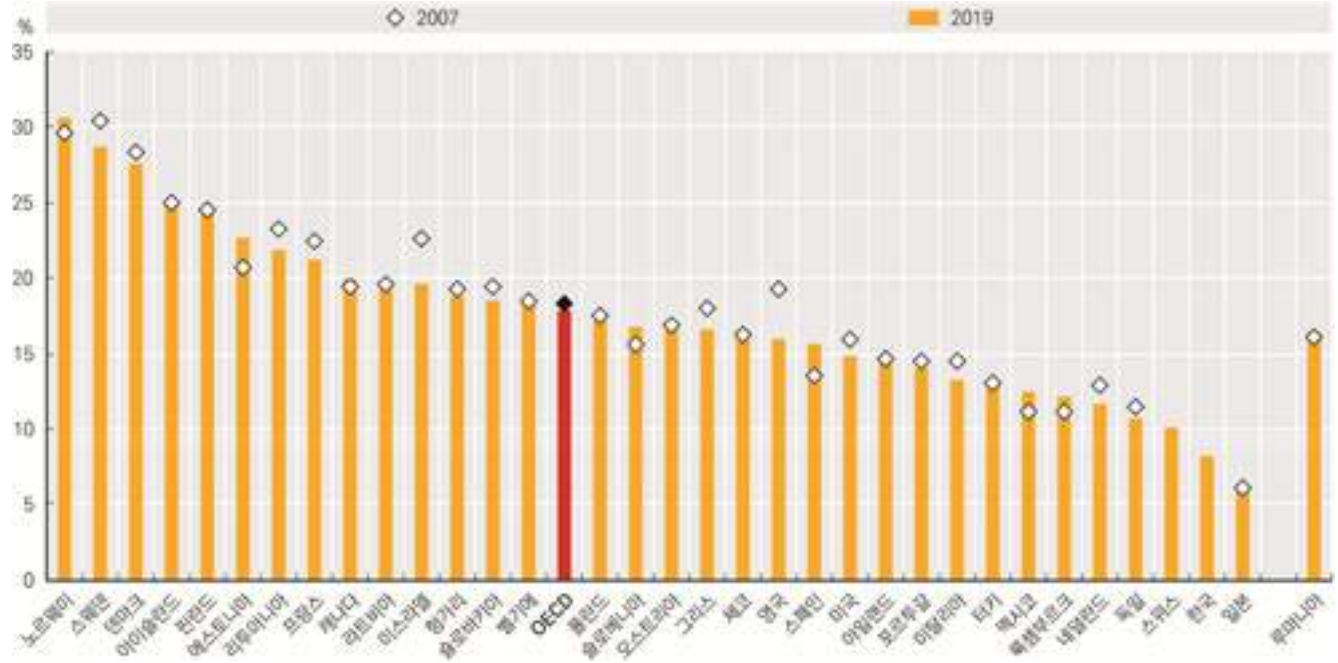
OECD (2016), *Engaging Public Employees for a High-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7190-en.

그림 설명

3.1. 총 고용은 국내 고용을 의미한다. 호주, 칠레, 콜롬비아, 뉴질랜드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한국과 스위스의 자료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의 자료는 2019년이 아닌 2018년의 자료이며, 일본은 2019년이 아닌 2017년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아이슬란드와 미국의 자료는 2007년 자료 대신 2008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3.2. 호주, 칠레, 콜롬비아, 한국, 뉴질랜드, 스위스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스위스의 자료는 2017-19년이 아닌, 2007-18년 자료이다. 일본의 자료는 2007-2019년 자료이며, 아이슬란드와 미국의 자료는 2007-19년이 아닌 2008-19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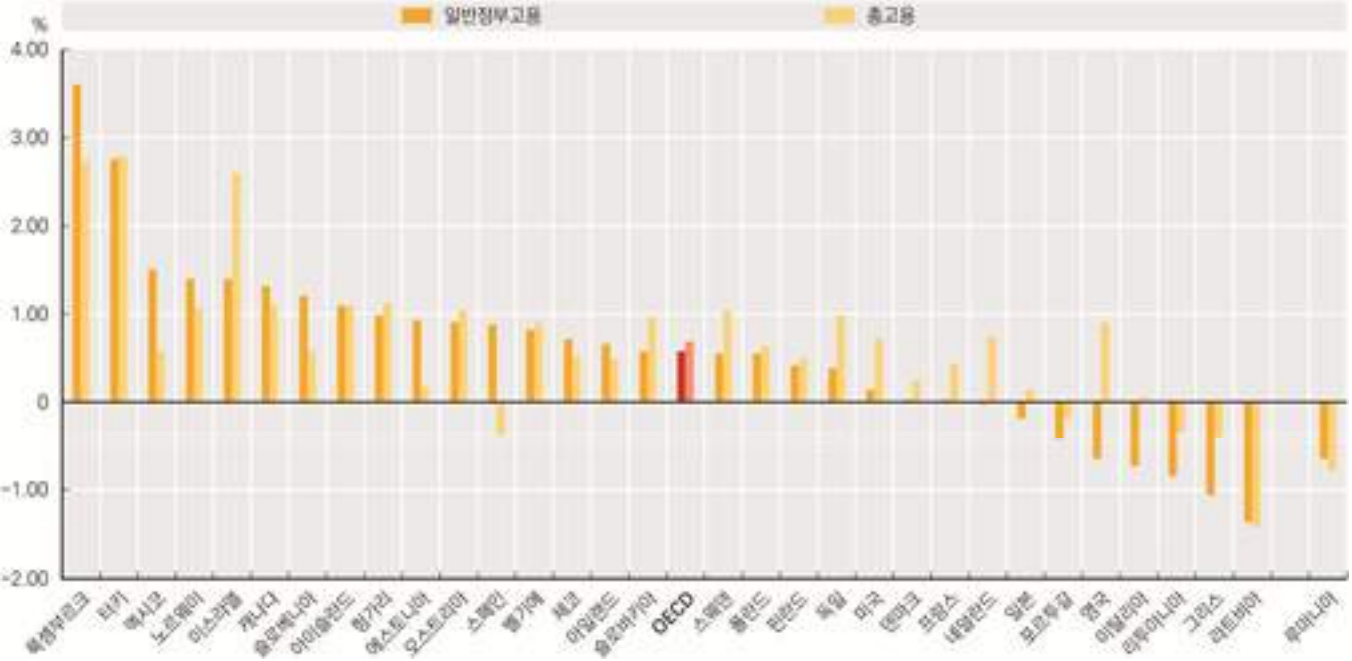
3.1. 총 고용 대비 일반정부 고용 (2007년, 2019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 통계(ILOSTAT)에서 국민계정체계의 부문별, 하위 부문별 공공 고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337

그림 3.2. 일반정부 고용 및 총 고용의 연간 증가율 (2007-19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아이슬란드, 일본, 한국, 멕시코, 스위스, 터키, 미국은 국제노동기구 통계(ILOSTAT)에서 국민계정체계의 부문별, 하위 부문별 공공 고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356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고용

지방정부의 고용 규모는 행정의 분권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고용 규모가 크다는 것은 공공서비스 제공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이 크다는 것을 시사한다. 분권화는 지역수요와 우선순위에 대한 정부의 대응성을 증가시킨다는 장점이 있으며, 국가 내 서비스 전달의 변화를 가져올 수도 있다.

2019년 기준OECD 17개국에서는 지방정부의 고용규모가 전체정부 고용규모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벨기에, 독일, 스페인, 스위스와 같은 연방국가는 지방정부 고용의 비중이 가장 큰 국가들이며, 반대로 아일랜드, 이스라엘, 터키와 같은 단방 국가는 대부분의 정부 인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과 같이 단방국가이면서 분권화된 국가에서는 중앙정부 고용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2013-2019년 사이OECD 19개국에서 중앙정부 고용규모가 증가하였다. 또한 이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국가들에서 중앙정부 고용규모의 연평균 성장률은 0.6%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성장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터키(연 3.3%), 룩셈부르크(연 2.7%), 영국(연 2.4%)으로 나타났으며, 에스토니아(연 3%), 스페인(연 1.2%), 리투아니아(연 0.9%)는 중앙정부 고용규모가 가장 빠르게 감소한 국가로 나타났다. 영국의 경우, 2013년 이후 지방정부 고용규모가 감소하여, 해당 기간 동안 일반정부의 직원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로인해 중앙정부 고용규모만 증가하였다. 이러한 중앙정부 수준에서의 고용규모 변화는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데, 예를 들어 정부인력의 연령구성, 역량강화, 정치적 결정 또는 행정 개혁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국제노동기구 통계(ILOSTAT)의 자료에 기반하여,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의 고용을 포함하였다. 일반정부는 중앙정부, 지방정부로 구성되며, 지방정부에는 주정부(state government)와 지방정부(local government)를 포함한다. 사회보장기금에는 중앙, 주, 지방의 모든 기관에서 사회적 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주요 활동들이 포함된다.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사회보장기금의 고용규모는 중앙정부, 지방정부의 고용 규모와 구분되어 있다. 그러나 프랑스, 독일, 멕시코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의 고용 규모가 매우 작다. 총고용은 일반정부, 사회보장기금에 직접 고용된 총 인원 수를 의미한다. 준연방제 국가인 벨기에, 독일, 멕시코, 스페인과 스위스, 미국은 연방국가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참고문헌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20en/instruments/ OECD-LEGAL-0445.

OECD (2017), *Skills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8072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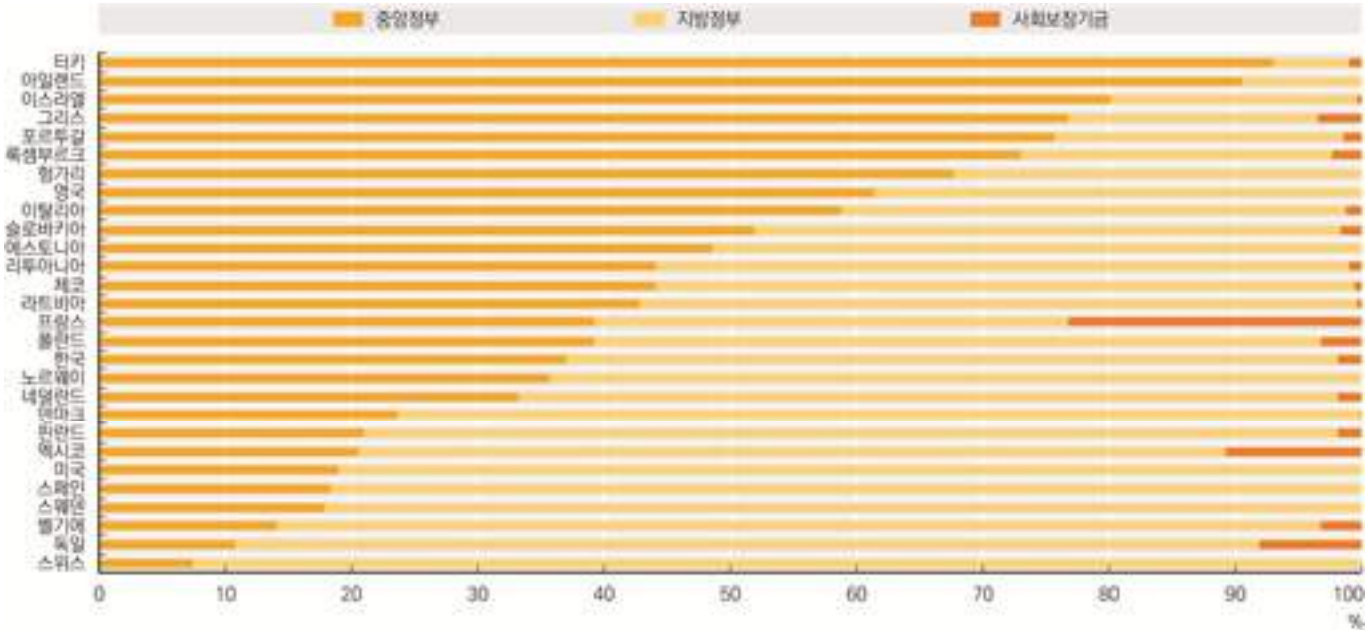
OECD (2016), *Engaging Public Employees for a High-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7190-en.

그림 설명

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아이슬란드, 일본, 뉴질랜드, 슬로베니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에스토니아, 그리스, 스페인의 자료는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에서는 사회보장기금의 고용 규모를 별도로 조사하지 않았다. 폴란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비영리기구(NPIs)의 고용 규모를 포함하고 있다.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폴란드, 포르투갈, 스위스는 2018년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라트비아, 스페인의 자료는 2017년 자료를 활용하였다.

3.4. 한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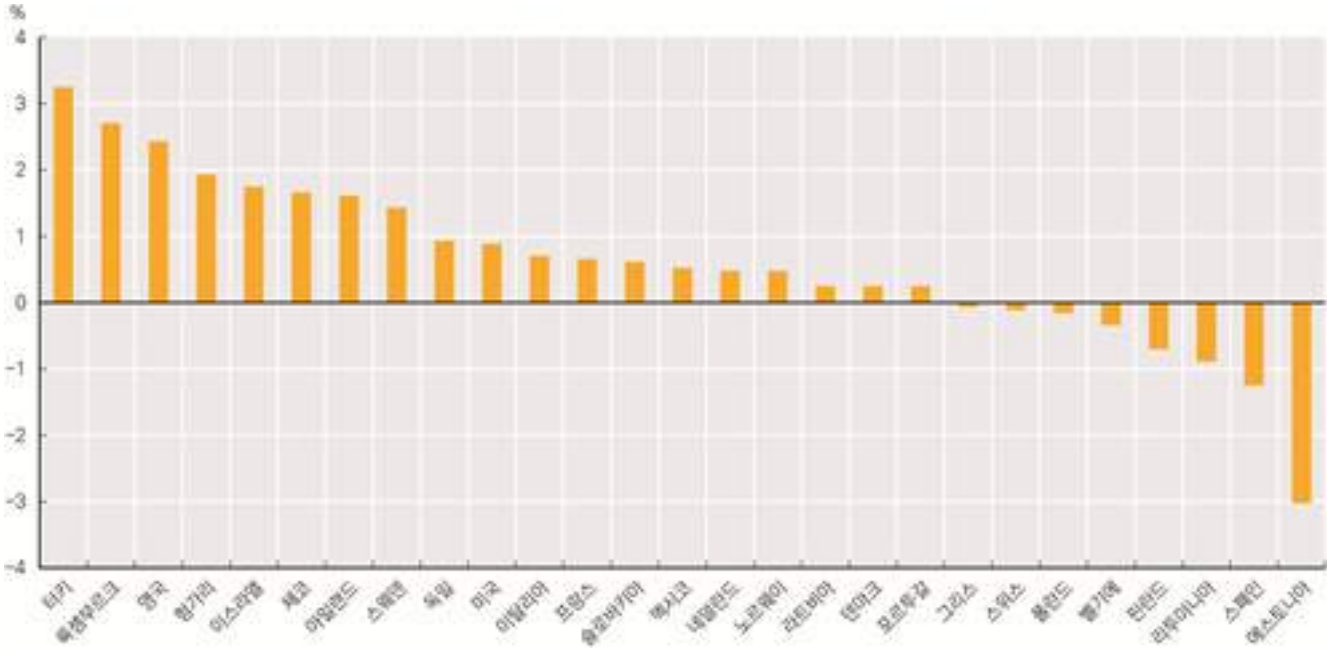
3.3. 정부수준별 일반정부 고용 규모 (2019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국민계정체계의 부문별, 하위부문별 공공 고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375

3.4. 중앙정부 일반 공무원의 연평균 증가율 (2013-19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국민계정체계의 부문별, 하위부문별 공공 고용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394

중앙정부 인력의 연령분포

중앙정부 고용인력의 연령 분포는 현재와 미래의 인력관리 문제에 영향을 미친다. 전체 인력 중 고령화 비율이 높은 중앙정부는 이들의 풍부한 경험을 활용할 수 있지만, 노동력의 세대교체 및 차세대 공무원을 구성과 관련된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젊은 인력을 주로 보유한 중앙정부는 젊은 직원들에게 매력적인 곳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경력 개발과 경험이 많은 직원을 유지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든, 여러 세대가 분포한 공공 서비스 인력은 세대 간 작업반,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장기근속 인력의 경험과 경력개발 중인 젊은 인력을 결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이는 정책, 프로그램, 서비스의 설계가 다양한 관점을 반영하게 되어 모든 연령 집단에 걸쳐 시민의 수요에 더 잘 반응하도록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중앙정부는 노동인력 개별집단의 특성과 선호도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업무방식을 검토하고 인재관리전략의 개발을 탐색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의 중앙정부 내 55세 이상 인력의 비율은 2015-20년 사이 평균 25%에서 26%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국가 간에 큰 차이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55세 이상 중앙정부 인력의 비중이 35%에서 46%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그리스에서는 27%에서 37%로 증가하였다. 이탈리아는 2020년 중앙정부 인력의 48%가 55세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 노동인력의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로 나타났다. 반면, 이스라엘(23%→19%), 한국(12%→9%)과 같은 몇몇 OECD 국가에서는 고령 노동인력의 비중이 감소하였다. 모든 OECD 국가에서 중앙정부의 인력이 고령인 것은 아니며, 호주, 헝가리, 이스라엘,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터키에서는 55세 이상 노동인력의 비중이 20% 미만으로 나타났다(그림 3.5)

젊은 노동인력(18~34세) 비중은 2015-2020년 사이 1%p 증가하였으며, 중앙정부 인력 중 1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동안 독일(30%→17%), 리투아니아(26%→16%), 라트비아(30%→21%)를 포함한 일부 국가에서 젊은 노동인력의 비중이 감소한 반면, 한국(9%→21%), 덴마크(19%→29%), 이스라엘(26%→33%)에서는 젊은 노동인력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은 터키, 헝가리와 함께 젊은 노동인력(18-34세)이 중앙정부 인력의 30%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중 하나이다(그림 3.6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중앙정부의 직급별, 성별 자료는 2020년 OECD 중앙정부/연방정부 인력구성 조사를 기반으로 수집되었다(2020년 1월 1일 기준). 대다수의 응답자는 중앙정부 인적자원관리(HRM) 부서의 고위관료이며, 해당 자료는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의 관행을 보여준다. 해당 조사는 모든 OECD가입국(아이슬란드 제외)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루마니아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며,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해당 자료는 각 국가별로 공공서비스 및 중앙정부 조직에 대한 정의 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간 비교분석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또한 "한눈에 보는 정부 2017"의 자료와 비교할 시, 국가별 응답 범위와 수가 다르기 때문에 시계열적 비교 또한 주의해야 한다.

참고문헌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20en/instruments/OECD- LEGAL-0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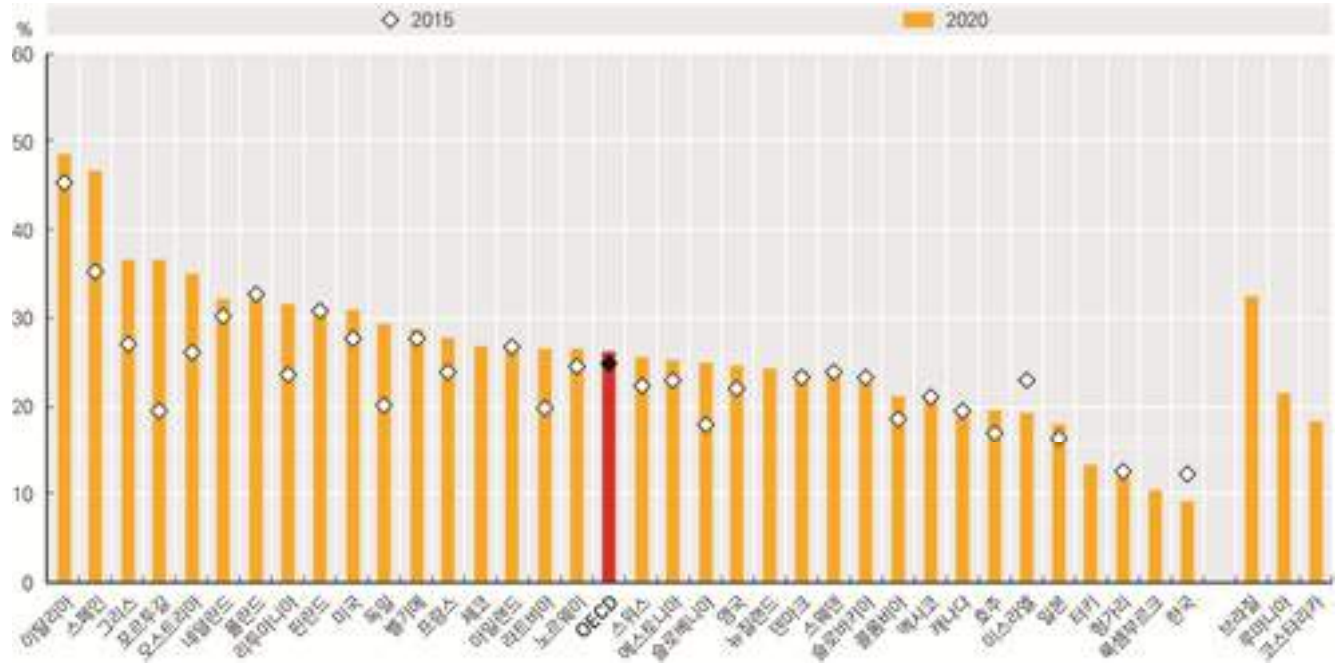
Paccagnella, M. (2016), "Age, ageing and skills: Results from the Survey of Adult Skill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13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jm0q1n38lvc-en.*

그림 설명

프랑스에 대한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며, 헝가리에 대한 자료는 2018년 기준이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폴란드에 대한 자료는 2019년 12월이고, 덴마크와 핀란드의 자료는 2020년 2월이다. 콜롬비아의 자료는 2020년 3월 기준이며, 한국의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이다. 헝가리와 룩셈부르크의 2020년 연령대 구분은 18-35세와 56세 이상으로 구분되었다. 폴란드의 2020년 연령구분은 30세 이하, 50세 이상으로 나뉘어졌다. 폴란드의 2015년 자료는 51세 이상이 대상이다. 에스토니아에 관련된 자료는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장관, 대통령, 주 감사관(state controller)와 같은 고위 공직자는 포함되지 않았다.

그리스와 영국의 자료는 2016년의 자료이며, 이탈리아와 프랑스의 자료는 2014년의 자료이다. 에스토니아와 스웨덴은 2015년의 정규직 인력을 대상으로 한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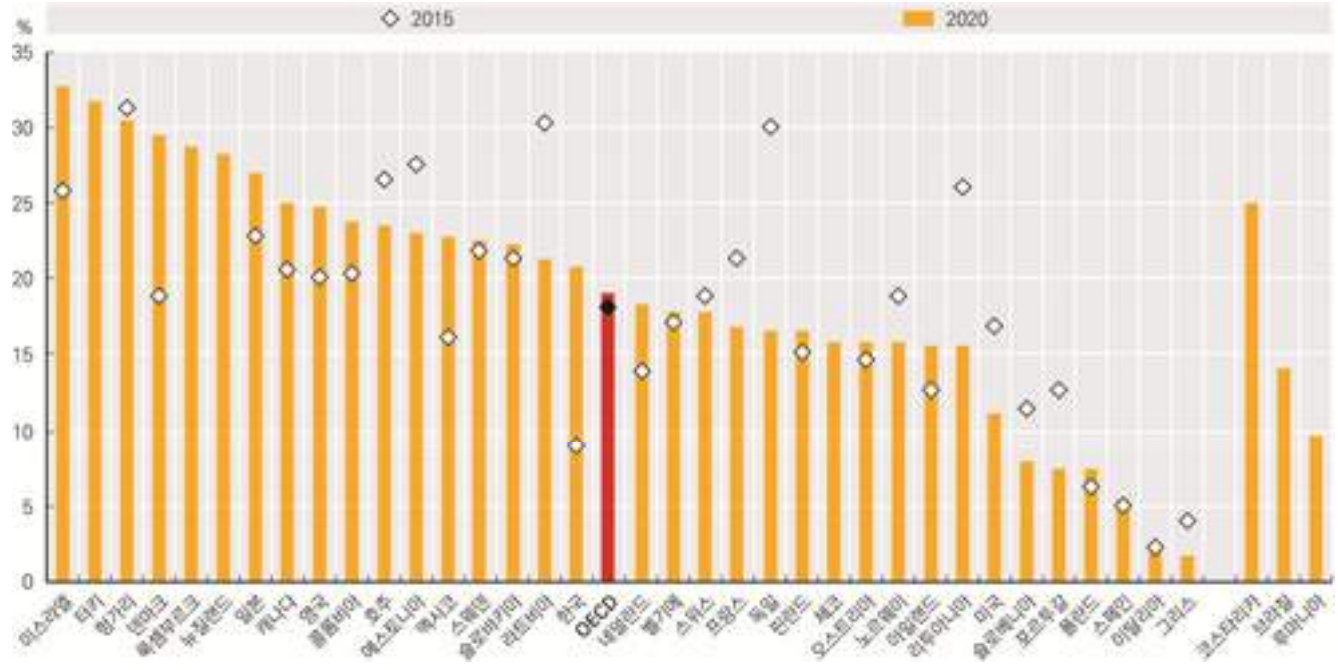
3.5. 55세이상 중앙정부 공무원의 비율 (2015년,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th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413

3.6. 18-34세 중앙정부 공무원의 비율 (2015년,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th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432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

다양하고 포괄적인 인력구성은 혁신을 촉진하고 공공서비스의 핵심 가치를 제고하여 정부성과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Nolan-Flecha, 2019). 이러한 공공부문의 인력구성은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사회적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개선하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다. OECD의 공공서비스 리더십과 역량, 그리고 성평등에 관한 권고안은 다양성 있는 직장을 구축하고 과소대표되는 집단도 동등하게 공직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2019년 OECD 국가의 공공부문 내 여성 인력의 비율(평균 58%)은 총고용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평균 45%)보다 높았으며, 일본, 룩셈부르크, 터키를 제외한 모든 OECD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에서는 공공부문 내 여성인력의 비중이 총고용에서 여성인력이 차지하는 비중보다20%p 이상 높았다(그림 3.7). 차이의 이유 중 하나는 교사 또는 간호사와 같은 직종이 과거부터 "여성의 일자리"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많은 OECD 국가에서는 성별에 따른 직업 차별을 없애는 한편, 성적 고정관념을 타파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OECD, 2019b). 한편, 중앙정부 내 고위직에서 성평등을 달성한 국가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으며(그림 3.8과 그림3.9), 평균적으로 고위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은 37%인 것으로 나타났다. 라트비아, 스웨덴, 그리스는 고위직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수준이지만(53-56%), 일본(4%)과 한국(9%)은 가장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 대다수에서 중앙정부 내 다른 직위에 비해서 중간·고위 관리직의 여성 인력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 여성이 리더십 사다리(leadership ladder)를 오르내리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추정된다. 반면, 스웨덴에서는 중앙정부내 중간관리직과 고위관리직 내 여성인력의 비율이 다른 직위 내 여성인력의 비율보다 높았으며, 콜롬비아, 그리스, 라트비아에서는 중간 관리직 내 여성의 비율이 고위직과 그 외 다른 직위 내에서 여성 인력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났다(그림 3.8).

2015년 이후 프랑스, 멕시코,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경우, 고위직 내 여성인력의 비율이 감소하였지만, 이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위직 내 여성인력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특히 슬로바키아(15%p), 스페인(14%p), 스웨덴(11%p)에서 증가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그림 3.9). 다양성 전략을 개발하거나 여성을 위한 고용목표를 설정하는 등 고위직에서의 성적 균형을 목표로 하는 정책은 더 많은 여성들을 고위직에 참여하게 할 것이며, 나아가 성인지적 정책을 결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공공부문 고용의 성평등' 자료는 국제노동기구 통계(ILOSTAT)를 통해 수집하였으며,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노동력 조사(Labour Force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공공부문 고용의 범위는 일반정부를 비롯해 정부가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기업과 기관들을 모두 포함한다. 총고용은 고용의 유형과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해당 기관들이 직접 고용한 총 인원 수를 의미한다. 직위별 및 성별별 자료는 2020년 중앙정부/연방정부 인력구성 조사(2020년 1월 1일 기준 자료)에 기반해 수집하였으며, 대다수의 응답자는 중앙정부 인적자원관리(HRM) 부서의 고위관료이며, 해당 자료는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의 관행을 보여준다. 해당 조사는 모든 OECD가입국(아이슬란드 제외)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루마니아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며, 칠레와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해당 자료는 각 국가별로 공공서비스 및 중앙정부 조직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으므로 국가 간 비교분석 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직급에 대한 정의는 부록 D를 참조하며, 그림 3.8의 다른 직책에 대한 자료는 고위직 및 중간직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중앙정부 공무원의 직위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Nolan-Flecha, N. (2019), "Next generation diversity and inclusion policies in the public service: Ensuring public services reflect the societies they serve",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 10.1787/51691451-en.*

OECD (2019a),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20en/instruments/OECD-LEGAL-0445.*

OECD (2019b), *Fast Forward to Gender Equality: Mainstreaming, Implementation and Leadership*,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g2g9faa5-en.*

그림 설명

그림 3.7 오스트리아, 체코,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및 스위스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덴마크, 독일, 라트비아는 행정데이터(administrative records)와 사업체 자료(establishment survey)를 활용하였다. 헝가리, 룩셈부르크, 영국의 자료는 2018년 자료이며, 호주와 터키의 자료는 2017년 자료이다.

그림 3.8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의 중간관리자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기 때문에 이들 국가의 '그 외 직위'는 고위직 관리자를 제외한 모든 직위를 나타낸다. 헝가리의 중간직 관리자에 대한 자료는 중간직 관리자 뿐만 아니라 고위직 관리자까지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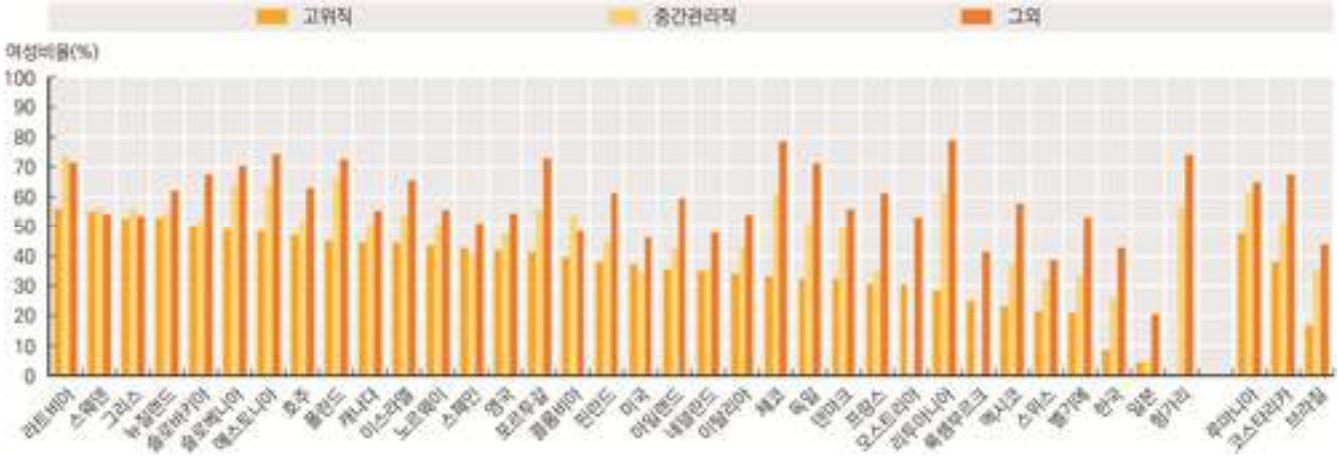
3.8 & 3.9 헝가리의 자료는 2018년 자료이며, 프랑스의 자료는 2018년 12월 31일 기준이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슬로베니아, 폴란드의 자료는 2019년 12월을 기준으로 하며, 덴마크와 핀란드의 자료는 2020년 2월을 기준으로 한다. 콜롬비아의 자료는 2020년 3월 기준이며, 한국의 자료는 2020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칠레, 아이슬란드,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으며, 오스트리아의 고위직 관리자는 부록D에서의 D1의 정의만을 참조한다.

3.7. 공공부문 고용 및 총고용의 성평등 (2019년)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 *ILOSTAT* (database), *Employment by sex and institutional sector*. Data for Israel, Italy, Korea and Portugal were provided by national authoriti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4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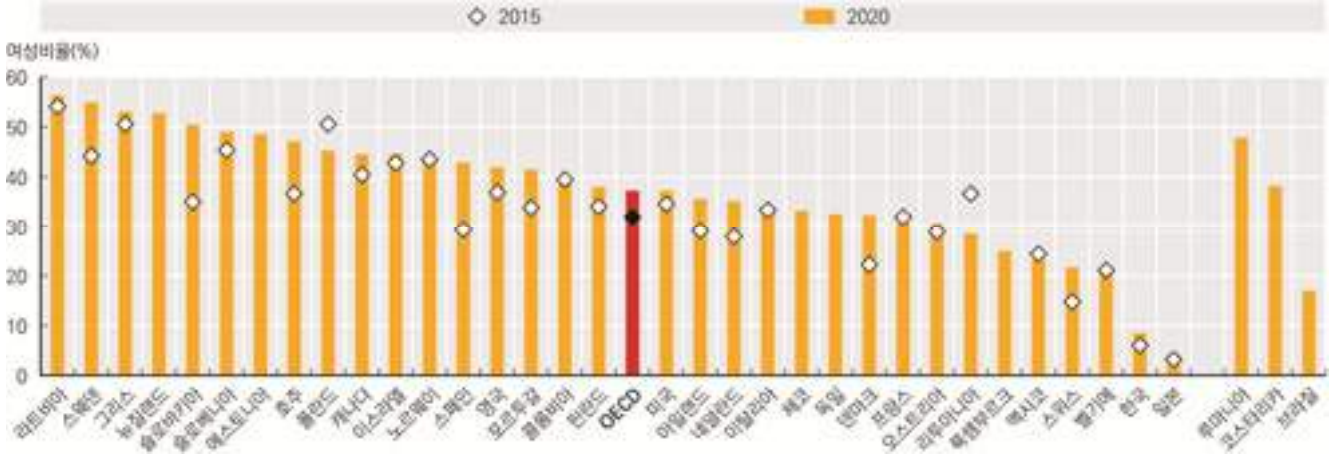
3.8. 중앙정부 직위별 성평등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th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470

그림 3.9. **중앙정부 내 고위직의 성평등(2015년,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th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OECD (2016), *Survey on th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489

정치의 성평등

행정부와 의회의 리더십이 성별을 포함한 인구특성을 반영할 경우, 공정성과 대응성을 제고할 수 있다. 정치에서 성평등 달성은 성별에 따른 의석과 직위의 균등한 할당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정치의 성평등은 단순한 의석과 직위의 균등한 할당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지닌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업무환경을 마련하는 것과 동시에 의회의장이나 위원회 의장같은 직위에 대해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성주류화(gender-mainstreaming) 정책 및 맞춤형 정책을 통해 정치 참여에 대한 사회경제적인 장벽을 제거해야 한다.

약 10년 전 OECD 국가의 하원 또는 단원제 의회 내 여성의원의 비중은 평균 26%였으나, 2021년에는 평균 31.6%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원 비중은48% 이상인 멕시코 및 뉴질랜드부터 20% 미만인 콜롬비아, 헝가리, 일본, 한국, 터키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2017-2021년 사이 프랑스, 뉴질랜드, 라트비아는 하원 및 단원제 의회 내에서 여성의원의 비율을 13%p 증가시켰으며, 그 결과 뉴질랜드는 역사상 가장 다양성이 큰 정부를 구성하였다(IPU, 2021). 반면 같은 기간 동안 슬로베니아(-10%p), 아이슬란드(-7.9%p), 독일(-5.5%p)에서는 여성의원의 비율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성 균형 내각은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지표라고 할 수 있다. 2021년 OECD 국가의 연방/중앙정부 여성장관의 평균 비중은 34%이며, 이는 2017년에 비해 6%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의 여성장관의 수는 크게 증가하였으며, OECD 16개국에서는 전체 장관직의 40%를 여성이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스페인, 핀란드, 프랑스의 경우 여성장관의 비중이 50% 이상으로 보고됐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미국의 경우 29%p 이상의 여성장관의 비중이 증가하는데, 미국의 경우 인적다양성을 반영하겠다는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한편, 2017년 이후 헝가리, 한국, 포르투갈의 내각 내 여성장관의 비중은 18%p 증가하였다. 이렇듯 전체적으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고 2017-2021년 사이 슬로베니아(-31.3%p), 폴란드(-17.9%p), 에스토니아(-14.3%p)에서는 여성의 내각 참여비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여성 의원'에 관한 자료는 양원제 하원 및 단원제 의회를 대상으로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PARLINE 자료를 활용하였다. 해당 자료는 2021년 1월 1일, 2017년 1월 1일, 2012년 10월 31일 기준으로 수집되었으며, 자료에서의 백분율은 전체 의석 중 여성의원의 비중을 나타낸다. 성별할당제에는 크게 세가지 유형이 존재하며, 법적 구속력에 따라 후보를 할당하는 후보할당제, 의석을 보장하는 여성의석보장제, 마지막으로 정당이 자체적으로 당헌 당규에 의해 자발적으로 여성후보자를 할당하는 자발적 정당 할당제가 있다.

내각의 '여성 장관'에 관한 자료는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여성의 정치 참여(Women in Politics)" 데이터를 활용하였고, 여성 장관의 현황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된다. 여성 장관에는 부총리 및 장관 그리고 장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총리, 정부 수반이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부통령, 정부 수반, 공공기관의 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IPU (2021), *Women in Parliament in 2020: The Year in Review*, Inter-Parliamentary Union, www.ipu.org/women-in-parliament-*2020*.

OECD (2019), *Fast Forward to Gender Equality: Mainstreaming, Implementation and Leadership*,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g2g9faa5-en*.

OECD (2018), Toolkit for Mainstreaming and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OECD website, *www.oecd.org/gender/governance/tool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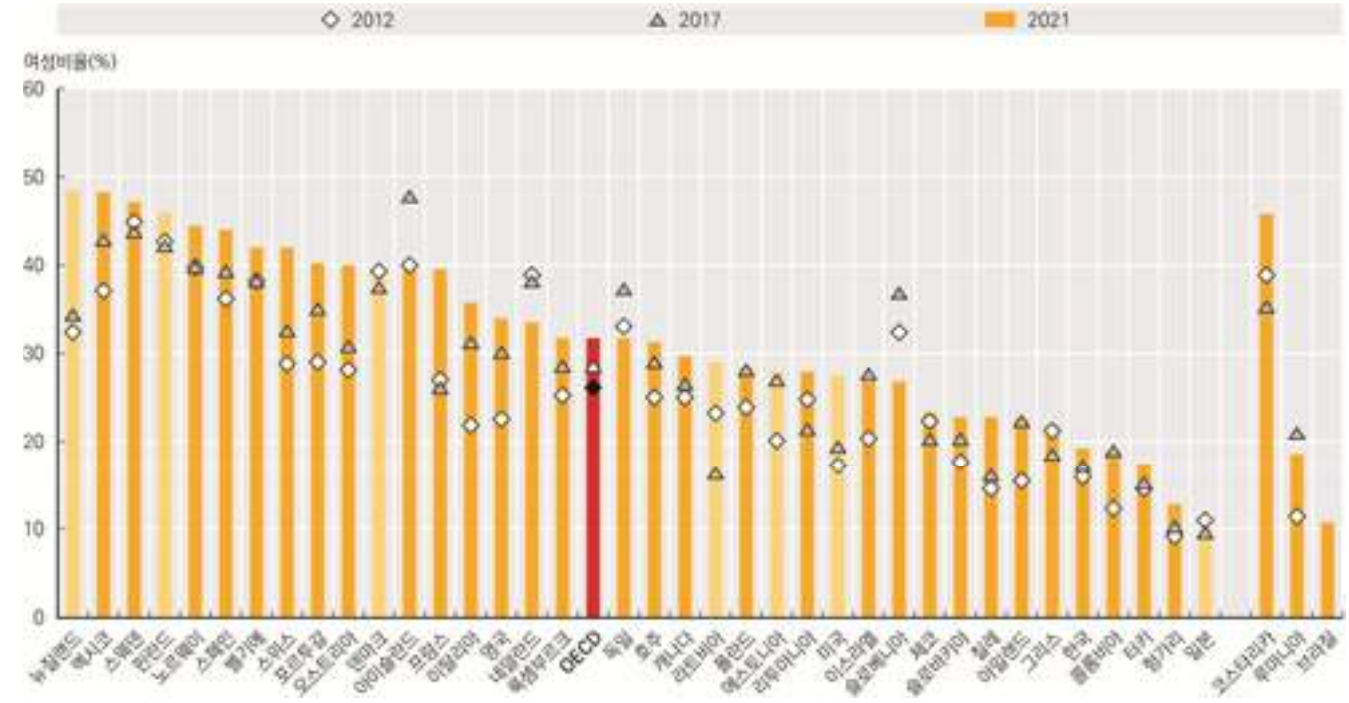
OECD (2016), *2015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Lif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52820-en*.

그림 설명

3.7. 연한 파랑색으로 표시된 막대그래프는 2021년 2월 기준, 여성의원에 대한 후보자 할당제를 시행하지 않는 국가를 나타낸다. 이스라엘의 경우, 2020년12월 의회가 해산하였고, 출판물 준비 당시 새로운 선거가 시행되지 않았기에 퇴임하는 의회를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3.11. 2021년 미국의 자료는 2020년 실시된 선거 이후 2021년 1월에 구성된 정부내각의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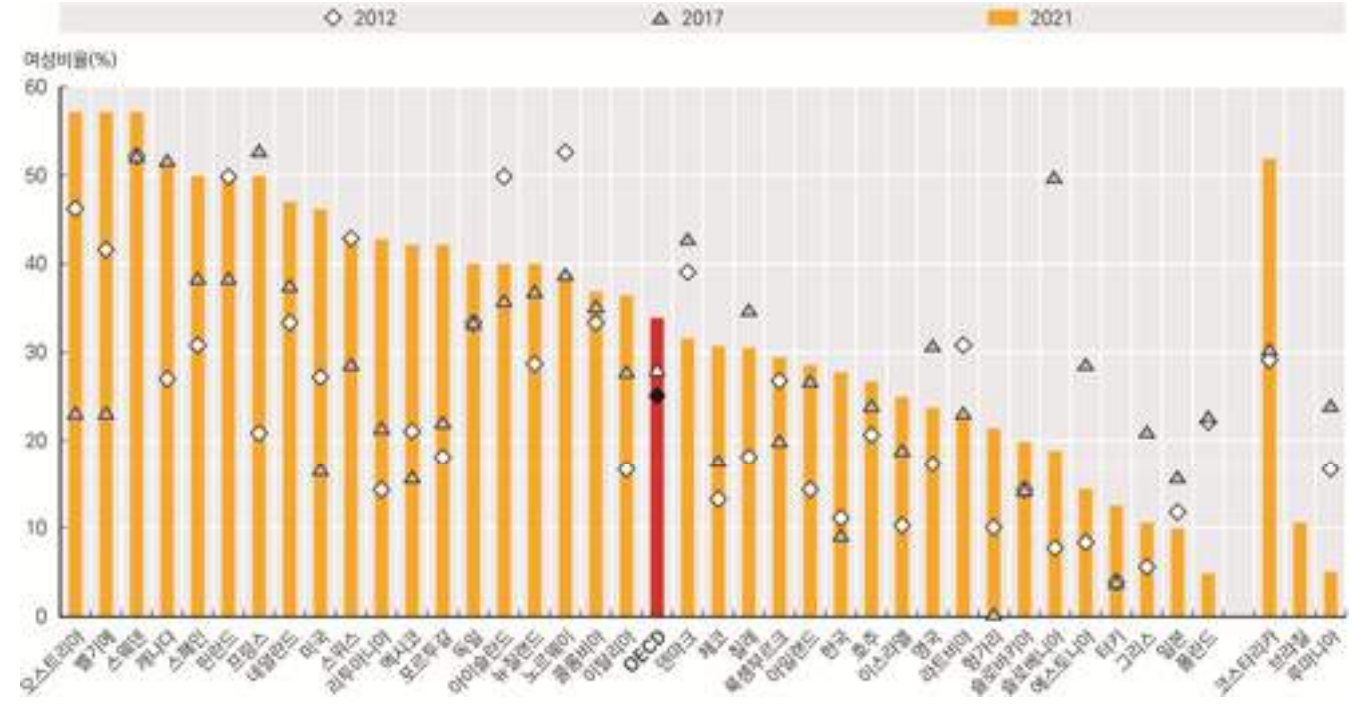
그림 3.10. **국회의 성평등과 여성정치할당제 (2012년, 2017년, 2021년)**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PARLINE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508

그림 3.11. **장관직에서의 성평등 (2012년, 2017년, 2021년)**



출처: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Women in Politics*", 2021, 2017 and 2012. 터키의 최근 1년간의 자료는 정부 당국에 의해 제공받았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527

정치의 청년대표성

코로나19 위기는 청년대표성 문제를 악화시켰으며, 정부의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정책들은 정책토론의 최전선에 세대 간 정의에 관련한 질문을 등장시켰다(OECD, 2020b). 공공기관의 청년대표성은 공공의사결정이 다양한 관점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적 해결책이 다양한 경험과 기술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한다. 이밖에 정책결과가 시민의 관심과 수요, 특수성에 지속가능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OECD, 2020a). 또한 청년의 적극적인 정치참여는 같은 연령대의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수 있으며,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OECD, 2020a).

시민교육은 청년이 민주적 절차에 익숙해지도록 하고 적극적 시민의식에 필요한 기술을 학습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정부는 공공협의, 참여예산제, 심의과정, 정부 또는 특정 부처에서 청년자문위원회(OECD 국가의 53%)를 시행하는 것을 비롯하여, 상위정부에서의 청년위원회(OECD국가의 78%에서 시행) 및 하위정부에서의 청년위원회(OECD 국가의 88%에서 시행)를 통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공직 및 정치에서의 청년의 참여와 대표성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청년들이 선출직 공무원이 되는 과정에서 직면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선거캠페인을 운영할 시간과 자금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OECD의 청년 거버넌스 설문조사(Youth Governance Survey) 결과, 65개 청년단체들 중 71%가 위의 문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당 내에서 제한된 기회(51%), 경험이 없다는 고정관념(47%), 최소연령 조건(22%)도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OECD, 2020a).

민주주의에서 기능하는 모든 제도들이 인구통계적 특성을 반영할 필요는 없지만, 정치에서의 낮은 청년대표성은 민주주의 과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방해하는 규범, 규칙, 규제들이 존재함을 알려준다. 2020년 OECD 회원국은 평균적으로 국회의원(MPs)의 22%가 40세 미만이며, 노르웨이의36% 부터 프랑스8% 까지 국가 별로 다양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OECD 국가의 평균 투표연령인구를 살펴보면, 20-39세가 투표연령인구의 34%를 차지하며 평균 12%p 이상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OECD 국가 간에도 큰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탈리아, 핀란드, 노르웨이에서는 젊은 의원의 비율이 투표연령 인구에서 젊은 사람들의 비율보다 높지만(이탈리아: 6%p, 핀란드 4%p, 노르웨이 1%p), 다른 모든 OECD 국가에서는 젊은 의원의 비율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젊은 의원의 비율이 더 낮은 국가 중 가장 큰 격차를 보인 국가로는 룩셈부르크(26%p), 미국(25%p), 호주(24%p)를 들 수 있다. 한편, 리투아니아, 멕시코, 스웨덴에서는 일부 정당들이 자발적으로 의회에 청년할당제를 채택하였다.

세대간 대표성 격차는 국가의 정치리더십 측면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2018년 기준 내각 각료의 평균 연령은 45세의 아이슬란드부터 62세의 일본까지 다양했으며, OECD의 평균은 53세로 나타났다. OECD 국가 중 내각의 평균 연령이 가장 낮은 5개 국가는 아이슬란드(45세), 노르웨이(46.2세), 에스토니아(47.1세), 덴마크(47.4세), 핀란드(47.4세)로 나타났다(그림 3.13). 한편, 2018년 전체 OECD 회원국 중 40세 미만은 51명(8%)에 불과했고 35세 이하는 20명(3%)에 불과했다(그림 3.13).

방법론 및 개념정의

청년할당제는 법률에 의해 모든 정당들에게 법률로 강제하거나, 정당이 자율적으로 청년층에게 의석을 보장해주거나, 내각 내 다수의 직위를 보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당제의 유형, 지정된 연령집단, 실행 가능한 비율 및 성별 요건이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국가마다 할당제의 설계에 차이가 있다.

전체 의원 중 젊은 의원들의 비율에 관련한 자료는 국제의회연맹(Inter-Parliamentary Union)의 PARLINE 자료에 기반한 40세 이하 의원들의 비율을 의미한다. 투표연령 인구 중 청년층에 대한 자료는 20세 이상 인구 중 20~39세 인구의 비율을 나타내며 해당 자료는 OECD 인구통계학(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내각 각료의 평균연령에 관한 자료는 OECD 회원국별 정부 홈페이지에서 내각 구성원에 대한 공개된 정보를 조사하고, 각료들의 약력 자료를 수집하였다. 해당 자료는 2018년 2월을 기준으로 수집하였다.

참고문헌

OECD (2020a), *Governance for Youth, Trust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Fit for All Generations?*,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c3e5cb8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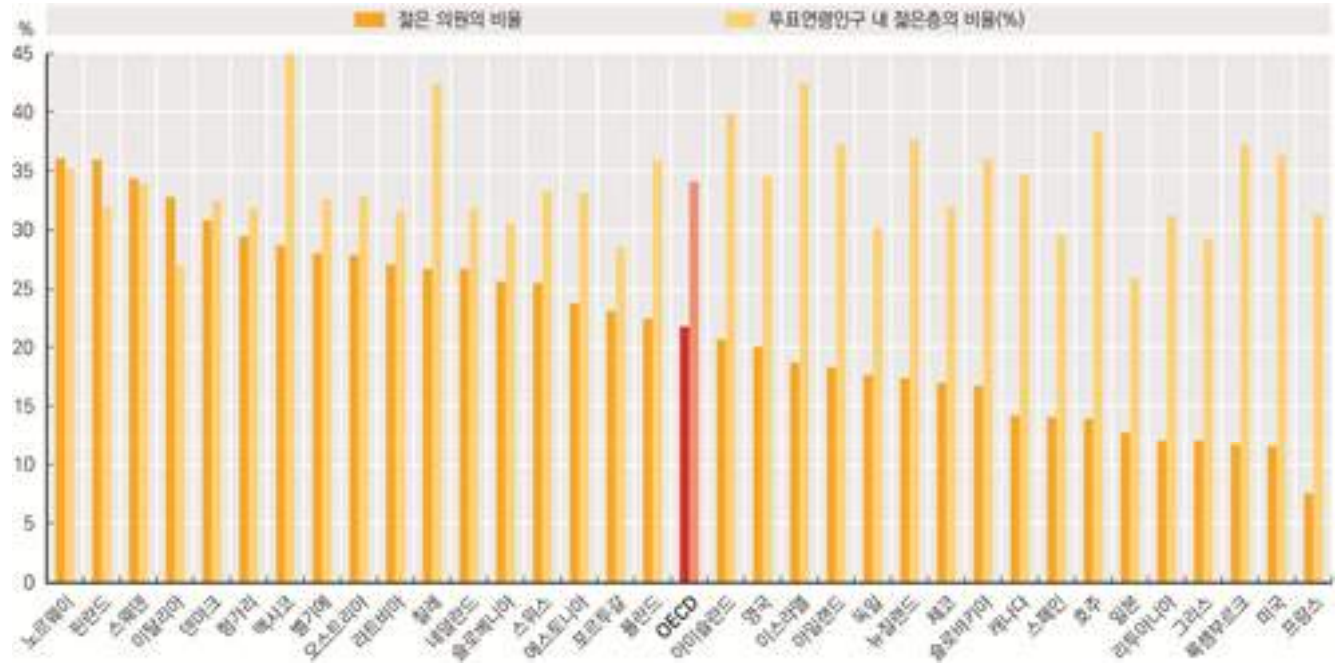
OECD (2020b), "Youth and COVID-19: Response, recovery and resilience",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40e61c6-en.*

그림 설명

3.12. 투표연령인구에서 청년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8년 기준이다.

3.13. 캐나다 각료 1명과 멕시코 내각관료 3명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해당 자료는 정부공식 홈페이지에 열거된 내각 구성원을 기반으로 대표성 자료를 수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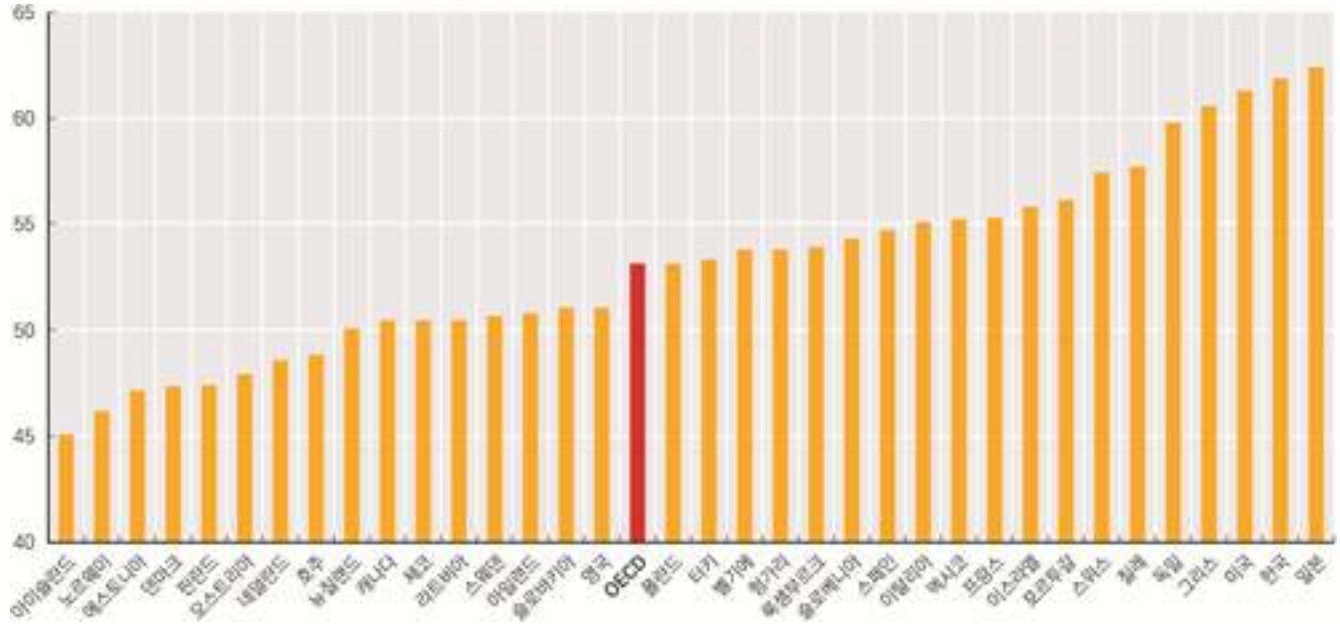
3.12. 40세 미만 국회의원의 비율 및 20~39세 사이의 투표연령인구비율 (2020년)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OECD Demography and Population* (database);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Parline* (database) on national parliamen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546

3.13. 각료의 평균연령 (2018년)



출처: OECD (2020), *Governance for Youth, Trust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Fit for All Generatio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565

사법의 성평등

사법부 리더십의 성평등을 보장하는 것은 공정성, 투명성, 법치주의의 효과성과 관련된 주요 거버넌스 이슈로서 OECD 국가들에 의해 점점 더 강조되고 있다(OECD, 2019). 다양한 배경을 가진 남성과 여성으로 사법부를 구성할 경우, 재판에 다양한 목소리와 관점이 반영될 수 있고, 청렴성을 제고하여 사법 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높일 수 있다. 특히 법조계 고위직으로의 여성 진출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없애고, 여성의 권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18년 기준, OECD-EU 국가의 사법부 내 여성비율은 평균 61%이며,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81%), 가장 낮은 국가는 영국(33%)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사법부의 성평등 수준은 2016년에 비해 일정하거나 약간 증가하였는데, 2016-18년 동안 여성 법관의 비율은 평균 2%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 법관의 비율이 가장 많이 증가한 국가는 터키(5%p)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아이슬란드와 이스라엘은 1%p 감소한 결과가 나타났다. OECD 국가 간 사법부 내 성평등 정도를 비교할 시, 각 국가의 고유한 법률 체계의 특징과 법관이 되기 위한 전문성 개발 방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대륙법 체계와 영미법 체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대륙법 체계에서는 로스쿨 졸업 이후 여성이 바로 직업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경력 단절에 직면할 가능성이 낮다. 반면, 영미법 체계에서는 최소 5년 또는 7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만이 법관이 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이 정해져있다(그림 3.14).

최근 법조계의 성평등과 관련하여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최고 법원에서 여성 법관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OECD-EU 국가의 최고법원에서 여성 법관의 비율은 2018년 평균 36%를 기록하였으나(그림 3.15), 1심 법원에서의 여성법관의 비율은 평균 63%로 나타났고, 2심법원에서는 평균 5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 노동시간이 긴 법조계 문화로 인한 일과 삶의 양립 문제에 따른 것이며, 여성의 법조계 내 고위직에 대한 접근성을 저해하는 요인들로 설명될 수 있다. 또한, 여성 법관들에게 권한의 위임, 멘토링·네트워킹·전문성 개발 기회가 미비하다는 것 역시 사법부 내 고위 직급에서의 여성의 존재감을 저해할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사법의 성평등' 자료는 2016년과 2018년 전체 직업법관 중 여성의 비율을 나타낸다.

해당 자료는 유럽 평의회(Council of Europe) 산하의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의 자료인 CEPEJ-STAT에서 수집하였다.

'법원 유형별 직업법관의 성평등' 자료는 2018년 기준 1심, 2심, 최고심 법원에서 여성 직업법관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해당 자료들은 CEPEJ-STAT에서 수집하였다.

1심법원(*Courts of first instance*)은 법적 절차가 시작되는 곳이며, 2심법원(*courts of second instances*)에서는 항소를 통해 1심 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3심(최고심)법원(*supreme courts*)은 대법원을 의미하며, 상고를 통해 1심법원, 2심법원의 판결을 검토한다. 직업법관(professional judges)은 직업으로 법관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채용·훈련된 동시에 보수를 받는 사람을 의미하며 1심법원, 2심법원, 최고법원 모든 직업법관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OECD (2019), *Fast Forward to Gender Equality: Mainstreaming, Implementation and Leadership*,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g2g9faa5-en.*

OECD (2018), Toolkit for Mainstreaming and Implementing Gender Equality, OECD website, *www.oecd.org/gender/governance/toolki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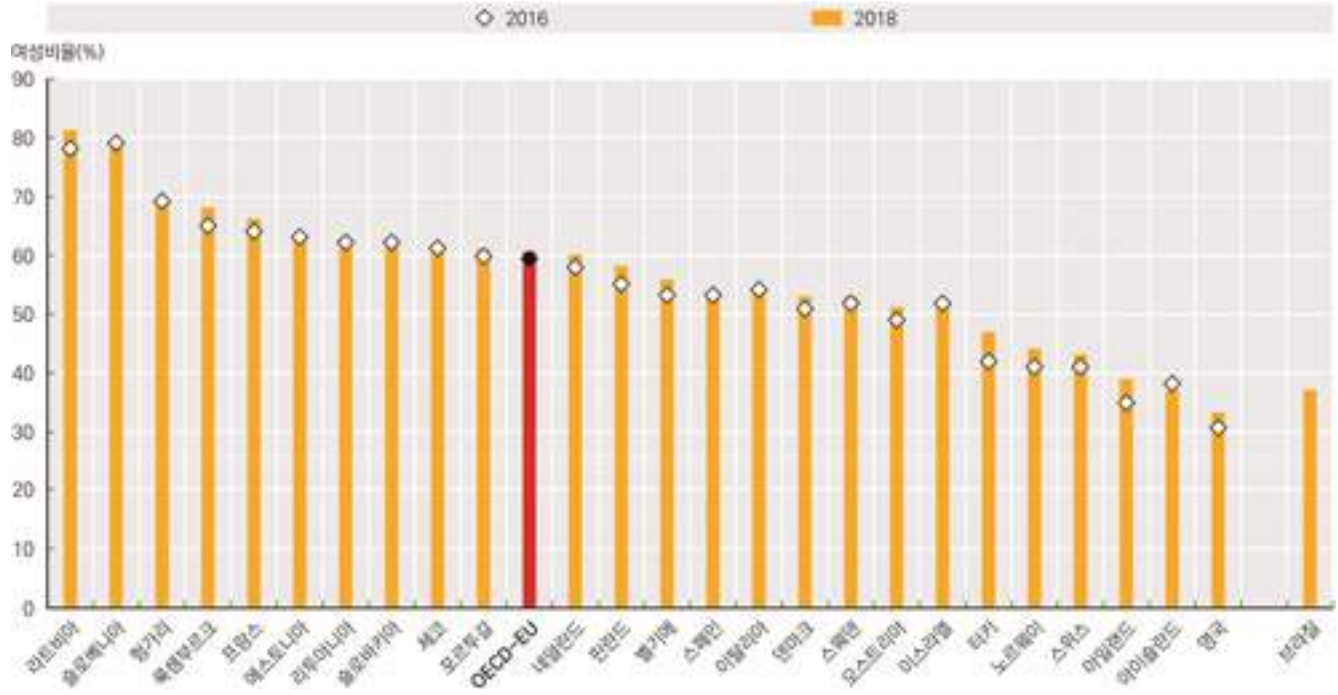
OECD (2016), *2015 OECD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Gender Equality in Public Lif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52820-en.*

그림 설명

독일, 그리스, 폴란드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영국의 자료는 잉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 스코틀랜드의 여성 직업법관 비율의 단순평균(simple average)으로 계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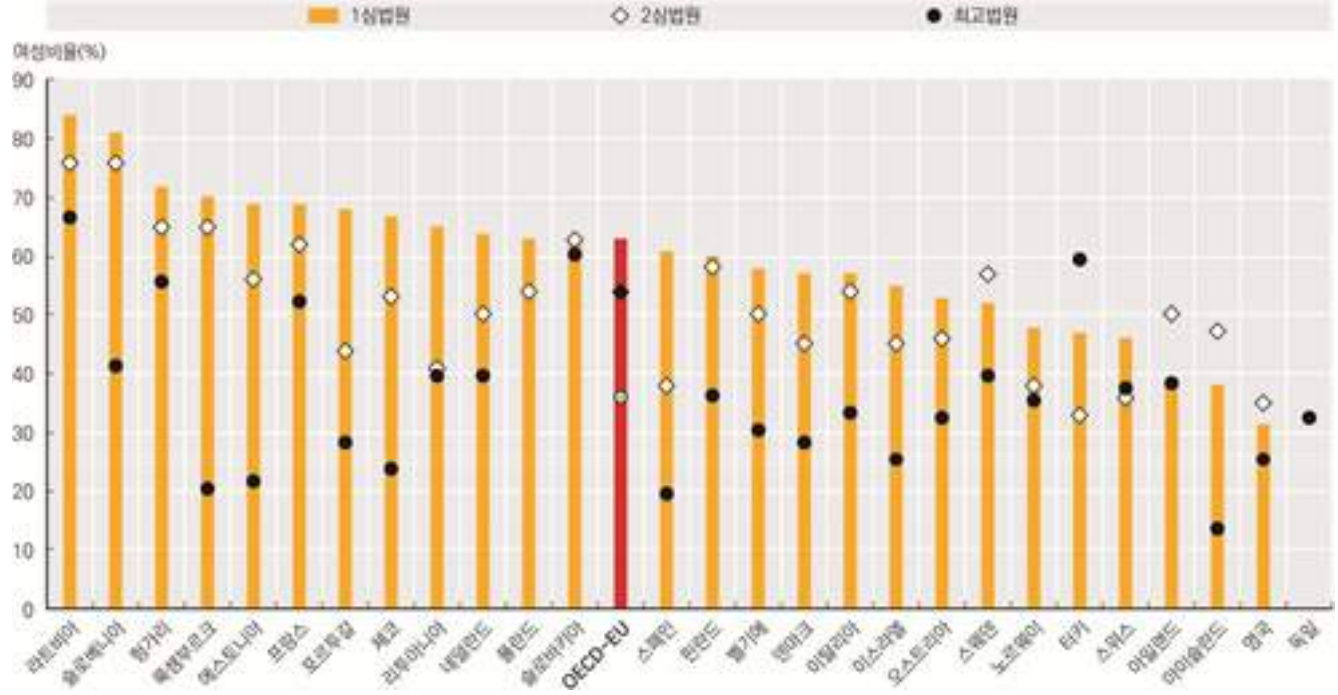
3.14. 직업법관 내 여성 비율 (2016년, 2018년)



출처: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CEPEJ-STAT* (databas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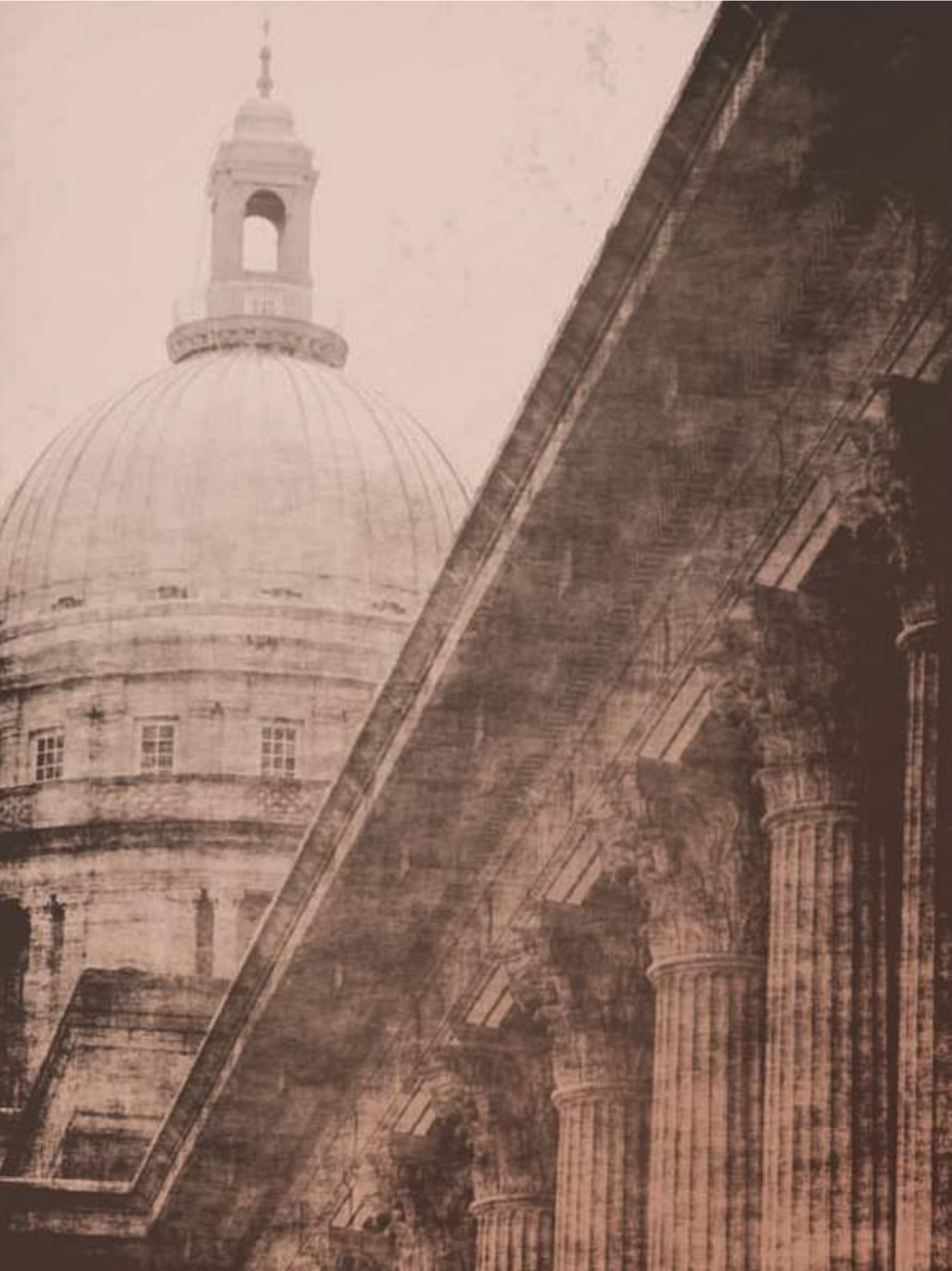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584

3.15. 법원의 심판 단계별 직업법관의 여성비율 (2018년)



출처: Council of Europ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 *CEPEJ-STAT*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603



4. 공공기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위기 커뮤니케이션: 정부수뇌기관 및 보건 부처의 역할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수뇌기관과 보건 부처의 역할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

정부수뇌기관(Centres of Government: CoG)은 수반(대통령, 수상, 내각 등)을 돕기 위한 행정 체계이다.

OECD 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수뇌기관의 기능 변화를 추진하였다. OECD 26개국 중 20개국(77%)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의 조정 사례가 증가하였고, 19개국(73%)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주관하는 조정 회의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였다. 조정 회의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한 국가들 중 대다수는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변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정부수뇌기관의 조정 사례가 증가한 국가 중 이러한 변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는 절반 미만에 불과하다. 이 외에 정부수뇌기관의 기능 변화에는 의사소통과 허위정보 방지에 관한 새로운 규정 제정(26개 국가 중 17개 국가, 65%), 위험 관리 및 정책 분석 등 새로운 책임의 부여 또는 책임의 증가(26개 국가 중 12개 국가, 46%)가 포함되며, 대부분의 국가들은 이러한 변화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위기 이후, 정부수뇌기관의 책임이 증가하고, 업무가 복잡해졌음에도 불구하고 OECD 26개국 중 정부수뇌기관의 재원을 증가시킨 국가는 7개국(27%), 인력을 증가시킨 국가는 6개국(23%)에 불과하다(그림 4.1 참고).

모든 OECD 26개국에서 전략적 계획과 재정 제도를 조정하기 위해 최소 하나 이상의 제도를 마련하였고, 이중 22개국가(85%)에서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내각 회의를 진행했다. 일반적으로 조정 제도에는 최소 하나 이상의 하위 절차가 포함된다. 하위 절차에는 재무부의 사전 검토 및 승인(26개 국가 중 13개 국가, 50%), 정부수뇌기관 내 토론 및 기술적 조정(26개 국가 중 13개 국가, 50%), 정부수뇌기관의 대표와 재무부 장관 간 대화(26개 국가 중 13개 국가, 38%), 내각의 특별 소위원회 개최(26개 국가 중 9개 국가, 35%) 등이 포함된다. OECD 국가들은 이러한 하위 절차를 결합하여 맞춤형 조정 제도를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OECD 국가 간 명확한 패턴을 발견하기는 어렵다(그림 4.2 참고).

정부는 코로나19 및 회복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주로 정보 공유 캠페인과 협의 절차를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반면, 이해관계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참여 제도의 활용은 미흡하였다. OECD 26개국 중 다수의 국가에서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의 설계(26개 국가 중 20개 국가, 77%)와 회복 기간에 대한 전략의 설계(26개 국가 중 18개 국가, 69%) 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협의 절차를 활용하였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전략의 설계(26개 국가 중 19개 국가, 73%)와 회복 기간에 대한 전략의 설계(26개 국가 중 16개 국가, 62%) 과정을 이해관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 캠페인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회복을 위한 전략의 설계 과정 중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돕는 참여 제도는 26개국 중 9개국에서만 활용되었다(35%). (온라인 표 G.26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정부의 역할'에 관한 데이터는 OECD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회복력 있는 대응 구축: 코로나 19 위기관리 및 미래의 복구 노력에 대한 정부수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는 OECD 26개 국가와 브라질, 루마니아가 응답했다. 각 국가에서 주된 응답자는 정부 수반과 수상 또는 내각에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고위 관료들이다.

내각사무처, 대통령실, 추밀원, 국무조정실 등으로도 알려져 있는 정부수뇌기관은 총리/대통령 및 각료회의(정부 각료들의 정례회의)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정부수뇌기관은 정부 수반과 협의회를 돕는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수반을 돕는 기관(예: 총리실)을 포함한다. 정부수뇌기관에는 대표적으로 행정부 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기관(예: 재정, 기획 또는 예산실)에서 정부수뇌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8), *Centre Stage 2: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in OECD Countries*, OECD Publishing, *www.oecd.org/gov/centre-stage-2.pdf.*

OECD (2014), *Centre Stage: Driving Better Policies from the Centre of Government*, OECD Publishing, *www.oecd.org/gov/Centre-Stage-Report.pdf.*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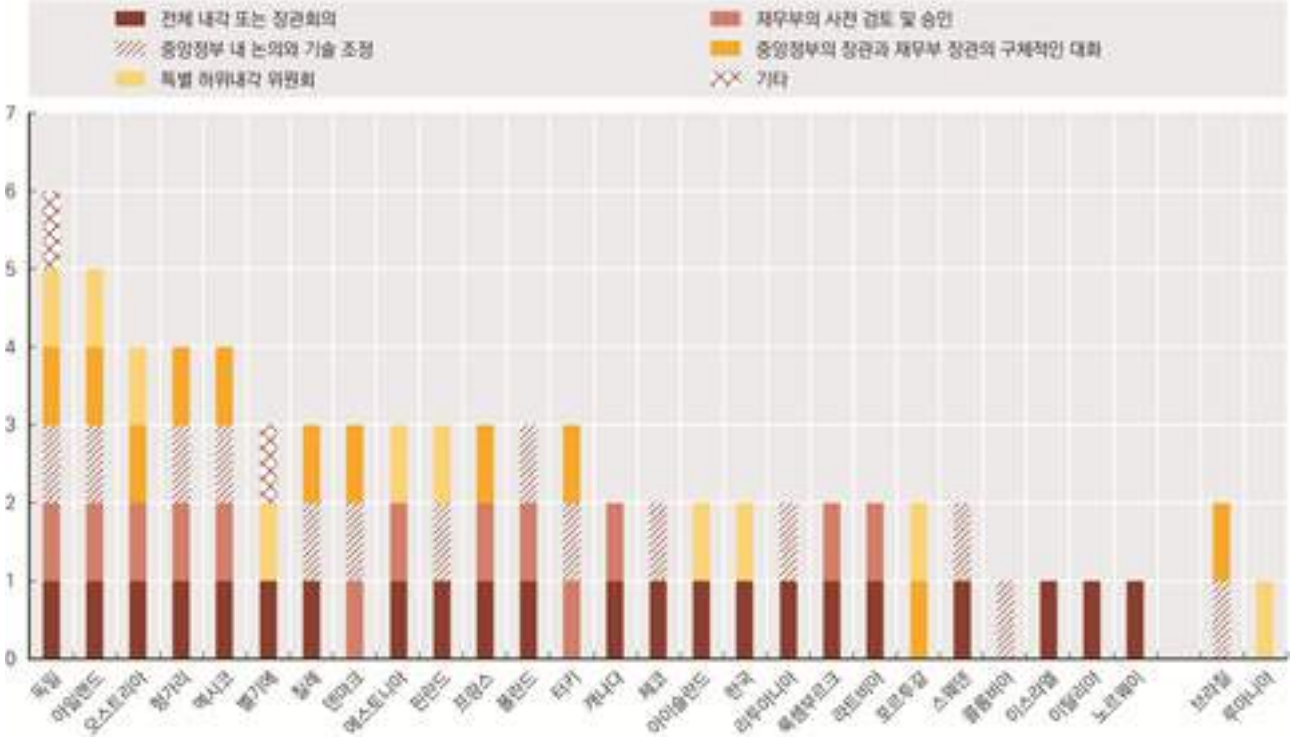
호주,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및 미국에 대한 데이터는 누락되었다.

G.26. (코로나19 위기 동안 활용된 이해관계자의 참여 제도, 2021)는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

4.1. 코로나19 발생 이후 정부수뇌기관의 기능 변화 및 위기 회복 단계에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변화 (2021년)

출처 : OECD (2021), *Survey on Building a Resilient Response: The Role of Centre of Govern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COVID-19 Crisis and Future Recovery Effor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622

4.2. 코로나19에 대응한 전략 계획 및 재정 분석틀의 조정 (2021년)



출처 : OECD (2021), *Survey on Building a Resilient Response: The Role of Centre of Govern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COVID-19 Crisis and Future Recovery Effor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641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정부수뇌기관은 코로나 19 위기를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그 중요성은 회복 기간 동안 지속될 것이다. OECD 26개 국가 중 15개 국가(58%)는 국무총리 또는 대통령실에서 코로나 19 회복을 위한 전략 계획의 일차적인 조정을 책임지고 있다. 26개 국가 중 3개 국가(12%)는 재무부에서, 26개 국가 중 8개 국가(30%)는 여타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있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경제 부흥·전략 투자부 장관, 체코의 산업통상부, 핀란드 내각의 지속가능한 회복·성장 위원회, 라트비아의 여러 기관, 룩셈부르크의 내각 회의 및 스웨덴 행정부가 포함된다(그림 4.3 참고).

OECD 26개 국가 중 19개 국가(73%)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코로나19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간 전략 계획 수립의 일부를 책임지고 있다. 정부수뇌기관의 책임은 일반적으로 전략적 계획의 수립 및 집행의 관리이다. 정부수뇌기관의 책임으로는 코로나19회복을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이 필요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선정(26개 국가 중 16개 국가, 62%)과 회복 계획의 집행 조정(26개 국가 중 14개 국가, 54%)이 포함된다. 이렇듯, 정부수뇌기관은 주로 집행을 관리·조정하며, 정부수뇌기관이 코로나19 회복 계획을 직접 집행하는 국가는 상대적으로 적다. OECD 26개 국가 중 정부수뇌기관이 회복 계획을 직접 집행하는 국가는 13개국(50%)이며, 12개 국가(46%)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이 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지침과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다. 또한, 정부수뇌기관이 계획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국가는 7개국(27%)이며, 종합 회복 계획에 관한 사전검토를 시행하는 국가는 6개 국(23%)이다(표 4.4 참고).

정부수뇌기관은 2021년 동안 회복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이를 제안하기 위하여 많은 근거 자료들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수뇌기관이 필요로 하는 근거 자료의 유형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OECD 국가들은 최소 2개 이상의 근거 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OECD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근거 자료를 정리하면,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 다른 국가의 회복 경험에 관한 자료가 가장 중요하다. OECD 26개국 중 20개국(77%)은 다른 국가의 모범 사례에 관한 자료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둘째, 정책 우선순위 간 우선순위 분석에 관한 자료, 글로벌 전망 및 예측에 관한 자료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공동 2위(26개 국 중 17개, 65%)를 차지하였다. 이 외에 일부 국가에서는 심층평가의 활용 및 권고 사항(26개국 중 12개국, 46%), 우선순위에 관한 의사결정의 기준으로서 체크리스트 (26개 국 중 11개 국, 42%),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책 일관성 분석 결과(26개 국 중 9개 국, 35%) 외부효과의 분석 결과(26개 국가 중 8개 국가, 31%) 등의 자료가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온라인 그림 G.27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코로나19 팬데믹 회복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정부수뇌기관의 역할"에 관한 데이터는 OECD가 2021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시한 "회복력 있는 대응 구축: 코로나 19 위기관리 및 미래의 복구 노력에 대한 정부수뇌기관의 역할"을 주제로 한 설문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는 OECD 26개 국가와 브라질, 루마니아가 응답했다. 각 국가에서 주된 응답자는 정부 수반과 수상 또는 내각에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고위 관료들이다.

내각사무처, 대통령실, 추밀원, 국무조정실 등으로도 알려져 있는 정부수뇌기관은 총리/대통령 및 각료회의(정부 각료들의 정례회의)를 지원하는 조직이다. 정부수뇌기관은 정부 수반과 협의회를 돕는 기관뿐만 아니라 정부 수반을 돕는 기관(예: 총리실)을 포함한다. 정부수뇌기관에는 대표적으로 행정부 또는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국무조정실 등이 포함되지만, 경우에 따라 다른 기관(예: 재정, 기획 또는 예산실)에서 정부수뇌기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8), *Centre Stage 2: The Organisation and Functions of the Centre of Government in OECD Countries*, OECD, *www.oecd.org/gov/centre-stage-2.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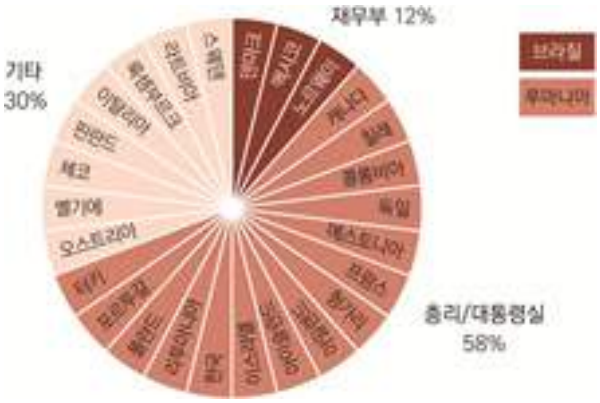
OECD (2014), *Centre Stage: Driving Better Policies from the Centre of Government*, OECD, *www.oecd.org/gov/CentreStage-Report.pdf.*

그림 설명

호주, 그리스, 일본, 네덜란드,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및 미국에 대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그림 G.27. (정책 우선순위를 알리는 데 필요한 증거와 분석 유형, 2021) 은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4.3. 코로나 위기 회복을 위한 전략적 계획의 조정을 담당하는 기관/기구 (2021년)



출처 : OECD (2021), *Survey on Building a Resilient Response: The Role of Centre of Govern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COVID-19 Crisis and Future Recover Effor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660

4.4.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범정부 전략 계획의 수립 과정에서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2021년)

	코로나19 회복을 위한 우선순위의 설정	우선순위에 따라 집행이 필요한 정책 또는 프로그램의 선정	회복계획의 집행 조정	회복 계획의 집행과 관련한 의사소통	회복계획 집행에 관한 모니터링	회복계획의 수립을 위한 주요지침 및 가이드라인 설정	종합 회복 계획의 수립	회복계획의 평가	종합회복 계획에 관한 사전검토 시행	정보수뇌 기관의 책임이 아님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콜롬비아	●	●	●	❍	●	❍	●	●	❍	❍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한국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터키	❍	●	❍	❍	❍	❍	❍	❍	❍	❍
OECD 합계										
● Yes	16	16	14	13	13	12	11	7	6	7
❍ No	10	10	12	13	13	14	15	19	20	19
브라질	●	●	●	●	●	●	●	●	❍	❍
루마니아	❍	❍	❍	❍	❍	❍	❍	❍	❍	●

출처 : OECD (2021), *Survey on Building a Resilient Response: The Role of Centre of Government in the Management of the COVID-19 Crisis and Future Recovery Effor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679

위기 커뮤니케이션: 정부수뇌기관 및 보건 부처의 역할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행정부의 내·외부에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중요한 기능이며, 효과적인 정책 설계 및 집행에 있어 핵심 도구이다. 또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정부가 시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열린 정부의 원칙(투명성, 청렴성, 책임성 및 이해관계자 참여)을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굿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위기 시 국민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시기적절하고 유용하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다. 정부는 예측하지 못한 위기가 발생하여 정부의 평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았을 때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언론 브리핑, 보도자료 배부, 간담회 등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며, 팩트 체크와 정부 조치에 대한 캠페인, 정부의 위기 대응 조치에 관한 설명회 등을 포함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정부수뇌기관과 보건 부처의 커뮤니케이션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추진되는 정부 조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이 이를 준수하도록 중요한 역할을 한다.

2019년 OECD 27개 국가 중 18개 국가(67%)의 정부수뇌기관은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절차를 수립했으며, 17 개 국가 중 13개 국가의 보건 부처(76%)도 해당 절차를 수립했다(그림 4.5 참고). 정부수뇌기관이 수립한 매뉴얼 또는 절차에는 위기 커뮤니케이션 체계(예: 영국의 비상계획 체계), 위기 커뮤니케이션 전용 팩트 시트(네덜란드) 또는 위기 대응 계획에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한 섹션 마련(프랑스), 제도(호주 및 벨기에), 법률(스위스 및 룩셈부르크) 및 정책(캐나다)이 포함된다. 체코, 에스토니아, 멕시코 등 구체적인 절차를 수립하지 않은 국가들은 위기의 특성에 따라 기존의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독일에서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중앙 및 지방정부의 공동 책임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수뇌기관의 의정서 또는 절차에 따라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한다.

OECD 27개 국가 중 15개 국가의 정부수뇌기관(56%)과 18개 국가 중 9개 국가의 보건 부처(50%)에서는 공공 커뮤니케이션 역량 중 위기 커뮤니케이션을 가장 어려운 세 가지 역량이라고 응답하였다(그림 4.6 참고). 많은 OECD 국가들은 위기 커뮤니케이션 집행의 핵심 과제로 조정과 인적 자원이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12개 국가의 정부수뇌기관과 6개 국가의 보건 부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이유를 조정이라고 응답하였다. 11개 국가의 정부수뇌기관과 4개 국가의 보건부처는 위기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운 이유를 인적 자원이라고 응답하였다. 11개 국가의 정부수뇌기관과 4개 국가의 보건부처는 조정과 인적자원 모두 핵심 과제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그림 4.7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위기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자료는2019년 수행된 '2020년 OECD 정부수뇌기관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이해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를 통해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 등 27개 OECD 국가의 정부수뇌기관과 18개 OECD 국가의 보건 부처의 자료를 수집하였다.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 폴란드의 정부수뇌기관과 그리스, 아일랜드의 보건 부처의 응답에는 2020년에 채택된 코로나19 관련 조치가 포함되어 있다. 설문조사에는 정부수뇌기관 내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고위 공무원(대통령 및 내각 등 정부 수반을 지원하는 공무원)과 보건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 참여하였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기관이 주도하는 모든 소통 활동을 의미하며, 정당, 토론, 선거 등의 정치적인 소통과는 구별된다.

위기는 적절히 대처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운영이나 평판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위협이다. 위기는 세 가지의 위협 즉, 공공 안전, 재정적 손실, 평판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위기 커뮤니케이션은 예기치 않은 사건이 발생할 때 공공 및 이해관계자와 함께 정부에 의해 수행된다.

참고문헌

OECD (2020), "Transparency, communication and trust: The role of public communication in responding to the wave of disinformation about the new Coronaviru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ef7ad6e-en*.

OECD (2020), "Building resilience to the Covid-19 pandemic: The role of centres of government",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 doi.org/10.1787/883d2961-en.*

OECD (2016), Trends in Risk Communication Policies and Practices, OECD Reviews of Risk Manage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0467-en.*

그림 설명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스페인은 보건 부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정부수뇌기관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영국은 정부수뇌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보건부처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았다.

4.5. 리투아니아 보건 부처의 데이터는 누락되었다. 그림에서 바깥쪽 동그라미는 정부수뇌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주며, 안쪽 동그라미는 보건부처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4.6 27개 국가의 정부수뇌기관과 18개 국가의 보건 부처을 대상으로 가장 어려운 커뮤니케이션의 유형을 조사한 결과 1~3순위 응답을 정부수뇌기관과 보건 부처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4.7 15개 국가의 정부수뇌기관과 8개 국가의 보건 부처를 대상으로 위기 커뮤니케이션의 핵심 과제로 인적 자원과 조정의 중요성을 설문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리스의 보건 부처는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았다.

4.5. OECD 국가의 위기 대응을 위한 표준 규약 또는 절차의 수립 유무(2019년)

출처 : OECD (2020), *Survey on Understanding Public Communication in Centres of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698

4.6. 정부수뇌기관 및 보건 부처가 선정한 난이도가 높은 커뮤니케이션 역량 1~3순위 (2019년)

출처 : OECD (2020), *Survey on Understanding Public Communication in Centres of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717

4.7. 정부수뇌기관과 보건 부처가 위기 커뮤니케이션 시 어려움을 경험한 이유(2019년)

출처 : OECD (2020), *Survey on Understanding Public Communication in Centres of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736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수뇌기관과 보건 부처의 역할

정부, 시민, 이해관계자 간 정보 공유는 사회의 포용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인 요소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오보와 허위 정보가 확산됨에 따라 시민들이 정확한 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역량이 반감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오보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오보와 허위 정보에 관한 문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지적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팬데믹 발생 직후 오보와 허위정보 문제는 코로나19를 통제하기 위한 정부 정책과 보건 조치의 효과성을 감소시키고 있다. 오보와 허위정보는 정부가 제공하는 공식적인 정보와 섞여 시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백신접종에 대한 거부로 이어졌다.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해 공공 커뮤니케이션의 신속성, 투명성, 선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공공 커뮤니케이션을 활용하여 정책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코로나 19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시민들이 보건 수칙(예: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봉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을 준수하도록 만드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보다 넓은 범위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국민들과의 소통 및 교육에 기여할 수 있다.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인 제도를 구축한 국가는 많지 않다. 2019년 OECD 27개 국 중 오보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침을 수립한 국가는 11개국과 코스타리카에 불과하다(그림 4.8 참고). 오스트리아와 노르웨이는 2020년 코로나19 위기 대응 조치의 하나로서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침을 수립하였다. 해당 문서에는 정부 또는 부처별 전략, 계획, 수단, 지침 등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는 정보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연간 부처별 조치 계획을 수립하였고, 영국은 공공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이 문제 상황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을 개발했다. 보건 부처가 이와 유사한 지침을 수립한 국가는 OECD 18개국 중 4개국에 불과하다. 따라서 팬데믹 기간 동안 OECD 국가들은 보건과 관련된 잘못된 정보의 확산을 제어하지 못했다(그림 4.8 참고).

오보와 허위 정보로 인한 복잡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학제 간 접근이 필요하다. OECD 24개 국가 중 19개 국가와 코스타리카의 정부수뇌기관(79%)은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디어, 시민사회, 학계, 국제기구, 기술 회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였다. 정부수뇌기관은 이중 학계 또는 연구기관의 전문가와 가장 많은 협의를 한다. OECD 17개 국가 중 8개 국가(47%)와 루마니아의 보건 부처는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해 이해관계자와 최소 한 번 이상 협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표 4.9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오보와 허위정보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수뇌기관과 보건 부처의 역할'에 관한 데이터는 2019년을 망라한 정부수뇌기관의 공공 커뮤니케이션 이해에 관한 OECD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OECD 27개 국가와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의 정부수뇌기관 그리고 OECD 18개 국가와 루마니아의 보건 부처에서 수집되었다. 응답자는 정부수뇌기관의 커뮤니케이션을 담당하는 고위 관료들이다. 즉, 정부 수반과 내각, 보건부처에 직접적인 지원과 조언을 제공하는 기관들을 포함한다.

공공 커뮤니케이션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공 기관이 주도하는 모든 커뮤니케이션 활동으로 이해된다. 이는 정당, 토론, 선거와 같은 정치적 커뮤니케이션과 구분된다.

오보는 청중을 속이거나, 오해시킬 의도로 오보를 의도적으로 생성 또는 공유하는 것을 의미한다. 허위 정보는 공유되지만 피해를 의미하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의도하지 않은 실수, 오타, 오류 또는 심각하게 받아들여 질 수 있는 풍자들이 포함되지만, 오보 활동과 연결된 확인되지 않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일을 점차 수반하고 있다.

참고문헌

Matasick, C., C. Alfonsi and A. Bellantoni (2020), "Governance responses to disinformation: How open government principles can inform policy option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6237c85-en.*

OECD (2020), "Transparency, communication and trust: The role of public communication in responding to the wave of disinformation about the new Coronaviru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ef7ad6e-en.*

Wardle, C. and H. Derakshan (2017), Information Disorder: Towards an Interdisciplinary Framework for Research and Policy Making, Council of Europe, DGI(2017)09.

그림 설명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및 스페인은 보건 부처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정부수뇌기관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았다. 오스트리아, 체코, 에스토니아,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라트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및 영국은 정부수뇌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했지만 보건부처에 대한 데이터는 제공하지 않았다.

4.8. 바깥쪽 동그라미는 정부수뇌기관에 대한 데이터를, 안쪽 동그라미는 보건 부처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준다.

4.9. 호주, 독일, 네덜란드의 정부수뇌기관과 아이슬란드의 보건 부처는 해당 질문에 응답하지 않았다. 기타 응답들에는 국제 포럼과 소셜 미디어 회사 등이 포함되었다.

4.8. 허위 정보에 대응하기 위한 공식적인 지침의 수립 여부 (2019년)

출처 : OECD (2020), *Survey on Understanding Public Communication in Centres of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755

4.9. 정부수뇌기관 및 보건 부처와 허위 정보의 대응에 관한 협의 주체 (2019년)

	학계 또는 연구기관	국제 기구	미디어	시민단체	기타	없음
호주					■	■
오스트리아	●		●	●		
벨기에	●		●		■	
캐나다	● ■		● ■	●	● ■	
칠레	●	●		●		■
콜롬비아			●			■
체코	●			●		
에스토니아	●	●	●	●		
핀란드						■
프랑스	●		●	●		
그리스	■					
헝가리	●					■
아일랜드	●		●	●	● ■	
이스라엘	●		●	●		
이탈리아						●
일본						■
한국	●	●	●	●		
라트비아	●		●	●		
리투아니아	●		●	●	■	
룩셈부르크						■
멕시코						●
노르웨이						●
폴란드						●
포르투갈	■		■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스웨덴						● ■
스위스					●	■
터키	● ■	■	● ■	● ■		
영국	●		●	●		
OECD 총계						
● 정부수뇌기관	17	3	13	14	4	5
■ 보건부	4	1	3	2	5	9
브라질						●
코스타리카	●		●		●	
루마니아			■	■		●

출처 : OECD (2020), *Survey on Understanding Public Communication in Centres of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774

5. 예산제도

환경 친화적 예산
녹색 회복을 지원하는 환경 친화적 예산
지출 검토 제도
독립적 재정기구 : 코로나19위기 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환경 친화적 예산

최근 환경 친화적 예산의 도입은 예산 과정에서 환경 및 기후 목표를 달성을 고려하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기후 변화, 생물다양성감소, 환경 오염은 지구, 사회,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전 세계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기후 변화를 완화하고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맺고, 국가적 목표를 설정하였다. 예산은 정부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자원을 조달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 OECD는 각 국이 예산 제도를 활용하여 정책 결정자에게 예산이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도록 지원하여 환경 친화적 예산이 수립되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환경 친화적 예산은 1) 전략적인 계획의 수립, 2) 근거의 마련과 정책 일관성을 위한 수단, 3)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고 체계, 4) 예산 거버넌스의 네 가지 핵심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환경 친화적 예산에는 국가적 기후 변화 및 환경 목표의 수립, 기후예산 태깅, 기후예산서, 전략적 계획과 예산 편성 과정을 연계하는 예산제도의 도입 등이 포함된다. 2020년 OECD 35개국 중 14개국(40%)이 환경 친화적 예산을 수립한다고 보고하였다(그림 5.1 참고).이탈리아는 2000년에 환경 친화적 예산을 도입한 반면, 프랑스는 2020년에 처음으로 환경 친화적 예산을 도입하였다.

환경 친화적 예산을 도입한 국가 중 절반(14개국 중 7개국)은 높은 수준의 정치적 협약 또는 예산 법률에 관련 규정을 명시한 반면, 14개국 중 6개국(43%)은 행정 규칙에 근거를 두고 있다. OECD 국가들은 다양한 수단을 활용하여 환경 친화적 예산을 운용하고 있다. 환경 친화적 예산의 대표적인 수단으로는 사전 또는 사후 환경영향평가(14개국 중 12개국, 86%), 환경 비용-편익 분석(14개국 중 10개국, 71%), 탄소 영향평가(14개국 중 10개국, 71%), 탄소 가격제(14개국 중 9개국, 64%)가 포함된다. 환경 친화적 예산을 운용하는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들을 갖추고 있다(14개국 중 12개국, 86%). OECD

국가들은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모든 부분에 대해 일관된 분석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거버넌스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14개국 중 7개국(50%)은 매년 예산편성 규정에 세부 지침을 마련하고, 6개국(43%)은 교육 훈련을 제공하며, 5개국(35%)은 정부 부처 간 조정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그림 5.3 참고). OECD 파리 기후변화 협정은 보다 많은 국가들이 환경 친화적 예산을 도입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환경 친화적 예산'의 자료는2020년 OECD와 유럽 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 친화적 예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OECD and European Commission Joint Survey on Emerging Green Budgeting Practices)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는 OECD 35개 국가와 루마니아가 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OECD 국가의 중앙예산기관 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응답은 현재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자체 평가로 진행되었다. 환경 친화적 예산의 자료에는 중앙/연방 정부의 자료만 포함되었고, 지방정부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설문지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 또는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계획된 제도를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전체 데이터 셋에는 유럽 연합 이외의 다른 OECD 국가들도 포함된다.

환경 친화적 예산이란, 환경 및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정책 결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친화적 예산에는 예산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국가 및 국제 협약의 이행에 대한 일관성 평가가 포함된다. 환경 친화적 예산은 담론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기후예산 태깅은 생물다양성, 대기, 수자원(양과 질) 등 기후 및 환경 목표와 관련된 예산상의 조치를 포괄적으로 점검하는 예산 태깅 제도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2020a), *OECD Green Budgeting Framework (Highlights)*, OECD, *www.oecd.org/environment/green-budgeting/OECDGreen-Budgeting-Framework-ighlights.pdf*.

OECD (2020b), "Green budgeting and tax policy tools to support a green recovery",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d02ea23-en*.

OECD (2021), *Green Budget Tagging: Introductory Guidance & Principl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e7bfcc4-en*.

그림 설명

5.1, 5.2 & 5.3. 이스라엘과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루마니아는 환경 친화적 예산을 시행하지 않는다.

5.1. 뉴질랜드는 "행복 예산(wellbeing budgeting)"에 따라 환경이 자연 자본으로 분류되어 "기타"로 분류하였다. 핀란드는 녹색 목표에 기여하는 특정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기후 예산 태깅을 한다. 설문지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결과에는 모든 분야에 걸쳐 기후 예산의 영향을 점검하는 사례만 포함하였다. 핀란드는 특정한 예산 사업에 대해서만 기후 예산 태깅을 하므로 환경 친화적 예산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로 분류하였다.

5.1. 환경 친화적 예산의 시행 (2020년)

출처: OECD and EC (2020), *Joint Survey on Emerging Green Budgeting Practic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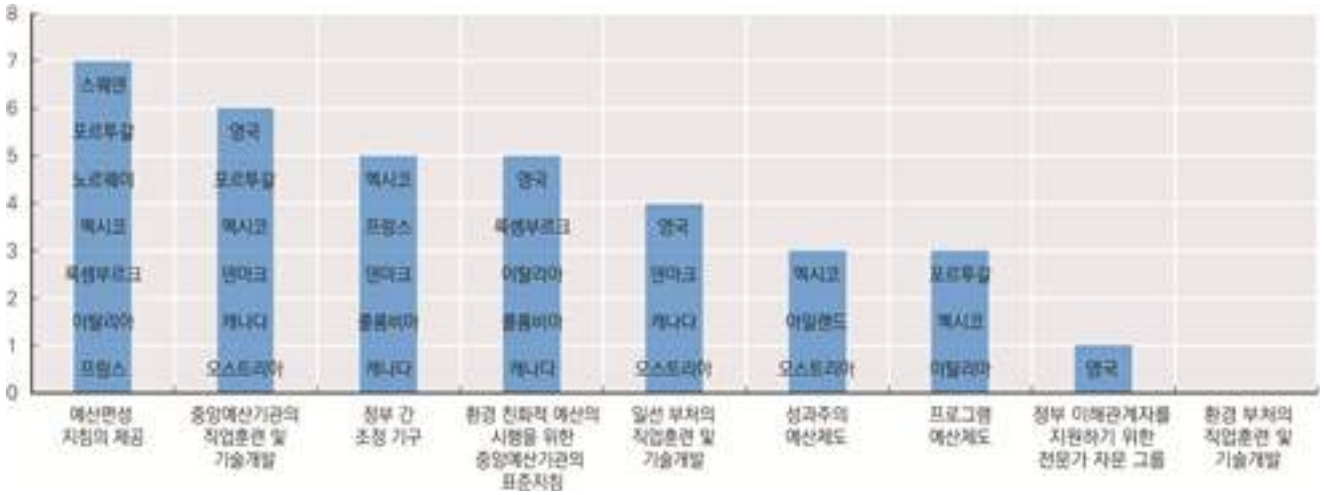
5.2. OECD 국가의 환경 친화적 예산의 공통 수단 (2020년)

국가명	사전·사후 환경영향 평가 (개별조치)	환경 비용-편익 분석 (개별 또는 모든 조치)	탄소영향평가	탄소 가격제(배출권 거래제, 탄소세 포함)	환경 친화적 세제 개혁	사전·사후 기후예산 태깅
오스트리아	●		●			
캐나다	●	●		●		
콜롬비아	●	●	●	●	●	●
덴마크	●	●	●		●	
프랑스	●	●	●	●		●
아일랜드	●	●	●	●	●	●
이탈리아	●	●	●			●
룩셈부르크						●
엑시코						●
네덜란드	●	●	●	●	●	
노르웨이	●	●	●	●	●	●
포르투갈	●			●	●	
스웨덴	●	●	●	●	●	
영국	●	●	●	●	●	
OECD 합계						
● 시행 국가	12	10	10	9	8	

출처: OECD and EC (2020), *Joint Survey on Emerging Green Budgeting Practic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812

5.3. 환경 친화적 예산의 시행을 지원하는 제도 (2020년)



출처: OECD and EC (2020), Joint Survey on Emerging Green Budgeting Practic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831

녹색 회복을 지원하는 환경 친화적 예산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정부는 공공 서비스, 가계 및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긴급 대응을 시행하였고, 전례 없는 재정적 조치를 취하였다. 기후 변화와 환경 오염은 위기의 회복 기간 동안에도 정부가 국가적, 국제적 녹색 목표를 달성하도록 만들었다. 회복 정책은 비용-효과적인 정책과 투자를 통해 팬데믹의 회복과 관련된 임시 지출의 재원을 마련하여 미래의 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을 높이고 기후 변화를 포함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돕는다. 환경 친화적 예산은 친환경 회복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데 도움을 제공한다. 최근 OECD-EU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환경 친화적 관점을 통합한 국가는 OECD 34개국 중 21개국(62%)이다(그림 5.4 참고). 가장 많이 시행되는 조치는 환경영향평가(21개국 중 8개국, 38%)이며, 기후 예산 태깅(21개국 중 6개국, 29%), 복구 기금 활용 시 녹색 조건 연계(21개국 중 5개국, 24%), 기후예산서 발간을 통한 회복 정책이 국가적 녹색 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가시화(21개국 중 1개국, 5%) 순으로 활용되고 있다(표 5.5 참고). 2020년 6월까지 설문조사에 응답한 OECD 국가 중 과반수(35개국 중 24개국, 69%)는 환경영향평가 향후 회복 정책에 친환경적 관점을 통합할 계획(환경영향평가, 복구 기금 활용 시 녹색 조건 연계, 지방정부의 환경 친화적 예산 도입 지원 등)임을 밝혔다. 환경 친화적 예산은 회복을 지원할 수 있으나 환경, 경제, 사회적 목표 간 상충 관계가 존재한다. 환경 친화적 회복 정책이라 하더라도 여타 사회적, 경제적 우선순위가 있는 정책에 대한 상당한 지출이 포함되기도 한다.

탄소 가격제와 관련 조세 정책 수단은 명시적으로 환경 친화적 정책은 아니지만, 녹색 목표에 기여하고 있다. 즉, 탄소 가격제는 탄소 집약적 자산에 대한 비용을 증가시켜 저탄소 투자와 소비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공공 재정을 회복하고 세입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한다(OECD, 2020). OECD 국가들의 환경 회복이 기대됨에 따라 조세 및 재정 정책에서 복지, 환경 보호, 기후 변화와 위기에 대한 회복탄력성의 장기적인 혜택을 검토하는 것은 녹색 전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OECD, 2020).

방법론 및 개념정의

'녹색 회복을 지원하는 환경 친화적 예산'의 자료는 2020년 OECD와 유럽 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한 환경 친화적 예산제도에 대한 설문조사(OECD and European Commission Joint Survey on Emerging Green Budgeting Practices)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는 OECD 35개 국가와 루마니아가 참여하였다. 응답자들은 주로 OECD 국가의 중앙예산기관 관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의 응답은 현재의 제도와 절차에 대한 자체 평가로 진행되었다. 환경 친화적 예산의 자료에는 중앙/연방 정부의 자료만 포함되었고, 지방정부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설문지의 일관성과 표준화를 담보하기 위하여 기존 제도 또는 2020년 6월 말 기준으로 계획된 제도를 고려하여 응답하도록 하였다. 본 보고서에는 제시되지 않았지만, 전체 데이터 셋에는 유럽 연합 이외의 다른 OECD 국가들도 포함된다.

환경 친화적 예산이란, 환경 및 기후 변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과 관련된 정책 결정 수단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환경 친화적 예산에는 예산 및 재정 정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와 국가 및 국제 협약의 이행에 대한 일관성 평가가 포함된다. 환경 친화적 예산은 담론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20), "Green budgeting and tax policy tools to support a green recovery",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d02ea23-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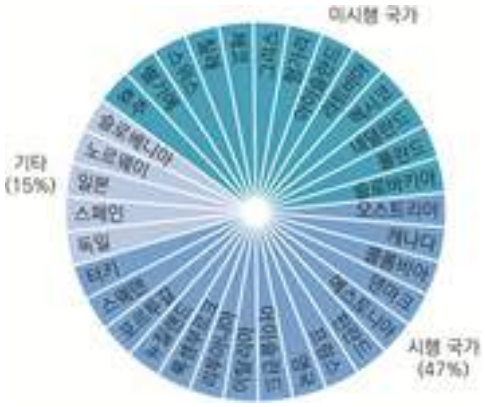
그림 설명

5.4 & 5.5. 이스라엘, 한국,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루마니아는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환경 친화적 관점을 통합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5.4. 바이러스 억제, 보건 시스템, 경제, 기업 및 개인 지원 등 여타 분야에 집중하기 위하여 환경 친화적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다. "기타"에는 독일의 자동차 산업과 미래 가치 사슬의 구조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 일본의 태양광 발전 시설, 공공장소의 고성능 환기 시스템 설치 등의 조치, 노르웨이의 환경 영향을 고려한 정부 조치가 포함되었다. 또한, 슬로베니아의 녹색 전환을 고려한 코로나19 회복 계획 수립, 스페인 생태전환부의 코로나19와 관련된 환경 친화적 조치(예: 폐기물 관리) 등도 포함되었다.

5.5. 환경 친화적 관점을 코로나19 회복 조치 또는 다른 유형의 전략에 통합하는 국가를 보여준다. 아이슬란드는 에너지 전환, 그린 솔루션, 환경 이슈에 대한 투자를 코로나19 투자에 포함하였다. 핀란드는 정부의 탄소 중립성 목표를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강조하였다. 포르투갈은 경제 및 사회 안정화 프로그램에 지속가능한 건물, 수계망, 지속가능한 모빌리티, 산림 관리 등의 환경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5.4. 2020년 6월 말 기준, 환경 친화적 관점에서
코로나19 대응 조치를 시행한 국가



출처: OECD and EC (2020), *Joint Survey on Emerging Green Budgeting Practic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850

5.5. 2020년 6월 말 기준, 코로나19 대응 조치에 환경 친화적 예산의 활용 수단

국가명	사전 환경영향 평가	기후예산 태깅	녹색 조건 연계	국가적 기후 및 환경 목표에 관한 사후 감사	정책이 환경 목표를 지원하는 방법에 관한 보고서 발간	훈련 또는 역량 개발	비장정부 지원	기타
오스트리아	●							
캐나다	●		●				●	
콜롬비아	●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
프랑스	●	●	●		●			
독일								●
아이슬란드		●						●
이탈리아			●					
일본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뉴질랜드	●							
노르웨이								●
포르투갈						●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스웨덴			●					
터키	●							
영국	●		●					
OECD 합계								
● 시행 국가	8	6	5	1	1	1	1	8

출처: OECD and EC (2020), *Joint Survey on Emerging Green Budgeting Practice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869

지출 검토 제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OECD 국가 중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국가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OECD, 2019). OECD에 따르면, 지출 검토 제도는 총지출을 통제하여 재정 여력을 창출하고, 국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을 배분하여 정부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단이다.

2020년 OECD 37개국 중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31개국(84%) 이고, 이중 20개국(65%)은 매년, 11개국(35%)은 주기적으로 지출 검토를 실시한다(그림 5.6 참고). 벨기에, 체코, 스위스, 터키 등 4개 국가는 향후 지출 검토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 반면,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는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2011년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한 국가는 16개국에 불과하였으나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다(OECD, 2019). 2018년~2020년에는 신규 OECD 가입국인 2개국을 포함하여 3개국이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증가 속도는 둔화되고 있다.

지출 검토 제도는 정부가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 다른 목적을 갖는다.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출 검토를 활용하는 국가는 2018년 71%에서 2020년94%(31개국 중 29개국)로 증가하였다(OECD, 2019). 지난 3년간 단기적인 지출 삭감 또는 중기적인 세출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출 검토를 활용하는 국가는 79%에 달하였으나, 2020년에는 31개국 중 20개 국가(65%)가 총지출을 통제하기 위하여 지출 검토를 활용한다. 이러한 변화는 세출 절감이 초기 목적이었던 지출 검토 제도의 발전 과정과 제도 자체의 유연성과 적응성을 보여준다.

지출 검토 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용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책임이 중요하다. 지출 검토 과정 중 정부 간 협력을 보장하고, 지출 검토의 목적, 범위, 권고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와 책임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상당수의 국가에서는 고도의 정치적 참여에 의해 지출 검토에 관한 주요 결정이 이루어진다. 지출 검토를 활용하는 OECD 31개국 중 15개국(48%)은 내각 및 대통령(혹은 수상)이 검토 주제(review topic)를 승인하고, 12개국(39%)은 지출 검토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한이 내각 및 대통령(혹은 수상)에 있다. 반면, 31개국 중 8개국(26%)은 재무부 장관이 단독으로 혹은 일선부처 장관과 합동으로 지출 검토 주제와 지출 검토 보고서를 최종 승인한다(온라인 표 G.28 참고). 한편, OECD 9개국이 응답한 결과, 검토 의무서(terms of reference; ToRs)를 승인하는 절차는 조정그룹(steering group) 또는 실무 단위에서 진행되므로 비교적 덜 정치적인 결정 과정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지출 검토 제도'의 자료는 2020년 OECD에서 수행한 지출 검토에 대한 설문조사(2020 OECD Spending Review Survey)를 활용하였다. 설문은 주로 OECD 국가의 고위직 예산 관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는 OECD 37개국,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로 현재의 관행과 절차에 기반하여 설문에 응답하였다. 중앙정부와 연방정부의 지출 검토 자료만 포함하며, 지방정부의 자료는 제외하였다. 지출 검토는 정해진 분야의 기존 지출을 분석하여 예산 절약의 대안을 모색하고 이를 예산과 연계하는 협력적 과정이다. 지출 검토의 목적은 1) 정부의 총지출 수준 관리, 2) 정부의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의 배분, 3)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이다. 검토 의무서(terms of reference; ToRs)의 내용은 국가마다 다르지만, 지출 검토의 배경, 목적, 거버넌스, 범위, 지침 및 참고 자료의 준비, 정보에의 접근성, 예산, 결과물, 일정표 등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OECD (forthcoming), *OECD Best Practices for Spending Reviews.*

OECD (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307957-en.

EC (2020), "Spending reviews: Some insights from practitioners", *Discussion Paper* No. 135,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https://ec.europa.eu/info/publications/spending-reviews-some-insights-practitioners_en.*

그림 설명

5.6 & 5.7 & G.28. 헝가리와 슬로베니아는 지출 검토를 활용하지 않고,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 없다. 벨기에, 체코, 코스타리카, 스위스, 터키는 지출 검토 제도의 도입을 고려중에 있다. 벨기에는 2021년 3월 지출 검토 제도의 시범 운영을 시작하였다.

5.6. 루마니아는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하였으나, 매년 지출 검토를 실시하지 않는다.

5.7. 루마니아는 총지출 수준의 통제, 우선순위에 따른 재원의 배분, 정책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지출 검토 제도를 도입하였다.

표 G.28. (지출 검토 과정의 주요 의사결정 주체(책임 주체))는 부록 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5.6. 지출 검토 제도의 도입 현황 (2020년)

출처: OECD (2020), *Spending Review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888

5.7. 최근 3년간 지출 검토의 주된 목적 (2020년)

출처: OECD (2020), *Spending Review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907

독립적 재정기구 : 코로나19위기 시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OECD 국가들은 팬데믹 초기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역사상 가장 큰 재정 지출을 단행하였다. 동시에 재정 지출을 면밀히 심의해야 할 의회는 정부의 긴급 법안 제정으로 인하여 운영상의 제약과 보건 관련 셧다운에 직면하였다. 이때, 독립적 재정기구는 정책 결정자를 위한 분석을 제공하였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코로나19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설립된 대다수의 독립적 재정기구의 역량을 시험할 수 있는 첫 번째 계기가 되었다.

OECD 독립적 재정기구는 코로나19 위기 초 세 가지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표 5.8 참고). 첫째, OECD 35개국 중 33개국(94%)에서는 독립적 재정기구가 코로나19가 경제와 예산에 미치는 영향을 신속하게 분석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조치에는 정부 정책의 가정에 대한 독립적 검토(22개국, 63%), 자체 보고서 작성(21개국, 60%), 경제 및 재정 시나리오 분석(17개국, 49%), 경제 및 공공 재정 전망치 정보의 갱신(14개국, 40%), 위원회 및 개별 의원에 분석 지원(10개국, 29%) 등이 포함된다. 정부는 신속한 대응과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분석의 공개를 주저하였기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는 독립적 재정기구가 유일한 분석 기관에 해당하였다. 둘째, OECD 35개국 중 16개국(46%)에서는 독립적 재정기구가 재정준칙의 예외조항이 적용되는지를 감시하거나 허가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5월 중순, 독립적 재정기구는 팬데믹에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예외조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셋째, 독립적 재정기구는 의회의 요청 또는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법안에 대한 비용을 추계한다. OECD 35개국 중 14개 국(40%)에서는 위기 발생 이후 1달 이내에 독립적 재정기구가 정부와 의회의 코로나19 대응 조치의 비용을 추계하였다.

또한, 독립적 재정기구는 위기 발생 동안에 투명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독립적 재정기구는 행정부의 권한 남용 행태를 감독하고, 의회 위원회 회의가 원격으로 신속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였다. 또한, 정부 계획에 누락된 정보를 점검하고, 이행되지 못한 정부의 발표에 관한 interactive summaries를 발간하였다(OECD, 2020a).

독립적 재정기구는 정부가 경제를 회복하고 중기 전략 목표에 따른 예산 편성이 가능하도록 정책 토론을 지원하고, 공공 재정의 위험을 점검하며, 공공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와 의회의 노력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독립적 재정기구'의 자료는 2020년 3월~5월 20일 수집된 2차 연구 자료로 OECD 의회예산처 및 독립적 재정기구 네트워크가 설문조사를 검증하였다. 데이터 셋에는 브라질(독립적 재정기구가 설립된 OECD 주요 협력국)과 유럽 재정위원회(유럽 위원회의 독립적 재정기구) 등 29개 OECD 국가를 대표하는 35개 국가 기관이 포함되었다. 일부 국가(오스트리아, 벨기에, 핀란드, 그리스, 아일랜드, 네덜란드)에서는 2개의 기관에서 독립적 재정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전체 데이터 셋에는 지방정부의 독립적 재정기구도 포함하고 있으나, 본문에서는 이를 제외하였다. 독립적 재정기구는 재정 정책과 예산의 성과를 분석하고 감독하는 비당파적 기구이다. 독립적 재정기구에는 행정부와 의회로부터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갖는 재정 평의회, 재정 기획국, 의회예산처 등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OECD (2020a),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Promoting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during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853f8be-en.*

OECD (2020b), "Legislative budget oversight of emergency responses: Experiences during the coronavirus (COVID-19) pandemic",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a4f2ab5-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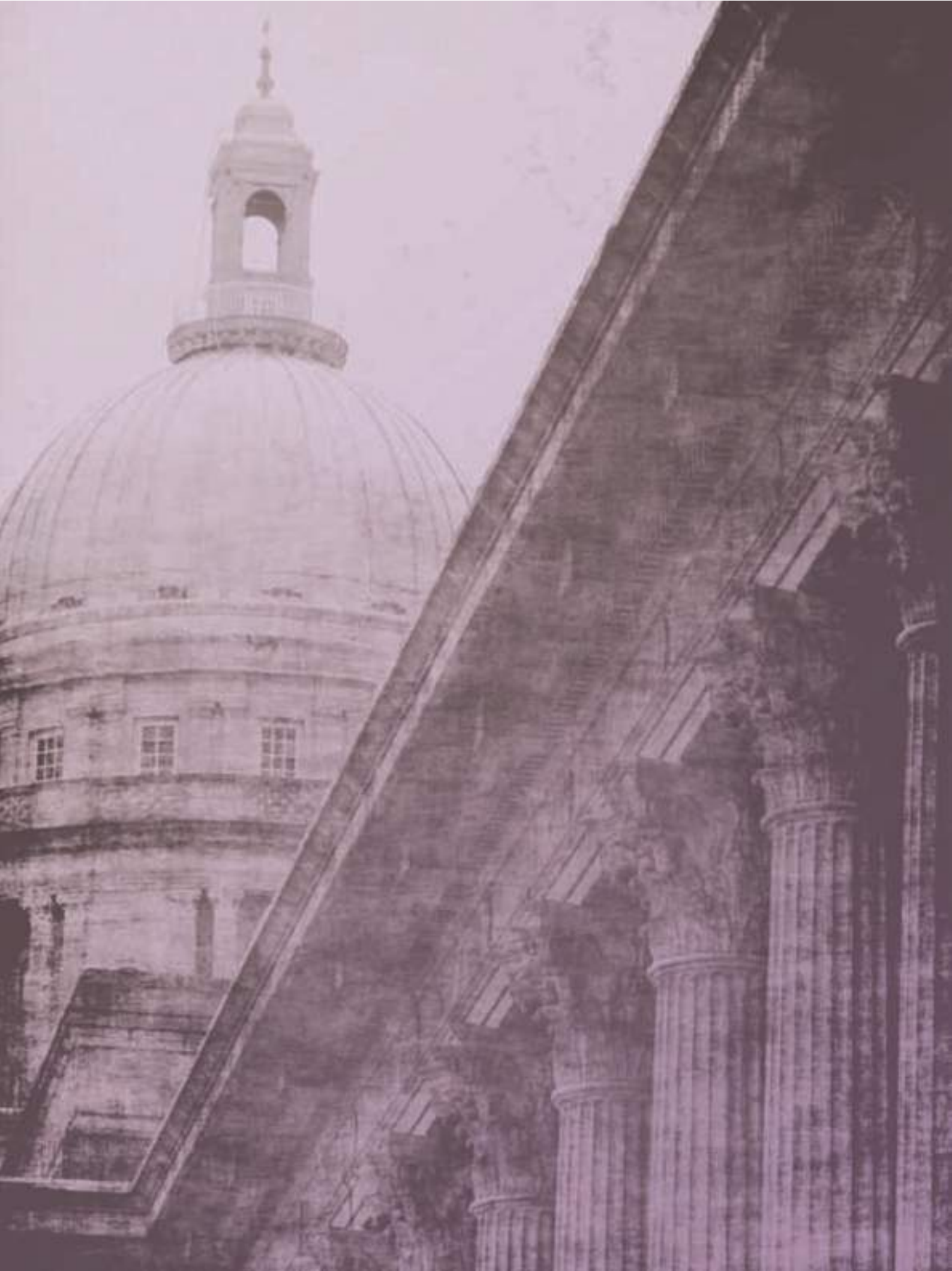
5.8. 브라질의 독립적 재정기구와 유럽 위원회의 독립적 자문 기구인 유럽 재정위원회는 표에는 포함되어 있지만, 총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0년 5월 20일 기준으로 독일(정부 정책의 가정에 대한 평가), 호주 및 포르투갈(경제 및 재정 시나리오 분석), 그리스 의회 및 포르투갈(경제 및 재정 추계), 독일 및 아이슬란드(예외조항의 이행 감독)에서는 독립적 재정기구가 해당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나 본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5.8. 코로나19 위기발생 한 달 이전에 추진된 독립적 재정기구의 조치(2020년 5월 20일 기준)

	정부 정책의 가정에 대한 평가	자체 보고서	경제 및 재정 시나리오 분석	경제 및 재정전망치 갱신	위원회/의원 요청 대응	재정준치 예외조항의 이행 감독	긴급 법안의 비용추계
호주		✓			✓		
오스트리아 – 의회	✓	✓	✓	✓		✓	✓
오스트리아 – 의회예산처	✓	✓	✓	✓			✓
벨기에 – 의회	✓					✓	
벨기에 – 기획국		✓	✓	✓			
캐나다	✓	✓	✓		✓		✓
칠레	✓	✓	✓	✓			
체코		✓	✓			✓	✓
덴마크		✓	✓	✓			
에스토니아	✓						
핀란드 – 감사원	✓	✓			✓	✓	
핀란드 – 의회	✓						
프랑스	✓					✓	
독일							
그리스 – 의회예산처			✓	✓			✓
그리스 – 의회	✓	✓	✓			✓	
헝가리	✓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의회	✓		✓			✓	
아일랜드 – 의회예산처		✓			✓		✓
이탈리아	✓	✓	✓	✓	✓	✓	✓
한국	✓	✓	✓	✓	✓		✓
라트비아	✓	✓			✓	✓	
리투아니아	✓			✓		✓	
룩셈부르크							
멕시코		✓			✓		✓
네덜란드 – 기획국		✓	✓	✓			✓
네덜란드 – 의회	✓						
포르투갈	✓	✓				✓	
슬로바키아		✓	✓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	
스웨덴	✓						
영국	✓	✓	✓	✓		✓	✓
미국		✓		✓	✓		✓
OECD 독립적 재정기구 합계	22	21	17	14	10	16	14
브라질		✓	✓	✓	✓	✓	✓
유럽 재정위원회		✓					

출처: OECD (2020),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Promoting fiscal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during the Coronavirus(COVI D-19) pandemic", *https://doi.org/10.1787/d853f8be-en.*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926



6. 인적자원관리

공무원의 유치와 채용
고위공무원에 대한 관리
공공서비스의 다양성과 포용성
공공서비스의 코로나19 대응 인력관리
직원몰입 측정

공무원의 유치와 채용

오늘날 정부는 정책 및 서비스 제공에 관련한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점점 더 다양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유치하고 채용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법률 또는 회계와 같은 전통적인 기술과 데이터 사이언스나 사용자 경험 디자인과 같은 현대적인 기술들도 있다. 이러한 기술을 두고 정부는 민간 부문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더 넓은 범위의 공무원 후보자에게 접근하는 한편, 후보자 풀의 다양성과 질을 개선하고 있다.

OECD는 필요한 기술역량을 갖춘 공무원 후보자를 모집하기 위해 사전채용제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지표를 개발하였다(그림 6.1 참고). 이러한 평가도구들은 정부가 지원자들을 선택할 수 있는 주체임을 이해시킴과 동시에 지원자들의 동기와 임금에 걸맞는 능력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캐나다, 한국, 뉴질랜드에서는 이러한 도구들을 가장 폭넓게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는 공공서비스의 다양한 가치를 설명하고, 공직에 참여가능한 여러 기회를 설명하는 공무원 채용 포털을 운영하고 있다. 반면,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터키와 같은 국가들의 경우 유연한 급여제도를 운영하지 않거나, 비교적 적은 수의 의사소통 채널을 가진 고용체계로 인해 채용과정의 제약이 존재한다.

정부는 지원자의 복잡한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기술을 평가할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기술들은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에게서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표6.2는 OECD 32개국 중 19개국(59%)이 표준화된 시험을 통해 분석 및 인지 능력을 평가하고 20개국(62%)이 대면심사를 통해 분석 및 인지 능력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24개국(75%)은 대면심사를 통해 행동역량을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평가센터를 운영하면서 실무에서의 인지능력 또는 행동역량을 심사하는 국가는 OECD 32개국 중 13개국 (41%)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26개국(81%)이 면접단계에서 지원자들의 공직 지원동기에 관련하여 심사를 진행하지만, 공직 지원동기에 대한 심사 시 평가센터를 활용하는 국가는 8개국(25%) 에 불과했다(표 6.2 참고).

정부는 후보자들이 공직에 지원하기만을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서 공직의 유치와 채용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몇몇 주요 국가들은 적극적으로 채용대상을 식별하고, 여러 전략을 활용하여 채용과정을 설계한다. 이는 표준화된 시험에만 기반을 둔 폐쇄적인 경력기반 체제에서는 제약이 있다. 평가하기 어려운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 점점 더 전문화되고 있는 채용제도는 복잡하고 불확실한 환경에 있는 공공부문 채용 담당자에게 공직 지원자들을 식별할 수 있는 더 많은 도구를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전문화된 채용제도를 운영하고, 선발담당 인력들을 위한 기술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인적자원관리'의 자료는 2020년 OECD의 공공 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 설문조사(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의 채용, 유지, 유치 부문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앙정부 내 인적자원관리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며,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해당 설문은 OECD 회원국(칠레, 아이슬란드 제외)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개별 국가마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중앙정부의 조직 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는 공무원(public servant)의 범위를 특정한 공법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규정, 단체협약, 노동법 등 다양한 계약제도에 의해 정규직 또는 기간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은 포함하였지만, 그 외 다른 고용 제도에 의해 계약된 전문가들(예: 의사, 교사, 경찰, 군대, 사법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한편, 행동역량은 측정방법에 따라 신뢰도가 달라지며, 실무역량을 예측하기 위해 활용된 개인특성 지표이다. 지원자가 공직에 매력을 느끼는 요소들에 대한 종합지표는 1) 채용자료에서 강조된 요소, 2) 수요가 높은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대상으로 더 많은 지원자와 더 우수한 지원자를 유치하기 위한 방안, 3)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수단사용 여부, 4) 적절한 급여체계, 5) 과소대표된 집단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구성된다. 지수의 범위는 0(선제적 채용제도 활용) -1(선제적 채용제도 활용)이며, 이 외 종합지표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E에서 참조가능하다.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와 상대적 중요성은 전문가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수들은 시범적인 지표로서 제시되었고,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들의 누락된 자료는 평균으로 대체하여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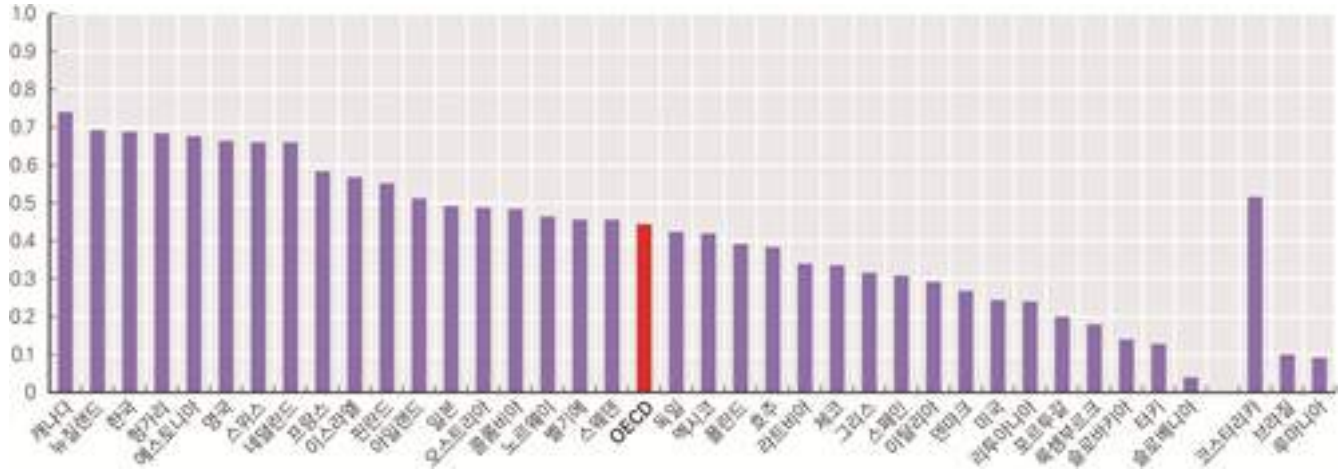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20en/ instruments/OECD-LEGAL-0445.*

그림 설명

칠레와 아이슬란드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6.2. 일본은 시험 종류에 따라 채용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자료에 포함하지 않았다. 덴마크는 중앙정부에서의 공통된 프로세스가 없기 때문에 제외되었다. 호주는 각 기관이 채용절차 결정하여 제외하였다.

6.1. 예비지표: 사전채용제도 활용(2020 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945

6.2. 채용절차 상 인지능력, 행동능력, 동기 평가(2020년)

	이력서 심사	표준 시험	대면심사	평가센터	평판조회
오스트리아	◆❖		◆❖		
벨기에		■◆	◆❖	◆	
캐나다	■◆❖	■◆❖	■◆❖	■◆❖	■◆❖
콜롬비아		■◆❖	■◆❖		
체코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프랑스	■❖	■	■		
독일			■◆❖	■◆❖	
그리스					
헝가리	❖		■◆❖	■◆	
아일랜드		■	◆❖	■◆	
이스라엘		■◆❖	◆❖	■◆❖	
이탈리아		■			
한국		■	■◆❖	■◆❖	
라트비아		■	■◆❖	■◆	◆
리투아니아			■◆❖		
룩셈부르크		■	◆❖		
멕시코	◆	■◆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슬로바키아		■	■◆❖	■◆	
슬로베니아			■◆❖		
스페인		■		■	
스웨덴	◆	■	■❖		◆
스위스	❖		■◆❖		
터키		■	◆❖		
영국	◆❖	■◆	■◆❖	■◆❖	
미국		■◆	■		
OECD 전체					
■ 문서적/인지적 역량	4	19	20	13	1
◆ 행동역량	6	7	24	13	6
❖ 동기	8	3	26	8	4
브라질		■			
코스타리카	■◆❖				■◆❖
루마니아			◆❖		

출처: OECD (2020),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964

고위공무원에 대한 관리

정부의 주요 기능을 이끌고 개선하는 고위공무원은 정부 효율성의 핵심이다. 고위공무원은 정치적 방향을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경제적 생산성이 있는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고위공무원들은 위험을 관리하고 결과에 책임을 지면서, 혁신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급변하는 정치적 의제들에 대응하고 방대한 공공조직을 관리하고 변형해야 한다. 그리고 소속 직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영감을 줘야함은 물론, 시민, 협력 파트너, 이해관계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이 모든 행위는 고위공무원의 직업윤리와 청렴성을 최고 수준으로 개발시키는 것과 함께 수행된다. 고위공무원들에게 이러한 과제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 기인한 변화로 인해 더욱 어려워진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OECD 국가들은 고위공무원들이 업무에 효과적이고 필요한 기술과 운영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OECD는 최근 고위공무원 관리에 필요한 '리더십 역량 개발정책'과 '성과 및 책임성 관리 정책'(Gerson, 2020)을 식별할 수 있는 분석모델을 개발하여 예비지표에 포함하였다. 캐나다, 이스라엘, 한국, 영국은 해당 지표에 관련한 정책들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들이다. 예를 들어, 한국의 고위 공무원을 위한 역량평가센터는 고위공무원들이 복잡한 정책문제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에는 역량 프레임워크를 통한 리더십 역량의 정의, 리더십 역량을 가진 인력의 채용, 리더십 역량을 배우고 개발할 수 있는 기회부여 등이 포함된다. 캐나다, 프랑스, 아일랜드, 네덜란드, 영국은 이러한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정책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국가들이다. 성과 및 책임성 관리 정책에는 강력한 성과관리 시스템 및 책임성 프레임워크의 활용이 수반된다. 해당 영역에서 캐나다, 이탈리아, 한국, 멕시코, 영국은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6.3 참고).

표 6.4는 고위 공무원의 임용체계가 다른 공무원의 임용체계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가장 일반적인 구성요소는 보다 집권화된 채용제도와 고용안정성(OECD 34개국 중 21개국, 64%)으로 이해충돌 방지와 성과관리(OECD 34개국 중 17개국, 50%)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고위 공무원의 공공서비스를 강화하는 방안 중 하나로 공공서비스 내에 미래의 고위공무원들을 위한 파이프라인을 개발하는 방안을 활용한다. 잠재력이 높은 중간 관리자들 사이에 기술을 구축하는 인재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고위공무원 인재풀을 확보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캐나다와 영국만이 미래의 고위공무원들을 선발하기 위한 인재관리를 활용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인적자원관리'의 자료는 2020년 OECD의 공공 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 설문조사(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의 채용, 유지, 유치 부문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앙정부 내 인적자원관리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며,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해당 설문은 OECD 회원국(칠레, 아이슬란드 제외)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개별 국가마다 공무원에 대한 정의와 중앙정부의 조직 체계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설문조사에서는 공무원(public servant)의 범위를 특정한 공법 또는 법률에 의해 규정된 근로자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으로 공무원 규정, 단체협약, 노동법 등 다양한 계약제도에 의해 정규직 또는 기간제로 고용계약을 체결한 공무원은 포함하였지만, 그 외 다른 고용 제도에 의해 계약된 전문가들(예: 의사, 교사, 경찰, 군대, 사법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함하지 않았다. 고위공무원 직급에 대한 정의는 부록 D를 참조할 수 있다.

종합지표 내 공공서비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관리는 다음과 같은 2가지 부문으로 구성된다. 첫번째는 리더십 능력의 개발이고, 두번째는 성과 및 책임성 관련 평가도구이며, 각 부문은 관련 질문들에 대한 답변으로 측정된다. 지수의 범위는 0(공공서비스 고위직급에 대한 관리 정책 없음)- 1(공공서비스 고위직급에 대한 관리 정책 있음)이다. 종합 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부록 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수를 구성하는 변수와 상대적 중요성은 전문가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수들은 예비지표로서 제시되었고,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들의 누락된 자료는 평균으로 대체하여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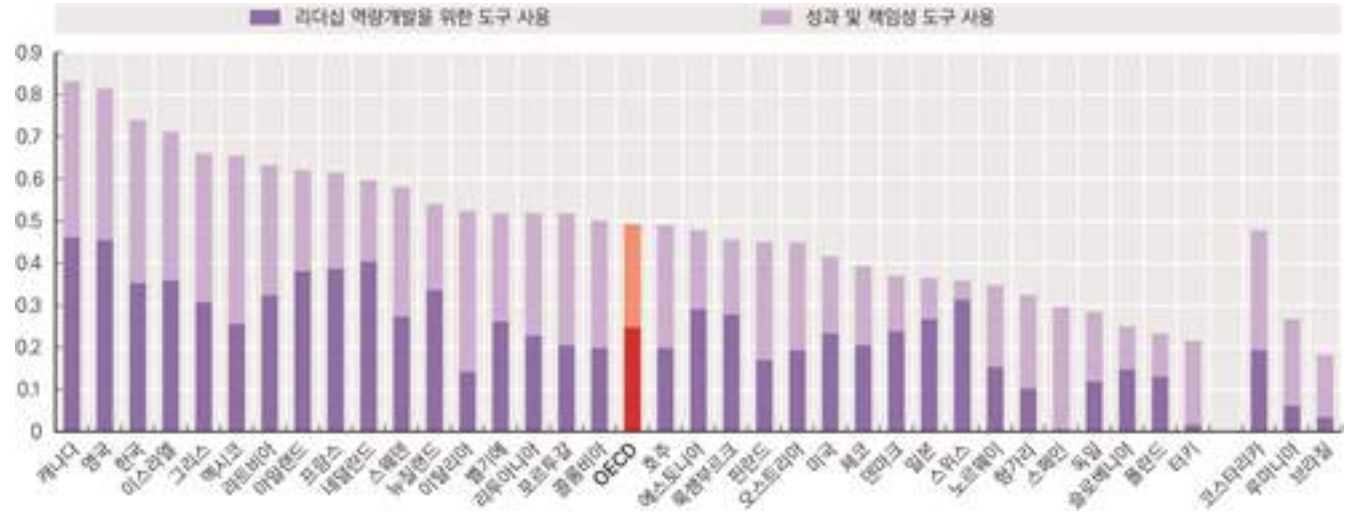
Gerson, D. (2020), "Leadership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Towards senior civil service systems i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40,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ed8235c8-en.*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20en/instruments/OECD-LEGAL-0445*.

그림 설명

칠레, 아이슬란드, 슬로바키아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슬로바키아의 고위공무원은 공식적인 집단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6.3. 예비지표: 고위공무원 관리 (2020년)



출처: OECD (2020),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7983

6.4. 고위공무원 고용 체계의 특징 (2019년)

국가	고위공무원과 다른 공무원의 차이점							
	고위공무원은 비교적 집권화된 과정으로 모집된다	고위공무원은 초기부터 구분되며, 경력관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인다	상대적으로 이해상충을 피하는 것을 중요시한다	상대적으로 성과관리에 더 중점을 둔다	고위공무원은 급여 중 성과와 연계된 부분이 더 높다	직위에 임명되는 기간이 저 짧다(예: 기간이 고정된 계약)	다른 공무원보다 쉽게 해고되거나 강등될 수 있다	차이 없음, 모든 공무원이 동일한 고용체계 하에 있음
호주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벨기에	●	○	○	●	●	○	●	●
캐나다	●	●	●	●	●	●	○	○
콜롬비아	●	○	●	●	○	●	●	●
체코	○	○	●	○	○	○	●	●
덴마크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핀란드	●	○	●	●	●	○	●	●
프랑스	●	○	●	●	●	●	○	●
독일	○	○	○	○	○	○	○	●
그리스	●	○	●	●	○	●	○	○
헝가리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일본	●	○	○	●	○	○	○	○
한국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멕시코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폴란드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스페인	○	○	●	○	○	○	●	●
스웨덴	●	○	○	●	○	○	●	●
스위스	○	○	○	○	○	○	○	○
터키	○	○	○	○	○	○	●	●
영국	●	●	●	●	●	●	○	●
미국	○	○	●	○	○	●	●	●
OECD 전체								
● 예	21	2	17	17	11	9	15	21
○ 아니오	13	32	17	17	23	25	19	13
브라질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루마니아	●	○	○	○	○	○	○	○

출처: OECD (2020),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002

공공서비스의 다양성과 포용성

공공서비스 인력의 다양성과 포용성 증가는 최근 몇 년 동안 OECD 국가의 우선 순위로 부상하였다. 다양한 인력은 여러 관점과 기술을 활용해 정책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설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사람들의 신뢰를 높이고 민주주의를 강화하며 공공부문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 (Nolan-Flecha, 2019). 효과적인 다양성 및 포용성 확보 전략을 위해서는 능력에 기반한 고용 정책, 공개 채용 시스템, 차별을 방지할 강력한 법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많은 국가들은 인력의 대표성 격차를 식별하여, 과소대표된 집단의 인력을 유치하고 채용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한다.

그림 6.5에 제시된 시범지표는 공공부문 인력의 다양성, 다양성을 측정하고 추적하기 위한 자료의 가용성, 모든 다양성 수준의 직원을 유치하고 채용하기 위한 제도 활용 측면을 포괄하고 있다. 위의 세가지 요소를 모두 결합했을 때, 캐나다, 이스라엘, 뉴질랜드, 영국은 상위 4개국에 속하며, 프랑스,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는 인력의 다양성 수준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국가에 속한다. OECD 국가들의 데이터 보호로 인해, 다양성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주, 오스트리아, 콜롬비아는 연령, 성별, 장애, 교육 수준별로 세분화되고, 표준화된 기록을 수집하고 집중하는 것에 높은 점수를 부여받았다. 한편, 한국, 네덜란드, 스위스는 과소대표된 집단을 적극적으로 고용하거나 채용과정에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전담교육, 인턴십 프로그램과 같은 수단을 가장 많이 활용하는 국가이다.

표 6.6은 과소대표 집단에 대한 정책과 구체적인 목표들에 대해 설명한다. 이 때 목표들은 측정가능한 대상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준다. OECD 33개 국가 중 24개(73%) 국가는 공공서비스 인력 구성 시 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한 정책을 운영하며, 14개국(42%)은 공공서비스 전체 인력 구성에서 성별 균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한편, OECD 7개국(21%)은 고위공무원단 내 인력의 성균형만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들은 차츰 중요해지고 있다. 일례로 2016년에는 OECD 국가의 37%만이 장애인 고용 목표를 가지고 있었고, 29%만이 여성채용을 목표로 설정했었다(OECD, 217). 국가는 장애인, 이민자, 소수민족과 같이 과소대표될 수 있는 집단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하기 보다는 전반적인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선호한다. 프랑스, 헝가리, 한국, 뉴질랜드는 공공서비스 인력의 다양성을 구축하기 위해 중앙 및 연방 정부에서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활용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인적자원관리'의 자료는 2020년 OECD의 공공 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 설문조사(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앙정부 내 인적자원관리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며,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해당 설문은 OECD 회원국(칠레, 아이슬란드 제외)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본 조사에서 공무원은 정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때 공무원은 다양한 계약체계(공무원법, 단체협약, 노동법)에 근거해 고용될 수 있으나, 해당 조사에서 더 넓은 범위의 공공부문 근로자(예: 의사, 교사, 경찰, 군대, 사법부, 선출직 공무원)는 제외된다.

정부인력 내 다양성 개발에 관련한 시범지표는 1) 인력의 다양성, 2) 다양성과 포괄성을 측정하기 위한 자료의 가용성, 3) 다양하고 포괄성 있는 인력개발을 위한 수단사용 등으로 구성된다. 각 부문은 몇가지 관련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구성되며, 지수 0 (다양한 중앙정부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낮은 노력수준)-1(높은 노력수준)까지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E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지수를 구성하는 변수와 상대적 중요성은 전문가 판단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러한 지수들은 시범적인 지표로서 제시되었고, 더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 각 국가들의 누락된 자료는 평균으로 대체하여 추정하였다.

참고문헌

Nolan-Flecha, N. (2019), "Next generation diversity and inclusion policies in the public service: Ensuring public services reflect the societies they serve",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1691451-en*.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20en/instruments/*OECD-LEGAL-04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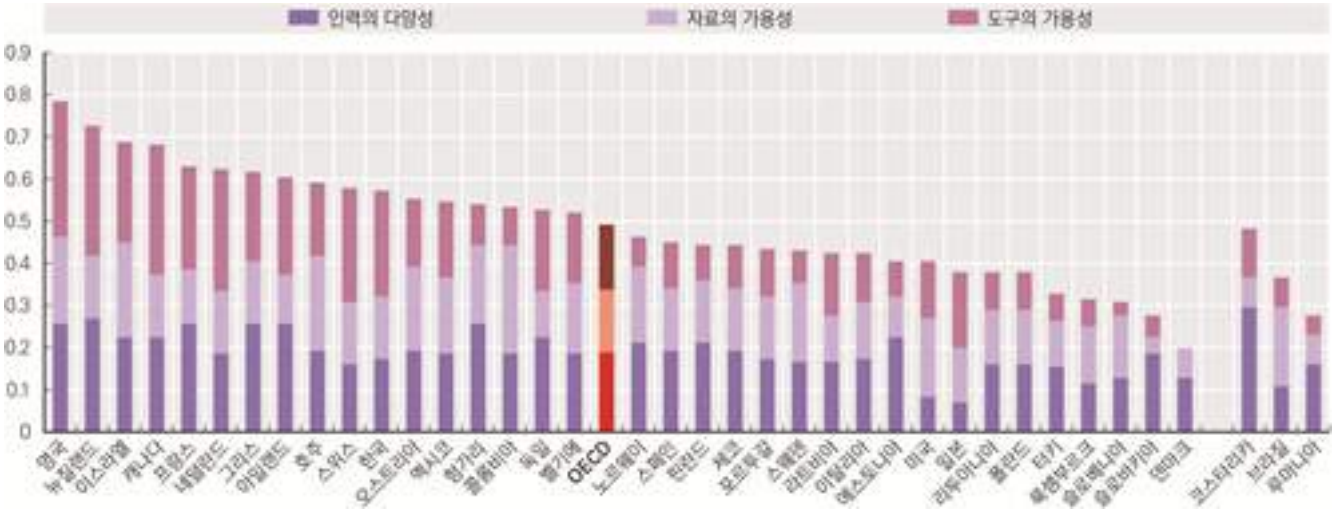
OECD (2017), *Government at a Glance 201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gov_glance-2017-en*.

그림 설명

칠레와 아이슬란드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지표에 사용된 고위 공무원의 성별 자료는 오스트리아의 경우 D1, 호주의 경우 D2만 참조하며, 해당 내용은 부록 D를 참조할 수 있다.

6.6: 덴마크와 스웨덴은 중앙정부의 공통된 절차가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6.5. 예비지표: 중앙정부 인력의 다양성 개발 (2020년)



출처: OECD (2020),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 OECD (2020), Survey on th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021

6.6. 중앙정부에서 과소대표집단의 대표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및 특정대상 활용(2020년)

	여성	사회적 약자	소수민족	원주민	장애인	이민자 배경	젊은 전문가	성소수자	참전용사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벨기에	◆	■	⦿	⦿	■	⦿	⦿	⦿	⦿
캐나다	■	⦿	■	■	■	⦿	□	⦿	□
콜롬비아	◆	□	□	□	■	⦿	■	⦿	⦿
체코	■	□	□	⦿	■	⦿	⦿	⦿	⦿
덴마크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핀란드	■	■	⦿	⦿	■	■	■	■	■
프랑스	■	⦿	□	⦿	■	□	□	□	⦿
독일	□	□	□	□	◆	□	□	□	□
그리스	■	■	■	⦿	■	⦿	■	⦿	⦿
헝가리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일본	■	■	⦿	⦿	■	■	■	⦿	■
한국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폴란드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터키	■	■	■	⦿	■	⦿	⦿	⦿	■
영국	⦿	⦿	⦿	⦿	⦿	⦿	⦿	⦿	■
미국	.	.	.	.	.	.	.	.	.
OECD 전체									
■ 예, 중앙/연방의 전체행정부 대상	14	6	6	4	24	3	6	1	5
◆ 예, 하지만 대상은 고위공직자만 해당	7	0	0	0	1	0	0	0	0
□ 구체적인 대상은 없으나 정책이 시행중	4	8	11	4	5	10	7	10	2
⦿정책이나 대상이 없음	8	19	16	25	3	20	20	22	26
브라질	⦿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루마니아	⦿	⦿	⦿	⦿	■	⦿	⦿	⦿	⦿

출처: OECD (2020) *Survey on the Composition of the Workforce in Central/Federal Governmen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040

공공서비스의 코로나19 대응 인력관리

공무원들은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서 국민의 건강, 안전, 지원을 유지하기 위한 비상조치들을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공공서비스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한편, 원격 환경에서의 새로운 업무방식을 개발하고, 새로운 수단과 기술을 통합하는 등, 전례없는 민첩성과 탄력성을 요구받으며 적응해야 했다. 또한 통제와 봉쇄령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공무원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도 시민들에게 공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새로운 수단과 관행을 개발하고 활용하였다.

익숙하지 않았던 원격근무는 많은 국가와 행정부에서의 주요 업무 방식이 되었고, 종종 유일한 방식이 되기도 했다. 2020년 봄 코로나19 팬데믹의 1차 확산기 동안 OECD 25개국 중 19개국(76%)에서 공무원의 절반 이상이 원격근무를 했으며(그림6.7), 대부분은 몇 년 동안 원격근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다수의 국가는 기존의 수단과 정책으로 원격근무가 가능하였다. OECD 34개국 중 31개국(91%)은 공무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 의사소통 통로를 사용하였으며, 22개국은 이미 원격근무가 가능한 IT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다. 또한 20개국은 원격 근무 규정 및 정책을 변경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환경변화의 수준에 대응하여 OECD 34개국 중 23개국(68%)은 보편적이고 폭넓게 보급된 화상회의 및 기타 통신수단을 개발해야 했다(표 6.8).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모든 공무원들이 원격 근무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해 필수 인력에 대한 정의가 점차 중요해졌다. OECD 34개국 중 15개국은 이미 해당 직위를 정의한 반면, 14개국은 사태 초기에 필수 인력을 정의하거나 재정의해야 했다. 게다가 OECD 31개국은 공공서비스 수요 급증에 대처하기 위해, 특별인력 규정 및 정책을 활용하여 직원을 내부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었다. 이들 국가 중 23개국은 이미 필요한 규정과 정책이 마련된 상태였지만, 8개국은 이러한 조치를 위해 새로운 규정과 정책을 개발해야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공공서비스가 효과적인 정책을 탐색하게 하고, 유연하고 민첩한 인력을 창출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할 수 있었던 방법을 보여준다.

코로나19위기는 공무원들에게 많은 부담을 줬지만, 공공부문 고용 시스템에 지속적인 민첩성을 내재화 할 기회일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현재 활용중인 수단들의 대부분은 위기 이후에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원격 근무와 관련되어진 수단들이 주요한 예가 될 수 있다. 상당수 국가에서 원격 근무, 채용, 휴가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위기상황이 공공부문의 인력에 미치는 영향을 감시하기 위해 내부설문 등을 포함한 새로운 수단들을 도입해야 했다. 또한 많은 국가들은 보건, 고용, 보안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 기존 인력의 재배치와 효율적인 채용과정을 위한 수단을 개발했다. 이러한 위기는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원격 근무의 도입뿐 아니라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공공부문 인력들의 탄력성을 보여주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해당 자료는 2020년 여름 OECD의 공공 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 설문조사(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의 자료 중 코로나 19 특별부문에서 수집하였다. 대부분의 응답자는 중앙정부 내 인적자원관리 부처의 고위 공무원이며,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에 대해 응답하였다. 해당 설문은 OECD 회원국(칠레, 아이슬란드 제외)과 코스타리카, 브라질, 루마니아를 대상으로 조사가 완료되었다.

참고문헌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20en/instruments/OECD-LEGAL-0445*.

OECD (forthcoming), *The Future of Work in the Public Service*, OECD Publishing, Paris.

그림 설명

칠레, 아이슬란드, 영국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6.7. 관련 자료는 2020년 3월-7월 사이에 원격으로 근무한 직원이 가장 많았을 때의 비율을 나타낸다.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리투아니아, 뉴질랜드, 슬로바키아 및 터키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6.8. 일본의 자료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하는 정책만을 참고하였으며, 개별 부처의 정책은 포함하지 않았다.

6.7. 코로나19 1차 확산세 동안 원격으로 근무한 중앙/연방정부 인력의 비율 (2020년)

출처: OECD (2020), Special COVID-19 module of the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059

6.8. 코로나19 1차 확산세 동안의 인사관리 대응 (2020년)

	필수직위의 정의	원격근무가 가능한 IT인프라(예: 노트북/VPN)	원격근무 규정/정책	화상회의 및 기타 통신기구	원격근무가 어려운 직원을 위한 휴가 정책	채용/인력규정/정책(내부 이동 포함)	직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의사소통 통로(예: 웹사이트)	조정기관(예: 인사 관리 대응을 조정하기 위한 위원회)	직원 대응에 대한 자료추적 도구(예: 직원설문, ❖P■ 연결수, 관리자 자료)
호주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벨기에	◆❖	■❖	■❖	■❖	◆❖	■❖	■❖	◆	◆❖
캐나다	■	◆❖	■❖	◆❖	■❖	■❖	◆❖	◆	◆❖
콜롬비아	◆❖	■❖	◆❖	◆❖	◆❖	■❖	■❖	■❖	◆❖
체코	■❖	■❖	■❖	■❖	■❖	■❖	■❖	■❖	■❖
덴마크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핀란드	■❖	■❖	■❖	■❖	■❖	■❖	■❖	■❖	■❖
프랑스	◆❖	◆❖	■❖	■❖	■❖	■❖	■❖	■❖	■❖
독일	■❖	■❖	■❖	◆❖	◆	◆	■❖	◆	□
그리스	◆	◆	■	■	◆	■	■	■	◆
헝가리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일본	□	■	□	□	■❖	□	□	□	□
한국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멕시코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폴란드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스페인	◆	◆❖	◆❖	◆❖	■❖	■❖	■❖	■❖	□
스웨덴	◆❖	■❖	◆❖	◆	□	■	■	■	□
스위스	■❖	◆❖	■❖	◆❖	◆	□	■❖	■❖	□
터키	□	■❖	◆	◆❖	◆	◆	■❖	■❖	□
미국	■❖	■❖	■❖	◆❖	■❖	◆❖	■❖	■❖	◆❖
□ECD 전체									
CID-19 위기 이전에 이미 시행 ■	15	22	20	10	10	23	31	19	11
새로 개발되거나, 고도로 변형됨 ◆	14	12	13	23	13	8	2	9	12
이 조치는 위기 이후에도 유지될 것 ❖	22	32	29	31	16	24	30	21	17
해당없음 □	5	0	1	1	11	3	1	6	11
브라질	■	□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	■❖
루마니아	◆	■❖	◆❖	◆❖	◆❖	□	■❖	□	◆❖

출처: OECD (2020), Special COVID-19 module of the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078

직원몰입 측정

몰입된 직원의 성과 향상은 조직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공공부문 혁신 및 시민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몰입된 직원이 많은 조직은 병가가 적어지고, 근로자 유지율이 높아진다. 직원몰입의 동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공통적인 요소로 인지된 리더십 및 관리의 품질, 근무 조건 및 경력개발 기회가 있다. 따라서 직원몰입은 인력관리의 성과를 측정하는 차원에서 고려될 수 있다. OECD는 직무 및 조직몰입, 공공봉사동기(PSM)를 비교하기 위한 표준화된 설문 문항의 생성을 촉진하였고, 기존의 국가 공공부문 근로자 조사(public employment survey)를 통해 2020년 7개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였다.

직무몰입은 직원과 직무 간의 관계를 측정한다. 시범적으로 설문을 실시한 모든 국가에서 응답자의 최소 67%가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최소 42%가 자신의 일이 성취감을 준다고 생각했다. 또한 39%는 자신의 직업에 영감을 얻는다고 응답하였다(그림 6.9, 패널 A). 조직몰입은 근로자와 조직 간의 관계를 측정한다(그림 6.9, 패널B). 분석 결과, 대부분의 공무원(최소 56%)은 조직 미션에 대해 강한 동일시를 보였지만, 소속감을 느끼는 정도는 낮았다. 하지만 라트비아에서는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공공봉사 동기는 가장 높은 이스라엘(98%)에서 가장 낮은 벨기에(81%)까지 모든 국가에서 설문 문항의 평균 점수가 가장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공동선에 기여하는 것의 중요성을 대변한다(그림 6.9, 패널 C). 종합하면, 수집된 자료를 기반으로 해석할 때 공무원의 미션에 대한 높은 동기부여가 존재하지만, 공무원에게 영감을 주고 조직에 대한 자부심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리더십 및 관리 정책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자료분석의 결과 약간의 인구통계학적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진 않았지만, 연령에 따른 차이는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이스라엘과 라트비아에서는 고령 집단이 모든 설문 조사 질문에서 약간 더 높은 점수를 받았으나, 벨기에에서는 그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6.10). 또한 연령에 따른 조직몰입의 차이는 라트비아에서 고령집단과 젊은 집단의 차이가 0.73에 달한다. 문화적 환경, 급여 또는 경력개발 기회와 관련하여 이러한 차이에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고, 노동형태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분석을 실시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 정규직 직원은 일반적으로 정규 시간의 90% 미만으로 일하는 직원보다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냈고 (온라인 그림 G.29), 오직 라트비아에서만 기간제 직원의 직원몰입이 더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노동형태의 차이를 설명하려면 더 많은 변수와 심층 분석이 필요하나 코로나 19 위기 이후 유연한 고용형태를 점점 더 많이 활용하면서 직원몰입을 촉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직원몰입'에 관련한 설문문항은 OECD, 공무원 설문조사의 전문가(학계, 국가별 전문가)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본 문에 보고된 시범적 설문이 실시된 국가(OECD 6개국 및 브라질)는 기존 공공부문 근로자 조사에서 해당 설문 문항을 활용하였다.

설문에는 직무몰입에 대한 세가지 문항이 있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반적으로 나는 내 직무에 만족한다. 2) 나의 직무는 나에게 영감을 준다. 3). 내가 하는 일은 성취감을 준다. 한편, 조직몰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항이 있다. 4) 나는 내 조직에 대해 개인적 소속감을 느낀다. 5) 나는 우리 조직의 미션을 동일시한다. 마지막 설문 문항은 공공봉사동기에 대한 질문으로 6) 내 업무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는 문항이 제시되었다. 설문 참가국은 1-5점 척도를 활용했다(1= "매우 동의하지 않음, 5 = "매우 동의함"). 4 또는 5에 응답하는 직원은 해당 문항에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간주하였고, 브라질은 이와 유사한 리커트척도(Likert scale)를 활용하여 숫자를 각 문항에 대한 동의 또는 비동의와 관련된 문장으로 대체하였다.

호주: 1999년 공공서비스 법률(Public Service Act)에 따라 고용된 108,085명의 공공서비스 근로자들이 2020년 10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 설문에 참여하였다.

벨기에: 3개 기관의 1,735명의 직원이 설문에 참여했으며, 이중 2개 기관은 2019년에 설문이 실시되었고 1개 기관은 2020년 말에 실시되었다.

이스라엘: 6명의 직원이 2020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설문에 참여하였다.

룩셈부르크: 261명의 공무원 및 근로자, 4개 행정부처의 외부 직원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2월 사이 설문에 참여하였다.

라트비아: 153개 국가기관의 공무원 5,778명이 2019년 10월 21일부터 11월 9일까지 설문에 참여하였다.

네덜란드: 네덜란드의 핵심 부처 공무원 (기관 및 기타 공공서비스 제외)의 공무원을 대표하는 2,158명의 근로자가 2020년 11월 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에 참여하였다.

브라질: 연방행정국 근로자 32,393명이 2020년 9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설문에 참여하였다.

참고문헌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20en/instruments/OECD-LEGAL-0445.*

OECD (2016), *Engaging Public Employees for a High-Performing Civil Service*,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7190-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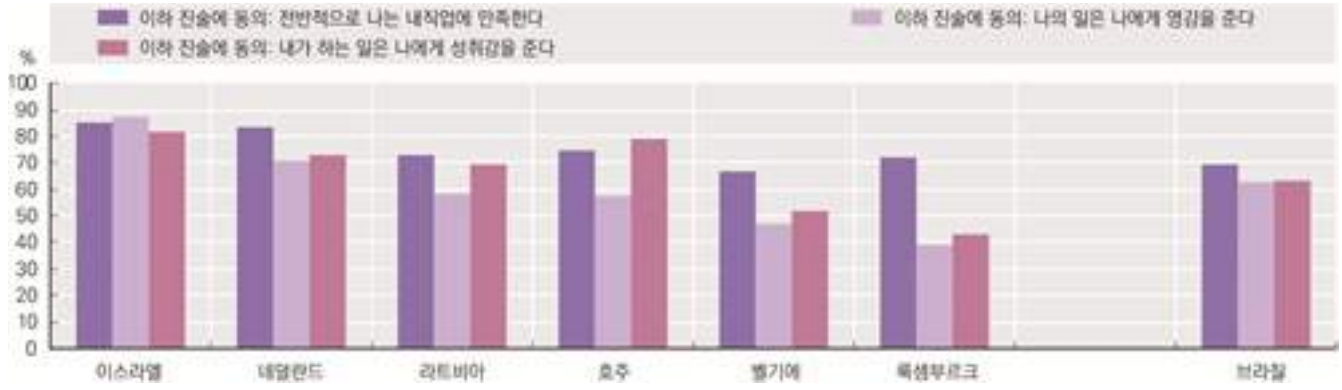
호주의 자료 중 "나는 우리 조직의 미션을 동일시한다"와 "내 업무가 공익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설문문항은 누락되었다. 이스라엘의 자료 중 "4) 나는 내 조직에 대해 개인적 소속감을 느낀다" 설문 문항은 누락되었다.

6.10. 룩셈부르크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G.29. (고용형태별 평균 직원몰입 점수, 2020)는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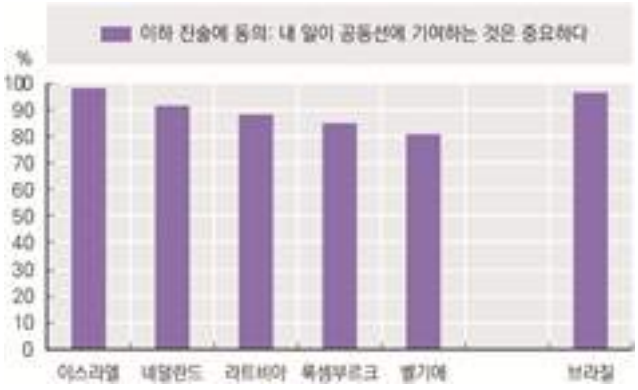
6.9. 직원몰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공무원 비율

패널 A: 업무몰입 관련 진술에 동의하거나 강력히 동의하는 직원의 비율



패널 B: 조직몰입 관련 진술에 동의하거나 강력하게 동의

패널 C: 공직봉사동기(PSM) 관련 진술에 동의하거나 강력하게 동의



출처: OECD (2021), Special employee engagement module of the *Civil Service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097

6.10. 평균 몰입도 및 연령대별 차이 (2020년)

출처: OECD (2021), Special employee engagement module of the *Civil Service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116

7. 규제거버넌스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분석
규제의 사후평가
경제규제당국의 독립성
경제규제당국의 책임성 체계
규제당국의 성과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법은 일상생활에서 기업, 시민, 일반 대중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집단은 상정된 규제에 의해 나타날 영향에 대해 정책결정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의사결정과정의 일부로서 정책 및 규제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규제에 대한 순응을 이끌어 낼 수 있기에 좋은 정책을 설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정책문제와 대안이 논의되는 정책결정과정 초기에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해관계자들은 각기 다른 요구와 관심을 나타내고, 서로 다른 제약이 있기에 정책결정자는 사전 예방적으로 충분한 협의를 실시 해야 한다. 이해관계자의 참여는 단순히 그들의 견해를 듣는 것 뿐만 아니라 그들의 의견에 응답하고, 그 의견이 적절한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데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OECD 국가들은 규제초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지만, 규제초안 작성 이전 단계에서는 상대적으로 협의가 덜 이루어진다. 또한 일반국민은 주로 웹사이트의 게시물에서만 협의 진행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 하지만 기업과 시민들은 새로운 협의에 참여하기 위해 웹사이트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OECD 8개국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메일을 통해 협의진행을 체계적으로 알렸고, OECD 20개국은 특정 경우에만 이메일을 통해 알렸다(표 7.1 참고).

정부는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활용하는 방식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특히,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법안의 최종 설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보여주는 것은 법의 형성과정에 이해관계자의 주인의식과 신뢰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쌍방향 웹사이트, 이해관계자 의견 요약본 등의 방안을 활용하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하지만, 약 절반의 국가만이 이해관계자의 의견에 대해 응답한다. 한편, OECD 32개국에서는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사결정자에게 전달하고 있다(표 7.1 참고).

이해관계자 참여는 진행 시점에 따라 접근 방식이 달라진다. OECD 34개국의 정책결정자들은 초기 단계에서는 특정 집단(예: 산업계 대표, 소비자 단체, 비정부 기구)과 협의를 진행하지만, 후반 단계에서는 주로 공개협의(예: 규제를 공시하여 견해를 듣거나, 온라인 협의 등)를 진행한다. 이러한 차이는 협의과정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필요로 하거나 복잡한 상황일 때 정당화 될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경우 정책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초기 단계에서 광범위한 이해관계자로부터 에 대한 피드백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규제 및 정책결정의 초기단계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협의를 진행하는 OECD국가는 총 2개국이며, 이는 2017년에 비해 1개국 증가한 것이다. 또한 모든 규제 및 정책결정 후기 단계에서 온라인으로 공개협의를 진행하는 OECD 국가는 11개국으로 나타났고, 이는 2017년에 비해 3개국이 증가한 것이다. 온라인을 통한 가상공청회의 활용은 2017년 이후 현저하게 증가하여 초기 단계에서의 공청회는 2017년 OECD 13개국에서 2020년 23개국으로 10개국이 증가했으며, 후기 단계에서의 공청회는 2017년 OECD 15개국에서 21개국으로 증가했다(그림 7.2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2017년, 2021년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The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는 OECD 회원국 37개국과 코스타리카, 유럽연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자료의 범위는 행정부에 의해 발의된 상위법령과 하위법령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상위법령이 대부분 정부입법 되는 반면, 콜롬비아,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 코스타리카는 의원(의회)입법에 의해 상위법령이 제정된다. 미국은 상위법령에 대한 정부입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관련한 모든 조사 항목에 응답하지 않았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oe.cd/ireg)에서 얻을 수 있다.

상위법령(primary laws)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인 반면, 하위법령(subordinate regulations)은 정부 수반(대통령 등), 각 부의 장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을 의미한다.

정책결정자들이 정책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을 때 초기협의를 진행한다. 규제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고 이미 제안된 규제의 초안이 있는 경우 후기 단계 협의가 수행된다.

참고문헌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12),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09022-en.*

Lind, E. and C. Arndt (2016), "Perceived fairness and regulatory policy: A behavioural science perspective on government-citizen interactions", *OECD Regulatory Policy Working Papers,* No. 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629d397-en.*

그림 설명

7.1. 콜롬비아,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 코스타리카의 자료는 하위법령의 협의에 대한 응답이다. 해당 국가들에서는 상위법령이 행정부에서 거의 발의되지 않는다. 미국은 상위법령에 대한 정부입법이 제한되어있기에 하위법령에 대한 응답만을 표기하였다.

7.2. 자료는 상위법령 개발을 위해 시행된 협의에 해당하므로 미국은 누락되었다. 자료에는 코스타리카와 유럽연합이 포함되었다.

7.1. 이해관계자 참여 및 정책결정자의 의견 처리 (2021년)

	협의에 대해 대중이 알고있음				협의 시행		정책결정자가 의견을 처리하는 방법		
	협의가 진행되지 전에	협의를 위한 중앙웹사이트를 통해	E-mail알림	소셜미디어를 통해	초반부	후반부	공개적으로 의견을 볼 수 있음	정책결정자가 의견에 응답	정책결정자가 의견을 이용가능
호주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예	예	예
오스트리아	아니오	체계적	아니오	아니오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아니오
벨기에	아니오	비체계적	아니오	아니오	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캐나다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칠레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콜롬비아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아니오
체코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덴마크	아니오	체계적	비체계적	아니오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아니오
에스토니아	아니오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핀란드	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프랑스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아니오	비체계적	비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독일	아니오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그리스	비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헝가리	아니오	체계적	아니오	아니오	비체계적	체계적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이슬란드	아니오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아일랜드	아니오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이스라엘	아니오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이탈리아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일본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비체계적
한국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라트비아	비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리투아니아	아니오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룩셈부르크	아니오	비체계적	아니오	아니오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멕시코	아니오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네덜란드	아니오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뉴질랜드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노르웨이	아니오	체계적	비체계적	아니오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폴란드	비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포르투갈	아니오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슬로바키아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아니오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슬로베니아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스페인	아니오	비체계적	아니오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스웨덴	아니오	체계적	아니오	아니오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스위스	체계적	체계적	아니오	아니오	비체계적	체계적	예	아니오	비체계적
터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아니오	비체계적	체계적	아니오	아니오	비체계적
영국	비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미국	비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비체계적	비체계적
OECD Total									
체계적	9	21	8	2	7	31			
비체계적	8	13	20	23	28	5			
안했음	20	3	9	12	2	1			
예							33	18	32
아니오							4	19	5
코스타리카	비체계적	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비체계적	체계적	예	예	예
EU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체계적	예	예	예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survey,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135

7.2. 협의초기 및 협의후기 단계에서 이해관계자 참여 형태 (2017년, 2021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survey, 2017 and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154

규제영향분석

OECD 국가의 정부는 소비자, 근로자, 환경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끊임없는 요구에 직면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로 인해 요구가 더욱 강해졌다. 그와 동시에 정부는 포용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증거에 기반하고 투명하게 정책을 결정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규제영향분석(Regulatory impact assessment, RIA)은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

규제영향분석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데 도움이 되며, 규제를 하지 않는 수단까지도 포함한다. 공무원은 개입하지 않는 선택과 자율협약 같은 비규제 수단을 포함하여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OECD의 많은 국가는 비규제와 대안적인 여러 선택지들을 체계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대부분 선호하는 선택지들에 대해 분석한다(그림 7.3 참고). 이러한 현상은 규제개입 이전 상태에 대해 정부가 항상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여러 형태의 규제 대안을 비교할 수 있는 기준선을 항상 가지고 있지 않다는 점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대안을 분석하면, 의사결정자들이 규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해 인식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

정책결정자들은 전통적으로 규제의 경제적 영향(예: 경쟁, 중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지만, 최근에는 빈곤, 양성평등, 환경과 같은 요인들을 점점 더 고려하고 있다(그림 7.4 참고). 이러한 변화는 크게는 기후변화에 대한 논쟁의 결과이기도 하며, 부분적으로 각 지역의 태도 변화에 기인하기도 한다. 일부 OECD가입국 및 후보국은 사회적/환경적 요인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을 더 많은 고려를 해야하는데, 이러한 요인에 미치는 규제의 영향은 종종 정확하지 않게 평가되고, 경제적 기준에만 기초한 평가는 의도치 않은 잠재적 결과를 찾아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정보가 부족하거나, 섣부른 규제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물론 예측할 수 없는 비상사태에서는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규제의 도입을 가속화해야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규제영향분석은 위기 상황과 같이 잠재적 영향이 클 때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은 더 나은 대안을 찾고,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방지하며, 가능한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를 포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비상사태가 시작되면 규제를 도입할 때 많은 정보를 얻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이러한 비상사태에서는 규제영향분석의 활용에 있어 유연성이 필요하다. 예를들어 캐나다의 경우, 코로나 19 관련 법률의 영향을 분석시, 규제영향분석이 의사결정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에 대해 좀더 정성적인 분석을 허용하는 식의 완화를 추진했다. 규제 도입전 실시되는 규제영향분석에서는 정보 및 시간이 부족했지만, 규제가 발효되면 모니터링과 평가에 더 중점을 두고 향후 규제 개정이 증거에 기반할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일부 OECD 국가는 비상사태, 특히 코로나 가 대유행하는 기간동안 규제영향분석을 실시하지 않았다(그림 7.5 참고). 그 결과, 코로나 19가 시작될 때 도입된 규제들에 대해서 규제영향분석이 몇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이 필요 이상으로 장기화될 수 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The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조사는 OECD 규제 정책 위원회(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대표단과 중앙정부 공무원들이 설문조사에 응답한 내용을 근거로 작성되었다 해당 조사는 2017년과 2021년에 OECD 37개국과 코스타리카 및 유럽연합이 응하였고, 2014년에는 OECD 34개국 및 유럽연합이 응답하였다.

자료의 범위는 행정부에 의해 발의된 상위법령과 하위법령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는 상위법령이 대부분 정부입법 되는 반면, 콜롬비아,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스위스, 코스타리카는 의원(의회)입법에 의해 상위법령이 제정된다. 미국은 상위법령에 대한 정부입법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과 관련한 모든 조사 항목에 응답하지 않았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oe.cd/ireg)에서 얻을 수 있다.

규제영향분석(RIA)은 규제와 비규제라는 선택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비용과 편익을 식별하고 정량화하는 체계적 과정이다. 규제영향분석은 문제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하고, 잠재적 해결책을 식별함은 물론 편익과 비용을 분석하고, 규제의 모니터링 및 평가방법을 준비해야한다.

참고문헌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OECD Publishing, Paris.

Davidson, P., C. Kauffmann and M. de Liedekerke (2021), "How do laws and regulations affect competitiveness: The role for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ECD Regulatory Policy Working Papers*, No. 15,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c11f5d5-en*.

OECD (2020), *Regulatory Impact Assessment*,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a9638cb-en*.

그림 설명

7.3. 자료에 코스타리카와 유럽연합을 포함하고 있다.

7.4. 해당 자료는 다양한 요인에 미치는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의 영향분석에 대한 응답을 설명한다. 응답 선택지는 "예/아니오"이며, 응답자가 상위법령과 하위법령을 각기 다르게 응답한 경우, 두 응답 중 "예"를 선택하여 국가별로 표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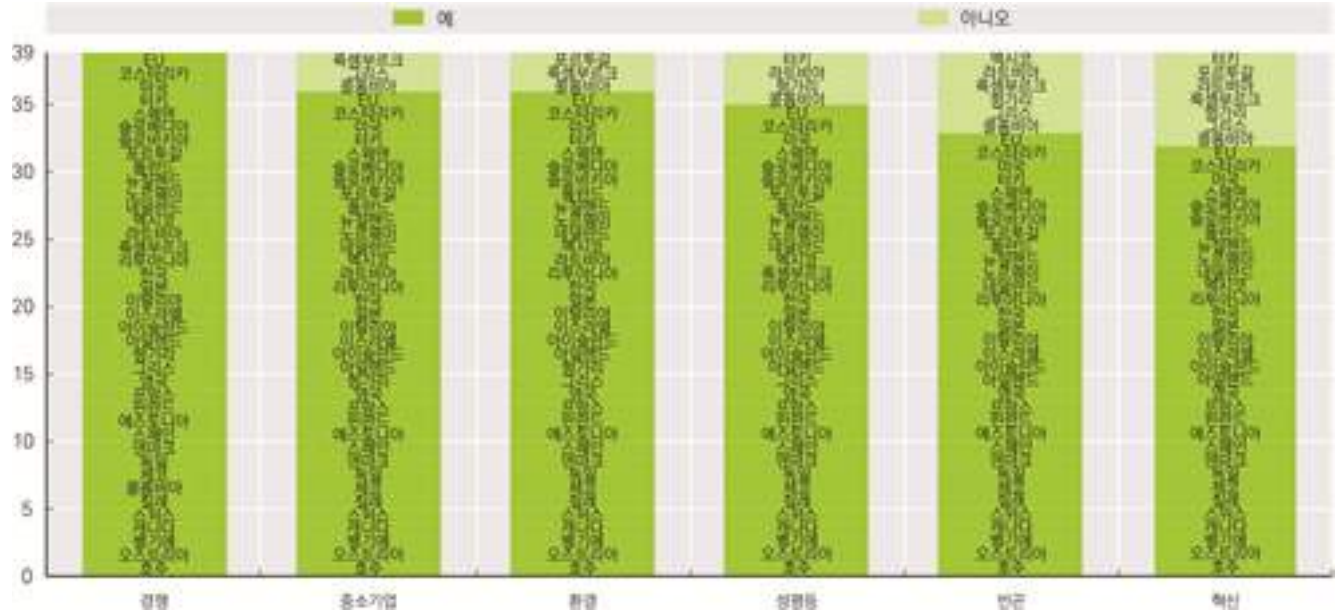
7.5. 자료는 OECD 34개국과 유럽연합의 응답을 기초로 하였다. 2014년 자료는 콜롬비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의 자료가 결측되었다.

7.3. 법률 및 규제의 대안과 비규제에 관한 영향분석(2021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survey,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173

7.4. 기본법 및 하위법령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에서 평가하는 영향 유형(2021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survey,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192

7.5. 긴급법률 및 규정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적용 예외(2014년, 2017년, 2021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survey, 2014, 2017, and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211

규제의 사후평가

규제가 시민과 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모든 법규제는 실험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규제의 사후평가는 규제가 원래 의도한 대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평가하며,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 개선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사후평가는 규제를 비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예측 불가능한 기술과 변화에 주목한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규제는 계속 증가할 것이며 시민과 기업에 불필요한 형식주의(red tape)를 강요하게 된다. 사후평가는 규제를 정당화하고, 공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점검장치이며, 결과적으로 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를 구축하고 정부조치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

사회적 웰빙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데 규제의 역할이 중요함에도 OECD 국가의 사후평가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1/3만이 사후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이러한 국가의 수는 의미있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 원인 중 하나는 정부가 이전에 "나쁜" 결정을 내린 것이 밝혀졌을 때의 정치적, 경제적 결과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태도는 사후평가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데 큰 제약이 되며, 건전한 사후평가 체계가 주는 이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사후평가는 우연한 과거의 실수로부터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이러한 과정은 "책임전가(blame game)"가 아닌 같은 실수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사후평가는 기존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의 확실성과 안정성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높여 웰빙을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평가되어야 한다.

설정하고 잊어버리는 사고방식은 많은 국가들에서 나타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첫 단계는 예정된 사후평가를 실제로 시행되게 하는 것이다. 일부 OECD 국가만이 예정된 사후평가가 시행되지 않았을 경우, 예정대로 이행하게 하는 체계(예: 사후평가 미준수에 대한 공개보고)를 가지고 있다(그림 7.6). 사후평가가 시민들에게 좋은 결과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모든 사후평가의 핵심은 규제가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했는지를 평가하는 것이다. 법이 본래 의도한대로 작동했는지, 그렇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The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설문조사는 OECD 국가의 40%이상이 법을 설계할 때 규제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과정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OECD 국가들은 근본적인 정책목표가 실제로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사후평가의 제반 여건들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법이 실제로 시민과 기업을 위해 좋은 결과를 산출했는지의 여부를 학습할 기회를 놓쳤음을 보여준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The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는 OECD 규제 정책 위원회(OECD Regulatory Policy Committee) 대표단과 중앙정부 공무원들의 응답을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2021년 기준 OECD 37개국과 코스타리카, 유럽연합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규제정책 및 거버넌스 지표(iREG)의 자세한 정보는 홈페이지(http://oe.cd/ire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후평가는 규제가 시행된 후 그 효과와 효율성을 평가하는 과정을 말한다. 사후평가는 규제가 원래 의도한 목표를 어느정도 달성했는지 확인하는 한편, 시민 및(또는) 기업에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사회에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상위법령(primary laws)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인 반면, 하위법령(subordinate regulations)은 정부 수반(대통령 등), 각 부의 장관, 내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령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forthcoming), *Regulatory Policy Outlook 2021*, OECD Publishing, Par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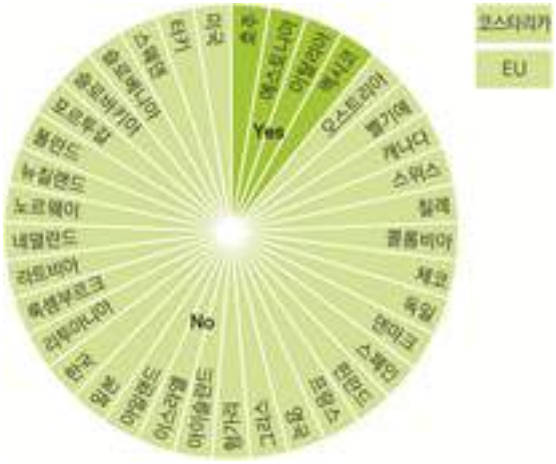
OECD (2020), *Reviewing the Stock of Regulation*,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a8f33bc-en*.

OECD (2014), *OECD Framework for Regulatory Policy Evaluation*,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14453-en*.

그림 설명

7.6. & 7.7 자료는 코스타리카와 유럽연합을 포함하고 있다.

7.6. 예정된 사후평가를 이행하게 하는 메커니즘 (2021년)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survey,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230

7.7. 규제의 근복목표에 대한 사후평가 (2021년)

모든 기본법/하위법령에 대해	주요 기본법/하위법령에 대해	일부 기본법/하위법령에 대해	없음	해당없음

	법률을 설계할때 정책결정자는 규제의 목표달성을 식별하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다		근본적 정책목표의 달성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가 필요한가?	
	상위법령	하위법령	상위법령	하위법령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OECD total				
모든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해	10	9	6	6
주요 기본법/ 하위법령에 대해	6	6	2	3
일부 기본법/ 하위 법령에 대해	10	7	7	9
없음	10	15	22	19
코스타리카	Never	For some subordinate regulations	Never	Never
EU	For major primary laws	For major subordinate regulations	For all primary laws	For all subordinate regulations

출처: OECD *Indicators of Regulatory Policy and Governance (iREG)* survey, 2021.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249

경제규제당국의 독립성

경제규제당국은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 네트워크를 감독하며, 정치권력과 기업 그리고 시민간의 경계에 개입해 시장기능과 공익보호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많은 정부들은 경제규제당국의 의사결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경제규제당국에 독립성을 부여하려 한다. 이러한 독립성은 책임 및 투명성 평가와 결합할 때, 투자자, 운영자, 소비자의 신뢰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하지만 경제규제당국의 편향된 태도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와 이해관계를 중재하는 심판으로서의 역량과 신뢰성이 저해될 수 있다. 강력한 거버넌스 체계는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보장할 수 있다. 국가는 정치적 주기에 관계없이 장기적인 목표에 대한 합의를 위해, 법적으로 독립적인 규제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포함해 거버넌스 구성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OECD의 부문별 규제당국의 거버넌스 지표는 5개 부문에서 경제규제당국의 거버넌스 구성을 보여준다. 해당 지표는 OECD 국가에서 규제당국의 독립성을 보호하는 수준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규제당국이 자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거버넌스 장치(예: 규제당국 수장의 임명 및 해임 규정, 규제당국의 의사결정 및 과정에 대한 개입 제한, 규제당국의 예산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 등)에 대한 모범사례가 적다는 것을 반영한다(표 7.8).

많은 OECD 국가는 법에 기초하여 독립적인 규제당국을 설립하였다. OECD는 국가가 공공신뢰, 공기업과 민간기업 사이의 중립성, 중요한 결정에 대한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독립적인 규제당국을 설립할 것을 권장한다. OECD 국가 중 에너지 부문의 규제 기관 37개 중 32개(86%), 전자 통신 부문 36개 중 30개(83%), 철도 부문 35개 중 29개(83%)가 독립적이다. 반면, 항공운송과 수자원 부문에서 독립성 있는 규제당국의 비율은 낮으며, 항공운송 규제 당국 31개 중 15개(48%)와 수자원 규제당국 20개 중 15개(75%)가 독립성이 있다고 판단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 또한, 항공운송 부문의 경우, 각료 또는 기관에 속한 규제당국의 비율이 다른 부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다른 부문의 경우 독립성 있는 규제당국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7.9).

방법론 및 개념정의

부문별 규제당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OECD 지표는 OECD 경제규제당국 네트워크의 업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며, 에너지 분야, 전자통신분야. 철도운송 분야, 항공운송 분야, 수자원 분야에서 경제규제당국의 거버넌스를 측정한다. 해당 지표는 모든 OECD 국가와 다수의 OECD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의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한다. OECD 시장규제조사 (Product Market Regulation survey)와 함께 배포된 설문문항에서 지표를 추출하였고, 설문응답자는 규제당국과 관련부처의 고위직이다. 설문응답결과는 OECD 사무국의 엄격한 데이터 검증과정을 거쳐 응답자와 협의하여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복합지표 내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동일한 가중치의 질문과 하위질문의 결과를 평균화하여 계산했다. 규제방법에 따라 0(가장 효과적인 거버넌스 방식)-6(가장 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방식)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OECD 경제규제당국 네트워크의 지원 하에 설문지 개발, 자료수집, 응답 검증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해당 분석에 관련한 전체 내용은 Casullo 외(201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표는 독립성, 책임성, 활동범위 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독립성 구성요소를 분석한다. 이 때 독립성의 의미는 규제당국이 정치권력 및 규제대상의 과도한 영향없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수준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Casullo, L., A. Durand and F. Cavassini (2019), "The 2018 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 Part of the 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Surve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6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0a28908-en.

OECD (2014), *The Governance of Regulators*,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09015-en.

OECD (2017), *Creating a Culture of Independence: Practical Guidance against Undue Influence*, The Governance of Regul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74198-en.

그림 설명

7.10. 종합지표는 구성요소 0(가장 효과적인 거버넌스 조합)-6(가장 덜 효과적인 거버넌스 조합) 까지의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회색 셀은 자료에 규제당국이 결측되었음을 의미한다.

G.30. (규제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 2018)은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스페인의 국가 시장경쟁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Markets and Competition, CNMC; 에너지, 전자통신, 철도운송 부문의 자료) 는 정직원을 고용 및 유지하고, 할당된 예산을 배분하고 지출하기 위한 결정을 할 때,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활용의 제한은 특히 인적자원 및 고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또는 IT와 같은 특별한 연구지원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또한 CNMC가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 정부에 의한 법 근거가 필요하다.

7.8. OECD국가 규제기관의 부문별 독립성 지표 점수 (2018년)

	에너지	전자통신	철도운송	항공운송	수자원
호주	0.96	1.47	1.47	1.47	1.47
오스트리아	1.47	1.27	0.74	2.53	.
벨기에	1.10	1.02	1.52	1.18	2.69
캐나다	2.59	2.89	3.66	3.29	.
칠레	2.61	2.93	3.94	2.38	2.12
콜롬비아	1.87	1.27	3.29	3.43	1.36
체코	1.80	1.22	1.58	1.93	2.44
덴마크	2.24	2.29	1.93	2.36	1.56
에스토니아	1.67	.	1.67	1.67	1.67
핀란드	2.08	1.66	2.32	.	.
프랑스	0.99	1.07	1.39	1.72	.
독일	2.00	2.10	1.80	.	.
그리스	1.47	1.41	1.62	2.98	.
헝가리	1.41	0.86	2.16	2.21	1.30
아이슬란드	2.10	2.27	.	.	.
아일랜드	1.77	1.44	2.03	1.92	1.52
이스라엘	1.42	1.80	1.99	1.38	1.49
이탈리아	1.17	1.18	0.66	0.66	1.17
일본	2.41	3.25	3.17	2.83	.
한국	2.27	1.94	.	.	1.78
라트비아	0.88	0.88	1.44	2.57	0.88
리투아니아	1.46	1.54	1.82	2.42	1.46
룩셈부르크	1.77	1.77	1.88	1.88	.
멕시코	1.13	0.66	2.79	2.72	.
네덜란드	1.85	1.85	1.85	1.97	2.98
뉴질랜드	1.81	1.87	2.52	3.18	.
노르웨이	2.13	2.25	1.58	2.94	.
폴란드	1.52	1.85	1.58	2.57	.
포르투갈	0.79	1.02	1.02	1.02	0.92
슬로바키아	1.70	1.02	1.21	.	1.43
슬로베니아	1.38	1.27	0.96	.	.
스페인	1.46	1.32	1.16	2.35	.
스웨덴	3.43	2.94	2.41	2.84	.
스위스	2.70	2.43	2.16	3.41	.
터키	1.37	1.82	2.97	1.94	.
영국	1.27	1.56	1.66	1.51	2.29
미국	1.43	1.88	1.89	3.02	.
미국-뉴욕	.	.	.	.	1.70
미국-텍사스	.	.	.	.	1.59
OECD 평균	**1.72**	**1.70**	**1.94**	**2.27**	**1.69**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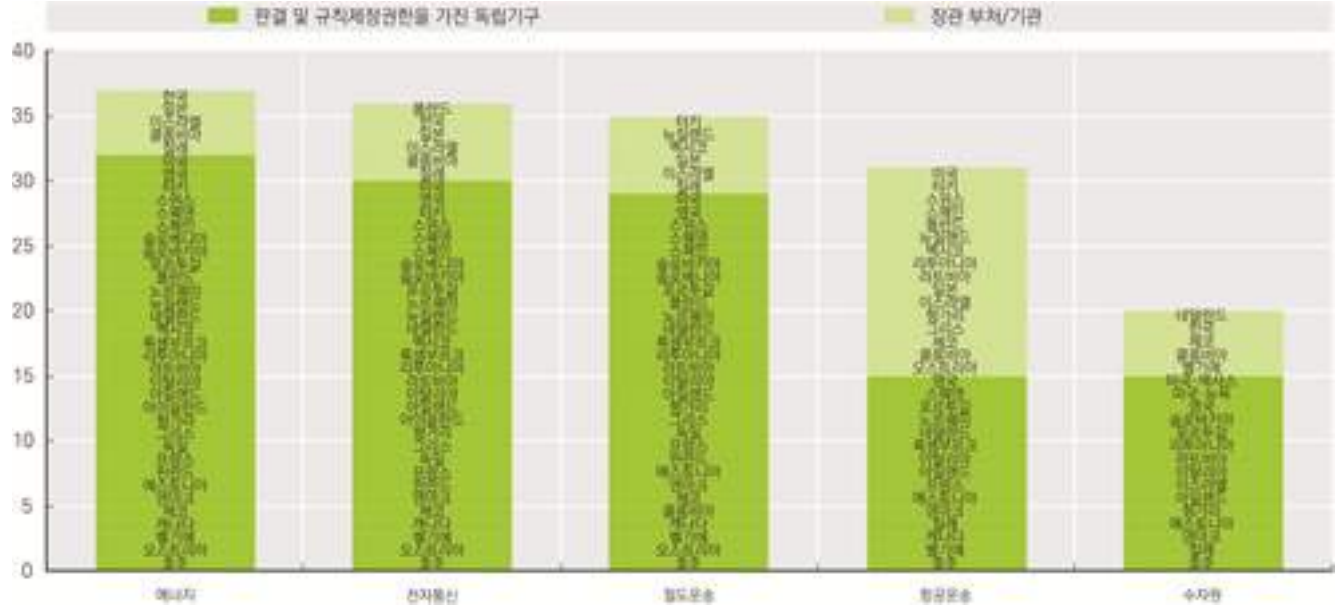
가까울수록 좋음 — 멀 수록 좋음

출처: OECD (2018), *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268

7.9. 부문별 규제기관의 독립성 및 장관급 규제기구 (2018년)

부문별 OECD 국가의 규제기관 현황



출처: OECD (2018), *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287

경제규제당국의 책임성 체계

규제 당국의 책임성을 강화한다면, 성과와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 OECD 국가에 소속된 다수의 경제규제당국은 의사결정과정에서 강력한 자율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관이며, 주요 부문을 규제하는 중요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규제당국의 독립성은 의사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신뢰하는 근거가 되고, 나아가 해당 부문에 투자하는 시장 행위자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독립된 규제당국은 선출직 공무원이 직접 관리하지 않으며, 선출하는 구조도 아니기 때문에 독립성과 책임성을 촉진하는 제도 사이에 균형이 필요하다(OECD, 2014). 정부, 기업, 사회전반은 규제당국이 불필요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서도 성과를 주도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를 기대한다. 강력한 책임성 제도는 규제당국이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임무를 얼마나 잘 수행하고 있는지 평가하고 증명할 수 있다. 책임성 제도는 더 높은 수준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보여줌으로써 규제당국의 진실성, 효율성, 효과성을 입증할 수 있다.

2018년의 OECD 부문별 규제당국 거버넌스 지표는 에너지, 전자통신, 철도운송, 항공운송, 수자원 부문에 걸쳐 규제당국의 거버넌스 체계를 보여준다. OECD 국가의 에너지, 전자통신 부문 규제당국은 가장 강력한 책임성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 항공 및 철도 운송부문은 가장 적은 책임성 체계를 가진 것으로 보고됐다. 책임성 체계는 규제당국이 법률에 근거하여 의회에 직접 책임을 지고, 이해관계자와 결정을 협의하는 한편, 조직과 부문의 성과정보를 공고할 때 모범사례에 가까워진다(Casullo et al., 2019). 이러한 책임성 체계는 결정된 규제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수렴 요건과 같은 규제당국의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결과이다. 또한 다른 경우, 규제당국은 법적 의무사항 없이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책임을 강화한다(그림 7.11).

"경제규제당국의 책임성 체계"의 자료들은 실제로 독립성과 책임성이 동전의 양면과 같음을 보여준다. 온라인상의 그림 G.30.은 OECD 국가의 에너지, 전자통신, 운송 및 수자원 부문에 걸쳐 개별 규제당국의 독립성 및 책임성 점수에 대한 개요를 설명한다. 이 그림은 인 독립성과 책임성 사이의 스피어만 상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0.6을 나타내어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이러한 상관관계는 에너지 및 전자통신 부문의 규제당국에서 잘 나타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부문별 규제당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OECD 지표는 OECD 경제규제당국 네트워크의 업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며, 에너지 분야, 전자통신분야. 철도운송 분야, 항공운송 분야, 수자원 분야에서 경제규제당국의 거버넌스를 측정한다. 해당 지표는 모든 OECD 국가와 다수의 OECD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의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한다. OECD 시장규제조사(Product Market Regulation survey)와 함께 배포된 설문문항에서 지표를 추출하였고, 설문응답자는 규제당국과 관련부처의 고위직이다. 설문응답결과는 OECD 사무국의 엄격한 데이터 검증과정을 거쳐 응답자와 협의하여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복합지표 내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동일한 가중치의 질문과 하위 질문의 결과를 평균화하여 계산했다. 규제방법에 따라 0(가장 효과적인 거버넌스 방식)-6(가장 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방식)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OECD 경제규제당국 네트워크의 지원 하에 설문지 개발, 자료수집, 응답 검증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해당 분석에 관련한 전체 내용은 Casullo 외(201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표는 독립성, 책임성, 활동범위 이 세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정부, 의회, 규제 대상 산업, 일반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책임성 구성요소들을 분석한다.

참고문헌

Casullo, L., A. Durand and F. Cavassini (2019), "The 2018 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 Part of the Product Market Regulation(PMR) Surve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6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0a28908-en*.

OECD (2014), *The Governance of Regulators*,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09015-en.*

그림 설명

7.10. 종합지표는 구성요소 0(가장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6(가장 덜 효과적인 거버넌스 체계) 까지의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회색 셀은 자료에 규제당국이 결측되었음을 의미한다.

G.30. (규제당국의 독립성과 책임성, 2018)은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스페인의 국가 시장경쟁 위원회(National Commission of Markets and Competition, CNMC; 에너지, 전자통신, 철도운송 부문의 자료)는 정직원을 고용 및 유지하고, 할당된 예산을 배분하고 지출하기 위한 결정을 할 때, 여러 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예산 활용의 제한은 특히 인적자원 및 고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또는 IT와 같은 특별한 연구지원에 관련하여 적용된다. 또한 CNMC가 조직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7.10. 부문 전반에 관련한 OECD 규제기관의 책임성 지표 점수 (2018년)

Note: A higher score indicates that a regulator is further from good practice in the accountability component.

	에너지	전자통신	철도운송	항공운송	수자원
호주	1.09	0.55	0.70	0.64	0.55
오스트리아	1.23	0.70	1.45	3.58	.
벨기에	1.64	0.00	4.26	4.26	4.29
캐나다	2.18	3.55	2.30	2.88	.
칠레	3.51	2.96	3.84	1.29	1.82
콜롬비아	1.36	1.36	2.09	3.12	1.71
체코	1.30	0.34	1.96	3.52	3.49
덴마크	2.05	3.00	2.81	2.78	3.73
에스토니아	1.64	.	2.18	2.10	2.18
핀란드	1.82	1.36	3.27	.	.
프랑스	1.00	0.57	1.31	3.56	.
독일	1.25	0.70	0.55	.	.
그리스	0.00	0.65	2.56	4.38	.
헝가리	1.90	0.43	4.13	2.57	1.90
아이슬란드	1.35	2.00	.	.	.
아일랜드	0.55	0.00	1.97	2.10	0.55
이스라엘	1.17	0.97	2.42	1.43	1.48
이탈리아	0.82	0.00	0.45	0.45	0.90
일본	2.38	3.27	2.45	2.73	.
한국	2.18	0.35	.	.	0.55
라트비아	0.55	0.55	2.04	2.86	0.55
리투아니아	0.58	1.09	1.09	2.81	0.58
룩셈부르크	2.64	2.09	2.64	2.84	.
멕시코	1.13	0.00	2.74	2.92	.
네덜란드	1.71	1.90	1.64	1.79	1.64
뉴질랜드	1.64	1.71	1.40	1.17	.
노르웨이	2.18	2.45	2.25	2.88	.
폴란드	2.75	1.94	2.56	1.25	.
포르투갈	0.66	0.62	0.87	0.55	0.81
슬로바키아	2.01	1.35	4.64	.	0.74
슬로베니아	0.22	0.62	2.45	.	.
스페인	0.00	0.00	0.23	1.17	.
스웨덴	2.53	3.00	2.31	2.13	.
스위스	2.55	1.77	1.51	2.34	.
터키	1.75	1.01	1.64	1.45	.
영국	0.82	1.44	0.31	2.18	2.96
미국	0.55	0.55	1.09	1.45	.
미국-뉴욕	.	.	.	.	0.73
미국-텍사스	.	.	.	.	3.22
OECD 평균	1.48	1.25	2.06	2.30	1.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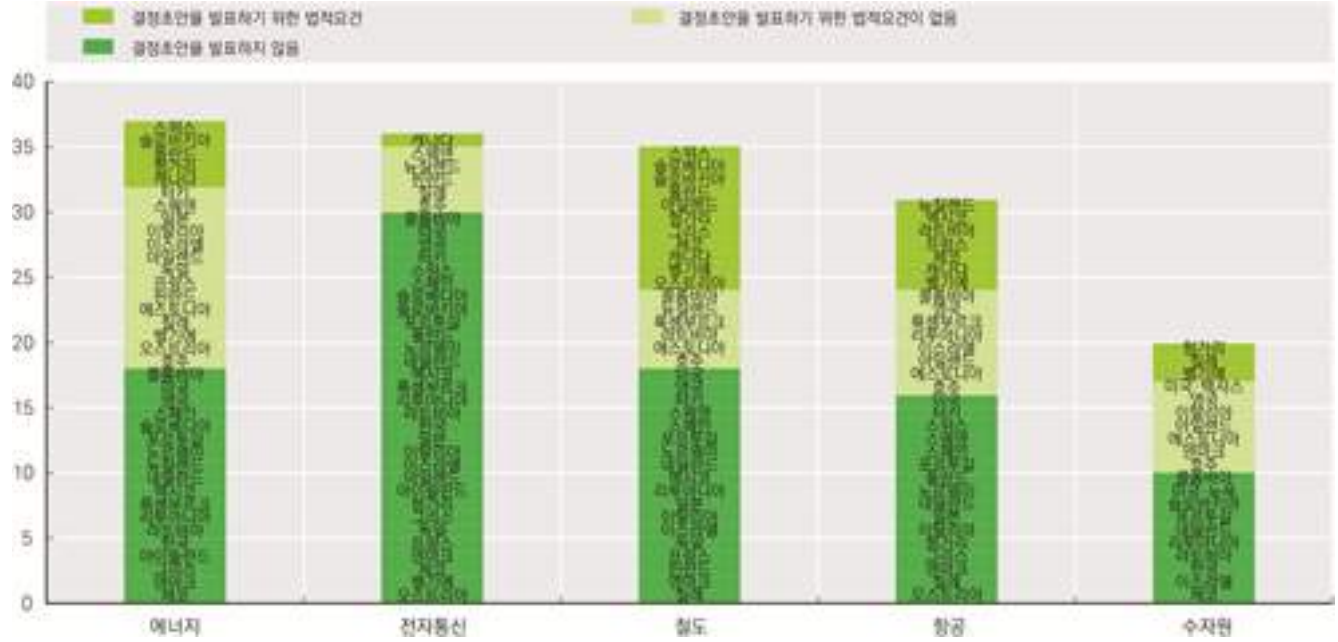
범례

가까울 수록 좋음 — 멀수록 좋음

출처: OECD (2018), *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306

7.11. 부문별 OECD 규제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결정초안 발표 (2018년)



출처: OECD(2018), *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325

규제당국의 성과평가

경제규제당국은 시민과 시장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강력한 성과평가는 규제당국이 성과개선을 위한 접근방식의 조정정도를 알게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규제당국의 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모범사례 원칙은 잘 설계된 성과평가 프레임워크가 규제당국의 효율성 입증하고 규제체계에 대한 신뢰의 구축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설명한다(OECD, 2014). 성과평가는 책임성을 유지하고 투명성을 증진하기 위한 핵심 요인이며, 공적기관은 자주 결과를 보고하는 한편 성과를 철저히 검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규제당국 및 규제부문의 성과자료는 경제규제당국의 성과평가 프레임워크의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성과평가 결과는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조직학습의 일환이 될 수 있다.

2018년 OECD의 부문별 규제당국의 거버넌스 지표 분석결과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에너지, 전자통신, 철도운송, 항공 운송, 수자원 부문 규제당국이 성과에 대해 보다 전반적인 관점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체성과에 대한 정보 일부분을 보고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부 규제당국은 규제운용과정의 품질에 대한 성과정보를 수집(78%) 및 공시(57%)한다(표 7.12). 이러한 유형의 조직성과 정보는 규제부문의 성과 및 고객의 최종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외부지향적 성과정보로 보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규제당국에서 수집하고 보고하는 정보는 규제대상 부문의 성과와 규제당국의 재무성과이며, 대다수의 규제당국은 법적의무 준수, 조직 거버넌스 및 규제당국의 운용과정 상의 서비스전달과 같은 조직성과 및 효율성과 관련된 범주의 성과정보를 수집하거나 보고하지 않는다(온라인 그림 G.31).

방법론 및 개념정의

부문별 규제당국의 거버넌스에 대한 OECD 지표는 OECD 경제규제당국 네트워크의 업무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며, 에너지 분야, 전자통신분야. 철도운송 분야, 항공운송 분야, 수자원 분야에서 경제규제당국의 거버넌스를 측정한다. 해당 지표는 모든 OECD 국가와 다수의 OECD에 속하지 않는 국가들의 규제당국을 대상으로 한다. OECD 시장규제조사 (Product Market Regulation survey)와 함께 배포된 설문문항에서 지표를 추출하였고, 설문응답자는 규제당국과 관련부처의 고위직이다. 설문응답결과는 OECD 사무국의 엄격한 데이터 검증과정을 거쳐 응답자와 협의하여 완전성, 일관성, 정확성을 검증하였다. 복합지표 내 구성요소의 중요성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동일한 가중치의 질문과 하위질문의 결과를 평균화하여 계산했다. 규제방법에 따라 0(가장 효과적인 거버넌스 방식)-6(가장 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방식)의 척도를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OECD 경제규제당국 네트워크의 지원 하에 설문지 개발, 자료수집, 응답 검증 및 분석이 이루어졌다. 해당 분석에 관련한 전체 내용은 Casullo 외(2019)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지표는 독립성, 책임성, 활동범위 이 세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지며, 성과에 관련한 설문 문항은 정부, 의회, 규제 대상 산업, 일반 대중을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책임성 구성요소에 포함된다.

법적의무준수는 규제당국이 정보제공의무(information obligations) 및 타당한 의사결정구조와 같은 법적요건의 준수 수준을 나타낸다.

규제 프로세스의 품질은 의사결정에 정보를 제공하는 규제영향평가, 이해관계자 참여 및 사후평가와 같은 수단의 성과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조직 및 조합의 거버넌스 성과는 예정된 규제활동의 적시성, 내부설문조사 결과, 리더십 성과와 같은 규제당국의 내부 기능에 대한 정보를 나타낸다.

운용과정 상의 서비스전달은 조사횟수, 자격요구사항과 같은 규제기관의 기능 및 책임에 관련한 정보를 나타낸다.

참고문헌

Casullo, L., A. Durand and F. Cavassini (2019), “The 2018 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 Part of the Product Market Regulation (PMR) Survey”,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1564,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0a28908-en.*

OECD (2014), *The Governance of Regulators*, 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for Regulatory Polic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09015-en*.

그림 설명

G.31. (규제당국이 수집 및 게시한 성과정보 유형, 2018)은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7.12. 규제 프로세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 수집 및 게시 (2018년)

국가 및 부문별로 규제 프로세스의 품질에 대한 정보를 (a) 수집 및 (b) 게시한다고 응답한 응답자.

	에너지		전자통신		철도운송		항공운송		수자원	
	수집	게시	수집	게시	수집	게시	수집	게시	수집	게시
호주	●	●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칠레	●	○	○	○	○	○	●	○	●	●
콜롬비아	●	○	●	●	●	○	○	○	●	●
체코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독일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헝가리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일본	●	○	○	○	●	○	○	○	–	–
한국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멕시코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폴란드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스위스	●	●	○	○	●	○	●	○	–	–
터키	●	○	○	●	●	○	●	●	–	–
영국	●	●	●	●	●	○	●	●	●	○
미국	●	●	●	●	●	●	●	●	–	–
미국-뉴욕	–	–	–	–	–	–	–	–	●	●
미국-텍사스	–	–	–	–	–	–	–	–	○	○
OECD총합										
●예	33	28	23	20	25	15	26	14	17	13
○아니오	4	9	13	16	10	20	5	17	3	7
해당없음	2	2	3	3	4	4	8	8	19	19

출처: OECD (2018), *Indicators on the Governance of Sector Regulator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344

8. 공공조달

공공조달의 규모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공공조달
디지털 공공조달과 공공재정관리의 통합
긴급조달과 위험 관리
공공조달의 전문화

공공조달의 규모

정부는 정책을 시행하고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양의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한다. 예를 들어, 코로나 19 위기 기간 동안 나타난 바와 같이, 공공조달의 전략, 관행, 체계는 시민의 삶의 질과 웰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가가 공공조달을 함에 있어 목표로 해야하는 것은 최대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비롯한 공공조달을 통한 지출가치(value for money, VFM)를 달성하는 것이다. GDP 대비 공공조달 규모는 2008년 GDP의 11.8%에서 2019년 12.6%로 10년 동안 OECD 전체 국가에서 소폭 증가하였고, 코로나19 팬데믹은 2020년 GDP 대비 공공조달의 규모를 급격하게 증가시켰다. 22개 OECD-EU 국가들의 공공조달은 2019년 GDP의 13.7%에서 2020년 14.9%로 증가하였다. 예를 들어, 노르웨이는15.8%에서 17.1%로 증가하였으며, 영국의 경우 13.2%에서 16.1%로 증가하였고, 다른 국가에서도 큰 증가가 나타났다. 이러한 공공조달 규모의 증가는 코로나19대응을 위해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과 코로나19위기의 결과로 국내총생산(GDP)이 하락한 것에 기인한다.

정부의 총지출에서 공공조달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에 비해 2020년 OECD 국가 전체에서 1~2%p 감소했다. 이는 조달 서비스의 규모보다 비조달 서비스의 규모가 더 빠르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지원은 정부의 총지출을 크게 증가시켰다(2020년 기준, OECD-EU 국가의 GDP의 평균 53.6%). 한편, OECD-EU 국가의 공공조달 규모 중 64%는 지방정부 수준에서 발생하여, 이전과 비교해 큰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온라인 그림 G.33 참고).

공공조달은 보건, 환경보호, 공공질서, 경제활동(인프라, 교통, 커뮤니케이션, 에너지, R&D 포함) 등의 분야에 포함된 모든 형태의 공공서비스 전달을 의미한다. 2019년 기준, OECD 국가들의 보건 분야에 대한 공공조달 지출의 비중은 평균 29.3%로 가장 큰 지출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이탈리아, 일본, 슬로바키아에서는 보건분야의 공공조달 지출의 약 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8.2 참고). 반면, 리투아니아와 미국의 경우 경제 경제활동 분야의 공공조달 지출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스위스의 경우 일반공공행정과 사회보호에 대한 지출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OECD 국가의 공공조달 지출 중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는 경제활동(16.7%), 교육(11.6%), 국방(10.5%), 사회보호(10.0%)로 나타났으며,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온라인 그림 G.32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정부조달 지출규모는 국민계정체계(System of National Accounts: SNA)에 기초하여 작성된 OECD 국민계정통계(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산하였다. 정부조달은 중간 소비(정부 자체 사용을 위한 재화 및 서비스 구매(예: 회계, 정보통신 서비스), 총고정자본형성(건물, 도로 건설 등 고정자산의 판매를 제외한 자본의 구매), 시장의 생산자를 통한 사회적 현물이전(시장 공급자가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를 가구에 공급하기 위해 일반정부가 구입)의 총합이다. 공공조달의 지출 규모를 추산할 때 공기업은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정부의 공공조달 지출은 정부기능별분류(COFOG)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표 8.2 참고). 정부기능별분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부록 C를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5),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Procurement*, OECD, Paris, OECD/LEGAL/0411.

OECD (2019), *Productivity in Public Procurement: A Case Study of Finland: Measuring the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f Public Procurement,* OECD, Paris, *www.oecd.org/gov/publicprocurement/publications/productivity-public-procurement.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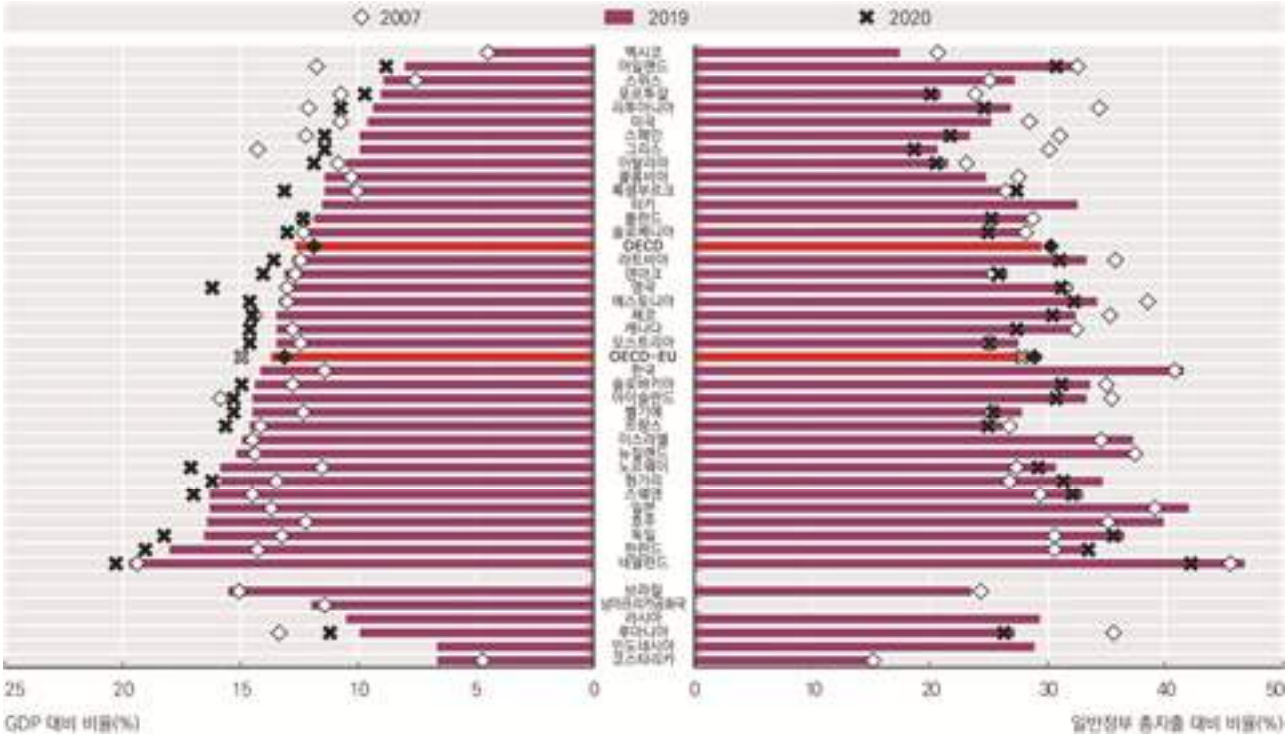
그림 설명

8.1. 칠레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터키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네덜란드의 일반정부 조달의 많은 부분은 시장의 생산자를 통한 사회적 현물 이전으로 지출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사적 공급자에 의해 개인이 서비스를 구입한 후 정부가 이를 보조해주는 학자금 지원, 건강보험 보조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일본, 브라질, 러시아의 자료는 2018년 자료이다.

8.2. 호주, 캐나다, 콜롬비아, 멕시코, 뉴질랜드, 터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칠레는 시계열 자료에 결측치가 존재하여 OECD 평균에 포함하지 않았다. 칠레의 자료에는 재고 증감 및 귀중품 순취득분이 포함되어 있다. 칠레, 일본, 한국은 2019년 대신 2018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G.32. 2012-2017년 기능별 일반정부의 공공조달 지출 구조의 변화, 정부수준별 일반정부의 공공조달 지출(2007년, 2019년, 2020년)에 대한 자료는 부록 G에 제시되어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8.1. 일반정부 GDP 및 총지출 대비 공공조달 지출의 비율 (2007년, 2019년, 2020년)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호주의 자료는 호주 통계청에서 제공한 정부재정통계와 국민계정통계 자료를 조합하여 활용했다.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363

8.2. 정부기능별 공공조달 지출의 구조 (2019년)

국가	일반공공행정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경제활동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휴양, 문화, 종교	교육	사회보호
오스트리아	11.8	1.6	3.0	21.4	1.3	0.7	36.3	3.9	9.1	10.9
벨기에	12.7	1.5	2.0	13.1	2.8	1.1	46.7	3.1	6.7	10.3
칠레	4.8	7.9	8.0	13.5	1.3	6.3	25.3	2.1	20.5	10.3
체코	8.6	2.5	4.1	22.3	5.0	3.4	32.5	5.4	11.5	4.7
덴마크	15.0	5.0	2.8	10.4	1.3	0.7	32.0	5.2	12.0	15.8
에스토니아	9.5	10.7	3.9	18.1	3.7	2.4	24.8	6.8	15.7	4.4
핀란드	22.6	3.8	2.3	12.8	0.5	1.1	23.0	4.1	11.8	18.0
프랑스	7.3	6.2	2.5	13.0	4.2	3.5	38.1	4.8	6.5	13.8
독일	11.2	4.0	3.2	9.2	2.1	1.1	39.6	3.4	6.7	19.4
그리스	18.0	4.4	1.6	15.3	5.1	1.7	38.6	3.3	7.7	4.1
헝가리	18.2	3.9	3.9	29.5	2.4	2.2	18.3	8.7	8.7	4.1
아이슬란드	7.5	0.4	3.8	20.3	2.4	2.4	25.7	8.7	19.0	9.8
아일랜드	5.5	0.9	4.6	15.3	2.7	5.6	31.1	3.9	9.2	21.2
이스라엘	6.6	21.0	3.4	5.9	2.5	2.4	27.5	5.2	15.1	10.3
이탈리아	13.4	3.6	3.5	12.3	6.9	3.3	42.3	4.1	5.1	5.6
일본	6.5	3.3	1.9	14.4	5.7	2.1	44.4	1.6	6.3	13.9
한국	5.7	11.6	2.8	15.6	3.9	6.1	32.2	2.8	12.5	6.8
라트비아	7.9	7.1	4.4	19.9	3.6	4.0	28.4	5.5	12.3	6.7
리투아니아	7.6	11.1	5.4	23.2	2.8	6.0	14.7	6.0	17.1	6.2
룩셈부르크	15.1	1.3	3.1	21.4	4.4	2.2	21.6	5.9	7.9	17.1
네덜란드	6.2	3.2	3.5	11.4	4.8	1.5	35.9	3.2	8.4	21.8
노르웨이	10.0	7.9	3.0	22.9	4.0	3.9	24.4	4.9	9.9	9.2
폴란드	6.2	6.0	4.3	27.0	3.0	4.0	28.8	5.9	11.3	3.6
포르투갈	12.8	2.7	3.3	21.1	3.9	3.3	35.3	4.7	9.3	3.6
슬로바키아	8.8	3.6	4.3	21.1	3.7	2.5	43.6	3.4	6.8	2.1
슬로베니아	10.2	2.7	3.4	22.7	2.9	2.9	31.5	5.1	13.3	5.4
스페인	10.8	3.2	2.8	14.8	6.8	3.0	32.4	6.1	10.9	9.3
스웨덴	18.7	4.5	2.9	13.6	2.1	2.9	21.7	3.7	16.1	13.7
스위스	21.8	6.0	5.7	15.6	4.0	1.4	1.9	3.1	18.8	21.6
영국	3.7	10.3	6.0	14.3	3.8	3.4	32.1	2.8	10.0	13.6
미국	10.4	21.7	6.1	22.3	0.0	2.4	13.6	1.7	18.5	3.2
OECD	9.4	10.5	4.1	16.7	2.8	2.6	29.3	3.0	11.6	10.0
OECD-EU	10.7	4.2	3.2	13.8	3.7	2.4	36.4	4.3	8.1	13.4
코스타리카	4.7	0.0	7.7	13.5	3.7	4.5	35.4	1.8	21.2	7.6
루마니아	8.7	3.6	2.8	29.7	4.5	8.6	26.9	5.2	6.6	3.6

출처: *OECD National Accounts Statistics (database); Eurostat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382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공공조달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은 보다 자원효율적인 경제, 혁신의 촉진, 중소기업 지원, 사회적 가치 증진시키며, OECD 2030 지속가능 발전 의제에 기여할 수 있다. 최근, 공공구매에 대한 책임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는 높아졌고, 이러한 환경변화는 정부에게 글로벌 공급 사슬을 포함한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성과와 다차원적 위험성을 고려해야할 필요성을 증가시켰다. 시장의 큰 구매자로서, 정부는 시장을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 RBC)으로 전환시키고, 표준 책임경영에 힘쓰는 생산자들을 위해 시장을 평준화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조사를 실시한 27개국(OECD 26개국 및 브라질) 중 모든 국가는 규제나 전략에 구애받지 않고 기업책임경영의 목표들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조달 프레임워크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목표에 대해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국가는 소수에 불과하다. 조사대상국 중 모든 국가는 환경목표를 지원하는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으며, 70%의 국가는 인권에 대한 프레임워크, 41%는 성별 균형에 관련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 또한 48.8%의 국가들은 소수자 문제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다(그림 8.3 참고). 예를 들어, 칠레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여성주도기업의 참여를 촉진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하였고, 아이슬란드와 스위스의 경우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 캐나다에서는 의류의 윤리적 조달 정책에 따라 의류공급업체는 자신들과 그들의 하도급업체들이 노동 및 인권 관련 현지법률과 국제표준을 준수한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경영 프레임워크는 모든공급사슬에 대해서 체계적인 활용을 하지 않고 있다. 조사대상 국가의 40%만이 모든 공급사슬에 윤리준수 사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10%는 장기 실업자 고용과 관련된 목표, 8%는 성평등에 관련한 사항을 적용한다(그림 8.4 참고). 스웨덴의 노동법 요구조건에 관한 법률은 모든 공급사슬에 대해 인권과 노동권에 관련된 책임경영목표를 통합시키고 있으며, 호주와 영국의 경우 공공부문의 공급사슬에 인신매매에 대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

OECD 25개국 중 15개국(60%)은 공급사슬에 기업책임경영 규범을 위반하는 생산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고려한 반면, 10개국(40%)은 책임경영규범 위반 시 생산자의 변경만을 요구한다(온라인 표 G.34). 캐나다는 공급사슬에서 인권 및 노동권 침해를 파악하기 위한 인증체계를 갖추고 있고, 계약자는 의무적으로 이 인증을 유지하여만 한다. 뉴질랜드에서는 규제체제가 책임경영규범 위반자에 대해 제재를 의무화하지는 않지만, 조달기관은 적절한 제재를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지니고 있다. 한편, 국가들은 책임경영목표를 모니터링하고 추적하는 방법에 있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조사대상국가의 88%가 환경부문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나마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반대로 소수민족에 관련한 사항의 경우 32%의 국가에서만 모니터링이 실시된다(온라인 그림 G.35)

방법론 및 개념정의

'사회적 가치를 위한 전략적 공공조달'의 자료는 공공조달의 절차에 기업책임경영(responsible business conduct)의 목표를 통합하는 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2020년 책임경영 활용 설문조사(2020 OECD Survey on Leveragin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를 통해 수집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는 OECD 26 개국과 핵심협력국가 1개국(브라질)이다. 응답자들은 각 국가별 중앙정부 차원에서 조달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자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책임경영은 기업이 경제, 환경, 사회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점을 인정하고, 장려하나, 반대로 전 세계적 공급사슬을 통한 경영활동이 사람, 사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다. 설문조사에는 환경, 인권, 노동권, 소수자 배려, 장애인, 장기실업, 성별 고려, 청렴성과 같은 기업 책임경영의 목표들을 다루었다.

해당 장에서 규제 프레임워크는 특정 정책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법률, 법령, 내각지시 또는 특정정책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기타 법적문서와 같은 규칙체계로 정의한다. 전략적 프레임워크는 국가당국에 의해 승인된 상위문건으로 정의될 수 있고, 목표, 로드맵, 실행계획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때의 국가당국은 의료나 환경 같은 공공정책의 특정 부문이나 영역에 대해 국가의 정책목표와 포부를 제시하는 의회 또는 정부와 같은 기구들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2020), *Integratin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in Public Procuremen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2682b01-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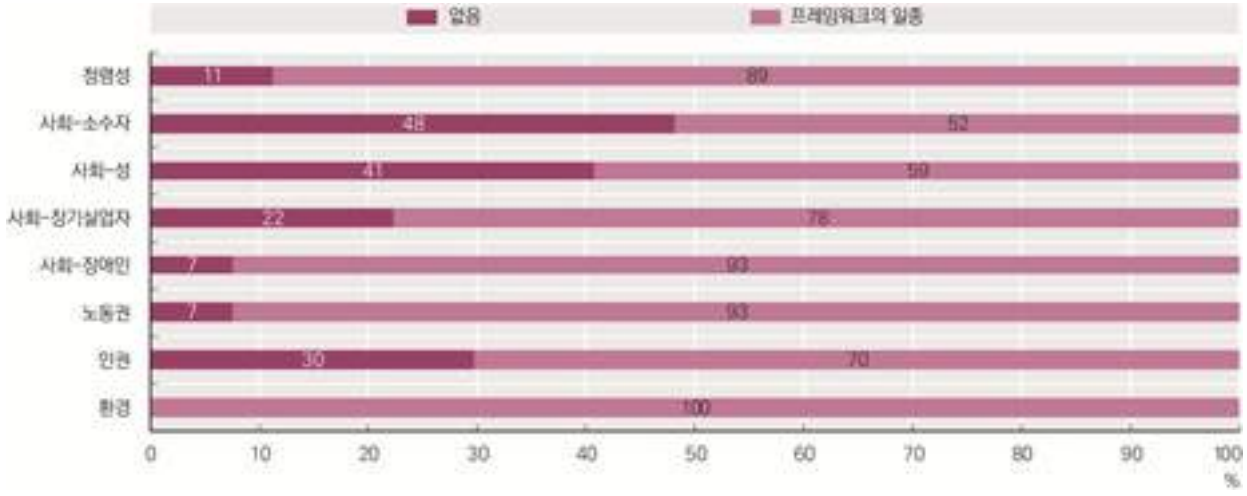
그림 설명

오스트리아, 칠레, 그리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터키, 영국,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8.4. "아니오, 자율적" 항목이 의미하는 것은 프레임워크가 있지만, 공급사슬에 프레임워크를 적용하는 것이 자율적인 국가의 비율을 나타낸다. 즉, 재량적인 결정을 의미한다.

G.34. (2020 책임경영표준의 미준수에 조치규정이 있는 국가) 및 G.35(2020 공공조달과정에서 책임경영 목표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의 비율)은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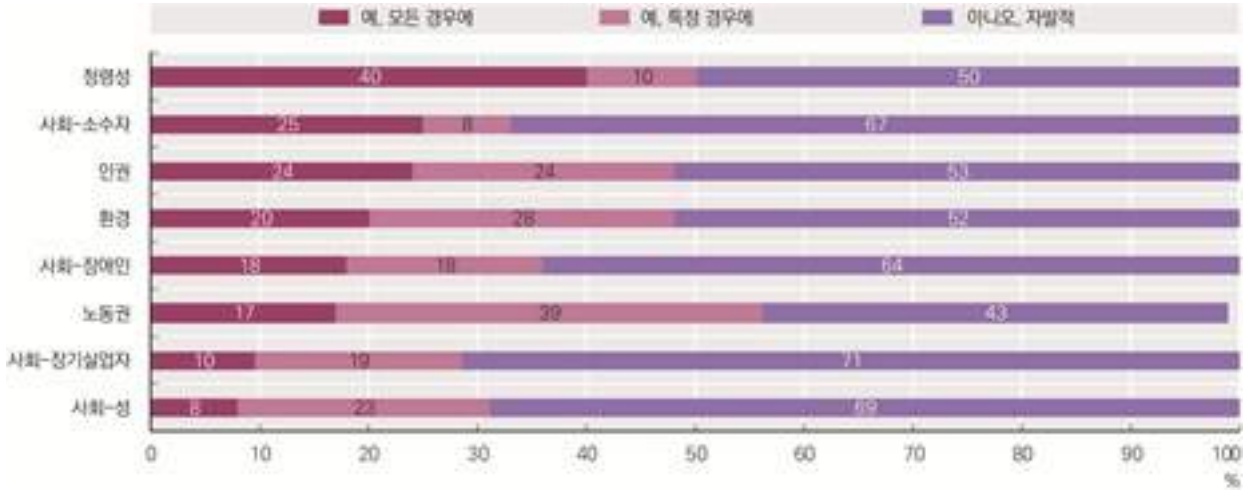
8.3. 기업책임경영 지원 프레임워크를 보유한 국가비율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Leveragin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through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401

8.4. 공급사슬에서 규제 또는 전략적 프레임워크를 활용하는 국가비율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Leveraging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through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420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전략적 공공조달

공공조달은 공공재정관리의 과정 중, 예산집행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공조달의 절차를 다른 재정관리체계와 연계하는 것은 잠재적 비용초과, 지출 및 수요의 추세, 부정행위 가능성에 대해 주목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관리를 보장한다.

각 국가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더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공공서비스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점진적으로 디지털화를 추진하여, 시민 및 기업과 원활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 전자조달 시스템은 공적자금의 사용방식에 대한 가시성을 크게 높이며, 부패방지에 도움이 된다. 또한 조달의 효율성을 제고와 공공조달 과정 상 발생할 수 있는 관리부담과 실수를 줄임으로써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전자조달의 장점에 주목한 국가들은 공공조달 과정을 디지털화 하고, IT기술을 더 많은 공공조달과정에 적용하고 있다. 2018년 OECD 조사에 따르면 OECD 32개국 모두 중앙전자조달 시스템 또는 특정 조달기관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 공고와 입찰 서류를 제공하는 한편, 계약결과를 통보한다. 그러나 거래기능 자체는 높은 수준으로 개발되지 않았다. 32개국 중 31개국(97%)은 전자입찰이 가능했지만, 20개국(63%)만이 송장(invoice)의 전자제출이 가능했다 (OECD, 2019a).

한편, 전자조달의 다양한 기능들이 개발되고 있다. 33개국(OECD 32개국 및 코스타리카) 중 26개국(82%)은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정부의 조달계획을 발표하였고, 20개국(61%)은 사후계약관리를 도입하였다. 21개국(64%)은 조달업체 등록 시스템, 23개국(70%)은 기본 계약모듈 적용, 13개국(39%)은 경영지능(business intelligence, BI) 모듈을 활용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정부 내부의 사용자가 다양한 조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리투아니아는 체결된 계약에 대한 정보가 국가 전자조달 시스템에서 전자송장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특정 계약의 이행과정을 추적하는데 도움을 준다. 캐나다와 콜롬비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경영지능(BI) 모듈이 별도의 IT 시스템에서 작동한다.

해당 조사는 많은 OECD 국가들이 공공조달 시스템과 공공재정관리 시스템을 통합하였으며, 30개 OECD 국가 및 코스트타리카 중26개국(87%)이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공공조달 계획을 연계함을 시사한다 (그림 8.6 참고). 예를 들어, 25개 OECD 국가(83%) 및 코스타리카의 공공부문 기관들은 공공조달을 시행하기 전 예산의 가용성을 인증해야 한다(그림 8.7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디지털 공공조달과 공공재정관리의 통합'의 자료는 공공조달에 대한 이사회 권고(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의 시행에 관한 2018년 OECD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이사회 권고에 포함된 12개의 개별 원칙에 초점을 맞췄다. 설문조사는 성과관리, 조달인력의 역량, 공공조달의 청렴성과 같은 문제를 다룬 OECD 최초의 공공조달 관련 조사이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는OECD 32개국과 회원후보국 1개국(코스타리카)이었으며, 응답자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조달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자와 중앙구매기구(central purchasing bodies)의 고위 공직자이다.

전자조달(E-procurement)은 공공조달의 전체 주기 동안 서류 중심의 절차를 디지털 기술로 대체 또는 재설계하여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조달의 주기는 수요 조사, 경쟁, 낙찰, 계약금 지급, 계약 관리뿐만 아니라 이후의 모니터링,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활동 과정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2019a), *Government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Paris, *https://doi.org/10.1787/8ccf5c38-en*.

OECD (2019b),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2015 OECD Recommendation,*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 10.1787/1de41738-en*.

OECD (2018), *Mexico's e-Procurement System: Redesigning CompraNet through Stakeholder Engagement,*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287426-en*.

그림 설명

체코,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8.7. 일부 응답자들은 특히 계약 문서와 관련한 영업 비밀, 독점적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였다. 독일은 일반적으로 계약 문서상 민감한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계약당국과 공급업체 모두 자유롭게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다. 네덜란드에서는 계약 문서(계약의 자세한 정보 삭제)를 일부 편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헝가리 및 아일랜드는 2018년 이후부터 특정수준의 정부에서 채택한 전자조달 기능에 대한 정보를 업데이트했다. 헝가리와 아일랜드 모두 명세서(invoice) 및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모듈의 전자 제출 기능이 있고, 프레임워크 계약 모듈 및 사후계약관리에 대한 기능은 헝가리만 있다. 폴란드는 전자명세서 시스템이 있지만 전자조달과는 별개이다.

8.6 & 8.7 콜롬비아, 이탈리아, 스웨덴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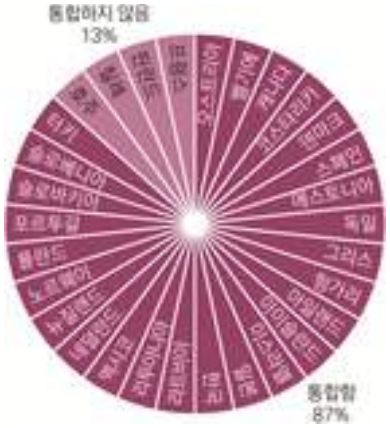
8.5. 전자조달에서 제공하는 기능 (2018년)

	조달계획게시	전자입찰 (E-mail제외)	전자송장 (E-mail제외)	사후계약관리	공급자 등록	프레임워크 계약모듈	비즈니스 인텔리전스모듈
호주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	●	♦
캐나다	○	♦	♦	○	♦	○	○
칠레	●	●	○	●	●	●	●
콜롬비아	●	●	●	●	●	●	○
덴마크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	●	●
헝가리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스라엘	○	○	●	●	○	○	●
이탈리아	●♦	●♦	●♦	♦	●♦	●♦	●♦
일본	●♦	●♦	●♦	●♦	●♦	○	○
한국	●	●	●	●	●	●	●
라트비아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멕시코	●	●	○	○	●	●	●
네덜란드	●	●	○	○	○	●	○
뉴질랜드	●	●	♦	○	○	○	○
노르웨이	●	♦	♦	♦	○	♦	○
폴란드	●♦	●♦	○	○	○	○	○
포르투갈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	●	●	●	●	●	○
스웨덴	○	♦	♦	♦	♦	♦	♦
터키	●	●	○	●	●	●	●
OECD총합							
●중앙전자조달시스템에서제공	18	21	10	9	13	13	8
●♦중앙전자조달시스템과특정조달기관의시스템 모두에서제공	4	6	3	3	3	3	2
♦특정조달기관의전자조달시스템에서제공	4	4	7	7	4	6	3
○제공되지않음	6	1	12	13	12	10	19
코스타리카	●	●	●	●	●	●	○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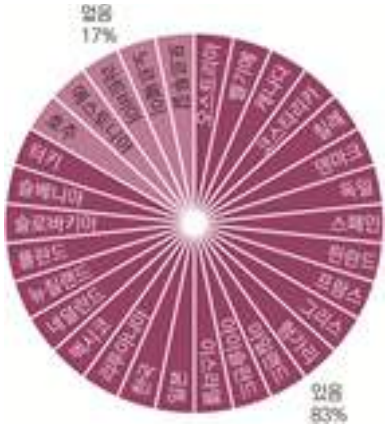
8.6. 조달계획과 예산계획의 통합 (2018년)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458

8.7. 조달절차 전 예산가용성을 보장하는 메커니즘 (2018년)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477

긴급조달과 위험 관리

코로나19 팬데믹은 필수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긴급조달을 일반화시켰으며, 공공조달 시스템 및 공공조달 과정에서 위험을 포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은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뿐만이 아니라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재화, 서비스,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계획, 조달 및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핀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위기대비의 일환으로 비축과 같은 공공조달 전략을 활용했지만, 대부분의 국가는 팬데믹이후 위험관리전략을 재고하고 위기발생시 가용한 조치를 마련해야 했다.

대다수의 정부는 일부 긴급상황에 대한 예외들을 제외하고, 기존의 공공조달 프레임워크에 의존하고 있었다. OECD는 29개 회원국과 코스타리카를 대상으로 공공조달, 인프라 거버넌스, 코로나19 초기대응에 대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14개국(46.7%)이 임시 공공조달 규정(예: 프랑스)을 시행하거나, 슬로베니아와 같이 공공조달 관련 특정 조항을 포함한 추가적 코로나19관련 법률을 개발했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25개국(86%)은 오스트리아와 같이 긴급조달절차를 상세히 기술하는 것부터 진행 중인 계약 또는 지급기한을 변경하는 것까지 위기기간 동안 공공조달 과정상의 구매자를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을 개발했다(표 8.8).

또한, OECD 29개국 중 19개국(63.3%)은 의약품뿐만이 아니라 IT 장비 및 서비스를 포함하는 필수재화에 대한 조달을 조정하거나 집권화하였다(표 8.8). 벨기에의 경우 비축분에 대한 모니터링과 구매와 관련된 의사소통을 위해 특별팀(TF)을 설치하였고, 이탈리아는 중앙구매기구인 공공조달공사(Consip)가 위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조달하는 권한을 부여했다. 공적 계약은 여러 공급자에게 중요한 수입원이기 때문에, 스페인과 같은 OECD 29개국 중 12개국(41%)은 계약만료시한을 연장하거나 선금을 제공하는 등의 기업 관련 조치를 취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조달에서의 위험요인 및 관련된 완화 조치들이 강조되었지만, 이러한 위기 이전에도 공공조달에 대해 위험기초 접근법을 취하려는 시도들이 있었다. 초기에는 청렴성 위주로 초점을 맞췄으나, 최근 몇년동안 운영, 재정, 평판, 사회 및 환경과 같은 여러 맥락적 위험을 포함하여 공공조달의 영향과 성과에 대해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험들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았다.

실제로 2016년에 수집한 자료와 비교했을 때, 2018년에 시행한 OECD 설문조사(2015 공공조달 권고안 이행실태조사에 따르면, 점점 더 많은 수의 응답자가 구매위험 관리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응답자의 43%는 공공조달에 있어서의 위험을 평가할 어떠한 수단도 가지고 있지 않다. OECD 29개중 9개국(31%)은 위험평가수단으로 위험DB(database)를 구축하였고7개국(42%)은 위험평가방법론을 개발했다. 또한 5개국(17%)은 위험목록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4개국(14%)은 위험평가를 개발하였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에서 법에 규정된 정부기관은 주요한 서비스에 대한 고위험 계약관리에 관련한 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다양한 의무가 수반된 위험평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라야 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디지털 공공조달과 공공재정관리의 통합'의 자료는 공공조달에 대한 이사회 권고(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의 시행에 관한 2018년 OECD 설문조사를 활용하였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는OECD 32개국과 회원후보국 1개국(코스타리카)이었으며, 응답자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조달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자와 중앙구매기구(central purchasing bodies)의 고위 공직자이다. 추가 자료는 OECD에서 개발한 공공조달 및 인프라 거버넌스: 코로나 19 위기의 초기대응과 각 국에서 검증된 연구를 통해 수집되었다.

참고문헌

OECD (2020a), "Stocktaking report on immediate public procurement and infrastructure responses to COVID-19",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48d0646-en*.

OECD (2020b), "Public procurement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Initial policy responses to the coronavirus(Covid-19) crisi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0ab0a96-en*.

OECD (2019),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2015 OECD Recommendation*,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de41738-en*.

그림 설명

8.8. 캐나다, 체코, 덴마크, 헝가리, 이스라엘, 멕시코, 포르투갈, 터키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8.9. 콜롬비아, 체코,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스위스, 영국, 미국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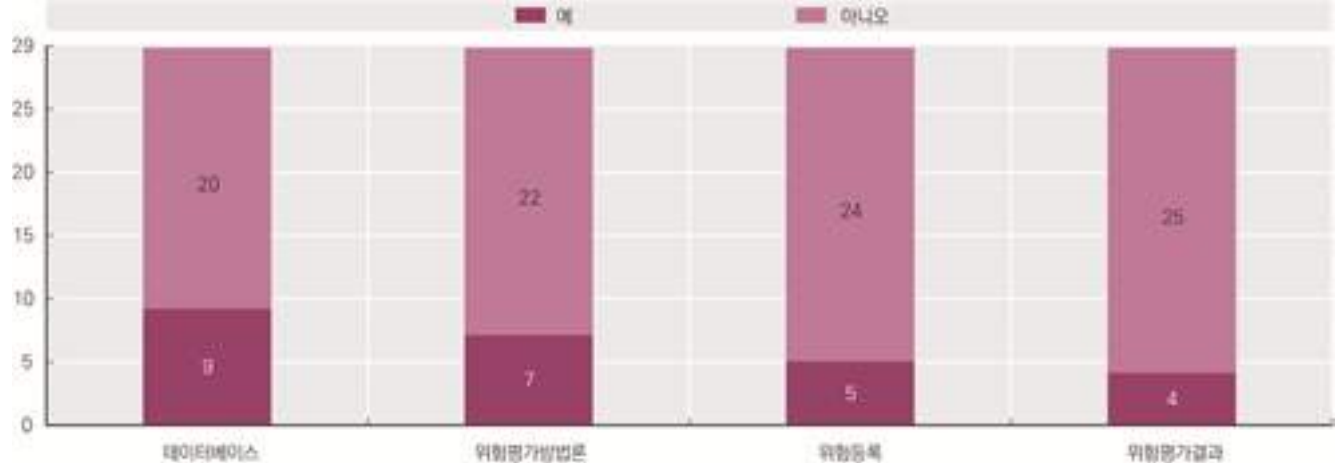
8.8. 코로나19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시행된 공공조달 조치 (2020년 3월~2020년 6월)

	지침	집권화	기업지원	규정변경
호주	●	○	○	○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	●	●	●	○
칠레	●	○	○	○
콜롬비아	●	○	●	●
에스토니아	●	●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독일	●	●	○	○
그리스	●	○	○	●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한국	●	●	●	●
라트비아	●	●	○	●
리투아니아	●	●	○	●
룩셈부르크	○	●	○	●
네덜란드	●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
폴란드	●	●	●	●
슬로바키아	●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	○
스위스	●	●	○	●
영국	●	○	●	○
미국	●	○	○	○
OECD총합				
● 예	25	19	12	14
○ 아니오	4	10	17	15
코스타리카	●	○	○	○

출처: OECD (2020), "Stocktaking report on immediate public procurement and infrastructure responses to COVID-19".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496

8.9. 공공조달 위험평가도구를 보유한 국가 수 (2018년)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515

공공조달의 전문화

공공조달의 복잡성이 증가함에 따라 조달 전문성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조달 전문성의 범위는 공공서비스를 뒷받침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비롯해, 공공사업을 공급하는 것부터 사업의 탄력성과 생산성을 보장하고 전략적 정책목표를 구현하는 데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다. 그동안 각국 정부는 녹색전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나아가 포용적 성장 등과 같은 여러 정책에 조달기능을 전략적인 수단으로 활용했다. 최근 몇년 동안 정책결정자들은 공공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조달이 가지는 잠재력을 최대로 활용하려 했다. 이러한 기대들은 지불가치를 달성하는 것(value for money)에서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발전했다. 코로나19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조달기관은 필수 재화를 구매하는 데에 있어 본인들이 직면한 복잡성과 압박을 보여주었으며, 조달이 보건 및 인프라와 같은 기본적 공공서비스 기능에 중요한 요소임을 설명해주었다. 나아가 공공조달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기반시설에 목표화된 공적투자를 지원하고 환경 및 기후변화에 대한 고려를 회복계획에 포함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OECD의 공공조달에 대한 권고안은 역량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공공조달의 성과의 질은 조달을 담당하는 실무자의 전문성 수준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설명한다. 조달기관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법률, 경제, 시장에 관련한 지식이 필요하지만, 효과적인 작업수행을 위해서는 상업, 소프트 스킬 및 기타 직무관련 기술이 더욱 필요하다. 각 국가는 이미 공공조달 관련 인력을 강화시키고 있다. 예를 들어, 뉴질랜드는 조달능력지수에 기반한 조직역량평가를 시작으로 조달 실무자에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여러 이니셔티브를 개발했다. 그렇지만 OECD 국가의 공공조달 담당자 간에는 아직도 능력 격차가 남아있다(OECD, 2019a).

OECD 국가들은 공공조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몇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조달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을 정의하는 역량모델을 도입한 국가는 2018년 30%였으나, 2020년에는 OECD국가 33개국 중 14개국(42%)이 역량모델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8.10 참고). EU에서 새롭게 개발한 ProcurCompEU는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확장 가능한 수단으로 구성된 조달역량체계이다. 다른 OECD국가들은 담당자들에게 조달기관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자격요건을 정의한다. 예를들어 콜롬비아의 조달 담당 직원들은 직무개요에 따라 경력이나 기본 혹은 전문교육이 필요하며, 한국에서 활용하는 필수훈련은 조달에 적절한 기술을 갖추게 만드는 여러 방안 중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조달의 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한 인증체계가 OECD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 2018년에는 29개국 중 6개국(21%)이 인증체계를 활용했지만 2020년에는 33개국 중 12개국(36%)이 활용했다(표 8.10 참고). 예를 들어 칠레는 조달관련 기술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조달 공무원을 대상으로 네 가지 역량수준을 인증하도록 절차를 두고 있다.

OECD 국가들은 공공조달을 점차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2018년에는 공공조달을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식한 국가가 33%였으나, 2020년에는 33개국 중 13개국(39%)이 공공조달을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국가는 전문가로 성장하거나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자격을 갖춘 인력을 조달에 전용된 경력 트랙에 유치하고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는 공식적으로 공공조달 직업군을 부처 간 국가전문직 목록(Répertoire Interministériel des Métiers de l'Etat)에 추가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OECD 33개국 중 27개국(82%)이 전문교육기관, 공동연구 프로그램 및 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조달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이다(그림 8.12 참고). 오스트리아는 빈 경제 및 경영대학(Vienna University of Economics and Business)과 협력하여 중앙조달기관을 위한 교육프로그램(European Training Programme)을 개발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공공조달의 전문화'의 자료는 공공조달에 대한 이사회 권고(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의 시행에 관한 2018년 OECD 설문조사와 2020 전문화 조사(2020 OECD Survey on Professionalisation)를 통해 수집되었다. 2020년 설문조사는 2020년 말 현재 전문화 현황을 갱신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역량지원을 위한 수단, 공공조달을 전문화된 영역으로 인식하는 것, 역량구축의 협력적 접근방식에 중점을 두고 조사되었다. 2018년 설문조사에 응답한 국가는OECD 31개국과 코스타리카(회원후보국)이었으며, 2020년 조사에는 OECD 33개국과 코스타리카(회원후보국)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응답자는 중앙정부 수준에서 조달정책을 담당하는 대표자와 중앙구매기구(central purchasing bodies)의 고위 공직자이다.

참고문헌

OECD (2019a),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2015 OECD Recommendation*,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de41738-en*.

OECD (2019b), *Government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ccf5c38-en*.

그림 설명

8.10. 2018년 자료에서 콜롬비아, 체코,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스위스, 영국, 미국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2020년 자료에는 캐나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미국의 자료가 누락되었다.

8.11 & 8.12. 캐나다, 아이슬란드, 룩셈부르크, 미국에 대한 자료는 누락되었다.

8.10. 공공조달 역량지원 수단(2018년, 2020년)

	역량 모델		자격요건		의무교육		인증체계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호주	○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
벨기에	○	○	●	●	○	○	○	○
캐나다	●	..	●	..	●	..	●	..
칠레	●	●	○	●	●	●	●	●
콜롬비아	..	●	..	●	..	●	..	○
체코	..	○	..	○	..	○	..	●
덴마크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핀란드	○	○	●	●	○	○	○	○
프랑스	●	●	●	●	○	●	●	●
독일	○	○	○	○	●	●	○	○
그리스	○	○	○	○	○	○	●	○
헝가리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일본	●	●	●	●	●	●	○	○
한국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멕시코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폴란드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스페인	○	○	○	○	○	○	○	○
스웨덴	○	○	○	○	○	○	○	○
스위스	..	●	..	●	..	●	..	●
터키	○	●	○	○	○	○	○	○
영국	..	●	..	●	..	●	..	●
OECD총합	.	.	.	.	.	.	.	.
●예	9	14	13	17	9	12	6	12
○아니오	20	19	16	16	20	21	23	21
.. 정보없음	6	2	6	2	6	2	6	2
코스타리카	○	○	○	○	○	○	○	○
인도네시아	..	●	..	●	..	●	..	●

출처: OECD (2018), *Survey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2015 OECD Recommendations on Public Procurement; OECD (2020), Survey on the Professionalisation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534

8.11. 공공조달을 직업으로 인식하는 국가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the Professionalisation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553

8.12. 조달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지식센터와의 협력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the Professionalisation on Public Procure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572

9. 열린 정부

공공 행정에서 열린 정부 문해력 증진 노력
시민 및 이해 관계자 참여 포털
정보 접근법의 집행

공공 행정에서 열린 정부 문해력 증진 노력

열린 정부는 민주주의와 포용적인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투명성, 청렴성, 책임성, 이해 관계자 참여의 원칙을 증진하는 거버넌스 문화이다 (OECD, 2017). 거버넌스 문화는 가치, 신념, 행동 규범 및 기대와 같은 유·무형의 측면을 모두 포함하며, 정책과 서비스 및 공공재에 나타난다. 열린 정부 문해력은 공무원과 이해 관계자가 열린 정부의 전략 및 계획에 성공적으로 참여하는 데 필요한 인식, 지식, 기술의 조합을 의미하며, 열린 정부의 문해력은 한 국가의 거버넌스 문화를 변화시키는 데 핵심적이다.

지침, 수단 그리고 기타 유형의 지침은 공무원이 공공 정책을 설계, 집행 , 평가할 때, 열린 정부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돕는다. 2020년 열린 정부에 관한 설문 조사에 참여한 OECD 31개 국가 중 29개 국가(94%)와 기타 3개 국가(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는 열린 정부 데이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고, OECD 25개 국가(81%)와 다른 3개 국가는 시민과 이해 관계자 참여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 OECD 20개 국가(65%)와 브라질, 루마니아는 사후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고, OECD 19개 국가(62%)와 브라질, 루마니아는 사전적인 정보 공개에 대한 지침을 갖고 있다. OECD 8개 국가(26%)와 브라질, 코스타리카만이 열린 정부의 개념에 초점을 맞춘 지침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설문 조사에 응답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열린 정부와 관련된 특정한 원칙과 관행을 포함하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그림 9.1 참고).

거버넌스의 문화로서 열린 정부는 정책 결정에 사회의 모든 집단을 포함시키고 참여를 촉진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리투아니아 및 영국과 같은 일부 국가는 정책 결정과 관련이 있을 때, 특정 집단 및 이해 관계자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지침을 가지고 있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특정 집단의 참여를 조성하는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있다. 참여에 대한 지침을 가지고 있는 OECD 25개 국가 중에서 11개 국가(44%)와 브라질은 청소년, 8개 국가(32%)는 장애인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각각 OECD 4개 국가(16%)는 성소수자(LGBTIQ+), 소수민족, 노인, 여성에 초점을 맞춘 지침을 가지고 있다(그림 9.2 참고).

교육은 공무원들이 열린 정부 원칙을 구현하도록 보장하는 또 다른 방법이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OECD 32개 국가 중 26개 국가(81%)와 브라질, 코스타리카 및 루마니아는 정보 접근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며, OECD 22개 국가(69%)와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는 열린 정부 데이터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OECD 국가들 중 20개 국가(63%)와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는 시민 및 이해 관계자 참여 교육을 실시했다. OECD 9개 국가(28%)와 브라질과 코스타리카는 통합 개념 (예: 열린 정부의 개념 설명)으로서 열린 정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왔다(그림 9.3). 일부 국가는 중앙 집권화된 교육 목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각 부처와 기관들이 직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 설계를 책임진다. 이러한 교육은 설문 조사 데이터로는 확인할 수 없다. 열린 정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OECD 9개 국가 중 8개 국가(89%)는 중앙 및 연방 공무원에게 교육을 제공한다. 이 중 7개 국가(78%)는 지방 정부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할 수 있고, 3개 국가(33%)에서는 사법부 및 입법부 공무원에게 교육을 공개한다(온라인 그림 G.36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된 열린 정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OECD 32개 국가들과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가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열린 정부에 관한 OECD 작업반의 대표였으며, 이들은 소속된 각 정부들 간에 응답을 조정했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받고, 전달하고,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의미한다. 공공 행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개인과 조직이 정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의 존재를 의미한다. 사전 공개는 사전 공개 요청 없이 관련 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사후 공개는 공공 기관이 개인의 요청에 따라, 공공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시민 및 이해 관계자 참여는 시민과 이해 관계자가 정책 주기와 서비스 설계 및 전달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의미한다.

열린 정부 데이터는 누구나 무료로 접근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어떤 목적으로든 사용할 수 있는 정부 데이터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201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 OECD, Pari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 instruments/OECD-LEGAL-0438.*

OECD (2016), *Open Government: The Global Context and the Way Forward*,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8104-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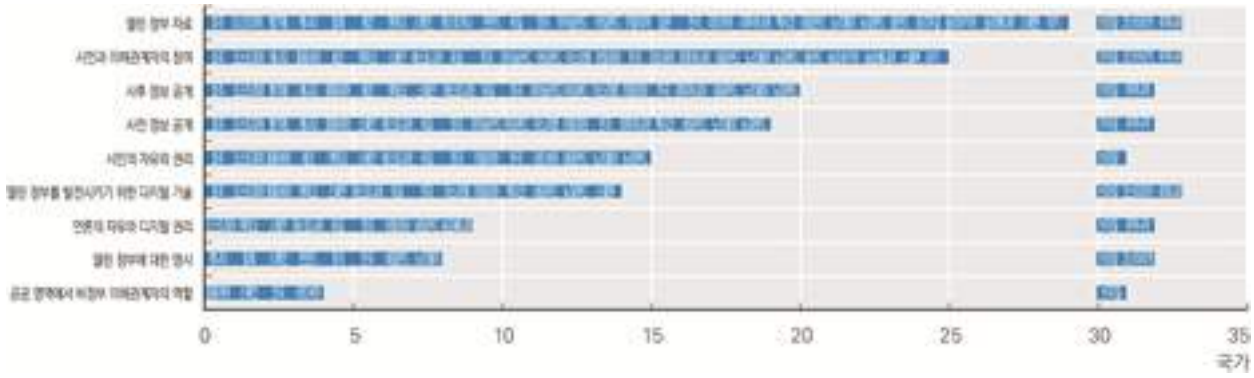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미국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9.1. 그리스에 대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9.2. 데이터는 시민 및 이해 관계자 참여에 관한 지침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다.

G.36. (공개 정부 교육이 가능한 직원 및 기관의 범주, 2020)은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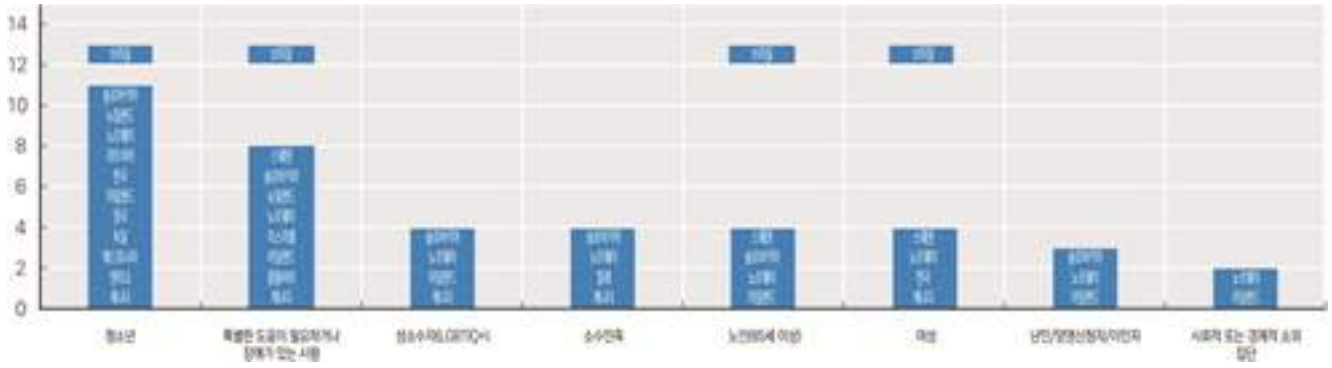
9.1. 중앙/연방 정부 수준의 열린 정부 관련 주제에 대한 공무원 지침의 가용성 (2020년)



출처 : OECD (2021), *Survey on Open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5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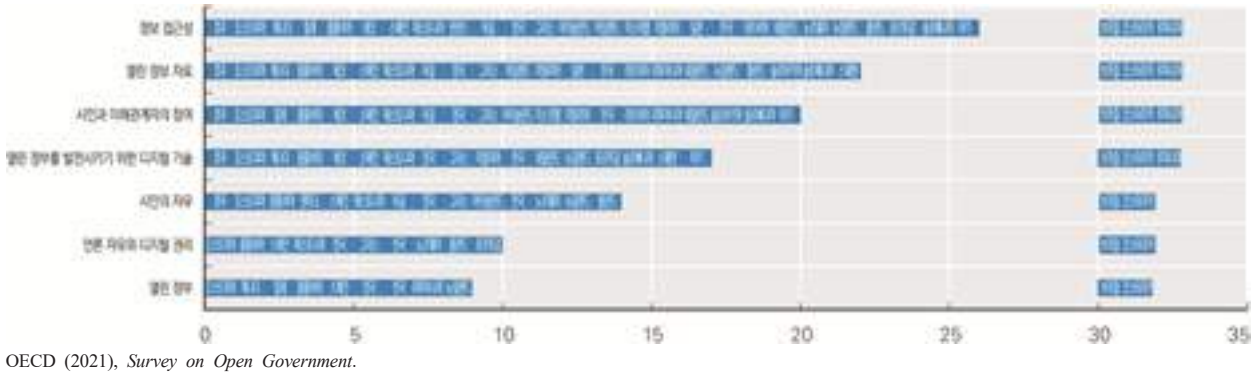
9.2. 특정한 집단에 대한 공무원 참여 지침의 초점 (2020년)



출처 : OECD (2021), *Survey on Open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610

9.3. 중앙/연방 정부에서 열린 정부 관련 주제에 대한 공무원 교육의 가용성 (2020년)



출처 : OECD (2021), *Survey on Open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629

시민 및 이해 관계자 참여 포털

디지털 도구를 사용하면 시민과 이해 관계자가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고 시간 또는 거리 제약으로 인해 회의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참여 기회의 범위를 늘릴 수 있다. 특히, 정부 기관이 협의 및 참여 기회를 게시하는 참여 포털(웹사이트)은 공공 정책의 설계 시 시민 및 이해 관계자와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고 협력의 기회를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중앙/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모든 참여의 기회는 범정부적인 포털에서 중앙 집중화 될 수 있다. 동일하게, 정부는 기관별 포털(단일 기관이 참여 기회를 게시하는 경우)을 설정하거나, 특정한 정책 문서(예: 열린 정부 파트너십 실행 계획)에 대한 개별적인 포털을 구축할 수 있다. 범정부적인 포털은 시민들이 과거, 현재, 미래의 참여 기회에 대해 학습할 수 있는 "원스톱 쇼핑"을 제공하는 이점이 있다. 반면에, 기관 또는 정책별 포털은 각 참여 과정의 세부 사항에 더 쉽게 적응할 수 있다. 일부 정부에서는 한 가지 유형의 포털에만 의존하는 반면, 다른 정부에서는 둘 이상의 포털을 결합하는 혼합 접근 방식을 사용한다.

2020년 열린 정부 설문 조사에 참여한 OECD 32개 국가 중 27개 국가(85%)와 브라질, 루마니아는 정부 중앙/연방 정부 차원의 모든 부처에서 협의 및 참여 기회를 게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참여 포털을 사용했다. 전체적으로 OECD 32개 국가 중 12개 국가(38%)는 다양한 범정부 포털을 보유하고 있으며, 15개 국가(47%)는 단일 정부 차원의 포털을 보유하고 있었다. 설문 조사에 참여한 OECD 국가 중 터키와 스웨덴 두 국가만이 중앙/연방 정부 차원에서 어떤 종류의 참여 포털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그림 9.4 참고).

범정부적인 참여 포털의 가장 일반적인 기능은 과거 협의 또는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범정부적인 참여 포털을 보유하는 OECD 27개 국가 중 25개 국가(93%)와 브라질 및 루마니아는 포털에서 이러한 기능을 제공한다. OECD 국가 중 22개 국가(81%)와 브라질 및 루마니아는 범정부적인 포털을 사용하여, 온라인 상담 또는 참여(예: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를 실시하고, 19개 국가(70%)와 브라질 및 루마니아에서는 특정 협의 또는 참여 기회에 대한 배경 문서를 제공한다. 범정부적인 포털이 시민과 이해 관계자에게 그들의 의견 및 권고 사항(예: 최종 결정 시, 고려한 방법)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OECD 11개 국가와 브라질에서만 이 기능을 갖춘 포털을 보유하고 있다(표 9.5 참고).

이탈리아의 두 범정부 포털 중 하나는 곧 있을 협의와 참여 기회에 대한 정보 제공과 시민 및 이해 관계자의 참여 권리에 대한 정보 제공을 포함하여, 가장 광범위한 기능(설문 조사에서 7개의 모든 질문에 대해 응답)을 보유하고 있다. 대조적으로 아일랜드의 포털은 사용자들을 개별 기관의 포털로 연결하는 기능만을 제공한다.

OECD 7개 국가는 기관별 포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들 중 6개 국가(86%)의 포털은 과거 상담 또는 참여 기회에 대해 알리고 향후 기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 5개 국가(71%)에서는 온라인 상담 기능을 제공한다. OECD 6개 국가는 다른 유형의 포털(예: 정책별)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중 3개 국가(50%)는 협의를 수행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된 열린 정부에 관한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OECD 32개 국가들과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가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열린 정부에 관한 OECD 작업반의 대표였으며, 이들은 소속된 각 정부들 간에 응답을 조정했다.

참여는 시민과 이해 관계자가 정책 주기와 서비스 설계 및 제공에 참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이해된다. 특히, 협의는 이해 관계자가 정부에 피드백을 제공하고 정부도 이해 관계자에게 피드백을 제공하는 쌍방향 관계를 수반한다. 이는 의견을 구하는 문제에 대한 사전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과정에 대한 결과의 피드백과 더불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참여는 정책 주기의 모든 단계와 서비스 설계 및 제공에서 협력의 기회와 필요한 자원(예: 정보, 데이터, 디지털 도구)이 이해 관계자에게 제공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2020), *Innovative Citizen Participation and New Democratic Institutions: Catching the Deliberative Wav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39306da-en*.

OECD (201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 OECD, Pari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38*.

OECD (2016), *Open Government: The Global Context and the Way Forward*,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8104-en*.

그림 설명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미국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9.4 스웨덴과 터키는 참여 포털이 없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9.4. 시민과 이해 관계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포털의 가용성 (2020년)

출처 : OECD (2021), *Survey on Open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648

9.5. 참여 포털의 기능 (2020년)

국가명	과거 상담/참여 알림	온라인 상담/참여 수행	상담/참여를 위한 배경 문서	예정된 상담/참여에 대한 정보 알림	참여 권리의 제공	참여 과정 동안 전달받은 사항에 대한 피드백 제공	기관 포탈
호주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캐나다	●			●			●
칠레	⊙	⊙	⊙		⊙	⊙	
콜롬비아	●			●		●	●
체코	❖		❖	❖		❖	
덴마크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
일본	●	●	●				●
한국	●	●	●	●	●	●	
라트비아	●	●	●	●			
리투아니아	●	●	●	●	●	●	
멕시코	●	●	●				
네덜란드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		●
영국	●	●	●	●	●	●	●
OECD 총계							
● 정부 차원	25	22	19	18	14	11	10
⊙ 기관 별	6	5	6	4	5	3	2
❖ 다른 포털	3	3	3	2	1	2	1
브라질	●⊙	●⊙	●⊙	●⊙	⊙	●⊙	
코스타리카	❖	❖					
루마니아	●	●	●	●	●		●

출처 : OECD (2021), *Survey on Open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667

정보 접근법의 집행

투명성은 열린 정부의 중요한 원칙이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 요소이다. 투명성은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우선 순위의 설정과 정부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정보에 입각한 대화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의사 결정에 참여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투명성은 좋은 거버넌스를 위해 매우 중요하며, 부패, 후견주의, 정책 포획과 맞서 싸우는데 기여한다. 이 모든 것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필수적이다. 투명성 증진을 위한 대부분의 조치들은 정보 접근법(ATI)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든 OECD 국가를 포함한 120개 이상의 국가들이 다양한 수준의 정보 접근법(ATI)법을 제정했다.

정보 접근법 집행의 중요한 요소는 법의 적용을 감독하기 위한 제도적 기관의 존재이다. 해당 기관의 책임은 다양하지만 법의 집행, 모니터링, 법의 홍보 등을 포함한다. 기관은 정보 접근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정보 위원회(또는 기관, 기타 조직), 정보 접근법으로부터 소관의 일부(예: 인권, 차별, 성별)를 위임 받은 옴부즈만 형태의 기관이 될 수 있다. 열린 정부에 대한 설문 조사에서 OECD 32개 국가 중 18개 국가(56%)와 브라질은 정보 접근법에서 구체적으로 위임을 받은 독립 기구가 있는 반면, 핀란드와 노르웨이 같은 9개 국가(28%)는 광범위한 소관을 가진 기구가 정보 접근법의 집행을 감독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OECD 17개 국가(53%)와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는 행정부에서 독립되지 않은 기관에게 해당 권한을 부여한다. 일부 국가는 둘 또는 그 이상의 공공 기관이 정보 접근법의 집행을 감독하는 복잡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칠레는 대통령 비서실에 투명성 위원회와 투명성 심의회를 두고 있다 (그림 9.6 참고).

국가는 정보 접근법의 집행을 조언할 전담 기구나 공무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종종 정보 접근법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러 정보 접근법은 법률 준수를 보장할 책임이 있는 직위 또는 공무원의 수립을 요구한다. 이러한 공무원들은 정보의 사전 및 사후 공개를 보장하기 위해 임명된다. 현재 정보 접근법은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OECD 30개 국가 중 15개 국가(50%)에서만 해당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그림 9.7 참고). 예를 들어, 캐나다는 각 정부 기관의 장이 법에 따른 권한, 의무, 기능을 전담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이 없는 나라들은 여전히 유사한 직위를 만들 수 있다.

정보 접근법의 집행을 개선하려면, 지방 정부 수준의 모범 사례도 필요하다. OECD 31개 국가 중 15개 국가(48%)와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는 지방 정부 수준의 공무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브라질, 코스타리카 및 루마니아는 물론 OECD 11개 국가 (35%)도 이해 당사자들을 위한 정기적인 정보 회의를 개최한다. 게다가, OECD 12개 국가(39%)와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는 경제는 정보 접근법에 대한 현지 지침을 만들었다. OECD 9개 국가(29%)와 브라질은 집행을 개선하기 위한 다른 혁신적인 방법을 추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리투아니아는 정보 찾기, 온라인 정보 접근법의 요청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을 위해 정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한 교육을 제공한다. 연방 국가에서 연방 정부는 지방 정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프로그램은 정보 접근법의 의무(표 9.8)를 포함하여, 열린 정부 계획의 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지원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실시된 열린 정부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OECD 32개 국가들과 3개의 다른 경제국들(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이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응답자들은 열린 정부에 관한 OECD 작업반의 대표들이었고, 그들은 각각의 정부들 간에 응답을 조정했다. 정보 접근에 관한 부문은 투명성과 정보 접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감독을 가진 정부 전체의 고위 공직자들의 응답을 기반으로 한다.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받고, 전달하고, 사용하는 개인의 능력을 말한다. 공공 행정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은 개인과 조직이 정부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견고한 시스템의 존재를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2017),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Open Government*, OECD, Pari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38*.

OECD (2016), *Open Government: The Global Context and the Way Forward*, OECD Publishing, Paris. *http://dx.doi.org/10.1787/9789264268104-en*.

Zuegel, K., E. Cantera and A. Bellantoni (2018), "The role of ombudsman institutions in open government", *OECD Working Paper on Public Governance*, No. 2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7353965f-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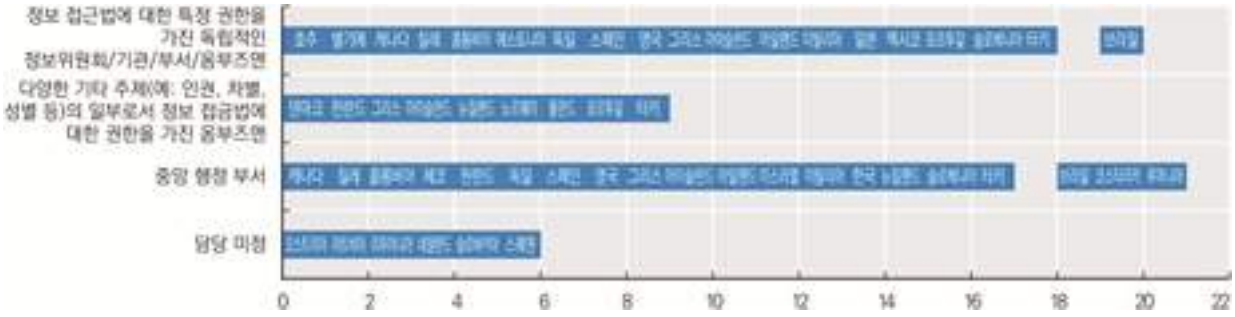
그림 설명

프랑스, 헝가리, 룩셈부르크, 스위스 및 미국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9.7. 그리스와 폴란드에 대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9.8. 슬로베니아에 대한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9.6. 정보 접근법(ATI)의 시행, 모니터링, 홍보를 담당하는 기관 (2020년)



출처 : OECD (2021), *Survey on Open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686

9.7. 법률로 규정된 안내 부서 및 담당자의 접근 요건 (2020년)

출처 : OECD (2021), *Survey on Open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705

9.8. 지방정부 수준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중앙/연방 정부의 계획 (2020년)

국가명	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해관계자를 위한 설명회	정보 접근에 대한 현지 안내	기타	계획 없음
호주					●
오스트리아	●				
벨기에					●
캐나다				●	
칠레	●	●	●		
콜롬비아	●	●	●		
체코				●	
덴마크					●
에스토니아	●		●		
핀란드		●	●		
독일					●
그리스	●	●			
아이슬란드				●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			
이탈리아	●	●			
일본					●
한국	●	●	●		
라트비아					●
리투아니아				●	
멕시코	●		●		
네덜란드	●	●		●	
뉴질랜드	●		●		
노르웨이					●
폴란드	●		●	●	
포르투갈	●	●		●	
슬로바키아					●
스페인	●		●	●	
스웨덴					●
터키			●		
영국	●	●	●		
OECD 총계	15	11	12	9	9
브라질	●	●	●	●	
코스타리카	●	●	●		
루마니아	●	●	●		

출처 : OECD (2021), *Survey on Open Government*.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724

10.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정부: 디지털 역량과 성숙을 향한 발전
디지털 우선 정부: 디지털 전환 육성을 위한 조정 및 기술 강화
공공 부문의 전략 자산으로서 데이터

디지털 정부: 디지털 역량과 성숙을 향한 발전

사회와 경제가 점점 더 디지털화됨에 따라, 서비스 사용자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정부의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디지털 도구와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정부는 코로나 19 팬데믹과 같은 외부 충격에 민첩하게 대응하고 공공 부문의 탄력성을 조성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디지털 정부 지수(DGI)는 일관되고 총체적인 정부 접근 방식 하에서 디지털 정부 정책의 성숙도와 집행을 평가하고 벤치마킹 한다. 이를 통해, 점점 더 디지털화되고 국제화 되는 세계에서 정부의 운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점수의 범위는 0(최저)에서 1(최고)까지이다. 디지털 정부 지수는 OECD 디지털 정부 정책 분석틀(DGPF)에 기반하는 6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 동일한 가중치(0.16)를 부여한다. 6가지 분야는 각각 디지털 우선 정부(digital by design), 데이터 기반 정부(data-driven public sector), 플랫폼 정부(government as a platform), 열린 정부(open by default), 국민 주도형 정부(user-driven)와 선제적 정부(proactivness)이다.

2019년 OECD 국가들의 평균 디지털 정부 지수(DGI)는 0.5점이었고, 29개 국가 중 15개 국가가 이를 초과했다. 해당 평가에서 한국(0.74), 영국(0.74), 콜롬비아(0.73)가 가장 좋은 성적을 거뒀다. 이들 국가는 포괄적인 디지털 정부 전략과 오랜 기간 동안 제도적 준비를 해왔으며, 이는 디지털 정부 개혁을 이행하는 데 보다 성숙해 진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그리스(0.35), 아이슬란드(0.28), 스웨덴(0.26)은 가장 낮은 성적을 거뒀다. 이들 국가는 디지털 기술(디지털 우선 정부, 플랫폼 정부)과 데이터(데이터 기반 정부)의 사용을 위한 정부의 총체적인 전략 접근법과 정책 분석틀을 구성하여, 국민 주도형 정부와 선제적 정부가 되도록 효과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많다(그림 10.1).

OECD 국가들은 데이터, 정보, 프로세스가 공개되는 정도를 의미하는 열린 정부 분야에서 최고 평균 점수(0.16점 만점에서 0.11점)를 달성했다. 한국(0.15)과 영국(0.14)은 다른 5개 분야와 같이 우수한 성적을 유지하고 있다. 체코(0.13), 슬로베니아(0.12), 그리스(0.12)는 다른 분야에 비해 특히 높은 성적을 보였다. 오스트리아와 리투아니아(각 0.09), 스웨덴(0.06), 아이슬란드(0.05)는 열린 정부 분야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OECD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분야는 국민 주도형 정부와 선제적 정부(각 0.07)이다. 이는 데이터를 전략적 공공 자산으로 평가하고, 사용자의 요구를 예상하며, 번거로운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 과정을 피하고자 하는 정부의 문제를 나타낸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분야는 데이터의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국가의 데이터 거버넌스 구조(예: 데이터 전략), 인프라 및 표준을 측정한다. 영국(0.12), 덴마크와 한국(각각 0.11)의 성적이 두드러진다. 칠레, 핀란드, 독일(각 0.04)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데이터 가치를 활용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선제적 정부는 정부가 사용자의 공식적인 요청을 기다리지 않고 대중에게 데이터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의 여부를 측정한다. 전체 평균 점수가 0.47미만인 콜롬비아(0.13) 및 라트비아(0.11)와 프랑스(0.11)가 이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체코(0.03), 네덜란드(0.03), 그리스(0.02), 스웨덴(0.02)은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디지털 정부 지수(DGI) 데이터는 디지털 정부 전략 위원회의 OECD 권고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국가들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OECD 디지털 정부 설문 조사 1.0을 통해 수집되었다. 2019년에는 OECD 29개 국가와 OECD 주요 협력국(브라질)이 DGI에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 조사 국가들은 디지털 정부 개혁을 주도 또는 집행하고 있으며, 관련성이 있는 공공 부문의 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경험이 있는 중앙 및 연방 정부의 고위 관료이다.

디지털 정부는 정부의 현대화 전략의 통합된 부분으로서 공공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 비정부 기구, 기업, 시민 단체 및 개인으로 구성된 디지털 정부 생태계가 필요하며, 정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및 컨텐츠의 생산과 접근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전자 정부의 정의는 용어집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20), “Digital Government Index: 2019 results”,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de9f5bb-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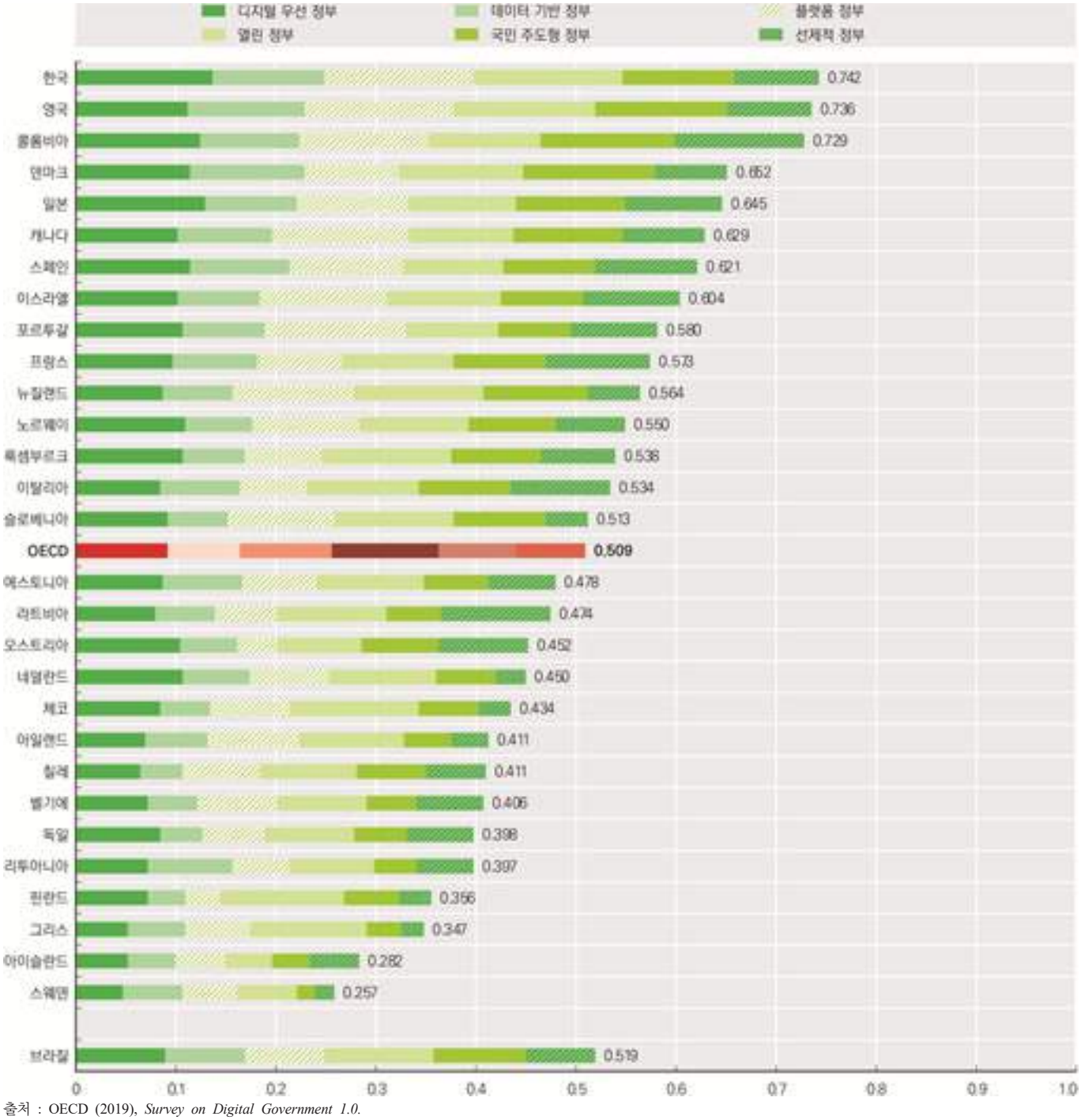
OECD (2020), “The OECD Digital Government Policy Framework: Six dimensions of a digital government”,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0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64fed2a-en*.

Ubaldi, B. and Okubo, T. (2020),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DGI): Methodology and 2019 result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4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b00142a4-en*.

그림 설명

호주,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및 미국은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10.1 OECD 디지털 정부 지수 (2019년)



출처 :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1.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743

디지털 우선 정부: 디지털 전환 육성을 위한 조정 및 기술 강화

빠른 디지털 변화가 삶의 모든 측면을 변화시킴에 따라, 시민들은 정부가 디지털 시대의 약속을 이행하는 서비스와 정책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공공 부문의 디지털 도구와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전략적 접근은 점점 더 글로벌화되고 디지털 사회에서 디지털적으로 능력 있는 정부를 보장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디지털 정부 지수(DGI)는 정부의 디지털 정책의 성숙도와 이행을 평가한다. 디지털 우선 정부의 측면은 정부가 사용한 채널에 관계없이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정도를 고려한다. 2019년 OECD 국가들은 해당 분야에서 0.16점 만점에 평균 0.09점을 받았으며, 다른 5개 분야보다 더 고른 점수를 받았다("디지털 정부: 디지털 역량과 성숙을 향한 발전" 참조). 이는 지난 수십년 동안 공공 부문(전자 정부)의 디지털화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반영한다.

정부 간 디지털 정부 정책의 조정은 디지털 우선 정부의 한 측면이다. 이는 공공 부문 전반에 걸쳐 디지털 도구 및 데이터의 일관되고 통합된 사용을 방해하는 문제(사일로 효과)를 해결 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2019년 OECD 29개 국가 중 21개 국가(69%)는 ICT사업과 관련된 중앙·연방 차원의 공식 조정 기구(CIO) 또는 기타 관련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의사 결정 역할보다는 자문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 평균적으로 3가지 자문(국가 디지털 정부 전략의 개발, 조정, 집행 모니터링 등)과 2가지 의사 결정(예: ICT 프로젝트의 사전 수정과 평가 또는 프로젝트의 우선순위 지정 및 승인) 등 5가지 책임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10개의 자문 및 의사 결정 책임을 모두 조정 기구에 맡기고 있으며, 리투아니아는 1개의 역할만 맡기는 등 국가마다 큰 차이가 있다. 대부분 국가의 조정 기구는 의사 결정 기구보다 자문에 대한 책임을 더 많이 지는 반면, 오스트리아와 콜롬비아 및 이스라엘에서는 그 반대이다(표 10.2).

공공 부문의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혁신을 위해 디지털 인재와 기술은 필수적이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OECD 국가(29개 국가 중 22개 국가, 76%)는 공무원들 사이에서 사용자 능력(예: 이메일 관리)과 전문 디지털 기술(예: 공공 부문의 디지털 기술 전문가를 유입 및 유지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12개 국가(41%)만이 ICT 전문 인력의 수를 늘리기 위한 전환 과정을 보유하고 있으며, 11개 국가(38%)는 고등 교육 기관과 ICT 경력 인턴십을 제휴하고 있다. 또한 18개 국가(62%)만이 디지털 보완 기술(예: 공공 부문 디지털 전환의 기회, 이점, 도전에 대한 인식 증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그림 10.3 참고).

디지털 정부 지수는 정책 수립 및 서비스 제공에서 데이터 분석(8개 국가, 28%), 인공 지능(9개 국가), 유용성 및 접근성(각 6개 국가)과 같은 분야에서 공공 전문가를 위한 교육 계획을 거의 제공하지 않는다. 공공 인력을 위한 포괄적인 교육 접근법의 예는 영국의 GDS 학교와 캐나다의 공공 서비스 대학이다(온라인 그림 G.37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디지털 정부 지수(DGI) 데이터는 디지털 정부 전략 위원회의 OECD 권고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국가들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OECD 디지털 정부 설문 조사 1.0을 통해 수집되었다. 2019년에는 OECD 29개 국가와 OECD 주요 협력국(브라질)이 DGI에 참여했다. 조사 국가들은 디지털 정부 개혁을 주도 또는 집행하고 있으며, 관련성이 있는 공공 부문의 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경험이 있는 중앙 및 연방 정부의 고위 관료이다.

디지털 우선 정부는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정부 과정의 재설계, 절차의 간소화, 공공 이해 관계자와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채널을 만드는 원칙이다.

참고문헌

OECD (2020), "Digital Government Index: 2019 results",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de9f5bb-en.

OECD (2020), "The OECD Digital Government Policy Framework: Six dimensions of a digital government",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0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64fed2a-en*.

OECD (2021), "The OECD Framework for Digital Talent and Skills in the public sector"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https://doi.org/10.1787/4e7c3f58-en*.

그림 설명

호주,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및 미국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10.2. 조정 기구가 없는 국가는 해당 기구에 책임을 부여하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OECD 평균에는 조정 기구가 없는 국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림 G.37(공무원을 위한 교육 계획, 2019)은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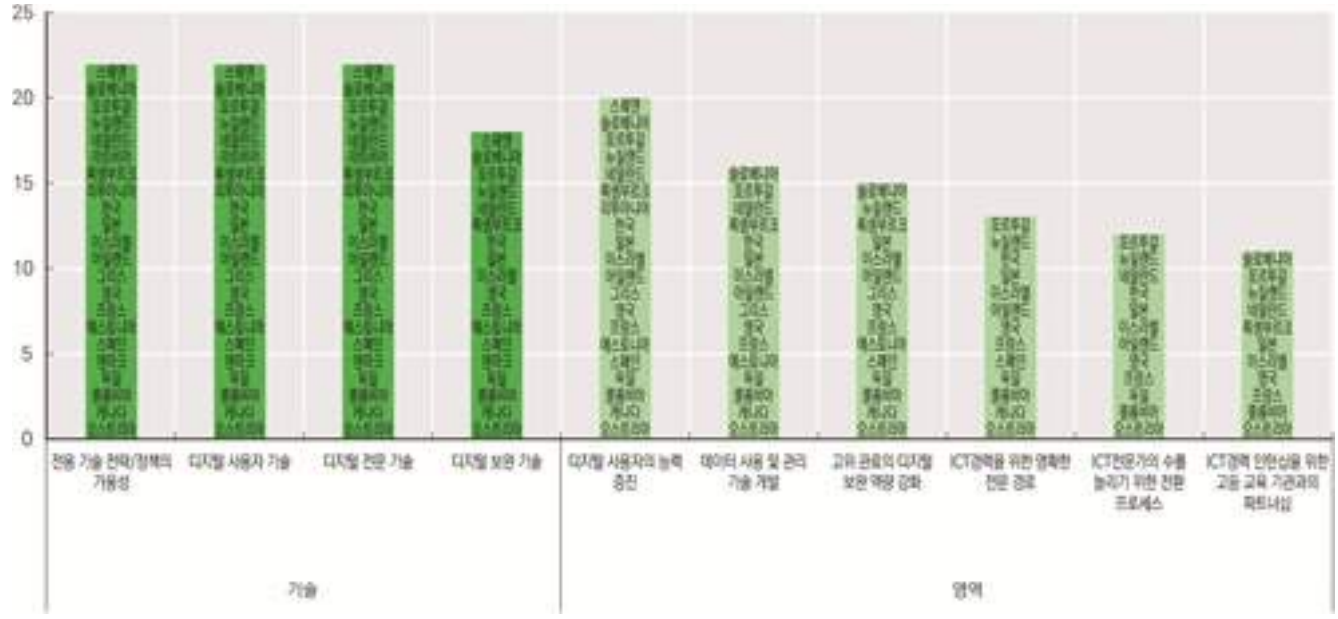
10.2. 디지털 정부 조정 기관의 자문 및 의사결정 책임 (2019년)

	자문 책임					의사결정 책임					
	중앙/연방 디지털 정부 전략 개발 자문	중앙/연방 디지털 정부 전략 이행 모니터링	제도적 디지털 전략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자문	표준화된 방식으로 중앙/연방 정부 전반에 걸친 ICT 아키텍쳐 개발을 위한 기술 지침 개발	중앙/연방 디지털 정부 전략 목표에 부합하는 ICT 사업 개발을 위한 지방 정부와의 조정	정부 전반에 걸친 ICT 사업의 우선순위화	중앙/연방 정부 ICT 사업의 사전 수정과 평가	필요에 따라 범부처 ICT 사업의 승인	정부 전반에 걸친 ICT 프로젝트에 대한 외부 검토(예: 성과 평가)의 의무화	ICT 사업 개발 및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조정 기관이 없음
오스트리아	●	●	●	●	❍	●	●	●	●	●	❍
벨기에	❍	❍	❍	❍	❍	❍	❍	❍	❍	❍	●
캐나다	●	●	●	●	❍	●	●	●	❍	❍	❍
칠레	❍	❍	❍	❍	❍	❍	❍	❍	❍	❍	❍
콜롬비아	❍	❍	❍	❍	●	●	●	●	●	●	❍
체코	●	●	●	❍	●	●	❍	●	●	●	❍
덴마크	❍	❍	●	❍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	❍	❍	●
핀란드	●	●	❍	●	❍	❍	❍	❍	❍	❍	❍
프랑스	●	❍	●	❍	❍	❍	❍	❍	❍	●	❍
독일	●	●	❍	●	●	●	❍	❍	❍	❍	❍
그리스	❍	❍	❍	❍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	❍	❍	●
아일랜드	❍	❍	❍	❍	❍	❍	❍	❍	❍	❍	●
이스라엘	●	●	●	●	❍	●	●	●	●	●	❍
이탈리아	❍	❍	❍	❍	❍	❍	❍	❍	❍	❍	●
일본	●	●	●	●	●	●	●	●	●	●	❍
한국	●	●	●	●	●	●	●	●	●	●	❍
라트비아	●	●	●	●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	❍	❍	●
네덜란드	❍	❍	❍	❍	❍	❍	❍	❍	❍	❍	●
뉴질랜드	❍	❍	●	●	❍	❍	❍	❍	❍	❍	❍
노르웨이	❍	❍	❍	❍	❍	❍	❍	❍	❍	❍	●
포르투갈	●	●	●	●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	❍	❍	❍
스페인	●	●	●	●	●	●	●	●	❍	❍	❍
스웨덴	❍	❍	❍	❍	❍	❍	❍	❍	❍	❍	●
영국	●	●	●	●	❍	❍	❍	❍	❍	❍	❍
OECD총계											
● 예	14	14	14	13	7	10	10	9	7	7	10
❍아니오	15	15	15	16	22	19	19	20	22	22	19
브라질	●	●	❍	●	●	●	●	❍	●	●	❍

출처 :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1.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762

10.3. 공공 부문 인력을 위한 특정 전략/정책에서 다루는 영역과 기술 (2019년)



출처 :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1.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781

공공 부문의 전략 자산으로서 데이터

데이터는 성과 관리, 정책 수립, 서비스 설계 및 제공을 개선하는 데 필수적이다. 정부는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건전한 정책 분석틀 수립과 고품질 데이터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접근과 공유, 그리고 사용을 허용하여, 정책 및 서비스와 관련된 문제(사일로 효과)를 제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디지털 정부 지수(DGI)는 일관되고 전체적인 정부 접근 방식 하에서 디지털 정부 정책의 성숙도와 구현 정도를 평가하고 벤치마킹한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분야는 정부가 공공 부문 조직 전반에 걸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거버넌스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구현한 정도를 측정한다. 데이터 기반 정부 분야는 6가지 분야 중 점수가 두 번째로 낮으며, 0.16점 만점에 평균 0.07(이하 "디지털 정부: 디지털 역량과 성숙을 향한 발전" 참조)이다. 이는 공공 부문의 데이터 집약적 전환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제한된 진전을 보여 준다.

많은 국가들은 데이터 기반 정부의 개발을 위한 전략적이고 일관된 접근 방식이 부족하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공공 부문 데이터 정책 및 전략과 헌신적인 리더십이 부족하다. 2019년 캐나다, 덴마크, 그리스 및 영국만이 하나의 공공 부문 데이터 정책을 가지고 있었다. 대조적으로, 디지털 정부지수(DGI)에 참여하는 OECD 29개 국가 중 23개 국가(80%)는 공공 부문 데이터에 대한 접근 방식이 디지털 정부 또는 열린 정부 데이터(OGD)와 같은 하나 이상의 관련 정책으로 나뉘었다고 보고했다(그림 10.4). 중앙/연방 및 기관의 리더십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두 가지 중요 측면 중 하나이지만, 전담 역할의 설정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OECD 29개 국가 중 16개 국가(55%)만이 조정 기구를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0개 국가(34%)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담 리더십의 역할(예: 최고 정보 책임자)을 설정하고 있다. 7개 국가(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일본, 한국, 네덜란드, 뉴질랜드)만이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그림 10.5 참고).

디지털 정부 지수(DGI) 결과는 공공 부문에서 계획의 가용성과 데이터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이행 간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데이터 공유 계획은 보다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부문을 가능하게 하며, OECD 29개 국가 중 28개 국가(97%)에서 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국가들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데, 6개 국가(21%)는 임시 계획이며, 22개 국가(76%)의 계획은 정부 프로그램의 일부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 8개 국가(28%)만이 중앙/연방 수준에서 단일의 완전한 데이터 목록을 가지고 있고, 다른 10개 국가(34%)는 완전하지 않은 데이터 목록(데이터의 최소 60%)을 가지고 있다(그림 10.6 참고).

데이터 관리에 대한 윤리적 가치와 원칙의 조정 및 준수는 시기적절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2019년 디지털 정부 지수(DGI)에 참여하고 있는 OECD 29개 국가 중 10개 국가(34%)는 데이터 관련 계획에 윤리적인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계획과 준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고했으며, 나머지 9개 국가(31%)는 공식 요건만 수립했다. 이는 각 국가들이 공공 부문의 데이터 윤리를 위한 OECD 모범 사례 원칙 및 데이터의 접근 및 공유 강화 권고를 위한 OECD의 노력과 같이, 데이터의 민첩성, 무결성 및 윤리적 관리를 확보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채택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함을 시사한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디지털 정부 지수(DGI) 데이터는 디지털 정부 전략 위원회의 OECD 권고안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 성숙도를 향상시키는 국가들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고안된 OECD 디지털 정부 설문 조사 1.0을 통해 수집되었다. 2019년에는 OECD 29개 국가와 OECD 주요 협력국(브라질)이 DGI에 참여했다. 조사 국가들은 디지털 정부 개혁을 주도 또는 집행하고 있으며, 관련성이 있는 공공 부문의 여러 부분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경험이 있는 중앙 및 연방 정부의 고위 관료이다.

데이터 기반 정부는 정부가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평가하고 공공 부문의 의사 결정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용성, 접근, 공유 및 재사용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원칙을 말한다.

참고문헌

OECD (2020), "Digital Government Index: 2019 results",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de9f5bb-en.*

OECD (2019), *The Path to Becoming a Data-Driven Public Sector,*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59814a7-en.*

OECD (2021), "Good Practice Principles for Data Ethics in the Public Sector", *https://oe.cd/dataethics.*

그림 설명

호주,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및 미국은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10.5. 외부의 원은 공공 부문 데이터 정책/전략을 책임지는 선도 기관의 존재 여부를 보여주고 내부의 원은 이의 구현을 주도할 전담 역할/직위의 존재 여부를 보여준다.

10.4. 중앙정부/연방정부 차원의 공공부문 데이터 정책 가용성 (2019년)

출처 :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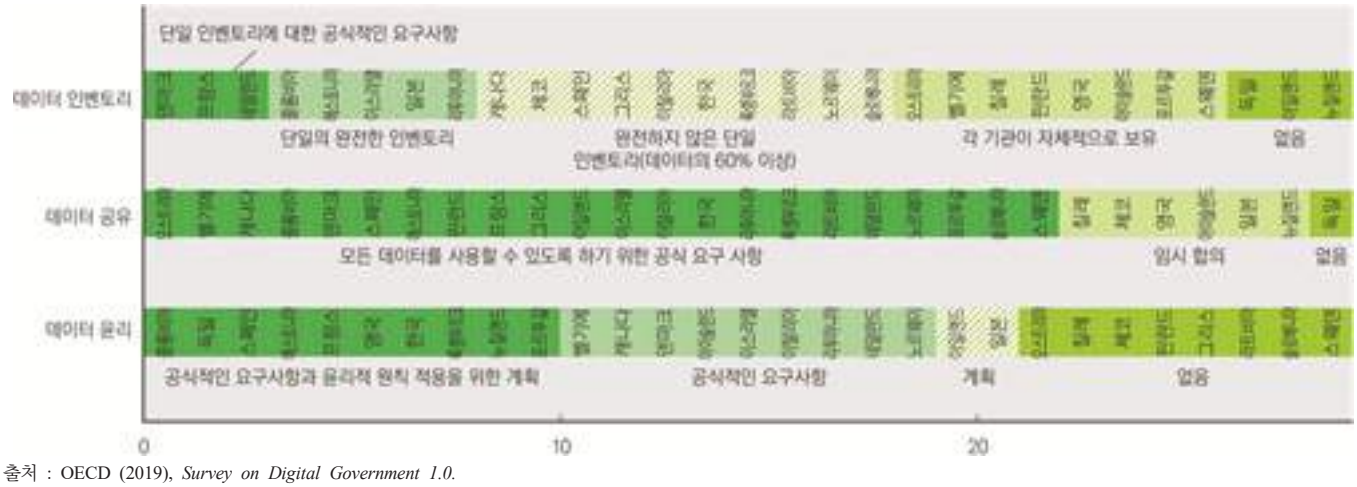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800

10.5. 공공부문 데이터 정책 이행: 중앙/연방정부에서 공공 부문 조직 선도 및 전담의 주도적인 역할 (2019년)

출처 :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1.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819

10.6. 데이터 인벤토리, 공유, 윤리에 대한 공식 요구 사항 및 계획 (2019년)



출처 :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1.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838

11. 인프라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장기 전략 비전
적격성과 적합성 평가
인프라 조달의 수명 주기 관점
중요한 인프라 회복력의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장기 전략 비전

인프라에 대한 장기 전략 비전을 개발한다면, 정부는 시기적절하고 일관성 있는 방식으로 인프라 서비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다. 인프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권고사항이 강조하는 바와 같이, 장기 전략 비전은 환경 보호, 기후 변화 완화, 인권, 사회적 포용, 양성 평등, 지역 개발에 대한 책무를 포함하는 장기적 정책 목표와 일치해야 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에 비추어, 장기 인프라 계획과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발전목표 간의 일관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인식한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대부분의 OECD 국가(30개 국가 중 22개 국가, 73%)는 장기 인프라 계획을 환경 및 기후 행동 정책과 일치시켰다(표 11.1). OECD 20개 국가는 보다 광범위한 지속가능계획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 사업에 투자하였으며(67%), 17개 국가(57%)는 기존 인프라를 조정하여 환경성과를 개선하고, 부문 간 상승 효과를 식별하여,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적은 수의 국가들은 인프라 구축 및 운영(12개 국가, 40%) 또는 환경 친화적인 인프라 촉진을 위한 연구 개발(10개 국가, 33%) 부문에서 자원 효율성 목표를 채택하였다(그림 11.2).

이밖에, 통합 정도가 낮은 정책 목표는 토지 이용 및 공간 계획 도구 및 지역 개발 계획(15개 국가, 50%), 포용 및 성 주류화(30개 국가 중 8개 국가, 27%), 인권(5개 국가, 17%)이 있다(표 11.1). 이는 특정 인구 집단에 미치는 인프라의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정부의 능력을 제한한다.

인프라 투자와 전달은 코로나 19 위기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좋은 거버넌스를 통해, 인프라 투자는 단기적으로 인프라 역량의 구축과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여러 목표를 달성하여, 지속 가능한 반등에 기여할 수 있다. 비록 최신 데이터는 2021년 1월에 수집되었고, 여전히 팬데믹이 유행중이지만, OECD 21개 국가(OECD 30개 국가 중 70%)는 이미 경기 부양책이나 회복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 중 4분의 3 이상은 인프라가 경기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고 판단한다(표 11.1). 예를 들어 칠레, 코스타리카, 헝가리, 아일랜드, 뉴질랜드 및 슬로베니아에서는 경기 부양책의 30% 이상을 인프라에 대한 투자에 할당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2020년 OECD 인프라 거버넌스 조사와 2018년 OECD 자본 예산 및 인프라 거버넌스 조사에서 수집되었다. 두 설문 조사가 동일하지 않지만, 시간 경향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을 사용했다. 2020년 설문 조사는2021년 1월 OECD 30개 국가와 코스타리카로부터 응답을 받아 실시하였다. 2018년 조사는 2018년 초, OECD 26개 국가로부터 응답을 받아 실시하였다. 응답자의 대부분은 중앙/연방 사회기반시설부, 공공사업부, 재무부, 사회기반시설부, 기타 부처의 고위 관료들이었다.

인프라 거버넌스는 정부 기관과 민간 부문 사용자 및 시민과의 상호 작용에 관련된다. 여기에는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와 해당 상대가 사용하는 다양한 프로세스, 도구 및 상호 작용, 의사 결정 및 모니터링을 포함한다.

장기 국가 인프라 계획은 장기적으로 사회에 대한 인프라 서비스 측면에서 구체적인 조치를 제시하는 정치적으로 승인된 문서를 의미한다. 이는 정상적인 정치적 위임 기간을 넘어설 수도 있다. 비전을 설계하려면 복잡하고 다면적인 인프라 문제의 정제와 다양한 행위자, 부문, 이해관계의 구분, 프로젝트와 과정의 포함,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관된 결정이 요구된다. 이 과정은 중앙 기관(최고 경영자, 재무부 또는 유사 기관)에 전담되어야 하며 정책 부서, 지방 정부, 시민 사회, 기업 이해 관계자들로부터 실질적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OECD (2020), “Public procurement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Initial policy responses to the coronavirus (Covid-19) crisi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 10.1787/c0ab0a96-en*.

OECD (2017), *Getting Infrastructure Right: A Framework for Better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72453-en*.

그림 설명

2020년 데이터는 현재 시행 중인 인프라 계획을 참조한다. 오스트리아, 코스타리카, 멕시코, 뉴질랜드, 포르투갈은 현재 계획을 갱신하거나 대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보고했다. 칠레, 콜롬비아, 독일, 라트비아, 포르투갈 및 스페인의 2020년 데이터는 운송 부문을 나타내며, 터키의 데이터는 운송 및 보건 부문을 나타낸다. 벨기에의 2020년 데이터는 플랑드르 지역의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다. 체코의 2018년 데이터는 부문별 계획에 기반하고 2020년 데이터는 전체 계획에 기반한다. 호주,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의 2020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11.1.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아이슬란드, 한국,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미국의 2018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2021년 4월 현재, EU 코로나 19 경기부양책은 여전히 승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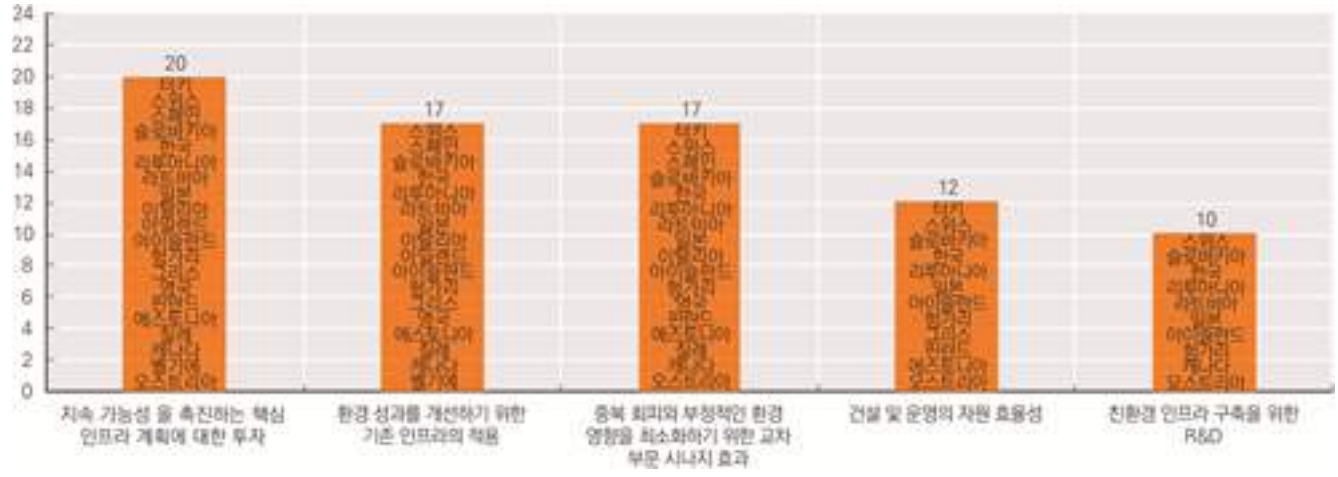
11.1.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위한 장기 전략 비전 개발 (2018년, 2020년)

국가명	장기 인프라 계획은 인프라 전략 비전을 다른 정책과 일치시키는 방법을 명시적으로 고려		경기 부양책 또는 회복 패키지의 승인 (2021)	경기 부양책 또는 회복 패키지에 인프라 시설 투자 약속을 포함 (2021)
	2018(전체 또는 부문별)	2020(전체 또는 부문별)		
호주	..	..	..	..
오스트리아	△▲	●△▲■	✓	✓
벨기에(플랑드르)	..	△▲◇	✓	✓
캐나다	..	●▲■	✓	✓
칠레	▲	▲	✓	✓
콜롬비아	..	●	✓	✓
체코	△▲	×	×	..
덴마크	▲	..	..	..
에스토니아	▲	●△▲◇	✓	✓
핀란드	..	●▲◇	✓	×
프랑스	●△▲	..	..	..
독일	▲+	..	✓	✓
그리스	●△▲	△▲◇	×	..
헝가리	●△	●△▲□◇	×	..
아이슬란드	..	●▲■	✓	✓
아일랜드	●△▲	●△▲◇	✓	✓
이스라엘	●△▲	..	..	..
이탈리아	..	●▲◇	×	..
일본	..	△▲◇	✓	✓
한국	..	●△▲◇	×	..
라트비아	..	●△▲■◇	✓	✓
리투아니아	..	●△▲□■	×	..
룩셈부르크	●△	●▲	✓	✓
멕시코	●△▲	●□■	✓	×
네덜란드	●△▲	..	..	..
뉴질랜드	×	×	✓	✓
노르웨이	▲	△▲◇	✓	×
포르투갈	..	×	×	..
슬로바키아	..	●△▲□■◇	×	..
슬로베니아	△	..	×	..
스페인	..	▲+	✓	✓
스웨덴	▲	..	..	..
스위스	△	●△▲□◇	✓	×
터키	●	●△▲◇	✓	✓
영국	●△▲	●△▲■◇	✓	✓
미국	..	..	✓	✓
OECD 총계				
✓ 예			21	17
× 아니오			9	4
▲ 환경 또는 기후 행동 계획	15	22		
● 전략적 우선순위를 설정한 국가 문서	10	18		
△ 토지 이용 및 공간 계획 도구	13	15		
◇ 지역개발계획		15		
■ 포용과 성주류화		8		
□ 인권 책무		5		
+ Other	1	1		
× None	1	3		
.. 사용할 수 없음/해당 없음	15	9	6	15
비 OECD 국가				
코스타리카	..	●△▲□■◇	×	..

출처 : OECD (2018), *Survey of Capital Budgeting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OECD (2020),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857

11.2. 장기 인프라 계획이 환경, 기후 활동 계획과 일치한다고 보고한 국가 간 장기 계획의 목표와 대상 (2020년)



출처 : OECD (2020),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876

적격성과 적합성 평가

OECD 인프라 거버넌스 권고안은 적격성 조사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함한다. 또한 새로운 인프라의 경제성 보장, 전체 자산 수명 주기에 걸친 총 비용 공개, 사업 비용과 재정 건정성 그리고 시간 계획 및 위험 관리와 거버넌스의 평가를 위해 투명하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전문가 제공 등 몇 가지 모범 사례를 강조한다.

적격성의 측면에서 각 정부는 인프라 사업의 기간 동안 수량, 품질, 특징 및 가격의 최적 조합이 무엇인지 판단한다(OECD, 2019). OECD 국가들은 최근 몇 년간 적격성을 평가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 2020년에는 OECD 30개 국가 중 21개 국가(70%)가 민관협력(PPP)을 통해 제공되는 인프라 사업의 적격성을 보장하기 위한해 평가를 실시한다고 보고했으며, 다른 유형의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30개 국가 중 18개 국가60%)가 평가를 수행한다고 보고했다. 2018년 민관협력(PPP)에 대해 OECD 26개 국가 중 14개 국가(54%)와 다른 국가에 대해 각각 비교를 실시하였다(표 11.3참고).

2020년 OECD 30개 국가 중 23개 국가(77%), 2018년 26개 국가 중 17개 국가(65%)는 재무부가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보고했다. 이는 재무부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이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표 11.3 참고). 재무부의 인프라 사업 승인 기준은 일반적으로 국가 예산과 사용자에 대한 사업의 적합성 및 적격성에 초점을 맞춘다.

대규모 인프라 사업의 비용과 품질 보증을 보장할 때, 의사 결정 과정이 공정하고 정치적 포획을 피하는 것이 핵심이다. 독립적인 전문가는 사업의 우선순위 지정과 선택을 감시하여, 간단한 기준에 따라 수행되는 명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 과정을 보장할 수 있다. 현재 OECD 30개 국가 중 20개 국가(67%)만이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했다(표 11.3 참고).

OECD 국가 중 약 90%는 새로운 인프라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할 때 건설(30개 국가 중 28개 국가)과 운영비(30개 국가 중 27개 국가)를 고려한다. 그러나 유지 관리(25개 국가, 83%), 적응(17개 국가, 57%), 해체(13개 국가, 43%) 비용 평가는 자주 고려되지 않는다(그림 11.4). 특히, 코로나 19의 상황에서 자산 수명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경제성을 효과적으로 고려하는 메커니즘을 채택하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2020년 OECD 인프라 거버넌스 조사와 2018년 OECD 자본 예산 및 인프라 거버넌스 조사에서 수집되었다. 두 설문 조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시간 경향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을 사용했다. 2020년 설문 조사는2021년 1월 OECD 30개 국가와 코스타리카로부터 응답을 받아 실시되었다. 2018년 조사는 2018년 초에 OECD 26개 국가로부터 응답을 받아 실시되었다. 응답자 대부분 중앙/연방 사회기반시설부, 공공사업부, 재무부, 사회기반시설부, 기타 부처의 고위 관료들이었다.

적격성은 정부가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에 걸쳐 계산한 수량, 품질, 특징, 가격의 최적 조합을 판단하는 것이다

적합성은 인프라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 주기 비용을 고려한다. 정부의 관점에서 볼 때, 적합성은 프로젝트가 정부의 현재 및 미래 예산 제약 조건 내에서 수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최종 사용자의 관점에서는 관세를 지불할 능력과 의지를 의미한다. 인프라 자산의 접근 및 사용과 관련된 관세 또는 기타 사용자 요금을 지불할 능력과 의지 또는 인프라 자산의 접근과 사용에 관련된 기타 사용자 요금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 (202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60.*

OECD (2019), *Budgeting and Public Expenditures in OECD Countries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307957-en.*

OECD (2017), *Getting Infrastructure Right: A Framework for Better Governance*, OCE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72453-en.*

그림 설명

호주,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의 2020년 데이터는 이용할 수 없다. 벨기에의 2020년 데이터는 플랑드르 지역의 응답만을 대상으로 한다. 오스트리아와 스위스는 민관협력(PPP) 인프라 사업이 없다.

표 11.3. 벨기에,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핀란드,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대한민국 및 미국의 2018년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2018년 재무부의 문지기 역할에 관한 데이터는 다른 인프라 사업만을 참조한다. 오스트리아와 미국에서는 재무부가 특정 분야의 인프라 사업을 승인하는 문지기 역할만 맡고 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재무부도 민관협력(PPP)승인 시 문지기 역할을 맡고 있다. 리투아니아에서는 민관협력(PPP)만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 평가를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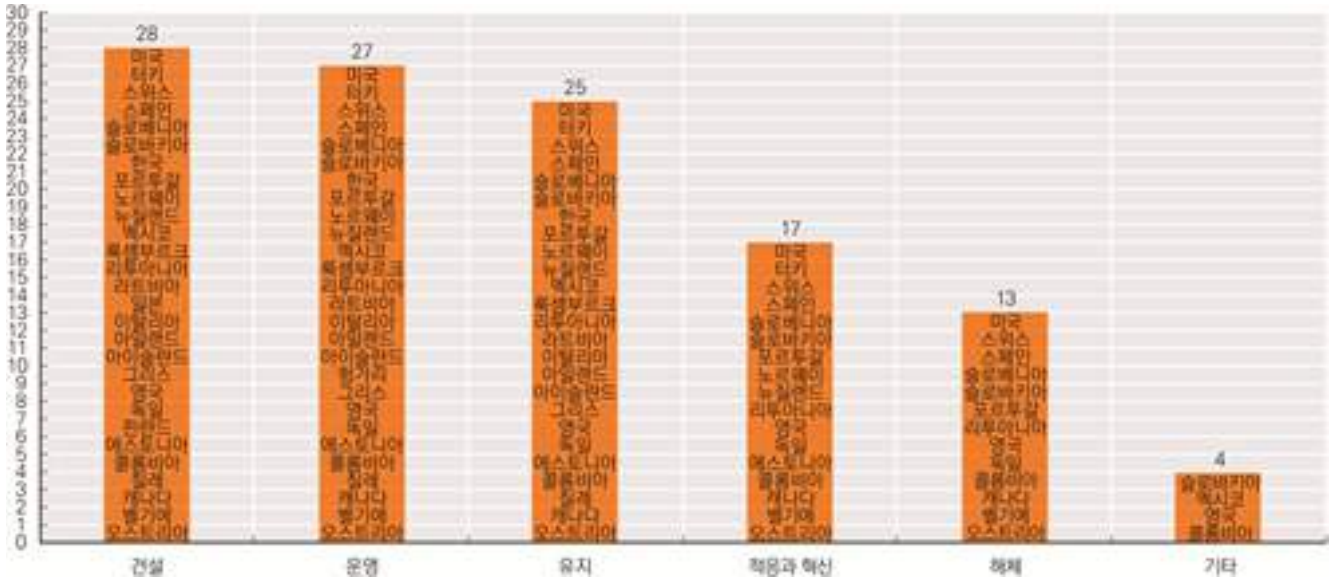
11.3. 적격성과 적합성 평가 (2018년, 2020년)

국가명	재무부의 문지기 역할		비용 대비 가치를 평가하는 공식 프로세스의 존재				독립적이고 공정한 전문가 평가
			민관협력(PPPs)		기타 인프라 사업		
	2018	2020	2018	2020	2018	2020	
호주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플랑드르)	..	○	..	○	..	○	×
캐나다	..	×	..	○	..	×	✓
칠레	✓	✓	+	+	+	×	▲
콜롬비아	..	✓	..	✓	..	✓	✓
체코	✓	○	○	✓	×	✓	..
덴마크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	△	■
헝가리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스라엘	✓	..	○	..	○	..	..
이탈리아	■	✓	✓	+	✓	+	×
일본	✓	○	✓	△	✓	○	✓
한국	..	○	..	✓	..	+	○
라트비아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멕시코	✓	✓	✓	✓	..	×	○
네덜란드	○	..	✓	..	✓	..	..
뉴질랜드	×	●	✓	✓	○	+	×
노르웨이	○	○	○	○	○	○	○
포르투갈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	✓	■	✓	■	✓	×
스웨덴	○	..	×	..	×	..	..
스위스	×	×	×	+	×	+	▲
터키	+	+	■	✓	■	○	×
영국	✓	○	✓	✓	✓	✓	○
미국	..	○	..	+	..	+	×
OECD 총계							
✓ 모든 사업	8	8	10	13	9	6	6
○ 특정한 임계값을 초과하는 사업	9	14	4	7	5	10	8
△ 구체적인 부문 사업		0		1		2	
● 민관협력(PPPs) 전용		1					
▲특정 관련 사업							7
■ 임시 기반	1		3		2		2
+ 기타	3	1	4	5	4	5	
× 없음	5	6	5	4	5	7	7
.. 사용할 수 없음/ 해당 없음	10	6	10	6	11	6	7
비 OECD 국가							
코스타리카	..	✓	..	×	..	×	▲

출처 : OECD (2018), *Survey of Capital Budgeting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OECD (2020),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895

11.4. 새로운 인프라 사업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추정되는 비용 (2020년)



출처 : OECD (2020),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914

인프라 조달의 수명 주기 관점

인프라 사업의 복잡성, 규모, 기간, 위험은 의사 결정자들이 전체 자산의 수명 주기 동안 사회를 위해 창출되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제공과 조달 전략을 필요로 한다. 인프라 거버넌스에 대한 OECD의 권고안은 1) 질적 및 재무적 요소를 결합한 기준에 따라 계약자를 선정하고 자산의 수명주기 동안 발생하는 비용, 편익 및 영향의 평가를 포함하며, 2) 최적의 위험 할당과 서비스 제공 옵션에 대한 평가를 비교하기 위해 적격성 조사제도를 이용하고, 3) 균형잡힌 계약관계를 구현하고 계약자가 사업의 자세한 규격과 전문적인 기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강조한다.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러 정책 차원을 고려하여 조달 프로세스를 재조정해야 한다.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거나 사업의 전체 수명 주기를 고려하지 않는 조달 프로세스는 품질, 기술적 특징 (예: 회복력, 환경 지속 가능성), 가격 등의 최적 조합을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 설문 조사에 응답한 OECD 대다수의 국가들(30개 국가 중 28개 국가, 93%)은 재정과 질적 기준을 조합해 제안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OECD 30개 국가 중 12개 국가(40%)만이 이 메커니즘을 직접 사용하여, 장기적인 비효율성과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감소시키므로 서로 다른 예산 주기를 포함하는 것과 계약 체결을 위한 수명 주기 비용 사용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그림 11.5 참고).

인프라 자산은 수명이 길고 비효율성, 품질 부족, 비용 초과, 경제적 및 재정적 불확실성, 무결성 위반과 같은 위험에 노출되기 쉽다. 이러한 위험은 사업의 적격성과 의도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위협할 수 있다. 주요 인프라 사업을 조달할 때,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이미 투자 수명 주기의 각 단계에서 위험을 식별, 할당, 완화한다. OECD 인프라 거버넌스 조사에 따르면, OECD 29개 국가 중 18개 국가(62%)가 전체 인프라 조달 수명 주기에 걸쳐 위험 관리 활동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는 이행 보고서(2019)의 이전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그림 11.6 참고).

계약 당국은 기술 규격의 준수를 감독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계약자가 위반할 경우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제재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다. OECD 국가들은 계약자에게 프로젝트 규격과 전문적인 표준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하는 광범위한 메커니즘을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OECD 국가(30개 국가 중 24개 국가, 80%)는 계약 조항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담 현장 감독(21개 국가, 70%)을 사용하고 있다. 절반 이상의 국가(30개 국가 중 16개 국가, 53%)들은 핵심 성과 지표에 대한 계약자의 성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이러한 관행은 보다 널리 채택될 수 있다 (그림 11.7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2020년 OECD 인프라 거버넌스 조사와 2018년 OECD 자본 예산 및 인프라 거버넌스 조사에서 도출되었다. 두 설문 조사가 동일하지는 않지만 시간 경향성을 고려하여 유사한 질문을 사용했다. 2020년 설문 조사는2021년 1월 OECD 30개 국가와 코스타리카로부터 응답을 받아 실시되었다. 2018년 조사는 2018년 초에 OECD 26개 국가로부터 응답을 받아 실시되었다. 응답자 대부분 중앙/연방 사회기반시설부, 공공사업부, 재무부, 사회기반시설부, 기타 부처의 고위 관료들이었다.

공공 자산의 수명주기는 우선순위의 결정과 자금 조달을 시작으로 설계, 조달,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및 폐기에 이르는 공공 기반시설 자산의 수명 동안의 모든 단계를 의미한다.

적격성은 정부가 프로젝트의 전체 수명에 걸쳐 계산한 수량, 품질, 특징, 가격의 최적 조합을 판단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OECD (2020a),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OECD,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60*.

OECD (2020b), "Public procurement and infrastructure governance: Initial policy responses to the coronavirus (Covid-19) crisis",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 10.1787/c0ab0a96-en.*

OECD (2019), *Reforming Public Procurement: Progress in Implementing the 2015 OECD Recommendation*,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1de41738-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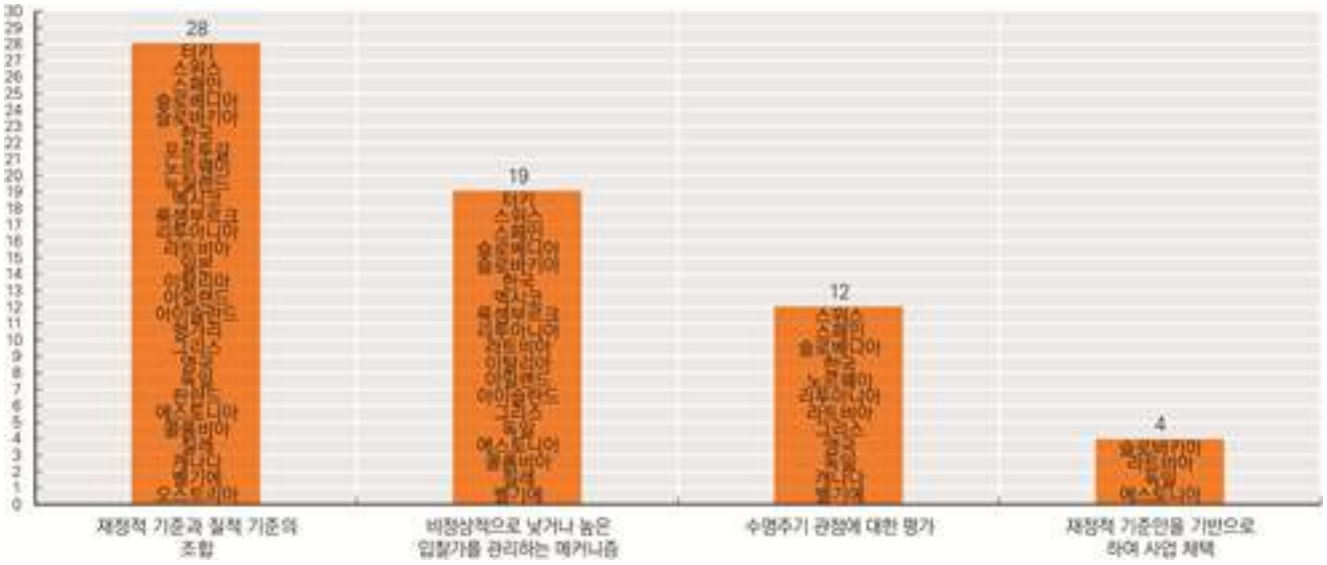
그림 설명

호주, 체코,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네덜란드, 폴란드 및 스웨덴의 2020년 데이터는 제공되지 않는다.

벨기에의 2020년 데이터는 플랑드르의 응답만을 기반으로 한다.

미국은 일반적으로 연방 차원의 인프라 사업을 공공 조달에 의존하지 않는다.

11.5. 비용 대비 최고의 가치를 제공하는 제안서를 식별하는 데 도움이 되는 메커니즘 (2020년)



출처 : OECD (2020),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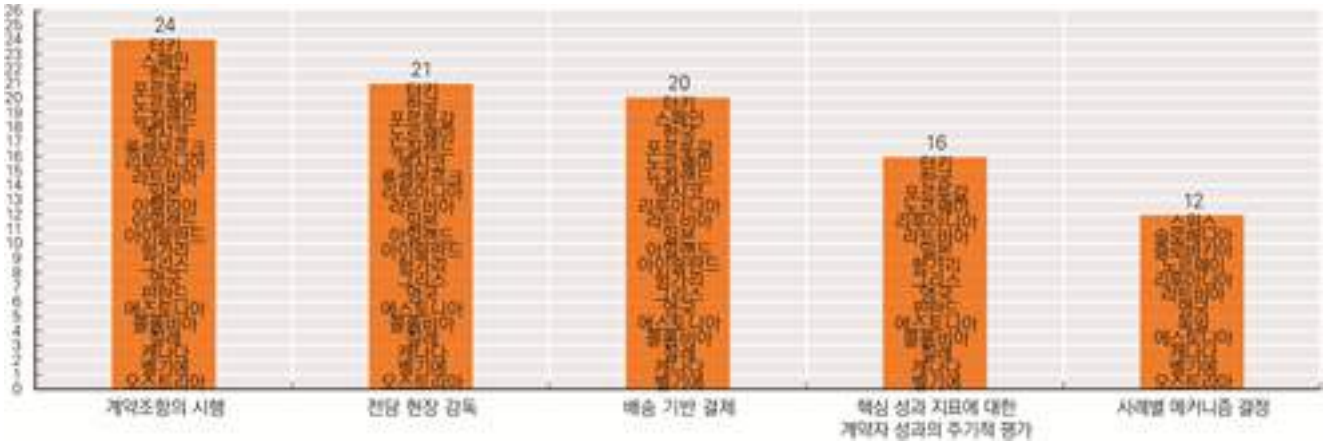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933

11.6. 전체 인프라 조달 수명주기를 포괄하는 위험 관리 활동을 채택 (2020년)

출처 : OECD (2020),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952

11.7. 계약자에게 사업 설명서 및 전문 표준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메커니즘 (2020년)



출처 : OECD (2020), *Survey on the Governance of Infrastructur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971

중요한 인프라 회복력의 거버넌스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자연 재해와 악의적인 공격은 사회와 경제에 심각한 위험을 제기한다. 코로나 19 팬데믹, 우크라이나 전력망 사이버 공격, 유럽 전역의 화산재 구름과 같은 사건은 중요한 인프라의 중단이 상당한 경제적 피해와 인명 손실을 야기하는 파급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세계 경제에서 공급망과 기술 시스템의 상호 연결성이 증가함에 따라,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예: 전기, 가스, 수도, 통신을 생산하거나 제공)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취약성도 증가한다(OECD, 2019).

인프라의 투자, 소유권, 운영, 규제에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가 참여한다. 중요한 인프라 보호 및 회복력을 위한 국가 전략은 정부가 다양한 부문에 걸쳐, 위험에 대한 조정, 상황 인식 및 대비를 개선하는 데 유용한 도구이다. 2019년 OECD 27개 국가 중 24개 국가가 이러한 전략을 수립했다(89%). 또한, 27개 국가 중 25개 국가(93%)는 이행을 조정할 담당 기관을 지정했다. 2019년 전략이 있든 없든, OECD 30개 국가 중 27개 국가(90%)는 중요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수립했으며,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32개 국가 모두 중요 인프라 부문을 식별했다. 또한 24개 국가 중 19개 국가(79%)는 중요 인프라 자산, 시스템, 기능의 국가 목록을 설정했다고 보고했다(표 11.8). 이러한 목록 설정을 통해 중요한 인프라의 상당 부분이 민간 부문에 의해 소유 또는 운영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EPRS, 2021).

중요한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복원력 조치 거버넌스 및 설계는 분야 간 기능적 상호 의존성으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 탄력성 조치는 시스템 중복과 주요 공급업체의 다양화에서부터, 자산 강화, 예비 생산 능력, 신속한 복구 및 적응성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사용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OECD 24개 국가 중 12개 국가(50%)만이 사업자가 회복력에 투자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했으며, 6개 국가(25%)만이 서비스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재정적 제재를 부과했다. 오직 미국만이 인프라 회복력의 투자를 위한 정부 보조금 프로그램을 수립했다(그림 11.9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2016년 OECD 중요 위험 거버넌스 설문 조사와 2018년 및 2019-20년 중요 인프라 회복력 설문 조사에서 도출되었다.

중요 인프라 회복력 조사는 2019-20년 OECD 25개 국가, 2016년에는 OECD 6개 국가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2018년과 2019-20년 조사의 응답자는 중앙 정부 차원에서 중요한 인프라 회복력 또는 보호에 대한 책임이 있는 정부 관료였다. 2016년 조사에 대한 응답은 재난 위험 또는 위기관리 책임이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조정했으며, 중요 인프라 전문가들도 포함된다.

중요 인프라는 경제 및 복지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자산, 시설, 네트워크로 조사에서 정의된다.

회복력은 본질적으로 충격 이전과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피해를 흡수하고 파괴로부터 회복하며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는 시스템의 능력으로 정의된다(OECD, 2014). 이 정의에는 충격을 견디고, 필요한 운영을 지속하며, 서비스 중단 기간을 제한하고, 복구 시간을 최소화하며, 새로운 조건에 적응하고, 시스템의 기능을 개선하는 기능들이 포함된다.

참고문헌

OECD (2019), “Policy toolkit on governance of critical infrastructure resilience”, in *Good Governance for Critical Infrastructure Resilienc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c4124df-en*.

OECD (2014),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OECD, *www.oecd.org/gov/risk/CriticalRisks-Recommendation.pdf*.

EPRS (2021), *European Critical Infrastructure: Revision of Directive 2008/114/EC*,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www.europarl.europa.eu/RegData/etudes/BRIE/2021/662604/EPRS_ BRI(2021)662604_EN.pdf*.

그림 설명

콜롬비아, 덴마크, 리투아니아 및 슬로베니아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11.8. 헝가리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벨기에, 체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멕시코, 뉴질랜드(분야 만 식별됨), 슬로바키아, 터키의 데이터(중요 인프라의 정의만 해당)는 2019년 대신 2018년 데이터를 나타낸다.

11.9. 벨기에, 체코,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멕시코 및 네덜란드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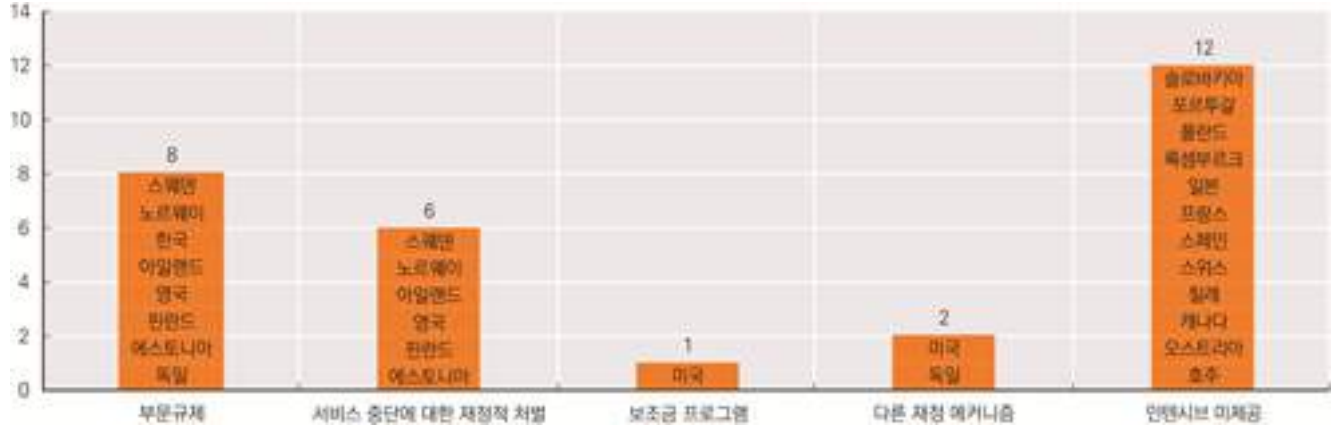
11.8. 주요 인프라 전략, 정의, 국가 인벤토리 (2016년, 2019년)

	중요 인프라 보호 전략		중요 인프라의 정의	식별된 분야	식별된 선도 기관	중요 인프라 자산, 시스템, 기능과 운영자에 대한 국가 인벤토리
	2016	2019	2019	2019	2019	2019
호주	●	●	●	●	●	●
오스트리아	●	●	●	●	●	●
벨기에	...	...	●	●	●	...
캐나다	●	●	●	●	●	●
칠레	...	●	❍	●	●	●
체코	...	●	●	●	●	...
에스토니아	●	●	●	●	●	●
핀란드	●	●	●	●	●	❍
프랑스	●	●	●	●	●	●
독일	●	●	●	●	●	●
그리스	...	❍	❍	●	●	❍
아이슬란드	...	●	...	●	...	...
아일랜드	●	●	●	●	●	❍
이스라엘	●	●	●	●	●	●
이탈리아	...	❍	❍	●	❍	...
일본	●	●	●	●	●	❍
한국	●	●	●	●	●	●
라트비아	❍	●	●	●	●	●
룩셈부르크	●	●	●	●	●	●
멕시코	...	...	●	●	...	...
네덜란드	●	●	●	●	●	●
뉴질랜드	...	...	●	●	...	...
노르웨이	❍	●	●	●	●	●
폴란드	●	●	●	●	●	●
포르투갈	❍	❍	●	●	❍	●
슬로바키아	...	...	...	●	...	...
스페인	●	●	●	●	●	●
스웨덴	●	●	●	●	●	❍
스위스	●	●	●	●	●	●
터키	...	...	●	●	...	...
영국	●	●	●	●	●	●
미국	●	●	●	●	●	●
OECD 총계						
● 예	19	24	27	32	25	19
❍ 아니오	3	3	3	0	2	5
··· 결측	10	5	2	0	5	8

출처 : OECD (2016) *Survey on the Governance of Critical Risks;* OECD (2018 and 2019-20) *Survey on Critical Infrastructure Resilienc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8990

11.9. 중요한 인프라 운영자가 중요한 인프라 복원력에 투자할 수 있는 인센티브 (2019년)



출처 : OECD (2019-20) *Survey on Critical Infrastructure Resilienc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009

12. 공공부문의 청렴성

청렴 및 반부패 전략
로비활동에서의 투명성

청렴 및 반부패 전략

공공청렴에 대한 OECD의 권고안은 공공부문, 특히 부패 측면에서 공공청렴의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방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명시한다. 전략적 청렴 목표는 다양한 기관이 소유한 정부 문건에 있을 수도 있지만, 일부 국가는 국가 단일의 청렴 전략 또는 반부패 전략을 선택했다.

공공청렴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적 접근방식은 공공청렴에 대한 위험을 식별하기 위한 증거에 기초해야 하며, 전략개발을 위한 기존의 정부 절차를 통해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개발되어야 한다. 또한 이를 적절히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동시에 모니터링이 되어야 한다.

2020년 OECD 24개국 중 20개국(87%)이 청렴전략을 수립하였다. 오직 체코, 멕시코, 포르투갈, 영국만이 공공청렴 위험을 분석하기 위한 기관 간 기구를 설립함으로써 공공청렴 영역 전체에 포괄적인 접근을 취했다. OECD 20개국 중 11개국(55%)의 청렴전략은 철저한 문제 분석과 청렴위험 평가에 기초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개국 중 7개국(35%) 만이 청렴전략을 개발할 때, 가장 해로운 청렴위험을 목표로 다양한 출처(설문조사 및 행정자료)를 활용했다(그림 12.1 참고).

라트비아,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공공협의포털에 청렴전략 초안을 게시한 유일한 국가였으며, 20개 전략 중 8개(40%)만이 정부 간 그리고 공공협의를 달성했다. 이는 많은 국가가 공공협의포털과 같은 시민 및 비국가행위자의 의견을 포함하기 위해 확립된 표준 매커니즘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효과적인 청렴전략은 적절한 모니터링에 달려있다. 청렴전략이 있는 20개 국가 중 7개국(35%)은 목표가 있는 성과 수준 지표를 포함하였으며, 3개국(15%)은 성과지표만을 활용하였다. 모니터링 활동의 실행률을 추적하는 것은 효과적인 모니터링에 기여하지만 대부분의 국가에는 이러한 기록에 대한 자료가 없다. 온라인 표G.38은 반부패 및 청렴을 위한 전략적 목표와 관련된 활동들의 평균 이행률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행을 모니터링 하는 OECD 10개국의 경우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된 활동의 평균 이행률은 60%였다.

"실행 구조 및 보고의 적절성"에 대한 지표는 15가지 기준을 사용하여 전략 및 해당 실행계획의 실행에 필요한 요소가 있는지의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15가지 기준을 사용하며,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해당 기준의 1/3만 충족했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청렴 및 반부패 전략" 자료는 OECD 24개국과 핵심협력국 1개국(브라질)이 응답한 OECD 전략적 프레임워크의 질 지표(Quality of Strategic Framework indicators)를 기반으로 한 설문지를 통해 수집되었다. 해당 지표는 공공청렴에 관한 OECD의 권고안에 대한 대응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응답자는 중앙정부의 청렴정책을 담당하는 고위공무원이다. 실무를 담당하는 고위공직자 9명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와 폭넓은 협업을 통해 수행되었다.

"실행구조 및 보고의 적절성" 지표에는 전략의 이행·모니터링·평가·보고를 담당하는 중앙조정기능과 활동·지표·목표·비용 등을 명시한 실행계획 등 필수 구성요소를 포괄하는 15개 기준이 포함된다.

공공청렴을 위한 전략적 목표와 관련된 활동의 이행률은 각 국가 당국에서 제출한 모니터링 보고서를 기반으로 측정된다. 진행 중이거나 반복적, 부분적으로만 실행되는 활동은 제외되며, 모든 전략 내의 전략적 목표에 대한 평균비율이 표시된다.

공공청렴은 공공부문에서 사익보다 공익을 옹호하고 우선시하기 위해 공유된 윤리적 가치, 원칙, 규범을 일관되게 조정하고 준수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공청렴의 주요 전략목표는 정부(내각회의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가 공식적으로 문건이나 규정으로 설정하는 한편, 다른 목표의 하위목표로 종속되지 않는다.

참고문헌

OECD (201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Integrity*, OECD, Pari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35*.

OECD (2020), *OECD Public Integrity Handbook*,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ac8ed8e8-en*.

그림 설명

벨기에, 칠레, 덴마크,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미국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표 G.38.(실행구조 및 보고의 적절성, 2020)은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12.1. 청렴전략 개발시 증거기반 문제분석 및 진단의 활용 (2020년)

출처: OECD (2021), *Public Integrity Indicators: Quality of Strategic Framework.*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028

12.2. 정부간 및 공개협의의 포괄성과 투명성 (2020년)

출처: OECD (2021), *Public Integrity Indicators: Quality of Strategic Framework.*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047

로비활동에서의 투명성

로비는 정당한 정치 참여 활동이다. 로비는 정부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공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대해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로비는 정책결정자들이 대안과 절충에 대해서 학습할 수 있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주어진 정책문제에 대해 최선의 행동방침을 결정할 수 있게 만든다. 하지만 경험적 사례들이 보여주듯이 정책 수립 시 항상 고려되지는 않는다. 로비 역시 편파적 증거제공과 여론 조작을 통해서 악용될 수 있다. '잘못된 정보에 기초한 공공정책' 또는 '재정적/정치적 강력한 특정한 이익 집단의 요구에만 대응하는 공공정책'은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OECD, 2017). 따라서 필요한 정책의 유형만이 아닌 정책들이 다양한 이해관계에 의해 어떻게 전달되고 형성되는지를 다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OECD의 로비 투명성 및 청렴원칙 권고안(이하 로비원칙)은 각 국이 "공무원, 시민, 기업이 로비 활동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투명성을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투명성은 다양한 수단을 통해 제공 될 수 있는데, OECD 16개국(호주, 오스트리아,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폴란드, 슬로베니아, 영국, 미국) 그리고 루마니아에는 로비스트 및/또는 공무원이 상호작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공공등록체계가 있다. 다른 접근법 중 하나는 일부 공직자가 공개된 안건을 통해 로비스트와의 면담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것이다(스페인,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영국). 어떤 국가는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사후 공개(legislative footprint)를 요구하는데 아이슬란드, 라트비아, 룩셈부르크, 폴란드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이행했다(OECD, 2021).

공개의무는 로비 대상 공무원의 직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실제로 모든 직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투명성은 제한되어 있다. OECD 30개국 중 13개국(43%)과 루마니아는 장관, 각료들을 겨냥한 로비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OECD 14개국도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다. OECD 10개국(33%)과 루마니아는 임명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활동에 대한 투명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10개국(33%)과 루마니아는 고위공무원으로 대상 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표 12.3 참고).

또한 OECD 31개국 중 17개국(55%)과 루마니아가 로비활동으로 인한 수혜자를 파악한다(그림 12.4). 로비원칙은 공개가 로비 활동의 목적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만, 공개조사에 필요한 정보의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마지막으로OECD 8개국만이 이해관계자가 로비 활동의 대상(특정 법률, 규정, 결정)을 파악할 수 있는 투명성 수단을 가지고 있다(그림 12.5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로비는 지방, 지역, 국가 수준에서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공직자가 관리하는 공공정책 및 규제의 설계, 구현, 시행 및 평가에 합법적으로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이다.

2020 OECD 로비에 관한 설문조사는 로비스트뿐만 아닌, 행정부와 입법부 공직자들의 경험을 종합해 작성한 3개 설문을 활용했다. 행정부 공직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답한 사람들은 중앙정부의 청렴정책 및/또는 로비 관련 규정을 책임지는 대표자들이다. OECD 29개국에서 설문조사가 완료됐다. 이탈리아는 질문에 선별적으로 응답했고, 영국은 서면을 통해 설문에 응답하였다.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에 대한 설문조사도 완료했다. 설문 응답들은 OECD사무국의 로비원칙의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2021년 보고서의 일환으로 수행된 데스크 리서치(desk research)를 통해 보완하였다.

참고문헌

OECD (2010),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rinciples for Transparency and Integrity in Lobbying,* OECD, Pari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379*.

OECD (2017), *Preventing Policy Capture: Integrity in Public Decision Making*,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9789264065239-en.*

OECD (2021), *Lobbying in the 21st Century: Transparency, Integrity and Acces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6d8eff8-en*.

그림 설명

벨기에, 콜롬비아, 에스토니아, 이스라엘, 일본, 뉴질랜드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12.3. 오스트리아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헝가리와 라트비아의 행정부 공직자들은 로비스트와의 만남을 상관에게 밝혀야 한다. 헝가리에서는 정보가 공개되지 않지만, 라트비아는 로비스트의 관점이 특정 결정에 반영 되었을 경우에만 정보를 공개한다. 룩셈부르크 의회는 로비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의회위원회 기간 동안의 로비스트 기부금은 투명하지 않다.

12.4. 공개한 정보는 로비활동의 수혜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내부 로비스트는 자신의 고용주 이름을 공개하고 제3자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는 그들이 대표하는 조직 이름을 공개한다.

12.3. 로비스트와의 관계에 대해 공개의무가 있는 공무원(2020년)

	로비활동의 대상이 되는 공무원 및 기관				
	장관 및/또는 내각 구성원	의원 및 의회직원	임명직 공무원(고문, 비서진)	특정 고위공무원	특정 조직내 모든 공무원
호주	●	○	●	●	●
캐나다	●	●	●	●	○
스위스	○	○	○	○	○
칠레	●	●	●	●	○
체코	○	○	○	○	○
독일	●	●	○	●	○
덴마크	○	○	○	○	○
스페인	●	●	○	○	○
핀란드	○	○	○	○	○
프랑스	●	●	●	●	○
영국	●	○	●	○	○
그리스	○	○	○	○	○
헝가리	○	○	○	○	○
아일랜드	●	●	●	●	○
아이슬란드	●	○	●	○	○
이탈리아	○	●	○	○	○
한국	○	○	○	○	○
리투아니아	●	●	●	●	○
룩셈부르크	○	●	○	○	○
라트비아	○	○	○	●	●
멕시코	○	●	○	○	○
네덜란드	○	●	○	○	○
노르웨이	○	○	○	○	○
폴란드	●	●	○	○	○
포르투갈	○	○	○	○	○
슬로베니아	●	●	●	●	●
스웨덴	○	○	○	○	○
슬로바키아	○	○	○	○	○
터키	○	○	○	○	○
미국	●	●	●	●	○
OECD총합					
●네	13	14	10	10	3
○아니오	17	16	20	20	27
브라질	○	○	○	○	○
코스타리카	○	○	○	○	○
루마니아	●	○	●	●	○

출처: OECD (2020), *Survey on Lobbying*.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066

12.4. 로비스트에 대한 투명성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Lobbying*.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085

12.5. 로비활동의 대상(법, 규제, 의사결정)에 대한 투명성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n Lobbying*.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104

13. 핵심 정부 성과

정부 신뢰
내적·외적 정치효능감
소득 재분배
법치주의
비용효과성

정부 신뢰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공공행정의 성과를 보여주는 공통 지표이자,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기능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이다. 예를 들어,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신뢰는 유럽국가에서 감염 속도를 느리게 하기 위한 조치를 준수하는 것과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Bargain and Aminjonov, 2020).

갤럽여론조사(Gallup World Poll)는 2020년 OECD국가 국민의 51%가 정부를 신뢰하며, 이는 2007년보다 6.3%p 증가한 수치이고, 2019년보다 6%p 증가한 수치라고 발표했다(OECD, 2019). 가장 큰 상승폭은 아이슬란드(35%p)와 독일(30%p)이었고, 반대로 벨기에(-31%p)와 칠레(-28%p)는 가장 가파르게 감소하였다(그림 13.1). 또한 일부 국가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있었다(온라인 그림 G.39). 그러나 대부분의 자료가 코로나19 1차 확산기 동안 수집되었으며, 소위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로 인한 효과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신뢰의 평균증가는 신중히 살펴봐야한다. 결집효과는 지도자와 정부기관을 지지하며, 일시적으로 다른 정책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갑작스러운 위기동안 신뢰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설문조사에 참여한 22개 OECD 국가 중 18개 국가의 평균 신뢰 수준은 2020년 4월/5월과 6월/7월 사이에 하락했으며, 이는 결집효과가 사라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1~10점 척도를 기준으로 스페인(0.5), 프랑스(0.4), 룩셈부르크(0.3)에서는 정부신뢰가 증가하고 슬로베니아는 변화가 없었음에도(그림 13.2), 정부신뢰의 평균은 4월/5월에 5.23점, 6월/7월에는 4.77점으로 나타났다.

정부신뢰에 대한 계량지표는 국민과 정부의 관계 및 사회문제에 대한 신호를 줄 수 있지만, 총합적 성격의 지표이기에 다양한 요인 및 환경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OECD 국가 대부분에서 실시된 유럽가치연구(European Values Study, EVS)와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 WVS)는 OECD 가이드라인(OECD, 2017)에서 제안한 핵심 조치를 포함하여 여러 기관의 신뢰수준을 묻는 질문을 포함한다. 평균적으로 인구의 72%가 경찰, 49%가 공무원을, 37%가 정부를 약 33.33%가 국회(의회)를 신뢰한다. 모든 기관의 신뢰수준이 60% 이상인 노르웨이는 일관되게 가장 높은 신뢰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콜롬비아와 멕시코의 전반적 신뢰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공무원과 정부간 신뢰 격차가 가장 큰 국가는 그리스(30%p), 아이슬란드(29%p), 스페인(26%p), 영국(26%p)으로 나타났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신뢰는 다른 사람 또는 기관이 그들에게 기대되는 긍정적인 행동과 일치한 행동을 보일 것이라는 개인의 믿음을 의미한다(OECD, 2017). 자료는 갤럽 여론 조사(Gallup World Poll; GWP)를 활용하였으며, 각 국가별 1,000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하여 표본의 통계적 대표성을 확보하였다. Eurofound의 전자설문조사인 '삶, 노동, 그리고 코로나19'는 대부분의 조사 대상 국가가 폐쇄(lockdown) 상태였던 4월과 서서히 개방되고 있던 7월에 수행되었다. 표본들은 조정과정을 거쳐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나타내게 되며,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유럽가치연구(EVS)와 세계가치조사(WVS)는 두 차례에 걸친 종단조사이자 국가 간 횡단조사이다. 유럽가치연구는 유럽 국가를 대상으로 하며, 세계가치조사는 유럽 이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한다. 일반적인 표본의 크기는 1,300개이며, 더 많은 인구와 다양성을 가진 국가는 1,500-5,000개의 표본을 적용하는 반면, 인구 2백만 이하의 국가는 표본 크기를 1,000개로 적용하였다.

참고문헌

Bargain, O. and U. Aminjonov (2020). "Trust and compliance to public health policies in times of COVID-19", *Bordeaux Economics Working Papers* 2020-06.

OECD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ccf5c38-en*.

OECD (2017), *OECD Guidelines on Measuring Trust*,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78219-en*.

그림 설명

13.1 "당신은 정부를 신뢰하십니까?"의 질문에 "예"라고 응답한 국가 중 칠레, 에스토니아, 그리스,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룩셈부르크, 코스타리카, 루마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자료는 2019년의 자료이다. 또한 체코의 자료는 2018년의 자료이며, 아이슬란드의 자료는 2017년 자료이다. 한편, 오스트리아,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의 자료는 2007년이 아닌 2006년의 자료이며,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자료는 2007년이 아닌 2008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2007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점으로서 역할을 한다.

13.2 "당신은 다음 각 기관을 개인적으로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에 대한 응답의 평균값은 1~10까지의 척도를 가지며, 1은 전혀 신뢰하지 않음, 10은 완전히 신뢰함을 의미한다. 룩셈부르크와 폴란드의 자료는 신뢰도가 낮다.

13.3. "당신은 의회, 공무원, 경찰에 대해 얼마나 신뢰하십니까?"에 "많이" 또는 "상당히 많이" 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그래프에 포함된 대부분의 유럽국가에 대한 자료는 2018년 자료이다. 유럽가치연구(EVS)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https://europeanvaluesstudy.eu/methodology-data-documentation/survey-2017에서 참조할 수 있다. 비유럽국가에 대한 자료는 세계가치조사(WVS)에서 활용하였다. 미국의 자료는 2017년, 호주, 칠레, 콜롬비아, 멕시코, 한국의 자료는 2018년, 일본의 자료는 2019년, 뉴질랜드의 자료는 2019-20년이다.

G.39. (연령별 정부신뢰, 2020)는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볼 수 있다.

13.1. 2020년 OECD 국가 정부신뢰 및 2007년 대비 변화

출처: Gallup World Poll,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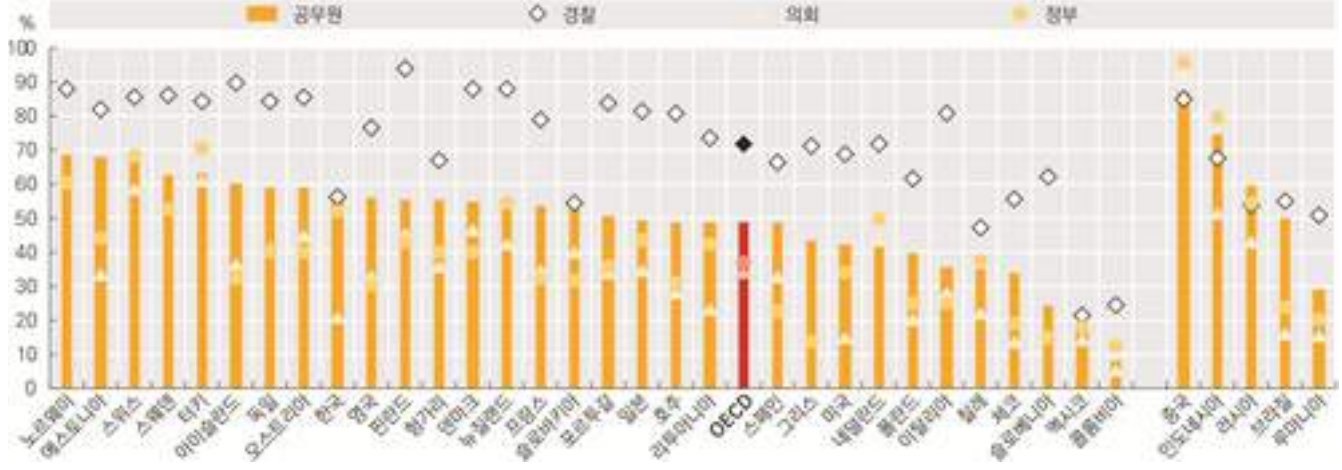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123

13.2. 코로나 19 1차 확산기 동안의 정부신뢰 (2020년)

출처: Eurofound (2020), *Living, Working and COVID-19.*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142

13.3. 정부, 공무원, 의회, 경찰에 대한 신뢰 (2017-2020년)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in the World Values Survey and European Values Study, 2017-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161

내적·외적 정치효능감

정치태도(political attitudes)는 인간 신념체계의 핵심 구성요소이며, 사람들이 정치적 문제 또는 상황에 접근하는 지속적인 감정 또는 정신적·정서적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정치효능감은 신뢰와 함께 민주주의 체제의 전반적인 상태를 나타내는 가장 적절한 지표 중의 하나이며, 사람들이 정치를 이해하고 목소리를 들을수록 민주주의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정치효능감은 개인의 정치적 행동이 정치적 과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다는 믿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치효능감은 두 가지로 분류된다. 내적 효능감은 정치과정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의미하며, 외적 효능감은 정부가 하는 일에 발언권이 있고 정부가 이에 반응할 것이라는 믿음을 의미한다.

내적 정치효능감은 정치참여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활용되어 왔다. 시민의 자기효능감과 참여는 정부와 의회에 대한 신뢰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2018년 기준 OECD 22개국의 평균 35%만이 정치참여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했다. 하지만 투표율이 높은 노르웨이는 60%를 기록한 반면, 최근에 민주주의 국가가 된 체코에서는 14%를 기록하여 큰 편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적 정치효능감에 대한 OECD 평균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약간 증가했으며(2%p), 가장 크게 상승한 국가는 폴란드(5.2%p)와 네덜란드(4.6%p)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헝가리(6.3%p)와 프랑스(2.9%p)로 나타났다(그림 13.4 참고).

외적 정치효능감은 공공기관의 정당성을 위해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국민들이 공공기관이 자신들의 요구에 부응한다고 믿는 정도를 측정하기 때문이다. 유럽사회조사(ESS)와 세계가치조사(WVS)에 따르면 OECD 26개국 인구의 평균 절반 미만(40%)이 자국의 정치체제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이 정부에 대한 발언권을 허용한다고 생각하며, 이는 2016년 대비 1.7%p 높아진 것이라고 보고했다. 하지만 스위스는 약 74%를 기록한 반면, 이탈리아는 약 15%로 나타나 국가 간에 다양한 응답결과를 보였다. 2016년과 2018년 사이 정부행위에 자신이 발언권이 있다고 생각한 사람들의 비율 변화는 8년 만에 정권교체를 경험한 폴란드(11.2%p)와 에스토니아(10.7%p)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반대로 영국(-4.6%p)과 독일(-2.5%p)에서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적 정치효능감은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 및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González, 2020). 정치체제에서 대응성 수준이 낮거나, 낮아진다면 정치체제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작동한다는 인식이 생겨 정치에 대한 환멸과 냉소가 가중될 수 있다. 실제로 OECD 22개국의 유럽사회조사(ESS)에 따르면 외적 정치효능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사이에는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 외적 정치효능감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나 노르웨이와 같이 대부분의 국민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만족한다고 보고한 국가이다. 반대로 이탈리아, 슬로베니아, 라트비아와 같은 국가에서는 낮은 수준의 외적 정치효능감이 민주주의에 대한 전반적인 낮은 만족도와 관련이 있다(그림 13.6)

방법론 및 개념정의

2001년 설립된 유럽 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 ESS)는 유럽국가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국제비교조사를 의미한다. 유럽 사회조사는 2년마다 1:1 대면 인터뷰 방식으로 수행하며 최소 유효표본 크기를 달성해야 한다. 다만 인구가 200만 명 미만인 국가는 800개로 유효표본이 감소한다.

세계가치조사(The World Value Survey, WVS)는 1981년부터 시작되었다. 제7차 세계가치조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유럽사회조사(ESS)와 같은 외부적 정치효능감에 대한 설문이 포함되어 있다. 채택된 표본은 성인인구를 대표하는 무작위 확률추출로 이루어졌다. 일반적인 표본의 크기는 1,300개이며, 더 많은 인구와 다양성을 가진 국가는 1,500-5,000개의 표본을 적용하는 반면, 인구 2백만 이하의 국가는 표본 크기를 1,000개로 적용하였다.

참고문헌

González, S. (2020), "Testing the evidence, how good are public sector responsiveness measures and how to improve them?",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3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1b10334-en*.

Prats, M. and A. Meunier (2021), "Political efficacy and participation: An empirical analysis in European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4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548cad8-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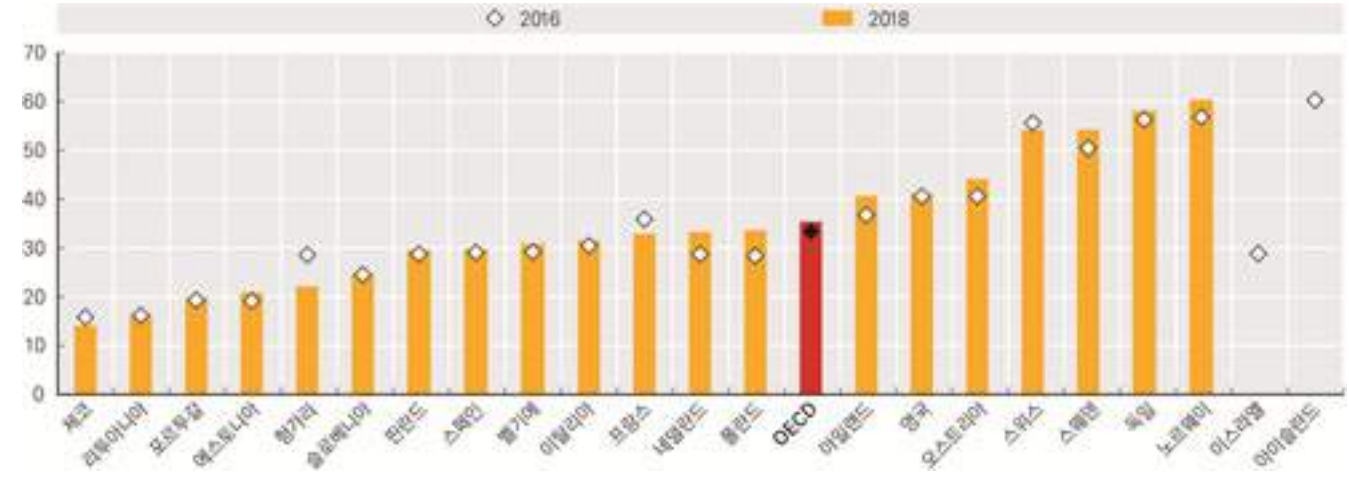
그림 설명

13.4. 2016년과 2018년의 자료는 "당신은 자신의 정치참여 능력에 대해 어느 정도 자신이 있습니까?" 란 질문에 대해 "상당히 자신한다(quite confident)", "매우 자신있다(very confident)" 또는 "전적으로 자신있다(completely confident)"라고 응답한 비율을 의미한다. "전혀 자신없다(not at all confident)", "조금 자신있다(a little confident)"는 제외되었다

13.5. 해당 점수는 중 "당신은 정부가 하는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의 질문에 "약간(some)", "많이(a lot)" "상당히(a great deal)" 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낸다. 호주, 콜롬비아,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의 자료는 세계가치조사에서 수집한 것이며, 평균값은 유럽사회조사의 자료를 활용했다.

13.6. 해당 자료는 "당신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에 대해 0(매우 불만족)-10(매우 만족) 척도에서 5점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을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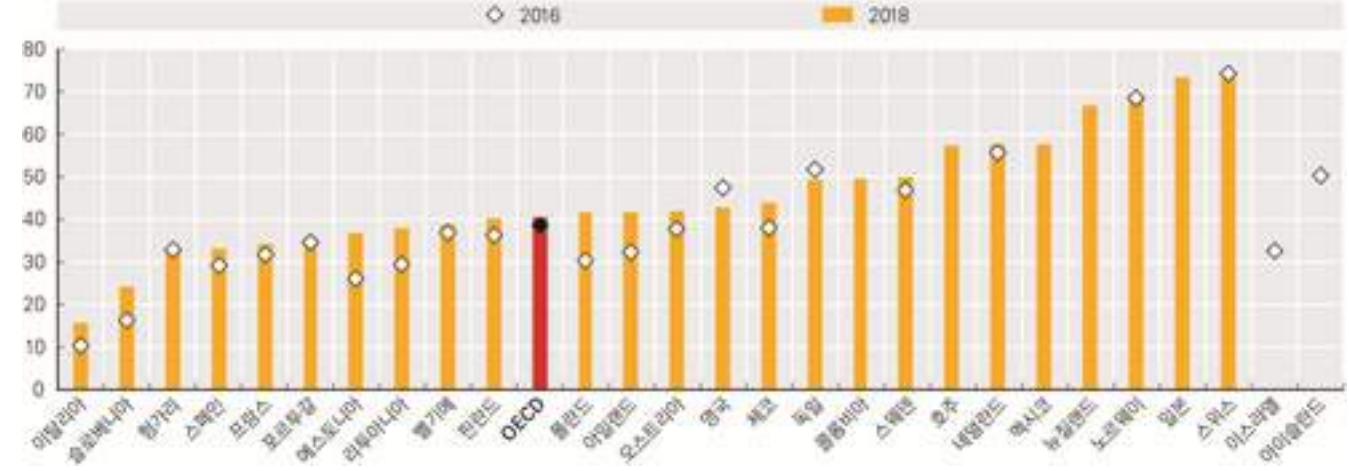
13.4. 국민의 정치참여에 대한 자신감 (2016년, 2018년 또는 2018년과 근접한 연도)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in rounds 8 and 9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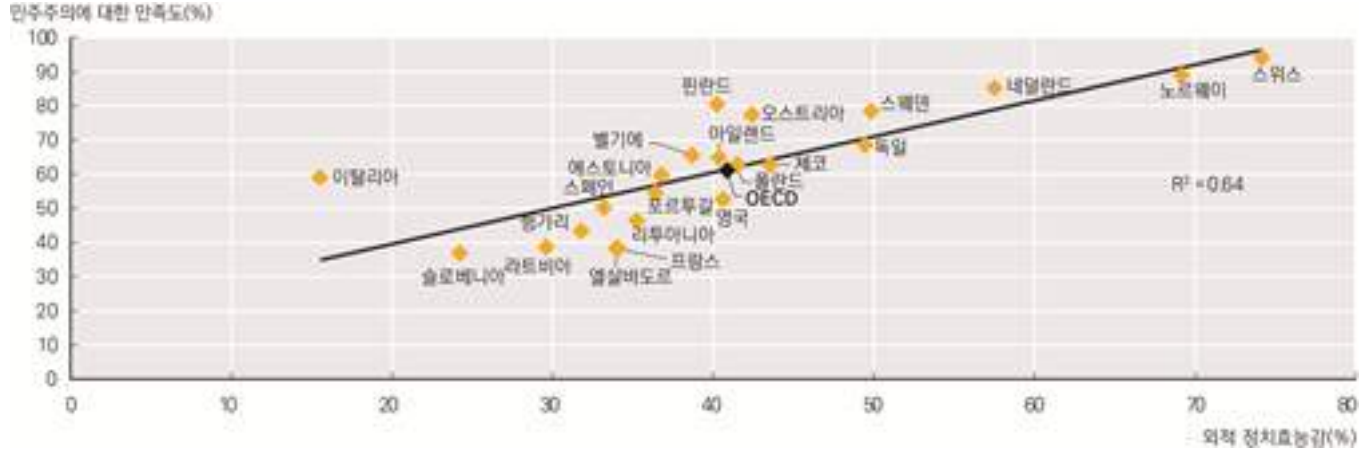
13.5. 당신은 정부의 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2016년, 2018년 또는 2018년과 근접한 연도)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on Rounds 8 and 9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and the 2017-20 round of the World Values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199

13.6. 외적 정치효능감과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도 (2018년)



출처: OECD calculations based in rounds 9 of the European Social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218

소득 재분배

소득불평등은 개인과 가족의 생활 및 건강상태뿐만 아니라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경제성장을 억압하며, 제도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킴으로써 사회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사회의 소득불평등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장기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혼합적인 공공정책을 채택했다. 이러한 혼합적인 공공정책에는 현금 지원과 이에 대한 자금을 누진적 소득세로 조달하는 사회보장 및 보험체계 등이 있다. OECD 국가들은 코로나19팬데믹과 같은 위기로부터 가난한 가계를 보호하고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 특정한 재정부양책들을 활용했다. 이러한 부양책들은 소득을 부자와 빈자 사이뿐만 아니라 세대 간에도 재분배하여, 더 큰 도움이 필요한 연령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활용 가능하다. 또한 자산(부)에 대한 과세와 같은 요소들도 재분배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Kuypers et al., 2021).

지니계수로 측정한 2018년 OECD국가의 생산가능인구 평균 소득불평등은 정부 개입 전에는 0.41이었고, 조세와 이전지출 형태의 정부 개입 후에는 0.31이었다(지니계수에서 0은 완전한 평등을 나타내며, 1은 완전한 불평등을 나타낸다). 재분배 수준을 살펴보면 정부개입 이후 지니계수의 차이는 아일랜드(39%), 벨기에(38%), 핀란드(36%)와 같은 강한복지국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칠레(5%)는 정부 개입이후의 소득재분배수준이 가장 낮다.

자료수집이 가능했던 OECD 국가 중 조세 및 이전지출 이후의 지니계수의 변화는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실질적인 평균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평균변화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각 개별 국가로는 다른 결과가 나타났는데,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6.5점), 그리스(-3.2점), 포르투갈(-2.8점)에서는 불평등이 크게 감소한 반면, 스위스(1.7점), 덴마크(1.6점), 핀란드(1.5점)에서는 불평등이 약간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그림 13.8 참고).

2018년 OECD 국가 인구의 11.2%가 정부개입 이후에도 상대적 소득빈곤차원에서 빈곤할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 간 차이는 다양하였는데, 미국과 라트비아의 경우 인구17%가 상대적 소득빈곤차원에서 빈곤할 것으로 나타났고, 아이슬란드의 경우 6%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2년과 2018년 사이에 상대소득빈곤은 라트비아(4.2%p), 독일(2%p), 네덜란드(1.4%p)에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그리스(-2.8%p), 포르투갈(-2.6%p), 멕시코(-2.3%p)에서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13.9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소득 재분배' 자료는 OECD 소득분포통계(*Income Distribution Database*)와 활용하였다(2021년 3월 1일 기준). 지니계수는 특정 국가 인구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나타내는 표준 지표이다. 모든 가구의 소득이 같을 때 0, 한 가구가 모든 소득을 가졌을 때 1로 측정된다. 소득재분배는 생산가능인구의 가구시장소득(household market income)의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household disposable income)의 지니계수 간 차이를 의미한다. 가구시장소득은 세금이나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하기 전 소득, 가처분소득은 시장소득에서 공적이전소득을 더한 후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공제한 소득을 의미한다. 상대적빈곤율은 가처분소득이 소득빈곤선 아래로 떨어지는 사람들의 비율을 의미하며, 소득선은 균등화 중위소득의 50% 이다.

참고문헌

Kuypers, S., F. Figari and G. Verbist (2021), "Redistribution from a joint income-wealth perspective: Results from 16 European OECD countr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257,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2103c5e-en*.

Causa, O., J. Browne and A. Vindics (2019), "Income redistribution across OECD countries: Main findings and policy implications", *OECD Economic Policy Papers*, No. 2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3b63e61c-en*.

OECD (2016), "Income inequality remains high in the face of weak recovery", *Income Inequality Update*, November 2016, *www.oecd.org/social/OECD2016-Income-Inequality-Update.pd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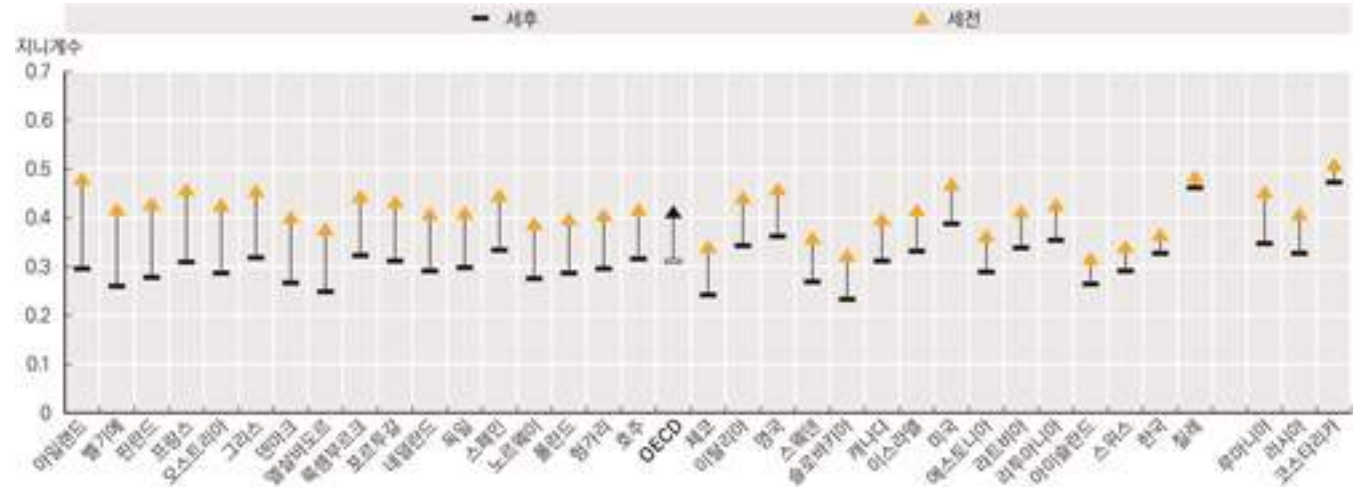
그림 설명

13.7. 시장소득과 가처분소득의 차이가 가장 높은 것부터 낮은 것 순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모든 지니계수는 2012년의 소득정의를 활용하며, 공적연금제도의 영향을 배제한 생산가능인구를 대상으로 측정되었다. 칠레,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스위스, 미국의 자료는 2018년 대신 2017년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네덜란드와 러시아의 자료는 2018년 대신 2016년의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코스타리카는 2018년이 아닌 2019년 자료를 활용했다.

13.8. 칠레, 에스토니아, 스웨덴, 미국의 자료는 2012년 대신 2013년의 자료를 활용했으며, 러시아는 2012년이 아닌 2011년의 자료를 활용했다.

13.9. 칠레, 덴마크, 독일,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스위스, 미국의 자료는 2018년이 아닌 2017년의 자료이며, 멕시코, 네덜란드, 루마니아의 자료는 2018년이 아닌 2016년의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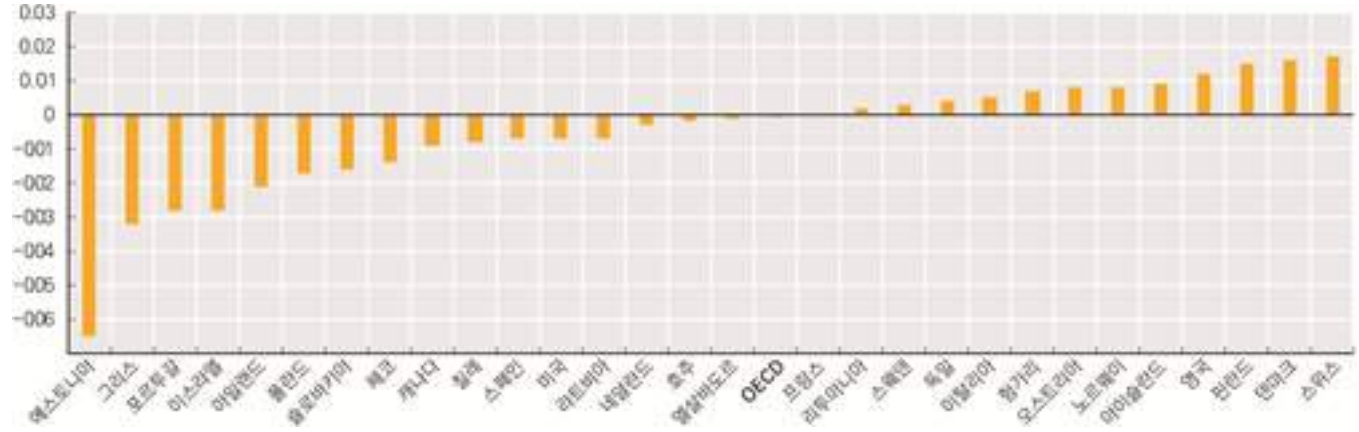
13.7. 정부의 이전지출과 조세부과 전후의 소득 불평등 차이 (2018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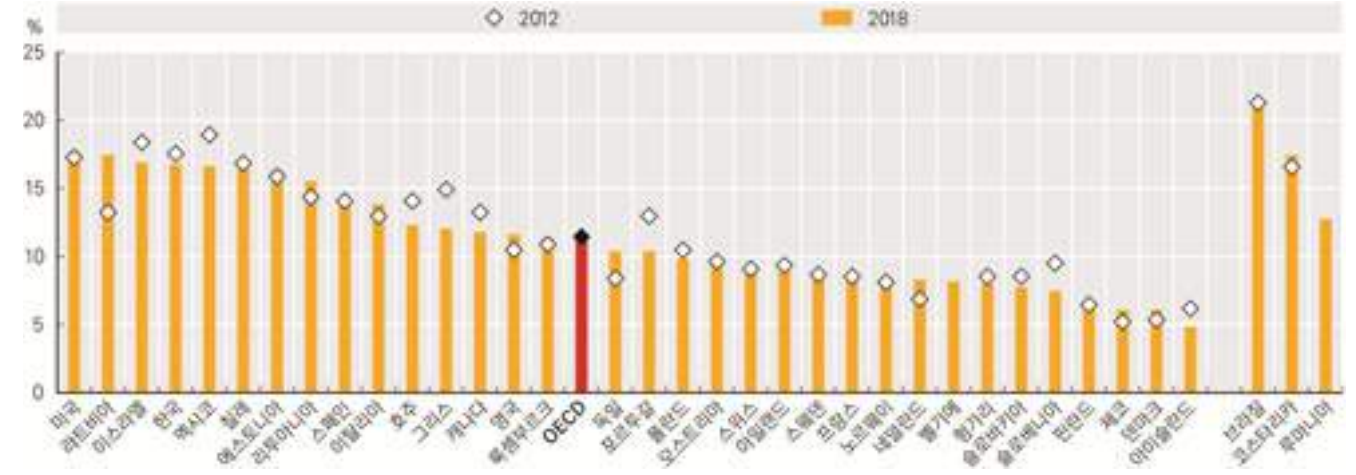
13.8. 정부의 이전지출과 조세부과 전후의 생산가능인구 지니계수 (2012년-2018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256

13.9. 정부의 이전지출과 조세부과 후 상대적 빈곤율(2012년, 2018년)



출처: *OECD Income Distribution*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275

법치주의

법치주의는 권력의 행사와 개인과 국가 사이의 관계에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 사회의 토대 중 하나이다. 법치주의는 모든 개인과 정부를 포함한 조직에 동일한 규칙, 기준, 원칙이 적용된다는 개념을 의미한다. 즉, 법치주의는 모든 사람이 법에 따라 존엄성, 평등, 합리성으로 대우받고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서 공정한 절차를 밟을 기회를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 다수의 법령, 법률, 규정 및 절차들은 이러한 요구의 이행을 약속한다. 법치주의를 강화하는 것은 모든 거버넌스 개혁의 우선순위이자 훌륭한 공공거버넌스의 핵심지표로 간주되며, 공공재 및 서비스의 공급, 경제발전, 평화와 질서의 유지, 효과적인 부패 통제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세계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는 국가의 법치를 8가지 요인(1) 정부권한에 대한 제약, 2) 부패의 부재, 3) 열린정부, 4) 기본권, 5) 질서와 안전, 6) 규제집행, 7) 민사소송, 8) 형사사법제도)에 대해 점수를 측정해 평가한다. 2020년 3월에 발표된 법치지수는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의 상황을 반영한다. 팬데믹 관련 제한과 응급사태의 잠재적 영향을 파악하진 않았지만, OECD대부분의 국가에서의 점수는 지난 10년 동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고 안정적이었다.

정부권력에 대한 제한 지수는 정부의 여러 부처가 다른 부처에 대한 견제와 통제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즉, 효과적인 수평적 책임과 정부가 다른 비정부기구의 견제에 대해 책임을 지는지 여부를 측정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정부는 공무원들의 책임과 제재 여부, 권력의 이양이 법의 테두리 안에 있는지도 평가한다. 제한 지수에 관련한 OECD의 평균은 최저 0에서 최대 1까지의 척도에서 0.784를 기록하여 2019년 0.76보다 약간 낮다(OECD, 2019). 하지만 국가별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데, 덴마크(0.94), 노르웨이(0.94), 핀란드(0.92)와 같은 스칸디나비아 국가에서는 정부권력에 대한 제한 지수가 높은 반면, 터키(0.3), 헝가리(0.4)에서는 더 낮은 결과를 나타냈다.

기본권 보호는 평등한 대우와 차별의 부재, 생명과 안전, 의견과 표현의 자유에 기반한 유엔 세계인권선언에 따라 확고히 확립된 핵심 인권에 대한 존중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전의 정부권력에 대한 제한 지수와 유사하게 OECD 국가들은 2019년 평균 0.76보다 약간 낮은 평균 0.75를 기록하였지만,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다. 국가 간 편차 역시 덴마크(0.92)에서 터키(0.32)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그림 13.11). 두 지수 모두 강력한 정(+)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이는 정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을 확립한 국가에서는 기본권을 보호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그림 13.12).

코로나19의 발생은 예외적인 정부권력의 반복적 사용과 같은 비상조치를 채택함으로써 법치주의에 몇 가지 제약들을 발생시켰고, 이는 기본권, 법적확실성, 책임의 개념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었다(Council of Europe, 2020). 이러한 점에서 코로나19팬데믹 위기 이후 이러한 제한과 법치주의 상태를 보다 광범위하고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법적 확실성과 기본권이 효과적으로 보장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orld Justice Project; WJP) 자료는 법치주의 지표(Rule of Law Index)의 개념틀을 기반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설문조사는 국가 기관과 자주 교류하는 법률 전문가와 일반 국민(대표 표본)을 대상으로 한다. 일반국민의 경우 136개국에서 응답자 1,000명을 확률표본으로 선정하고, 평균 30명의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했다. 모든 국가의 설문조사는 지역 여론조사 업체가 수행하였다. OECD 29개국과 회원후보국(코스트리카), 전략적 협력국(6개국)의 자료이며, 모든 개별 변수는 0(가장 낮음)-1(가장 높음)사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nomalised) 하였다. 복합지수에 활용되는 개별 변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JP(2020)을 참고할 수 있다.

참고문헌

Council of Europe (2020), *Respecting Democracy, Rule of Law and Human Rights in the Framework of the COVID-19 Sanitary Crisis: A Toolkit for Member States*, Council of Europe, *https://rm.coe.int/sg-inf-2020-11-respecting-democracy-ruleof-law-and-human-rights-in-th/16809e1f40.*

OECD (2019), *Government at a Glance 20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ccf5c38-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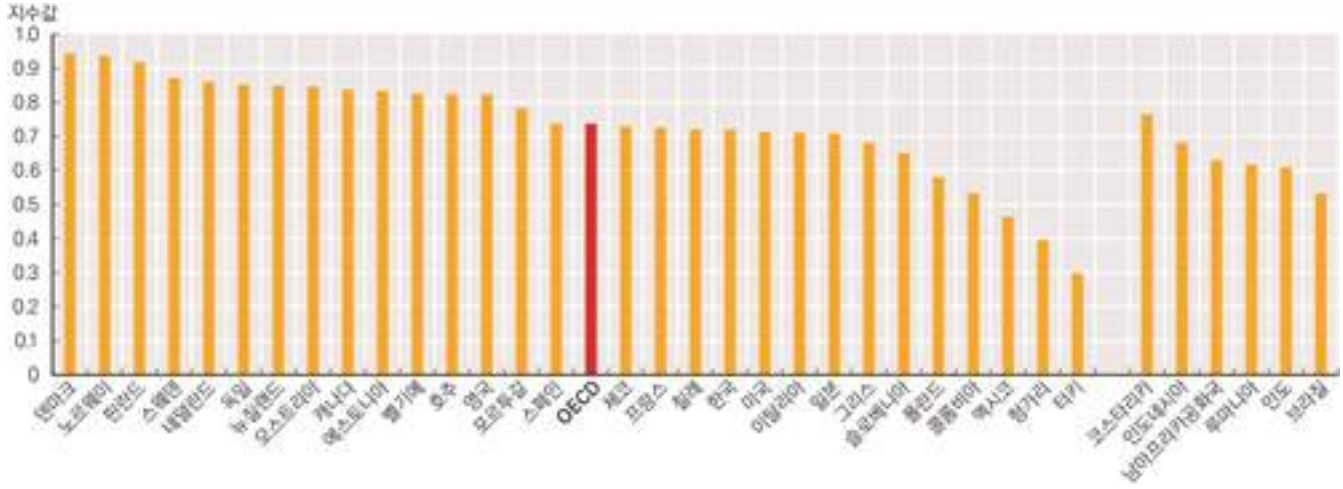
Venice Commission (2011) *Report on the Rule of Law*, Venice Commission of the Council of Europe, *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pdf= CDL-AD(2011)003rev-e.*

WJP (2020), *Rule of Law Index 2020*, World Justice Project, Washington, DC, *https://worldjusticeproject.org/sites/default/files/documents/WJP-ROLI-2020-Online_0.pdf.*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스위스의 자료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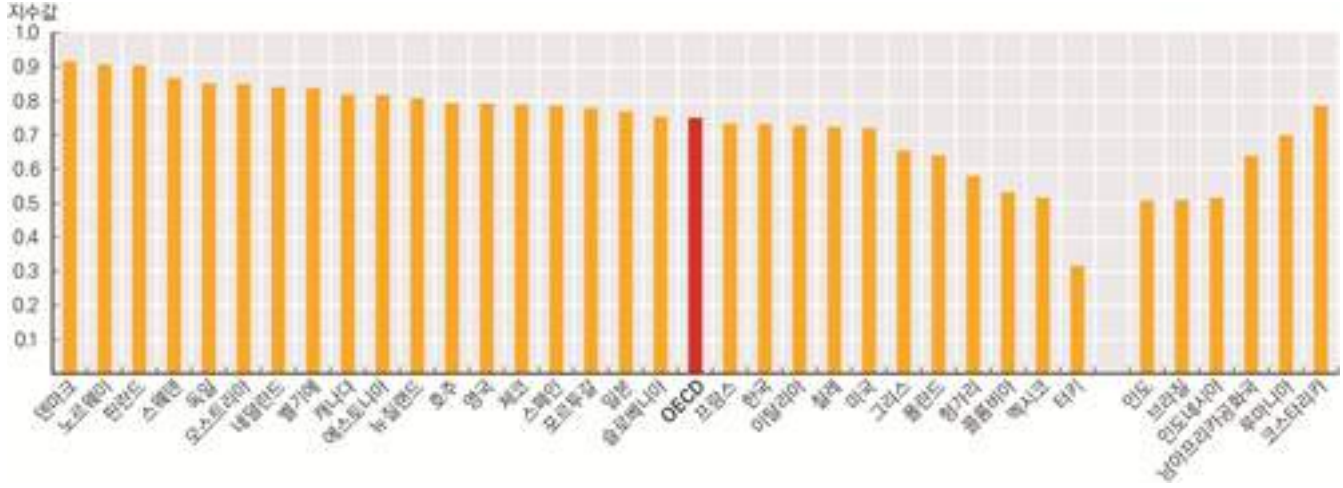
13.10. 정부권력의 제한 지수 (2020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2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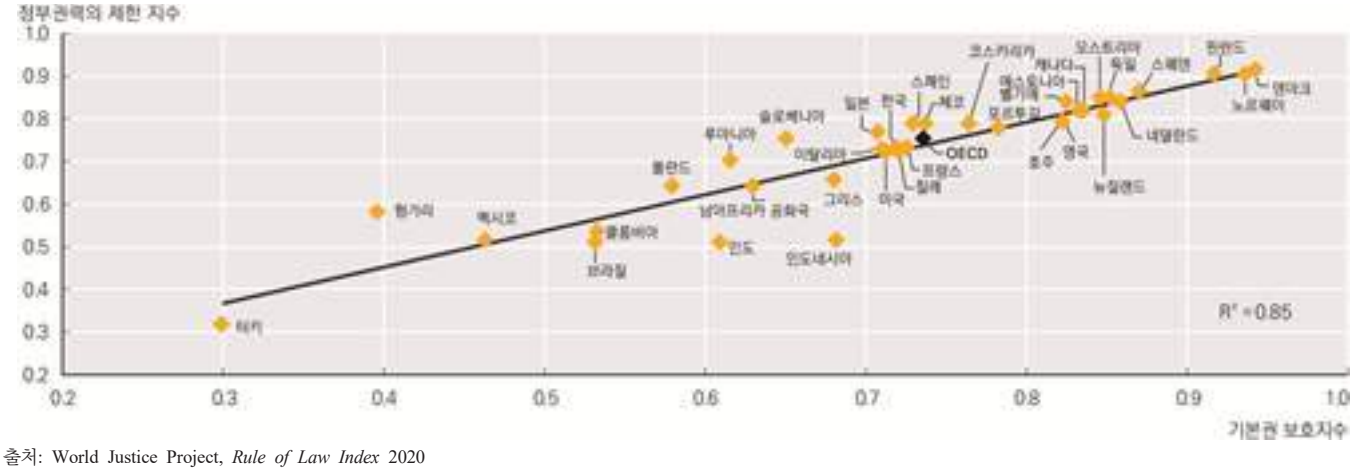
13.11. 기본권 보호 지수 (2020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313

13.12. 정부권력의 제한과 기본권 보호의 상관관계 (2020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Rule of Law Index*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332

비용효과성

효과성은 어떠한 활동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정도를 측정한다. 비용효과성, 즉 중간 또는 최종성과에 대한 투입의 비율은 소비된 자원과 달성된 성과 간의 관계를 반영하며 정부정책의 성공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보건 의료 및 교육 분야는 비용효과성을 의미있게 비교할 수 있도록 충분히 개발되어있고, 국제 표준화된 투입 및 성과 측정방법이 있다.

보건의료

보건 분야의 지출은 전체 공공지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한 새로운 의료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몇몇의 OECD 국가에서 발생하는 고령화의 진행,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의 보건지출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건분야의 비용효과성을 평가하면 더 나은 목표화된 지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 분야의 지출효과성은 가장 널리 활용되고 비교가능한 결과를 산출하는 방안을 활용하며, 구체적으로 국가의 기대수명 향상을 1인당 총 의료비(경상지출)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방식으로 측정한다. 출생 시 기대수명은 건강관리 활동 및 지출 이상의 요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러한 요인들로는 생활 및 업무환경, 물리적 환경, 영양 및 운동, 흡연, 약물 및 알코올 소비와 같은 행동요인들을 들 수 있다. 한편, 경상지출에는 공공부문의 지출과 민간부문의 지출이 모두 포함되는데, 민간부문의 지출의 경우, 국민들이 보건의료 시스템에서 탈퇴하거나(예: 멕시코), 포괄적인 공중보건계획이 없는 곳(예: 미국)에서 특히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분야의 지출과 기대수명 사이에는 정(+)의 관계가 있다.

이스라엘, 이탈리아, 한국, 스페인과 같은 일부 국가는 보건분야의 지출 수준을 고려할 때 기대수명이 예상보다 높다. 한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는 지출 금액에 비해 기대수명이 비교적 낮다. 라트비아와 리투아니아의 기대수명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에 미치는 일부 요인은 위험한 음주, 대기오염 노출 수준, 기타 심혈관 질환 위험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OECD, 2019 a). 또한 미국은 기대수명의 달성을 위해 많은 돈을 지출하는데, 미국에서 비록 민간부문에서 제공하는 보험은 비싼 경향이 있지만 과거 흡연으로 인한 높은 사망률, 높은 비만율, 약물 과다 복용 및 교통사고로 인한 높은 사망률과 같은 다른 이유가 상대적으로 낮은 성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교육

OECD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는 3년마다 읽기, 수학 및 과학분야에서의 15세 학생의 성과를 측정한다. PISA 점수를 기반으로 한 학생의 학습결과와 6세~15세 사이의 학생 1인당 교육에 대한 누적 지출을 비교하면, 교육 시스템의 비용효과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는 초등 및 중등 교육에 학생 1인당 USD 100,000 PPP를 지출한다. 지출수준은 읽기, 수학, 및 과학에서 PISA 점수와 정(+)의 상관관계가 있지만 지출수준이 낮을수록 그 관계는 더욱 강하고, 지출수준이 높다면 그 관계가 약해진다(OECD, 2019b). PISA결과에 대한 누적 지출의 영향은 여기에서 고려되는 두가지 지식 영역인 읽기보다 수학에서 더 강력하게 나타난다. 캐나다, 에스토니아, 폴란드와 같은 국가는 학생 1인당 누적 지출액을 고려할 때 비교적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에 룩셈부르크는 지출 금액에 비해 비교적 낮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13.14 , 13.15 참고). 또한 PISA 점수는 학생들이 정규 수업 이외의 시간(숙제, 추가 수업 또는 개인 학습 참여)을 학습하는 데 보내는 시간과 같은 추가적 요인의 영향을 받고, 또한 자녀가 자라는 가족 환경과 더 넓은 사회적 환경도 교육과 그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OECD, 2020).

방법론 및 개념정의

총 보건지출에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최종 소비지출(예: 경상지출)은 포함되나, 보건의료 인프라 등의 자본 투자지출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총 보건지출에는 의료 서비스, 상품, 예방 프로그램 및 관리를 위한 공공 및 민간의 지출이 모두 포함된다. 기대수명(life expectancy)은 현재의 사망률이 유지될 경우, 0세의 출생자가 향후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생존 연수를 의미한다. 기대수명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이 아닌 삶의 길이를 측정하는데 중점을 둔다.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의 읽기능력은 15세 학생이 글을 이해하고, 사용하고, 반성(reflection)하는 능력을 측정한다. 한편, 수학적 능력은 대상 학생들의 수학적 소양을 측정한다.

참고문헌

OECD (2019a),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dd50c09-en*

OECD (2019b), *PISA 2018 Results (Volume I):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f07c75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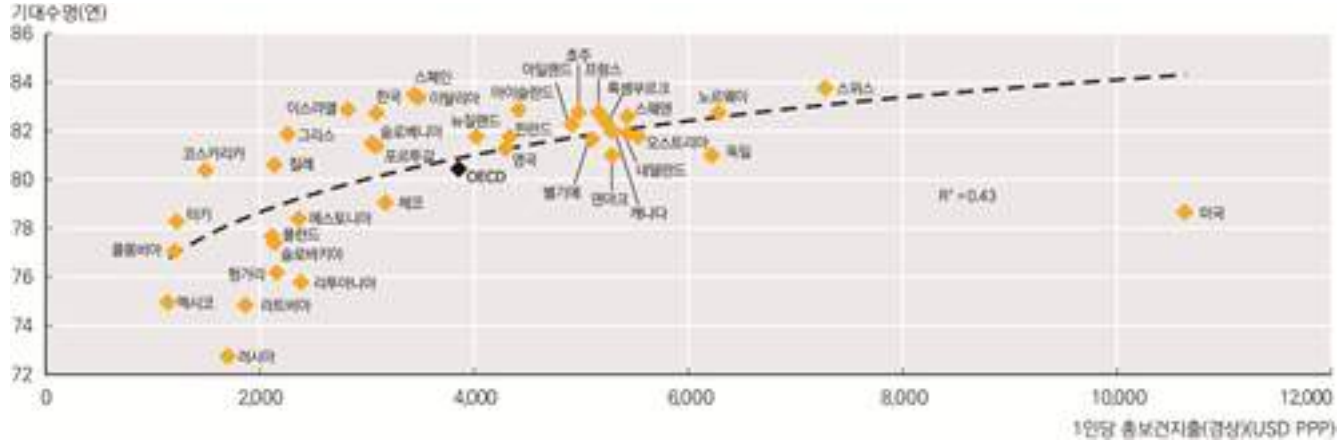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그림 설명

13.13. 경상지출 자료는 2021년 2월 15일 기준 보건통계자료(Health Statistics database)에서 추출되었다. 호주의 자료는 추정치이며,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의 자료는 잠정적 자료이다.

13.14와 13.15 캐나다의 초등교육에 대한 지출에는 취학전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다. 콜롬비아의 지출 자료는 2017년이 아닌 2018년도의 자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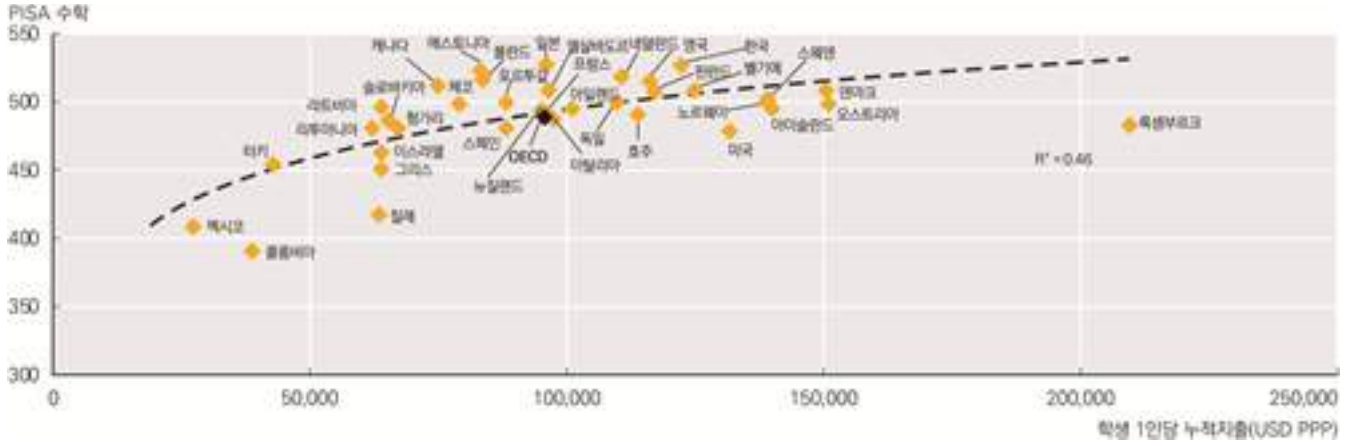
13.13. 출생 시 기대수명과 1인당 총보건지출(경상) (2018년)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3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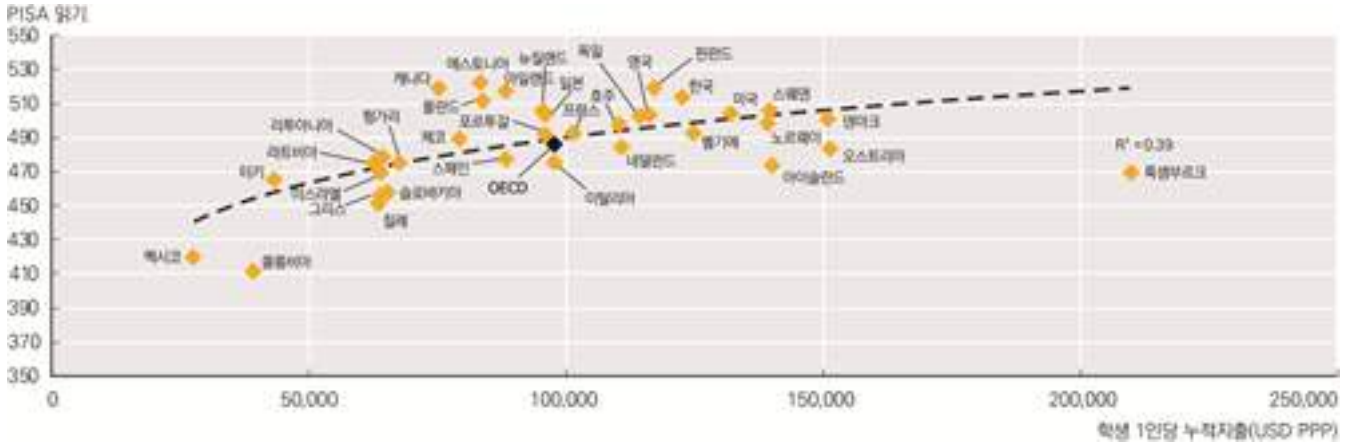
13.14. PISA 수학성적과 학생1인당 누적지출의 관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370

13.15. PISA 읽기성적과 학생1인당 누적지출의 관계



출처: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389

14. 대시민서비스

대시민서비스 성과표
서비스 만족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교육 접근성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환자의 수요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대응성
특수 수요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대응성
민사사법 서비스의 적시성
보건의료의 질
교육에서의 학생 성적와 공평성
사법 제도의 효과와 공정성
청소년 서비스
디지털 시대에 사용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설계와 제공

대시민서비스 성과표

제14장에서는 서비스 만족도의 결정 요인을 다루고자 하는 OECD 대시민 서비스 분석틀에 기초하여, OECD 국가들이 서비스의 접근성, 대응성 및 품질 측면에서 어떻게 수행하고 있는지 설명한다. 성과표는 교육, 보건 및 정의에 대한 부문별 측정의 집합을 표시하여, 국가 서비스 시스템의 주요 측면(접근성, 대응성 및 품질)을 요약한다. 성과표는 공공 서비스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되고 사회 및 개인 생활의 다른 측면을 다루는 경우에도 공공서비스의 성과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지를 보여 준다. 비록 국가 순위는 제공되지만 측정 단위가 서로 다른 지표와 해당 지표가 측정하는 기본 현상을 비교하기 위해서만 계산된다. 따라서 성과표는 국가들의 전반적인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지에 대한 통일된 그림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과표는 2017년 정부에 한 눈에 보기에서 소개되었고, 지표는 OECD 전문가들이 각 주제에 대해 선택하였다. 기준은 1)적정성(즉, 측정되는 개념을 나타내는 지표), 2) 정책적 타당성, 3) 데이터 가용성 및 적용 범위, 4) 데이터 해석 가능성(즉, 값이 높거나 낮을수록 성능이 더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의미하는 모호성 없음)로 구성된다. 선택된 지표는 각 서비스에 대한 관련 측면의 개요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측정에 대한 선택은 각 서비스마다 다르다(예: 교육을 위한 학교 등록, 보건 관리를 위한 의료 보장은 접근성을 측정).

14.1. OECD 대시민서비스 분석틀

접근성	대응성	질
지불 가능성 • *의료 보장* • *총 의료비 중 본인 부담금* • *팬데믹 이후 충족되지 않은 의료 요구 사항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 • *총 교육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개인 교육비 지출(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 *3세~4세의 유아 및 초등교육 취학* • *25세 미만의 최초 고등교육 등록률* • *People can access and afford civil justice*	**공손함 및 치료** • *의사의 자주 또는 항상 이해하기 쉬운 설명*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과 성과** • 전자 의무기록을 활용한 주치의 및 전문의 진료소 • *성인 당뇨병 입원* • *허혈성 뇌졸중으로 병원에 입원한 후 30일 동안의 사망률* • *유방암 5년 생존율* • *읽기 평균 PISA 점수* • *인지적응력 지수* • *글로벌 이슈에 대한 자기 효능감 지수* • *민사사법의 효과적인 집행* • *정부의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 민사사법의 자유* • *형사 판결 시스템의 시기적절성과 효과성* • *개인적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폭력의 의존성*
지리적 접근성 • 팬데믹 시작 이후 전화 및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받은 사람 • 집에서 숙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	**특별한 수요의 충족** • *교육, 고용, 훈련을 받지 않은(NEET) 청년(15-29)* • *학습 지원이 제공되는 학교(교직원의 도움과 교실)* • *교육 인력 및 교육 데이터의 부족 지수*	**서비스 전달의 일관성 및 성과** • *읽기 능력 2등급 미만 학생 비율* • *사회경제적 배경으로 설명되는 읽기 점수의 분산 비율*
정보 접근성 • *접근 가능한, 공정한, 효과적인 대안적 분쟁해결 메커니즘*	**적시성** • *마지막으로 진료가 필요할 때, 의사나 간호사와 당일 또는 다음날의 예약* • *전문의 진단에서 치료까지 백내장 수술의 중위 대기 시간* • *민사, 상사 비소송의 처리시간(1심)* • *민사, 상사 소송의 처리되는 시간(1심)* • *행정 사건의 처리시간(1심)*	**보호/안전** • *범죄의 효과적인 통제*

주: 성과표에 포함되는 지표는 이탤릭체(italics)로 표시

성과표 해석

각 성과표는 분석틀의 한가지 차원(접근성, 대응성, 품질)에 초점을 맞추고 서비스(교육, 건강, 정의) 전반을 비교한다. 각 지표에 대해 국가는 세 그룹으로 분류된다. 1) 평균에서 표준 편차를 초과(또는 지표에 따라 미만)하는 경우에는 녹색 그룹 2) 평균에서 표준 편차에 미만(또는 지표에 따라 초과)하는 경우에는 빨간색 그룹 3) 평균값이 1 표준 편차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주황색 그룹이다.

또한, 성과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은 순위가 매겨 진다(최고 성과를 가진 국가는 1위). 여러 국가가 지표에 대해 동일한 값을 가질 경우 동일한 순위가 할당된다.

시계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화살표는 국가의 절대적인 성과가 개선되었는지(↑), 감소했는지(↓) 또는 안정성이 유지되었는지(→)를 나타낸다.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는 한, 개선 또는 감소를 나타내는 기준은 1%p (지표가 백분율로 표시되는 경우) 또는 1%를 의미한다.

성과표의 마지막 행은 비교를 위한 기준 및 준거 연도를 모두 나타낸다.

서비스 접근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민간 또는 공공 보험 제도를 통해 보편적인 의료보험 혜택을 달성했다. 보장범위는 2014년 이후 대부분의 최고 실적을 달성한 국가들 사이에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스는 지난 경제 위기로 인구의 약 30%가 치료를 받을 기회를 잃었지만, 2016년에 의료 시스템에 대한 자금 확보와 보편적인 의료 보장을 회복하기 위해 구제 법안을 도입한 후, 2018년까지 다시 한번 보편적인 보장성을 달성했다. 리투아니아는 2014년과 2018년 사이에 의료 보험의 적용 범위가 6%p증가했다. 국민건강보험기금은 확인된 보험 상태에 따라 해당 국가의 모든

거주자에게 보장을 제공하므로 혜택을 제공받지 못하는 2%는 실직하여 의료 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이거나 거주자로 등록된 해외 거주자일 수 있다(OECD/European Observatory, 2019). 반면, 멕시코는 GDP 대비 의료비 지출이 감소함에 따라, 2014년 93%에서 2018년 88%로 의료 보장 범위가 감소했다(OECD, 2021). 건강보험 제도에서 적용되는 서비스의 범위와 환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은 OECD 국가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멕시코는 의료 보험의 보장범위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비의 상당 부분을 시민이 지불하고 있다. 그러나 가계 소비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 접근으로부터 혜택을 받고 있는지의 여부를 나타내지 않는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대부분의 시민들은 폐쇄 및 이동 제한과 원격 진료와 같은 대안 부족으로 치료를 포기해야 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OECD 평균과 비슷하지만, 다른 나라들보다 더 많은 비율의 시민들이 의사와 진료 예약을 유지할 수 있었다.

OECD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은 국가마다 다른 의무 취학 연령 아동의 교육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그러나 유아 및 고등 교육에 대한 접근은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공공자원에 부분적으로 의존한다. 예를 들어, 콜롬비아는 초등 교육에서부터 고등 교육까지 지출하는 상당 부분의 비용을 개인이 부담하고 있으므로 4세 아동의 유아 및 초등 교육과 25세 미만의 고등 교육에서 더 낮은 취학률을 초래한다. 추적 시스템이 있는 핀란드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는(즉, 학생들이 성취도에 따라 수업이나 중등 교육 과정에 해당하는 유형에 배정됨) 교육 주기의 양끝에서 공적 자금과 등록 비율 사이의 관계가 선형적이지 않다.

일부 국가에서는 민간 자금의 높은 비율은 개인 또는 민간 기관에 대한 보조금과 이전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영국은 모든 4세 아동이 공공 또는 사립 기관에서 15시간의 무료 보육을 받을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유아 교육에 100% 등록했다. 칠레는 2018년에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고등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해, 대학들은 무료 고등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정부가 제공해야 할 의무는 없다. 칠레는 OECD국가 중 25세 미만의 가장 높은 취학률을 달성했다. 칠레의 25세 미만 최초 고등교육 취학률도 2013년과 2018년 사이에 증가했다.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개인들은 자신의 권리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메커니즘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수반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데이터에 따르면 덴마크, 독일, 네덜란드의 민사사법 서비스는 시민들이 가장 저렴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ADR)는 법정 밖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전문가 설문조사는 중재자의 공정성,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의 비용과 적시성, 상사 사건의 합의 이행에 대해 묻는다. 이 데이터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일본, 한국, 노르웨이의 대안적 분쟁해결 제도(ADR)는 가장 접근하기 쉽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의 대응성

의료 제공자와 환자 간의 의사소통은 환자가 제공받는 진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신의 건강에 대한 환자의 참여를 향상 시키는 도움이 준다.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진 OECD 국가들의 대다수 환자들은 의사가 항상 또는 종종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다고 보고했지만,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는 모든 환자들이 의사와 함께 항상 또는 종종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한다고 보고했다.

장기간의 대기시간은 환자의 증상을 악화시키고 건강관리에 대한 만족도를 감소시킨다. 이용 가능한 정보를 가진 대부분의 국가에서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당일이나 다음날에 마지막 치료 예약을 할 수 없었던 시민의 비율이 증가했다. 독일은 이 기간 동안 개선된 유일한 나라였고, 또한 가장 좋은 성과를 거둔 나라였다. 스웨덴과 같은 일부 국가는 일반의와 다음 날 예약하는 것보다 신속한 선택 수술(예: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는 데 더 뛰어나다. 호주와 같은 다른 국가에서는 반대로 나타났다.

반응적 교육 시스템은 학생들이 노동 시장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할 때까지, 지속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OECD 국가에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연령은 콜롬비아 16세부터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19세까지이다. 결과적으로, 의무교육이 종료되는 연령이 높은 국가들은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및 스웨덴처럼 취업,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않는(NEET) 15~29세의 비율이 가장 낮지만,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모든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것이다. 학교 교장들은 교육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물질적 자원(인프라에서 교과서에 이르기까지)을 공급하고, 스웨덴의 경우, 필요하다면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준다고 보고한다. 대조적으로, 칠레의 학교 시스템은 학생들의 요구에 별로 반응하지 않으며, 고등 교육에서 가장 높은 취학률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NEET 비율을 보인다.

사법적 사건 해결이 지연되면 원고들이 소송을 취하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향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적 방법을 모색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사건 해결에 필요한 시간은 사건 배정 및 해결을 위한 절차, 사건의 복잡성, 민사사법부 직원 수, 접수 사건 수, 행정 업무 절감을 위한 기술사용 등의 요소에 따라 달라진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국가들 중에서 헝가리, 리투아니아 및 네덜란드는 민사 및 상업(소송 및 비소송) 사건과 행정 사건의 처리 시간(1심)이 가장 적다.

서비스 품질

공공 서비스의 제공은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들의 삶의 질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 예를 들어, 보건 시스템은 시민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사법 시스템은 법치와 인권 존중을 보장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느끼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시스템은 학생들에게 평생 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도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보건 시스템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급성 또는 만성 건강 문제(예: 치료)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은 치료법이 잘 확립된 만성

질환으로, 불필요한 입원을 방지하기 위해 대부분의 1차 진료 수준에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 허혈성 뇌졸중이나 유방암과 같은 다른 질환들은 일단 발견되면 치료될 수 있다. 일본의 의료 시스템은 뇌졸중과 유방암 치료에 효과적이며, 뇌졸중 입원 후 30일 간의 사망률은 2007년에서 2017년 사이에 개선되었다. 리투아니아와 폴란드와 같은 다른 나라들은 상황이 개선되고 있지만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는 덜 효과적이다. 한국과 같은 일부 국가들은 이러한 지표들 중 일부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더 나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최고의 성과를 내는 교육 시스템은 질과 형평성을 결합한 것이다. 캐나다와 에스토니아는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읽기에서 전반적인 성적이 가장 우수할 뿐만 아니라, 2 등급 이하의 학생 비율이 가장 낮고 학생의 사회 경제적 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점수의 편차가 가장 적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슬로바키아는 이 모든 지표에서 최악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사법제도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에게 개인이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에 얼마나 의존하는지, 정부가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법원의 결정이 집행될 가능성이 높은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전 세계 법 집행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사법 제도는 효과적이고 공정하며, 사람들은 그들의 분쟁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한다.

참고문헌

Baredes, B. (forthcoming), “Serving Citizens: framework and data to measure service delivery”,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OECD Publishing, Paris.

OECD (2021), “Health spending” (indicator), *https://doi.org/10.1787/8643de7e-en* (accessed on 5 March 2021).

OECD/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2019), *Lithuania: Country Health Profile 2019*, State of Health in the EU, OECD Publishing, Paris/European Observatory on Health Systems and Policies, Brussels, *https://doi.org/10.1787/35913deb-en*.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 OECD 2021

성과표 1. 서비스 접근성

성과가 평균의 1 표준편차이상(이하)에 포함
성과가 평균의 1 표준편차에 포함
성과가 평균의 1 표준편차이상(이하)에 포함

국가는 알페벳 순서로 나열된다. 셀의 숫자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중 각 국가의 위치를 나타낸다. 화살표는 절대적인 성과가 개선(↑), 감소(↓) 또는 안정적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의료보건					교육						사법			
	의료보장 범위		전체의료 지출의 비율에서 본인부담금의 지출		covid-19동안 의료 요구 미충족	민간교육 지출(초등교육부터 고등교육)		4세 취학률(유아 및 초등교육)		25세 이하 첫 고등교육 취학률		사법서비스의 접근성과 감당		접근 가능, 공정, 효과적인 대체 분장 해결 메커니즘	
호주	1	→	19	↑	n.a.	34	↓	24	↑	n.a.		22	↑	11	→
오스트리아	2	→	20	→	4	7	↓	15	↑	15	→	9	↑	23	→
벨기에	3	→	23	→	16	8	→	4	→	7	↑	7	↑	10	→
캐나다	1	→	14	→	n.a.	26	→	n.a.		n.a.		23	↑	20	→
칠레	9	→	34	↑	n.a.	35	↑	27	↑	1	↑	16	↓	21	→
콜롬비아	6	↓	15	↑	n.a.	31	↑	30	↑	26	↑	24	↑	25	→
체코	1	→	12	→	8	12	↑	23	↑	13	↓	18	→	9	→
덴마크	1	→	10	→	3	2	↑	2	↑	12	↓	3	↑	5	→
에스토니아	8	→	28	↓	7	9	→	20	→	22	↑	8	↑	2	→
핀란드	1	→	21	→	2	1	→	28	↑	20	↑	13	↑	17	→
프랑스	2	→	1	→	9	16	→	1	→	n.a.		17	↑	6	→
독일	2	→	7	→	1	17	→	11	↓	17	→	2	↑	8	→
그리스	1		35	→	6	n.a.		n.a.		n.a.		19	↑	22	→
헝가리	10	↓	29	↑	21	19	↑	10	↑	n.a.		26	↑	28	→
아이슬란드	1	→	16	↑	n.a.	6	→	7	→	21	↓	n.a.		n.a.	
아일랜드	1	→	6	↑	10	20	↓	1	↑	n.a.		n.a.		n.a.	
이스라엘	1	→	25	↑	n.a.	25	↑	3	↓	n.a.		n.a.		n.a.	
이탈리아	1	→	27	↓	15	14	↓	13	↓	16	↑	21	↑	26	→
일본	1	→	8	→	n.a.	30	↓	9	→	n.a.		10	↑	3	→
한국	1	→	33	↑	n.a.	29	↑	16		n.a.		15	↓	4	→
라트비아	1	↑	36	→	18	13	↓	17	↑	n.a.		n.a.		n.a.	
리투아니아	5	↑	32	→	20	15	→	26		6	↑	n.a.		n.a.	
룩셈부르크	n.a.		2	→	12	4		8	↓	27	↓	n.a.		n.a.	
멕시코	13	↓	37	→	n.a.	22	↑	22	↑	18	↑	29	↓	29	→
네덜란드	2	→	3	→	11	23	→	12	↓	11	↑	1	→	7	→
뉴질랜드	1	→	9	→	n.a.	28	→	18	↓	14	↓	6	→	14	→
노르웨이	1	→	13	→	n.a.	3	↓	6	→	8	↑	12	↑	1	→
폴란드	11	↑	24	↑	17	11	→	25	↑	3	↓	20	→	18	→
포르투갈	1	→	31	↓	19	21	↑	19	↑	9	→	14	↑	12	
슬로바키아	7	→	22	→	5	18	↑	29	↑	24	↓	n.a.		n.a.	
슬로베니아	1	→	5	↑	14	10	→	21	↑	4	↓	11	↑	19	→
스페인	1	→	26	→	15	24	↓	5	→	5	↑	5	↑	13	→
스웨덴	1	→	11	↑	13	5	→	14	→	23	↑	4	↑	15	→
스위스	1	→	30	↓	n.a.	n.a.		32	↑	25	↑	n.a.		n.a.	
터키	4	→	18	→	n.a.	27	↓	33	↑	2	↑	25	↑	27	→
영국	1	→	17	↓	n.a.	33	↓	1	↑	10	↑	27	↓	16	→
미국	12	↑	4	→	n.a.	32	→	31	↑	19	↓	28	↑	24	→
연도	2018	2014	2018	2014	2020	2017	2013	2017	2013	2018	2013	2020	2016	2020	2016

주 : 국가는 알파벳순으로 나열된다. 셀의 번호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중 각 국가의 위치를 나타냅니다. 국가의 의료 보장 범위는 녹색(95-100% 의료 보장), 주황색(90-95% 보장), 빨간색(90% 미만 보장)이다. 일본과 슬로바키아의 의료 보장 범위에 대한 데이터는 2018년 대신 2017년 데이터를 사용했다. 그리스의 데이터는 2014년이 아닌 2015년 데이터다. 코로나19 기간 중 미충족 의료 요구는 팬데믹의 시작 이후, 건강 관리 예약 또는 치료를 앞섰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에서 교육에 대한 민간 지출의 높은 비율은 대출과 장학금을 받는 학생의 큰 비율과 관련이 있다. 그리스 교육에 대한 민간 지출 데이터는 2015년 데이터다. 사법 서비스 및 대체 분쟁 해결 메커니즘 지표의 접근성과 감당의 경우, 개선(감소)은 지수의 0.1 포인트 증가(감소)를 포함한다. 기타 지표에 대한 세부 정보는 해당 부문에서 제공된다. 전체 의료 지출의 비율에서 본인 부담금(OOP) 지출, 코로나19 기간 중 의료 요구 미충족과 교육에 대한 민간지출을 제외하고 모든 국가는 오름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출처: OECD (2020),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Eurofound (2020), *Living, Working and COVID-19*;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World Justice Project (2020) *Rule of Law Index 2020*.

대시민서비스 성과표

성과표 2. 서비스의 대응성

성과가 평균의 1 표준편차이상(이하)에 포함
성과가 평균의 1 표준편차에 포함
성과가 평균의 1 표준편차이상(이하)에 포함

국가는 알페벳 순서로 나열된다. 셀의 숫자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중 각 국가의 위치를 나타낸다. 화살표는 절대적인 성과가 개선(↑), 감소(↓) 또는 안정적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의료보건					교육						사법					
	의사는 자주 또는 항상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	마지막 치료가 필요할 때 의사와 당일 또는 다음날 예약		백내장 수술 대기 시간 (중앙값)		니트 족 (15~29세)		교육자료 부족지수		교직원들이 학생들의 숙제를 도와줌		민사 및 상사 사건 처분 시간(소송)		민사 및 상사 사건 처분 시간(비소송)		행정사건 처분시간	
호주	1	3	↓	11	↑	14	↑	3	→	3	↑	n.a.		n.a.		n.a.	
오스트리아	n.a.	n.a.		n.a.		8	↑	16	↓	35	↑	5	↓	7	↑	19	
벨기에	n.a.	n.a.		n.a.		16	↑	20	↑	19	↑	n.a.		n.a.		14	↑
캐나다	4	9	↓	7	↓	21	↑	2	→	5	↑	n.a.		n.a.		n.a.	
칠레	n.a.	n.a.		2	↓	30	↑	13	↓	31	↑	n.a.		n.a.		n.a.	
콜롬비아	n.a.	n.a.		12		34	↓	37	→	36	→	n.a.		n.a.		n.a.	
체코	n.a.	n.a.		n.a.		18	↑	24	↓	22	↓	7	↑	12	↑	17	→
덴마크	n.a.	n.a.		n.a.		10	→	8	↑	8	↓	12	↓	9	↓	n.a.	
에스토니아	n.a.	n.a.		3	↑	17	↑	22	↓	21	↑	6	↓	10	↓	4	↑
핀란드	n.a.	n.a.		15	↓	11	↑	23	→	11	↑	16	↑	8	↑	10	↑
프랑스	2	5	↓	12	↑	25	↑	10	↑	14	↑	21	↓	16	↓	12	↑
독일	5	1	↑	n.a.		7	↑	27	↓	25	↑	13	↓	n.a.		18	↓
그리스	n.a.	n.a.		n.a.		31	↓	35	↓	28	↓	23	↓	n.a.		21	
헝가리	n.a.	n.a.		n.a.		26	↑	32	↑	16	↑	8	↓	2	↑	2	↑
아이슬란드	n.a.	n.a.		2	↑	6	↑	11	↓	10	↑	n.a.		n.a.		n.a.	
아일랜드	n.a.	n.a.		n.a.		23	↑	25	↑	23	↑	n.a.		n.a.		n.a.	
이스라엘	n.a.	n.a.		n.a.		24	↑	28	↑	15	↑	19				1	
이탈리아	n.a.	n.a.		9		33	↓	29	↑	32	↑	22	→	18	↓	22	↑
일본	n.a.	n.a.		1	↓	n.a.		36	→	n.a.		n.a.		n.a.		n.a.	
한국	n.a.	n.a.		n.a.		n.a.		30	→	34	↓	n.a.		n.a.		n.a.	
라트비아	n.a.	n.a.		n.a.		13	↑	15	↓	13	↑	15	↑	3	↑	11	↓
리투아니아	n.a.	n.a.		n.a.		20	→	21	↑	7	↑	1	↑	1	↓	5	↑
룩셈부르크	n.a.	n.a.		n.a.		3	↑	5	↑	9	↓	2	↑	n.a.		n.a.	
멕시코	n.a.	n.a.		n.a.		32	↑	33	→	30	↑	n.a.		n.a.		n.a.	
네덜란드	4	2	↓	5		2	↑	9	↑	18	↑	3	↑	5		8	↓
뉴질랜드	1	4	↓	10	↓	19	↑	12	↑	6	↑	n.a.		n.a.		n.a.	
노르웨이	5	8	↓	14	↓	5	↑	18	→	24	↑	11	→	17	↓		
폴란드	n.a.	n.a.		16	↑	22	↑	14	↓	12	↑	16	↓	4	↓	3	↑
포르투갈	n.a.	n.a.		13	↓	12	↑	34	↓	17	↑	14		n.a.		23	
슬로바키아	n.a.	n.a.		n.a.		29	→	31	↓	27	↑	9	↑	13	↑	15	↓
슬로베니아	n.a.	n.a.		n.a.		9	→	17	↓	26	↑	17	↓	11	↑	16	↓
스페인	n.a.	n.a.		8	↑	28	↑	26	→	29	↑	20	↓	15	↓	13	↑
스웨덴	7	10	↓	4		4	↑	6	↑	1	↑	10	↓	14	↓	6	↓
스위스	3	5	↓	n.a.		1	↑	7	↓	20	↑	4	↑			9	↑
터키	n.a.	n.a.		n.a.		35	↑	1	↑	33	→	18	↓	6		7	↑
영국	6	6	↓	6	↓	15	↑	19	→	2	→	n.a.		n.a.		20	↓
미국	3	7	↓	n.a.		27	↑	4	↑	4	→	n.a.		n.a.		n.a.	
연도	2017	2020	2016	2019	2014	2020	2009	2018	2015	2018	2015	2018	2014	2018	2014	2018	2014

주: 교육 데이터 부족 지수는 학교장의 인식에 기초한다. 교육 데이터의 부족 지수의 개선은 국가 순위가 2단계 상승 또는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타 지표에 대한 세부 정보는 해당 부문에서 제공된다. 국가의 순위는 백내장 수술 대기 시간(중앙값), 니트족(15~29세), 교육 데이터 부족 지수, 민사 및 상사 사건 처분 시간(소송 및 비소송), 행정사건 처리시간 등을 제외하고 오름차순으로 순위기 매겨진다.

출처: *Commonwealth Fund Health Policy Survey*(2016년, 2020년);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Education at a Glance* (database); OECD (2015년, 2018년) *PISA* (database); CEPEJ (2020), *European Comm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database).

성과표 3. 서비스의 질

성과가 평균의 1 표준편차이상(이하)에 포함
성과가 평균의 1 표준편차에 포함
성과가 평균의 1 표준편차이상(이하)에 포함

국가는 알페벳 순서로 나열된다. 셀의 숫자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국가 중 각 국가의 위치를 나타낸다. 화살표는 절대적인 성과가 개선(↑), 감소(↓) 또는 안정적 유지(→)되었는지 여부를 나타낸다.

	의료보건					교육					사법					
	당뇨병 입원		뇌졸중 입원 후 30일 사망률		유방암 5년 생존율(도든 병기)	PISA 읽기 점수		읽기 능력 수준 2등급 이하 학생의 비율		사회경제적 배경이 설명하는 읽기 능력의 비율 편차	민사 사법 서비스의 효과적인 집행		정부의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 민사 사법 서비스의 자유		개인적인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 정도	
호주	21	↓	13	↑	2	12	→	15	→	12	12	→	3	→	8	→
오스트리아	25	↑	15	↑	16	22	→	23	→	23	7	→	6	→	5	→
벨기에	20	↑	22	↑	10	17	→	20	→	32	8	→	6	→	10	→
캐나다	13	→	19	↑	5	2	→	4	↓	3	10	→	4	→	6	→
칠레	18	↑	23	↑	n.a.	34	→	34	→	21	20	→	15	→	16	→
콜롬비아	6	↑	14	↓	n.a.	36	↓	36	↓	27	26	→	18	→	17	→
체코	26	↑	28	↑	20	20	→	18	→	30	18	→	12	→	8	→
덴마크	14	↑	7	↑	12	13	→	7	→	11	6	→	2	→	2	→
에스토니아	16	↑	25		21	1	→	1	→	1	14	→	8	→	7	→
핀란드	17	↑	21	↑	6	3	→	3	↓	9	3	→	3	→	4	→
프랑스	23	↑	17	↑	n.a.	18	→	19	→	34	11	→	10	→	12	→
독일	28	↑	12	↑	13	15	→	17	↓	31	4	→	3	→	8	→
그리스	n.a.		n.a.		n.a.	33	→	31	→	16	25	→	16	→	13	→
헝가리	n.a.		n.a.		n.a.	26	→	27	→	36	28	→	21	↓	5	→
아이슬란드	1	↓	4	↑	n.a.	28	→	29	↓	2	n.a.		n.a.		n.a.	
아일랜드	11	↑	20	↑	19	4	→	2	→	15	n.a.		n.a.		n.a.	
이스라엘	7	↑	11	↑	7	29	→	32	↓	28	n.a.		n.a.		n.a.	
이탈리아	2	↑	16	↑	13	25	→	22	→	8	29	→	14	→	14	→
일본	n.a.		1	↑	3	11	↓	8	↓	6	13	↓	11	→	4	→
한국	33	↑	2	↑	n.a.	5	→	6	→	7	9	→	13	→	6	→
라트비아	19	↑	34	↓	n.a.	24	→	21	↓	4	n.a.		n.a.		n.a.	
리투아니아	30	↑	33		24	27	→	26	→	24	n.a.		n.a.		n.a.	
룩셈부르크	24	↑	24	↑	n.a.	30	↓	30	↓	35	n.a.		n.a.		n.a.	
멕시코	34	↑	n.a.		n.a.	35	→	35	→	26	27	→	20	→	18	↓
네덜란드	5	↑	8	↑	n.a.	21	↓	25	↓	13	2	→	5	→	7	→
뉴질랜드	22	↑	18	↑	8	8	→	12	→	22	16	→	7	→	8	→
노르웨이	10	↑	3	↑	9	14	↓	14	↓	5	5	→	1	→	1	→
폴란드	29	↑	32	↑	22	6	→	5	→	18	23	→	19	↓	3	→
포르투갈	4	↑	30	↑	8	19	→	16	→	25	24	→	10	→	6	→
슬로바키아	31	↑	29	↑	23	32	→	33	→	33	n.a.		n.a.		n.a.	
슬로베니아	15	↑	31	↑↑	17	16	↓	10	↓	20	19	→	17	→	1	→
스페인	3	↑	27	↑	15	n.a.		n.a.		n.a.	22	→	15	→	9	→
스웨덴	12	↑	10	↑	n.a.	7	→	11	→	14	1	→	3	→	8	→
스위스	8	↓	9	↑	11	23	→	24	→	29	n.a.		n.a.		n.a.	
터키	32		5		18	31	↑	28	↑	17	21	→	22	→	15	→
영국	9	↓	26	↑	14	10	→	9	→	10	15	→	9	→	8	→
미국	27	↑	6		1	9	→	13	→	19	17	→	14	→	11	→
연도	2017	2012	2017	2007	2010–2014	2018	2015	2018	2015	2018	2020	2016	2020	2016	2020	2016

참고: 체코와 아이슬란드의 유방암 5년 생존율의 데이터는 2010-14년 대신 2004-09년에 대한 것입니다. 이탈리아, 독일, 일본, 스페인, 스위스, 터키 및 미국의 데이터는 전국 인구의 100% 미만을 다루고 있다. 읽기 능력 2등급은 학생들이 중간 길이의 문장에서 주요 아이디어를 식별하는 것과 명시적 또는 복잡한 기준에 따라 정보를 찾는 것, 그리고 명시적으로 지시를 받았을 때 텍스트의 목적과 형식을 성찰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한다. PISA 읽기 평균 점수는 2등급 이하 학생의 읽기 능력 비율과 읽기 수행도의 변화율을 사회경제적 수준으로 설명하며, 2018~2015년 평균 점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국가만 개선/감소로 표기하였다. 민사 사법 서비스의 효과적인 시행, 부적절한 정부 영향으로부터 민사 사법 서비스의 자유, 사람들이 개인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해 폭력에 의존하지 않는 정도의 지표는 개선(감소)가 지수에서 0.1포인트 증가(감소)함을 의미한다. 기타 지표에 대한 세부 정보는 해당 부문에서 제공된다. 당뇨병 입원, 뇌졸중 입원 후 30일 사망률, 읽기 능력 2 등급 미만 학생의 비율,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설명되는 읽기 능력의 백분율 변동을 제외하고 내림차순으로 순위가 매겨진다.

출처: *OECD Health Statistics* (database); OECD (2018) *PISA* (database); World Justice Project (2020) *Rule of Law Index* 2020.

서비스 만족도

의료, 교육 및 사법과 같은 공공 서비스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큰 영향을 받았다. 학교, 법원, 병원의 운영 방식(즉, 사람들이 공공 서비스를 직접 경험하는 최전선의 기관들)은 폐쇄로 인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급격하게 변화했다. 교사, 의사, 판사는 갑작스럽게 원격 근무로 전환하였으며,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은 보건 위기의 규모로 인해 압박을 받았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의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지만, 서비스와 질문을 다룰 수도 있다. 갤럽 세계 여론 조사는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수집한다. 여론 조사의 응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적, 문화적 요인들이 있지만, 응답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리고 OECD 국가 전반에 걸쳐, 시민들의 인식을 비교할 수 있게 해준다.

2020년 OECD 국가들에서 의료 만족도는 평균 71%로 2010년 수준과 비슷했다. 노르웨이(93%), 벨기에 및 네덜란드(92%)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폴란드(26%), 그리스(38%), 칠레(39%)가 가장 낮았다. 이 기간 동안 의료 만족도가 가장 높은 나라는 핀란드(19%p)였고 에스토니아(17%p)와 이스라엘(12%p)의 증가폭이 컸다. 이에 비해 폴란드는 의료 만족도가 가장 크게(22%p) 떨어졌다(그림 14.1 참고).

2020년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의 시민 68%가 교육 시스템에 만족하였으며, 2010년 이후 1%p 증가했다. 노르웨이(92%), 핀란드(87%), 슬로베니아(86%)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터키(27%), 그리스(36%), 칠레(43%)가 가장 낮았다. 에스토니아(16%p)는 팬더믹 초기에 온라인 학습 전환을 촉진한 디지털 교육의 활용을 늘리려는 노력으로 인해, 2010년 이후 교육 만족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다(OECD, 2020a). 슬로베니아(15%p)와 노르웨이(14%p)도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반면, 터키는 2010년 보다 35%p 감소하여, 감소폭이 가장 컸다(그림 14.2). 터키의 모든 학생들이 팬데믹 기간 동안 원격 학습에 동일한 기회를 제공 받지 못했다. 평균적으로, 평상시 학교에는 학생 4명당 한 대의 컴퓨터만 구비되었고, 사회 경제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많은 학생들은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할 수 없었다.

2020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는 OECD 국가 평균 57%로 2010년 이후 6%p 증가했다. 리투아니아(35%p)는 2010년부터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가장 크게 증가했으며, 민사 및 상사 소송에 대한 처리 시간이 가장 짧다("민사 사법 제도의 적시성" 참조).

포르투갈(23%p)과 체코(21%p)도 사법부에 대한 신뢰도가 크게 증가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가장 크게 감소한 국가는 터키(22%p)였으며, 칠레(19%p)가 그 뒤를 이었다(그림 14.3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갤럽 세계 여론 조사에 의해 수집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시민 1,000명을 대표 표본으로 한다. 2020년에는 7월부터 데이터가 수집되었으며, 설문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gallup.com/home.aspx)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료/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당신이 살고 있는 도시 또는 지역의 의료/교육 시스템과 서비스의 질, 이용가능성에 만족 또는 불만족하는가?"라는 질문에 만족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사법 제도에 대한 신뢰도는 "당신이 살고 있는 국가의 사법 시스템과 법원에 신뢰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비율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OECD/European Union (2020), *Health at a Glance: Europe 2020: State of Health in the EU Cyc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2129230-en*.

OECD (2020a), "Education Policy Outlook in Estonia", *OECD Education Policy Perspectives*, No. 1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d472195-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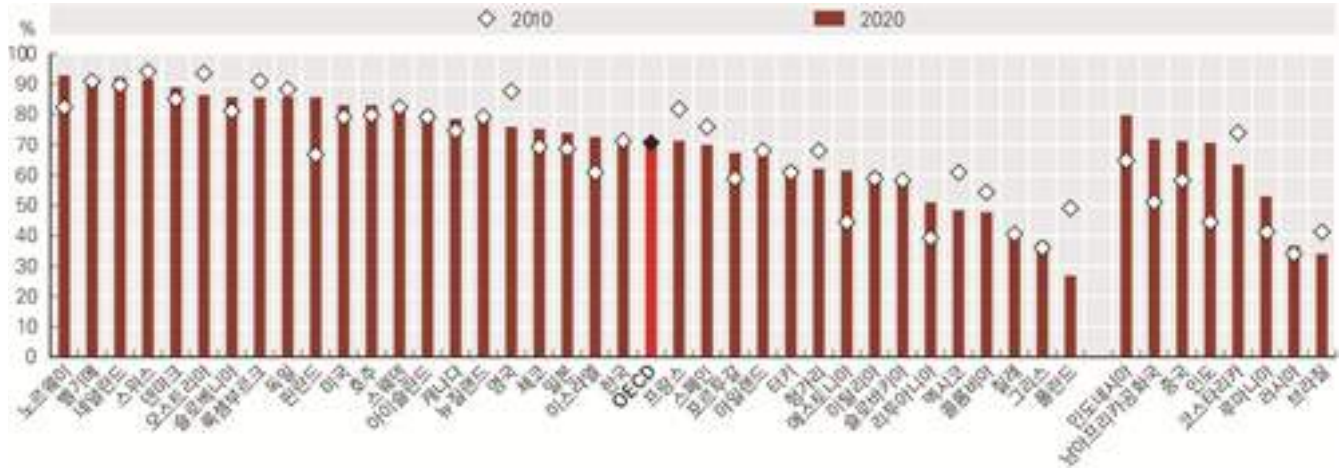
OECD (2020b), PISA 2018 *Results (Volume V): Effective Policies, Successful Schools,*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a768d40-en*.

그림 설명

에스토니아에 대한 데이터는 2010년 대신 2011년 데이터이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의 데이터는 2010년 대신 2012년 데이터입니다. 체코에 대한 데이터는 2020년이 아닌 2018년 데이터이다. 코스타리카, 헝가리, 인도, 인도네시아, 이스라엘, 한국,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및 루마니아의 데이터는 2020년이 아니라 2019년 데이터이다.

G.40. (경찰에 대한 시민 신뢰, 2010 및 2020)는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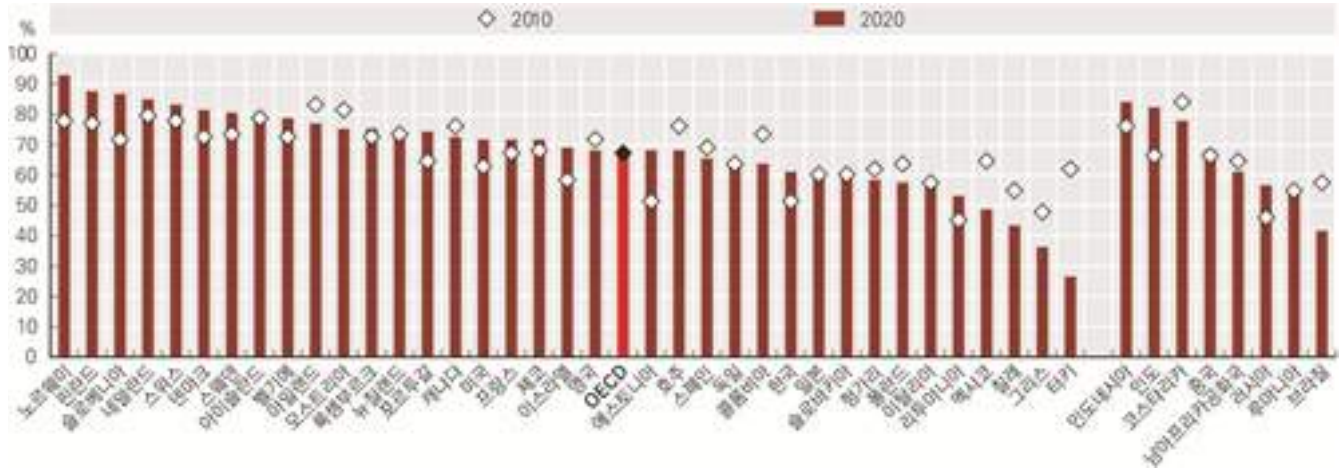
14.1. 보건의료 시스템에 대한 시민 만족도 (2010년, 2020년)



출처: *Gallup World Poll 2020*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4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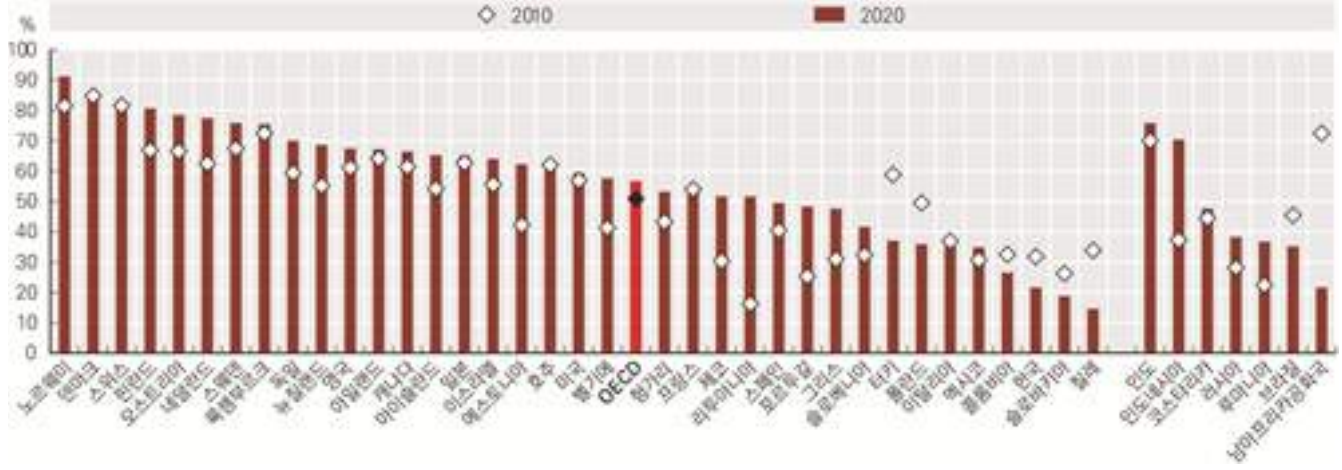
14.2. 교육 제도와 학교에 대한 시민 만족도 (2010년, 2020년)



출처: *Gallup World Poll 2020*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427

14.3. 사법제도와 법원에 대한 시민의 신뢰 (2010년, 2020년)



출처: *Gallup World Poll 2020*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446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의사와의 상담과 병원 진료를 포함하는 핵심 의료 서비스에 대해 보편적(또는 거의 보편적)인 보장 범위를 달성했지만, 경제성과 접근성의 문제는 시민들이 의료 서비스 사용을 방해할 수 있다.

높은 치료비용은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방해하거나 의료 서비스를 사용할 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본인 부담금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국가의 의료 시스템 비중은 의료 시스템이 제공하는 재정적 보호의 정도에 대한 의미를 제공한다. 2018년에는 평균적으로 전체 의료 지출의 20%가 본인 부담금으로 이루어졌고, 이 비율은 2014년 이후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본인 부담금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적은 나라는 프랑스(9%), 룩셈부르크(10%), 네덜란드와 미국(11%)인 반면, 멕시코(41%), 라트비아(39%), 그리스(36%)는 비중이 가장 높았다. 폴란드는 OECD 평균을 약간 웃돌지만, 전체 의료비 지출에서 차지하는 본인 부담금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했다(-3%p). 이와는 대조적으로, 이 비율은 대부분의 다른 OECD 국가들에서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그림 14.4).

2020년에는 충족되지 않는 의료 요구의 수준이 증가했다. 예를 들어, 국제 의료정책 설문 조사(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에 따르면, 2016년에 평균적으로 OECD 11개 국가에서 14.5%의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재정적인 문제를 경험했다(예: 의사 방문, 검사, 치료, 후속 조치 또는 약처방 거르기). 2020년에는 이 비율이 15.8%로 증가했다(Doty 등, 2020). 2020년 여름에 실시된 유럽 근로환경조사 및 코로나 19 조사(Eurofound Living, Working and COVID-19)에 따르면, OECD EU 국가에서 응답자의 평균 22%가 코로나 19 팬데믹의 첫번째 유행 기간 동안 일부 의료 요구를 충족하지 못했다. 헝가리, 리투아니아(각 37%), 포르투갈(35%)의 충족되지 않은 의료 요구의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독일, 핀란드 및 덴마크에 비해 약 3배에 달하는 비율이다(그림 14.5). 이용한 가능한 정보가 있는 국가의 경우, 앞서 언급한 치료의 주요 이유로 전염병으로 인한 진료 취소(리투아니아 91%, 헝가리 88%)로 나타났다.

2020년 봄 코로나 19 팬데믹의 1차 대유행 기간 동안, 온라인 및 전화 상담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평균적으로 OECD EU 국가의 응답자의 47%는 온라인 또는 전화로 의료 처방(예: 의약품)을 받았고 32%는 이러한 방법으로 의료 상담을 받았다. 온라인이나 전화로 처방을 받는 응답자의 비율은 헝가리(66%), 이탈리아(60%), 슬로바키아(57%)가 가장 높았고, 프랑스(27%), 그리스(28%), 독일(31%)은 가장 적었다. 스페인(48%), 슬로베니아(44%), 리투아니아(41%)는 온라인 또는 전화 상담을 받은 적이 있다고 보고한 사람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독일(17%), 프랑스(22%), 이탈리아(23%)는 가장 적었다(그림 14.6).

방법론 및 개념정의

본인 부담금은 의료 서비스나 치료가 공공 또는 민간 의료 보험 제도의 재정 지원에 포함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포함된 경우, 환자가 소득에서 직접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또한 일부 국가의 의료 사업자에 비공식적으로 지급한 추정치를 포함한다.

유럽 근로환경 및 코로나 19 설문 조사(Eurofound Living, Working and COVID-19)로부터 충족되지 않은 치료 요구와 온라인 및 전화의료 서비스의 접근성 데이터를 획득했다. 이 설문조사는 2020년 4월(1차)과 2020년 7월(2차)에 온라인으로 실시되었다. 이 조사는 27개 EU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확률(눈덩이)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87,477명의 응답을 수집한 다음, 모집단의 특성(나이, 성별, 교육 및 자체 정의된 도시화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했다.

참고문헌

Doty, M. et al. (2020),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affordability and access to primary care in eleven high-income countries", Commonwealth Fund website, *www.commonwealthfund.org/publications/surveys/2020/dec/2020-international-survey-income-related-inequalities.*

Eurofound (2020), *Living, Working and COVID-19*, COVID-19 Series, Publications Office of the European Union, Luxembourg, *www.eurofound.europa.eu/publications/report/2020/living-working-and-covid-19.*

OECD/European Union (2020), *Health at a Glance: Europe 2020: State of Health in the EU Cycl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2129230-en.*

Oliveira Hashiguchi, T. (2020), "Bringing health care to the patient: An overview of the use of telemedicine in OECD countries",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116,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8e56ede7-en.*

그림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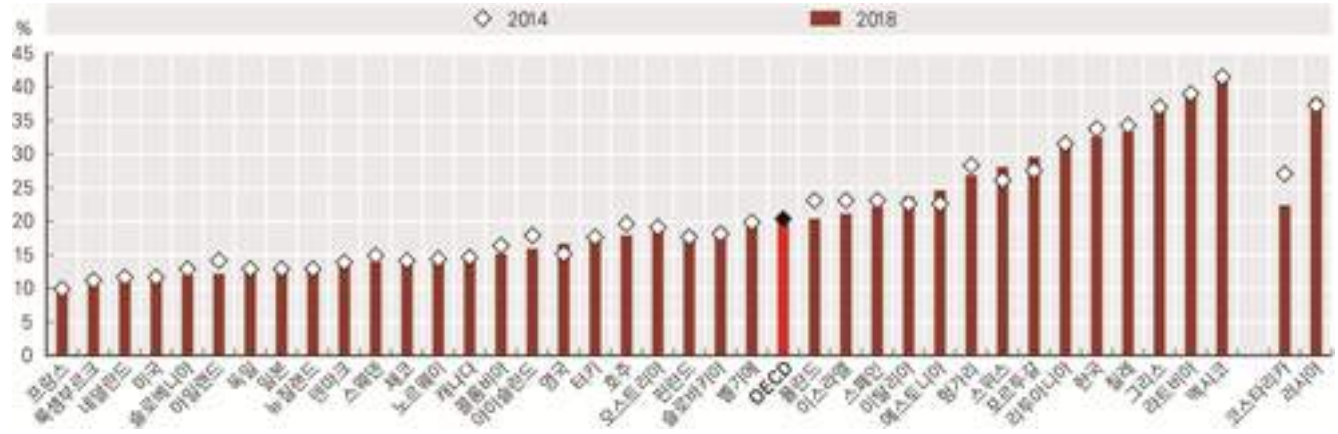
14.4. 호주의 데이터는 2018년 대신 2017년 데이터이다. 국가는 자발적 및 본인 부담금 지급의 비율은 가장 낮은 비율에서 가장 높은 비율까지 오름차순으로 나열되어 있다.

14.5 & 14.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만 해당된다.

14.5. 미충족 의료 서비스의 필요성에 대한 데이터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당신은 건강검진이나 치료가 필요했는데, 이를 받지 못했습니까?"에 대해 "예"라고 대답한 비율을 보여준다.

14.6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에 대해 "예"고 대답한 비율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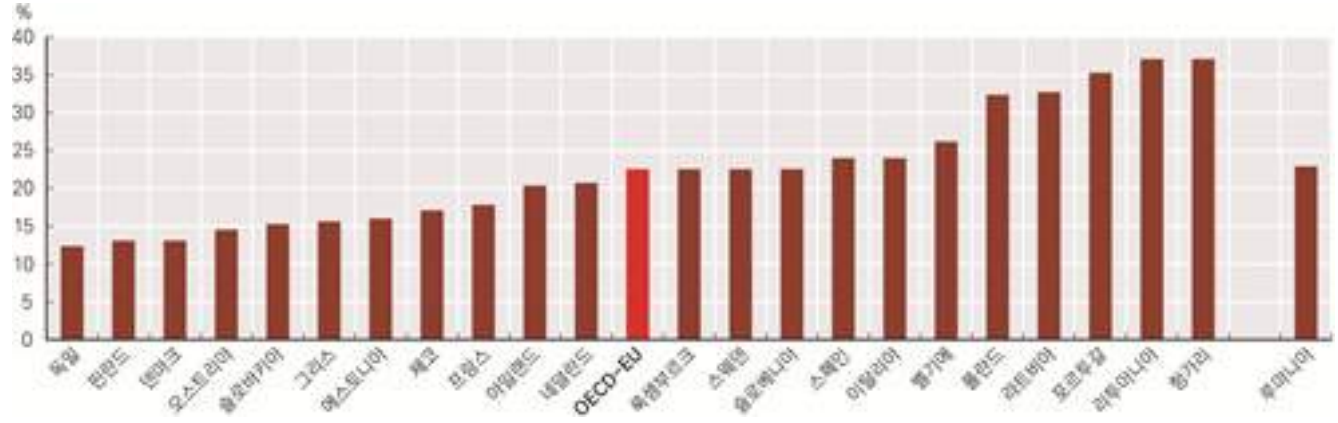
14.4. 총 의료비 지출 비율에서 본인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중 (2014년, 2018년)



출처: OECD (2020) *Health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4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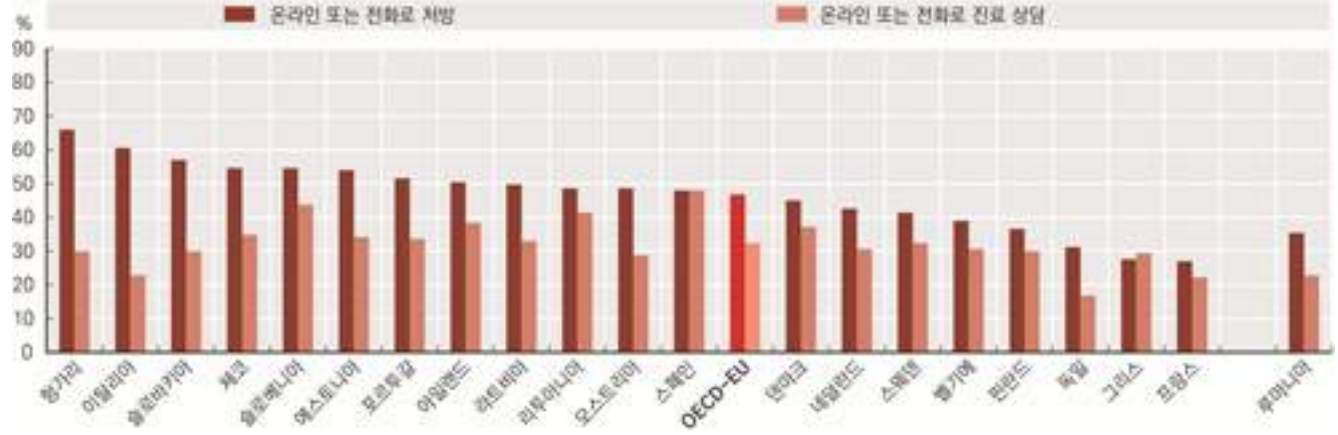
14.5. 팬데믹 직후, 의료 서비스 욕구를 포기한 사람의 비율 (2020년)



출처: Eurofound (2020), *Living, Working and COVID-19.*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484

14.6 팬데믹 직후 전화 및 온라인 의료 서비스를 받는 사람 (2020년)



출처: Eurofound (2020), *Living, Working and COVID-19.*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503

교육 접근성

OECD 국가들의 교육 시스템은 초등 및 중등 교육의 보편적인 접근을 보장한다.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람들이 의무 교육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정부들이 공적 자금만으로 수요를 감당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OECD, 2020).

2017년 OECD 국가들은 민간(예: 모든 비정부 재원)에서 유아 교육 기금의 17%, 고등 교육 기금의 29%를 획득했다. 초등, 중등 및 중등 후 비고등 교육(직업 훈련 포함)의 경우, 비율이 10%에 불과했다. 룩셈부르크(2%), 벨기에(3%), 라트비아(4%)는 유아 교육의 민간 재원 비율이 가장 적은 반면, 호주(34%), 영국(41%), 일본(49%)은 가장 많았다. 초등 교육부터 중등 후 비고등 교육의 경우에는 핀란드, 노르웨이(각 1%) 및 덴마크(2%)가 민간 재원 비율이 가장 적은 반면, 콜롬비아(35%), 터키(27%), 호주(19%)는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그림 14.7).

덴마크와 핀란드와 같은 일부 국가들은 고등 교육을 위해 낮은 수업료를 부과하는 정책을 실시한다. 이 두 국가의 민간 교육 재원 비율은 낮다(각 1%와 4%). 영국(71%), 일본(69%), 미국(65%)과 같은 다른 국가들은 높은 등록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민간 재원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다(그림 14.7). 호주, 아일랜드, 한국, 뉴질랜드 및 영국을 포함한 일부 국가들은 민간으로부터 더 많은 재원을 획득하지만, 재정 지원(예: 장학금, 대출 및 보조금)을 제공한다(OECD, 2020)

OECD 국가들은 유아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2018년 평균적으로 4세 아동의 88%와 3세 아동의 78%가 취학하였으며, 이는 해당 연령 그룹의 69%만이 취학했던 2005년에 비해 증가한 수치이다. 벨기에, 덴마크, 프랑스, 이스라엘, 스페인, 영국은 3~4세 아동의 취학률이 약 100%에 달했다. 스위스(2%)와 터키(10%)를 포함한 다른 국가들은 3세 아동의 취학률이 더 낮지만, 4세 아동의 취학율은 증가하고 있다(그림 14.8 참고).

코로나 19 팬데믹 동안, 대부분의 국가는 2020년, 2021 학년도에 일부 기간 동안 휴교를 시행했다. 국가들은 라디오와 텔레비전 교육, 교육 패키지를 포함한 다양한 원격 학습 자원을 사용했다. 거의 모든 OECD 국가들은 스마트폰, 태블릿 또는 컴퓨터에서 접속하는 온라인 학습 플랫폼(Schleicher, 2020)을 사용했다. 2018년 OECD 국가들의 학생 평균 89%가 집에서 컴퓨터를 사용했다. 덴마크(98%), 폴란드(96%), 네덜란드(95%)에서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반면, 멕시코(57%), 콜롬비아(62%), 터키(67%)에서는 상당한 비율의 학생이 컴퓨터를 가지지 못했다.

이 3개 국가는 사회 경제적인 불균형이 크다. 혜택을 받지 못한 학교의 경우 멕시코의 24%, 콜롬비아의 33%, 터키의 40%만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었다(그림 14.9).

방법론 및 개념정의

기금 및 등록과 관련된 데이터는 교육 통계에 대한 유네스코-OECD-유럽 연합 통계국(UOE)에서 수집하였다.

민간 지출은 부분적으로 국가 보조금의 보장 여부에 관계없이, 교육 기관에 대한 모든 직접 지출을 포함한다.

교육 수준의 분류는 2011년 국제표준교육분류(ISCED)에 따른다. 유아 교육(ISCED 0)은 유아 교육 개발(ISCED 01)과 유치원(ISCED 02) 프로그램을 모두 포함한다. 취학률은 순 취학률로 표현되며, 이는 모든 교육 수준에 등록된 특정 연령 그룹의 학생 수를 해당 연령 그룹의 총 인구로 나누어 계산한다. 일반적으로 수치는 인원수를 기반으로 하며 전일제와 시간제 학업을 구분하지 않는다.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대한 데이터는 2018 국제 학생 평가 프로그램(PISA)의 학생 설문지를 활용하여 수집한다. 사회 경제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또는 혜택을 받은) 학교는 해당 국가/경제에서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ESCS)의 PISA 지수의 하위(또는 상위) 1/4에 속한다.

참고문헌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69096873-en.*

Schleicher, A. (2020) *The Impact of COVID-19 on Education: Insights from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www.oecd.org/education/the-impact-of-covid-19-on-education-insightseducation-at-a-glance-2020.pdf.*

Ikeda, M. (2020), "Were schools equipped to teach – and were students ready to learn – remotely?" PISA *in Focus,* No. 108,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bcd7938-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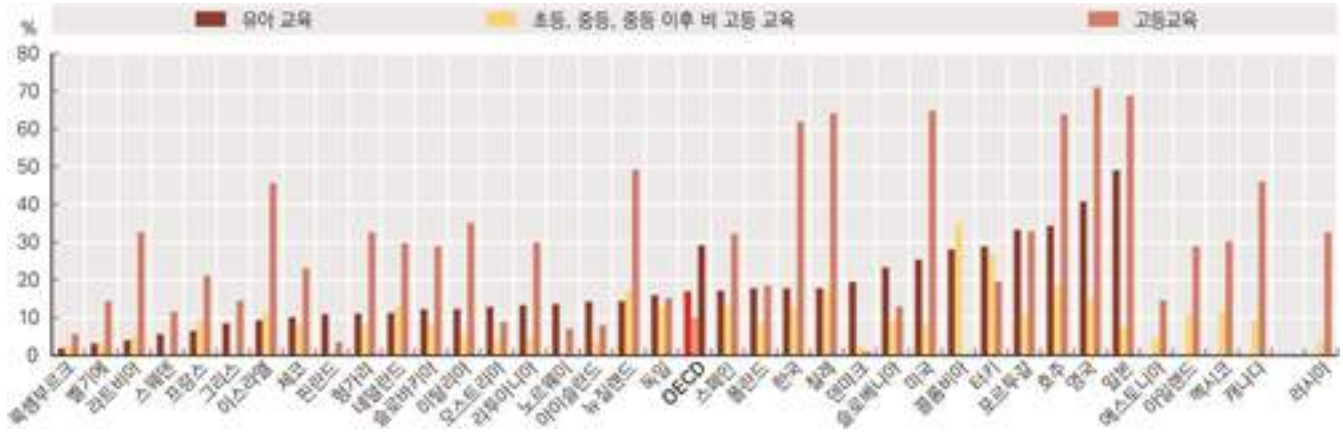
그림 설명

14.7. 스위스의 데이터는 누락되었다.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멕시코의 유아교육 데이터는 누락되었다. 콜롬비아의 데이터는 2017년 대신 2018년 데이터다. 캐나다의 초등 교육은 유아 교육을 포함한다.

14.8 캐나다와 그리스의 데이터는 누락되었다. 미국의 데이터는 유아 교육 개발(ISCED 01) 프로그램이 제외되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데이터는 2018년 대신 2017년 데이터이다.

14.9. 중국에 대한 데이터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및 저장만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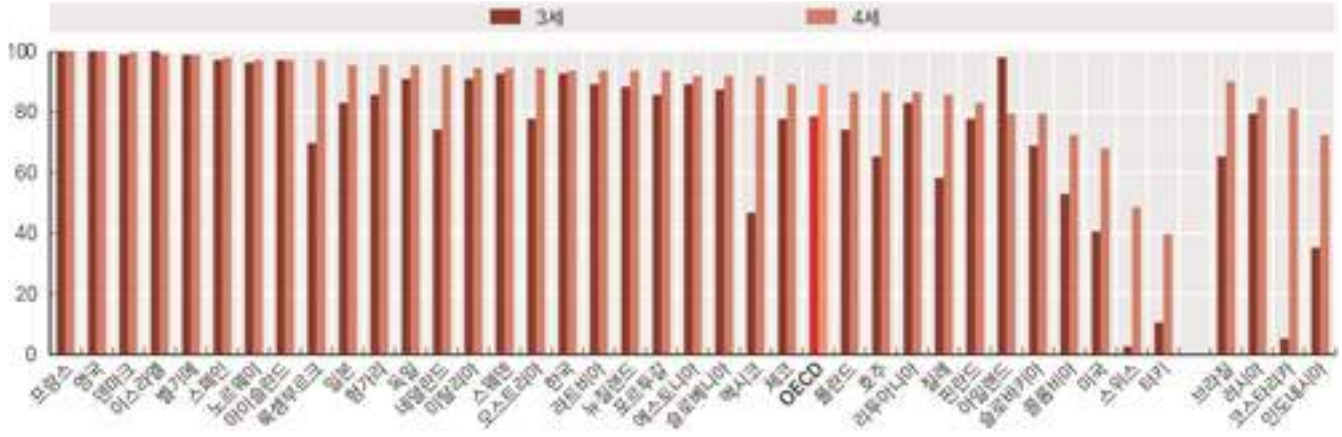
14.7. 총 교육비 지출 비율에서 이전 후 민간 지출의 비율 (2017년)



출처: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522

14.8. 유아 및 초등교육 전 3, 4세 취학률 (2018년)



출처: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541

14.9. 집에서 숙제를 하기 위해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학생의 비율 (2018년)

출처: OECD (2020), *PISA 2018 Results (Volume V): Effective Policies, Successful School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560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은 개인과 기업이 광범위한 법률 및 사법 서비스를 통해, 법적 문제를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이러한 서비스에는 법률 정보, 법률 상담 및 변호, 공식(예: 법원), 대체 분쟁 해결 및 시행 메커니즘이 포함된다(OECD, 2019). 사람들이 사법 시스템에 의미 있는 참여를 할 수 있게 하고 법을 스스로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구축 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한다(OECD, 2019). 법치주의는 공정하고 차별 없는 정의를 요구한다. 사법 서비스에 대한 동일한 접근이 없다면, 대다수 인구의 많은 부분이 뒤쳐지고 취약성이 노출될 수 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법률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법률 자문 서비스가 제재 조치의 영향을 받았다. 서비스의 제공자들은 팬데믹 기간 동안 가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수단을 항상 갖추고 있지 않았다. 그러나 그리스,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라트비아,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영국, 그리고 미국 등 많은 국가들은 가상의 수단으로 전환 할 수 있었다. 캐나다와 멕시코의 중재자들은 화상 회의 소프트 웨어를 사용하여 고용과 민간 중재 업무를 수행했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들은 2020년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 지수에서 사법 차원의 접근성과 적정성 점수에서 1점 만점에 0.65점을 받아, 2016년 이후 0.03점이 상승했다. 네덜란드(0.80점), 독일(0.79점), 덴마크와 스웨덴(0.76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에스토니아, 터키(각 0.08점), 오스트리아, 그리스, 스웨덴(각 0.07점)의 점수 상승폭이 가장 컸다(그림 14.10). 에스토니아는 가장 디지털화된 법원 시스템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어, 법원이 코로나 19 팬데믹 중에도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다.법원행정위원회는 위원이 주로 판사로 구성된 비상설기구로서 사법 시스템을 관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법원행정위원회는 비상사태 동안 법원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한 권고안을 발표했다(European Commision, 2020). 다른 국가들도 폐쇄 기간 동안 법원 시스템의 디지털화를 촉진하기 위해 법령과 규정을 발표했다. 예를 들어, 스페인에서는 왕실령 16/2020이 사법 절차를 수행하기 위한 디지털 수단을 선호했다.

평균적으로 2020년 OECD 국가들은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ADR)의 접근성, 공정성, 효과성 항목에서 0.78점을 획득했으며, 2016년 이후 0.01점 하락했다. 노르웨이 (0.90점), 에스토니아 (0.89점) 그리고 일본 (0.88점)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에스토니아는 2010년과 2020년 사이에 가장 큰 증가(0.08)을 보였다(그림 14.11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는 법치 지수의 개념적 분석틀을 기반으로 하는 일련의 설문지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한다. 설문지는 일반 대중을 대표하는 표본과 국가 기관과 자주 상호작용하는 법률 전문가에게 제공된다. 일반 인구의 경우, 136개 국가에서 각각 1,000명의 응답자를 대상으로 확률 표본을 선정하고, 국가당 평균 30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조사한다. 모든 설문지는 국내 유수의 여론조사 회사에서 관리한다. 지수의 각 차원은 0에서 1까지 점수를 매긴다. 점수가 높을수록 치수의 성과가 개선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orldjusticeproject.org/our-work/ wjp-rule-law-index*을 참조할 수 있다.

사법 서비스의 접근성과 감당은 이용 가능한 구제책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법률 자문과 대리인의 부담성과 같은 측면을 고려해 측정된다.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ADR)의 접근성, 공정성 및 효율성은 비용, 적시성 및 중재적 보상의 효과적인 시행을 고려하여 측정된다.

참고문헌

OECD (2020), “Access to justice and the COVID-19 pandemic”,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09a621ad-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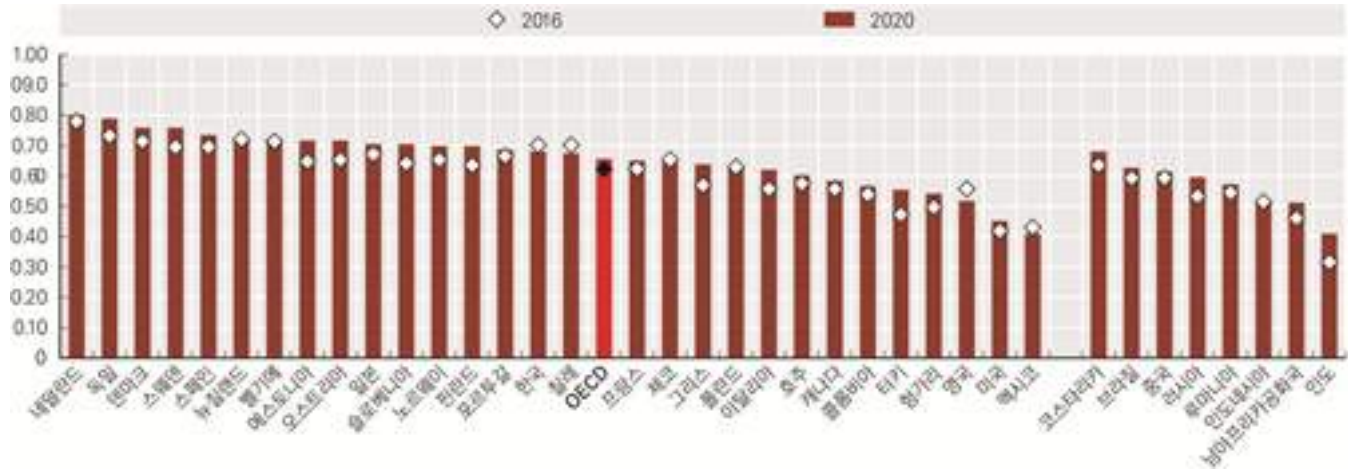
OECD (2019), *Equal Access to Justice for Inclusive Growth: Putting People at the Cent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97f5b7f-en*.

European Commission (2020), “2020 Rule of Law Report: Country chapter on the rule of law situation in Estonia”, *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SWD (2020) 305, European Commission, Brussels, *https://ec.europa.eu/info/sites/info/files/ee_rol_country_chapter.pdf*.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및 스위스의 데이터는 사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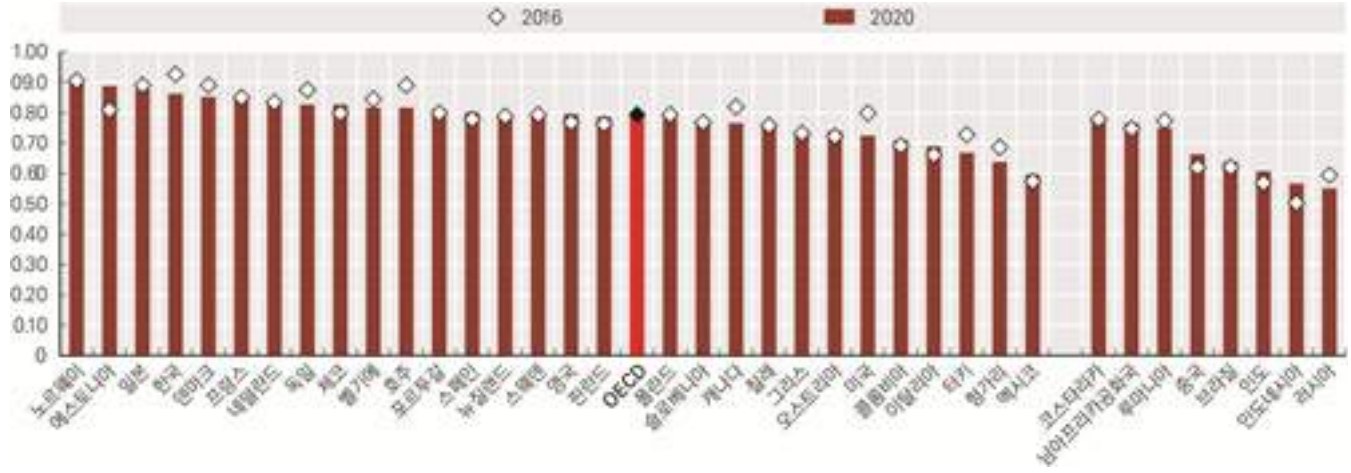
14.10. 사법 서비스의 접근 가능성 (2016년, 2020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20), *Rule of Law Index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579

14.11. 접근 가능하고 공정하며 효과적인 대안적 분쟁 해결 메커니즘 (2016년, 2020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20), *Rule of Law Index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598

환자의 수요에 대한 의료 시스템의 대응성

의료 시스템은 서비스를 보다 사람 중심적으로 만드는 데 점점 더 집중하고 있다. 여기에는 의료 제공자와 상호 작용할 때, 사람들의 경험과 의료 정보에 대한 민주화된 접근을 가진 디지털 기술의 도움으로 건강을 공동 생산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포함된다. 많은 국가들은 의료 시스템 성능 개선의 중요하기 때문에 환자 보고 경험 측정(PREM)과 환자 보고 결과 측정(PROM)을 수집한다.

환자 보고 경험 측정(PREM)은 환자의 건강 관리 경험을 측정하는 반면, 환자 보고 결과 측정(PROM)은 증상, 기능적 상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포함하여 환자의 삶의 질과 관련된 측면을 측정합니다. 2018년 OECD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환자 보고 경험 측정(PREM) 및 환자 보고 결과 측정(PROM)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환자 보고 지표 조사(PaRIS) 계획을 시작했다.

제공자와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면, 환자가 자신의 치료에 대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환자가 자신의 건강에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국제 의료정책 설문 조사(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는 OECD 11개국가에서 환자 경험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한다. 65세 이상의 성인들에 초점을 맞춘 2017년 조사에 따르면, 대다수의 환자들은 의사가 종종 또는 항상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설명한다고 보고했다. 이 비율은 호주와 뉴질랜드(각 94%)부터 스웨덴(78%)까지 다양하다(그림 14.12).

의료 서비스를 오래 기다리는 것은 증상을 악화시키고 환자의 경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2020년 스웨덴의 성인 환자 67%, 캐나다의 성인 환자 62%, 노르웨이의 성인 환자 53%가 마지막 치료가 필요한 당일이나 다음날 의사나 간호사에게 예약 하지 않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독일(25%), 네덜란드(34%), 호주(35%)의 성인 환자는 소수에 불과했다. 국가 평균보다 소득이 낮은 성인들 중에서, 그 비율은 뉴질랜드에서 59% (전체 인구의 39% 대비), 호주에서는 43% (35% 대비), 미국에서는 59% (51% 대비)로 나타났다(그림 14.13).

선택적(비긴급) 수술의 대기 시간은 일반적으로 의사의 진료 예약 시간보다 훨씬 더 길다. 2019년 백내장 수술의 대기 시간의 중앙값은 거의 3개월(87일)로 나타났으며, 2014년보다 10일 감소했다. 대기 시간이 가장 짧은 국가는 이탈리아(25일), 헝가리(30일), 덴마크(36일) 등이었고 대기시간이 가장 긴 국가는 폴란드(246일), 에스토니아(148일) 등이었다. 덴마크, 폴란드, 헝가리는 상대적으로 대기 시간을 가장 많이 줄였다. 2014년 이후, 덴마크는 44%, 폴란드는 41%, 헝가리는 31%의 대기 시간이 감소했다. 대조적으로 에스토니아(54%), 노르웨이(39%), 포르투갈(34%)의 대기 시간은 가장 많이 증가했다(그림 14.14). 이 팬데믹은 선택적(비긴급) 수술대기 시간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코로나 19 환자에 대한 집중 치료 수요가 정점에 달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수술 일정을 조정하거나 연기하기 때문이다.

방법론 및 개념정의

그림 14.12의 데이터는 2017년 국제 의료정책 설문 조사(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에 응답한 OECD 11개 국가의 노인(65세 이상)에 대한 데이터다. 인터뷰는 3월과 6월 사이에 전화로 실시되었으며, 스위스는 경우 온라인으로 진행한 인터뷰를 제외하였다.

그림 14.13의 데이터는 2020년 2월과 5월 사이에 실시된 국제 의료정책 설문 조사(Commonwealth Fund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에서 18 세 이상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데이터다. 인터뷰는 전화와 온라인(스웨덴, 스위스, 미국)으로 실시되었다. 표본의 범위는 607명부터 4,530명까지 이며, 데이터는 국가 인구의 대표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중치를 부여했다.

저소득 성인은 자가 보고한 세전 가구 소득이 국가 평균보다 "다소 미만" 또는 "매우 미만" 으로 응답한 경우를 의미한다. 고소득 성인의 경우 "다소 이상" 또는 "매우 이상"인 것으로 정의된다. 설문 조사 시 응답자에게 실제 국민 평균 소득에 대한 참고 데이터를 제공했다.

백내장 수술대기 시간의 중앙값은 환자가 시술 대기자 명단에 추가(전문의 평가 후)된 날부터, 치료를 위해 입원한 날까지 경과한 시간을 말한다.

참고문헌

Doty, M. et al. (2020), "Income-related inequalities in affordability and access to primary care in eleven high-income countries", Commonwealth Fund website, *www.commonwealthfund.org/publications/surveys/2020/dec/2020-international-survey-income-related-inequalit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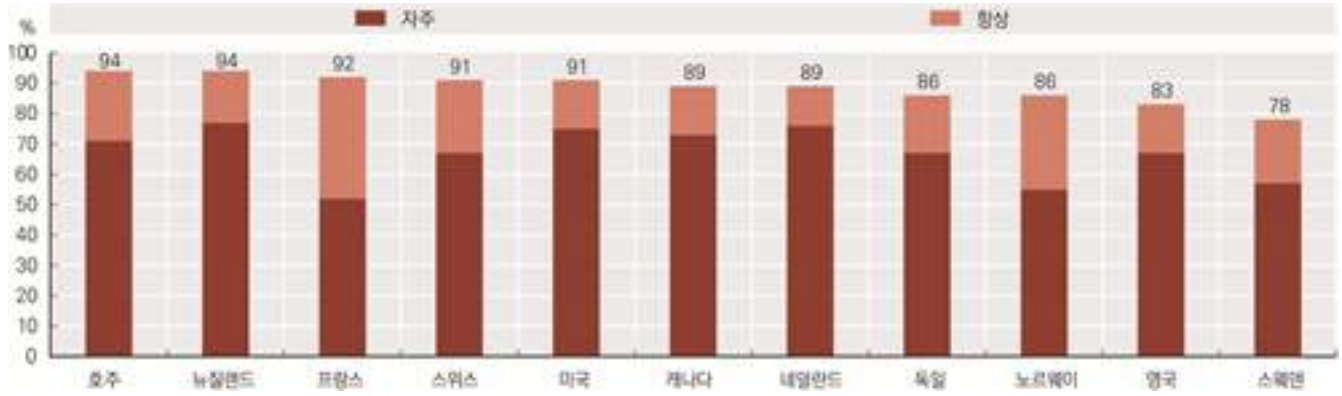
OECD (2020), *Waiting Times for Health Services: Next in Line*, OECD Health Policy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242e3c8c-en.*

OECD (2019), *International Data Collection Guidelines: Patient-Reported Outcome Measures (PROMs) for Hip and Knee Replacement Surgery*, OECD, *www.oecd.org/health/healthsystems/OECD-PaRIS-hip-knee-data-collection-guidelinesen-web.pdf.*

그림 설명

14.14. 호주, 덴마크, 핀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및 영국의 데이터는 2019년 대신 2018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스라엘에 대한 데이터는 2019년 대신 2016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네덜란드의 데이터는 평균을 참고 하였으며, 초과 추정 결과를 초래한다. 노르웨이의 데이터 또한 과대 추정 되었다. 이는 노르웨이의 데이터가 의사가 환자를 전문의에게 추천한 날짜부터 수집되는 반면, 다른 나라에서는 의사가 환자를 평가하고 치료 대기자 명단에 추가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만 데이터를 수집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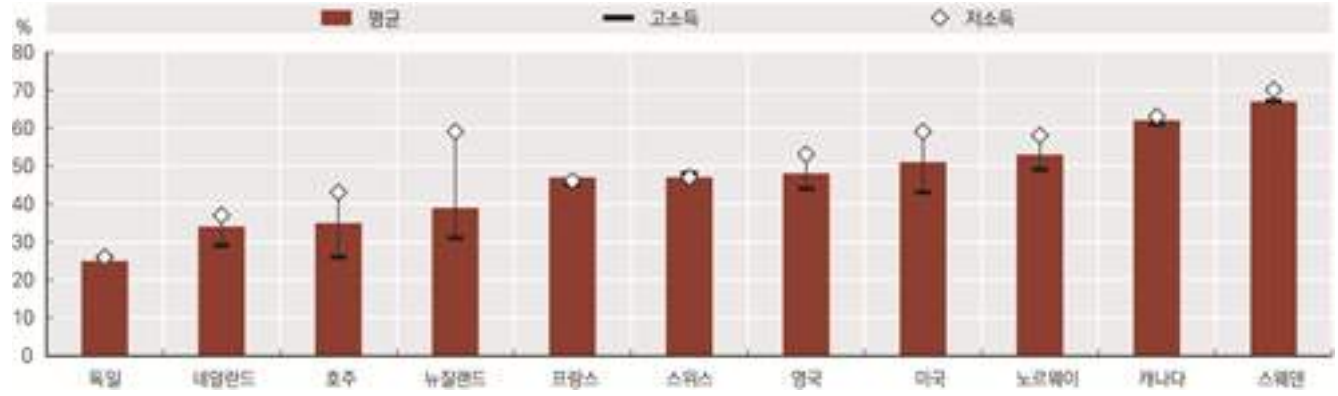
14.12. 65세 이상 인구 중 의사가 이해하기 쉽게 설명한다고 응답한 인구의 비율 (2017년)



출처: Commonwealth Fund (2017),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of Older Adult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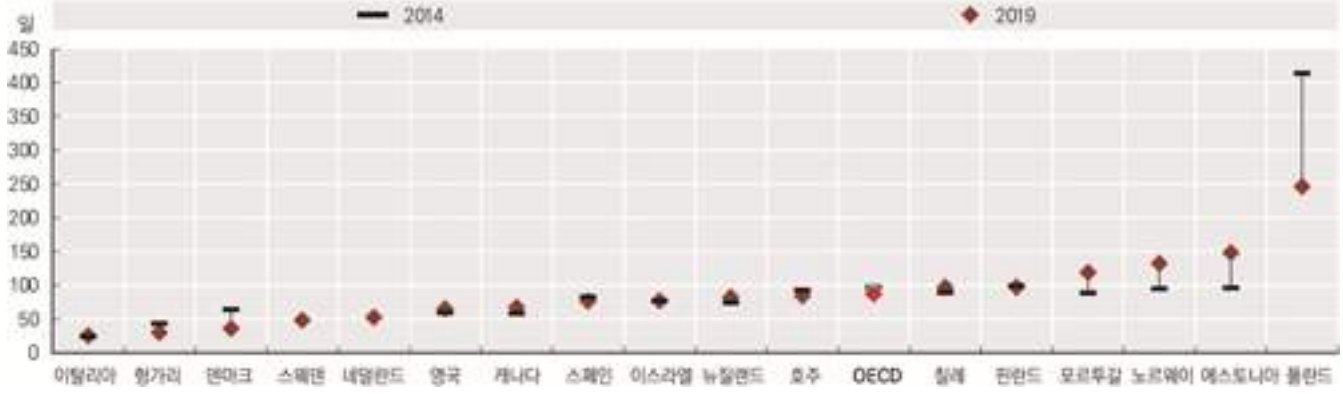
14.13. 진료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당일 또는 다음날 예약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의 비율 (2020년)



출처: Commonwealth Fund (2020), *International Health Policy Surve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636

14.14. 백내장 수술에 걸리는 평균 대기 시간(중앙값) (2014년, 2019년)



출처: OECD (2020) *Health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655

특수 수요에 대한 교육 시스템의 대응성

교육 시스템의 대응성은 사회 경제적 배경과 상관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서 성공하고 노동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보장한다. 일반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사람들(즉, 중등 교육 이하)은 청년 실업률에서 과도하게 나타난다. 좋은 교육은 고용, 교육 또는 훈련(NEET)을 받지 않는 청년이 되지 않도록 하는 최선의 보호책이다(Carcillo 외, 2015).

2020년 OECD 전체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15-29세 청년의 12.9%가 니트족(NEET)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10년 전의 15.6%와 비교된다. 니트족(NEET)의 비율은 스위스(4.9%), 네덜란드(5.8%), 룩셈부르크(6.2%)가 가장 낮았고 터키(30.8%), 콜롬비아(23.7%), 이탈리아(23.0%), 멕시코(20.7%)가 가장 높았다. 같은 기간 이스라엘에서는 전반적인 실업률 하락이 발생하여, 2009년 28.7%에서 2020년 12.9%로 10년 만에 니트족(NEET)의 비율이 절반으로 감소되었다. 라트비아와 터키는 각각 9.9%p와 8.7%p로 큰 폭의 감소가 나타났다(그림 14.15 참고).

학교 차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충분한 자원과 지원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8년 교직원 부족으로 인해 교육이 덜 방해 받는 OECD 국가들은 폴란드(-0.7 표준편차), 슬로바키아(-0.5 표준편차)로 나타났으며, 일본(0.9 표준편차), 포르투갈(0.8 표준편차), 이탈리아(0.5 표준편차)는 교직원의 부족으로 인해 교육의 방해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가 아닌 루마니아(0.4 표준편차)는 OECD 평균보다 인력 부족에 덜 지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데이터를 고려하면, 터키, 캐나다(각 0.6 표준편차), 호주(각 0.5 표준편차)가 부족에 가장 덜 지장을 받는 국가이고 콜롬비아(0.8 표준편차), 일본, 그리스(각 0.7 표준편차)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그림 14.16).

숙제는 학생들의 동기 부여와 자율 규제를 장려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지만, 다른 사회 경제적 배경을 가진 학생들 사이에서 성취도 격차를 더 벌릴 수 있다(OECD, 2020). 2018년 OECD 국가 전체 평균, 학생들의 76%가 학생들이 숙제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학교에 다녔고, 62%는 직원들이 학생들의 숙제를 돕는 학교에 다녔다. 룩셈부르크와 스웨덴에서는 공간을 제공받는 학생의 비율이 98%인 반면, 그리스에서는 41%, 슬로바키아에서는 42%에 불과했다. 마찬가지로 스웨덴과 영국의 학생 중 93%는 직원이 숙제를 도와주는 학교에 다녔고 오스트리아는 29%, 한국은 35%에 불과했다(그림 14.17 참고).

방법론 및 개념정의

니트족(NEET)의 비율은 15-29세 전체 인구 중, 취업, 교육 또는 훈련을 받지 못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15-29세의 비율을 나타낸다. 교육은 시간제 또는 전일제 교육에 참여하는 것을 포함하지만, 비정규 교육 또는 짧은 기간의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제외된다. 고용은 조사 기준 주에 적어도 한 시간 이상 유급 근로를 했거나 일시적으로 그러한 근로에 결근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림 14.16과 14.17의 데이터는 2018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 학교 설문지에서 가져온 것이다. 교육 데이터 부족 지수는 학교장이 학교 건물, 냉난방 시스템, 교육 공간, 학습 데이터(교과서, 실험 기구, 수업 데이터, 컴퓨터)와 같은 물리적 기반 시설의 부족 또는 부적절함으로 인해 학교의 지도 능력이 어느 정도 저해되는지("전혀", "거의", "어느 정도", "많이")에 대한 응답에 따라 산출되었다. 시스템 및 교육 공간; 그리고 교과서, 실험실 장비, 교육 데이터 및 컴퓨터와 같은 교육 데이터. 교직원 부족 지수는 교직원 부족, 부적절하거나 자격이 부족한 교직원, 보조 인력 부족, 부적절하거나 자격이 부족한 보조 인력 등의 문제에 대한 응답에 따라 산출되었다. 해당 지수들의 평균값은 0이고 표준 편차는 OECD 국가 전체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지수의 값이 양수라면 OECD 평균보다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능력을 저해한다는 학교장의 믿음을 반영하며, 음수라면 더 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능력이 덜 저해된다는 학교장의 믿음을 반영한다.

참고문헌

Carcillo, S. et al. (2015), "NEET youth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 Challenges and policies",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No. 164, OECD Publishing. *http://dx.doi.org/10.1787/5js6363503f6-en.*

OECD (2020), *PISA 2018 Results (Volume V): Effective Policies, Successful* Schools,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a768d40-en.*

그림 설명

14.15. 2020년 데이터는 4분기를 기준으로 한다. 2009년 콜롬비아에 대한 데이터는 이용할 수 없다. 일본과 한국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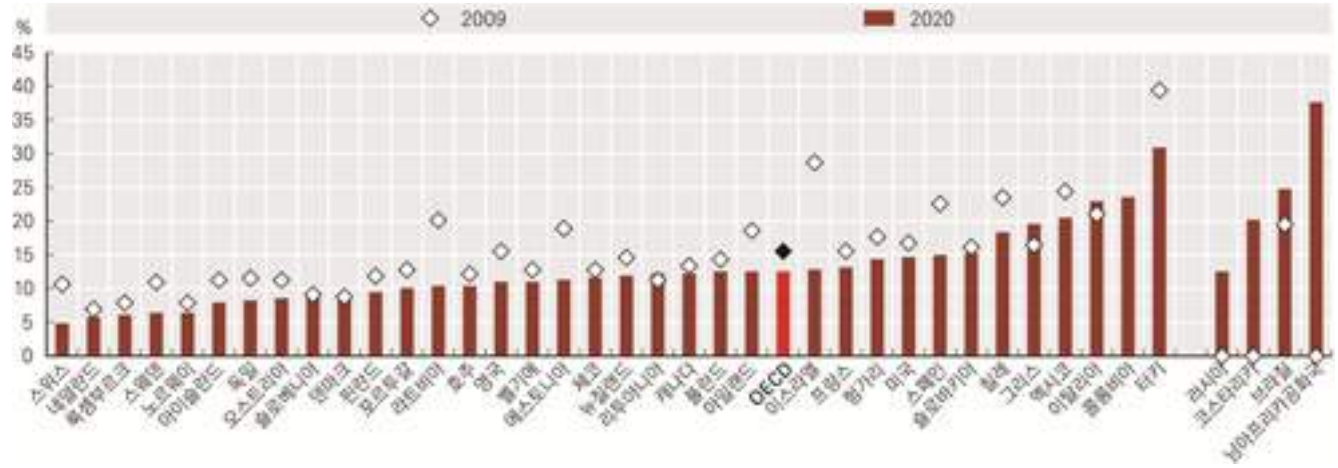
호주, 콜롬비아, 독일, 그리스, 이스라엘, 멕시코, 뉴질랜드, 코스타리카, 러시아의 데이터는 2020년 대신 2019년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칠레의 데이터는 2020년이 아니라 2017년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미국, 브라질, 남아프리카공화국의 데이터는 2020년이 아닌 2018년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14.16. 교육데이터 부족 지수의 내림차순으로 국가의 순위가 제시된다.

14.17. 일본은 숙제를 하기 위한 직원의 도움에 대한 데이터를 이용할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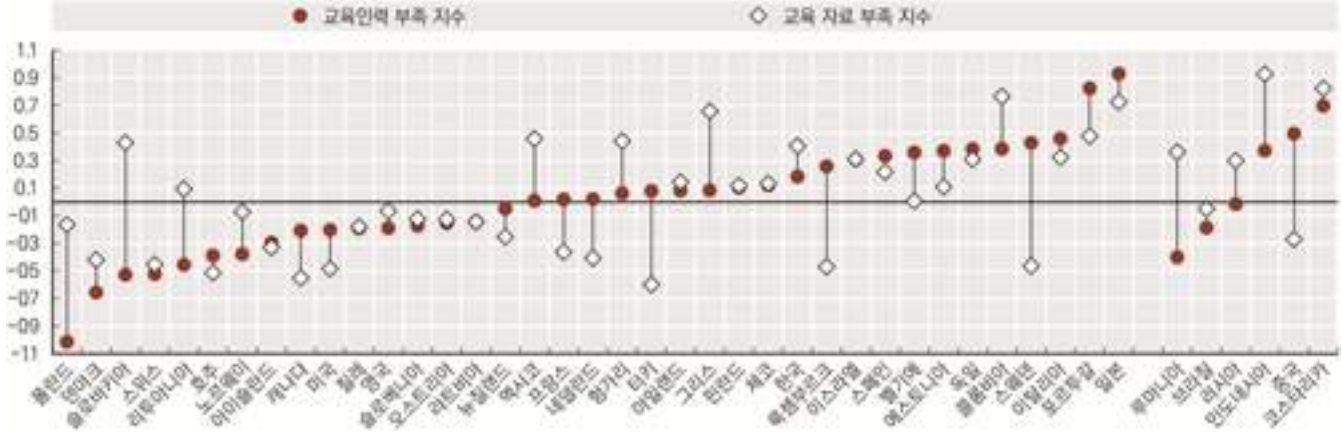
14.16 & 14.17. 중국에 대한 데이터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및 저장만 포함된다.

14.15. 교육, 고용 또는 훈련을 받지 않은 청년(15-29세)의 비율 (2009년,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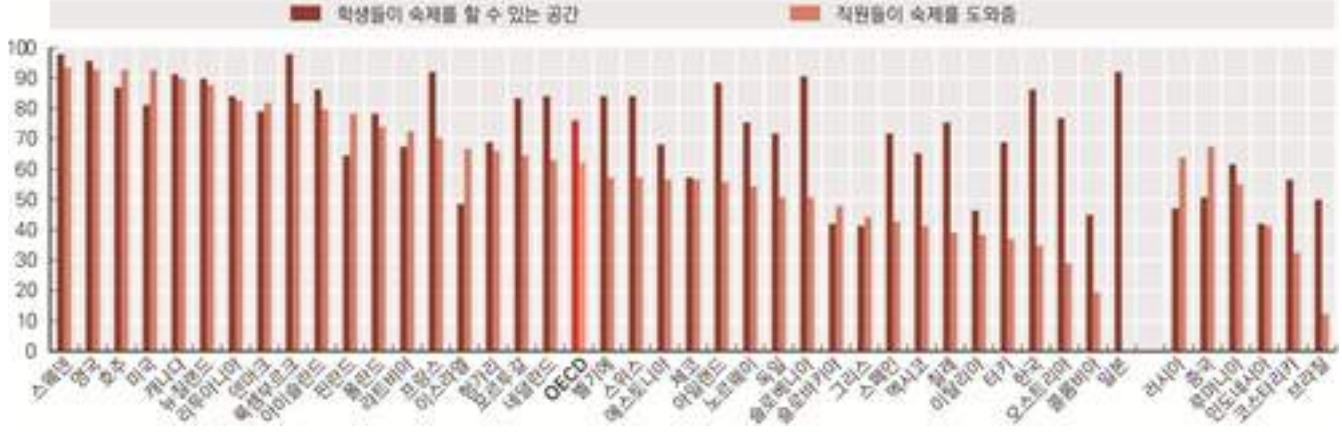
출처: OECD (2020), *Education at a Glance 2020: OECD Indicators;* OECD (2021), *OECD Employment Outlook 2021: Navigating the COVID-19 Crisis and Recovery.*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674

14.16. 교육 인력과 자료에 관한 부족 지수 (2018년)



출처: OECD (2019) *PISA 2018 Results* (Volume II): Where All Students Can Succeed.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693

14.17. 학습 도움을 제공하는 학교의 학생 비율 (2018년)



출처: OECD (2020) PISA 2018 Results (Volume V): *Effective Policies, Successful School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712

민사사법 서비스의 적시성

법적 사건 해결의 지연은 비용 증가, 생산성 감소, 건강 문제 발생, 직업 손실 유발 및 관계 불안과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민과 기업에 영향을 미치며, 개인들이 미래의 분쟁에 대한 법적 해결을 찾는 것을 단념시킬 수 있다. 대응형 민사사법 시스템은 "올바른" 고객에게, "올바른" 법의 영역에서, "올바른" 위치와, "올바른" 시기에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OECD, 2019). 부정확한 사례 관리는 민사사법 서비스의 적시성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이며, 때로는 정보 기술을 사용하여 개선될 수 있다. 유럽사법효율성위원회(The European Commi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CEPEJ)는 법원 결정의 적시성을 개선하기 위해 사건을 분류할 것을 제안한다. 분쟁이 있는 민사 및 행정 소송의 경우, 각 국가의 역량에 따라 제출일로부터 6개월에서 12개월의 기간을 사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정상적인 사건은 18~36개월 내에 해결될 수 있으며, 복잡한 사건(전체 사건의 5~10%)는 해결까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CEPEJ, 2016).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Disposition Time: DT)은 사법 시스템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추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다. 관할 구역에서 계류 중인 사건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일수를 추정한다.

리투아니아는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DT)이 84일로 2018년 민간 및 상사 소송 사건을 가장 빠르게 해결했다. 룩셈부르크(94일)와 네덜란드(110일)도 기간이 짧았다. 포르투갈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DT)이 289일에서 229일로 21% 감소하여, 가장 감소를 보였다. 슬로바키아는 2014년 524일에서 2018년 157일로 가장 큰 감소를 보였지만, 2016년 130일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그림 14.18).

리투아니아는 민사 및 상사 비소송 1심 사건에 대해 4일로 가장 짧은 시간(DT)을 기록했고 헝가리(32일)와 라트비아(42일)가 그 뒤를 이었다. OECD 국가가 아닌 경우, 루마니아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DT)이 가장 짧았다(24일). 이탈리아(231일), 노르웨이(180일), 프랑스(162일)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DT)이 가장 오래 걸렸다. 슬로바키아는 2016년 184일에서 2018년 131일로 가장 감소를 보였다(그림 14.19)

행정 사건의 경우, 2018년 가장 짧은 재판 소요시간(DT)은 이스라엘(107일) 헝가리(109일), 폴란드(118일), 에스토니아(119일)였다. OECD 국가가 아닌 경우, 루마니아가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DT)이 117일로 가장 짧았다. 그리스는 2016년 1,086일에서 2018년 601일로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DT)을 거의 절반으로 줄였다(그림 14.20).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유럽사법효율성위원회(CEPEJ)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으며, 유럽 평의회 회원국과 2018년 사법 시스템 및 그 이전 평가를 위한 참관인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다.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DT)은 사건 해결에 필요한 예상 시간이며, 이는 1심 법원이 결정에 도달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의미한다. 재판에 소요되는 시간(DT)은 해당 연도에 보류 중인 사건의 수를 해당 기간에 해결한 사건의 수로 나눈 값에 365를 곱한 값이다. 비록 사건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평균 시간 정보를 제공하지 않지만, 특정 관할 내에서 처리 과정 기간의 추정치를 제공한다.

민사 및 상사 소송 사건은 이혼 소송과 같은 당사자 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비소송사건은 법원이 분쟁의 결정을 수반하지 않는 사건(예: 소송되지 않은 지급명령 사건)을 말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상사 사건을 전담 법원에서 처리하며, 민사 법원에서 처리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행정 사건은 시민과 지방 정부, 지방 정부와 중앙 정부 간의 분쟁을 의미한다. 일부 국가에서는 전문 법원이 해당 분쟁을 다루는 반면, 민사 법원에서 이를 다루는 국가도 존재한다.

국가는 사법을 관리하고 법원 간에 책임을 분배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가 간 비교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데이터에 포함된 법원과 사건의 유형은 물론 수집된 데이터의 방법과 유형이 다를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19), *Equal Access to Justice for Inclusive Growth: Putting People at the Cent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97f5b7f-en.*

CEPEJ (2020), *European Judicial Systems: CEPEJ Evaluation Report: 2020 Evaluation Cycle (2018 Data: Part 1: Tables, Graphs and Analyses.*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Strasbourg, *https://rm.coe.int/rapportevaluation-partie-1-francais/16809fc0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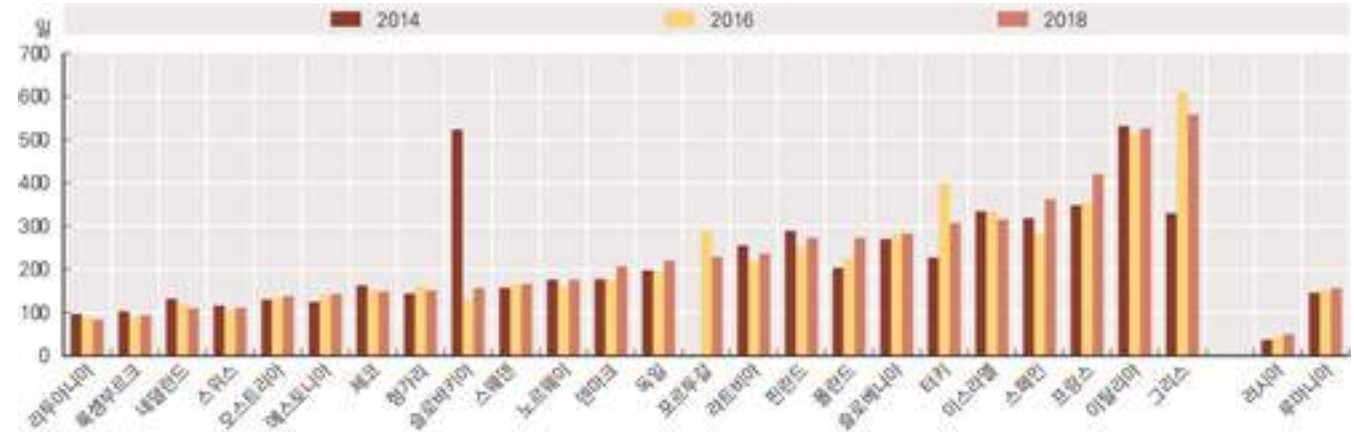
CEPEJ (2016), *Towards European Timeframes for Judicial Proceedings: Implementation Guide,*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Strasbourg, *https://rm.coe.int/16807481f2.*

그림 설명

국가의 순위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는 최근 연도의 사례 해결에 필요한 시간에 따라 오름차순으로 표시된다. 데이터는 OECD EU 국가에만 적용된다.

14.20. 영국의 데이터는 잉글랜드와 웨일즈만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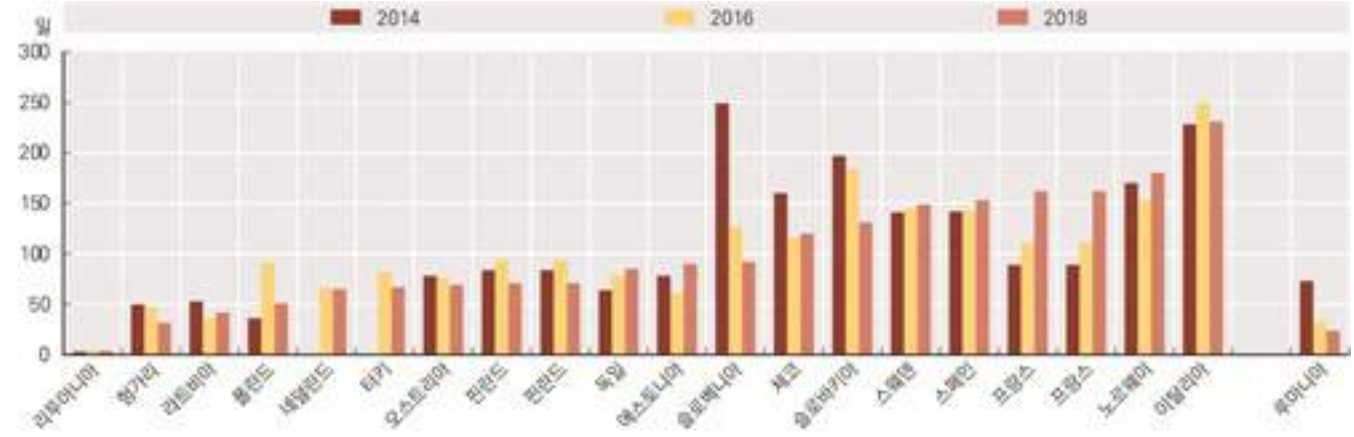
14.18. 민사 및 상사 소송 1심 처분 기간 (2014년, 2016년, 2018년)



출처: CEPEJ (2020),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7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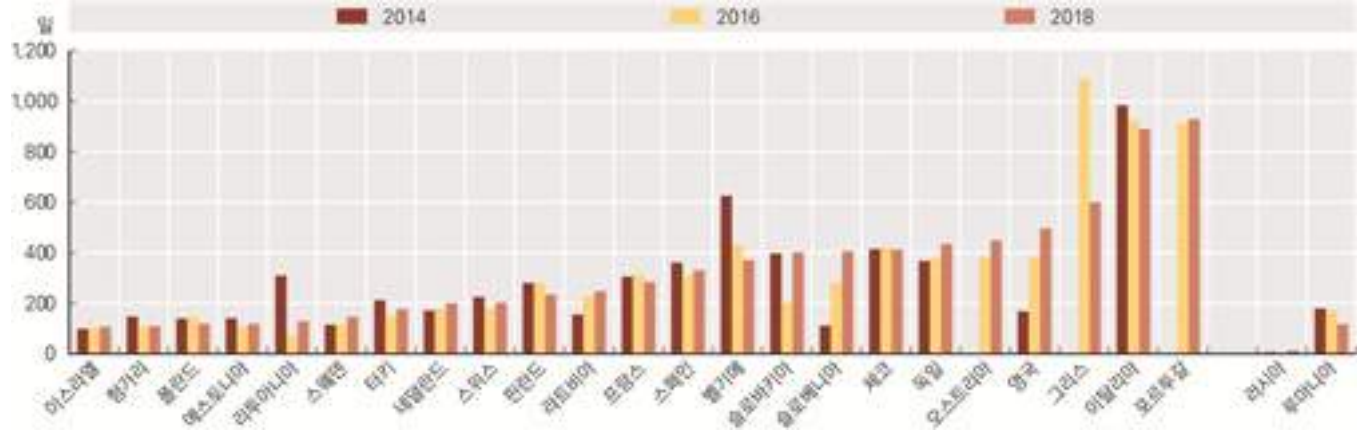
14.19. 민사 및 상사 비 소송 1심 처분 기간 (2014년, 2016년, 2018년)



출처: CEPEJ (2020),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750

14.20. 행정 사건 1심 처분 기간 (2014년, 2016년, 2018년)



출처: CEPEJ (2020), *European Commission for the Efficiency of Justice*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769

보건의료의 질

보건 시스템은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급성 또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가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할 책임이 있다. 고품질의 의료는 안전하고 효과적이며 환자 중심적인 의료를 의미한다. 의료의 질은 구조, 과정, 결과의 측정을 통해 평가할 수 있다. 전자 의료 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은 의료 종사자 간에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여, 의료 서비스의 조정 및 의료 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2016년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1차 병원의 82%가 진료 시 전자 의료 기록을 사용한 것에 비해, 전문 의료 병원은 73%가 전자 의료 기록을 사용했다. 2016년 OECD 25개 국가 중 8개 국가는 1차 병원에서 전자 의료 기록(EMR)을 전부(100%) 사용하고 있었으며,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스웨덴의 모든 전문 의료 병원에서도 전자 의료 기록(EMR)을 사용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2016년 폴란드, 멕시코(각 30%) 및 일본(36%)의 1차 병원 중 약 3분의 1만이 전자 의료 기록(EMR)을 사용하고 있었고, 스위스(18%)의 일부 전문 병원만 전자 의료 기록(EMR)을 사용하고 있었다. 2012년과 2016년 사이에 덴마크는 1차 병원 및 전문 병원의 전자 의료 기록(EMR) 사용이 가장 크게 개선되었다(그림 14.21).

1차 진료는 일반적으로 환자와 의료 시스템 간의 초기 접촉 지점이며, 전염성 및 만성 건강 상태의 예방, 그리고 조기 진단 및 관리를 담당한다. 당뇨병은 대부분은 1차 진료의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는 잘 확립된 치료법이 있으며, 점차 증가하는 만성 질환이다. 따라서 고품질의 1차 진료는 환자의 불필요한 병원 입원을 막을 수 있다(OECD, 2019). 2017년 OECD의 평균 당뇨병 입원율은 인구 10만 명당 127명으로, 2012년에 비해 10% 이상 감소했다. 잠재적으로 피할 수 있는 당뇨병 병원 입원률은 멕시코가 가장 높았고(인구 10만 명당 249명), 아이슬란드(42명), 이탈리아(43명), 스페인(45명)가 가장 낮았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한국은 2012년과 2017년 사이에 당뇨병 입원율이 가장 크게 감소하였다(그림 14.22).

허혈성 뇌졸중과 같이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질환으로 인한 입원 후 30일 이내의 사망률은 병원의 급성 치료의 질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다. 2017년 OECD 국가에서 평균적으로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후 연령표준화 사망률은 45세 이상 인구 100명당 7.6명으로 2012년의 10명보다 감소했다. OECD 국가 중 일본(3.0)과 한국(3.2)이 가장 낮았고 라트비아(20.4)가 가장 높았다. 영국(-6.5), 네덜란드(-5.3), 호주(-5.1)가 2007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 라트비아(0.9)와 콜롬비아(0.4)는 2007년과 2017년 사이에 사망률이 증가했다(그림 14.23).

방법론 및 개념정의

전자 의료 기록(EMR)은 병원이나 진료소와 같이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조직에서 작성한 전산화된 의료 기록이다. 이상적으로 전자 의료 기록(EMR)은 다양한 조직들에 걸쳐, 개별 환자의 의료 시스템 접촉에 대한 상세한 이력을 제공하기 위해 제공자와 환경 간에 공유되어야 한다(Oderkirk, 2017). 전자 의료 기록(EMR)의 구현에 관한 수치는 2016년 OECD 25개 국가가 응답한 전자 건강 기록을 담고 있는 HCQI 건강 데이터의 2차 사용에 관한 설문지에서 가져온 것이다.

당뇨병을 피할 수 있는 입원율은 단기 및 장기 합병증에 대한 입원과 합병증이 없는 통제되지 않는 당뇨의 세가지 지표에 대한 합에 기반한다. 이 지표는 인구 100,000명당 15세 이상 인구 중 당뇨병에 대한 일차 진단이 있는 병원 입원자 수로 정의된다.

허혈성 뇌졸중의 치사율은 입원 후 30일 이내에 사망한 45세 이상의 인구 비율을 측정한다. 그림 14.23에 제시된 비율은 초기에 입원한 동일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를 나타낸다(즉, 연결되지 않은 데이터). 비율은 연령-성별로 표준화되어 있다.

참고문헌

Oderkirk, J. (2017), "Readiness of electronic health record systems to contribute to national health information and research", *OECD Health Working Papers*, No. 9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e296bf3-en*.

OECD (2017), *Caring for Quality in Health: Lessons Learnt from 15 Reviews of Health Care Quality*, OECD Reviews of Health Care Quality,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267787-en.*

OECD (2019), *Health at a Glance 2019: OECD Indicator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dd50c09-en.*

그림 설명

14.21. 캐나다의 데이터는 병원이 아닌 의사의 비율을 나타낸다. 일차 진료에 대한 1차 진료에 대한 칠레의 데이터는 2차 이상의 병원을 참조하고, 전문 병원은 관행에 따른다.

2012년 일본과 미국의 데이터는 모든 1차 병원 및 전문 병원의 비율을 나타냅니다.

14.22. 독일과 포르투갈의 데이터는 2012년 대신 2011년 데이터다. 에스토니아와 미국의 데이터는 2012년 대신 2014년 데이터다. 호주,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폴란드, 미국의 데이터는 2017년 대신 2016년 데이터다. 프랑스, 룩셈부르크, 스위스의 데이터는 2017년 대신 2015년 데이터다. 뉴질랜드의 데이터는 2017년 대신 2014년 데이터다.

14.23.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및 터키의 2007년 데이터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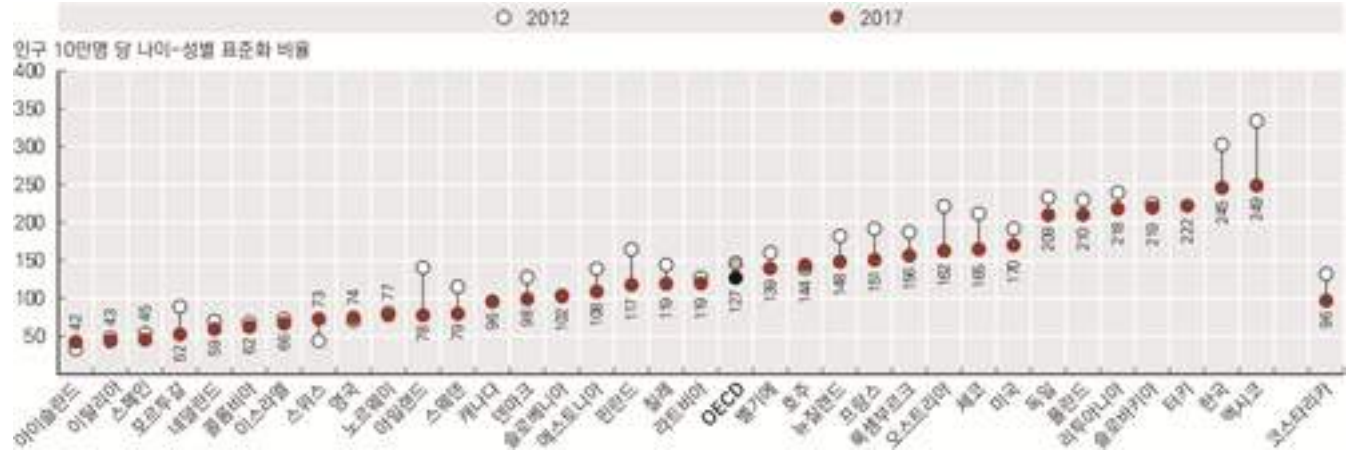
14.22와 14.23. 아이슬란드와 룩셈부르크의 데이터는 평균 3년 값이다.

14.21. 전자 진료 기록을 사용하는 1차 병원 및 전문 병원의 비율 (2012년, 2016년)

출처: OECD (2012년, 2016년) *OECD HCQI Questionnaire on Secondary Use of Health Data: Electronic Health Record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7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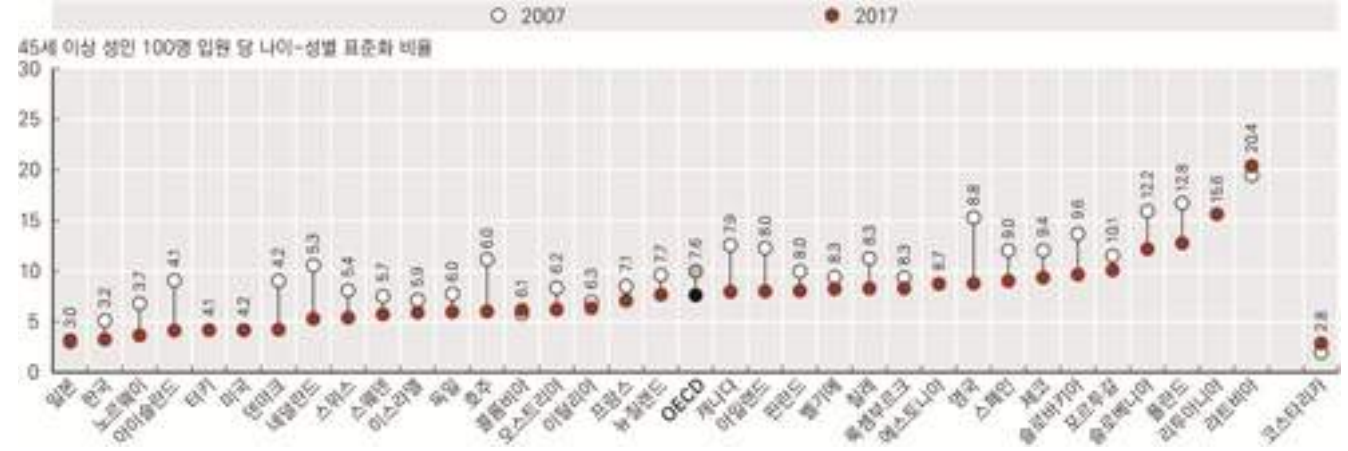
14.22. 성인의 당뇨병으로 인한 병원 입원률 (2012년, 2017년)



출처: OECD (2020), *Health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807

14.23. 허혈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의 30일 이내 사망률 (2007년, 2017년)



출처: OECD (2020), *Health Statistics* (database).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826

교육에서의 학생 성적와 공평성

교육 시스템은 개인에게 평생 개발에 필요한 지식, 기술 및 도구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 교육의 질은 학생들이 사회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통합시키는지에 따라 평가될 수 있다. OECD 최고의 교육 시스템은 질과 공평성을 갖추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공평성은 개인적인 환경이 교육적인 잠재력을 달성하는 데 장애물이 되지 않으며, 모든 개인이 최소한의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OECD, 2012).

2018년 OECD의 학생들은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의 읽기 점수에서 평균 487점을 받았으며, 에스토니아(523점), 캐나다와 핀란드(각 520점), 아일랜드(518점)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 콜롬비아(412점), 멕시코(420점), 칠레(452점)의 학생들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14.24). 터키의 학생들은 2015년보다 37점 더 많은 점수를 받아 가장 많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평균 점수는 학생들 간의 불평등을 숨긴다. 평균적으로 OECD 국가에서 성적의 12%는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지위에 기인할 수 있다. 성적에 대한 사회 경제적 배경의 영향은 헝가리(19%)와 룩셈부르크(18%) 그리고 OECD를 제외한 루마니아(18%)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고의 성적을 내는 에스토니아(6%)와 캐나다(7%), 아이슬란드(7%)에서는 사회 경제적 배경이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덜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24).

점점 더 복잡해지는 상황 속에서 학생들은 상호 연결되고 변화하는 세상에서 탐색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습득할 필요가 있다.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은 관련 지역, 세계, 문화와 관련된 문제를 조사하고, 다른 사람들의 세계관을 이해하고, 열린 문화 간의 상호작용에 참여하고, 집단적 복지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행동 등을 아우르는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평가한다.

인지적응능력은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대처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코로나 19 위기 동안 학생들은 원격 학습으로 전환해야 했고, 많은 학생들은 오랜 기간 동안 집에 갇혀 있었다. 2018년, 스페인(OECD 평균 0.3 표준 편차), 멕시코 및 터키(각각 0.2 표준편차)의 학생들은 OECD 평균보다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어려움을 극복하는 능력이 더 크다고 보고한 반면, 이탈리아, 그리스 및 슬로바키아(각각 0.3 표준편차) 학생들은 비정상적인 상황에 대처하고 극복하는 하는 데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4.25).

기후 변화, 난민 위기, 전염병을 포함한 현상의 이면에 있는 이유를 이해하고 이에 대한 생산적인 논쟁을 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글로벌 역량이다. PISA의 글로벌 문제에 관한 자기 효능감 지수는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는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한다. 2018년 독일, 한국, 콜롬비아(OECD 평균과 0.2 표준편차의 차이)의 학생들이 가장 높은 자기효능감을 보고한 반면, 슬로바키아(-0.4 표준편차), 스코틀랜드와 이탈리아(각 -0.2 표준편차)의 학생들은 자기효능감이 가장 낮다고 보고했다 (그림 14.27).

방법론 및 개념정의

모든 수치의 데이터는 79개 국가의 15세 학생들의 읽기, 수학, 과학 능력을 평가한 2018년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에서 가져온 것이다. 일반적으로 표본은 2단계에 걸쳐 선택되었고, 1단계에서는 150개 학교의 대표 표본을 선정하였다. 2단계에서는 대표 학교당 약 42명의 학생들을 평가를 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하였다.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PISA)은부모의 가장 높은 교육 수준, 가장 높은 직업 지위, 집 소유의 세 가지 가족 변수를 활용하여, 학생들의 사회 경제적 배경을 계산하고 지수로 집계한다.

인지 능력 지수는 학생들이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학생들은 "나는 특이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다"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교류하는 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와 같은 6가지의 문항을 5점 척도("나와 매우 흡사하다"에서부터 "나와 전혀 흡사하지 않다")로 평가 했다. 글로벌 이슈에 관한 자기 효능감의 지수는 학생들이 특정 글로벌 역량 관련된 과제를 스스로 성취할 수 있는지를 의미한다. 학생들은 "이산화탄소 배출이 지구 기후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하라", "사람들이 난민이 되는 다양한 이유를 논의하라"와 같은 5가지의 과제를 4점 척도("나는 할 수 없다"에서부터 "나는 할 수 있다")로 평가했다.

해당 지수들의 평균값은 0이고 표준 편차는 OECD 국가 전체에서 1의 값을 갖는다. 양수 값은 학생들이 OECD 국가 전체에서 평균적인 학생들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참고문헌

OECD (2020), *PISA 2018 Results (Volume VI): Are Students Ready to Thrive in an Interconnected World?*,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d5f68679-en.*

OECD (2019), *PISA 2018 Results (Volume I): What Students Know and Can Do*, PISA,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f07c754-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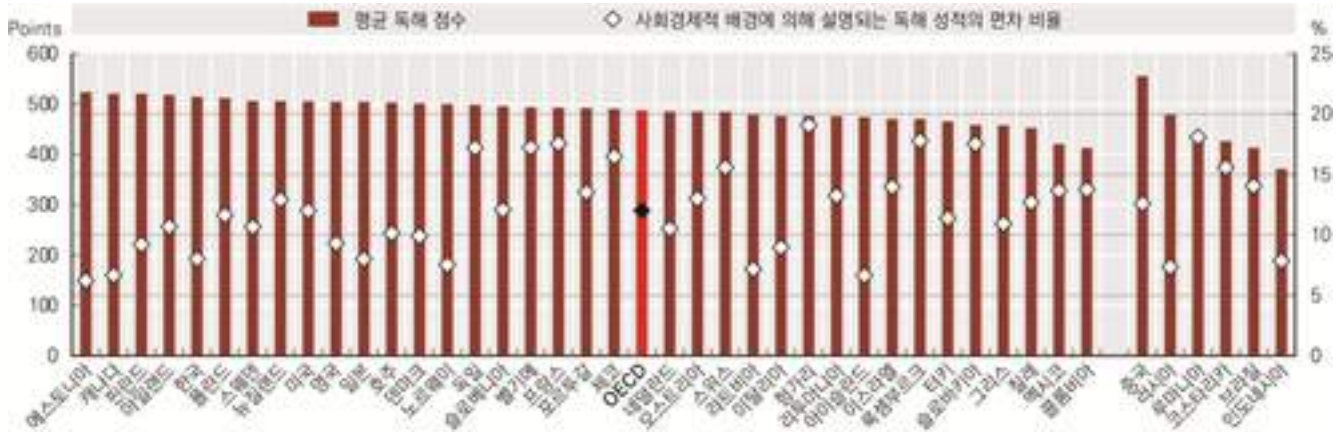
OECD (2012), *Equity and Quality in Education: Supporting Disadvantaged Students and School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9789264130852-en.*

그림 설명

14.24. 스페인에 대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중국에 대한 데이터는 베이징, 상하이, 장쑤 및 저장만 포함된다.

14.25 & 14.26. 벨기에, 체코, 덴마크, 핀란드, 일본,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및 미국의 데이터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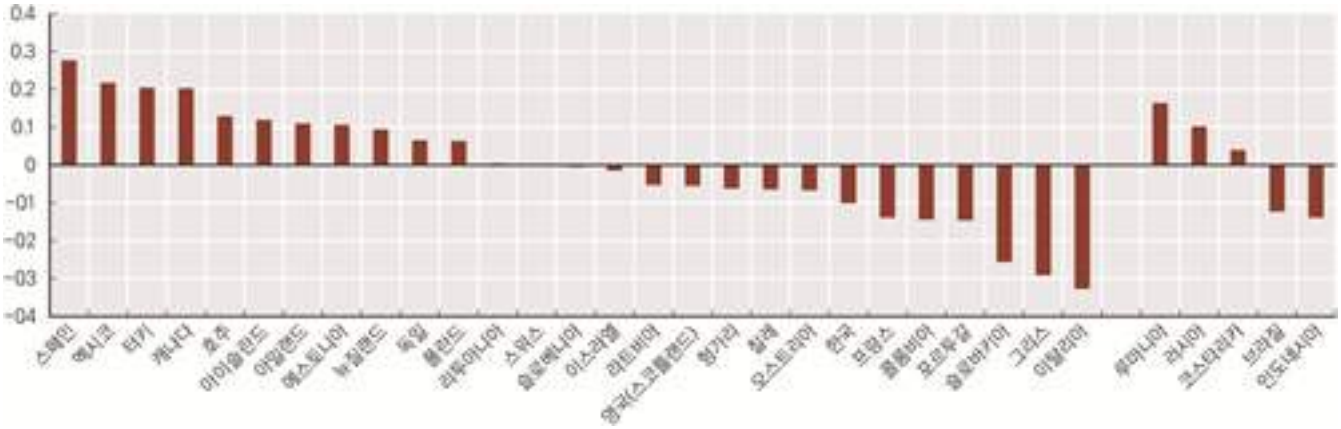
14.24. 평균 읽기 점수와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해 설명되는 편차 비율 (2018년)



출처: OECD (2019), *PISA 2018 Results (Volume II): Where All Students Can Succeed.*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8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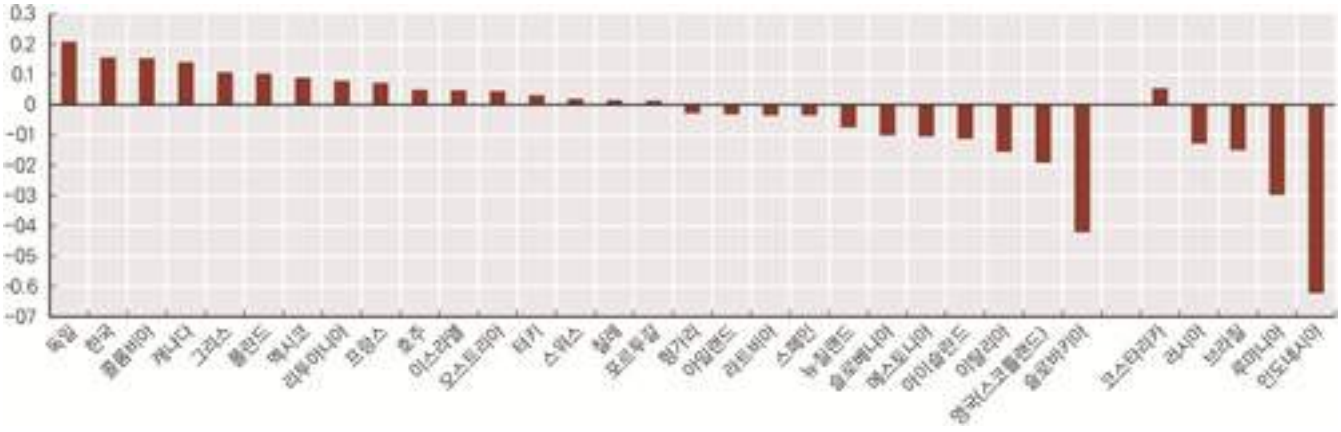
14.25. 인지 적응력 지수 (2018년)



출처: OECD (2020), *PISA 2018 Results (Volume VI): Are Students Ready to Thrive in an International World?.*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864

14.26. 글로벌 이슈에 관한 자기 효능감 지수 (2018년)



출처: OECD (2020), *PISA 2018 Results (Volume VI: Are Students Ready to Thrive in an International World?*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883 .

사법 제도의 효과와 공정성

사법 제도는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의 법적 요구가 충족되도록 하는 데 중요하다. 효과적이고 공정한 사법 시스템은 법률 정보에 대한 접근성, 공식적인 대안적 분쟁 해결(예: 법원)에 대한 법적 지원, 그리고 모든 대인과 집행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서비스의 연속성을 갖추고 있다 (OECD, 2019).

독립적인 사법 제도는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보장하는 데 중요하다. 체계적 수준에서 유럽 사법 위원회 네트워크(European Network of Councils of the Judiciary: ENCJ)는 사법부가 다수의 사법 구성원이 소속된 위원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통치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게다가 판사들의 판결은 소송 당사자들 간의 권력 불균형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개별 판사에 대한 압력은 사법 시스템 외부(예: 정부 또는 언론)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동료의 압력이나 상급자의 압력(예: 법원장이 적법한 절차 없이 법정에서 판사의 판결을 무효화)을 통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ENCJ, 2014).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 지수에 따르면, 사법부의 효과적인 집행과 정부의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는 상관관계 (R^2 = 0.52)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OECD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해 1.00점 만점에 0.73점, 사법부의 효과적인 집행에서 0.68점을 받았다.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독일,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두 가지 항목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14.27). 형사 사법은 사람들의 기본권과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민감한 유형의 정의이다. 한편, 피고인의 권리는 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 반면에, 법질서를 수호하고 위해로부터 피해자와 사회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에 대한 정당한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모든 관련 당사자들의 권리가 존중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법원의 결정은 법과 적시성에 기초할 필요가 있다.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에 따르면, 형사사법제도의 적시성과 효과성은 사람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인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R^2 = 0.59). 2020년 OECD 회원국들은 평균적으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인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에 대해 0.65점(최대 1.00점 만점)을 받았으며, 형사재판제도의 효과성과 적시성은 0.62점을 받았다. 오스트리아,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은 해당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형사재판제도의 적시성 및 효과성에 대한 칠레의 점수(0.59)는 사람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인 폭력 행사를 자제하는 정도(0.27점)에 거의 두 배이다(그림 14.28).

법치 지수에 따르면, 2016년과 2020년 사이에 OECD 국가들의 범죄 통제 능력은 안정적으로 유지 되었다. 두 해의 평균 점수는 0.85점이다. 노르웨이, 슬로베니아(모두 0.96점), 덴마크(0.95점), 폴란드(0.93점)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그림 14.29).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WJP)의 법치 지수에서 가져온 것으로, 각 국가의 3대 도시에서 1,000명의 응답자(대표)를 대상으로 한 일반 인구 조사와 민법 전문가(실무자 및 학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 기반하고 있다. 지수의 각 차원은 0에서 1 사이의 점수를 가지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차원에 대한 성과가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orldjusticeproject.org/us work/wjp-rule-law-index를 참조할 수 있다.

부적절한 영향으로부터의 자유는 소송 당사자가 국가를 상대로 승소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정부가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거나 법원에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등을 질문함으로써 측정한다. 사법 제도의 효과적인 집행은 법원 판결의 집행과 적시성 같은 문제들에 대해 질문한다.

형사판결제도의 효과성과 적시성은 피의자를 재판에 회부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재판 전 구금 기간, 강력범죄의 가해자가 붙잡혀 법정에 서는지 여부 등으로 판단한다. 사람들이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개인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해자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포함한다.

범죄의 효과적인 통제는 밤에 걸을 때 안전하다고 느끼는 시민들의 인식과 지난 1년 또는 3년(질문에 따라 다름)이내에 범죄의 피해자라고 인식하였는지의 여부에 기반한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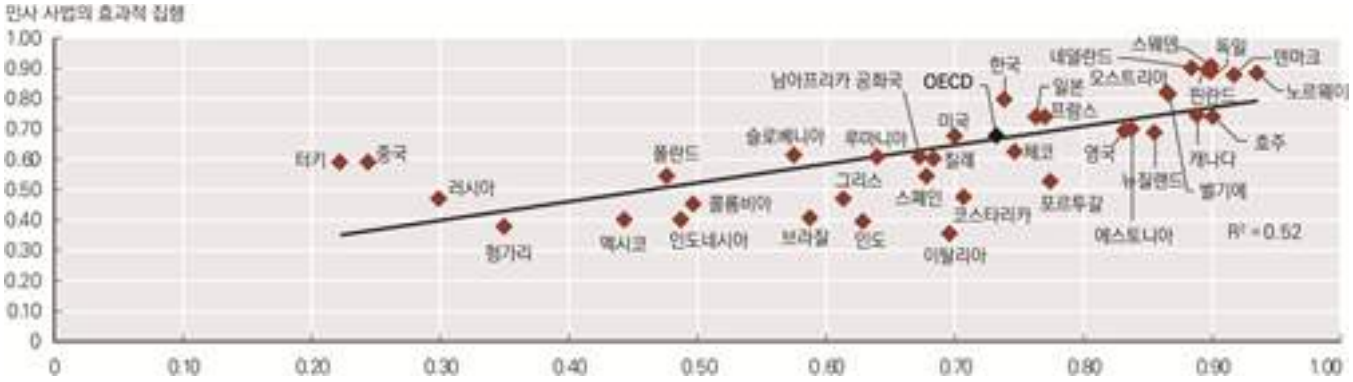
OECD (2019), *Equal Access to Justice for Inclusive Growth: Putting People at the Centre*,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597f5b7f-en.*

ENCJ (2014),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the Judiciary: ENCJ Report 2013-2014*, European Network of Councils of the Judiciary, Brussels, *www.encj.eu/images/stories/pdf/workinggroups/independence/encj_report_independence_accountability_adopted_version_sept_2014.pdf.*

그림 설명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슬로바키아 및 스위스의 데이터는 누락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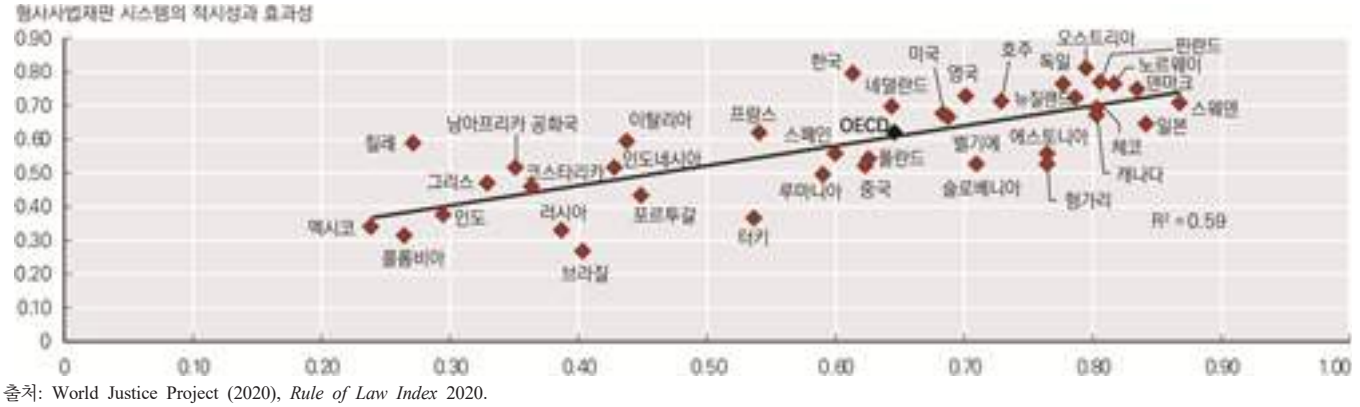
14.27. 민사 사법 서비스의 효과적인 시행과 부적절한 정부 영향으로부터의 자유 (2020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20), *Rule of Law Index*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9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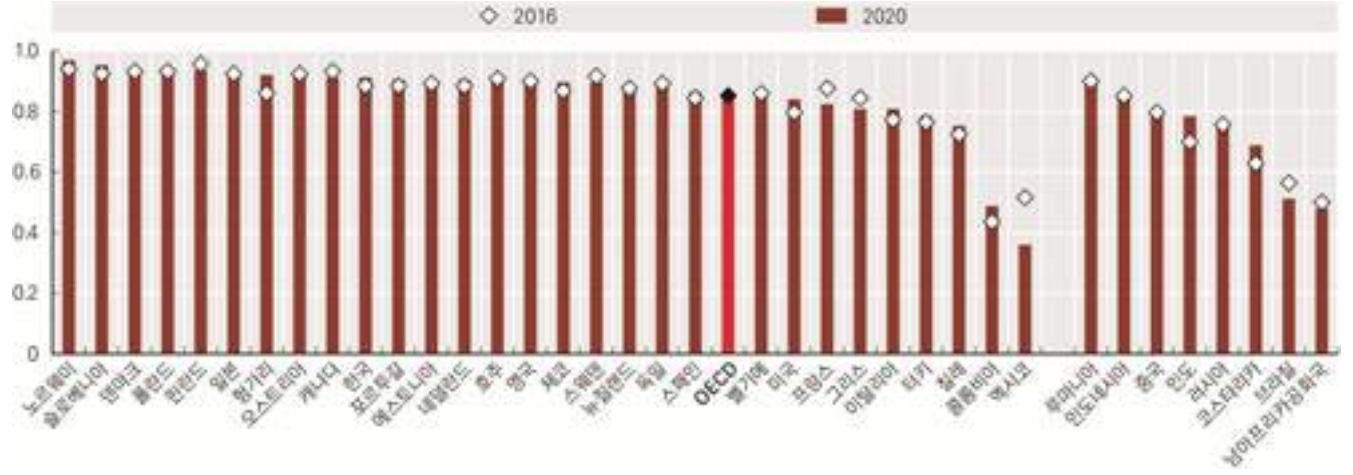
14.28. 형사사법재판소 판결 시스템의 효과성/적시성과 개인적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폭력 사용의 범위 (2020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20), *Rule of Law Index*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921

14.29. 범죄의 효과적인 통제 (2016년, 2020년)



출처: World Justice Project (2020), *Rule of Law Index* 202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940

청소년 서비스

15년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두 번의 세계적 위기를 겪은 세대로서,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자율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음을 깨닫고 있다. 청소년들은 이전의 세대들보다 가처분 소득이 더 적고, 25-64세에 비해 실업자가 될 가능성이 2.5배 높다. 코로나 19 위기는 청소년과 다른 연령층의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켜 세대 간 정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은 정신 건강과 주택에 대한 접근성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지난 한 해 동안 실업률의 증가로 가장 큰 타격을 받았다(OECD, 2021; OECD, 2020b). 동시에, 팬데믹 기간 동안 동료와 노인들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OECD, 2020a).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대응성, 질은 청소년들의 자율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요한 결정 요인이다. 2020년 OECD가 조사한 청소년 주도 단체는 스포츠, 문화, 여가 분야(평균 3.2점으로 측정의 단위는 1점에서 5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은 '매우 불만족', 5는 '매우 만족'을 의미함)에서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주거 분야(평균 2.1점)와 고용 분야(2.5점)에서는 공공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훨씬 낮았다(그림 14.30).

최근 몇 년 동안, 점점 더 많은 OECD 국가들이 청소년을 위한 공동 비전을 후원하는 정부 및 비정부 이해 관계자들을 통합하기 위해 국가 청소년 전략(National Youth Strategies: NYS)을 채택하였다(그림 14.31). 2020년에는 코스타리카와 루마니아뿐만 아니라 OECD 33개 국가 중 25개 국가(76%)가 국가 청소년 전략(NYS)을 보유하고 있었다. 이러한 전략의 대다수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대응성을 개선하고(84%) 청소년들의 다양한 관심사를 모든 서비스 영역에 통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OECD, 2020b).

많은 OECD 국가들은 교차-분야 접근 방식을 추구하며, 이들의 국가 청소년 전략(NYS)은 교육(25개 국가 중 24개 국가, 96%), 건강(25개 국가 중 23개 국가, 92%), 스포츠(25개 국가 중 21개 국가, 84%)를 포함한 광범위한 서비스 분야에 청소년들을 위한 책무를 포함한다.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도 이러한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청소년 단체의 만족도가 낮은 정책 분야는 정의(25개 국가 중 7개 국가, 28%), 교통(25개 국가 중 13개 국가, 52%), 주택(25개 국가 중 15개 국가, 60%)이며, 해당 분야에 초점을 맞추는 OECD 국가들은 거의 없다. 평균 만족도 점수는 5점 만점으로 주택 서비스 2.1점, 정의 2.5점, 교통 2.6점이었다. 아마도 이러한 서비스들은 정부가 청소년들의 요구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는 것보다 청소년들의 기대와 요구에 덜 반응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교육 및 의료 서비스에 대한 평균 만족도는 2.7점이었다(그림 14.30).

정책 입안자들은 정책과 서비스의 단편적인 제공을 피하기 위해 적절한 자원과 기술,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이 분야에서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이 꼽는 주요 장애물은 제도의 부족(45%)과 관련 부처(42%) 및 자체 부처(39%)의 역량 부족로 나타났다 (OECD, 2020b).

방법론 및 개념정의

"청소년"은 성인기로 정의되는데, 이것은 사람들의 삶에서 다양한 변화로 특징으로 한다. UN의 분류에 따르면, 15세에서 24세 사이의 사람들이 청소년에 속한다.

정부 기관의 데이터는 OECD 청소년 거버넌스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는데, 이 조사에 응답한 OECD 33개 국가뿐만 아니라 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도 응답하였다. 응답자들은 청소년, 교육 그리고 보건부 또는 국가 청소년 전략의 조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타 부처의 고위 관료들이다.

청소년 단체에 대한 데이터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1월 사이에 실시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으며, 65개 단체가 응답했다. 이 조사는 편의 표본 추출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과는 국가 수준에서 대표적이지 않으며 청소년 단체 모집단으로 추정할 수 없다. 응답자들은 OECD의 공식 계정을 통해 소셜 미디어에서 모집하였다. 최종 분석에는 단체의 활동을 나타낼 수 있는 타당한 URL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단체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응답자만을 포함하였다.

참고문헌

OECD (2021), Unemployment Rates, OECD website, *www.oecd.org/sdd/labour-stats/unemployment-rates-oecd-updatefebruary-2021.htm.*

OECD (2020a), "Youth and COVID-19: Response, recovery and resilience", *OECD Policy Responses to Coronavirus (COVID-19)*,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 10.1787/c40e61c6-en.*

OECD (2020b), *Governance for Youth, Trust and Intergenerational Justice: Fit for All Generations?,* OECD Public Governance Review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c3e5cb8a-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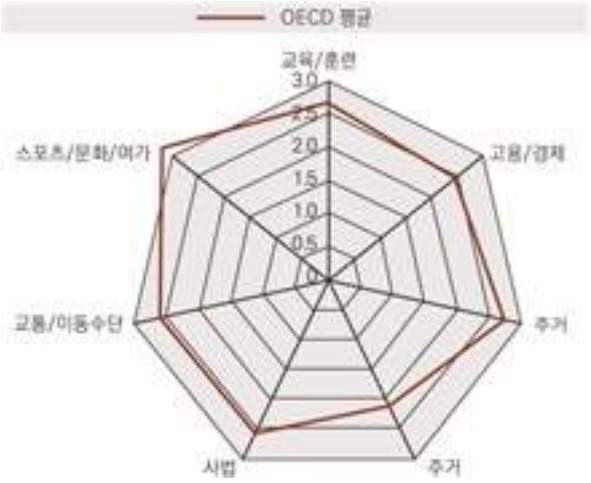
그림 설명

14.30. 질문에 대한 응답이 가능한 OECD 국가의 49~52개(응답 옵션에 따라 다름)의 청소년 단체를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다. 청소년 단체는 만족도를 1에서 5까지로 평가할 수 있으며, 1은 "매우 불만족", 5는 "매우 만족"이다.

14.31. 그래프는 OECD 청소년 거버넌스 조사에 응답한 OECD 33개 국가와 비회원 3개국(브라질, 코스타리카, 루마니아)의 결과를 나타낸다.

14.32. 데이터는 국가 청소년 전략(NYS)을 수립했거나 수립 중인 28개 국가(OECD 25개 국가와 3개 비회원국인 브라질, 코스타리카 및 루마니아)을 나타낸다.

14.30. 공공 서비스에 대한 청소년 단체의 만족도 (2020년)



출처: OECD (2020) *Survey of Youth Organisation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959

14.31. 국가/연방 수준에서 청소년 전략의 가용성 (2020년)

출처: OECD (2020) *Youth Governance Survey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978

14.32. 국가 청소년 전략의 주제 (2020년)

국가명	교육/훈련	고용/경제	건강	거주	사법	교육/이동수단	운동/문화/여가
호주	●	●	●	●	●	●	●
오스트리아	●	●	●	○	●	●	●
캐나다	●	●	●	○	○	○	○
스위스	●	○	●	○	○	○	●
콜롬비아	●	●	●	●	●	●	●
체코	●	●	●	○	○	●	●
독일	●	●	●	●	○	●	●
스페인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	○	●
그리스	●	●	●	○	●	○	●
헝가리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일본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라트비아	●	●	●	○	○	●	●
멕시코	●	●	●	●	○	●	●
노르웨이	●	●	●	●	●	○	●
뉴질랜드	●	●	●	●	○	○	●
포르투갈	●	●	●	●	●	●	●
슬로바키아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웨덴	●	●	●	●	○	○	●
터키	●	●	●	●	●	●	●
OECD 총계							
● 예	24	24	23	15	7	13	21
○ 아니오	1	1	2	10	18	12	4
브라질	●	●	●	○	●	●	●
코스타리카	●	●	●	●	○	○	●
루마니아	●	○	●	○	○	○	●

출처: OECD (2020) *Youth Governance Surveys.*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59997

디지털 시대에 사용자 중심의 공공 서비스 설계와 제공

경제와 사회가 점점 디지털화됨에 따라,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을 혁신하려는 노력은 새로운 형태의 분열과 배제로 이어질 수 있다. 마찬가지로, 서비스 디지털화를 위한 분야-기반 접근법은 정부 전체에 걸쳐 단편화를 증가시킬 수 있다. 디지털 정부 및 데이터 정책은 사용자의 최종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옴니 채널 서비스를 설계하고 제공하기 위한 정부 전체의 일관성 있는 접근방식을 지원한다. 디지털 정부 지수(DGI)는 디지털 시대에 서비스 설계와 제공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전략적 사용을 평가하고 벤치마킹한다(10장의 "디지털 정부: 디지털 역량 및 성숙도를 향한 발전"의 두 페이지를 참조).

공유 도구와 메커니즘은 수단과 조직에 걸쳐, 상호작용과 통합을 가능하게 하므로 서비스를 재고, 재설계, 단순화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2019년 OECD 29개 국가 중 27개 국가(93%)는 공통의 상호 운영성 분석틀을 가지고 있었고, 25개 국가(86%)는 기초 기록물과 동일한 숫자의 공유 ICT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다. 또한 OECD 29개 국가 중 26개 국가(90%)는 온라인 서비스 이용 시, 본인 확인이 가능한 단일 디지털 신원 확인 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었다(표 14.33). 그러나 이러한 시스템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의 절반을 보유한 국가는 65%에 불과하다.

사용자 중심 접근 방식은 서비스 설계 및 제공에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정부의 요구에 대한 대응하는 능력에 획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디지털 정부지수(DGI)에 속한 OECD 29개 국가 중 14개 국가(48%)만이 사용자를 서비스 설계(예: 공개 회의)에 참여시키고, 8개 국가(27%)는 서비스 제공(예: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사용)에 참여시킨다. 사용자 중심 접근 방식에는 최종 사용자를 참여시켜, 정부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역량을 테스트하고 평가하는 것을 포함한다. OECD 29개 국가 중 18개 국가(62%)는 최종 사용자를 디지털 사업/계획을 시험 및 평가 하는 데 참여시키는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반면, 15개 국가(52%)만이 이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예: 디자인 사고 기간). 디지털 정부 서비스에 대한 사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지표를 사용하는 국가(14개 국가, 48%)는 매우 적다(그림 14.34).

2019년 칠레, 콜롬비아 및 노르웨이는 이러한 서비스를 테스트하고 사용자 만족도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디지털 서비스 설계 및 제공에 사용자를 참여시키기 위한 공식 사항을 결합한 유일한 국가였다. 다른 국가들은 사용자의 관점을 이해하기 위해, 서로 다른 접근법을 취했다. 예를 들어, 일본은 모든 단계에서 사용자를 참여시키지만 만족도를 모니터링하지 않는 반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한국, 리투아니아 및 네덜란드는 사용자를 참여시키지 않고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를 모니터링한다. 디지털 기술은 취약한 인구 집단을 포함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OECD 29개 국가 중 18개 국가(62%)는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장애인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보고했으며, 14개 국가(48%)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노인들을 포함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고 보고했다. 9개 국가(31%)만이 여성을 포함하기 위해 유사한 노력을 실시했다고 보고했으며, 소수자와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을 포함하려는 노력은 각각 10개 국가(34%)에 불과했다(온라인 그림 G.41 참조).

방법론 및 개념정의

데이터는 디지털 정부 전략 위원회의 OECD 권고안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높은 수준의 디지털 성숙도를 향한 국가의 변화를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OECD의 디지털 정부 1.0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했다. 2019년에는 OECD 29개 국가와 OECD 주요 협력국(브라질) 1개 국가가 참여했다. 응답자는 디지털 정부 개혁을 주도하거나 집행하고 여러 공공 부문의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수집한 중앙 및 연방 정부의 고위 관료였다. 디지털 정부에 대한 정의는 10장을 참조 바란다.

상호 운영성은 ICT 시스템을 통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를 포함하여,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가 다른 시스템 또는 구성 요소와 효과적으로 상호 작용하거나 기능하는 능력을 말한다.

기초 기록물은 담당 행정 기관 또는 정부에 의해 임명된 조직의 통제 하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의 출처를 의미한다. 이들은 사람, 기업, 건물 등에 대한 정보를 보유할 수 있다.

참고문헌

OECD (2020), *Digital Government in Chile – Improving Public Service Design and Delivery*, OECD Digital Government Studies,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 b94582e8-en.*

OECD (2020), "Digital Government Index: 2019 results",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3,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4de9f5bb-en.*

그림 설명

호주, 헝가리, 멕시코, 폴란드, 슬로바키아, 스위스, 터키 및 미국은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다.

G.41. (2019년 서비스 제공에 선택된 그룹의 포함 및 참여를 보장/증가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주도되는 국가의 노력)은 부록 G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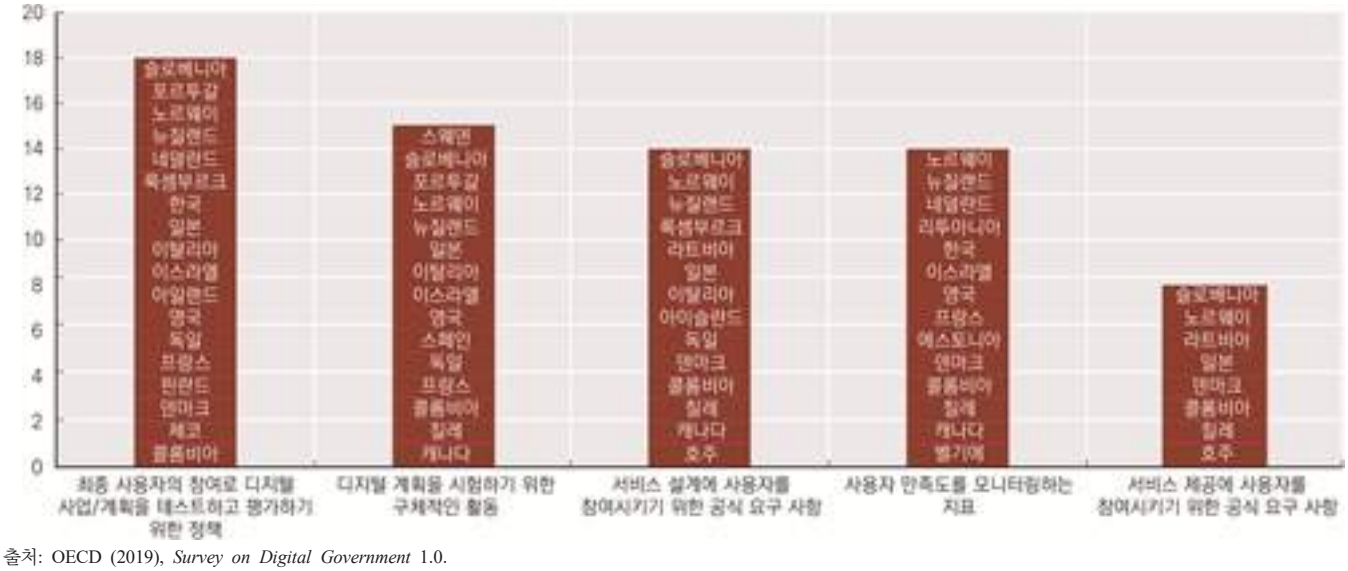
14.33. Use of digital frameworks and tools to enable omni-channel service delivery, 2019

국가명	공통 상호 운용성 분석틀	단일 디지털 신원 시스템	기초 기록물	ICT 인프라 공유	서비스 공유	개방 소스 소프트웨어 사용 지원	공통 데이터 아키텍처/인프라
오스트리아	●	●	●	●	●	●	●
벨기에	●	●	●	●	●	●	●
캐나다	●	●	●	●	●	●	○
칠레	●	●	●	●	●	●	○
콜롬비아	●	○	●	●	●	●	●
체코	●	●	●	●	●	●	●
덴마크	●	●	●	●	●	○	●
에스토니아	●	●	●	●	○	○	●
핀란드	●	●	●	●	●	○	●
프랑스	●	●	●	●	●	●	●
독일	○	●	●	●	●	●	●
그리스	●	○	○	●	○	○	●
아이슬란드	●	●	●	○	○	●	○
아일랜드	●	●	●	●	●	●	●
이스라엘	●	●	●	●	●	●	○
이탈리아	●	●	●	●	●	●	●
일본	●	●	●	●	●	●	●
한국	●	●	●	●	●	●	●
라트비아	●	●	●	○	●	○	○
리투아니아	○	●	●	●	○	○	○
룩셈부르크	●	●	○	●	●	○	●
네덜란드	●	●	●	●	●	●	●
뉴질랜드	●	●	○	●	●	●	●
노르웨이	●	●	●	●	●	●	●
포르투갈	●	●	●	●	●	●	○
슬로베니아	●	●	●	●	●	○	●
스페인	●	●	●	●	●	●	●
스웨덴	●	○	○	○	●	○	○
영국	●	●	●	○	○	○	○
OECD 총계							
● 예	27	26	25	25	24	19	20
○ 아니오	2	3	4	4	5	10	9
브라질	●	○	○	●	●	●	●

출처: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1.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60016

14.34. Adoption of people-driven approaches to design and deliver services by countries, 2019



출처: OECD (2019), *Survey on Digital Government* 1.0.

StatLink /https://doi.org/10.1787/888934260035

보고서 구조와 지표

한 눈에 보는 정부 시리즈는 OECD 회원국, 회원 후보국, 기타 주요 경제협력국의 정부 자원, 활동, 성과에 대한 비교가능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통해 각 국은 정부의 성과를 벤치마킹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국가의 발전을 추적할 수 있으며, 정책결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지표들은 공공거버넌스의 다양한 영역의 측정 기준으로 OECD 회원국을 넘어 중남미 지역과 동아시아 지역 및 서부 발칸 지역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제7판은 본 보고서의 트레이드마크인 핵심 지표 외에도 새로운 지표와 추가적인 데이터를 선정하여 제공함으로써 OECD 국가 전반의 공공행정 업무와 성과를 보다 완벽하게 파악할 수 있다. 제7판에서 제시된 지표 중 절반가량은 OECD 설문조사를 통해 정부 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한 일차 자료이다. 해당 설문조사는 OECD 국가들이 공공거버넌스에 관한 OECD의 권고 및 원칙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 외의 지표는 행정 자료(예: 공공재정), 가구 조사(예: 신뢰, 서비스 만족도, 정치적 효능감), 다른 기관이 수집한 전문가 평가 자료(예: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의 법치주의 지수)에 기초한 이차 자료에 해당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에서는 무엇이 새로워졌나?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매년 발간되는 보고서에 포함된 핵심적인 챕터와 새로운 특징들을 종합하여 제공하고 있다. 또한,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공공거버넌스의 영향을 반영하였다. 서론에서는 팬데믹의 영향에 대처하기 위한 각 국의 대응 조치에 관한 자료들을 제시하였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핵심 챕터에서는 지표와 관련한 가장 최신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핵심 챕터에는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제3장 공공고용, 제4장 공공기관, 제5장 예산제도와 관행, 제6장 인적자원관리, 제7장 규제거버넌스, 제8장 공공조달, 제13장 핵심 정부 성과, 제14장 대시민서비스가 포함된다.

새로운 지표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의 많은 핵심 챕터에서는 새로운 지표들을 제시하고 있다.

- 제5장 예산제도와 관행에서는 OECD 국가 전반에 공유되고 있는 관행과 새로운 추세가 등장하거나 통합되고 있는 분야와 관련된 특정 예산제도를 다룬다. 따라서 환경 친화적 예산 제도, 녹색 회복을 지원하는 환경 친화적 예산, 지출 검토 제도, 코로나19 발생 초기 단계에서 독립적 재정기구의 역할과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 제6장 인적자원관리에서는 사전채용제도의 활용, 고위공무원에 대한 관리 정책, 중앙정부 인력의 다양성 개발과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공공서비스의 코로나19 대응 인력관리와 공무원 설문조사를 통한 직원몰입 측정 결과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 제7장 규제거버넌스에서는 이해관계자 참여, 규제영향평가, 사후평가에 관한 서술 정보와 주요 부문(에너지, 전자통신, 철도운송, 항공운송 및 수자원)에 대한 규제기관의 독립성, 책무성, 성과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 제8장 공공조달의 핵심 지표로는 기업책임경영을 포함한 전략적 공공조달, 긴급조달과 위험 관리, 공공조달의 전문화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 공공조달의 위험관리, 집권화된 역할을 포함한 공공조달 역량 및 성과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 제13장 핵심 정부 성과에서는 산출 및 결과지표를 강조하기 위하여 내적 정치 효능감 또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 역량과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1차 대유행 기간 동안 정부와 여타 기관(의회, 경찰 등)의 신뢰 수준 변화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새로운 특징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의 새로운 특징은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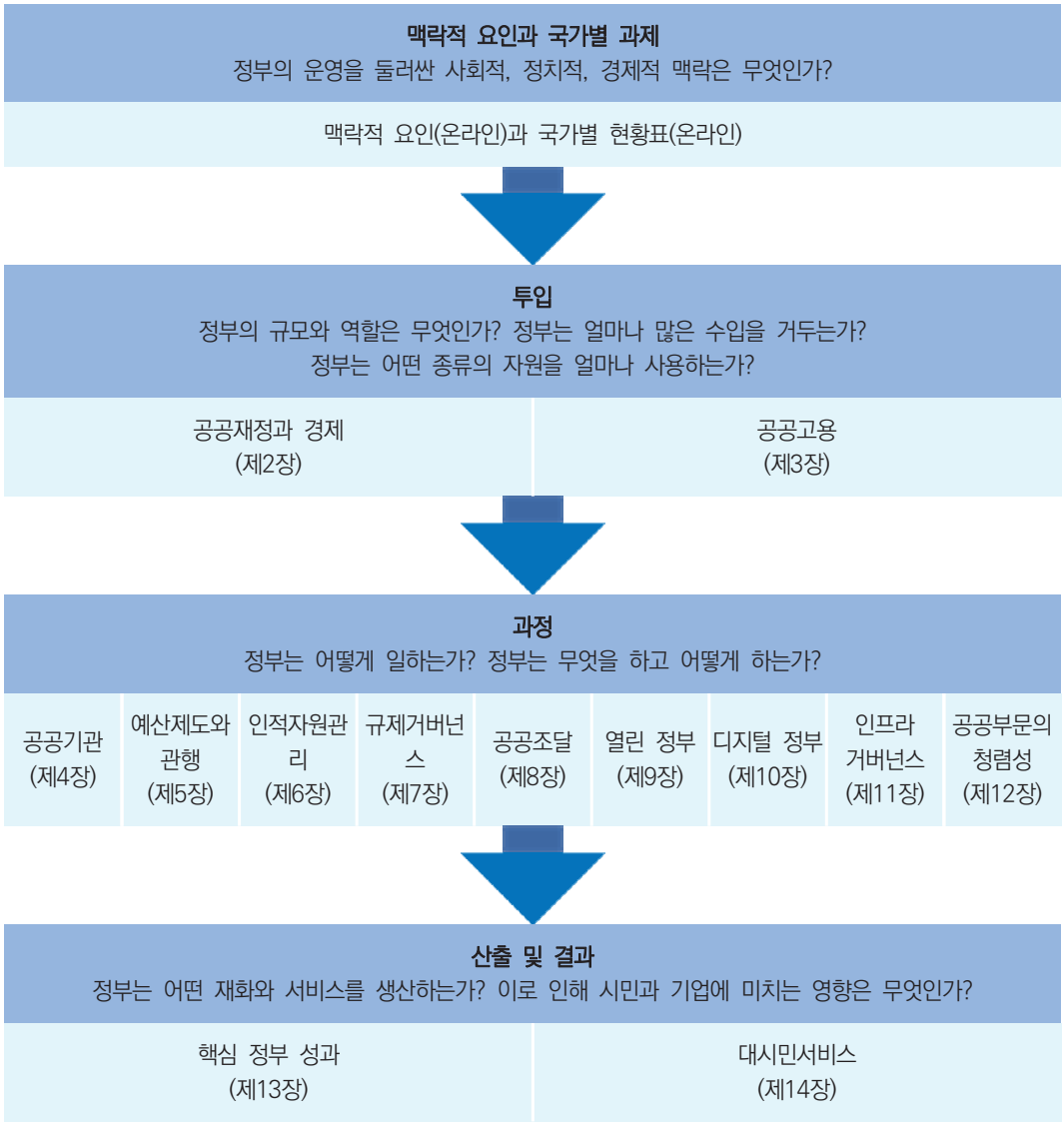
- 제4장에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공공 커뮤니케이션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지표들이 포함되었다. 기존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던 정부수뇌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더해 제7판에서는 위기 커뮤니케이션과 코로나19 팬데믹의 즉각적이고 계획된 대응 조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제 9장 디지털 정부와 공공데이터 개방에서는 2017년 열린 정부에 관한 OECD 권고안 수립을 위해 만들어진 새로운 설문조사 자료가 반영되었다. 해당 설문조사에는 행정 분야에서 열린 정부 수립 역량, 시민과 이해관계자 참여 포털, 정보 접근성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다.
- 제10장 디지털정부에서는 새로운 지표로 디지털정부지수(DGI)의 결과와 행정부의 전략적 자산으로서 데이터의 역할을 제시하였다.
- 제11장 인프라 거버넌스는 한 눈에 보는 정부 보고서에 처음으로 포함되었다. 제11장 인프라 거버넌스에 활용된 설문지는 2020년 인프라 거버넌스에 관한 OECD 권고안의 이행 여부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제12장 공공부문의 청렴성에는 2017년 공공 부문 청렴에 관한 OECD 권고안과 로비 활동의 투명성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여 청렴 전략의 수립 여부를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가 포함되었다.

본 보고서의 체계와 구조

한 눈에 보는 정부 는 기본적으로 37개 OECD 회원국들의 자료를 포함하나, 가능한 경우 세계경제와 국제정치구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 후보국(코스타리카)과 기타 주요 경제 협력국(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남아공)의 자료도 포함한다. 보고서 작성 당시 코스타리카는 회원 후보국으로 OECD 평균에 포함되지 않았다. 코스타리카는 한 눈에 보는 정부 제8판부터 OECD 회원국에 포함될 예정이다.

한 눈에 보는 정부 제7판에는 투입, 과정, 산출, 결과 지표와 함께 맥락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하의 그림은 한 눈에 보는 정부의 개념적 틀을 보여준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의 개념적 틀



맥락

맥락적 요인(온라인)은 OECD 국가의 정치·행정 구조의 주요 특징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국가 간 제도적 차이와 유사성을 이해하고, 다른 국가의 제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는 맥락적 정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국가별 현황표(온라인)는 OECD 회원국과 일부 회원 후보국의 공공부문 개혁에 있어 특정한 맥락에 따라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데이터들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에 대한 국가별 현황을 제공한다.

투입

투입은 정부가 공급기능을 수행하는데 사용하는 자원뿐만 아니라 자원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를 나타낸다. 이때 자원은 노동과 자본을 의미한다.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 제3장 공공고용에서는 정부지출, 생산비용, 고용 및 공공부문의 인력 구성 등 주로 투입지표에 대해 설명한다. 국가 간 투입지표의 비교를 통해 공공재를 공급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정부의 다양한 역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제1장에서는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정부의 정보와 공공 자산이 새로운 투입지표로서 중요해지고 있음을 논의한다.

과정

과정은 정부가 정책을 집행하는데 필요한 공공관리 제도와 절차를 나타낸다. 즉, 행정기관이 직무를 수행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들을 의미한다. 이는 결과적으로 법치주의, 정부의 책무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은 이러한 과정의 개혁을 목표로 실시되기도 한다. 따라서 국민들은 공공부문의 개혁에 대해 관심이 많다.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기관, 예산제도와 관행, 인적자원관리, 규제거버넌스, 공공조달, 열린 정부 데이터, 디지털 정부 전략의 거버넌스, 인프라 서버넌스, 공공부문의 청렴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제4장-제12장).

산출 및 결과

산출과 결과의 구분은 모호한 측면이 있다. 산출물은 정부가 공급한 재화와 서비스의 양을 의미하는 반면, 결과는 정부의 정책과 제도가 시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한다. 정부 정책의 성과는 일차적으로 산출 지표에 의해 측정되어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정책이 달성한 결과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결과는 정부 사업과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미치는 효과(예: 후생 증진, 건강 개선, 교육/학습 향상)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정부 사업과 서비스의 질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시민들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개인의 행태적 특성 등 다른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은 제13장과 제14장에서 산출과 결과를 측정한다.

- 제13장 핵심 정부 성과에서는 정부 신뢰도, 법치주의(법의 지배), 소득재분배, 공공부문의 효율성(산출 중심), 비용효과성(결과 중심) 등 정부 전체에 대한 성과측정의 결과를 보여준다.
- 제14장 대시민서비스에서는 공공부문의 활동의 산출물과 결과를 분야별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대시민 성과표는 OECD 국장들이 개발한 후 OECD 회원국들과 협의를 통해 결정된 대시민서비스에 대한 분석 틀이다. 제14장은 대시민 서비스의 접근성, 대응성, 질에 대한 측정 결과를 제공한다. 제7판은 보건의료, 교육, 사법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대시민서비스 분석 틀의 지표 선정에 대한 강건성 테스트를 수행하는 방법론 논문은 본 보고서와 함께 출판될 예정이다.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 OECD 2021

향후 과제

한 눈에 보는 정부를 발간하기 위해 OECD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정부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데이터 중복 수집을 피할 수 있도록 국제노동기구(ILO), 세계 사법정의 프로젝트, 사법 효율을 위한 유럽위원회(CEPEJ), 갤럽 및 유럽위원회와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한 눈에 보는 정부에 포함된 국가 간 비교가능한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해나갈 것이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다음 개정판에서는 이하의 주제를 다룰 계획이다.

- OECD 유럽연합 회원국 외의 국가를 대상으로 정부기능별 공공재정과 정부지출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확대해나갈 것이다.
- 인프라 거버넌스, 환경 친화적 예산, 열린 정부 분야의 중간 결과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종합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 주요 공공거버넌스 원칙 또는 시민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분야(예:민주주의 만족도)에 대한 새로운 결과 지표를 제공할 계획이다.
- OECD 신뢰 설문조사의 가구 조사를 활용하여 공공기관 신뢰 수준과 그 결정요인(대응성, 신뢰성, 투명성, 청렴성, 공정성)에 관한 비교 자료를 만들 계획이다.
- 시민에 대한 행정 서비스 전달 체계를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예정이다.
- 기능별 공공 지출의 최신 경향을 반영한 비통합 데이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 텍스트 마이닝 또는 빅데이터와 관련된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대시보드와 질적 변수를 포함한 종합지수를 개발하기 위한 방법론을 활용하기 위해 OECD 사무국과 다른 OECD 국과의 심화된 작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지역판

한 눈에 보는 정부 : 서발칸반도 지역의 초판은 2020년 6월, 중남미 지역의 제3판은 2020년 3월 출간되었다. 한 눈에 보는 정부 : 동아시아 지역의 초판은 2019년 9월 출간되었다. 한 눈에 보는 정부는 중남미 지역, 동아시아 지역, 서발칸반도 지역의 공공 행정에 관한 최신의 자료를 제공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지역판을 통해 OECD 회원국 외에 28개 국가의 데이터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공공거버넌스에 관한 모든 데이터와 지표는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OECD 공공행정국에서 한 눈에 보는 정부의 발간을 위해 수집한 모든 자료는 온라인(https://www.oecd.org/gov/govataglance.htm)을 통해 얻을 수 있다.

본 보고서에 제시된 데이터를 추가적인 분석과 연구에 활용하는데 관심이 있는 독자들은 한 눈에 보는 정부에 제시된 정의, 출처, 방법론에 대한 원본을 온라인을 통해 얻을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통계자료에는 공공부문의 투입, 과정, 산출, 결과에 대한 질적·양적 지표들이 포함되며, 새로운 데이터가 발행될 때마다 정기적으로 업데이트 하고 있다.

부록 A.

국가별 국민계정통계의 보고 체계 및 출처

표 A.1. **OECD 국가의 보고 체계 및 출처**

국가명	비금융계정	금융계정
OECD 회원국		
호주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오스트리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벨기에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캐나다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칠레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non-consolidated
콜롬비아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체코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덴마크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에스토니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핀란드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프랑스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독일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그리스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헝가리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아이슬란드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아일랜드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이스라엘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이탈리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일본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표 A.1. **OECD 국가의 보고 체계 및 출처** (계속)

국가명	비금융계정	금융계정
한국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라트비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리투아니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룩셈부르크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멕시코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non consolidated
네덜란드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뉴질랜드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non consolidated
노르웨이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폴란드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포르투갈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슬로바키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슬로베니아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Eurostat Government financial statistics, Annual financial accounts for general government, consolidated*
스페인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스웨덴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스위스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터키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영국	ESA2010;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미국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consolidated
OECD 회원 후보국		
코스타리카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1993 (GFSM2001)
러시아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General government accounts	SNA2008; OECD Annual National accounts, Financial balance sheets, non consolidated

주) * 해당 국가들의 금융계정 자료는 Eurostat에서 제공하는 가장 최신의 자료(연 2회 갱신)를 활용하였다. 이 외에 다른 국가들은 OECD 국민계정통계로 가장 최신의 자료를 보고하고 있다.

부록 B.

정부 총수입

표 B.1은 제2장 “공공재정과 경제”에 제시되어 있는 조세, 순사회보장기여금, 판매 수입, 보조금 및 기타 수입 등 정부의 총수입이 국민계정체계 및 OECD 국민계정통계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제공해준다.

표 B.1. **정부 총수입**

본 보고서 상의 총수입	국민계정체계 상 총수입	OECD 국민계정통계상 코드 (일반정부의 총수입)
조세 (Taxes)		
간접세 (Indirect taxes)	생산 및 수입세, 수취 (Taxes on production and imports, receivable)	GD2R
직접세 (Direct taxes)	소득 및 부에 대한 경상세, 수취 (Current taxes on income and wealth, receivable)	GD5R
자본세 (Capital taxes)	자본세 (Capital taxes)	GD91R
순사회보장기여금 (Net social contributions)	순사회보장기여금 (Net social contributions)	GD61R
판매 (Sales)	시장산출액 (Market output and output for own final use) 기타 비시장 산출에 대한 지출 (Payments for other non-market output)	GP11_P12R GP131R
보조금 및 기타 수입		
경상 및 자본 보조 (Current and capital grants)	기타 경상이전, 수취 (Other current transfers, receivable)	GD7R
	기타 자본이전 및 투자 보조금, 수취 (Other capital transfers and investment grants, receivable)	GD92R_D99R
보조금 (Subsidies)	보조금, 수취 (Other subsidies on production, receivable)	GD39R
재산소득 (Property income)	재산소득, 수취 (Property income, receivable)	GD4R
총수입 (Total revenues)	총수입 (Total revenues)	GTR

부록 C.

정부기능별 분류(COFOG)

OECD는 국민계정체계의 정부지출 자료를 목적에 따라 분류하기 위한 정부기능별 분류(Classification of the Functions of Government; COFOG) 방식을 개발하였다. 표 C.1에 제시되어 있듯이, 정부지출은 기능별로 10개의 분야(경제활동, 교육, 사회보호 등)로 분류되며, 각각의 분야는 하위 부문(최대 9개)으로 분류된다. 정부기능별 분류 중 분야별 정부지출(시계열 자료) 자료는 시계열 자료의 결측여부에 의해 전체 OECD 국가(37개국) 중 33개 국가에 대해서만 활용할 수 있는 반면, 부문별 정부지출은 일반적으로 호주,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 OECD 유럽국가에 사용할 수 있다.*

표 C.1. **분야 및 부문별 정부기능별 분류**

분야	부문
일반공공행정	● 행정 및 입법기관, 금융 및 재정, 국외 업무 ● 해외 경제 원조 ● 일반 서비스 ● 기초연구 ● 일반공공행정 R&D ● 기타 미분류 일반공공행정 ● 공공 채무 거래 ● 정부 간 일반 이전
국방	● 군사 방어 ● 민방위 ● 해외 군사원조 ● 국방 R&D ● 기타 미분류 국방
공공질서 및 안전	● 경찰서비스 ● 소방서비스 ● 법원 ● 교도소 ● 공공질서 및 안전 R&D ● 기타 미분류 공공질서 및 안전

* 캐나다, 칠레, 멕시코의 분야별 정부지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는 일부 국가의 통계청에서 이용할 수 있었으나, 국제기구 차원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다.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는 모든 국가, 모든 시점에 대해서 완전한 비교가 불가능하다. 이는 국민계정체계 (SNA) 및 국제연합(UN)의 가이드, 국제통화기금(IMF)의 정부재정통계(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매뉴얼에서 정부기능별 분류의 적용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2005년 유럽 통계청(Eurostat)은 국민계정통계의 정부지출 자료에 정부기능별 분류를 적용하기 위한 가이드를 만들고, 유럽 국가들의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를 조사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ask force) 팀을 만들었다. OECD 국가 중 호주, 콜롬비아, 이스라엘, 일본을 제외한 몇몇 비유럽국가들의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는 제공되지 않는다. 또한 유럽 연합에 속한 국가들 중에서도 정부기능별 분류를 택하고 있는 일부 국가의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만 이용할 수 있다. OECD는 회원국들이 부문별 정부지출 자료를 제출하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표 C.1. **분야 및 부문별 정부기능별 분류 (계속)**

분야	부문
경제활동	● 일반 경제, 상업, 노동 ●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 ● 연료 및 에너지 ● 광업, 제조, 건설 ● 운송 ● 통신 ● 기타 산업 ● 경제활동 R&D ● 기타 미분류 경제활동
환경보호	● 폐기물 관리 ● 폐수 관리 ● 공해 방지 ● 생물 다양성 및 경관 보호 ● 환경보호 R&D ● 기타 미분류 환경보호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 주거 시설 개발 ● 지역사회 시설 개발 ● 수도 공급 ● 가로등 ●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R&D ● 기타 미분류 주거 및 지역사회 시설
보건	● 의료 제품, 기기, 장비 ● 외래 환자서비스 ● 병원서비스 ● 공공 보건서비스 ● 보건 R&D ● 기타 미분류 보건
휴양, 문화, 종교	● 휴양 및 스포츠 서비스 ● 문화 서비스 ● 방송 및 출판 서비스 ● 종교 및 기타 공동체 서비스 ● 휴양, 문화, 종교 R&D ● 기타 미분류 휴양, 문화, 종교
교육	● 유아 및 초등교육 ● 중등교육 ● 2차 중등교육 ● 고등교육 ● 등급 외 교육 ● 교육 보조 서비스 ● 교육 R&D ● 기타 미분류 교육
사회보호	● 질병 및 장애 ● 노령 ● 유족 ● 가족 및 자녀 ● 실업 ● 주거 ● 기타 미분류 사회적 배제 ● 사회보호 R&D ● 기타 미분류 사회보호

부록 D.

직업의 분류 및 정의

'직업의 분류'에 관한 자료는 2020년 OECD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에 관한 설문조사에 기반한 결과이며, 2020년 '직업의 정의'는 2020년 OECD의 중앙 및 연방정부의 공무원 구조에 관한 설문조사와 동일한 정의를 사용하였다. 직업의 분류는 크게 4개의 대분류로 구성된다.

직업의 분류와 정의는 국제노동기구(ILO)에 의해 개발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08)를 재구성하였다. 직업의 정의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www.ilo.org/public/english/bureau/stat/isco/isco08/index.htm에서 이용할 수 있다. 한편, 각 국가마다 법과 행정제도, 직업 체계가 상이하여 모든 국가에 일률적으로 국제표준직업분류(ISCO)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를 재구성하여 적용하였다.

표 D.1. **직업의 분류 및 정의**

고위 관리자
D1 관리자 (ISCO-08 1112)는 장관 또는 국무장관/차관 바로 아래 직급인 고위 공무원과 정부 또는 정부수반에 의해 임명된 고위 공무원을 의미한다. D1관리자는 정책 문제에 대해 정부에 조언하고, 정부 정책의 집행을 감독하며, 정책 이슈를 해석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집행권을 갖는다. D1관리자는 내각/각료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주어지지만, 내각/각료회의의 구성원은 아니다. D1관리자는 부처/국무부 또는 특정한 행정 분야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이를 관리한다. 책임운영기관, 지방 분권화, 수평형 조직, 자율적인 관리자 제도를 가진 국가에서는 국장급 공무원이 D1관리자에 포함된다.
D2 관리자 (ISCO-08 11, 112)는 D1관리자 바로 아래 직급을 의미한다. D2관리자는 다른 관리자의 지원 하에 정책을 수립하고 검토하며, 부처 또는 특정 부서의 전반적인 활동을 기획, 지시, 조정, 평가한다. D2관리자는 고위 공무원단에 포함되기도 한다. D2관리자는 서로 다른 정책 분야의 전문 팀에게 업무·리더십 프로그램의 조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공한다. D2관리자는 자신이 감독하는 특정 행정 단위/부서의 목표, 전략, 프로그램을 결정한다.
중간 관리자 (최소 3명의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
D3관리자 (ISCO-08 12)는 D2관리자 바로 아래 직급을 의미한다. D3관리자는 이사회에 의해 수립된 지침 내에서 다른 관리자들을 지원하고, 부처 내의 특정 부서/행정 단위의 일반적인 기능을 기획, 지시, 조정한다. D3 관리자는 자신이 담당하는 특정 과(division)에 한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이를 관리한다. D3관리자는 과 단위의 업무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직원을 관리한다. D3관리자는 예산의 편성 및 관리, 지출의 통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다른 팀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한다.
D4 관리자 (ISCO-08 121)는 D3관리자 바로 아래 직급을 의미한다. D4관리자는 정책 조언, 전략적 계획, 재정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정 및 운영한다. D4관리자는 운영 및 행정 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지시하며, 고위 관리자에게 정책적 조언을 제공한다. D4관리자는 직원의 선발, 교육훈련, 성과관리, 예산의 편성, 재정 운영의 감독, 지출의 통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D4관리자는 팀(team)단위에서 리더십을 발휘한다.
전문가
선임급(senior) 경제학자/정책분석가 (ISCO-08 242, 2422)는 관리의 책임이 없거나 최대 3명 이하의 직원에 대해서만 관리의 책임이 주어지는 직급으로, 행정직/비서직 직원과 하위직 전문가에 비해 직급이 높은 전문가를 의미한다. 보통 선임급 전문가는 학위를 소지해야 한다. 선임급 전문가는 그들의 업무 분야 혹은 다양한 프로젝트에 대해 책임을 갖고, 정부 운영과 사업의 설계, 집행, 조정을 위해 정책을 분석하고 개발한다. 선임급 전문가는 기존의 정책과 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낡은 규정을 파악한다. 이들은 정책 변동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요약보고서 및 권고안을 준비한다. 또한, 공공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타당성, 행정적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선임급 전문가는 경력에 따라 전문가 직급에 포함될 수 있다. 선임급 전문가의 전공 분야는 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국제관계학, 공학, 환경학, 교육학, 보건경제학 등 다양하다. 선임급 전문가들은 적어도 5년 이상의 전문 경력을 보유해야 한다.
전임급(junior) 경제학자/정책분석가 (ISCO-08 242, 2422) 는 행정직/비서직 직원에 비해 직급이 높은 전문가를 의미하며,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책임이 없다. 전임급 전문가는 정부 운영과 사업의 설계, 집행, 조정을 위해 정책을 분석하고 개발한다. 또한 기존의 정책과 법을 검토하여 불합리한 규정과 낡은 규정을 파악한다. 전임급 전문가는 정책 변동을 위한 정책 대안들을 검토하고 분석하며, 요약보고서 및 권고안을 준비한다. 또한, 공공정책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정치적 타당성, 행정적 타당성 등을 평가한다. 전임급 전문가의 전공 분야는 법학, 경제학, 정치학, 행정학, 국제관계학, 공학, 환경학, 교육학, 보건경제학 등 다양하다. 전임급 전문가들은 적어도 5년 이하의 전문 경력이 요구된다.

표 D.1. **직업의 분류 및 정의**(계속)

비서직
비서직(일반사무직) (ISCO-08 411, 4110) 직원은 일반적으로 학위를 요구하지 않음에도 학위 소지자가 많다. 일반사무직 직원은 자금 관리, 출장 준비, 정보 요청, 일정 관리 등의 광범위한 사무 및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이들은 자료를 기입, 기록, 준비, 정리, 분류하고, 우편물을 정리, 개봉, 발송하며, 보고서와 서신을 준비한다. 또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장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하며, 전화 혹은 전자 문의에 응답하거나 이를 담당자에게 전달한다. 일반사무직 직원은 금융거래의 세부정보를 기록하고, 수치를 확인하며, 청구서를 준비한다. 또한 컴퓨터에 정보를 기록하고, 문서를 교정한다. 일반사무직 직원 중 일부는 예산 편성, 지출 모니터링, 계약서 및 구매(매입) 주문서 작성 업무를 지원하기도 한다. 일반사무직 직원의 상위 감독자는 해당 직급에서 제외된다.

부록 E.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에 관한 종합지수에 관한 방법론

1. 인적자원관리(HRM) 종합지수에 사용된 자료는 2020년 OECD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에 관한 설문조사와 2020년 OECD의 중앙 및 연방정부의 공무원 구조에 관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기반으로 구성하였다. 설문 응답자는 주로 중앙정부의 인적자원관리 부처의 고위직 공무원이고, 자료는 중앙정부 수준의 인적자원관리 제도만을 설명한다.

2. 개별 종합지수는 각각의 분야에서 합의된 개념을 나타내는 이론적 분석틀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 분석틀은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에 관한 OECD 권고(PSLC)(OECD, 2019) 특정 원칙을 참고한 합목적적 공공서비스 표준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기반으로 구성된다. 각 지표는 전문가와 긴밀히 협력하여 구성되었고, 공공 고용 및 관리에 대한 특별팀의 대표가 검토 및 검증한다.

3. 각각의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은 합의된 개념과의 관련성을 기준으로 선택하였으며, 세 가지 복합지표에는 사전채용관행 정도, 고위공직자 수준에서의 공공공서비스 관리, 인력의 다양성 개발과 같이 21세기 공공부문의 인적자원을 가장 잘 관리하는 방법에 관련하여 현대 공공부문 인적자원관리의 발전 및 딜레마를 측정하기 위한 세 가지 복합지표가 개발되었다.

4. 국가 간 비교를 할 시, 중앙정부 수준에서 통치하는 조직에 대한 정의 및 공공서비스의 정의가 국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한다.

5. 종합지표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표를 만드는 데 사용한 설문문항은 국가마다 동일하므로 지표 간 비교는 가능하다. 하지만 공공고용관리 데이터베이스 상의 결측치 문제가 존재하였는데, 결측치는 평균대체, 전문가 판단 및/또는 각 종합지표 계산에서 대상 국가를 제외하는 것을 포함해 결측된 정보의 특성에 따라 결측값을 추정하기 위한 다양한 통계적 기술이 활용되었다. 척도도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모든 하위 지표와 변수는 지표의 최종 계산 전 '0과 1사이로 정규화 하였다.

6. 요인 가중치(factor weight), 균등가중치(equal weight)를 비롯한 여러 가중치 계산방법을 확인한 후, 전문가 판단에 따라 사전채용 관행 활용 지표를 균등가중치로 구성하였고, 고위공무원단 관리에 대한 지표는 각 하위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와 전체 지표를 구성하는 하위 지표의 균등가중치를 적용하여 구성하였다. 중앙정부 인력의 다양성 지표는 전술한 두개 지표와는 다른 가중치 방법을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종합지표를 구축하기 위해, 모든 하위 지표는 적절한 방법론에 따라 선형방법론을 활용하여 통합하였다. 또한 각 지표를 구성하는 변수들 간 상관관계를 설정하고, 설문문항의 내적일치도에 대한 신뢰도를 검정하였다(예: Cronbach's Alpha). 이는 지표에 포함된 변수들이 각각의 가치를 지니지만 내부적 일관된 개념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가중치 적용방법에 대한 지표의 강건성(robustness)을 확인하기 위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Monte Carlo simulation)을 활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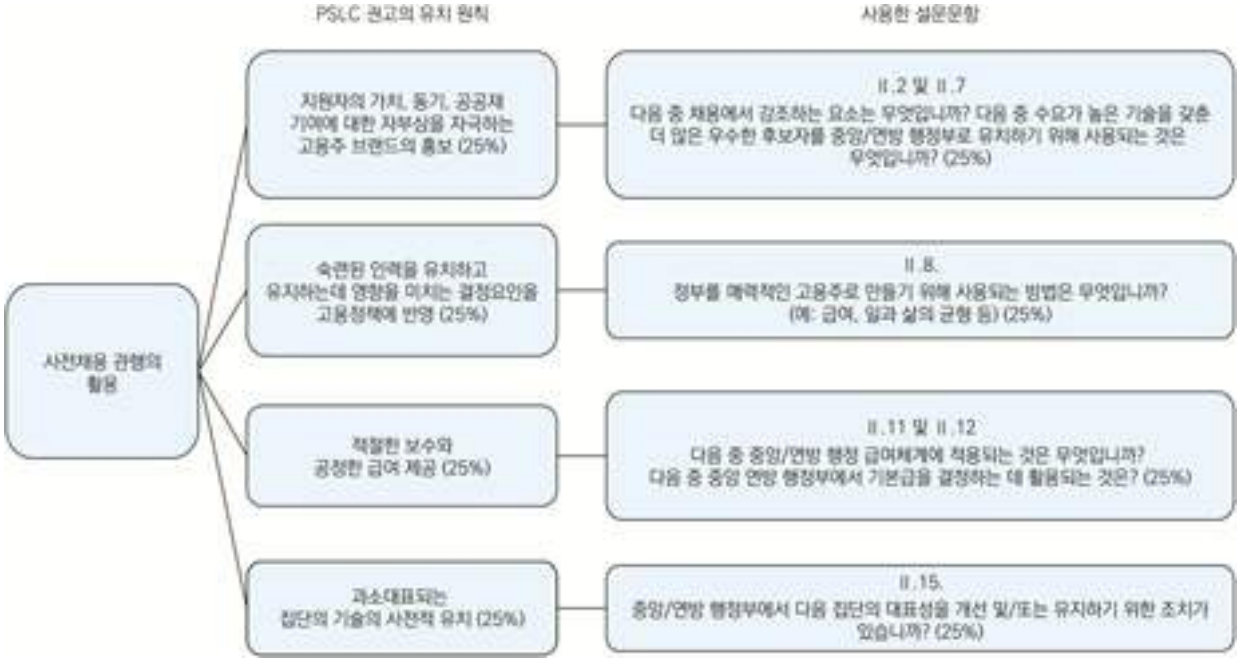
예비 종합 지표 6.1. 사전채용 관행의 활용

7.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에 관한 OECD 권고(PSLC)는 정부에게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과 역량을 갖춘 직원을 유치할 것을 요구한다. 왜냐하면, 오늘 날 정부는 새롭게 나타나는 정책 및 서비스 제공 상의 문제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점점 더 다양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유치하고 채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를 시행하기 위한 방법은 구체적으로 1) 지원자의 가치, 동기, 공공재 기여에 대한 자부심을 자극하는 고용주 브랜드의 홍보하고 2) 숙련된 인력을 유치하고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고용정책에 반영하는 한편, 3) 적절한 보수와 공정한 급여를 제공하고, 4) 과소대표되는 집단과 기술들을 사전적으로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종합지표는 전술한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가중치는 25%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변수 및 가중치

해당 지표를 구성할 시 활용한 항목과 가중치는 그림 E.1.과 같다. 그림에 표기된 로마숫자는 2020년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 조사의 모듈(I. = 리더십(Leadership); II. = 유치 및 유지(Attraction and retention); III. = 채용(Recruitment))을 구분하고 있다.

그림 E.1. **사전채용 관행 지수에 활용된 변수 및 가중치**



예비 종합 지표 6.3. 고위공무원단의 관리

8. 공공서비스 리더(정부의 주요 기능을 이끌고 개선하는 고위공무원)는 정부 효율성의 핵심이다. 이러한 사실에 기반해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에 관한 OECD 권고(PSLC)는 정부가 부분적으로 리더십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공공서비스에서 가치 중심 문화와 리더십을 구축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위해 OECD 국가는 유능한 공공서비스 리더를 양성하고 성과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고위공무원단 체계를 구축한다. 아래의 지표는 “공공서비스에서의 높은 성과를 위한 리더십: OECD 국가에서의 고위공무원단 체계를 향하여 (Gerson, 2020)” 연구에서 개발된 고위공무원 체계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성되었다. 지표는 2개의 하위지표로 구성되며, 각각의 가중치는 최종 지표의 절반으로 동일하다. 하위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측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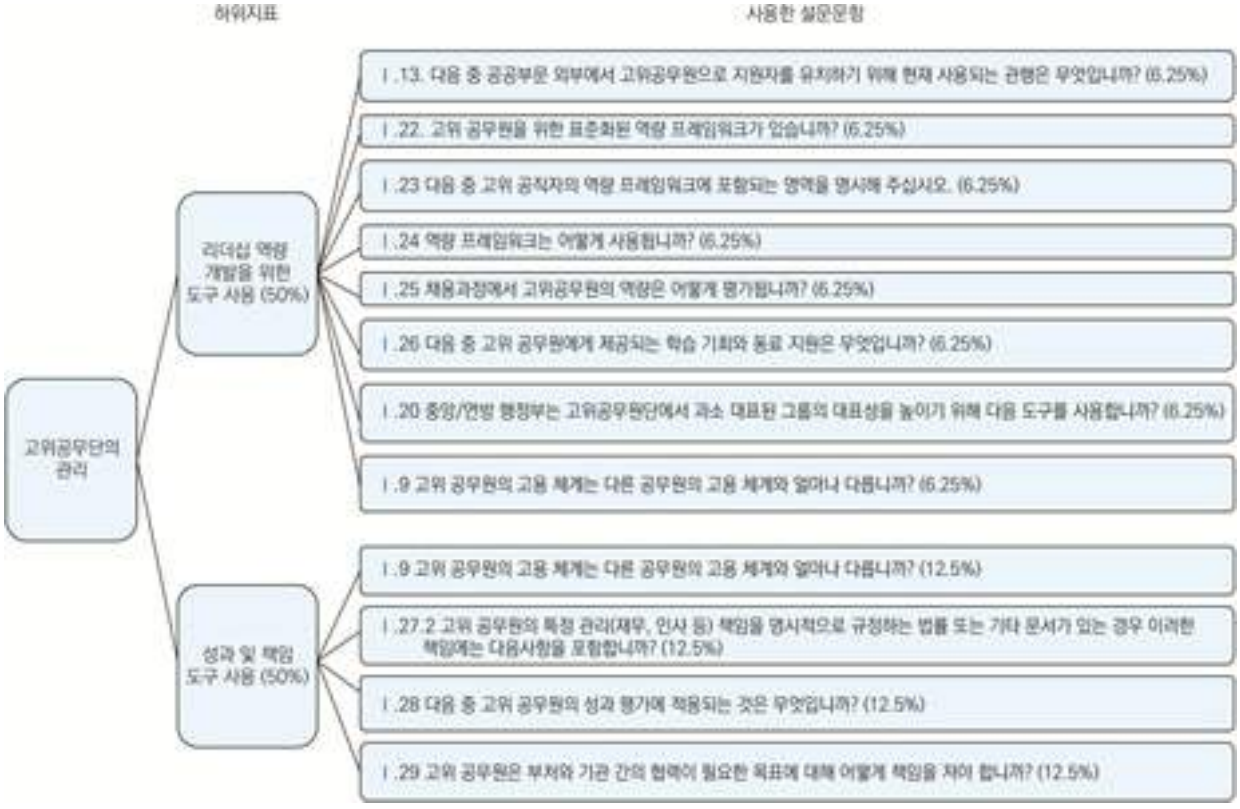
a. 고위공무원단 내에서 리더십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 사용

b. 성과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증진하기 위한 도구 사용

변수 및 가중치

해당 지표를 구성할 시 활용한 항목과 가중치는 그림 E.2.와 같다. 그림에 표기된 로마숫자는 2020년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 조사의 모듈(I. = 리더십(Leadership); II. = 유치 및 유지(Attraction and retention); III. = 채용(Recruitment))을 구분하고 있다.

그림 E.2. **고위공무원단 관리 지수에 활용된 변수 및 가중치**



예비 종합 지표 6.5. 중앙정부인력의 다양성 개발

9. 최근 몇년 동안 OECD 정부의 우선순위로 공공서비스 인력의 다양성과 포용성이 떠오르고 있다.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에 관한 OECD 권고(PSLC)는 정부가 1) 정부가 필요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개방된 포용적이고 존중하는 근무 환경을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 2) 다양성, 포용성, 웰빙을 측정할 도구를 개발하고,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는 한편, 진행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제약요인을 찾고, 제거하며, 정부개입을 설계하는 것; 3) 조직 및 인력관리 프로세스와 근무조건이 다양성과 포용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중앙정부인력의 다양성 개발" 종합지표는 전술한 원칙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에 관한 OECD 권고(PSLC) 자료와 인원구성에 대한 설문조사의 자료를 결합한 유일한 지표이다. 해당 지표는 3개의 하위지표로 나뉘며, 각 지표는 최종지표의 1/3의 가중치를 부여한다. 하위지표들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측정한다.

a. 노동인력의 다양성

b. 다양성을 추적하기 위한 자료의 활용가능성 및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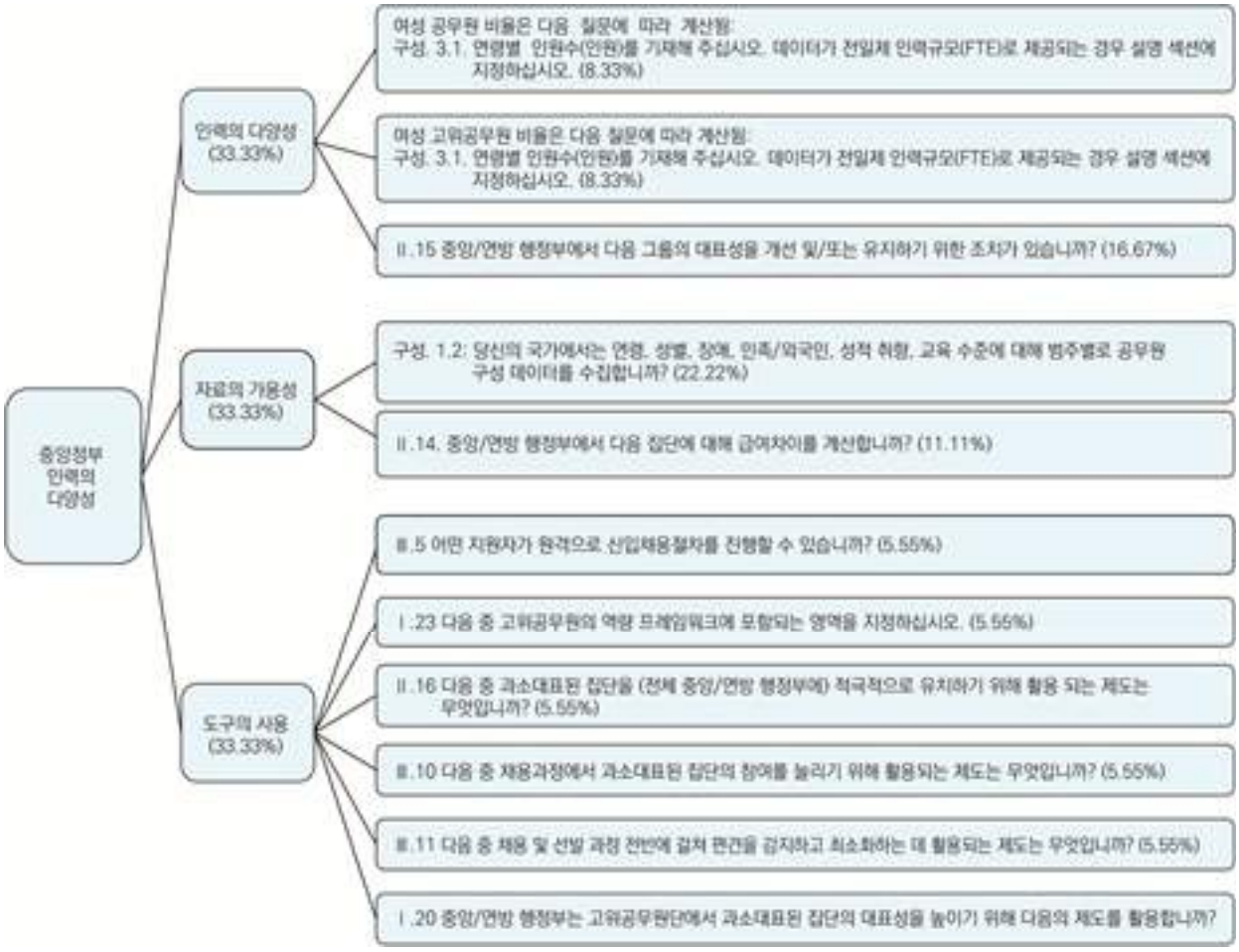
c. 다양한 인력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 사용

변수 및 가중치

해당 지표를 구성할 시 활용한 항목과 가중치는 그림 E.3.와 같으며, 가중치는 균등가중치를 부여하였다. 그림에 표기된 로마숫자는 2020년 공공서비스 리더십 및 역량 조사의 모듈(I. = 리더십(Leadership); II. = 유치 및 유지(Attraction and retention); III. = 채용(Recruitment))을 구분하고 있다.

* 인원구성에 대한 설문 문항은 설문문항 앞에 '구성' 표기를 하였다(예: 구성 3.1.)

그림 E.3. **중앙정부 인력의 다양성 개발 지수에 활용된 변수 및 가중치**



세 가지 종합 지수의 각각의 구성 요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oecd.org/gov/govataglance.htm를 참고할 수 있다. 해당 문건에는 종합지수를 구성하는데 활용한 통계적 처리(활용된 변수, 응답문항, 점수 및 가중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문헌

Gerson, D. (2020), "Leadership for a high performing civil service: Towards senior civil service systems in OECD countrie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no*. 40, *http://dx.doi.org/10.1787/ed8235c8-en.* [2]

OECD (2019), *Recommendation of the Council on Public Service Leadership and Capability*, OECD/LEGAL/0445. [1]

부록 F.

OECD 디지털 정부 지수의 방법론

OECD 디지털 정부 지수(DGI)는 2014년 7월 15일 채택된 OECD 디지털 정부 전략 위원회 권고안의 이행을 감시한다. 권고안은 전자정부에서 디지털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며, 보다 개방적, 참여적, 혁신적인 정부를 촉진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 사용에 대한 전략적 접근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정부가 시민과 기업에 더 가까워 질 수 있도록 한다(OECD, 2014[1]).

디지털 정부 지수(DGI)는 OECD 디지털 정부 정책 분석틀(OECD, 2020 [2])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공공 서비스 및 운영을 개선 및 통합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데이터 전략, 공공 기관에 대한 신뢰 증대를 권고하는 OECD의 오랜 작업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분석틀은 정부가 디지털 역량을 갖추기 위한 정책을 설계 및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도구이며, 공공부문의 디지털 성숙도에 대한 6개 차원을 포괄하는 방법론과 조사로 구성되어 있다.

- 디지털 우선 정부: 정부가 디지털 기술을 관리 및 활용하여 공공 프로세스를 재고하고 재설계하고, 절차를 단순화하며, 이해 관계자들과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및 참여 채널을 만드는 경우.
- 데이터 기반 정부: 정부가 데이터를 전략적 자산으로 판단하고 의사 결정과 서비스 설계, 제공을 개선하기 위해 거버넌스, 액세스, 공유 및 재사용 메커니즘을 수립하는 경우.
- 플랫폼 정부: 정부가 공공 부문의 통합과 일관성을 촉진하고 공공 서비스 설계, 제공에 있어 사용자의 요구에 집중할 수 있도록 광범위한 플랫폼, 표준 및 도구를 배치하는 경우.
- 열린 정부: 정부가 공공 정부 데이터와 정책 결정 과정(알고리즘 포함)을 기존 법률의 범위 내에서 개방하고 국익과 공익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경우.
- 국민 주도형 정부: 정부가 프로세스, 서비스 및 정책 형성에 있어 국민의 요구와 편의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포괄적인 메커니즘을 채택하는 경우.
- 선제적 정부: 정부가 국민의 요구를 예측하고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번거로운 데이터 및 서비스 제공 프로세스를 제거하는 경우.

정책 분석틀에 기초하여, 디지털 정부 지수(DGI)는 각각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한 6가지 지표로 구성된 종합 지수이다. 디지털 정부지수(DGI)는 디지털 정부 개혁의 포괄성을 질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법, 정책 리젯대, 이행, 모니터링의 4가지 측면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디지털 정부에 관한 OECD 조사 1.0을 통해 33개 국가 (OECD 29개 국가와 주요 파트너 4개 국가)[1]의 답변을 포함하여 DGI 초판 및 시험판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했다.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을 통해, 6개 차원의 210개 항목이 기초 개념을 측정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계 분석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점수와 분야 점수를 활용해 국가들 간의 차이를 논의했다.

DGI의 신뢰성 및 유효성에 대한 최고 기준을 보장하기 위해 4가지 유형의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술 통계량은 평균값이 0.0 또는 1.0인 항목이 없는 점수의 분포를 분석하는 데 사용했다. 종합 점수에 포함된 모든 항목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성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야 점수와 항목 점수 사이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항목의 범주 수가 4보다 작으면, 폴리시리얼(Polyserial) 상관 계수[2]를 사용하고, 그렇지 않으면 피어슨의 상관 계수[3]를 사용했다. 상관 계수가 0.1 미만인 항목은 재할당 또는 제거되었다(Ubaldi and Okubo, 2020 [3]).

분야 점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계산된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α)는 모든 분야에서 내적 일관성을 갖추었다(계수의 범위는 열린 정부 0.67에서부터 디지털 정부0.91까지이다). 또한 분야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는 열린 정부와 선제적 정부 사이의 0.20에서부터 국민 주도형 정부와 디지털 우선 정부 사이의 0.84까지 다양하여, 분야가 관련 개념을 측정해 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디지털 정부 1.0 조사의 구축 타당성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종합 점수와 분야 점수 간의 상관 계수는 분야 측정이 종합 점수와 유사한 측면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합 점수와 분야 점수 사이의 상관 계수가 열린 정부 0.65에서 국민 주도형 정부의 0.93까지의 상관 계수를 갖기 때문이다(Ubaldi 및 Okubo, 2020 [3]).

기타 국제 벤치마크

공공 부문에서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사용은 전자 정부의 준비 진행과 디지털 공공 서비스의 가용성 평가에 특히 초점을 맞추고 있는 다른 국제 및 다자간 조직에서도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유엔 전자 정부 조사, 유럽 위원회(EC)의 전자 정부 벤치마크,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수(DESI)와 같은 세 가지 측정 노력이 두드러진다.

유엔은 웹 사이트 평가, 통신 인프라 및 인적 자원 기부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 부문 조직의 디지털 서비스 제공 준비도와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정량적 종합 지수인 글로벌 및 장기 전자 정부 조사를 개발했다.

유럽 위원회는 두 가지 도구를 통해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측정 작업을 진전 시켰다. 첫째, 2017년 EU의 전자 정부 벤치마크는 2017년 탈린 각료 선언에 기반한다. 탈린 각료 선언은 공공 부문의 정보통신 기술(ICT) 사용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하기 위해 EC가 사용하는 모니터링 도구이다. 사용자 중심성(온라인 서비스의 가용성), 투명성(좋은 투명 서비스 절차의 구현),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 및 핵심 기술 지원자의 사용 측면에서 공공 서비스의 성숙도를 평가한다.

둘째, EC는 디지털 경제 및 사회 지수를 통해, EU 국가의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의 광범위한 역할을 측정한다. 디지털 경제 및 사회지수(DESI)는5개 차원을 포함하며, 디지털 채널을 통해 연결, 인적 자본, 인터넷 서비스 사용 및 디지털 기술의 통합과 같은 공공 서비스의 가용성을 위한 차원들로 구성된다.

다른 측정 노력과 비교할 때, 디지털 정부지수(DGI)는 정책, 서비스,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적용하며, 선호하는 채널(디지털 여부)에 관계 없이 정부와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시민들의 선택 범위를 확대하려는 "디지털 우선 정부"의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한다. 디지털 정부 및 공공 부문 데이터에 대한 디지털 정부지수(DGI) 및 OECD 비전은 채널 및 조직 전반에 걸친 통합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완전히 달성하기 위한 공유 도구와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런 점에서 디지털 정부지수(DGI)는 일관성 있는 서비스 설계와 제공, 공공 부문 운영 및 의사 결정 프로세스에 대한 정부 전체의 접근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 간 디지털 및 데이터 표준, 핵심 지원자 및 원칙의 구현을 다룬다.

설명

1. 국가의 종합 점수 및 분야별 점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표 F.1(디지털 정부 지수 치수 점수, 2019)[https://doi.org/10.1787/888934260054]를 참고할 수 있다.
2. 연속형 변수와 이산형 변수 사이의 상관 계수.
3. 두 연속형 변수 사이의 상관 계수.

참고문헌

OECD (2014), *OECD Recommendation on Digital Government Strategies*, OECD, Paris, *https://legalinstruments.oecd.org/en/instruments/OECD-LEGAL-0406*. [1]

OECD (2020), “The OECD Digital Government Policy Framework: Six dimensions of a Digital Government”, *OECD Public Governance Policy Papers*, No. 02, OECD Publishing, Paris, *https://doi.org/10.1787/f64fed2a-en*. [2]

Ubaldi, B. and T. Okubo (2020), “OECD Digital Government Index (DGI): Methodology and 2019 results”, OECD *Working Papers on Public Governance*, No. 4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 b00142a4-en.* [3]

부록 G.

온라인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림 자료

2장. 공공 재정과 경제

- G.1. 2007년, 2019년 및 2020년 GDP 대비 순 자본 이전 비율 [*https://doi.org/10.1787/888934260073*]
- G.2. 1인당 실질정부 부채의 연평균 증가율, 2007-19년 및 2019-20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092*]
- G.3. 정부총부채, 마스트리히트 총부채, 2007년, 2019년 및 2020년 GDP의 백분율 정의 [*https://doi.org/10.1787/888934260111*]
- G.4. 중앙정부 세입 구조, 2019년 및 2020년 [*https://doi.org/10.1787/ 888934260130*]
- G.5. 주정부 세입 구조, 2019년 및 2020년 [*https://doi.org/10.1787/ 888934260149*]
- G.6. 지방정부 세입구조, 2019년 및 2020년 [*https://doi.org/10.1787/ 888934260168*]
- G.7. 기능별 일반정부지출 구조, 2019 [*https://doi.org/10.1787/888934260187*]
- G.8. 기능별 일반정부 지출구조 변화, 2007~2019 [*https://doi.org/10.1787/888934260206*]
- G.9. 일반 공공서비스 기능별 정부지출 구조, 2019 [*https://doi.org/10.1787/888934260225*]
- G.10. 공공질서 및 안전기능별 정부지출구조, 2019 [*https://doi.org/10.1787/888934260244*]
- G.11. 경제기능별 정부지출구조, 2019[https://doi.org/10.1787/888934260263]
- G.12. 교육기능별 정부지출 구조, 2019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282*]
- G.13. 기능별 중앙정부지출 구조, 2019 [*https://doi.org/ 10.1787/888934260301*]
- G.14. 기능별 주정부지출 구조, 2019 [*https://doi.org/ 10.1787/888934260320*]
- G.15. 기능별 지방자치단체 지출구조, 2019 [*https://doi.org/ 10.1787/888934260339*]
- G.16. 사회보호기능별 정부지출구조, 2019 [*https://doi.org/10.1787/888934260358*]
- G.17. 보건 기능별 정부 지출 구조, 2019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377*]
- G.18. 사회보호기능별 정부지출구조 변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https://doi.org/10.1787/888934260396*]
- G.19. 보건기능별 정부지출구조 변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https://doi.org/10.1787/888934260415*]
- G.20. 경제 거래별 중앙정부 지출 구조, 2019년 및 2020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434*]
- G.21. 정부 차원 전반의 일반 정부 세입 분포 변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https://doi.org/10.1787/888934260453*]
- G.22. 정부 차원의 일반 정부 지출 분포 변화, 2007년부터 2019년까지 [*https://doi.org/10.1787/888934260472*]
- G.23. 2007년 및 2019년 총 투자에서 정부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 [*https://doi.org/10.1787/888934260491*]
- G.24. 기능별 정부일반투자 구조, 2019 [*https://doi.org/10.1787/888934260510*]
- G.25. 정부일반 아웃소싱 지출의 구조, 2019 [*https://doi.org/10.1787/888934260529*]

4장. 공공기관

- G.26. 코로나 19 위기 동안 사용된 이해 관계자 참여 프로세스, 2020 [*https://doi.org/10.1787/888934260548*]
- G.27. 정책 우선순위를 알리기 위해 필요한 증거 또는 분석 유형, 2021년 [*they://doi.org/10.1787/888934260567*]

제5장. 예산제도

- G.28. 의사 결정의 주요 책임 행위자, 2020 [*https://doi.org/10.1787/ 888934260586*]

6장. 인적자원관리

- G.29. 근무형태별 평균 종사점수 2020년 [*https://doi.org/10.1787/ 888934260605*]

제7장. 규제거버넌스

- G.30.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책임, 2018 [*https://doi.org/10.1787/ 888934260624*]
- G.31. 규제기관으로부터 수집, 공표된 성과정보의 유형, 2018 [*https://doi.org/10.1787/888934260643*]

제8장. 공공 조달

- G.32. 기능별 일반정부 조달지출 구조 변경, 2012년 ~ 2019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662*]
- G.33. 정부수준별 일반구매지출, 2007년, 2019년, 2020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681*]
- G.34 RBC 표준 위반에 대한 조치 규정이 있는 국가, 2020 [*https://doi.org/10.1787/888934260700*]
- G.35 공공 조달에서 RBC 목표 이행을 모니터링하는 국가의 비율, 2020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719*]

9장. 열린 정부

- G.36. 정부 공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직원 및 기관의 범주, 2020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738*]

제10장. 디지털 정부

- G.37 공무원 교육 이니셔티브 제공, 2019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757*]

12장. 공공부문의 청렴성

- G.38. 구현구조 및 보고의 적정성, 2020 [*https://doi.org/10.1787/ 888934260776*]

13장. 핵심 정부 성과

- G.39. 2019년 연령층 국가 정부 신뢰도 [*https://doi.org/10.1787/ 888934260795*]

14장. 대시민서비스

- G.40. 경찰에 대한 시민신뢰, 2010년 및 2020년 [*https://doi.org/10.1787/888934260814*]

한 눈에 보는 정부 2021 © OECD 2021

- G.41. 서비스 제공에서 선택된 집단의 포함 및 참여 여부를 보장 및 증가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술에 의해 주도된 국가의 노력, 2019 [*https://doi.org/10.1787/888934260833*]

부록 H.

운영위원회의 구성[1]

Country	Name	Title/Position	Ministry
Austria	Michael Kallinger	Head of Unit for Innovative Administrative Development	Federal Chancellery, Public Service and Innovative Administrative Development
Belgium	Jacques Druart	Head of International Co-ordination	Federal Chancellery, Public Service Personnel and Organisation
Canada	Nicholas Chesterley	Director Strategic Planning	Treasury Board
Chile	Raimundo Monge	Head of Interministerial Coordination Division	Ministry General Secretariat of the Presidency
Finland	Katju Holkeri	Head of Government Policy Unit	Ministry of Finance
France	Yves Taupenas	Counsellor	Permanent Delegation of France to the OECD
Hungary	Zsuzsanna Gregor	First Secretary	Permanent Delegation of Hungary to the OECD and UNESCO
Ireland	Evan Coady	Public Policy Counsellor	Permanent Delegation of Ireland to the OECD
Italy	Angela Guerrieri	Manager of the European programming and controls service	Department for Public Administration
Japan	Maki Takahashi	First Secretary	Permanent Delegation of Japan to the OECD
	Laure Millet	Assistant	Permanent Delegation of Japan to the OECD
Korea	Michan Park	Deputy Director	Ministry Interior and Safety in the Republic of Korea.
	Seungchul Ha	Counsellor	Permanent Delegation of Korea to the OECD
Latvia	Inita Pauloviča	Deputy Director	State Chancellery Republic of Latvia, Department For Public Administration Policy
	Inese Kušķe	Cross-sectoral Coordinator	State Chancellery Republic of Latvia, Department For Public Administration Policy
Mexico	Guillermo Gutierrez Nieto	Counsellor	Permanent Delegation of Mexico the the OECD
	Adrian Franco Barrios	Vice president	National Institute for Statistics and Geography
	Oscar Silva Lopez	Policy Analyst	Permanent Delegation of Mexico the the OECD
Netherlands	Frans van Dongen	Program Manager	Ministry of Interior and Kingdom Relations
Norway	John Nonseid	Senior Advisor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and eGovernment/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Reform
Romania	Monica Giurgiu	Coordinator	General Secretariat of the Romanian Government
Slovenia	Klaudia Korazija	Adviser on International Relations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on
Spain	Leon Azcarate	Technical Advisor	Ministry of Territorial Development and Public Administration
Sweden	Love Berggrund	Analyst	Swedish Agency for Public Management, Statskontoret
United Kingdom	Lin Yan	Counsellor and Head of Economic and Social Policy Team	Permanent Delegation of UK to the OECD
	Caleb Deeks	Deputy Director	Cabinet Office

1. Government at a Glance 운영 그룹은 OECD 공공 거버넌스 위원회의 비공식 단체이다.
모든 회원국은 참가할 수 있습니다. Government at a Glance(2009년 발행) 초판 이후 설립된 운영 그룹은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출판물 및 공공 거버넌스 통계와 데이터에 대해 조언한다.

한 눈에 보는 정부의 용어 해설

기관 일선부처 장관의 권한 하에 계층제 조직의 형태를 갖는 조직을 의미한다. 일부 조직은 일선부처가 아닌 대통령, 국무총리, 내각 산하에 위치하기도 한다.

배분 정부 프로그램 또는 조직에 재원과 예산을 할당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중앙예산기관과 일선부처는 성과 정보를 활용하여 예산을 증액 또는 감액한다.

예산 지출, 수입, 적자 또는 흑자, 채무를 포함한 정부의 재정 계획에 관한 포괄적인 문서를 의미한다. 예산은 정부의 주요 재정 정책을 보여주는 문서이다. 즉, 예산은 정부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의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중앙예산기관 중앙예산기관(CBA)은 국가/연방 예산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중앙/국가/연방 정부 내 부처 및 조정기구를 의미한다. 많은 국가에서 중앙예산기관은 재무부 소속이다. 국가마다 중앙예산기관의 기능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안을 편성하고, 다른 부처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며, 재원을 배분 또는 재배분하고, 예산 법률의 준수를 보장하며, 성과평가와 효율성 검토를 실시한다. 중앙예산기관은 예산의 집행을 관리하나, 반드시 공적자금 상환과 같은 재무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다. 마지막으로, 중앙예산기관은 가장 중요한 역할은 총량적 재정규율의 유지 및 관리와 예산지출의 효과적인 통제에 있다.

정부수뇌기관 정부수뇌기관(CoG)은 행정부(대통령 또는 수상, 내각)를 지원하기 위한 운영 기관을 의미한다. 정부수뇌기관은 정부 사무국, 내각실, 수상관청, 대통령실, 추밀원 등 국가마다 다양한 명칭을 갖고 있다. 많은 국가에서 정부수뇌기관은 다른 기능을 수행하는 하나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수뇌기관의 역할은 행정부 자체의 역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정부수뇌기관은 정치적 비전을 반영하고 시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에 대응하는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의 자원(재정적, 법적, 규제적, 군사적 자원)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공무원 공무원은 특정 공공 법률 분석틀 또는 기타 특정 조항에 따라 보호되는 공공부문 근로자를 의미한다.

협의 발전된 수준의 참여를 의미하며, 이해 관계자가 정부에 피드백을 제공하거나, 그 반대의 경우도 해당하는 양방향 관계를 수반한다. 이는 의견을 구하고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정의를 기반으로 하며, 프로세스 결과에 대한 피드백과 더불어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구한다.

데이터 특정 개념을 나타내는 값 또는 값 집합을 의미한다. 데이터는 분석될 때 "정보"가 되고 의미를 추출하고 맥락을 제공하기 위해 다른 데이터와 결합될 수 있다.

디지털 디폴트 이는 온라인 플랫폼 및 채널을 의무적으로 사용하거나 공공 부문과 시민 및 기업(예: 공공 서비스에 대한 액세스)의 상호 작용을 위해 분명히 선호되는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우선 정부 정부가 정책을 수립하고 서비스를 설계할 때 처음부터 디지털 기술의 잠재력을 최대한 내포하려는 정도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공공 기관과 상호 작용하는

	데 사용되는 채널에 관계없이 시민과 기업에게 효율적, 포용적, 지속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내부 프로세스를 재검토, 재설계 및 단순화하고 서비스 제공을 디지털화(OECD 개념 노트 "디지털 정부 프레임워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 정부는 공공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정부의 현대화 전략의 통합된 부분으로 디지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와의 상호 작용을 통해 데이터, 서비스 및 콘텐츠의 생산 및 액세스를 지원하는 정부 행위자, 비정부 조직, 기업, 시민 협회 및 개인으로 구성된 디지털 정부 생태계에 의존합니다(디지털 정부 전략에 대한 OECD 권고).
효과성	정책, 프로그램 또는 조직의 명시된 목표를 달성한 정도를 의미한다.
효율성	산출 단위당 비용을 의미한다. 효율성 측정은 정책, 프로그램 또는 조직이 주어진 수준의 자원(투입) 대비, 최대의 산출을 달성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측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직원 몰입	공공 조직의 목표에 자신과 자신의 노력을 투자하려는 직원의 의지와 능력을 의미한다. 직원 참여는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직원이 일하는 조직 간의 연결을 설명하고 측정한다. OECD는 직무 만족도, 업무 몰입도, 조직 몰입도를 평가하여 직무 열의를 측정한다.
참여	이해 관계자에게 정책 주기의 모든 단계와 서비스 설계 및 제공에서 협업할 수 있는 기회와 필요한 자원(예: 정보, 데이터 및 디지털 도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사전 녹색 예산 태깅	환경 및 기후 목표에 대한 예산의 관련성과 기여도를 알리기 위해 예산 집행에 앞서 예산 수단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예를 들어, 예산 제안서의 일부, 예산 계획 초안, 예산법)을 의미한다.
사후 녹색 예산 태깅	환경 및 기후 목표에 대한 예산의 관련성과 기여도를 알리기 위해 예산 수단의 최종 할당 또는 집행 후에 꼬리표를 붙이는 것을 의미한다.
전일제 노동시간(FTE)	전일제 노동시간은 주당 근무 시간이 다를 수 있지만 고용된 사람을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측정하는 단위를 의미한다. 단위는 직원의 평균 근무 시간을 정규직 근로자의 평균 시간과 비교하여 구합니다. 따라서 전일제 근로자는 1명의 FTE로 계산되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점수를 받는다.
공공 서비스의 일반 고용 분석틀	중앙 정부 공무원의 고용 조건을 설정하는 분석틀을 의미한다. 이 분석틀은 법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공 서비스법, 노동법 또는 그 조합으로 구현될 수 있습니다.
녹색 예산 태깅	환경 또는 기후 영향에 따른 예산 조치를 식별 및 추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태깅의 범위에는 기후 및 환경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관련 지출과 수입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녹색 예산	환경 및 기후 목표 달성을 돕기 위해 예산 정책 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예산 및 재정 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국가 및 국제 공약 이행에 대한 일관성을 평가하는 것이 포함된다. 녹색 예산은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정보에 입각한 증거 기반 토론과 토론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원수	조직에 고용된 총 인원수를 의미한다.
고위 수준 관료	국방부 고위 공무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면, 상임 비서관, 부처 비서관, 국무 비서관, 사무총장, 차관보 등을 의미한다.

ICT

정보 기술 장비(컴퓨터 및 관련 하드웨어), 통신 장비 및 소프트웨어(재무 관리 정보 시스템)을 의미한다.

선택 집단과의 비공식 협의

규제 기관의 재량에 따라 선택된 이해 당사자와의 임시 회의를 의미한다(OECD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2008).

투입

공공 상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정부 조직 또는 정부 재정 지원 조직에서 사용하는 노동, 자본, 상품 및 서비스의 단위(또는 이러한 단위의 비용)를 의미한다.

계선 부처

광범위한 정부 정책에 따라 정책을 설계 및 집행하고, 그 권한 아래 있는 기관, 집행 단위의 방향을 책임지는 중앙 정부 조직을 의미한다. 계선 부처는 일부 국가에서 부서라고 불리며, 중앙 예산 당국에 보고해야 하고 검토를 받아야 하지만 자체적인 예산의 책임이 있다.

수상

장관의 직 중에서 가장 고위의 정치적인 역할을 의미한다. 웨스트민스터 시스템 정부에서 이들은 일반적으로 “장관”으로 분류되지만, 명칭은 다양하다(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of the Governance of Regulators, 2014)

국가 정부

중앙 정부와 달리 국가의 전체 경제 영역에 대해 권한을 행사하는 국가, 중앙, 또는 연방 정부를 의미한다.

결과

결과는 활동에 의해 궁극적으로 달성되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는 정부 조치(예: 정책, 프로그램 및 기타 활동)의 의도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반영한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 증가에 따른 학생 시험 점수의 변화, 예방 접종 프로그램에 따른 질병 발병률의 변화, 새로운 복지 수당 도입에 따른 소득 불평등의 변화 등이 있다. 결과는 산출물보다 더 광범위한 성과 지표이며, 일반적으로 정부 개입 이외의 요인도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측정하기가 더 어렵다.

산출

산출은 정부 조직(또는 정부 재정)이 생산 또는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로 정의됩니다. 이러한 측정은 산출량의 직접 측정으로부터 도출된다. 예를 들면, 교육 시간, 제공되는 예방 접종 또는 지급된 복지 혜택 등이 있다. 산출은 결과보다 측정하기 쉬운 경향이 있습니다.

정책

정부 정책은 (i) 한 국가의 사회경제적 문제(또는 외교 정책의 경우 국가와 다른 국가의 관계)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결정한 것을 의미하며, (ii) 일반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를 포함한다. 정책은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주요 수단이며, 일반적으로 법률/규정, 공식 정책 성명 또는 지침,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 기관이 자금을 지원하거나 수행하는 프로그램 및 특정 계획을 초래하는 기관으로 표현됩니다. 외교 정책(예: 정부와 다른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규칙) 외에도 정부는 재정 정책(예: 총 수입 및 지출 수준에 대한 정부 조치를 규율하기 위한 규칙), 통화 정책(예: 정부의 금융 시장 및 신용 조건에 대한 영향), 환경 정책 및 사회 정책(특히) 등이 있다.

규제기관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는 책임이 있는 정부 부처 및 기타 기관의 관리자를 의미한다(OECD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2008).

규제 영향 평가

고려 중인 정책에 대해, 규제 또는 비규제를 선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이익과 비용을 식별하고 정량화하는 체계적인 과정을 의미한다. 규제 영향 평가는 편익/비용 분석, 비용 효율성 분석, 비즈니스 영향 분석 등을 기반으로 할 수 있다(OECD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2008에서 수정).

규제 정책 규제를 개발, 관리 및 검토하기 위해 정부에서 도입한 일련의 규칙, 절차 및 제도를 의미한다.

규제 개혁 규제의 품질을 개선하려는 변화, 즉, 성과, 비용-효과성 또는 규제와 형식의 법적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규제 완화”는 규제 개혁의 일부이다 (OECD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2008).

회복탄력성 “충격 이전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유지하면서 붕괴 흡수, 피해로부터 회복, 변화하는 조건에 적응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의미한다(OECD, 2019).

위험 위험은 유해 사건(위험, 위해)이 발생할 가능성과 야기된 피해의 잠재적 규모 (영향을 받는 사람의 수와 각각에 대한 피해의 심각성을 결합한 것)의 조합으로 정의된다(OECD, Best Practice Principles of Regulatory Enforcement and Inspections, 2014).

위험 관리 위험 관리는 새로운 위험을 방지하고, 기존에 발생한 위험을 줄이며, 잔여 위험을 관리하는 정책 및 전략을 적용하여, 회복력 강화 및 피해 및 손실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출 검토 지출 검토는 정부의 정책 우선 순위에 따라 자원을 재할당할 수 있도록, 전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재정 여유를 식별하기 위해 절약할 수 있는 범위를 식별하는 과정으로 정의된다. 지출 검토는 현재의 예산 수준에서 프로그램 효과성과 효율성을 살피는 것뿐만 아니라, 대체 예산 수준의 결과 및 산출을 검토한다는 점에서 다른 유형의 평가와 다르다. 지출 검토는 일반적으로 기준 지출을 검토할 뿐만 아니라, 지출 감소를 위해 특정 대상을 포함할 수도 있습니다. 지출 검토는 모든 정부 지출을 포괄하거나 특정 부처 또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한다.

전략 비전, 목표, 목표, 주요 행위자, 주요 활동 및 모니터링 시스템(지표) 등을 정의하는 문서(예: 정책 문서, 백서)를 의미한다.

하위 법령 대통령, 개별 장관, 내각과 같이 의회와 의회 이외의 기관에서 승인할 수 있는 법령을 의미한다. 많은 하위 법령은 의회(Parliament/Congress)에서 승인되지 않을 수 있다. 하위 법령은 “2차 입법” 또는 “하위 입법” 또는 “위임된 입법” 이라고도 정의된다(OECD Regulatory Indicators Questionnaire 2008에서 수정).

사용자 사용자는 시민, 기업 또는 비정부 조직과 같은 법인 또는 공공 부문 자체 내의 공무원으로 정의된다. 사용자는 가장 일반적으로 시민과 기업으로 정의된다.